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 학술교류포럼]



국가폭력의 청산과 정의

5·18과 전지구적 차원의 이행기정의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 학술교류포럼]



5·18왜곡과 진상규명	5
5·18 국가폭력의 청산과 정의	73
5·18과 전지구적 차원의 이행기정의	
5·18교육포럼: 5·18기억의 재생산과 확산	261
아시아의 기억과 기념: 연대와 교류	379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 학술교류포럼]

5·18왜곡과 진상규명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5·18기념재단

5·18 왜곡과 진상규명

사회

박진우 (5·18기념재단 연구실장)

■ 발표 1

군의 5·18왜곡조작에 대한 자료분석

- 국방부 정보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

이재의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 ————— 11

토론: 노영기 (조선대학교 교수) ————— 39

■ 발표 2

5·18 역사왜곡과 법적대응

김정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 43

토론: 김남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51

■ 발표 3

그는 병식(病識)이 없어서

- 왜곡과 망상의 정신분석 : 지만원의 『독섬 무지개』에 대하여 -

김형중 (조선대학교 교수) ————— 59

토론: 정명중 (전남대학교 교수) ————— 69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 학술교류포럼]

국가폭력의 청산과 정의

5·18과 전지구적 차원의 이행기정의

발표 1

군의 5·18왜곡조작에 대한 자료분석

- 국방부 정보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

사회: 박진우(5·18기념재단 연구실장)

발표: 이재의(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

토론: 노영기(조선대학교 교수)

군의 5·18왜곡조작에 대한 자료분석

- 국방부 정보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

이재의(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

1. 개요

본 연구는 1988년 국회 5·18청문회를 육군과 국방부가 어떻게 대비하였는지 분석한다. 2018년 국방부는 5·18기념재단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군 당국에 의한 5·18왜곡과정’을 담고 있는 국방부 보관 자료를 기념재단에 제공했다. 이 자료는 1988년부터 1989년까지 국회 5·18청문회를 전후한 시기에 군이 어떻게 청문회를 대비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군 문서들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 자료 가운데 일부만 발췌해서 조명할 것이고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을 먼저 밝힌다.

군 당국의 5·18왜곡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지만 국회 청문회를 앞둔 1988년에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이 시기는 1987년 6월항쟁 직후 국민들의 5·18진상규명 요구가 매우 높았을 때였다. 국가는 6월항쟁 이전까지 5·18을 ‘폭동’이라고 불렀다. 6월 항쟁은 5·18의 역사적 성격을 바꿨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2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이하 민화위)의 건의 형식을 빌어 ‘민주화를 위한 노력’으로 5·18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규정했다.¹⁾

5·18 성격 규정의 변화 때문에 가장 당혹스러웠던 데는 군 당국이었다. 그때까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됐던 자신들의 진압행위가 국가에 의해 송두리째 부정될 위기에 처했다. 군은 5·18진압 논리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군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민화위의 건의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타협 논리가 필요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혹은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는 식의 양비론, 양시론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군이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진압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때 군은 진정한 ‘반성’ 보다는 ‘변명’을 선택했다. 그러다보니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왜곡과 조작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육군과 국방부는 1988년 초 이 문제를 전담할 팀을 만들었다. 소위 ‘육군대책위원회’(이하 육군위원회)와 ‘511연구위원회’(이하 511위원회)가 바로 그 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들이다. 민화위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육군에서도 자신들에게 곧 닥쳐올 ‘사태’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1988년 2월 육군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국방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511위원회는 여당인 민정당과 긴밀한 협의 아래 그해 5월 11일 출범했다. 511위원회는 청문회 상황에 좀 더 밀도 있고 신속하게 대응

1) 노태우정부는 국정 자문기구로 1988.1.11. 민주화합추진위원회(회장 조일문, 민정당 의원)를 발족했다. 민화위는 1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월 24일까지 58명의 위원들이 ‘권위주의 청산,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해소와 국민화합 및 민주화 조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노태우 당선자에게 건의하여 취임 후 국정운영에 반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기 위해 그해 6월 상설적인 실무자 그룹으로 ‘511상설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했다.

1988년 초부터 육군위원회는 군 문서고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방치돼 있던 5·18관련 군 작전문서들을 모두 끄집어내 검토하기 시작했다. ‘폭동’이 아닌 ‘양비론’ 상황에서도 진압행위의 정당성을 지켜낼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당면 목표였다. 오래 묵은 작전문서들을 들춰보며 수많은 개별사건들에 대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메스를 가했다. 군이 새롭게 세운 ‘양비론’ 논리에 잘 들어맞지 않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아예 그 대목은 빼버리거나 문서를 바꿔치기했다. 반대로 논리가 너무 비약하는 민감한 부분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새 문서를 만들어 끼워 넣는 등 기존 문서의 논리적 흐름을 아예 고쳐버렸다. 물론 수십 만 쪽에 달하는 모든 문서를 완벽하게 다 고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5·18관련 군 문서 대부분이 이 시기에 이런 의도 하에 조작되거나 바뀌게 된 것은 틀림없다.

어떤 경우에도 군의 작전문서는 일단 결재가 나면 수정하거나 없앨 수 없도록 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다. 전투상보, 상황일지, 계엄관련 회의록 등 수많은 군의 1차적인 작전문서들이 함부로 손대거나 재편집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육군은 육군위원회를 통해 은밀하게 5·18관련 군 문서 원본을 왜곡, 변조, 심지어는 소각조차 서슴치 않았다.²⁾

또한 군의 논리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진압군으로 직접 작전에 참가했던 군인들을 찾아내서 개인적인 체험수기를 쓰도록 하였다. 그들이 써서 가져온 수기 가운데 군에 불리한 대목들은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제출토록 지시하였다. 그들 중 몇 명은 군의 입장에서 증인으로 청문회에 나설 수 있도록 종용했다. 그들이 군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승진, 혹은 취업기회 제공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회유하였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협과 협박을 가했다. 이런 작업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군 자료는 5·18에 대한 ‘군의 기본인식’으로 정리되었다. 육군위원회가 새롭게 정립한 ‘군의 기본인식’은 그해 7월 6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장성급 지휘관들에게 보고되었고, 이후 군 전체의 시각을 통일시키기 위한 군의 5·18 교육용 자료로 활용되었다.

6월 항쟁 이후 군은 5·18진상규명 요구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움직였다.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5·18진상규명이 쟁점이 된다면 이 기회를 최대한 군에 유리하게 이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진상을 밝히려는 취지에서 야당들의 강력한 요구로 열린 5·18청문회였다. 하지만 군의 사전 준비 결과 청문회는 오히려 ‘군의 기본인식’을 국민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³⁾ 그러나 이런 결과는 육군위원회가 광범위하게 왜곡 변형시킨 군 작전관련 1차 문서들을 바탕으로 국방부가 주도한 511위원회에서 ‘정무적 관점’으로 치밀하게 포장한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청문회에서 야당들의 자료요구에 원본 문서가 아니라 ‘세탁’과정

2) 기무사는 1993년 3처장 지시로 5·18관련 자료 대부분을 소각장에서 파기했다. 2017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2002년 1월 사령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5·18 및 계엄관련 자료 추적조사 결과’라는 문건을 공개했고, 이 문건에 그와 같은 사실이 적혀 있었다.

3) 511위원회는 1981.1.31. 5·18청문회가 ‘3당 합당’의 여파로 사실상 종료되는 시점에 ‘업무참고자료’(국방부 공개자료 1권, 134-138쪽)를 작성하여 ‘육군 대비활동’을 자체 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육군의 활동을 크게 노출시키지 않고 은밀히 업무 추진’ ‘조기계획 착수, 전담반 편성 운용’으로 ‘기동성 있는 대비’를 했고, ‘육군의 기본시각 정립’하여 ‘군이 매도’ 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을 거친 군 작전문서들이 제공되었다.⁴⁾ 또한 야당 측에서 내세운 증인들은 군 정보기관들이 은밀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신상털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증언을 못하게 만들거나, 증언에 나서더라도 발언 수위를 낮추도록 조절했다.

2. 청문회와 ‘511프레임’

마침내 5·18청문회가 열렸다. TV 생중계로 보여준 5·18의 모습은 광주시민들이 경험했던 실제 5·18과 사뭇 달랐다. 광주시민들은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광주가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 매우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었다. 군대의 존재 가치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광주에서 계엄군의 진압행위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청문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또렷하게 새겨진 5·18의 실상은 상당부분 육군위원회와 511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였다. 육군위원회와 511위원회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마저 삭제하거나 변조해서 기억 자체를 재편집해버린 것이다.

청문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5·18의 ‘폭동’ 이미지는 예전과 확연히 다르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TV를 통해 국민들의 머릿속을 새롭게 채운 5·18에 대한 이미지는 ‘민주화운동’으로서 5·18은 아니었다. 군 당국에 의해 철저히 사전준비과정을 거쳐 연출된 이미지였고, 역사적 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왜곡된 ‘가공의 이미지’였다. 그것은 군이 의도했던 바였다.

1994~1997년도 사이에 진행된 5·18 사법처리도 청문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사법처리 절차를 거치면서 청문회 때 가공되고 변형된 5·18이미지에 사회적 권위마저 부여되었다. ‘왜곡된 5·18’의 모습은 국민들의 인식 속에 더욱 견고한 이미지로 굳어져 버렸다.

1988년 4.26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지자 야3당은 즉각 ‘광주문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정조사 방침에 합의했다. 여당인 민정당은 그해 5월 9~10일 양일간 긴급 당정책회의를 열었다. ‘야당이 국회광주사태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한다면 이에 참여는 하겠다’며 그동안 거론 대상으로조차 삼지 않았던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당정책회의의 다음날인 5월 11일 민정당은 ‘제13대 국회 광주사태’ 대비 목적으로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보안사령부, 국가안전기획부 등 군이 주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회 광주문제 대응 조직을 서둘러 만들었다. 5월 11일에 만들었다고 해서 ‘511연구위원회’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 조직의 존재와 활동은 오랫동안 비밀에 부쳐졌다. 하지만 청문회 때 야당에게 꼬리가 잡히면서 잠시 문제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크게 쟁점화 되지 않았다. 비밀리에 막후에서 움직인 데다 군의 반발을 핑계로 국방부와 여당이 강력 대응하다보니 더 이상 실체를 밝히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511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1년6개월 동안 가동(1989.12까지 총 32회 전체회의)하면서 안기부, 민정당 등과 청문회 대응책을 긴밀하게 협의하였다. 511위원회는 집단발포 등 5·18의 예민한

4) 청문회 도중 야권 4당 간사들은 국방부가 국회 광주특위에 제출한 군 자료가 왜곡, 조작되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군 문서 왜곡 조작사례는 『충정작전과 광주항쟁』(김영진, 693-705쪽, 1989.)에 실려 있다.

쟁점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등 사실상 국방부의 청문회 전담 기구나 다름없었다. 511위원회는 청문회에 필요한 작전 관련 군 문서를 육군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았다. 육군위원회는 군사기밀을 명분으로 자료를 독점하였다. 군에 불리한 계엄군의 작전 관련 문서는 조작하거나 사실과 다른 왜곡 논리를 생산하였다. 5·18왜곡에서 원천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청문회가 열리자 가해자 측 증인들은 육군위원회가 만들고 511위원회가 정무적 관점에서 수정 보완한 청문회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미리 짜 맞춘 각본에 제시된 내용만 앵무새처럼 증언하였다. 청문회는 511위원회가 제시한 ‘511프레임’ 즉, ‘군의 기본인식’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청문회 때 만들어진 5·18왜곡 프레임은 1994년 12.12, 5·18사건 검찰수사에서도 군사반란세력의 대응논리로 이어졌다. 검찰 수사결과는 끝내 511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공수부대의 집단발포에 대하여 ‘발포명령’을 끝까지 규명하지 못하고, 511프레임에서 제시한 ‘자위권발동’으로 수사를 종결지었던 점이다. 1997년 대법원 판결 역시 이 511프레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⁵⁾ 이렇게 사법 처리가 미진한 채 끝나자 그를 바탕으로 왜곡 선동세력들은 511프레임을 북한특수군 개입 등 극단적인 형태의 5·18평화 논리로 변형시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5·18의 진실은 ‘511프레임’에 아직도 갇혀 있다. 향후 5·18진상규명은 511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 과제가 되는 이유다.

따라서 본 자료의 분석은 새롭게 준비되고 있는 5·18진상규명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 극우세력의 5·18에 대한 극단적으로 비틀린 신념이 이 시기에 군에 의해 조작된 5·18이미지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3. 자료의 성격

5·18기념재단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한 결과 2018년 4월 국방부가 기념재단에 제공한 공개 자료의 분량은 총39권, 4,981쪽이다.(자료목록 <첨부1>) 이 자료들은 국회 청문회에 대응하여 국방부, 육군본부, 보안사 등에서 생산한 문서들이다. 기관별로 작성 주체에 따라 중첩되고 있는 부분도 꽤 많다.

총 39권 중 5·18당시 광주에서 진행된 진압작전과 관련된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육군위원회’에서 생산한 자료들이다. 국방부 지원팀이 제공한 목록에 의하면 15개 문서군 가운데 10개 문서군이 육군본부 민사심리전참모부(이하 민심부라 약칭)가 작성한 것이다. 511위원회가 생산한 자료는 문서군 12,13,14권 3개의 문서군이다. 국방부가 5·18기념재단에 공개한 전체 문서 분량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량이다. 육군위원회는 육군본부에 편제된 민심부 소속으로 예하 계엄과의 협조기관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실을 통해 자료를 수집, 국회 대응용 문건을 작성했다.

육군위원회가 작성한 문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광주사태자료 정리보고서』(183쪽, 국방부 제공자료 33권 수록)와 『현안문제 관련자료』(255쪽, 제34권 수록)이다.

5) 이재의, 『5·18민주화운동 38주년 및 광주청문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36쪽, 2018.4.

『광주사태자료 정리보고서』는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부기가 돼 있다. 1988년 3월 29일자 민심부장의 결재를 거쳐 이튿날 육군참모차장과 참모총장에게 보고된 종합 자료로 작성자는 계엄과장 김○○ 대령과 한○○ 중령이고, 군사연구실장 조○○ 준장이 협조기관으로 명기돼 있다. 이 문서는 ‘군사대외비’로 분류됐고, 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149매에 대해 사본을 5부만 만들어 국방부(2부), 합참(1), 정보본부(1), 701보안부대(1) 등에만 발송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했다. 이 자료 정리의 목적은 ‘광주사태에 대한 산발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의 취합으로 육군의 공식문서화 및 역사적 기록물로 존안’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1988년 초 ‘민화위’에서 5·18당시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이 했던 발언⁶⁾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⁷⁾ 수록내용은 주요쟁점 6개 사안으로 ① 5.17조치의 정당성 ② 초기사태 악화요인 ③ 유언비어 ④ 쌍방발포의 시기문제 ⑤ 사망자 숫자 ⑥ 5.27평정작전의 불가피성 등이 정리돼 있다.

『현안문제 관련자료』 역시 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돼 있지만 좀 더 체계화되었다. 1988년 5월 19일 육본 동예국장이 참모총장 보고를 거쳐 4부의 사본을 만들어 국방부(2), 701보안부대, 특전사령부(1) 등에 배포하였다. 이 시기는 511위원회가 만들어진지 1주일쯤 지나서이다. 국방부 민정24141-68(511연구위원회 제2차회의)를 근거로 동예국장이 육군참모총장의 결재를 거쳐 각 기관에 보낸 것이다. 육군위원회가 2월부터 3개월간 준비해왔던 자료를 511위원회가 만들어지자 곧바로 제출한 자료다. 군의 입장에서 5·18 진압에 관한 작전내용을 종합했을 뿐 아니라 예상되는 쟁점까지 검토했다. 이 문서는 ‘육본에 보유중인 13종 73건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인데,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복제 금지 등 ‘열람 및 취급에 고도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공문에 명기했다.

수록 내용은 ① 5.17조치 이전의 상황, ② 광주 사태 경과, ③ 작전결과가 나와 있고, 부록에 각종 현황이 제시되는데, 여기에는 5.17이전 북괴 도발징후, 충청작전시 주요지휘관 명단, 투입부대와 장비일람, 사망자 현황, 무기피탈·회수, 훈장수상자, 선무활동 등 청문회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밖에도 본 자료에는 511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요활동 등이 비교적 상세히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511위원회가 5·18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작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상세한 자료들도 포함돼 있다.

이 자료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육군과 국방부의 5·18에 대한 인식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의 집합이다. 일방적으로 ‘폭동’으로 매도했던 시기를 지나 1987년 6월항쟁 이후 노태우 정권에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격 규정한데 따라 새롭게 정의된 5·18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지를 고민하고 실행한 정보들이다.

이 두 권이 중요한 이유는 511연구위원회가 만들어진 1988년 5월 11일 이전에 5·18진실 왜곡의 체계가 육군본부에 설치된 육군위원회의 손에서 이미 완전한 모습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⁸⁾ 그런데 육군위원회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런 방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종합 정리했다는 것

6) 계엄군의 초기 과잉진압 시인 등 군의 입장에 배치되는 내용의 발언들

7) 이 문서의 ‘자료정비중점’ 사항에 ‘추측 및 추리 금지’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8) 이재의·최용주, 『국방부 정보공개자료 해제』, 5·18기념재단, 2018.5.

은 상식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다.)⁹⁾ 적어도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 주도로 ‘광주사태 홍보 대책’을 실행하던 때부터 육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정리해왔을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들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점은 본질적으로 가해자로서 군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정교하게 다듬어진 논리와 상황 포장을 위해 군 작전의 원본 문서를 조작 변조함으로써 5·18에 대한 가짜 프레임, 혹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집한 군 자료들은 이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30년 전 청문회를 목전에 둔 특별한 시점에서 군 내부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은 단순히 과거 어느 특정 시점에서 5·18에 대한 군의 판단과 대응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문서의 분석과 연구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극우세력들의 극단적인 5·18편향이나 왜곡이 바로 이 지점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4. 착안점

이 자료를 분석하는데 유념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5·18당시 군 작전과 관련된 원본 문서들의 신빙성을 검증해야 한다.

대부분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된 이 자료들이 실제 1980년 5·18기간 중 생산된 원본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있다. 치밀한 검증과 원본 대조를 통해 변조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5·18재단이나 기록관에서 확보한 군 작전 관련 자료들¹⁰⁾은 대부분 육군위원회나 511위원회의 손길을 거쳐 군의 ‘입맛’에 따라 원본을 변조시킨 ‘오염된 자료(sanitized materials)’이다. 1980년 당시 작성된 원본 군문서 일부는 마이크로필름이 아닌 종이 형태로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¹¹⁾

511위원회(육군위원회 포함)는 상당량의 원본 문서를 변조하거나 폐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공개된 군 작전 관련 문서 대부분도 어떤 형태로든 511위원회의 손길을 거쳐 변조된 문서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서를 철저한 검증절차 없이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의미하거나 왜곡사실을 재생산하는데 일조하는 결과를 본의 아니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문서들을 인용하기에 앞서 먼저 철저한 문서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원본 문서가 이미 폐기되어 버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5·18당시 진압작전에 직접 참가한 부대의 가장 기초적인 작전문서들에 대해서는 원본 여부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수준에서라도 반드시 체계적인 비교검토가 시급하다. 바로 이점이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9) 5·18진압작전에 투입됐던 특전사령부의 경우 ‘전투상보’를 1988년 6월 30일에야 육본에 제출한다. 『현안 문제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그 내용에 맞춰 전투상보를 재작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특전사 전투상보는 육군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에 앞서 가장 먼저 검토해서 반영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자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보고서가 나온 뒤에 별도로 제출되었다는 점은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

10) 5·18기념재단 및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장 자료 목록

11)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155쪽, 2018.4.

군 작전문서 분석 작업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이다.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는 가급적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게 어렵다면 다른 여러 관련 문서를 대조하고, 관계자들의 청문회 증언과 검찰진술, 그리고 ‘진압작전참가자가 작성한 수기’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해당 사건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간접적인 방법이 최선으로 보인다.

〈원본문서 변조사례〉

사례① 『충정작전상보』(20사단, 1980.6.9.작성)¹²⁾

5월 23일 봉쇄작전지침 중 ‘반항자 사실’ → ‘강력대응’으로 수정

사례② 『광주소요사태진압작전 전투상보』(특전사, 1980.6.30.작성)¹³⁾

출동장비 중 ‘개인실탄 휴대지급(60발)’ → 탄약 ‘통합보관’으로 수정

사례③ 『광주소요사태분석 교훈집』(교육사, 1980.9.16.작성)¹⁴⁾

5.19 공포유탄에 고교생 관통상 / 항공임무 무력시위 및 의명 화력지원, 탄약과다소모 1인당 59발, 무장헬기 공중사격요청 등 → 공식문서 여부 재검토 지시 → 전교사에서 원본 파기

사례④ 『상황일지』(7공수 35대대 작성, 1981.6.8.보안사에 제공)¹⁵⁾

5.21 ‘13시 7분 도청쪽으로 나는 총성 20여발’, ‘13시 30분 자위권발동’, ‘13시 50분 도청옥상에 무장한 경계병 배치’ → 1988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일지’에는 관련 기록 삭제

둘째, 511위원회 대응책이 실제 청문회에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청문회는 여당과 야당이 함께 참여하였다. 당시 여당인 민정당과 그들이 추천한 증인들이 511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증언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해야 한다. 특히 민정당 측에서 내세운 증인들의 증언과 야당인 평민당 측에서 내세운 증인들의 상충된 증언 부분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511위원회 대응책과 청문회 증언을 비교분석하는 작업 역시 광범위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을 통해 511위원회의 의도가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관철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런 관점에서 작성된 논문이나 보고서는 찾아볼 수 없다.

셋째, 511위원회의 대응책이 1994~1997년 검찰수사, 재판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5·18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1997년 대법원 판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검찰수사는 ‘자위권’ 및 ‘발포’ 등 예민한 쟁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검찰수사가 511위원회의 은폐, 조작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미흡한 공소사실을 바탕

12) 20사단, 『충정작전상보』, 국방부 정보공개문서 4권.

13) 특전사, 『광주소요사태진압작전 전투상보』, 국방부 정보공개문서 4권.

14) 『광주소요사태분석』, 국방부 정보공개문서 38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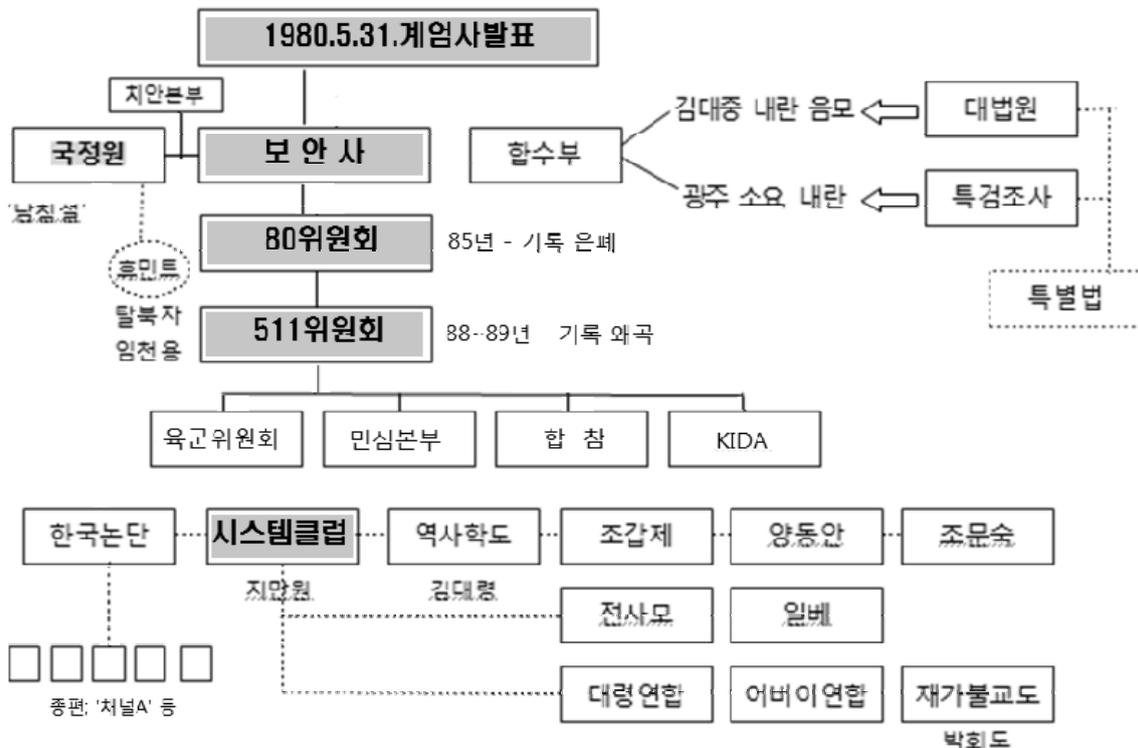
15) 『국방부 헬기사격 특조위 결과보고서』 163쪽, 2018.4.

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결론이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이 어떤 점에서 미흡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고, 바로 그 지점이 새롭게 진상규명의 출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쟁점과 관련된 증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청문회 증언과 검찰에서의 진술, 그리고 재판 심리 과정에서 진술 등을 면밀하게 대조하고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상당수 증인들의 경우 청문회와 검찰수사, 재판을 거치면서 증언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과정마다 수시로 바뀌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왜곡을 일삼는 자들은 이런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특정시기의 발언만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상규명이 왜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5. 왜곡 조직의 체계 및 운용

군의 5·18왜곡조직은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다른 이름과 모습이었다. 이를 체계화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표 1〉 5·18왜곡조직 계보¹⁶⁾



16) 안길정, 「5·18왜곡의 계보와 양상」, 5·18기초사료조사연구용역결과보고서, 2018

5-1. 합동수사본부(보안사령부 주도, 1980년)

5·18왜곡의 원천은 1980년 5·18직후 5월 31일 계엄사령부의 발표 이후 몇 차례 더 이어진 ‘광주사태’ 수사발표에 기원을 두고 있다.¹⁷⁾ 이때 계엄사의 발표 뒤에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두환, 약칭 ‘합수부’)가 있었다. 합수부 조직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1979년 10월 26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만들어졌다.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이 합수부장에 취임하면서 보안사령부 참모들이 합수부의 주요기관을 장악했다. 또한 합수부는 중앙정보부, 치안본부 등 정부의 정보조직까지 망라하였다.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합수부는 계엄사령부 수뇌부를 긴밀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육군본부 상층 조직을 장악하여 5·18 진압작전을 막후에서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¹⁸⁾

4회에 걸친 5·18직후 계엄사 발표는 합수부의 지역조직인 ‘전남합수단’이 광주 현지에서 수집 분석한 정보와 연행자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합수부에서는 1980년 5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보안사 기획실장 최예섭 준장, 홍성률 대령, 최경조 대령 등을 전남합수단에 긴급 파견했다. 합수부에서 파견된 보안사 간부요원들의 지휘 아래 80여명의 베테랑 수사요원들이 ‘전남합수단’을 구성하고 있었다. 각 공수부대에 파견 근무 중인 보안대원들에게는 해당 공수부대의 작전 상황을 505광주보안부대로 상세히 상황보고 하도록 미리 보고라인을 단일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광주출신 홍성률 대령에게 특수임무를 부여하여 광주시내로 잠입시켰다.

당시 계엄사는 5·18을 김대중과 그를 추종하는 불순 세력이 국가공권력에 대항하여 일으킨 내란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5·18재판으로 밝혀졌지만 전두환을 정점으로 군부내 사조직 ‘하나회’ 멤버였던 소수의 정치군인들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저지른 내란이었다. 광주에서 유혈 진압의 책임을 김대중에게 떠넘겼던 것이다.

1980년 보안사의 5·18왜곡 ‘프레임’은 북한의 남침 위협을 앞세운 이념공세의 성격을 강하게 담지하고 있었다. 전남합수단은 이념적 성격이 짙은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5·18을 북한의 직간접적인 영향 속에 진행된 사건으로 포장했다. 5·18기간 중 발생한 사건 가운데 그런 시각에서 보안사가 크게 부각시켜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킨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계엄군의 최초 발표¹⁹⁾

② 교도소습격²⁰⁾

17) 계엄사는 5·18직후 1980년 5월말부터 7월초까지 4회에 걸쳐 ‘광주사태 진상’을 언론에 발표했다. 사망자 등 피해상황과 사태의 원인(5.31), 사망자명단(6.5), 수사결과(7.3),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송치(7.12) 등 수사 진행에 따른 발표였다. 표면에서는 계엄사가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였지만 실제로 발표문의 주요내용은 보안사 주도로 합동수사본부가 작성하여 넘겨준 것을 계엄사가 약간의 손질을 해서 발표했을 뿐이다.

18) 1994~1996년 사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난 이 조직의 실체는 실로 막강했다. 계엄 상황에서 모든 권한이 집중되었던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검찰 신문에서 ‘자신은 핫바지에 불과’했다고 진술했다. 5.17비상계엄 전국확대를 비롯 공수부대 병력을 광주에 투입, 자위권발동 등 모든 중요한 사항이 ‘합수부로부터 자신에게 전달되었다’고 말했다.(이희성 피의자신문조서 1~6회 참고) 1979년 10.26직후 설치된 합수부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는 1981년 계엄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합수부를 계엄법 조항에 새로 신설했다.

19) 5.19. 오후 5시경, 광주교 앞에서 발생한 계엄군의 최초 발표 사건.

20) 5.21~22 사이에 3공수가 광주교도소로 접근하는 민간인들에게 발포한 사건들.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민

- ③ 유영선 사망 시점²¹⁾
- ④ 독침사건²²⁾
- ⑤ 도청 지하무기고 관련 발표²³⁾

5-2. 80위원회(국가안전기획부 주도, 1985년)

1985년 2.12 총선으로 야당이 상당한 지지를 확보했고, 국민들의 5·18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1985.5.23.~26.까지 삼민투위(三民鬪委.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위원회) 주도하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5개 대학교 학생 73명이 연합으로 서울 미국문화원을 기습 점거, 농성을 벌이면서 5·18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탄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5·18진상규명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광주사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거세지자 전두환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장세동을 국가안전기획부 책임자로 보냈다. 1985년 2월 안기부장에 임명된 장세동은 당시 국정 최대 현안이던 ‘광주사태 진상규명’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광주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런 맥락에서 1985년 6월 5일 광주사태 진상규명 관계 장관 대책회의(위원장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가 열렸다.²⁴⁾

간인들에게 좌익사범들이 수용된 교도소 습격 의도가 있었다고 왜곡 발표했다.

- 21)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2007, 118쪽.
보안사령부 『광주교도소 습격기도 사건』, 1980, 89쪽, 118쪽.
‘광주교도소 습격기도 사건’은 보안사가 5·18을 간첩, 혹은 좌익의 선동에 의해 촉발된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 조작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입원 부상자 명단’(『광주사태 부상자 지원현황』, 전라남도 자료 1982. 7;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엮음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23권, 2000, 359쪽)에 따르면, 유영선은 5월 21일 기독교병원에 머리에 총을 맞아 ‘두부충상’으로 입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기독교병원 진료기록부에는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인 ‘세미코 마’(semi coma)라고 적혀 있다.(‘광주기독교병원 진료기록부’, Hosp.No.80-14034;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엮음, 앞의 책 24권, 2000, 642면). 그런데 광주지방검찰청의 5월 28일자 『5·18 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엮음, 앞의 책 20권, 1999, 421면)에 따르면 유영선이 5월 27일 YWCA 부근에서 M16 소총에 의한 ‘안두부 관통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돼 있다. 유영선이 광주교도소 습격에 연루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사망날짜를 27일로 조작했다는 지적이다.
- 22) 5.25. 아침 도청 내부에 위장침투한 장계범이 일으킨 자작극으로 판명됐다. 이 사건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보안대가 도청 내 시민군 지도부를 교란시키고, 동향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이 도청 내부에 장계범을 위장 침투시킨 사건일 개연성이 크다.(장계범 공판조서, 1980.9.8.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법정진술)
- 23) 문용동과 폭약관리반원에 대한 왜곡과 조작은 1980년 6월 작성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광주사태진상조사단 보고서>(단장 이광로 준장)에서 나타난다. 이에 대해 2007년에 작성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국보위 조사단은 상무총정작전을 개시하기 직전 도청 지하실의 폭발물을 처리하기 위해 ㉠계엄군이 공작요원을 침투시켜 온건파 학생들을 포섭하고 폭발물을 사전 제거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오도하여 미담사례로 제시했다. ㉡온건파 학생들이 배승일을 대동하고 도청으로 잠입하여 수류탄 분리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강경과 폭도들에게 발각되어 24일 23시 이경식이 사살되었다고 기술했다. ㉣ 그러나 이경식이 아니라 문용동이 사살되었다. ㉤문용동은 24일이 아니라 27일 상무총정작전 도중 공수부대에 의해 사살되었다. ㉥전남합수단과 전교사에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자기들의 정당화를 위해 사실자체를 왜곡했다.(김형석, 『광주, 그날의 진실』, 나남출판사, 2018)
- 24)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156-159쪽, 2018.

대책위원으로는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위원장), 내무부 지방행정국장, 법무부 대검 공안부장, 국방부 동원예비국장, 문공부 공보국장, 육군본부 민사군정감, 보안사 정보처장, 치안본부 제4부장, 청와대 정무1비서관, 민정당 기초국장, 안기부 2국장 등이 참여했다.

대책회의는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편성했다. 이 실무위원회는 위장명칭을 사용했는데, ‘80위원회’라고 불렀다.²⁵⁾ 5·18대책위원회라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 ‘자료 제출 시는 처장급 이상 장군 서명 후 송부, 관계자 외 열람 금지’ 등 철저한 보안조치를 강구했다. 실무위원장은 안기부 2국장이고, 그 아래 자료수집 정리팀, 분석작성팀, 지원팀 등 3개 팀을 두었으며, 이들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심의반까지 두었다. 실무위원은 총 33명으로 내무부 2, 문공부 5, 보안사 2, 육본 2, 검찰 2, 안기부 20명 등이 참여했다. 실무위원의 구성으로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안기부가 주도하는 조직이었다.

80위원회의 주요임무는 ‘광주사태백서’ 발간(관련 자료 수집 및 종합검토)과 홍보대책(진압 불가피성 등) 추진 2가지였다. 1단계로 자료를 종합하여 백서화하고, 2단계로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안기부장 지침, 2차 회의자료, 1985.6.6.) 80위원회는 또 각 기관별로 수집할 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각 기관에서 당시 수집한 주요 자료는 계엄지휘체계, 작전명령근거, 작전지휘체계, 작전상황(일자별, 지역별, 부대별), 진압과정 실태사용량(화기 및 탄종별) 등 군 작전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핵심주제와 관련된 문서였다. 이 가운데 ‘광주사태의 실상’ 보고서(50쪽, 1985.6, 안기부 작성, 기무사가 국방부 특조위에 제출한 자료 24-25권에 포함)는 80위원회가 작성한 ‘광주사태 백서’로 추정된다. 주요 내용은 5.17조치의 배경 및 광주사태의 실상, 사태의 수습 및 처리 등이고 부록으로 1.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상황, 2.광주사태 관련자 명단 및 주요범죄 기록, 3.광주사태 쟁점별 일문일답 등이 붙어있다.²⁶⁾

80위원회는 KBS, MBC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언론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다. 이때 5·18프로그램은 문공부, 안기부 협의 하에 프로를 제작했는데 인터뷰 대상까지 안기부가 상세히 선정했다는 기록도 발견된다.

5-3. 육군대책위원회(육군 주도, 1988년)

1987년 6월항쟁을 겪으면서 5·18진상규명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노태우 정권은 1988년 1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이하 민화위)를 구성하여 현안으로 떠오른 ‘광주사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민화위 토론결과 5·18은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성격을 재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1988년 4월 1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대통령은 민화위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빌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고, “5·18은 민주화를 위해 젊은 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광주시민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나 진상규명 없이 ‘모든 걸 덮고 가자’는 식의 화해는 불가능했다.

25) 일부 자료에 따르면 ‘80위원회’라는 명칭은 1979년 10.26직후부터 등장한다는 의혹도 있다. 그 무렵 80위원회는 김재규 재산축적관련 조사, 80년도 부정축재자 재산조사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80위원회는 10.26 직후부터 은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점은 향후 진상규명 단계에서 밝혀져야 할 사항이다.

26)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156-159쪽, 2018.

1988년 4.26총선에서 처음으로 여소야대 상황을 맞은 국회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출발했다. 국회가 열리자마자 야당들의 공세는 거셌다. 6월 27일 야당 주도로 ‘5·18광주민중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5·18광주민중화운동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1988년 11월 18일부터 1989년 2월 24일까지 6차례 열렸다.

육군과 정부는 1987년 말 이런 정치 상황의 변화를 예견하고 군사작전에 대비하듯 미리 계획을 짜고 역할을 분담하여 대책을 강구하였다. 1988년 1월부터 ‘육군대책위원회’를 편성하여 가동시켰다. 육군위원회는 국회 청문회(6월 27일)는 물론 511위원회(5월 11일)보다 훨씬 앞서 정부가 민화위를 만든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시작했다. 그만큼 진압작전의 당사자였던 육군의 움직임은 빨랐고 체계적이었다. 그 결과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국방부는 육군의 대비활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자체 평가를 내렸다.²⁷⁾

‘육군의 활동을 크게 노출시키지 않고 은밀히 업무추진’
‘조기계획 착수 / 전담반 편성 운용 (기동성 있는 대비)’

이 문건에 따르면 ‘육군의 기본시각을 정립하여 관련부서에 조기 통보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청문회) 증언대상자별 질의내용, 답변서, 자료제공’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 줄 아래에는 ‘국방부, 민정당과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라고 적혀 있다. 이런 자체평가로 미루어 볼 때 1988년 국회청문회는 사실상 육군위원회가 선도해서 조기에 전담반을 편성 운용함으로써 군에 의해 정립된 ‘기본시각’과 자료, 주요 증인에 대한 정보까지도 정부나 정치권(여당)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언론에 널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주도하여 청문회 등 국회대책 차원에서 만든 ‘511위원회’가 5·18왜곡의 진원지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국방부가 5·18기념재단에 정보 공개한 자료 총 39권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은 육군대책위원회에서 생산한 자료다.²⁸⁾ 만약 이 문서가 청문회를 앞두고 군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한 자료의 전부이거나 혹은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육군위원회가 사실상 국방부를 통해 여당인 민정당의 협조아래 육군의 의도대로 청문회를 이끌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서의 압도적인 비중을 생산한 민심부는 육군본부에 편제된 육군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예하 계엄과와 협조기관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실을 통해 자료를 수집, 국회대응용 문건을 작성하였다. 육군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1988.2.21.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방부가 정보 공개한 문서²⁹⁾에 따르면 육군의 5·18대비활동은 1988년 1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2월 16일 참모총장에게 (광주)사태관련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한 후 다음날 육군대책위원회를 편성한다. 위원장(육군참모차장)을 책임자로 하여 위원(일반참모부장), 실무위원장(민심부장), 간사(기민처장), 자료정리팀(군사연구실장 외6명), 법률대책팀(법무감 외3명), 홍보대책팀(정전처장 외3명) 등 모두 10명이다.

27) 「업무참고」(89.1.31 작성, 부장 회식시 대담자료’라는 메모가 수기로 표기돼 있음.)라는 제목 하에 민심부장이 회식할 때 대담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국방부 정보공개자료 1권)

28) 국방부 지원팀이 제시한 목록에 의하면 15개 문서군 중에서 10개군이 육군본부 민사심리전참모부(이하, 민심부라 약칭)가 작성한 것이다. 이 사실은 육군위원회에 대해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집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29) 「광주사태관련 국회특위활동대비」, 국방부, 합참, 육본 보관자료-19, 1988.

육군위원회는 2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간 1차 자료수집 후 정리하여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였다. 이 기간 동안 광주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공수부대 소속 군 장교 등 핵심 인사 12명을 면담했다. 또한 진압작전 참가자 35명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18명으로부터 체험수기를 받았다. 2차 자료수집과 정리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이 기간 중에 6월 2일 민심 부장에게 그간 육군위원회가 수집 정리한 자료를 보고하였다. 뒤이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5·18대비 방안을 수립하여 6월 22일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였다. 육군위원회는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7월 6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광주사태 관련 대비방안, 육군의 기본시각³⁰⁾’이라는 주제로 발표함으로써 육군의 공식 입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육군위원회의 활동을 일별해 보면 2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군의 작전관련 문서들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재편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때 모든 군문서가 한꺼번에 조작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85년 안기부가 주도한 ‘80위원회’ 활동 시기에도 어느 정도 군의 입장에서 문서가 재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그 무렵까지는 아직 5·18을 ‘폭동’으로 규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군의 기본적인 상황인식이 1980년 5·18직후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985년도에는 군문서 조작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88년 육군위원회의 활동은 1985년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정치상황의 변화로 5·18에 대한 인식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변화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자기부정’을 해야 하는 군의 입장이 얼마나 곤혹스러웠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6. 사례분석 : 광주사태 작전참가 요원 체험수기

(1980.5.21. 도청앞 집단발포 상황을 중심으로)

육본 군사연구실은 1988.5.13.자 대외비 문서로 ‘광주사태체험수기 수집결과(보고)’ 현황을 보고하였다. 1988.2.1. 참모총장 지시에 따라 수집한 ‘광주사태 작전참가요원 수기’ 자료는 1985년도에 이미 작성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작성된 8건을 계엄과에서 인수했다. 여기에다 1988년도에 17건을 더 확보했으며, 1989년도에 2명을 추가하여 모두 27건의 수기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수집대상과 기간은 1988년 당시 현역으로 군에 근무 중인 군인 가운데 5·18때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주요참모로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38명에게 2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군의 입장에서 부정적 시각 내용이면 회송 재작성’토록 한다는 내용이 이 문서에 표기돼 있다. 이런 방침 때문이었는지 작성된 수기에는 광주시민들의 반응이 과격하게 묘사된 부분이 많았다.

“작전초기 계엄병력이 소요군중과 지근거리에 대치하자 전위과격분자의 위협행위는 소름끼칠 정도임.”(갈꾸리로 방석망을 툭툭치면서 “눈알을 빼버릴까” 등 위협) (11공수여단 작전참모 유○○)

30) 『주요지휘관 회의 슬라이드, 시나리오』, 민사심리전참모부, 국방부 정보공개자료 1권, 301-323쪽, 1988.

“5월 21일 폭도들의 투석으로 대대장(본인)도 가슴에 돌을 맞았으나 인내하며 부대 지휘 ... 차량운전수들은 20세 전후로서 술에 만취된 상태, 차주 3명은 차량돌진을 제지해달라고 애원 ... 폭도들의 돌진차량에 동료들이 중상을 당하자 계엄군도 공격적 자세로 돌변 ... 당시 계엄군이 없었더라면 전남은 물론 전국이 무법화되어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3공수여단 12대대장 김○○)

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런 수기들은 육군위원회가 그토록 감추려고 노력했던 민감한 사건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군 작전문서에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수집된 수기 가운데는 5·18당시 시민군 사이에서 소문으로만 떠돌았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계엄군의 ‘역공작’ 사실도 포함돼 있다.

사례1: 위장한 계엄군의 활동(1980.5.22.-23. 아세아자동차공장)

5월 21일 오전부터 23일까지 분노한 시민들이 여러 차례 아세아자동차 공장에 들어가 장갑차와 군용차량을 끌고 나왔다. 시민들은 5월 21일 도청에서 계엄군이 빠져나간 이후 22일부터는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모두 물러간 줄 알았다. 하지만 수기 내용 가운데는 계엄군이 외곽으로 퇴각한 이후에도 위장한 계엄군들이 지속적으로 광주 시내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아세아자동차(주)에서 3일에 걸쳐 420여대 장갑차 및 차량피탈. 1차 피탈 후 2,3차 피탈방지를 위해 연료호스 및 타이어 공기 제거 등 조치를 하였으나 시위군중은 이를 교묘히 응급 처치하여 피탈하였음.”(31사단 작전참모 박○○)

사례2: 최초 발포 왜곡(1980.5.19. 17:00, 광고 앞)

1980년 당시 505보안부대가 상부에 보고했던 최초 발포에 관한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기 내용도 눈길을 끈다. 505보안부대는 1980년 5월 19일 오후 계림동 광고 옆에서 계엄군에 의한 최초 발포사건이 발생한 직후 19일 밤 발포자로 지목된 11공수여단 소속 작전장교 차○○ 대위를 불러서 조사했다. 그날 밤 사령부에서 ‘배후에서 불순세력이 시위를 자극하여 선동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라고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광주소요 배후첩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³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군에서는 데모 진압 병력에게 실탄을 미지급코 있고, 경계 병력만 1인당 10발씩 불출, 장교가 통합보관코 있을 뿐 아니라, 5.19 발포 사실 전무하였음을 감안할 때, 고교생은 특정 데모 세력에 의해 무성 권총으로 사격, 계엄군이 발포한 것으로 선동기 위한 지능적 수법으로 판단됨.”

31) 이 보고서는 기무사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에 제출한 『광주소태일일속보첩』(383-1980-89)에 편철된 문서로 5월 20일 새벽 1시, 광주에서 505보안부대가 보고한 내용을 보안사에서 다시 정리하여 윗선에 보고한 사항이다.

위 문서에 나타난 보안사의 판단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1988년 작성된 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발포가 있었던 11공수여단의 인사참모 권○○이 쓴 수기에는 동일한 사건을 505보안부대의 보고내용과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5월 19일 오후) 공수병 7명이 사직공원에서 맞아 죽었다는 허위신고를 받고 (11공수여단) 63대대 작전장교가 APC에 1개 팀을 탑승, 수색하였으나 허위임을 알고 귀대하다가 시위군중의 투석에 놀란 운전수가 가로수와 충돌, 정지하자 시위군중이 APC에 화염병을 던지므로, 밖으로 나온 작전장교가 공포를 쓴 것(진압과정 중 최초의 총성임) 외 특별한 사고 없었음.”

5.19일 저녁 차 대위를 불러 이 사건을 조사한 505보안부대에서 차 대위가 발포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다. 차 대위가 자기부대의 인사참모에게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보안부대에 불러가서 거짓 진술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만약 수사기관인 보안부대에 불러가서 거짓을 말했다가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군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505보안부대는 계엄군(차 대위)이 발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식으로 발포사실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정 테모세력이 ‘무성 권총’으로 사격했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로 추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계엄군이 발포한 것처럼 누군가 선동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시 보안사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왜곡시킨 부분이다. 보안사의 이런 사실 왜곡은 5월 20일과 21일 사이에 3공수여단, 20사단 등 대규모 계엄군의 광주 축차투입 명분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511위원회는 이 사건을 『주요쟁점에 대한 재조명』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했다.³²⁾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51쪽)에 기재된 5.19. 17:00 광주고교 앞 11여단 작전장교 사격을 위 11공수여단 인사참모 권○○이 쓴 수기에 근거하여 “5.19 검시결과 총상 없으며, 긴급 상황하 작전장교의 위협사격을 계엄군의 발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511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또 다른 왜곡을 내포하고 있다. ‘검시결과 총상 없으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 있었던 고교생 김○○이 총상을 입어 전남대병원에 실려 가 수술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505보안부대 후속 기록에도 나타나 있다.

511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굳이 외면한 채 ‘총상 없음’으로 왜곡했던 이유는 ‘정무적 관점’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11위원회는 두 차례의 집단발포(5.20밤, 5.21 13:00)를 완강히 부인했고, 이와 관련된 증인들 역시 청문회에서 발포사실을 부인했다. 그런데 5.19. 작전참모의 발포는 진압작전에 참가한 장교가 이미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511위원회가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이었음을 굳이 강조한 것은 이와 같은 ‘정무적 관점’의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최초 발포는 상급부대인 31사단이나 전교사 상황일지에는 물론 11공수여단 작전 문서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 505보안부대가 직접 조사하여 사령부에 보고까지 했던 이 사건을 당시 상급지휘계통에서는 전혀 몰랐고, 보안사는 아예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을 왜곡 조작했으며,³³⁾ 8년 후

32) 국방부 정보공개자료 34권, 『주요쟁점에 대한 재조명』, 계엄군의 사격시기 및 상황, 별지1, 138쪽, 2018.

33)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115쪽. 2007.

511위원회 역시 다른 각도에서 또 이 사건을 왜곡했던 것이다.

사례3: 도청 앞 집단발포(1980.5.21. 13:00)

511위원회가 수집한 수기에는 군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겼던 21일 오후 1시경 도청앞 집단 발포 상황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대부분의 계엄군 작전문서에서는 도청 앞 집단발포의 흔적을 찾기 쉽지 않다. 기껏해야 다음과 같이 7공수특전여단 상황일지에 적혀있는 정도가 가장 근접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5.21. “13시 7분 도청 쪽으로 나는 총성 20여발, 13시 30분 자위권 발동”³⁴⁾

5.21. 오전부터 도청 분수대 앞 금남로 가장 일선에서 시위대와 맞서고 있었던 부대는 11공수 여단 61대대와 62대대였고, 그 뒤 15미터 후방 분수대 앞에는 63대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그 두 개의 부대를 현장에서 지휘했던 11공수 61대대장 안○○ 중령과 62대대장 이○○ 중령의 수기는 공식적인 군 문서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선 61대대장 안○○ 중령의 수기를 살펴보자. 안중령의 수기는 1985년에 작성한 것과, 1988년 작성한 것 2가지 종류가 있다. 88년에 작성된 것은 85년에 작성한 것을 군데군데 삭제하거나 표현을 바꿔서 그대로 다시 작성했다. 다음 사진은 5.21. 13:00 도청 앞 집단발포 상황을 어떻게 묘사했고, 수정했는지를 비교해서 보여준다.<첨부3> 수기원본 비교 참조) 먼저 1985년 안중령이 작성한 수기에서 5.21. 13:00 도청 앞 집단발포 전후 상황 묘사한 부분을 인용한다.³⁵⁾

12:55 일촉즉발 차량을 동시 6대는 APC 2대를 횡으로 정렬시키면서 강습 돌파를 감행할 준비로 시동을 부르릉 하는 등 위협하는 동안 일부 시민은 더 이상의 충돌은 출혈을 가져온다고 계속 폭도들을 만류하고 있었음. ㉞61, 62대가 전열, 63대대는 즉각 증원할 수 있도록 15미터 후방에, 35대대는 도청 울타리 벽에 완전히 전개 도청을 사수하고 있었으며, 잔류 경찰 및 도청의 직원은 전원 도주 아무도 건물과 주위에는 없었음.

13:00가 되자 동시에 8대의 차량과 APC가 시동과 크락손을 올리면서 ㉞1미터의 앞 전열을 무너트리면서 접근하자 APC 2대(여단 보유)(61대대장 지휘)를 받아 폭도들 APC(국산)를 맞받았으며 <삭제> ㉞폭도들은 사격을 개시 ㉞63대대 (하사 ○○○) 병사 1명이 폭도가 몰고온 APC에 압사 부상자를 발생케 하면서 도청을 향해 돌진하였고, <삭제> 앞에서 ㉞61, 62, 63대대는 즉각 전열 재정비 <삭제> 도청앞 분수대를 기준으로 좌측방 35, 금남로 61, 62 우측 63대대가 경계토록 병력을 재배치. ㉞이때 폭도들은 계속 500미터 이상 뒤로 다시 후퇴. ㉞계엄군의 작전을 탐지키 위해 대대 1명의 폭도가 버스 1대를 몰고 돌진 도청 앞 분수대를 돌아

34)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163쪽, 2018. 국방부특조위는 1981년 7공수여단 상황일지에 기록된 5.21. 도청 앞 사격 내용은 1988년 제출된 상황일지에는 물론 7공수여단 전투상보 등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군의 공식적인 5·18자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5.17 내란집단에 의해 관련 기록이 은폐·조작되면서 사격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5) 국방부 정보공개자료 36권 수록.

서 다시 나왔음. <삭제> 이후 폭도들은 감히 도청을 향해 돌진해오지 못하고 계속 500미터 이상 이격된 가운데 APC를 이용 강습돌파작전을 감행할 의도임을 인지하였음.<삭제>.

(*번호와 밑줄은 필자가 표시하였음)

안중령의 수기 중 5.21. 13:00 도청 앞 집단발포 상황 묘사는 군의 작전문서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분석에 앞서 우선 85년 수기와 88년 수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위 <삭제>로 표시된 부분이 85년도 수기에서는 누군가 사인펜 등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한줄 혹은 몇자씩 지웠는데, 88년 수기에서는 필기도구로 지운 대목만 모두 깔끔하게 없애 다시 타이핑했다. 그런데 ㉠의 밑줄 그은 부분은 88년 수기에도 타이핑 돼 있었으나 아마 나중에 다시 지운 것으로 보인다. 88년에 삭제 혹은 지운 부분들은 육군위원회의 수기작성 지침에 따라 재작성할 때 삭제한 것으로 짐작된다. 삭제 부분들의 원문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짐작키 어려울 만큼 진하게 지워졌지만 유일하게 그 내용을 보여주는 ㉠의 사례를 볼 때 ‘계엄군의 작전을 탐지키 위해’라는 표현이 511위원회가 볼 때 ‘정무적 관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여긴 것으로 추측된다.

㉠은 집단발포 5분전 계엄군의 배치상황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은 발포 직전 1미터 앞에 있던 시민들이 밀려들자 계엄군 APC가 앞장서서 다가오는 ‘폭도들 APC(국산)’를 맞받아 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문장 한 줄이 삭제돼 더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곧바로 ㉢ ‘사격을 개시’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일단 85년 수기에서 이 표현은 사격을 실시한 주체가 ‘시민’인지 ‘계엄군’인지가 분명치 않다. 행위의 주체가 생략돼 있었다. 하지만 88년 수기에서는 이 대목의 주어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APC(국산)를 받아 그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순간 폭도들은 사격을 개시”라고 적혀 있다. 85년 수기에서 문장이 <삭제>된 자리에 88년 수기에 ‘폭도들은’이라는 주어가 등장한 것이다. 왜 ‘사격을 개시’ 바로 앞 문장을 <삭제>했는지 숨겨졌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술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그 시각 발포 현장의 핵심에 있던 안중령의 수기를 통해 ‘최초 사격의 주체’를 바꿔버렸던 것이다.

㉣ 85년 수기에 ‘63대대 적APC로 병사 1명을 압사하고’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안중령 수기에서는 병사 1명을 압사한 것이 ‘적APC’라고 적혀 있다. 즉, ‘적(폭도)의 장갑차’라는 의미다. 하지만 85년 안중령이 처음 썼던 수기 원문에는 ‘적APC’라는 표현이 전혀 없었지만 동일한 문장에서 바로 그 앞 한 줄 가량이 필기도구로 지워졌다. 그 바로 아래에다 필기도구로 ‘적APC로’라는 표현을 삽입하도록 지시하는 단어가 필기도구로 쓴 글자체로 적혀 있다. 그런데 88년 재작성할 때는 이 지시에 따라 ‘적APC로’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훨씬 더 쉽고 분명한 문맥으로 “병사 1명이 폭도가 몰고온 APC에 압사”라고 고쳐서 타이핑 문체로 삽입됐다. 공수부대원 1명을 압사시킨 주체를 바꿔버린 표현이다. 안중령은 육군위원회의 지시로 실제상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은 다음에 분석할 이중령의 수기에서 안중령의 이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 갑자기 밀려든 시위군중과 이어진 발포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곧바로 병력의 재배치에 의해 ㉦처럼 처음과 동일한 대형으로 계엄군의 대열을 정비했다. 만약 이때 ‘폭도’가 ㉢의 사

격을 했더라면 이렇듯 처음처럼 계엄군의 대열을 정비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폭도가 총기와 실탄으로 무장하여 먼저 계엄군을 향해 사격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대열을 정비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에서 계엄군의 희생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상적인 지휘관이라면 당연히 계엄군이 건물 등 업폐물 뒤로 피하도록 조치한 후 대응에 나설 것이다.

㉔ 폭도들이 500미터 이상 뒤로 후퇴한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폭도가 계엄군을 향해 먼저 총을 쏘았다면 시위군중이 500미터나 뒤로 물러나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계엄군이 시위군중을 향해 먼저 총을 쏘았다면 무조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이제 11공수여단 62대대장 이○○ 중령이 작성한 체험 수기³⁶⁾를 살펴보자. 이중령의 수기는 1988년 육군위원회가 작성한 수기 작성자 명단에서는 그 이름을 찾을 수 없다. 아마도 1985년 이전 어느 시점에선가 군 자체적으로 작성한 게 아닐까 짐작될 뿐이다. 이중령의 수기는 안중령 수기와 달리 마이크로필름 상태가 매우 어둡고 흐려 글씨를 제대로 판독하기 어렵다. 필자는 이중령의 수기를 판독하기 위해 다른 자료와 비교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수차례 시도하였고, 마침내 그의 수기에서 5.21. 13:00 도청앞 집단발포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명의 13:00 정각 …(중략)… 400미터 거리를 두고 대치하게 되었다. 어느 빈 버스 한 대에 1명이 총을 난사하면서 돌진하다가 사살되고, 1대가 전속력으로 질주하여 도청 분수대 한 바퀴를 돌아 서석동 쪽으로 빠져 나간다.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돌아보니 ① 병력들은 마치 옛 전장에서 횡대 무릎짜 자세로 적을 공격하는 듯한 자세로 일제히 분수대 앞에 포진하여 응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정신이 아찔하였다…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한의 자위책으로 족하다. ② 물러서 있는 군중에게 무차별 사격을 중지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친다. 순간 위험도 아랑곳없이 ③ 횡대로 사격중인 병력들 옆으로 달려들면서 총구를 제치며 사격중지를 외쳐댔다.”³⁷⁾

(*번호와 밑줄은 필자가 표시하였음)

이중령의 수기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5.21. 13:00 도청 앞에서 ① 계엄군들이 먼저 사격을 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병사들은 ‘횡대 무릎짜 자세로, ‘적을 공격하는 듯한 자세로 일제히 ‘집단사격’을 한 것이다. 사격 장소도 ‘분수대 앞’에 포진한 상태라는 점을 특정하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안중령의 수기에서는 ㉔ ‘사격을 개시’한 주체가 누구인가가 생략되어 있었는데 이중령은 누가 사격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 5.17내란집단은 지금까지도 5.21. 도청 앞에서 계엄군에 의한 집단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³⁸⁾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이 중령의 수기에 따르면 계엄군은 ② 물러서 있던 군중에게조차 ‘무차별 사격’을 실시했다.

36) 앞의 책, 165쪽. 국방부특조위는 11공수 62대대장 이○○ 중령의 체험수기 내용을 『기무사 제공 자료집』 84-17권에서 재인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수기가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37) 앞의 국방부특조위조사보고서, 165쪽.

38) 『전환 회고록』(417쪽, 2017)에서도 5.21. 도청 앞 계엄군 발포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둘째, 계엄군은 ㉠처럼 ‘횡대 무릎썩 자세’로 사격을 실시했다. ‘횡대’란 시위대를 향해 전면에서 가로로 ‘대열’을 지은 모습이다. 이 중령은 수기에서 두 차례(㉠㉢)나 계엄군의 사격 대열이 ‘횡대’였음을 언급한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지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 갑작스럽게 시위 군중의 힘에 밀리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사격을 했다면 이렇게 ‘횡대’로 대열을 맞춰 일사분란하게 사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셋째, ㉠에서처럼 ‘무릎썩 자세’를 취하면서 ‘적을 공격하는 듯한 자세로 일제히 분수대 앞에 포진하여 응사’하였다. 이런 계엄군의 무릎썩 자세는 시위대가 먼저 무장했다는 ‘선제무장설’³⁹⁾ 혹은 ‘선제사격설’⁴⁰⁾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유력한 증거다. 대부분의 군 문서는 시민군의 선제무장 사실을 집중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특전사 전투상보』(11공수여단, 1666쪽. 『전교사 작전상황일지』, 21일 부분. 『광주사태 발발 원인과 배경 외 50건』, 발포에 관한문제, (청문회 대비 511위원회 자료, 기무사보관자료). 『계엄군 작전지휘체계 외 15건』, 총기 탄약 및 폭발물 탈취 상황. (기무사보관자료). 『전남도경 상황일지』, 21쪽. (기무사보관자료).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173쪽. (기무사보관자료) 등이 바로 그런 문서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5.21. 13:00 경 집단발포 상황을 왜곡, 조작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있는 것이다.⁴¹⁾

위에 인용한 안중령의 수기 ㉡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만약 시위대가 카빈 등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먼저 계엄군에게 사격을 했다면 계엄군들은 시위대로부터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기 위해 우선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계엄군은 곧바로 대열을 정비했고, 자신의 몸을 노출시킨 채 ‘무릎썩 자세’로 ‘군중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그로부터 1~2시간 뒤 분노한 시위대가 카빈 소총 등으로 무장하여 다시 금남로에 나타났을 때는 계엄군이 금남로 주변의 높은 건물 뒤로 몸을 숨기거나 건물 위 옥상 등에 올라가서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을 실시했다. 그런데 처음 사격이 있던 순간에는 자신의 몸을 완전히 노출시킨 채 상대를 향해 정조준하는 ‘무릎썩’ 자세를 취한 것은 시위대쪽에서 날아오는 총탄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중령의 수기에서 오후 1시 집단발포가 있기 바로 직전 상황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상황이 더욱 선명하게 묘사돼 있다.⁴²⁾

정오경, ㉠ 폭도들은 만들어온 김밥 등을 우리 병력에게 나누어 주며 우선 먹어야 이 짓도 할 게 아니냐며 권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운명의 13:00 정각.

㉡ 12:55분, 폭도대표 1명이 나를 만나자고 한다. 순간 불길한 예감에 앞으로 나가면서 대처하고 있던 장갑차 2대를 시동 걸게 한 뒤 폭도 대표와 만났다. 그의 말은 앞으로 5분밖에 남

39) 김○○(동아일보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 회의록』, 25차 회의 증언, 1989.1.26.; 장○○, 『검찰진술조서』, 『5·18사건수사기록』, 31669쪽, 1995.4.26.; 전두환, 『전두환회고록1』, 399-400쪽, 2017.; 지○○, 『수사기록으로본 12.12와 5·18 상』, 358-359쪽, 2009.; 지○○, 『5·18최종분석보고서』, 28쪽, 2014.

40) 최○(11공수여단장),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 회의록』, 77쪽, 1988.12.20. 최○, 『검찰진술조서』, 『5·18사건수사기록』, 24627쪽, 1994.12.24.; 안○○(11공수 61대대장), 『검찰진술조서』, 『5·18사건수사기록』, 31038쪽, 1995.5.7.

41) 안길정, 『1980년 5월 시위대의 선제무장설 비판』, 『역사학연구』 제68집, 2017.11.

42) 이 인용문은 이중령 수기의 앞에 인용한 문단에서 ‘중략’된 부분이다.

지 않았다. 최후통첩을 하는 것이었다. 다급했다. 61대대장 안부웅 중령을 불러 재차 협상을 시도했다. ③ 나는 폭도 대표를 설득하고, 안중령은 상부에 무전을 하고 있던 중 ④ 돌맹이와 각목이 날아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화염병 3개가 날아와 뒤에 있던 장갑차 사이에서 불이 붙어 버렸다. 그야말로 순식간의 일이었다.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⑤ 장갑차를 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급히 장갑차를 후진시키는 것과 동시 15만 여의 군중은 순식간에 폭도화하여 노도와 같이 짓밟고 밀려드는 것이 아닌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다. 누가 지휘하고 누구에게 통제받을 겨를이 없던 우리 병력들은 ⑥ 최루탄을 투척하며 정신없이 도청광장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말았다. 정신없이 ⑦ 후퇴하던 중 전방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⑧ 뒷걸음치던 장갑차에 어느 병력 하나가 력사당하는 현상이 목격되었다. 이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전장이다.

⑨ 철수하던 병력이 정신을 가다듬고 몰려오는 폭도들을 향해 응사하기 시작했다.

① 광주시민들은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엄군에게도 김밥을 건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발포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계엄군에게 김밥을 건넨 만큼 서로 긴장이 풀려 있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이날 오전 시민대표들이 도지사과 면담 이후 12시까지 광주 시내에서 공수부대가 물러날 것이라는 낙관 섞인 기대가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몰라도 공수부대 지휘부에서는 ‘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라’는 지시만 반복했다.⁴³⁾ 당초 기대했던 12시에서 1시간이 더 지나자 시위군중의 인내심은 마침내 폭발했다.

② 집단발포 5분전 시민대표와 마지막 협상이 벌어질 때 이중령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장갑차 2대에 시동을 걸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위 안중령의 수기와 동일한 상황이지만 문맥이 다르다. 안중령은 5분전 상황을 “APC 2대를 횡으로 정렬시키면서 강습돌파를 감행할 준비로 시동을 부르릉하는 등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안중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로 대치만하고 있다가 오후 1시가 가까워지자 시위대가 동요하면서 긴장이 높아졌고, 이때 공수부대는 ‘강습돌파를 감행할 준비’로 2대의 장갑차에 시동을 걸어 위협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중령과 달리 당시 11공수여단장의 위임을 받아 여단장 대신 도청앞 상황을 총괄지휘하던 안중령은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 ‘강습돌파 감행 준비’를 하였다는 것이다.

③ 이중령이 폭도 대표를 설득하는 동안에도 안중령은 ‘상부에 무전’을 하고 있었다. 그 무전을 통해 ‘윗선으로부터 모종의 지시’를 받아 ‘강습돌파 감행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닐까? 그 지시가 바로 ‘발포명령’이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④ 시위군중이 던진 화염병 3개가 날아와 계엄군 장갑차 사이에 떨어졌고, 그 일대에 불이 붙어버리는 상황이다.

⑤ 장갑차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급히 장갑차를 후진시켰다.

⑥ 공수부대 병력도 밀려오는 군중의 위세에 압도되어 최루탄을 던지면서 도청광장으로 후퇴한다.

43) 이 시각 3,7,11공수여단장들은 모두 전교사에 모여 있었고, 계엄군 지휘부는 공수부대에 대한 광주시민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5.21. 오후 20사단을 공수부대와 교체하여 도청에 투입하려는 작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한다.

⑦ 후퇴하던 중 전방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이때 총소리는 누가 쏜 총에서 난 소리였는지 이증령은 판단할 수 없었다. ‘전방’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만약 후퇴하던 방향이라면, 도청 쪽에서 있던 63대대 병력이 쏜 것일 수도 있다. 전방이 시위대쪽이라면 맨 앞줄에서 있었던 61 혹은 62대대 병력이 쏜 것일 수도 있다.

⑧ 이증령은 이 때 ‘뒷걸음치던 장갑차’에 병사 한명이 압사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뒷걸음치던 장갑차’라는 표현은 이 장갑차가 시위대 것이 아니라 ‘계엄군 장갑차’였다는 것을 뜻한다. 시위대 장갑차라면 앞을 향해서 밀고 들어오지 ‘뒷걸음’으로 후진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증령은 계엄군의 후진하는 장갑차에 공수부대 병사 한명이 압사당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 인용한 안증령의 88년 수기 ㉔에서는 ‘폭도가 몰고 온 APC에 압사’라고 표현돼 있다. 이미 안증령 수기를 분석할 때 이 부분은 85년과 달리 88년에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이증령의 수기는 안증령 수기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준다.

⑨ 철수하던 병력이 정신을 가다듬고 몰려드는 폭도를 향해 응사를 시작했다. 바로 그때 이증령은 자신이 통제해야 할 병력들이 ‘횡대 무릎짜 자세’로 분수대 앞에서 대열을 지어 사격하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서 사격을 저지시켰다는 것이다.

위 두 사람이 쓴 진압작전 참가수기 중 집단발포 상황을 분석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980. 5. 21. 13:00 도청 앞 집단발포 현장에서 시위대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부대는 11공수여단 61,62,63대대였다. 그 가운데 금남로에서 가장 전면에서 시위대와 직접 대면한 부대는 61, 62대대였고, 그 뒤 분수대 앞쪽에 63대대가 있었다. 61대대장 안○○ 중령과 62대대장 이○○ 중령의 수기는 군의 공식작전문서 못지않게 당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역사자료다. 이 두 사람의 집단발포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의 목격담과 생각을 적은 수기는 상호보완적이면서도 동일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이유는 안증령의 경우 1985년과 1988년 두 차례 쓴 수기가 있는데, 1988년 치는 처음 쓴 원본에서 상당부분 수정이 됐고, 수정된 부분은 주로 발포직전과 발포당시 상황 묘사 부분이다. 원본에서는 지워졌던 총을 쏜 주체가 1988년 수정본에서는 ‘폭도들’로 바뀌어서 타이핑됐고, 장갑차에 깔린 계엄군 병사 1명도 원본에서 지워진 부분에 ‘폭도가 몰고온 APC’로 바뀌어 기재됐다. 육군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수기 자체를 왜곡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증령의 수기는 언제 썼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안증령과 달리 한 가지 버전만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증령은 최초 발포는 누가 쏜 것인지 식별할 수 없었지만 곧이어 지속된 집단발포는 계엄군이 ‘횡대 무릎짜 자세’에서 시위대를 향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장갑차에 깔린 계엄군 병사는 ‘뒷걸음치던 장갑차’ 즉, 계엄군의 장갑차에 깔렸고, 그 장면을 이증령이 직접 목격했다.

결론적으로 안증령이 1988년 쓴 수기는 왜곡 수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증령의 수기는 원본일 가능성이 크다. 이증령의 수기가 이야기하는 발포의 진실은 진상규명단계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다.

7. 마무리

본 연구는 육군의 5·18왜곡에 관한 시론에 불과하다.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국방부가 5·18재단에 공개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마저 전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기 보다는 왜곡의 개괄적인 상황을 요약하는 정도다. 이 분석작업은 시간을 두고 앞으로 몇 차례 더 지속할 예정이다. 본 발표는 그 연구 중 일부에 해당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은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의 대략적인 성격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상규명과 관련,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부분들을 소개하였다. 그 가운데 진상규명의 초점이 되고 있는 5월 21일 13:00 전후 도청앞 집단발포와 관련 현장에서 직접 부대를 지휘했던 일선 지휘관 2명의 ‘광주사태 작전참가요원의 수기’를 소개하고,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지점은 앞으로 더욱 많은 자료와 분석이 필요하다.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 앞서 군의 기본시각을 정리한 육군위원회의 활동은 ‘군의 반성과 고백’이라는 자기성찰 과정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때 군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5·18이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청문회에 임했다면 오늘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크게 달라졌을 지도 모른다. 또한 일부 극우선동가들에 의해 5·18이 이렇듯 극심하게 훼손, 폄훼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끝)

〈첨부 1〉 국방부 정보공개자료 목록(2018.4, 국방부 제공)

번호	제목	보관기관	쪽수
1	광주사태 참고철(기본계획)(2-1)	국가기록원	143
2	광주사태 참고철(기본계획)(2-2)	국가기록원	72
3	증언대비계획(Ⅰ) (Ⅱ-Ⅰ)	국가기록원	118
4	증언대비계획(Ⅰ) (Ⅱ-Ⅱ)	국가기록원	233
5	증언대비계획(Ⅱ, Ⅲ)	국가기록원	143
6	광주사태관련 특전사 자료 Ⅱ-Ⅰ	국가기록원	106
7	(광주사태관련)작전 참가 지휘관/참모소감문	국가기록원	134
8	국방부자료 Ⅰ	군사편찬연구소	191
9	31사단 관계관 간담회	군사편찬연구소	99
10	광주사태관련 국회특위활동대비	국가기록원	81
11	511 관련자료	국가기록원	181
12	기무사 자료 39(1/2)/57	기무사	56
13	기무사 자료 45/57	기무사	48
14	기무사 자료 44(1/2)/57	기무사	48
15	기무사 자료 43(1/2)/57	기무사	30
16	기무사 자료 46(1/2)/57	기무사	59
17	기무사 자료 43(2/2)/57	기무사	37
18	국회검증준비 국회질의답변 Ⅰ (광주사태 관련자료)	군사편찬연구소	94
19	국회검증준비 국회질의답변 Ⅱ (광주사태 관련 현안문제)	군사편찬연구소	48
20	국회검증준비 국회질의답변 Ⅲ (광주사태 관련 국회보고자료)	군사편찬연구소	53

번호	제목	보관기관	쪽수
21	국회검증준비 국회질의답변Ⅳ (광주사태 관련 대비활동)	군사편찬연구소	156
22	국회 광주특위 문서검증 결과	기정단	135
23	20사단 총정 작전보고	국가기록원	43
24	지참보고	기무사	14
25	국회 문서 검증/서류제출	국가기록원	172
26	[국방부/합참/육본 보관자료-43] 광주사태(초안)	국가기록원	198
27	현안문제	군사편찬연구소	159
28	전투상보(31사단)	육본 기정단	42
29	[자료3-24] 국회자료 요구철 (광주사태 특위 1권) (국회광주청문회)	국가기록원	273
30	광주 특위문서 검증결과	국가기록원	135
31	전투상보(특전사)	육본 기정단	74
32	특전사 자료	군사편찬연구소	158
33	광주사태 자료정리 보고	육군본부	181
34	현안문제 관련 자료	육군본부	254
35	사태 관련 대비 계획	군사편찬연구소	5
36	작전참가 지휘관 참모 소감문	군사편찬연구소	255
37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군사편찬연구소	91
38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국가기록원	226
39	역사자료 광주사태체험수기	육군본부	436

〈첨부 2〉 육군대책위원회의 청문회 준비활동

(출처: 국방부 정보공개자료 1권, 7~8쪽, 민심부 기민처 작성)

주요 실시 사항

주요 실시 사항	일 정	비 고
○ 사태관련 대비계획 수립	88.1.30-2.16	총장보고 : 2.16
○ 육군 대책위원회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참모차장 · 위 원 : 일반참모부장 · 실무위원장: 민심부장 · 간 사 : 기민처장 · 자료정리팀: 군사연구실장의 6명 · 법률 대책팀: 법무감 외 3명 · 홍보 대책팀: 정전처장의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 2.17-20 · 업무 개시: 2.21일 	
○ 자료수집/정리(공주사태 보고서)	2.21-3.30	총장보고 : 3.30일
○ 작전참가자탐방 면담(12명 실시)	3.1 - 4.20	
○ 작전참가자 체험담(서신발송 35명)	5.18 특별조사 위원회인	접수 : 18명
○ 2차 자료수집/재정리(공주사태 보고서)	4.1- 6.1	부장보고 : 6.2일 (군사연구실장 업무종결)
○ 자료수집을 위한 현지출장 (전교사, 31사단)	4.18-4.23	총령 김정 부 외 1명
○ 사태관련 대비방안 수립	5.1- 5. 30	총장보고 : 6.1일
○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시각통일)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태관련 대비방안 	6.20-7. 6	지휘관 회의: 7.6일
○ 국회 답변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질의 / 답변서 	7.5-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2회 임시국회(7.4-7.8) · 143 " (7.18-7.23) · 국정감사(10.5-23)
○ 국방부 511위원회 실무장교 파견	7.8 -11.30	

주요 실시 사항	일정	비고
○ 청문회 증언 준비 . 예상질의/ 답변서 작업 . 예행 연습 (5차) . 증언자 현지출장(5명) . 작전참가자 간담회(4차)	8.1 -11.15 " 9.15 -17 8.1 -11.15	
○ 문서검증 (2차) . 군사연구실 (2회) . 부산 중앙문서 보관소 (1회)	11.14 -12. 3	
○ 국외 문서제출 (4차) . 요구 건수 : 120건 . 제출 건수 : 89건 20만매	8.23 -12. 16	
국외 청문회 실시	. 1차 (김대 [■] , 이희 [■] , 김승 [■]) 11.18-19	대책팀 지원
	. 2차 (정동 [■] , 정승 [■] , 정거 [■] , 심재 [■] , 김종 [■] , 신현 [■] , 이신 [■] , 한상 [■] , 정호 [■] , 윤흥 [■]) 11.30 12.6- 7	"
	. 3차 (이희 [■] , 소준 [■] , 김욱 [■] , 유병 [■] , 최 [■] , 권승 [■] , 박준 [■] , 중 [■] , 서명 [■]) 12.19-21	"
청문회 중간 분석 결과보고	12.22-30	총장보고 :12.30 국방부 보고 :12.31

5.18
 특별조사
 위원회의

나경 정승[■] 등

3

1.26-27

228

8

<첨부 3> 작전참가 수기(1)

제11공수여단 61대대장 안00 중령 작전참가 수기(1980.5.21. 13:00 도청앞 집단발포 상황)

1985년 작성

13:00 - 13:00경 적자 동성(4)에의 사살과 APC 등 격퇴과 소총을
 들이면서 1미터의 앞 선열을 두니 2미터에서 접근하자 APC 2대
 (역안포동)(61대대장 지휘)를 받아 폭도들 APC (극산)에 맞서
 29APC로서) 적사 1명을 잡히고 많은 부상자를 발생시키면서
 도청을 향해 돌진 하였음
 앞에서 61, 62, 63대대는 육군 선열 제압이
 도청앞 은수역을 기준으로 적수상 35, 61, 62, 63은 62대대
 공격으로 병력을 제압시 적대 폭도들은 계속 500미터 이상 뒤로
 후퇴 적열군의 선열을 잡기위 한데 1미터 폭도가 적사 1명을
 잡고 돌진 도청앞 은수역을 통하여 적사 1명
 이후 폭도들은 잡혀 도청을 향해 돌진했으나 500미터 이상
 이점된 기준에 APC를 이용 집중포격으로 공격당 하고있을 인적이 있었음
 1980.5.21. 13:00경
 ① 역안산에서 4개대대 지휘관 및 부관 61대대장에게 위임한다는 지시와
 15:00 경 20사단과 고지산 역전에서 공격을 주도 하라는 지시와 적자 도청앞
 공격을 용감으로 공작의 발발후상해 병력은 은산 경기를 폭가선서
 고지산에서 올 것을 대기
 61-63 1대대 도청앞 은수역까지 전속시 20사단 병력이 도착을 하였으나
 단일발발의 48은 발출중을 지치지 워한 37사단 병력 12명의 2번에
 공격 접수 후 뒤는 병기가 오지 않았음.
 당시 상황으로 완전 도의선 중대를 공격시키려는 도청앞의 4개대대의
 포격전과 역안산 두 지역는 격전을 일체 없었음

20-11 00000051

1988년 작성

12:35 집중공격 거대한 공격 4개는 1980.5.21. 13:00경 도청앞 집단발포 상황
 공격을 결행한 근거로 기록을 부수려는 등 위협하는 동안 철
 13:00 13:00경 적자 동성(4)에의 사살과 APC 등 격퇴과 소총을
 들이면서 1미터의 앞 선열을 두니 2미터에서 접근하자 APC 2대
 (역안포동) (61대대장 지휘)를 받아 폭도들 19C (극산)을 만나
 3미터 거리로 포격으로 적은 은산 폭도들은 공격을 계속 61대
 (적사 000) 병사 1명이 육군 포격으로 19C 역안산 후방에서
 앞선에서 공격을 일체 돌진시키 앞에서 61, 62, 63대대는 육군
 선열 제압이 도청앞 은수역을 기준으로 적수상 35, 61, 62,
 63은 62대대 공격으로 병력을 제압시 적대 폭도들은 계속 500미터
 이상 뒤로 후퇴 적열군의 선열을 잡기위 한데 1미터 폭도
 1980.5.21. 13:00경
 ① 역안산에서 4개대대 지휘관 및 부관 61대대장에게 위임한다는 지시와
 15:00 경 20사단과 고지산 역전에서 공격을 주도 하라는 지시와 적자 도청앞
 공격을 용감으로 공작의 발발후상해 병력은 은산 경기를 폭가선서
 고지산에서 올 것을 대기
 61-63 1대대 도청앞 은수역까지 전속시 20사단 병력이 도착을 하였으나
 단일발발의 48은 발출중을 지치지 워한 37사단 병력 12명의 2번에
 공격 접수 후 뒤는 병기가 오지 않았음.
 당시 상황으로 완전 도의선 중대를 공격시키려는 도청앞의 4개대대의
 포격전과 역안산 두 지역는 격전을 일체 없었음

20-13 00000237

<첨부 4> 작전참가 수기(2)

제1공수여단 62대대장 이○○ 중령 작전참가 수기(1980.5.21.13:00 도청앞 집단발포 상황)

요구가 깊어 관철되어 한다는 기성감을 갖게된 군중은 겁이 없으므로 물건들
 을 때마침 속속 모으려는 외부 용연단 (?) 들은 더욱 분위기를 곤란하게 하고 군
 으리. 강감사들으로 부강한 복도들이 담도카가 기세는 더욱 들끓다.
 고령 거린 기령이여 도청앞 거리만 4차로까지 불기엔 무기 병력들 약 700
 기어 뒤에는 오직 도청 광장만이 남아있을 판국이다. 용도만다 군중들도 깨어
 진고 그야말로 사면초가 옥안에 든 쥐로양이다. 경오경, 복도들은 관들 어
 른 집안들을 우리 병행에게 나누어주며 우선 방어야 이겼도 안게 아니냐며
 권하는 예프님이 방어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윤명의 73:00 정과
 72:55분 복도대표 7명이 나뉘면서 나가고 한다. 순간 불길한 역군이 앞으로 나
 가면서 미친하고 있던 강감사 2명을 시름 깊게한뒤 복도대표와 관났다. 그외
 관은 앞으로 5분밖에 남지 않았다. 최후 물건을 가진 것이었다. 다급했다.
 여태까지 안부용 공임을 불린 제각 입장을 시도했다. 나는 복도 대표를 심
 득하고, 안들 것은 삼부 예이문연들이고 있던 중 돌맹이의 크목이 남아오기
 기라던데 그 기가 확임병 몇개가 남아와 뒤에있던 강감사 사리에의 불이 불
 이 거렸다. 그야말로 순식간의 일이었다. 알리 생각한 계통도 없이 강감사
 들 관제와 가졌다는 생각에 급히 강감사들 무력 시키는 것과 동시에 사면초가의
 언들은 순식간의 돌로 화이어 보도와 같이 깃발고 밀려드는 것이 아닌가
 일들은 순식간의 사이다. 누가 치원하고 누구에게 동맹만을 거들어 있던
 기는 강감사들은 최후만을 무력하게 정신없이 무성공장으로 무척일수 있어
 있는 이수이장이 방어되고 있었다. 정신없이 무척이편을 전방에서 총소리
 기 들리고 화염을 거린 강감사여 어느 언덕이냐기 지르던하는 언덕의 불고
 되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악마구렁의 전쟁이다.
 불을 지른 일터에 정신을 주더듬고 공격하는 복도들을 말한을 사리감 기의
 했다.
 이적이었던 계통 중의 불기들의 복도들은 요란한 돌성전 돌통의 불기여 200
 267

■ 토론문

군의 5·18왜곡조작에 대한 자료분석

- 국방부 정보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

노영기(조선대학교 교수)

그동안 많은 연구와 글을 통해 군(국방부 포함)의 5·18왜곡조작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육군과 국방부,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자료를 조작함으로써 진상규명이 어렵게 됐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는 5·18왜곡조작에 대한 사실을 어느 정도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 자료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5·18이 어떻게 왜곡조작되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토론자 또한 이 같은 기존 연구와 필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크게 이론이 없으므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오늘의 토론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필자는 이 글에서 1988년 제13대 국회의 광주청문회의에서 만들어진 5·18 이미지를 “군 당국에 의해 철저히 사전준비과정을 거쳐 연출된 이미지였고, 역사적 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왜곡된 ‘가공의 이미지’”이고 이 같은 이미지가 이후에 사법처리에도 반영되어 “사회적 권위마저 부여”됐다고 평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군이 5·18을 왜곡조작했다는 점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군이 무엇을, 어떻게 연출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왜곡조작의 이미지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었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위의 문제와 연관시켜 511위원회가 제시한 ‘511프레임’ 즉 ‘군의 기본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군이 무엇을 왜곡, 조작했는가에 대한 ‘프레임’의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합수부의 왜곡 사례(5가지)는 기존의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기존 보고와 차별성이 그리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례 외에 다른 왜곡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보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80위원회의 조직은 서술하고 있으나, 이 기구가 어떤 원칙이나 지침에 따라 활동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소략합니다. 필자의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제공 사료 중 상당수는 기존에 발굴된 자료가 많습니다. 새로운 자료(12~17권)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 학술교류포럼]

국가폭력의 청산과 정의

5·18과 전지구적 차원의 이행기정의

발표 2

5·18 역사왜곡과 법적대응

사회: 박진우(5·18기념재단 연구실장)

발표: 김정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토론: 김남진(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5·18 역사왜곡과 법적대응

김정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1. 5·18진상규명의 필요성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9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더 규명할 진실이 남아 있느냐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최초 발포명령자와 집단 발포 명령자를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행방불명자 규모와 암매장의 진실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헬기사격과 전투기 광주 폭격 대기설, 80위원회 및 511 연구위원회의 5·18 군 기록 조작 의혹 등이 새로 밝혀야 할 과제로 제기됐다. 무엇보다 전두환 회고록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 등 터무니없는 왜곡과 폄훼 시도는 왜 아직도 진상규명이 필요한지를 절감하게 한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과 폄훼를 막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통합 때문이기도 하다. 5·18민주화운동의 왜곡과 폄훼는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서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해자로서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용서할 대상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일 수밖에 없다. 5·18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나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5·18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확인(팩트 체크)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 전두환회고록과 지만원의 역사왜곡에 대한 법률적 대응

1997년 12·12와 5·18재판을 통하여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법적 단죄를 받았다. 5·18은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었다. 2011년 5·18기록물은 영국의 ‘대헌장’, 미국의 ‘독립선언문’,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등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에서 길이 빛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극우와 뉴라이트 성향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한 극우선동가집단이 여전히 5·18의 원인과 성격, 진행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북한군이 5·18 당시 광주에 내려

왔고, 시민군 가운데 복면한 사람들은 북한군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도를 넘는 허위주장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두환 회고록>은 이와 같은 역사왜곡의 정점에 있다고 보인다. 전두환은 그동안 한 번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지 않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나, 2017년 4월 출판한 자신의 회고록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까지 ‘북한군개입설’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북한군개입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5·18 당시 국군은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적이 없다는 전두환 자신의 궤변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만원 등의 허위주장처럼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하면 광주시민들은 양민이 아니고 불순분자로 취급되어 살상해도 무관한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둔 것으로 추정된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세력은 헬기사격문제에 관하여도 현재까지 완강하게 그 사실을 부정한다. 헬기를 이용한 사격은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자행되었던 계엄군의 폭력이 자위권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던 것이며, 폭력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신군부 진압논리의 허구를 단번에 뒤집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은 야만적인 학살이지 결코 그들이 주장하는 자위권과 관계 지을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사 정권의 계엄령에 맞섰던 수많은 광주시민들은 무고하게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입거나, 연행되었으며, 그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트라우마는 39년이 지난 2019년 현재까지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이데올로기적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일부 세력들로부터 ‘빨갱이’, ‘간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오랜 시간 동안 인격권마저 침해받아 왔다.

지난 2016년 6월 <월간 신동아>에 전두환·이순자 부부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당시 전두환·이순자 부부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은 금시초문(今時初聞)”이라며 “그 주장은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주장이다. 지만원의 주장을 연희동(전두환)의 주장과 연결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2017년 4월, 지만원 등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했다. <전두환 회고록>은 지금까지 지만원과 일베 등 5·18 왜곡세력을 중심으로 주장되어 왔던 북한군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대부분 옮겨와서 집대성했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전두환이 5·18왜곡·편향 세력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온 것은 통상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기록하는 회고록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전두환은 스스로 전두환 회고록의 서문에 본인과 5·18은 무관하며, 당시 계엄군의 투입과 작전 지휘에 채무자 전두환이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면서도 ‘5·18사태의 실체에 관한 논란’이라는 소재목 하에 상당 분량으로 해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한편 지만원은 북한군 개입설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유죄¹⁾가 선고되었고,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

1) 대법원 2003년 5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 지만원이 2002. 8. 16. 동아일보 2면 하단광고, 2002. 8. 20. 문화일보 2면 하단광고에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라고 허위사실 적시,

었다. 2019년 5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병합된 4개²⁾ 형사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대한 민사 발행금지 및 손해배상 대법원 확정판결³⁾의 내용과 현재 지만원이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 4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095호, 2016고단9358호, 2017고단4705호, 2017고단8331호)이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사실관계와 쟁점이 비슷하다. 5·18 당시 현장 사진 속의 광주시민들을 북한 고위층 인물들과 구체적으로 연결하면서 ‘광수’(5·18 광주 북한특수군)라고 지칭하여 대법원에서 2018. 12. 13. 손해배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지난 2. 8. 국회 공청회에서 북한 특수군 개입 허위사실 유포도 동일한 취지이고, 지만원과 뉴스타운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이미 허위로 판단되었고, 전두환회고록 사건에서도 법원에서 이미 허위로 판단되었다.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형사사건으로는 광주지방검찰청이 2018년 5월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기소한 사건이 있다. 5·18당시 계엄군 헬기의 기총소사를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다는 사실에 대해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적어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 전두환의 형사재판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2018고단1685호)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사건으로는 2017년 8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고,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손해배상청구와 출판 및 배포

대법원 2013도6326호, 서울중앙지법 2013노619호,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6321호(대법원 2013년 11월 14일 선고, 2013도6326호 사자명예훼손,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 ‘지만원이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들에 의해 광주시민들이 학살을 당했지요.’ 등 허위사실 적시

2) 지만원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 4건(2016고단2095호, 2016고단9358호, 2017고단4705호, 2017고단8331호)5·18 당시 현장 사진 속의 광주시민들을 북한 고위층 인물들과 구체적으로 연결하면서 ‘광수’(5·18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하여 기소된 사건

3) 지만원 뉴스타운 발행금지청구, 손해배상판결 2018. 12. 13. 대법원 확정(대법원 2018다264932호, 광주고법 2017나13785호, 광주지법 2016가합51950호)

원고 박남선, 심복례, 광희성에게 각 1천만원, 원고 백성남에게 200만원,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 부상자회,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게 각 500만원 발행 및 배포금지가처분결정(광주지법 2015카합636호)

지만원은 뉴스타운에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광주 시민들이 내통하여 야합해 일으킨 여적 폭동이고, 민주화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는 5,700명의 5·18관련자들은 여적죄로 처벌받아야 하며, 5·18단체들을 비롯한 전라도 사람들이 북한특수부대원들과 한편이 되어 북한을 위하여 행동’한다고 허위사실 기재, ‘5·18사태는 고정간첩들과 북한 특수군 600명 등이 연합하여 일으킨 국가전복 목적의 폭동 작전이었다. 광주에 민주화 시위는 없었고, 민주화 시위를 지휘한 광주인은 없다.’고 허위사실 기재, 5·18 당시 현장 사진 속의 광주시민들을 북한 고위층 인물들과 구체적으로 연결하면서 ‘광수’(5·18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 ‘원고 박남선의 사진을 북한특수군으로 침투한 황장엽이라고 허위사실 기재’, ‘원고 심복례의 사진을 북한 특수군 홍일천이라고 허위사실 기재’, ‘원고 광희성의 사진을 북한특수군 권춘학이라고 허위사실 기재’, ‘망 백용수의 사진을 북한특수군 김진범이라고 허위사실 기재’, ‘광주 정평위 신부 5명,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가 북한원전의 15구 시체사진을 담은 사진집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발간하여 대한민국을 모략하였고,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위 사진집을 제작배포하여 여적죄,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허위사실 기재

금지 청구)도 광주지방법원 민사 제14부에서 2018년 9월 인용되었다.

<전두환 회고록>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처음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문제 삼았던 것보다 훨씬 많다. 채권자들과 대리인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리와 판단을 받기 위하여 논란의 여지가 적고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최소한의 필요 범위 안에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했고,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8월 4일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전두환은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된 부분을 검정색으로 가리는 편법으로 최근 전두환 회고록 1권을 다시 출판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전두환이 <전두환 회고록>을 재출판하는 행위가 오히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서 다루이지 못했던 나머지 허위사실들을 추가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바로잡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5·18재단을 비롯한 <전두환회고록>의 민사재판 채권자들은 공적 사안에 대한 개인의 비판을 침묵시켜서 5·18을 성역화하거나 신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가처분신청을 통해 저자인 전두환과 그의 아들이자 출판자인 전재국이 ‘합리적 의사형성 기회를 차단’하는 것과 ‘역사를 왜곡하는 허위사실 기재행위’를 금지하고 싶을 뿐이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법원의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결정과 1심 본안 판단이 선고되었지만 법률적 대응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5·18 역사왜곡행위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도 해결할 숙제가 많기 때문이다. 전두환과 지만원 등을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5·18 역사왜곡행위에 대해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을 통해 끝까지 법률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다. 5·18 당시 북한군개입설이나 헬기사격, 암매장 등 상당한 쟁점에 대하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회의 활동이 개시되기 이전에 다행히 대부분의 쟁점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다. 객관성이 담보된 사법부의 판단이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활동의 긍정적 디딤돌이거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은 전두환의 출판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5·18진상규명의 계기가 되고, 사법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3. 5·18망언에 대한 법적대응

현재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법원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호 판결 등’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 때문에 2012년 대법원은 ‘피고인 지만원의 글이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5·18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2019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국회의원은 극우논객 지만원과 함께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적 망언을 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왜곡과 폄훼는 이제 인터넷 공간을 넘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조차 버젓이 공론화를 시도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유럽연합(EU)은 2007년 회원국들에게 종교·인종적 혐오선동의 처벌을 요구하는 결의와 협약을 채택하였고, 독일, 프랑스,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나치의 홀로코스트나 제노사이드를 부정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을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홀로코스트 가해국인 독일의 형법 제130조는 나치 지배 하에서 행해진 집단학살을 승인, 부인, 고무한 자에 대해 국민선동죄로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도 1990년 제정된 게소법(Gayssot Law)에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역사왜곡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역사적 사실 부인행위를 처벌하는 죄와 관련하여 일제침략행위 부정을 처벌하는 법안, 반인륜범죄와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 5·18역사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는 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역사적 사실 부인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노엄 촘스키(Noam Chomsky)와 같은 학자는 역사부정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역사적 사실의 진위여부는 역사적 평가와 시민사회의 토론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물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나 공적 사안에 대한 평가는 사회구성원들 상호간에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개인의 자율과 자치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의 기본원리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출판(표현)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권의 중핵일 뿐 아니라 민주사회의 초석이 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직접 규정한다. 따라서 왜곡되지 않은 기초적 사실관계를 기본 전제로 해야 하고, 사실(팩트) 자체는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견개진이나 평가와 판단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다양한 의견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의 논의 구조인 것이다.

한편 유럽의 역사부정죄의 제정 배경이 한국의 상황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의 역사부정죄 처벌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 중에서 규제하고 처벌해야 할 역사부정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 부인행위에 대한 처벌은 해당국가 경험한 역사적 사실과 이에 대한 폐해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의 5·18 왜곡은 5·18유공자와 호남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지역차별과 연동되어 있다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역사부정행위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과 배제와 폭력으로 이어지는 폐해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역사부정죄가 문제되었던 맥락과 유사하다고

보인다. 5·18역사왜곡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과 왜곡이어서가 아니라, 호남이나 5·18 유공자로 대표되는 소수자에 대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혐오표현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 중에서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들에는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홀로코스트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북유럽국가나 영국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나 제노사이드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로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18 역사왜곡에 대한 해결책이 오로지 형사처벌에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여러 가지 해결방법 중 하나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자정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형사처벌 또한 보충성과 최후 수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 자정력에 의한 해결만을 기다리기에는 현재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은 임계점을 넘었고, 그냥 방치하기에도 수인한도를 넘었다. 5·18의 왜곡과 폄훼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적인 구제책도 상징적일 뿐이고 실효성이 없다. 현재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 왜곡은 일상화되고 더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대해 형사처벌을 빼고 정치, 사회, 문화적 방안만으로 해결을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나 폄훼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실 부인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지는 논의는 다른 역사적 사안에 비추어 5·18민주화운동만을 더 특별하게 취급해달라는 특혜를 바라는 취지가 아니다. 5·18 역사왜곡의 문제는 망국적인 지역감정(호남비하)와 색깔론이 동시에 작동하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만은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역사부정죄가 정당화될 수 있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의 주장과 같이 정당화 논거는 5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보통 역사적 사안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고, 진실에 반하기 때문에 정당화 논거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진실 논거).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은 단순히 진실에 반하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를 넘어서서,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존엄성 침해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고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인간존엄 논거). 더구나 호남이나 5·18유공자로 대표되는 소수자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초한 혐오표현이고(소수자차별 논거), 생존하는 유족과 관계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리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모독, 왜곡, 폄훼이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피해자 논거+현재성 논거).

따라서 처벌의 공백을 막고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 최소한의 법적 규제방안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만 처벌조항을 마련하더라도, 구성 요건에서 공연성 요건과 권리침해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완충제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조항도 넣어서 부작용과 남용의 폐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왜곡이 일상화되고 더 광범위하게 유포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법적 규제도 하지 말자는 것은 사회적 병리현상과 범죄행위에 대해 법 없이 방임하자는 것이다. 이는 법의 무기력과 게으름을 자초해서 처벌의 공백과 범죄를 방치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의 피해자는 비단 5·18 희생자와 광주시민만이 아니다. 오히려 팩트 체크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서 왜곡된 허위사실을 사실로 잘못 알고 속고 있는 일부 국민들과 청소년들이 진정한 피해자일 수 있다. 5·18 진상규명과 역사왜곡에 대한 대처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를 확인하는 일이다. 괴벨스와 카뮈의 말은 2019년 대한민국 사회가 반면교사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거짓말을 처음 들으면 아니라고 말하고, 다시 들으면 의심을 하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결국 믿게 된다’ - 나치 선동가 괴벨스

‘어제의 죄악을 오늘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관용으로만 건설되지 않는다’ - 알베르 카뮈

■ 토론문

5·18 역사왜곡과 법적대응

김남진(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1. 5·18민주화운동 미완의 과제

5·18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진상규명을 통한 진실을 알 권리, 가해자 처벌을 통한 정의를 실현할 권리, 피해자 명예회복, 손해배상 및 정신계승의 과제를 미완인 채 안고 있다. 1997.4.17.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통해 인정된 사실(신군부세력의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행사에 의한 민주화운동)마저 왜곡·편향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1980년 당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발생한 5·18민주화운동은 권위적 정권이 민주적 정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고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양한 의거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죄지는 자들과 그 계승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벌은 부정에 대한 부정으로 원래의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하고자 함이 목적이라 할 수 있으나, 사면은 회복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면은 법규정이 안고 있는 결함과 잔인함을 완화하기 위해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전제는 범죄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¹⁾ 그런데 1997.12.22. 사면에 의해 전두환·노태우가 석방된 것은 반성 없는 화합의 명분하에 이뤄진 것으로 훗날 계속되는 역사 왜곡의 단초가 되었다. 최근 5·18정신을 편향하고 왜곡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주장은 진실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에 의해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간이 되는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미 검찰의 조사를 거쳐 사법부의 재판이 확정되었지만, 추가적으로 밝히지 못한 진상을 규명하여 국가의 기록으로 남기는 역사적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2018.9.14.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작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특별법에 의해 진상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1) 루이 주아네(Louis Joinet)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은 1996년 “인권 침해자의 불처벌(impunity)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정의에 대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지 않고는 어떠한 정당하고 지속하는 화해도 있을 수 없다. 화해의 요소로서 용서란 피해자가 침해의 가해자가 누구인자 알아야만 하고 가해자가 참회를 보일 때에만 가능하다. 정의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가해행위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기소하여 처벌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킨다. 그리고 국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 및 진실왜곡·조작의혹, 민간인 학살,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 발굴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이행기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촛불혁명이 요구한 민주와 법치에 입각한 실질적인 민주공화국을 만들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다. 과거의 민주·인권·입헌주의에 반하는 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승계하는 세력이 다시는 무력에 의해 정권을 탐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지 못하도록 미완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2. 5·18역사왜곡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이 인터넷과 출판물뿐만 아니라 국회 공청회에서까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 운동을 왜곡·날조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헌법 직접적 제한규범(제21조 제4항 제1문)에 따라 마땅히 규제되어야 한다. 그 규제방법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5·18역사왜곡에 대한 법적대응방안

법적분류	규제방법	규제내용	비고
민사법적 규제	보전처분	가압류 - 채무자 소유 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 등 금지가처분	위반행위시 벌금 부과
	본안소송	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손해액입증
		특별법 제·개정안 ²⁾ - 왜곡·혐오 등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명시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법적 규제	일반 형법	모욕죄(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친고죄
		명예훼손죄(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반의사불벌죄
		사자 명예훼손죄(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친고죄

2)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72호, 2014, 80면.

법적분류	규제방법	규제내용	비고
형사법적 규제	일반 형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① 사람을 <u>비방할</u>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	반의사불벌죄
	특별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사람을 <u>비방할</u>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	반의사불벌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	제20대 국회 6개 법안 계류 중
행정법적 규제 ³⁾	행정처분	시정명령 - 혐오표현의 중지 또는 재발방지	불복시 행정소송
		과태료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형사법적 처벌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5·18왜곡·폄하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개별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박지원, 김동철, 이개호, 박광운, 이석현, 이철희의원의 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5·18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70조의1(벌칙)에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70조의2(위법성조각사유)에 “전조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3)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므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8장 벌칙에 규정을 추가하자는 것이다.⁴⁾ 현재 제20대 국회에서 5·18왜곡행위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 제안된 6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표 2〉 제20대 국회 5·18민주화운동등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제안자	제안 법률안	개정안
박지원 의원등 38인	5·18민주화운동등 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⁶⁾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동철 의원등 17인	5·18민주화운동등 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⁷⁾	제8조(벌칙) 공연히 5·18민주화운동을 부인(否認)·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개호 의원등 41인	5·18민주화운동등 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⁸⁾	제8조(비방·왜곡·날조 및 선동에 대한 금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단체를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5·18민주화운동 또는 관련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단의 죄를 저지르거나 그 죄를 도운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문서, 방송, 각종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2.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그 밖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3.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또는 선전하는 행위

4) 김재윤,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5집 제2호, 225~253면.

5) 제19대 국회에서는 김동철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반인륜범죄및민주화운동을부인하는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었으나, 2016.5.29.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폐기되었다.

6) 의안번호 2000065, 2016.6.1. 제안, 2016.11.8.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중이다.

7) 의안번호 2000208, 2016.6.14. 제안, 2016.11.8.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중이다.

8) 의안번호 2001006, 2016.7.20. 제안, 2016.11.8.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중이다.

제안자	제안 법률안	개정안
박광운 의원등 11인	5·18민주화운동등 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⁹⁾	제8조(5·18민주화운동 비방·왜곡·날조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날조를 하거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거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문서, 도화, 그 밖에 표현물의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
이석현 의원등 24인	5·18민주화운동등 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¹⁰⁾	제8조(선동 및 허위사실 유포의 처벌)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부인·폄하하거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철희 의원등 166인	5·18민주화운동등 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¹¹⁾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u>현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u>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제8조(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u>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u>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u>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u> ② 제1항의 행위가 <u>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u>

이철희의원 대표발의안은 발의자가 166명에 이르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 이른 점, 5·18민주화운동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현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9) 의안번호 2014983, 2018.8.21. 제안, 2018.11.12.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중이다.

10) 의안번호 2018609, 2019.2.13. 제안, 2019.2.14.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된 상태이다.

11) 의안번호 2018768, 2019.2.22. 제안, 2019.2.25.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된 상태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려는 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연히 진행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을 포함하고 있는 점,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그 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할 것이다.

4. 마무리

발제자의 5·18역사왜곡과 법적대응에 관한 발제는 실제 법원에 계류되었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주었다는 측면에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관련된 소송에서 헌신적으로 변론에 참여하신 부분에 대해 감사한 마음입니다. 토론자는 발제자의 발제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묻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9.2.22. 발의된 이철희의원의 개정법률안은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으나,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는 진실한 사실에 한정하고 허위 사실은 배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지만원이 북한군 특수군 개입설은 학술·연구목적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둘째, 모욕죄와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여부를 피해자의 고소권 행사 내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여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형법적 체계정합성의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상 처벌 규정도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 학술교류포럼]

국가폭력의 청산과 정의

5·18과 전지구적 차원의 이행기정의

발표 3

그는 병식(病識)이 없어서

- 왜곡과 망상의 정신분석 : 지만원의 『독섬 무지개』에 대하여 -

사회: 박진우(5·18기념재단 연구실장)

발표: 김형중(조선대학교 교수)

토론: 정명중(전남대학교 교수)

그는 병식(病識)이 없어서

- 왜곡과 망상의 정신분석 : 지만원의 『독섬 무지개』에 대하여 -

김형중(조선대학교 교수)

증상으로서의 ‘다큐 소설’

지만원의 『독섬 무지개』¹⁾는 장르가 모호한 텍스트다. 스스로는 ‘다큐 소설’이라 칭했고, 읽히기에는 자서전으로 읽힌다. 그러나 다큐멘터리라고 하기엔 다루고 있는 사건들과 화자 간의 거리가 전혀 없고, 소설이라 하기엔 화자의 실제 삶이 아무런 플롯이나 문학적 장치 없이 연대기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게다가 자서전이라고 하기엔 ‘내면’이 없다.

자서전은 고백의 양식, 곧 고백해야 할 내면을 가진 근대적 주체의 양식이다. 글쓰는 이가 스스로를 성찰과 반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때라야, 자서전은 쓰일 수 있다. 가령 역사상 자서전 문학의 백미라 일컬어지는 루소의 고백록은 이렇게 시작한다.

내면을 속속들이(Intus et in cute)

나는 전에도 결코 예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 성취를 모방할 사람이 전혀 없을 기획을 구상하고 있다. 나와 같은 인간들에게 한 인간을 완전히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인간은 바로 내가 될 것이다. 오직 나뿐이다. 나는 내 마음을 느끼고 인간들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보아온 어느 누구와도 같게 생기지 않았다. 현존하는 어느 누구와도 같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감히 생각한다. 내가 더 낫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다르다.……

나는 1712년 제네바에서 시민 이자크 루소와 시민 쉬잔 베르나르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²⁾

루소가 독자에게 보여주고자 의도한 것은 바로 자신, 지상의 그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은 자기 자신이다. 이때의 ‘자신’이 이른바 ‘이상적 자아’(상상적 동일시에 의해 ‘~처럼 되고 싶은 자아’)나 ‘자아 이상’(상징적 동일시에 의해 ‘~ 하게 보여지고 싶은 자아’)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는데, 이어지는 루소의 고백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나 추행까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스스로 그런 행위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성찰적 내면이 그의 『고백록』을 걸작이게 한다. 말하자면 자서전은 ‘대자적’ 장르이다. 스스로를 성찰하는 글쓰기, 다시 말해 ‘의심’과 ‘회의’를 확실성의 준거로 삼는 데카르트적 주체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자서전의 주인이 될 자격을 얻는다.

1) 지만원, 『독섬 무지개』, 시스템, 2018. 이하 본문에 쪽수만 표기.

2) 장 자크 루소, 『고백록 1』, 이용철 옮김, 나남, 2012, p.11.

정확히 『독점 무지개』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결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의심과 회의’, 곧 성찰하는 내면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 책은 ‘얼마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는 실제 지만원(그런 게 있다면)이라기보다는, 그의 이상적 자아 혹은 자아 이상에 의해 상상되고 상징화된 ‘화자 지만원’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의 ‘화자’는 이른바 서사 이론에서 말하는 ‘믿을 수 없는 화자’에 속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부터 이 책을 문학 비평가의 명함을 걸고 ‘문학적으로’ 읽어 줄 용의가 있다는 말은 전혀 아니다. 내가 아는 ‘문학’에 대한 정의들 중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바로 ‘진부한 언어와의 결별’인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문학적이라 부를 수는 없을 듯하기 때문이다.

.....나는 책 속에서 내가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인간상을 찾아냈다. 출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다.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내가 말하는 자유인이란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기 신념과 소신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한다. 20대에 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³⁾가 주연하는 황야의 무법자를 보았다. 인습과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스스로 정한 자기 규율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부러웠다. 그 후 영화 속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내 인생의 우상(idol)³⁾이 되었다.(프롤로그)

일생을 통해 가장 잔잔한 평화를 누렸던 이 시절, 가을 나비의 지친 몸짓에서도 인생이 보였고, 스치는 바람결에서도 인생을 읽는 듯 했다.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모두에 의미가 있었다. 때로는 섬세해지고, 때로는 걱정적이고, 때로는 센티해지기도 했다.(p.64)

가을이 되면 찾아드는 낭만의 병, 우수(melancholy)⁴⁾! 열아홉, 스무살 때에는 스치는 바람결과 흔들리는 풀잎에서 우수를 느꼈다. 그리고 그 우수는 마흔 두 번째 가을에 한 번 더 찾아왔다.(p.336)

너무도 진부해서 문학적으로는 읽을 수 없다면 (그 수많은 문헌들의 인용 출처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이 텍스트를 사료나 다큐로 읽을 수도 없으니) 어떻게 읽어야 할까? 첫 번째 인용문이 아마도 그 실마리가 될 법하다. 이 텍스트는 프로이트가 말한 일종의 ‘타협형성물’이다. 스크린에 비친 이미지로서의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그 이미지에 매혹된 실제의 주체(주체 이전의 전주체)⁵⁾, 이상적 자아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욕망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이상적 자아란 실은 기의 없는 기표이기 때문이다)과 그것을 가로막는 현실(현실 속의 자아는 항상 이상적 자아에 미치지 못한다), 그 사이에서 타협이 이루어진다. 다큐와 소설의 같듯이 ‘다큐 소설’이라는 기이한 합성 명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리고 알다시피 프로이트는 그런 ‘타협 형성물’을 ‘증상’이라고 불렀다.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신경증적(혹은 정신증적) 주체는 증상으로 도피한다.

3) 이 영어 병기는 도대체 뭘까?

4) 이 영어 병기는 또 뭘까?

5) 정신분석학적인 견지에서 ‘주체’란 말은 함부로 쓸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주체’는 타자의 욕망과의 환상적 관계를 횡단하는 한에서만 주체다.

전장의 영웅들

증상은 해석되어야 하는바, 텍스트 초입 학창 시절의 에피소드⁶⁾에서 드러나는 외모 콤플렉스(자타공인 잘생긴 얼굴과 천재성, 그러나 작은 키와 체중)가 눈에 띄지만, 인신공격은 피해야 할 터이니 이에 대해서는 길게 거론하지 않을 생각이다. 대신 ‘상상적 동일시’(이상적 자아)와 ‘상징적 동일시’(자아 이상)에 관한 지젝의 언급을 분석의 실마리로 삼아 보자.

상상적 동일시와 상징적 동일시 간의 관계(이상적 자아Idealich와 자아 이상Ich-Ideal)는 (미출간 강의에서의) 밀레의 구분을 빌리자면 ‘구성된’ 동일시와 ‘구성하는’ 동일시 간의 관계와 같다. 간단히 풀이하자면 상상적 동일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좋아할 만하게 보이거나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이미지와 동일시하는 것이고, 상징적 동일시는 우리가 관찰당하는 위치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위치와의 동일시이다.⁷⁾

‘이미지’와의 동일시와 ‘위치’와의 동일시, 라캉의 ‘시각’과 ‘응시’에 대응하는⁸⁾ 이 두 종류의 동일시(실은 후자가 전자를 지배한다)가 바로 알튀세르가 말하는 ‘호명 테제’의 진의일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개인이 세계와 맺게 되는 상상적 관계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두 종류의 동일시를 통해 세계를 이데올로기적인 환상 속에서 마치 자명한 것인 양 구조화한다. 우리는 이상적 자아를 통해 ‘상상적으로’ 자아를 형성하고, 자아 이상을 통해 ‘상징계’ 속의 어떤 위치에 이데올로기적 주체로서 자리 잡는다.

『뚝섬 무지개』 거의 대부분이 상상적 동일시와 상징적 동일시의 산물이므로 저자의 이상적 자아와 자아 이상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만한 사례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그 중 인상적인 장면만 옮겨 본다.

별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 계급 자랑, 성질 자랑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만은 무엇인가 달라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나폴레옹과 한니발을 생각했다. 만일 그들이 내 입장에 서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예수를 생각했다. ‘그분처럼 훌륭한 위인도 아무런 잘못 없이 온갖 수모를 당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잘났다고 이만한 수모에 자존심을 상해야 하나.(p.214)

이명박 퇴진 집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연말은 기부 계절이다. 빨갱이들은 연말 대목을 보기 위해 문근영을 이용한 것이다. 기부금 잘 내는 배우 등 돈 있는 사람들의 경쟁심을 유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모금을 대대적으로 유치하고, 문근영에게 광고 모델료가 쇄도하게 해서 많은 자금을 유치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양에

6) 이 에피소드에서 그는 자신이 불법으로 중학교 졸업장을 받았고, 키와 체중을 속여 육사에 입학했던 사실을 ‘남만과 ‘목가’의 시절에나 가능했던 미담처럼 이야기한다. pp.22~34. 참조.

7)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이수련 옮김, 새물결, 2013, p.176.

8) 자크 라캉, 『세미나 11』, 맹정현·이수련 옮김, 새물결, 2008, 2장 참조.

대한 사회적 입지가 굳어지면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바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수많은 언론들로부터 공격받을 것을 각오하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 기부금의 계절인 연말특수 계획이 탄로 났다고 생각해서인지 좌익들이 뽕비 떼처럼 일어난 것이다. 언론이 소리를 키울수록 국민들이 깨어났다. 그래서 저들의 연말대목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것이 내가 공격받은 데 대한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p.463)

첫번째 인용문은 저자가 어떤 ‘이미지’들과 자신을 ‘상상적으로’ 동일시하는지를 보여준다. 나폴레옹과 한니발, 그리고 심지어 예수! 앞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거론한 바 있지만, 다른 지면에서는 이사도라 던킨(무용가), 잭 도슨(타이타닉의 남주인공 디카프리오), 헤스터 프린(『주홍글씨』의 여주인공), 그리고 맥아더를 포함한 몇몇 미군 장군들(한국 장군으로는 유일하게 채명신)도 거론된다. 책을 통해(돈키호테나 보바리 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배웠다고 자주 말하는 그의 독서편력이 대체로 짐작이 되는데(그는 많은 책들을 읽고 감명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책의 제목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아마도 영웅전과 위인전들이 주였을 듯싶다. 영웅, 장군, 건넌, 영화주인공들이 그의 이상적 자아였던 셈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저자가 어떤 ‘위치’와 자신을 ‘상징적으로’ 동일시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수많은 언론들로부터 공격받을 것을 각오하고” 문근영을 이용한 “빨갱이들의 연말 특수 계획”을 문제삼은, 그래서 그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국가 수호의 영웅이다. 그에게 세계는 여전히 빨갱이들과 전쟁 중이고 자신의 위치는 여전히 전장에 있다. “항재전장!”(p.162) 그에 따르면 이 말은 “옛날 1960년대에 군에 유행되던 말이었다. 항상 전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뜻이었다.”(p.162) 상징적 동일시는 (타자의)응시의 산물이라고 했다. 내가 보여지는 입장(응시의 자리)에서 만족할 만한 나의 위치 찾기가 자아 이상이 하는 역할이다. 그는 그 위치를 찾았고 아주 오랫동안 바꾸지 않았다. 그 위치는 전쟁 중인 국가, 그러나 아주 오래된 국가(주의)의 최전방 어디쯤이다.

전쟁 중인 국가의 최전방 논객(상징적 동일시)의 위치에서 영웅의 품모로(상상적 동일시) 싸우는 자……. 그런데 이상적 자아가 위대할수록(가령 예수!), (전)주체는 망상과 편집증에 쉽게 노출된다. 현실과 이상과의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과도한 정신승리법과 (현실적부심을 통과하지 못한) 망상들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박해 편집증과 구세주 망상은 그런 거대한 정신 승리법의 한 종류다. ‘문근영이 기부를 많이 했다 → 그런데 그의 외조부가 비전향장기수였다 → 따라서 이명박 퇴진운동에 자금이 필요한 빨갱이들이 문근영을 연말특수 계획으로 이용하려 한 것이다 → 그러나 탄압을 무릅쓰고 내가 그 계획을 막았다 → 그래서 탄압 받았지만 그것은 절대자가 내게 준 운명!이므로 나는 위안을 얻는다’. 이런 식의 기이하다 못해 기괴한 논리의 곡예(편집증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를 나는 그 유명한 ‘슈레버 판사’(하나님의 빛을 향문으로 받아 구세주를 잉태하리라)의 사례 외에 들어본 적이 없다.

지만원을 두고 (정신분석학적 견지에서) ‘주체’라 부르기 꺼려지는 이유, 그리고 ‘내면’이 없다고 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젝은 말한다.

상징적 동일시의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상상적 동일시와 상징적 동일시 사이의 이런 상호 작용은 주체를 소위 일정한 사회적·상징적 영역 속에 통합시키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라캉 자신이 분명히 지적했듯이 그 메커니즘은 바로 주체가 자신에게 ‘위임된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하지만 유일한 문제는 호명의 ‘원의 사각’은, 즉 상징적 동일시와 상상적 동일시의 순환운동은 반드시 일정한 잔여물을 남긴다는 점이다. 소급적으로 의미를 고정시키는 기표 연쇄의 ‘누빔’이 모두 일어난 후에 세 번째 그래프에서 그 유명한 ‘케 보이?’로 표기될 수 있는 어떤 간극이, 구멍이 항상 남겨진다. 즉 ‘너는 나에게 그것을 말하지만 그것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겨냥하는 것인가?’⁹⁾

상상적 동일시와 상징적 동일시를 통해 주체는 일정한 사회적·상징적 영역 속에 통합된다. 말하자면 전장의 논객 같은 위치 속에 말이다. 그러나 지적에 따르면 그런 통합은 대체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잔여, 구멍 같은 것을 남긴다. 그 잔여가 주체로 하여금 자신을 응시하는 대타자를 의심하게 하고 질문하게 한다. ‘나를 응시함으로써 나를 어떤 위치에 붙박아두는 너의 욕망은 도대체 무엇이나?’(케 보이?).

라캉은 이를 두고 ‘히스테리적 담화’라고 부른다. 그리고 또한 주체의 확실성은 항상 의심에 의해 구성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만원은 대타자로서의 (오래 전부터 항상 전쟁중인) 국가를 의심하지 않는다. 성찰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가 대타자의 응시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는지 회의하지도 않는다. 주체란 데카르트와 함께 탄생했다고들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지만원은 아마도 주체가 아닐 것이다.

고정지시자 ‘빨갱이’

지만원이 회의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말이 그의 발화들이 국가라는 대타자의 응시 속에서 ‘일관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물론 이데올로기는 과학과 달리(엄밀하게는 과학도) 모순을 ‘모른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이데올로기적 담화들에는 모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모순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을 봉합하고 일관되게 통일시키는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고정 지시자’(고정 간첩이 아니라) 혹은 ‘누빔점’이 그것이다. 아래 인용문들은 『뚝섬 무지개』 여기저기서 발췌한 것들이다.

마치 군인의 전부인 것처럼 신봉해 왔던 체력단련은 몇몇 생도들의 목숨을 앗아갔을 만큼 고문과 중노동에 해당했던 반면, 그것이 훗날 장교로서의 프라이드나 리더십을 키우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가장 많은 기합을 받고 자란 생도, 가장 단련된 체력을 쌓았다는 생도가 훗날 훌륭한 장교로 성장했다는 증거도 없다.(p.53)

최소한 이 문장들을 쓸 때, 지만원은 오래된 군대의 얼차려 문화를 비판하는 합리주의자다.

9)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pp.184~185.

연대에서 헬리콥터가 날아와 그 뱀을 가져갔다. 어린 마음에 모두는 그 뱀이 창경원에 갈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나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부연대장님 등 어른들이 보신용으로 삼아 드셨다고 했다. 이빨이 없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몇 년이 지난 후 나는 그때를 회상하며 후회를 했다.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하나의 생명을 절단 냈기 때문이다.(p.145)

이 문장들을 쓸 때, 지만원은 뱀 한 마리의 죽음에도 죄의식을 느끼는 (의사)생태주의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문장들 직후 두 페이지만 넘기면 이런 문장들도 눈에 띈다.

네 대의 미군 전투기가 마치 독수리처럼 수직선으로 내려 꽂혔다. 야자수 높이에서 다시 날아오르면서 사정없이 폭격을 가하고 있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나뭇조각이 야자수 숲 위로 날아오르고, 연기가 온 마을을 자욱하게 덮었다.

“따다다다다... 쿵...” 한 마디로 장관이었다. 이런 것을 보고 전쟁을 예술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싶었다.(pp.147~148)

이 문장들을 쓸 때, 뱀 한 마리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던 그는 돌연 전쟁광처럼 보인다. 한 마을이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 그는 그 마을 안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는다. 포연의 장엄함이 그에게는 예술처럼 보일 뿐이다.

문제의 근원은 군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장교들의 발상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기업들이 장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사업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며, 적지 않은 도장 값으로 매수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경유착은 절대로 근절되지 않는다.(p.477)

1997년 『말』지(지만원은 김대중의 적화작전이 실행되기 전까지 이 잡지가 빨갱이 매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다. 이 말은 이중으로 부정확하다. 왜냐하면 이 잡지가 빨갱이 매체가 아니고 그가 이 잡지의 성격을 몰랐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에 기고한 글의 일부인 이 문장들을 쓸 때, 그는 정경유착에 반대하고 군 예산 집행 ‘시스템’¹⁰⁾의 효율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로 보인다.

합리주의자이면서 생태주의자이면서 전쟁광이면서 신자유주의자이면서 시스템 신봉자인 국가주의자..... 인용하지 않았지만 어떤 구절들에서 그는 친미주의자이고, 다른 구절에서는 유교적 가치의 신봉자이다. 또다른 구절에서는 ‘광주에는 여성에도 아름다움이 없었다’고 말하는 여성혐오자이자 아태재단에서는 ‘영구분단이 통일의 지름길’이란 말로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던 자칭 일급 강사다. 그러나 지만원은 이런 모순을 ‘모른다’. 이데올로기는 항상 오류와 모순을 ‘모르는’ 법

10) 그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많이 거의 강박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 중 하나가 바로 ‘시스템’이다. 이 책을 낸 자신의 출판사 이름이 ‘시스템’이고, 그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시스템클럽’이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는 시스템공학 박사로서 그와 관련된 책을 내기도 했다. 나로서는 시스템 강박적인 사고와 편집증적 사고의 유사성에 관심이 많다.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 많은 기표들의 모순을 통합하면서 일관된 하나의 체계로 누벼주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지젝은 이렇게 답한다.

하나의 이데올로기장에서 실정적 내용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러한 장을 동일한 것으로 창조하고 유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원-이데올로기의 요소들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떠도는 기표들’이 어떤 ‘매듭’(라캉이 말하는 누빔점)의 개입에 의해 통일된 장으로 구축된다는 것이다. 즉 매듭에 의해 그 기표들이 누벼지면서 미끄러짐을 멈추고 의미가 고정된다는 것이다.¹¹⁾

합리주의, 생태주의, 신자유주의, 친미주의 같은 원-이데올로기소들은 부유하는 기표들이다. 애초에 이 이데올로기소들에 일관성이나 통일성이란 없다. 그러나 어떤 누빔점, 곧 고정지시자가 등장해 그 기표들을 하나의 일관된 매듭으로 묶는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지만원의 경우 그 고정지시자는 ‘빨갱이’다. 그가 5·18 당시 광주에서 암약했다고 주장하는 1,200명의 ‘광수들’ 사례는 식상해서라도(실은 어이없어서) 체쳐두더라도(그의 편집증적 망상의 절정이지만), 그가 빨갱이란 말의 범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다음의 인용문이 잘 보여준다.

최홍재 흥진표 하태경 등 대표적 얼굴마담들이 “이제부터는 애국자가 되겠다”며 전향을 공표했다. 전향 발표와 함께 이들은 ‘뉴-라이트’라는 조직을 만들어 지지층을 확대했다. 모든 언론들이 이들을 프리마돈나로 떠들었다. 모든 우익들이 탕아가 돌아왔다고 환호했다. 12명이 국회의원이 되었고, 150여명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가 국회를 사실상 장악했다. 지금도 여야 없이 보좌진 세계는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사파들의 전향은 힘을 쟁취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을 뿐이다. ‘한번 걸레는 영원한 걸레다’(p.453)

만약 뉴라이트마저 좌파이고, 국회의원 보좌관 150여 명이 주사파라면(그는 또한 자신을 재판한 판사들의 대부분이 빨갱이거나 빨갱이들의 관리 대상이고, 한국 언론의 대부분이 빨갱이 언론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조선일보도 포함된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마저 한국의 적화 경향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도대체 빨갱이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는 헤아리기 힘들다. 그 빨갱이들과 싸우기 위해, 군대의 시스템은 합리적으로 개혁되어야 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는 끊어야 하고, 미군의 시스템을 본받아야 하고, 전쟁은 예술이 되어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빨갱이’는 떠도는 기표들의 매듭, 곧 고정지시자가 된다.

그러나 만약 어떤 기표가 무수한 기의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표에 실정적 내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빨갱이란 말이 조선일보와 뉴라이트와 세월호와 위안부 피해자와 5·18과 천안함과 4·3항쟁을 모두 의미할 수 있다면 도대체 빨갱이라는 말에 어떤 내포가 있을까? 지젝이 들고 있는 재미있는 예에서처럼 ‘스카페이스’는 그가 설사 얼굴의 흉터를 지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스카페이스’로 남는다. 그리고 그 기의 없는 기표가 그를 ‘스카페이스’란 은유에 달라붙을 수 있는 모든 기표들을 누비고 고정시킨다. 가령, 잔혹함. 음모, 어둠, 폭력, 마약, 테러 등등. 고정지시자는

11)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p.149.

말하자면 기의 없는 순수 기표로서 다른 기표들에게 매듭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지만원에게는 ‘빨갱이’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모순적인 이데올로기소들의 매듭을 제공한다.

애타게 빨갱이를 찾아서

그렇다면 라캉의 어법을 빌려 표현할 때 지만원에게 빨갱이란 말은 빨갱이 (그는 현대 좌파들의 조류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전혀 모른다. 실은 제대로 된 지식인들이라면 죄다 좌파라는 사실도)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빨갱이보다 더 빨갱이 같은 무엇’(대상 a)을 지시한다고 말해도 좋겠다. 이 기표 주위로, 5·18, 4·16, 4·3, 천안함, 촛불시위 같은 기표들이 매듭을 만든다. 지만원의 눈에는 보이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 역으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지만원의 눈에‘만’ 보이는 이유도 거기 있을 것이다.

이 9개 줄을 놓고 군과 안기부와 검찰 및 법관들은 걸만 읽었고, 나는 속을 읽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특수군을 보지 못했고, 나만 보게 된 것이다.(p.414)

검찰자료와 안기부는 수십 개 페이지에 걸쳐 날개 항목들만 나열해 놓았을 뿐,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의미 있는 정보를 가공해 내지 못했다. 통계학에 훈련된 분석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공해 낸 위 정보가 있으면 북한군이 보이는 것이고, 검찰이나 안기부처럼 항목들만 나열해놓고 있으면 북한군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pp.414~415)

대체로 보통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눈에만 보일 때 자신의 시각이나 의식 상태를 의심한다. 그러나 ‘케 보이’가 부재하는 정신의 소유자에게는 의심이 없다. 그리고는 확신 속에서 기꺼이 박해받는 예언자가 되고 타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

그런데 빨갱이라는 고정지시자가 사라지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가령 한국이 북한 주적론을 포기하거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거나, 5·18이 국가 폭력이었음이 명백히 입증되거나 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빨갱이라는 고정지시자로 자신의 상징체계를 구축해 온 (전)주체는 어떻게 될까? 이른바 ‘투케’를 경험하게 된 주체는 ‘실재와의 어긋남 만남’을 통해 엄밀한 의미에서의 ‘주체’가 될 수도(맥동적으로나마) 있으리라. 그리고는 ‘민주주의’나 ‘진보’ 같은 다른 고정지시자를 통해 새로운 상징체계를 구조화하게 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실재와의 만남을 증상으로의 도피를 통해 기피한 주체는 이미 명백해진 사실 앞에서도 자신의 고정지시자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 의미에서 ‘빨갱이’는 적화되어 가는 사회가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주체가 욕망하는 것이다. 빨갱이는 지만원의 ‘대상 a’다. 빨갱이가 ‘항상’ 있어야만 그는 ‘항재 전장’의 이데올로기라는 상징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빨갱이는 실정적 내포를 지닌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항상 존재하려면 실체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고정지시자로서의 기의 없는 기표이다. 그럴 때 환상과 이데올로기는 편집증적인 수준에 이르고 정신은 파산한다. 그리고 여기 한 파산한 정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문장들이 있다.

꽃밭을 만들고 정원을 가꾸어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이 땅에 보기 흉한 소녀상을 전봇대처럼 많이 세우는 것은 위안부의 권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위안부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위안부를 정치적 앵벌이로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위안부의 나라로 인식되게 하는 해국행위를 뿐이다. 겨울이면 이 위안부 소녀들은 목도리와 스카프와 고급 담요로 치장된다. 이를 바라보는 여식 아이들은 “엄마, 나도 위안부 될래” “엄마 우리 할머니도 훌륭한 위안부였지?” 참으로 기막힌 정서가 자라난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외국인들은 웬 한국에 위안부가 천지로 깔렸느냐며, 나이든 한국의 할머니들을 일본군 위안부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p.509)

이것은 명백한 광기다.

보유 : 그는 병식이 없어서

푸코도 아감벤도 공히 지적하는 것이 생명정치의 확산에 따른 ‘의학의 권력화’ 현상이다. 실제로 우리는 권력과 의학이 착종되는 여러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다. 안전 메커니즘의 등장과 함께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악이자 위법이 되는 시대다. 정신의학의 경우도 사정은 유사해서 범죄자의 정신 감정이라는 형식으로 사법 권력에 개입해 일종의 면책 특권을 행사하거나 처벌 가능성을 판정하곤 한다.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 여부의 판정은 그 좋은 예다.

그러나 정신분석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다소간 정신증적이거나 신경증적이다. 이 말은 전두환이나 지만원 같은 이들과 우리가 실제에 있어서는 증상의 경중 외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지만원은 편집증적이다. 그러나 우리들도 모두 얼마간은 편집증적이다. 이런 식의 결론은 우리 또한 광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경계의 말이 될 수도 있다.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악을 ‘진부함’이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말이다. 사유 없이 진부한 우리 모두가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문명 전체에 대한 경고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일반화는 아이히만이라는 악인이 범한 죄의 크기와 특수성을 지워버릴 위험을 수반한다. 누구나 아이히만이라면 그를 처벌할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정신분석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얼마간 편집증적이라면 편집증 속에서 발화한 저 독하고 잔인한 말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지만원의 텍스트를 ‘정신분석’의 이름으로 살펴보면 내내 들었던 의문이 이것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소한 지금까지 그에게는 병식이 없어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런 발언들을 하고 다녔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그의 눈에는 도처에 빨갱이들이 즐비해서 아마도 그리 오래 남지 않은 여생도 병식 없는 채로, 끝내 국가주의라는 대타자의 응시 속에서 ‘항재전장’의 주체 위치를 고수하다 삶을 마감할 듯하다. 정신분석이 그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저주가 고작 이것이다.

■ 토론문

그는 병식(病識)이 없어서

- 왜곡과 망상의 정신분석 : 지만원의 『독섬 무지개』에 대하여 -

정명중(전남대학교 교수)

김형중 선생(이하 ‘필자’)의 글은 지만원의 ‘다큐소설’이라는 모호한 텍스트 『독섬 무지개』를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논의한 것입니다. 필자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우선 “전쟁 중인 국가의 최전방 논객(상징적 동일시)의 위치에서 영웅의 품모로(상상적 동일시) 싸우는” 편집증적이고 망상적인 자아(‘주체’가 아닌)를 발견합니다. 이어 지만원식의 기괴한 논리의 곡예와 온갖 이데올로기들의 험잡물을 지탱해주는 누빔점으로서 ‘빨갱이’라는 텅 빈 기표에 주목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이를테면 인지부조화나 확증편향과 버무러지면서 ‘광기’의 텍스트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단언하건대, 이 글이 입증하고 있는 지만원이라는 한 인물의 정신적 파산의 면모에, 그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풍경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딱히 유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너무도 명확하고 게다가 명쾌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글의 말미에서 “그의 눈에는 도처에 빨갱이들이 즐비해서 아마도 그리 오래 남지 않은 여생도 병식 없는 채로, 끝내 국가주의라는 대타자의 응시 속에서 ‘항재전장’의 주체 위치를 고수하다 삶을 마감할 듯하다.”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어떤 가학적 희열조차 느껴집니다. “당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물론 이 역시도 정제된 표현입니다만)

‘작가(?)’ 지만원의 열토당토않은 온갖 언행과 악명에 대해 이 자리에서까지 굳이 장황설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건전한 상식의 소유자라면 웬만해서는 거들떠보지 않았을 이 ‘정신나간’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필자는 지적 노동의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적잖이 곤혹스러웠을 필자의 마음과 그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만원 당사자의 입장에서라면 이는 매우 과분한 대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 아쉬움은 필자가 애초에 설정한 논의 범위(지만원의 『독섬 무지개』 분석)를 벗어난 지점에서 촉발된 것이기에 딱히 필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주위에 시쳇말로 ‘포라이’들이 참 많기도 많습니다. 이 포라이들의 언행을 일일이 문제 삼고 대응해봐야 그런 우리가 오히려 포라이가 될 난처한 지경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포라이들을 처리하는 방식은 무관심이 최고입니다. 한데 문제는 이 포라이들이 특정한 계기로 세력화되거나 집단화되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의 층위와 차원 자체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만원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상식의 수준에서만 봐도 지만원은 그냥 포라이입니다. 그의 정신적 파산과 망상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 파산자를 추앙하고 혹은

독려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세력들의 면면을 일일이 주워섬기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연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만원의 정신적 파산을 입증하는 것과 지만원을 추종하고 독려하는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고 실제 행동으로 나서는 양상과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처럼 보입니다. 그 세력들조차 정신과산자의 무리로 치환하고 이어 인식의 지평에서 팔호처리 해버린다고 해서 결코 사태가 수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치가 결과적으로 동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세력들의 뻘뻘함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특히 맹신자 그룹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은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곧 미미한 개인들이 집단에 삼투함으로써 자신들의 하찮음을 혹은 취약한 자존감을 일거에 상쇄해보겠다는 식의 초조함이 갖은 폭력의 형태로 사방에서 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앞에 두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왜곡의 불합리함을 나무라 봐야 쇠귀에 경 읽는 꼴이 될 것입니다. 실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팩트’라고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헛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팩트 그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리인지도 모릅니다. 애석하지만 인지부조화(정신승리)나 확증편향(보고 싶은 것만 보는) 같은 개념으로 그들을 온전히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사태를 설명하는 것과 그 사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늘 초조한 자들, 불안한 자들,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입니다. 굳이 스피노자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자신들의 예속을 위해 싸우는 노예들입니다.

이들테면 모든 ‘영향관계’란 영향을 주는 자의 일방향적인 권력이나 수사(rhetoric)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영향 받는 자의 원초적인 의지와 욕구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영향관계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만원과 그를 추종하는 ‘정신 나간’ 세력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필자의 표현대로 “박해받는 예언자”)를 기꺼이 추종하려는 자들의 집단적 의지와 욕구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분석하고 해명하는 일은 한 일탈적인 개인의 정신을 분석하는 것과는 그 결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좀 더 정교한 논의가 뒷받침 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저는 이 일이 87년 이후 한국 사회 민주화의 장정 전모를 살살이 훑아보는 일, 게다가 그 저류와 표면을 흐르고 있을 특정한 집단적 감성과 망탈리테의 동역학 그 전체를 묘사하고 분석하는 일과 맞먹는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날 극도로, 게다가 병리적으로 세분화된 ‘사회적 혐오’의 스펙트럼들(지역혐오, 젠더혐오, 인종혐오, 계급혐오, 세대혐오, 소수자혐오)이 외재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어 유통되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지만원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또한 ‘혐오’의 감정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의 큰제목에 포함된 “전지구적 차원의 이행기 정의”를 운위하기 위해서라도 기필코 이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이트슨의 언급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대목을 옮기는 것으로 이 중언부언의 토론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영국의 공립학교 교육이 떠맡지 못하는 소년은, 비록 소년의 비정상이 본래 ‘뜻밖’의 외상적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라 해도, 공립학교 체계에 반응하고 있다. 소년이 익힌 행동 습관은 학교가 주입시키는 규범을 따르지 않겠지만, 그 행동 습관은 바로 규범에 대한 반응에서

얻어진 것이다. 소년은 정상적인 것과 정반대되는 패턴들을 익힐 수도 있지만(종종 그렇게 된다), 결코 무관한 패턴들을 익힐 수는 없다. 그는 ‘불량한’ 영국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의 비정상적인 성격들은 여전히 그가 저항하는 규범들과 체계적으로 관계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소년이 전형적인 공립학교의 특성과 체계적으로 관계되어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성격을 묘사할 수도 있다. 그의 특성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관계의 모티브와 패턴에 적용된 것이다.(강조: 인용자)¹⁾

1) G. 베이트슨, 박대식 옮김, 『마음의 생태학』, 책세상, 2006, 189쪽.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 학술교류포럼]



국가폭력의 청산과 정의

5·18과 전지구적 차원의 이행기정의

3세션 | 국제적 차원의 이행기정의와 5·18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THE MAY 18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4세션 | 전지구적 기억공간에서 5·18

 CCSI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국제적 차원의 이행기정의와 5·18

사회 임지현(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소장)

■ 발표 1

불처벌을 넘어서: 칠레의 과거사 청산과 교훈

최용주(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위원) ————— 79

토론: 김정한(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 99

■ 발표 2

주술적 홀림과 망령들의 재현: 5·18항쟁 과거청산에 관한 연구노트

김형주(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 101

토론: 김주희(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 117

■ 발표 3

몽골에서의 정치적 숙청과 정의 회복 과정 (1921년~2019년)

할타린 멩흐바야르(몽골국립대학교 역사학과) ————— 119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БА ШУДАРГА ЁСЫГ СЭРГЭЭН ТОГТООХ ҮЙЛ ЯВЦ (1921-2019 он)

_Халгарын Мөнхбаяр(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Сургууль) ————— 157

Political repression and reconstruction process of justice in Mongolia (1921–2019)

Kh.Munkhbayar(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 187

토론: 이현미(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 215

전지구적 기억공간에서 5·18

사회

최정기(전남대 5·18연구소 소장)

■ 발표 1

포스트메모리와 5·18 -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을 중심으로

배주연(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 HK연구교수) ————— 221

토론: 강소희(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 231

■ 발표 2

1988년 “버마” - 광주의 연상작용 - 신문지면을 중심으로

정일영(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 HK연구교수) ————— 233

토론: 심주형(인천대 중국학술원 HK연구교수) ————— 247

■ 발표 3

**글로벌 60년대와 68운동: 얽혀 있는 역사의 기억화(memorialisation)와
역사화(historicization)**

강정석(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 HK연구교수) ————— 251

토론: 박경섭(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 259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 학술교류포럼]

국가폭력의 청산과 정의 5·18과 전지구적 차원의 이행기정의

국제적 차원의 이행기정의와 5·18

사회: 임지현(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소장)

- 발표 1: 불처벌을 넘어서: 칠레의 과거사 청산과 교훈
_최용주(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위원)
토론: 김정한(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 발표 2: 주술적 홀림과 망령들의 재현: 5·18항쟁
과거청산에 관한 연구노트
_김형주(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토론: 김주희(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 발표 3: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БА
ШУДАРГА ЁСЫГ СЭРГЭЭН ТОГТООХ ҮЙЛ ЯВЦ
(1921-2019 он)
_Халтарын Мөнхбаяр(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Сургууль)
토론: 몽골에서의 정치적 숙청과 정의 회복 과정(1921년~2019년)
_이헌미(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불처벌을 넘어서: 칠레의 과거사 청산과 교훈

최용주(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위원)

“어제 없이 내일 없다.”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 2000-2006)

1. 머리말

우리는 대체로 9월 11일을 이슬람 과격단체의 테러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날로 기억하고 있으나, 칠레 국민들은 자국의 민주주의가 군부세력의 쿠데타로 무너지고 수많은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되기 시작했던, 칠레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로 기억하고 있다. 1973년 9월 11일 아구스토 피노체트를 수장으로 하는 군부집단은 쿠데타를 일으켜 살바도레 아옌데 정권을 축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권력을 장악하였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는 다르게 40년 이상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었던 칠레는 이후 1990년까지 군부의 철권통치를 겪게 되고, 수많은 국민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되고 해외로 추방되었다. 칠레의 진실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인권탄압이 가장 심했던 쿠데타 직후에서 1973년 말까지 최소 1,800 명의 국민들이 살해되거나 실종되었으며, 피노체트가 정권에서 물러난 1990년 말까지 2,095 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살해되고, 1,102 명이 실종되었으며, 38,000 명 이상이 고문을 당하였고, 200,000 명 이상이 해외로 추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Hayner 2011). 피노체트 군부독재 기간 중 자행된 인권탄압은 이웃 아르헨티나와 더불어 중남미 지역에서는 가장 참혹한 수준이었다(Wright 2015, Fuentes 2012).

이 보고서는 칠레가 민주주의로 이행한 이후 피노체트 군부독재의 인권유린과 국가테러의 유산을 어떻게 청산했는지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인권유린과 국가테러 피해자에 대한 칠레 정부의 사법적 처리과정과 시민사회의 대응에 주목하고자 한다. 칠레는 민간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군부세력을 완전히 대치하지 못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한 군부와 협상을 통해 민주주의로 이행했다는 점에서 필자가 이전 보고서에서 살펴본 아르헨티나의 이행과정의 실천과정과 여러 가지로 대비된다(최용주 2018, Sikkink 2011, Huntington 1991, Linz & Stepan 1996, Wright 2015). 칠레 군부는 1990년에 형식적으로 정치권력을 민간으로 넘겨준 이후에도 정부의 통제로부터 여전히 벗어나 있었으며, 자신들이 자행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자기사면”(self-amnesty)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여 한동안 별다른 사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타협에 의한 이행”(pacted transition)은 민주화 이후 민간정부의 과거청산 작업을 크게 제약하였

으며, 결과적으로 칠레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장벽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1998년 10월 신병치료를 위해 영국에 머물고 있던 피노체트가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및 “전쟁범죄” 혐의로 전격 체포되면서 과거사 청산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피노체트의 체포는 비록 스페인 법원의 노력으로 성사된 것이긴 하였지만, 군부독재 치하의 참혹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집단기억이 칠레 국민들 사이에서 일시에 분출되고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¹⁾ 실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폭발하는 극적인 사건으로 작용하였다(Wilde 1999). 세계인권사에서 흔히 “피노체트 효과” (Pinochet effect)라고 부르는 이 사건 때문에 칠레는 비로소 피노체트 군부세력이 남겨놓은 각종 불처벌 장벽을 극복하고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political opportunity)를 확보할 수 있었다. 칠레의 시민사회는 소송 등의 법정투쟁과 대정부 압력활동을 전개하여 가해자들을 법정으로 소환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는 각종 사법개혁으로 인권범죄 가담자에 대한 사법정의의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는 등 군부독재가 남겨놓은 인적, 제도적, 도덕적 유산을 청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청산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칠레의 사례는 여전히 인상적이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 45년 만인 2018년 7월에 칠레 법원이 쿠데타에 저항하다가 살해당한 저명한 인권운동가이자 국민적 가수였던 빅토르 하라(Victor Jara)의 살해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놀라운 사건은 과거청산을 위한 칠레 정부 및 시민사회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²⁾ 인권유린과 부패로 얼룩진 어두운 역사를 가진 칠레가 지금은 세계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선정하는 반부패 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선 24위로 평가되고,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38위이며, 이코노미스트지 평가(EIU) 민주주의 발전 지표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세계 26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런 철저한 과거청산 의지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군부독재를 마감하였고, 그 정치적 이행의 성격 또한 비슷하다는 점에서 칠레의 과거청산 사례가 5·18진상규명특별법의 발효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보고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칠레 사례를 분석 및 평가하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타협에 의한 이행과 불처벌 장벽

피노체트는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1988년 10월의 국민투표에서 뜻밖에 패배하여 대통령 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1973년 쿠데타 성공 이후 반공주의와 경제성장 명분으로 시민사회를 무력

1) 이행기 정의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 보고서를 참조(최용주 2018).

2) 칠레 법원은 2018년 7월 3일에 빅토르 하라의 살해에 가담한 죄를 물어서 8 명의 전직 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재판은 하라의 부인인 영국인 무용가 조안 하라(Joan Jara)가 1978년에 칠레 법원에서 처음 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살해 용의자의 한 사람으로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던 “페드로 바리엔토스”(Pedro Barrientos)는 2015년에 미국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2천만 불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칠레 법원은 바리엔토스의 칠레 소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송환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하라의 죽음과 법정투쟁에 대해서는 McSherry(2016) 참조.

으로 억압하고 정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였으나, 아르헨티나(1983)를 선두로 우루과이(1984), 브라질(1985) 등의 중남미 국가에서 불기 시작한 민주화의 거센 물결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도 그간 이념적 지향 때문에 분열되었던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공산당 등의 야당들이 반(反) 피노체트 연합을 결성하고, 이웃 나라의 정치발전에 자극받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런 의외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Linz & Stepan 1996). 국민투표의 결과에 승복한 피노체트는 대통령 직을 사임하기로 발표하였으며, 1989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좌우합작 연합인 “민주정당연합”(Concertación de Partidos Políticos por la Democracia) 후보 파트리시오 아일윈(Patricio Aylwin)이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면서 여당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90년 3월 아일윈이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함으로써 칠레는 드디어 17년에 걸친 군부독재를 마감하고 민간정부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제도정치의 일선에서 물러나기는 했으나, 피노체트의 정치적 영향력은 최소한 1998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칠레의 불완전한 정치이행은 이웃 아르헨티나처럼 군부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갑자기 상실하여 정치권에서 퇴장하는 게 아니라 군부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의 일부를 양보하는 대신 자신들의 법적 지위와 사법적 안전을 보장받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었다. 아일윈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민주정당연합”은 군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하였으며, 피노체트는 자신이 과거 17년 동안 다져놓은 정치적, 인적, 물리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민주정당연합”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 퇴임 후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칠레의 타협적 정치이행은 군부세력이 완전히 퇴장하고 민주정권이 들어서는 “대치과정”(replacement)이 아니라 군부세력이 제도정치에서는 퇴장하였으나, 현실정치 영향력은 여전히 “변환과정”(transformation)이었다는 사무엘 헌팅턴의 구분은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다(Huntington 1991).

피노체트는 재임 중에 이미 자신이 국민과 정치적 반대파를 상대로 자행한 탄압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퇴임 이후에도 신변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은 상태였는데, 국민투표 패배 후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정권교체기(1988.10-1990.3)의 공백을 이용하여 이러한 장치들이 자신의 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양보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었다.

첫째, 피노체트 정권은 1978년 4월에 “긴급사면법”(법률 2.191)을 제정하여 1973년 9월에서 1978년 3월까지의 계엄통치 기간 동안 군인과 경찰이 국민과 반정부 세력을 상대로 행한 모든 무력행위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였는데, 1990년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 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긴급사면법을 폐기하지 못한 아일윈 정권은 인권탄압이 가장 심했던 1973-1978년 기간의 국가테러를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의 효력으로 반공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많은 인명을 살해하고 고문했던 악명 높은 비밀경찰 조직 DINA(국가정보국, Dirección de Inteligencia Nacional)에 대한 조사 및 관련자 사법처리 자체가 한동안 불가능하였다.

둘째, 아일윈은 피노체트가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1980년에 개정한 헌법을 폐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하였다. 칠레는 공산주의의 국가전복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군부의 정치개입과 시민사회에 대한 무력 통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1980년 개

정헌법의 “보호민주주의”(democracia tutelada, protected democracy) 통치이념의 합헌성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호헌조치로 군부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군사정책을 스스로 집행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며, 주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안보위원회”(Consejo de Seguridad Nacional)에 육해공 삼군 사령관이 참여하여 여전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9명의 상원의원을 군부가 지정하는 임명직 의원 제도로 그대로 존치되었다.

나아가 피노체트는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포함하여 주요 고위공직자들의 임기를 그대로 보장받았으며, DINA의 후신인 CNI(Central Nacional de Informaciones)의 요원 19,000 명을 군 정보부서의 통제 하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의 민간 통제권을 더 강화하였다. 국방예산은 행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군부가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국방예산 총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자동 증액되었으며, 칠레의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 수출로 얻어지는 수익의 10%를 군사예산으로 자동 전용하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군의 자율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보장하는 이러한 법적 장치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력을 갖는 일종의 “고정법”(ley de amarre)으로 남아있게 되었다(Wright 2015: 75, Wilde 1999, Collins 2010). 그리고 피노체트는 대통령 직을 물러나는 대신 1997년까지 군최고통수권자로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면책특권이 있는 종신직 상원의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다. 피노체트는 퇴임 이후에도 모든 사법적 책임에서 면책되는 이른바 “권위주의적 영지”(authoritarian enclaves)를 거의 완벽하게 마련하고 대통령 직을 내놓은 것이다(Garretón 1996).

3. 아일윈 정부(1990-1994)의 실패

피노체트가 여전히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일윈 정권의 과거사 청산은 시작부터 난항에 봉착했다. 아일윈은 피노체트의 1978년 사면법 폐지와 군부독재의 시절의 인권탄압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권력이양 과도기에 이루어진 피노체트 군부세력과의 이면합의와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우파세력의 견제 때문에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아일윈은 취임하자마자 피노체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부패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였으나, 군부가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완전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하여 산티아고 시내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정치불안으로 발전하자 곧바로 중단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Acuña 2006: 224).

피노체트 정권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사법 처리가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아일윈 정부는 우선 진실위원회를 꾸려서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피해자 배상 사업부터 추진하였다. 아일윈은 1990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진실화해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Verdad y Reconciliación)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피해자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다. 위원장 이름을 따서 “레티그 위원회”(Rettig Commission)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이 진실위원회는 Nunca Más 보고서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실종자조사위원회”(CONADEP)를 모델로 하였다. 그러나 피노체트 정권 인사가 두 명이나 위원으로 참여하고 전체적으로 타협주의 노선을 취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탓에 ”

레티그 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시민사회 및 피해자단체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활동기간도 6개 월로 한정되었으며, 가해자를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은 없었으며, 조사범위도 사망자와 실종자로 국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에 2월에 발표된 위원회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피노체트 정부기관의 직접개입 또는 정부기관 “조력자”들에 의해 최소한 1,068 명이 살해되었고, 957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으며, 164 명이 “명백한 정치적 폭력”에 의해 살해되었음을 확인하였다(Hayner 2011). 위원회 보고서는 이 조사결과에 의한 피해자 규모는 여전히 잠정치이며 향후 조사에 의해서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군부독재 시절에 제정된 각종 사법적 면책 조항을 폐지하고, 광범위하게 자행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위원회 보고서는 가해자를 전부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나, 활동기간 중 확보한 인권탄압 자료를 향후 수사와 사법판결을 위한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레티그 보고서의 충격적인 내용은 집권 후반기의 유화적 통치와 인플레이션 억제 등 경제안정 덕분에 피노체트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중도보수 중산 계층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물론 군부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위원회에 참여한 공산주의자들이 각종 자료와 증언을 왜곡했다고 발표하였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레티그 보고서는 군부독재 시절 자행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리 등 새 정부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얻어 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일윈 행정부는 레티그 보고서에 의해서 조성된 사회적 공분(公憤)에 힘입어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사법개혁을 시작하였으나 의회를 장악한 친(親)피노체트 우파정당(Unión Democrática Independiente, Renovación Nacional)과 군부의 조직적인 저항 때문에 번번히 좌절되었다. 레티그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아일윈 행정부는 실종 및 살인 행위에 가담한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려는 입법안(일명 Cumplido Law)을 제출하여 하원의 의결을 거쳤으나 피노체트가 임명한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었다. 또한 레티그 보고서의 내용에 격분한 좌파 과격주의자들이 피노체트의 법률자문역이자 우파 지도자인 제이미 구즈만(Jaime Guzman)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레티그 위원회의 활동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우파의 역공이 시작되었으며,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정의 집행의 명분이 뒷전으로 밀리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1차 사법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일윈 행정부는 우선 피해자 보상 사업과 기념사업에 착수하였다. 1992년 1월 31일, 정부는 법률(19.123호)에 의해 내무부 산하에 “보상 및 화해 공사”를 설립하고 레티그 위원회가 실종자 및 사망자로 인정한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배상 및 보상사업을 추진하였다.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과 교육비 지원의 혜택이 주어졌고 미화 370불 상당의 평생연금이 매달 지급되었다. 1992년 한해에 약 22백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추가 조사에 의해서 보상대상자와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살바토레 아엔데의 유해를 샌디에고의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하였고, 쿠데타에 의해 희생된 반정부 인사에 대한 추모사업 및 국립경기장 등 군부독재 시절 인권유린의 상징이 되었던 장소들을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되었다.

1978년 특별사면법과 1980년 헌법에 의해 사법처리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칠레의 하급 법원은 피노체트 정권 시절 인권탄압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하급법원에

서 이러한 인권재판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우리와는 달리 피해자들이 직접 기소하는 “사인소추”(私人訴追)가 인정되는 칠레의 형사법 제도 덕분이었다.³⁾ 사인소추권에 의한 기소는 재판관할이 군법원으로 이첩되고 특별사면법에 의해 대부분 기각되었으나 이 재판과정을 통해서 가해자들을 법정으로 소환하고, 증언을 청취하여 나중에 진행될 인권침해 재판의 법적 증거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다. 나아가 재판과정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가해자 사법처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독재정권 시절 인권탄압에 대한 집단기억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3년에는 인권침해 재판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칠레 법원이 아엔데 정권 시절의 외무장관 올란도 레텔리어(Orlando Letelier)와 그의 미국인 비서 로니 모피트(Ronnie Moffit)를 살해한 혐의로 DINA의 수장이었던 마누엘 콘트레라스(M. Contreras)와 부책임자 브리가디어 에스피노자(B. Espinoza)를 재판에 회부하고 같은 혐의로 현역 장교를 체포한 것이다. 1973년 쿠데타 후 미국으로 망명한 레텔리어는 워싱턴DC에 체류하고 있다가 DINA 요원이 설치한 자동차 폭탄에 의해 그의 미국인 비서와 함께 암살당하였다. 미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한 이 폭탄 테러는 미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미국과 칠레의 외교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인권정책을 앞세운 카터행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피노체트는 1978년에 특별사면법을 제정하면서 레텔리어 살해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는데, 아일윈 정부의 사법부는 이 조항에 착안하여 다시 수사에 착수하고 DINA의 최고 책임자 두 명을 레텔리어 암살 기획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이 재판은 당연히 군부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993년 5월 28일 군부는 완전무장 부대를 동원하여 무력시위에 돌입하였고 재판 중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였다. 군부의 반발에 당황한 아일윈 행정부는 법원을 설득하여 기소를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민주정당연합 내 강경파와 인권단체를 비롯한 피해자 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두 사람을 제외한 추가 기소는 없는 수준에서 재판을 마무리하였다. 이 재판으로 콘트레라스는 7년, 에스피노자는 6년을 선고받았다.⁴⁾ 이 재판은 피노체트 군부독재 가담자를 국가가 기소하여 형사처벌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향후 진행되는 각종 인권재판의 주요판례로 인용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부와 갈등이 격화되고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와 관계도 소원해진 아일윈 정부는 혼란한 정국 타개책의 일환으로 1993년에 절충적인 수준에서 마련된 2차 사법개혁안을 제안하였다. 일명 “아일윈 법”(Aylwin Law)이라고 알려진 이 법안은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도입한 “진실재판”⁵⁾을 참고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즉, 실종 및 납치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을 기소하되, 법정에서 가해자가 실종자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면 1978년 특별사면법을 적용하여 사면하고 가해자는 익명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사법적 강제에 의한 진상규명을 추진하는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를 대가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정의”(criminal justice)를 포기

3) 중남미 국가의 사인기소에 대해서는 필자의 보고서(최용주 2018) 및 Sikkink (2011) 참조.

4) 콘트레라스는 1995년에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았다.

5) 민주주의로 이행 초기에 아르헨티나는 법제도의 미비로 더러운 전쟁 시기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이 어렵게 되자 가해자들을 법원으로 소환하여 진실고백을 강제하는 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국제인권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실추구권(right to truth)의 이행을 사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진실재판”이라고 불렀다.

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가족 및 인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했다(Wright 2015). 법안이 의회에 발의되자 실종자가족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연좌데모와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입법 반대활동에 돌입하였고, 피해자단체 및 인권단체가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사회당 등 민주정당연합 내 일부 정당들도 강력하게 반대하여 법안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4. 국면 전환 : 피노체트의 체포

아일윈의 사법개혁 실패는 군부를 통제하지 못하고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로부터 전폭적인 신임을 얻을 수 없었던 과도기 민간 정부의 정치적 교착상태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다. 이러한 교착상태는 아일윈에 이은 에드워드도 프레이(Eduardo Frei, 1994-2000) 정권 초기에 이르기까지 큰 개선 없이 계속되었다. 현실정치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는 극적인 국면 전환이 없는 한 이러한 교착상태는 계속될 것임이 자명했다. 그런데 이 극적인 사건이 1998년 10월에 일어났다. 피노체트가 런던에서 체포된 것이다.

1997년에 군통수권자의 지위를 자신의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종신직 상원의원으로 자리를 옮긴 피노체트는 1998년 10월에 신병치료를 위해 영국을 방문했는데, 스코트랜드 경찰(Scotland Yard)이 스페인 법원의 발차사르 가르존(Baltasar Garzón)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피노체트를 체포하였다. 칠레의 인권단체가 1996년에 오퍼레이션 콘도르(Operation Condor)⁶⁾ 등에 관여한 혐의로 피노체트를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와 “전쟁범죄”로 스페인 법원에 기소하였는데, 피노체트가 자국의 영토를 떠나서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스페인 법원이 즉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영국 정부가 이 영장을 집행한 결과였다. 피노체트가 자국에서 누린 불체포 특권이 영토를 벗어난 영국에서는 통하지 않은 것이다. 피노체트의 체포를 확인한 스페인 법원은 스페인과 영국 간 범인인도협정에 따라 피노체트를 스페인으로 인도해줄 것을 영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피노체트의 체포는 임기 말기의 프레이 정권을 매우 곤혹스러운 상태로 몰고 갔다. 자국을 오랫동안 식민지배하였던 스페인이 자국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송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그 인도주의적 명분에 관계없이 주권국가로서 칠레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칠레 정부는 피노체트의 스페인 인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자국 송환을 영국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피노체트가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국의 영토로 돌아올 경우에는 피노체트의 사법처리를 원하는 칠레 시민사회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피노체트의 변호인단도 당연히 피노체트의 칠레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런 이유로 사회당을 비롯한 “민주정당연합”내 강경파와 인권단체들은 프레이 행정부가 피노체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칠레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피노체트를 국제법적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칠레의 시민사회는 피노체트를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게 스페인이든 영국이

6) 중남미 국가들이 연합하여 전개한 사회주의 게릴라 소탕작전을 말한다. 미국의 CIA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이 참여하였다.

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피노체트의 체포는 인권침해 범죄에 관련하여 주권(sovereignty)과 재판관할의 보편주의 원칙 간 묘한 긴장관계가 잘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결국, 영국 정부는 피노체트는 건강 상의 이유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스페인 법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칠레 송환을 결정하였다. 피노체트는 2000년 3월 3일 칠레로 귀국하였다.

피노체트의 체포는 이른바 “피노체트 효과”(Pinochet effect)라고 부를 정도로 국제인권법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Brett 2008, Roth-Arriaza 2006, Sikkink 2011).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적 목적의 살인, 납치, 고문 등 인권침해 범죄는 사법처리에 국경이 없다는 국제법의 보편적 원칙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뉴른베르그 원칙 이후 제정된 각종 국제인권규범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된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universal jurisdiction)과 “개인형사책임”(individual criminal accountability) 원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피노체트의 체포에 반영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전직 국가수반이며 외교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살인, 약식재판, 고문, 납치 등 국제사회가 규정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적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공적 신분 때문에 사법처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가중처벌의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피노체트의 체포로 일기 시작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고조는 이후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Sikkink 2011).

피노체트의 체포는 칠레 정부를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갔으나, 결과적으로는 인권침해 가해자 사법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칠레 정부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주었다. 사회운동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피노체트 체포를 계기로 인권침해 사범을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political opportunity) 및 자원동원 기회가 크게 확장된 것이다(MacAdam et al. 2001). 우선 특별사면법 때문에 국내법으로 처벌하기는 힘들지만, 국제인권법을 적용하면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는 희망이 확산되면서 국내외 법원에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범죄 사범을 기소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피노체트가 국내로 송환되던 2000년 3월까지 피노체트에 대한 국내법원의 기소 건수는 무려 60건에 달했다(Wright 2015: 110).

그간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인권범죄 기소는 인권단체와 피해자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더욱 조직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연고가 있는 국가인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이태리, 프랑스, 미국 등의 법원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소송은 주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국제 인권NGO와 해당국가 인권단체의 후원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소송을 계기로 칠레의 인권단체 및 피해자단체들은 “초국적 압력 네트워크”(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를 구축하여 가해자 사법처리에 미온적인 칠레 정부를 압박하고 이행기 정의 실천을 위한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였다(Keck & Sikkink 1998). 어느 연구자가 잘 지적한 것처럼 피노체트의 체포는 군부독재 하에서 자행된 만행과 인권침해에 대한 칠레 국민들의 집단기억이 일시에 “분출”(irruption of memory)되어 가해자 사법처리를 향한 정치적 동력으로 이어졌고, 피노체트가 견고하게 쌓아놓은 난공불락의 “불처벌”(impunity)의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결정적인 틈새를 제공하였다(Wilde 1999: 474).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칠레 대법원의 1978년 특별사면법 일부 무효 판결은 피노체트의

7) 피노체트는 체포 당시 불체포 특권이 있는 외교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체포와 맞물리면서 인권침해 사범 처벌의 법적 명분을 한층 강화하였다. 1998년 9월에 대법원은 1973년에 실종된 반정부 인사 페드로 코르도바(Pedro Córdoba) 사건을 심리하면서 코르도바 실종 당시 피노체트 정권은 “전시상태”(state of war)라고 선언하였으므로 코르도바의 실종은 포로를 안전하게 대우해야 할 “제네바 협정”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하며, 칠레는 1951년에 제네바 협정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1978년 특별사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즉 생사가 확인될 때 까지 코르도바는 실종 상태에 있으므로 전쟁범죄로 수사과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1978년의 특별사면법의 효력은 사망의 경우에 한하며, 납치와 실종 상태의 사건은 사망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수사와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급법원 판례로 인용되었다. 나아가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한 “인도에 반한 범죄”는 특별사면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Sikkink 2011). 이 판결을 계기로 1973-1978년에 사이에 확인된 실종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급증하였으며, 1978년 이후 1990년 사이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기소 및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코르도바의 판결에 주목한 후안 구즈만(Juan Guzmán) 판사는 피노체트가 귀국한 직후 샌디에고 항소법원에 피노체트가 “죽음의 카라반”(Caravan of Death)⁸⁾ 사건과 관련하여 75 명의 반정부 인사를 “납치”하였으므로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75 명의 실종자가 살해된 것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제네바 협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1978년의 특별사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2000년 8월에 대법원은 구즈만 판사의 기소의견을 인정하였고 피노체트는 전쟁 포로의 인권유린 및 고문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피노체트 변호인단은 피노체트가 치매로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항변하였고, 2002년 7월에 대법원은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노체트의 기소 취소를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피노체트의 기소를 둘러싸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서 시민사회 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야기하였고 “민주정당연합” 내 정당 간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피노체트는 그 이후에도 수차례 더 기소되었지만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되었다. 피노체트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내다가 2006년 12월 3일에 심장마비로 병원에서 죽었다. 사망 당시 그는 최소 700 건의 인권범죄로 기소된 상태였다.

5. 인권원탁회의와 발레크 위원회

피노체트의 체포 및 본국 송환으로 이어지는 국면 전환은 대통령 선거 기간과 맞물리면서 피노체트 군부의 정치적 동반자인 두 우파정당—Unión Demócrata Independiente(UDI)와 Renovación Nacional(RN)—에게도 곤혹스러운 사건이었다. 피노체트의 체포로 독재시절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우파정당은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피노체트 군부와 거리를 두어야 했으며, 특히 1999년 12월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노

8) 1973년 쿠데타 직후 불순분자 소탕을 목적으로 피노체트가 전개한 군사작전을 말한다.

선 부동층의 지지가 절실했다. 여당인 “민주정당연합”의 라고스 후보와 판세가 비등하다고 판단한 우파야당의 대통령 후보 호아퀸 라빈(Joaquín Lavín)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비록 온건한 수준이긴 하지만 피노체트 군부독재의 인권탄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였으며,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인권탄압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배상사업 및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행기 이후 군부가 벌인 세 차례의 무력시위(1990, 1993, 1995)를 앞장서서 지지하였던 극우정당으로서는 획기적인 변화인 셈이다(Fuentes 2012: 130, Acuña 2006: 231). 우파정당의 입장 변화로 여당인 “민주정당연합”은 인권정책 추진 및 과거청산 작업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한층 더 수월하게 이룰 수 있었다.

더 나아가 2004년에 미국 정부는 피노체트가 미국은행의 125 개의 계좌에 2천만 달러 이상을 비밀리에 예치해놓고 있다고 폭로하였는데, 이 부패 스캔들은 그간 각종 긴축정책으로 칠레 경제를 구한 “구세주”로서 피노체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으로 우파정당뿐 아니라 군부와 우파 시민사회 세력도 점차적으로 피노체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군부독재 시절의 국가테러와 인권탄압 진상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는 더욱 성숙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 설치된 “인권원탁회의”(Mesa de Dialogo)는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가져다준 매우 값진 진전이였다. 정부, 인권단체, 종교계, 군부, 법조계, 인권단체의 주요인사들이 참여하여⁹⁾ 1999년 8월에서 2000년 6월까지 활동한 이 숙의기구는 약 2천 명에 달하는 실종자 및 수감자들의 생사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피노체트 정권 하 군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기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Bakiner 2010). 군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여를 꺼려했으나, 피노체트의 체포 등으로 정세가 급변하면서 더 이상 피할 명분을 얻어내지 못하고 참여를 결정하였다. 공산당을 비롯하여 일부 인권단체는 원탁회의의 활동이 잘못하면 군부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한계는 있으나, 인권침해의 주체인 군부와 피해자인 시민사회, 인권운동을 이끈 종교계 등이 공식적으로 만나서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침해를 둘러싼 쟁점들을 논의하고 군부는 인권침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에서 이 원탁회의의 활동은 진일보한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인권원탁회의의 활동이 마감되던 2001년 1월에 군부는 리카르도 라고스 에스코바 (Ricardo Lagos Escobar) 대통령에게 200 명의 실종자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였다. 군부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인정한 것인데, 놀랍게도 이 중에서 150 명은 바다 등에 버려져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칠레의 시민사회는 다시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칠레 대법원은 2001년 7월에 인권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관 60 명을 새로 임명하여 이 중에서 9 명은 전담판사로, 나머지는 인권재판을 최우선 사건으로 배정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군부는 피노체트 정권 하에서 혹독한 인권탄압이 있었으며, 군부와 경찰이 이 인권탄압의 주체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Acuña 2006: 208). 군부의 인권침해 사실 인정은 “인권원탁회의”가 얻어낸 최고의 성과였다.

중도 좌파 성향의 리카르도 라고스가 민주정당연합의 세 번째 대통령(2000-2006)으로 취임한 이후 2003년 11월에는 새로운 진상조사위원회인 “정치적 감금 및 고문 조사위원회”(Comisión

9) 정부대표 5명, 군부와 경찰 4명, 종교계 5명, 법조계 및 인권단체 6명이 참여하였다.

Nacional Sobre Prisión Política y Tortura)가 발족되었다. 저명한 인권운동가이자 추기경인 세르지오 발레크(Sergio Valech)가 위원장을 맡은 이 조사위원회는 1991년 레티그 위원회가 다루지 못한 정치범 투옥 및 고문 실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4년 11월까지 활동하였다. 발레크 위원회는 1973년 9월 11일부터 1990년 3월 10일 사이의 군사정권 기간 중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투옥, 감금되고 고문을 받은 사례를 조사하고 전부 확인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이 위원회는 35,000 명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40개 나라가 넘는 타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현지의 칠레 공관을 통해 접수한 서면 진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원회는 총 1,200 쪽의 보고서를 완성하여 2004년 11월에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으며, 대통령은 보고서의 내용을 TV 중계를 통해 직접 전국민에게 공개하였다. 보고서를 받은 라고스 대통령은 위원회에 추가조사를 지시하였으며, 위원회는 2005년 6월에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군사독재 시절에 행해진 14개의 주요 고문기술 중에서 전기충격 수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고문은 피노체트 정권의 “일상화”된 탄압수단이자 통치기술이었다고 공식적으로 기록하였다. 17년의 군부독재 기간 중 최소한 28,549 명의 국민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불법투옥과 감금의 피해를 당했으며, 이 중에서 1,244 명은 18세 이하, 176 명은 13세 이하의 미성년자였다고 밝혀서 충격을 주었다(Hayner 2011). 고문 및 불법감금이 이루어진 1,200 개소의 시설을 확인하고 공개하였는데, 이 장소 중에는 일반 국민들에게 친숙한 이웃의 학교, 병원, 체육관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군부독재 하에서 국가테러와 인권유린이 얼마나 은밀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새삼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발레크 위원회는 레티그 위원회에서 누락된 국가테러 및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남겼으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등 과거사 정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국가테러와 인권유린에 가담한 인물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전부 익명으로 처리하여 피해자 단체 및 인권단체의 비판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했다. 또한 피해자 명단을 공개하였으나, 피해자 증언 내용을 50년간 비공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발레크 보고서가 발표되자 총사령관 후안 에밀리오 체이레(Juan E. Cheyre)는 “군부는 과거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사법적, 도덕적 책임감을 인정한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인권원탁위원회에서 군부가 인권침해 “사실”을 시인했다면, 이번에는 군 최고사령관이 “책임”(accountability)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성명은 군부의 전현직 고위층의 큰 호응을 얻어내지는 못했다(Fuentes 2012). 일부는 체이레의 성명에 노골적으로 반발을 표시하였으며, 은퇴한 고위급 군부 인사들은 자신들의 인권탄압 행위를 애국심으로 정당화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사건은 군부 내에 여전히 친 피노체트 강경파 세력이 온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근본적인 인적 쇄신이 있어야 사법정의를 실현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스 대통령은 위원회가 확인한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할 것으로 지시하였으며, 20,000 명의 피해자들에게 매월 190 달러의 평생연금이 지급되었다(Hayner 2011).

6. 시민사회의 대응 : 소송과 퓨나(Funa)

민주주의 이행기에 칠레의 인권운동은 실종자 가족 등의 피해자 단체, 풀뿌리 사회운동 단체, 종교단체, 변호사와 교수 등의 전문가 집단 등을 망라하고 있었으며, 이들 단체는 상호협력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활동하였다(Ropp & Sikkink 1999).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엄격하게 통제되었던 군부독재 시절에는 천주교가 인권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1976년에 설립된 “연대교구”(Vicaría de la Solidaridad)가 대표적인 단체이었다. “연대교구”는 70-80년대 중남미 지역 종교계 인권단체 중에서는 영향력이 가장 컸던 단체로 종교단체의 특성 상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네트워크가 탄탄했으며, 칠레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러 인권단체들의 최상위 조직 역할을 담당하였다. “연대교구”는 주로 자원봉사 인권변호사를 통해서 반정부 인사나 인권피해자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활동을 담당했는데, 칠레가 민주주의로 이행하던 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기능이 다른 단체로 흡수되면서 활동을 중단하였다. 민주화 이행기 이후 칠레의 인권운동은 “칠레인권위원회”(CCHR), “민중권리쟁취협회”(CODEPU), “청년인권위원회”(CODEJU), “구속 및 실종자 가족협회”(AFDD) 등과 같은 피해자 가족 중심의 풀뿌리 조직과 “기독교회 사회지원재단”(FASIC)을 중심으로 하는 후원단체를 주축으로 전개되었다(Fuentes 2012: 130-133).

이러한 단체들은 이념적 지향의 스펙트럼이 기독교민주주의부터 사회주의에 걸쳐 다양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운동 전략과 목표 등에 걸쳐서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충돌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CCHR은 기독교민주주의 계열의 단체로 참여인원의 규모가 가장 컸으며,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한 CODEPU와 CODEJU는 좌파 계열의 단체로 정부의 과거청산정책 및 인권정책에 가장 비판적이었다. FASIC은 90년대 중반에 해체된 “연대교구”의 활동을 대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특정 정치집단이나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활동하는 전문가 집단의 성격이 강했으며, 인권침해 사범의 불처벌 및 사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담당하였다.

90년대에 들어와서 “연대교구”의 해체와 함께 인권단체의 활동은 한동안 주춤하였으나, 피노체트가 영국에서 체포되고 “인권연대회의” 및 “발레크 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해서 대법원이 인권재판 담당 특별판사를 임명하는 등 군부독재 시절 인권탄압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가능성이 새롭게 열리면서 피해자, 희생자 가족, 법률가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들이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그간 담보상태에 있던 칠레의 과거청산 작업과 이행기 정의 실천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다(Collins 2010:101).

90년대 후반 이후 칠레 인권단체 활동의 주요전략은 “소송”을 통한 법정투쟁이었다(Wright 2015, Collins 2010). 역사적으로도 소송은 군부독재 시절부터 칠레 인권단체와 민주화운동 세력의 주요 투쟁전략이었다.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사인기소”를 허락하고 있는 칠레의 사법시스템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은 반정부 인사와 인권탄압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합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었다. 1973년 쿠데타 직후 피노체트 군부에 의한 불법감금, 고문, 납치, 살인 등이 빈번해지자 피해자 가족들은 “연대교구”와 같은 인권단체에 소속된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법원에 기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소송 사례는 인권탄압에 비례해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피노체트가 1978년에 “긴급사면법”을 제정했던 주

된 이유도 정부를 상대로 한 인권단체의 소송과 법정투쟁이 급증하였기 때문이었다.

1978년의 긴급사면법 때문에 민주화 이행기 초기에는 재판에 의해서 가해자가 처벌되는 사례는 드물기는 했지만, 소송은 군부독재 시절의 만행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 및 가해자의 증언을 통해서 나중에 진행될 사법처리와 진상규명작업을 위한 자료를 축적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업이었다. 이행기 초기에는 주로 실종자를 중심으로 소송이 이루어졌으나, 나중에는 불법감금, 고문, 납치, 불법재판, 시신 유기 등과 같은 인권탄압 행위로 점점 확대되었고, 피노체트가 군사령관 직을 그만 두던 1998년 1월 피노체트를 상대로 한 기소 건수는 수백 건에 달했다. 국내법에 의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인권변호사들은 주로 국제인권규범과 국제인권법, 전쟁법에 의존해서 가해자 사법처리와 피해자 배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주장하였다. 긴급사면법의 일부 무효 판결을 이끌어 낸 “코르도바 재판”에서 보는 것처럼 향후 가해자 사법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판례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인권단체들의 법정투쟁에 의한 “법리적 혁신” 덕분이었다(Sikkink 2011).

피노체트의 런던 체포를 기점으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중심이 된 인권재판 소송이 크게 늘어났는데, 2010년 2월까지 군부독재 시절 인권탄압 가해자에 대한 기소는 782 건에 달했다(Fuentes 2012: 132). 2010년 3월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범 피해자 가족협회”(AFEP)는 소속 회원들을 대신해서 203 건의 신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중도 좌파 성향의 미셸 바체레트(Michelle Bachelet, 2006-2010) 행정부는 내무부에 인권담당 부서를 설치하였고, 인권담당 부서에서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이제까지 개인 또는 인권단체를 통해 진행하던 기소가 훨씬 수월해졌으며, 문서가 아닌 구두로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가 정비되면서 기소와 재판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009년에 바체레트 정부는 독립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피노체트 정권 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각종 조사 및 보상사업, 인권재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군부독재 주요인사 및 인권침해 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인권단체들은 또한 군부독재 시절의 국가만행과 인권탄압에 대한 집단기억을 유지하고, 불처벌장벽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행기 이후 주요한 국면 전환-예를 들어 DINA 책임자 마누엘 콘트레라스 체포, 피노체트의 런던 체포와 귀국, 군사쿠데타 30주년-때마다 인권단체와 피해자 단체들은 각종 시위와 단체행동을 통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배상, 기념사업 등 조속한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실천을 촉구하였다.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의 이러한 활동은 타협주의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정책과 자주 충돌하였고 이러한 갈등이 친 피노체트 세력에게 역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군부독재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실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귀중한 동력이 되었다(Wright 2015: 93-95).

이러한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웃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참고하여 칠레의 청년운동단체들이 전개한 “퓨나”(funa)운동이다. 퓨나는 “소란”라는 뜻을 가진 방언으로, 자신의 과오를 숨기고 지내는 군부독재 인사 및 인권탄압 가해자들을 찾아내서 이들의 범죄행위를 공개하고 망신을 줌으로써 일종의 사회적, 도덕적 처벌의 효과를 거두는 사회운동 퍼포먼스를 말한다. 칠레의 청년운동단체들은 아르헨티나에서 90년대 초반에 널리 확산된 에스크라체(escrache) 운동¹⁰⁾을 참

고하여 특별사면법 등에 의해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가해자들의 인권침해 행적을 공개하는 활동을 벌였다. 푸나 운동단체 “진실과 정의 행동 칠레청년연합”(Acción Verdad y Justicia Hijos-Chile)은 1999년 1월에 군부독재 시절 수많은 고문 행위에 가담했던 유명 의사가 근무하는 샌디에고의 병원에서 대대적인 농성활동¹¹⁾을 전개하고 의사의 고문행위를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DINA의 고문책임자를 찾아내서 지역사회에서 추방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푸나 운동은 사법처리로부터 자유로운 가해자들을 도덕적으로 처벌하고 지역공동체에서 고립시키는 “사회적 수감”(social detention) 효과를 거두었으며, 군부독재 시절의 만행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각성에 크게 기여하였다(Jelin 2011).

나아가 인권단체와 피해자단체들은 의회와 행정부를 압박하여 가해자 처벌을 위한 입법과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희생자의 배우자와 딸 등 여성들로 구성된 “구속 및 실종자 가족협회”(ARDD)가 가장 열성적으로 대정부 활동에 앞장섰는데, 인권관련 법안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을 감시하고 반인권적 악법과 반인권 정책 철폐 운동을 전개하였다. 인권단체들은 중도-좌파 성향의 의원들과 정치적 연대를 맺고 피노체트가 임명한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상대로 반인권 법률 및 정책의 폐기와 과거청산을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였다. 가장 절실한 과제인 1978년 특별사면법의 폐지와 1980년 헌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여당인 “민주정당연합”에서도 기독교민주당의 절충주의 노선과 사회당의 원칙주의 노선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사회당 계열의 원칙주의 노선을 강력히 지지하는 인권단체 및 피해자 단체의 대정부 압력활동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법개혁의 성격 및 방향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낸 주요 동력이 되었다.

7. 사법개혁과 가해자 처벌

결국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과거청산 작업의 성공 여부는 사법체계의 개혁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행기 이후 “민주정당연합” 정권의 사법개혁은 크게 인적 쇄신과 불처벌 관련 법 폐지 및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우파 야당과 군부의 반발로 1978년 특별사면법 등 불처벌 조항의 폐지와 헌법 개정은 여전히 힘든 문제이었기 때문에 이행기 초기에는 행정부의 명령으로 가능한 대법원의 인적 쇄신 조치부터 먼저 이루어졌다.

우선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아일윈과 프레이 대통령은 총 17 명의 대법관 중 7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여 사법개혁을 한결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었고, 2005년에는 군사정권 시절에 임명된 대법관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Fuentes 2012: 128). 1997년에는 대법관의 수를 21명으로 늘려서 심의 및 판결의 전문성, 중립성, 엄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이 중에서 5 명은 경력 15년 이상의 민간 법률가로 충원하도록 하여 판결이 사법부 내의 인적 파벌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판사 정년을 75세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75세

10) escrache 운동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 보고서를 참조.

11) 칠레의 에스크라체 운동 단체들을 이러한 전략을 “소란”(funa)라고 불렀다. 즉 가해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일부러 소란을 피움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끄는 전략이다.

이하라고 하더라도 고령 판사는 조기 은퇴를 종용하여 군사독재 시절에 임용된 법관들을 퇴진시키고 젊은 세대들로 교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대 교체는 당연히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기소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2001년에 대법원은 9 명의 특별판사를 지명하여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 하도록 하였다. “인권원탁회의”의 조사로 실종자 압매장 및 시신 유기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인권침해 수사 및 가해자 처벌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면서 취해진 조치였다. 2011년에는 전국법원에 걸쳐 25 명의 특별 치안판사가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Fuentes 2012: 128). 지역 인권재판 담당 치안판사들은 대법원의 인권담당 특별판사에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였으며, 대법원은 관련 사건이 정당한 법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2007년 12월에는 군사독재 시절의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수사국이 신설되었다.

라고스 정부는 2005년에 피노체트가 남겨 놓은 최악의 유산인 1980년 헌법을 개정하는데 성공하였다. 피노체트의 체포 및 2004년 미국은행 비밀계좌 부패 스캔들로 우파정당들이 군부세력과 결별을 선언하고 여당인 “민주정당연합”의 개헌안에 동의하여 얻어진 결과였다. 군부에게 할당된 당연직 및 종신직 상원의원 제도가 폐지되었고, “국가안정보장위원회”에 민간인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그 기능도 의결기구가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구로 축소되었다. 총사령관을 비롯하여 삼군 사령관의 임면권도 국가안정보장위원회에서 대통령으로 이관되었다. 이른바 “보호민주주의”를 구실로 국내 치안까지 담당했던 군부의 민간 통제 기능은 폐지되고 “국방”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개정되었다. 2005년 헌법의 개정으로 군부의 정치개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으며, 1990년 민정 이양 이후 불완전한 형태의 칠레 민주주의는 비로소 제대로 된 모습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1978년 특별사면법은 계속 존치되다가 바첼레트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2014-2018)를 시작한 2014년에 정부가 폐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의 폐지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인권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1998년 대법원의 판결로 법 자체가 거의 사문화되었기 때문이었다¹²⁾. 그러나 이 법의 존치 그 자체가 군부독재의 유산이며 범미인권위원회(Inter-American Human Right Commission) 등 국제인권기구에서도 강력하게 폐지를 권고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폐기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의 폐기안과 함께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도 제출되었다. 현재 특별사면법 폐기 안은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 중이며, 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사면 폐지 법안은 통과되어 2015년부터 발효되었다.

이러한 사법개혁은 군부독재 시절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인권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제인권법과 국제규범이 판결에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98년 코르도바 재판에서 “제네바 협정”이 “기소의견”으로 원용되었고, 2006년에 칠레 대법원은 처음으로 인권침해 사건 재판에서 국제인권법을 유죄판결의 법적 근거로 채택하였다(Huneeus 2010).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 방지 협약”과 같은 국제인권협약 등이 인권재판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의 법리적 근거로 인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12) 물론 나중에는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존치를 바라는 군부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인권담당 특별판사의 임명으로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기소와 유죄 판결 역시 크게 늘어났다. 2008년 5월, 특별판사 빅토르 몬티글리오(Victor Montiglio)은 48 명의 양민을 살해한 죄를 몰아서 전직 비밀요원 98 명을 동시에 기소하였는데, 단일사건으로는 인권범죄 피의자 수가 가장 많은 재판으로 기록되었다. 공식적인 보고가 없어서 정확한 수치는 확인할 수 없으나, 디에고 포탈레스 대학(Universad Diego Portales) 인권 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11년의 기간 중 비밀경찰(DINA) 전직 요원을 비롯하여 777 명의 인권침해 가해자가 재판에 회부되어 231 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uentes 2012: 135). 칠레 인권문제 전문가인 토마스 라이트(Thomas Wright)의 2012년 말 기준 조사에 의하면 총 1,342건의 인권재판이 진행되고 447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Wright 2015: 125), 이 두 수치를 비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군부독재 시절 인권범죄 사범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칠레 내무부 인권담당 부서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한 Human Right Watch의 2017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사법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침해 사건은 1,048 건이며, 동년도 말 기준으로 344 명이 인권범죄로 복역하였고, 117 명이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¹³⁾ 2016년 7월, 라고스 정부의 총사령관으로 군부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였던 에밀리오 체이레는 1973년에 “죽음의 카라반” 작전에 초급장교로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빅토르 스타크(Victor Stark) 등 1973년 군사쿠데타와 그 이후의 양민학살 작전을 지휘하였던 군부 인사들도 속속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가해자의 대부분은 고령으로 재판을 앞두고 사망하였으며,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형집행이 면제되어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¹⁴⁾ 2016년 10월, 칠레 대법원은 1973년의 피노체트 쿠데타를 반대하여 반란과 내란혐의로 복역하였던 전직 공군장교 12 명을 재심리하고 무죄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2018년 7월 3일, 칠레 법원은 빅토르 하라의 살해에 가담한 죄를 몰아서 8 명의 전직 군간부에 대해서 유죄를 확정하였다. 하라의 가족이 1978년에 처음으로 기소한 후 40년 만의 유죄 판결이었다.¹⁵⁾

8. 시사점

이제까지 살펴본 칠레의 과거청산 과정은,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¹⁶⁾ “진실”과 “정의”라는 이행기 정의의 핵심 원리를 성공적으로 실천한 드문 예에 속한다.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

13) https://www.hrw.org/sites/default/files/world_report_download/wr2017-web.pdf

14) 칠레 형법에 의하면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교도소가 아니라 자택이나 병원 등에서 연금 상태로 지내게 된다.

15) 이에 앞선 2003년에 라고스 정부는 군사쿠데타 30주년을 맞이하여 하라가 살해된 “칠레 경기장”(Estadio Chile)의 명칭을 “빅토르 하라 경기장”(Victor Jara Stadium)으로 바꾸었고 그를 추모하는 기념관을 조성하였다.

16) 최근 국제사면기구(AI)와 Human Rights Watch와 같은 국제 인권NGO들은 1978년 특별사면법의 존치,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침해 가담자들에 대한 상급법원의 형량 경감과 불기소 처분 등으로 칠레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정의를 수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Human Right Watch의 2017년 World Report 참조.

하였던 칠레의 불안한 이행을 감안해본다면 칠레가 이룩한 성과는 더욱 값진 것이라고 하겠다.

첫째, 1991년의 “레티그 위원회, 1999년의 ”인권원탁회의“ 그리고 2003년의 ”발레크 위원회“ 등 20 여년에 걸쳐 계속된 진실규명 작업을 통해서 17년 군부독재 기간 중 광범위하게 자행된 국가테러와 인권유린의 가해자를 분명히 적시하였고, 마침내 가해세력인 군부가 자신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정치적 속죄”(political mea culpa)를 이끌어내었다. 이로서 칠레는 군부의 정치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법적, 윤리적 보호막을 구축하여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인권유린의 피해자들은 부당한 증언을 통해 기억을 공유하고, 자신들의 고통을 치유받고, 사회적 화해의 장으로 나갈 수 있었다.

둘째, 이행기 초기의 불처벌 장벽을 부단한 노력으로 극복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사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형사적 정의”(criminal justice)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였다. 국내법에 의해 처벌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제인권법이나 인권협약 등을 동원하여 처벌의 법리적 근거를 축적하였으며, 피노체트 체포 등으로 확장된 정치적 기회를 적절히 이용하여 사법부의 인적 쇄신과 헌법의 개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군부독재의 유산을 효과적으로 청산하였다. 반인권 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결과적으로 이행기 이후 칠레의 인권 신장과 사회발전으로 연결되었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화해와 사회통합을 견인하였다. “어제 없이 내일 없다”는 라고스 대통령의 구호처럼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과거지향이 아니라 “미래지향성”을 담보하는 과정임을 칠레의 과거청산 사례가 잘 보여준 것이다(Teitel 2001).

셋째, 이런 성취들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행기 정의 실천을 위한 시민사회의 부단한 노력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특히 칠레의 인권단체와 피해자 단체들이 지난 40년간 이어온 “법정투쟁”은 매우 인상적이고 감동적이다. 비록 특별사면법 등 불처벌 장벽에 막혀서 이러한 법정투쟁은 초기단계에서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향후 진행될 사법처리를 위한 각종 증거 자료를 축적하고 가해자 처벌의 법리적 근거를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법정투쟁을 통해 시민사회는 군부독재 시절의 국가테러와 인권탄압에 대한 집단기억을 일깨우고 과거청산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아가 칠레의 인권단체는 피노체트의 런던 체포를 계기로 국제사면기구 등의 국제 인권NGO와 범미인권법정(Inter-American Human Rights Court) 등과 같은 국제인권기구들과 일종의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칠레의 이행기 정의 실천을 추구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비록 우리와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칠레의 성공적인 이행기 정의 실천 사례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 작업의 방향과 실천전략이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1) 앞으로 진행될 진상규명 작업은 새롭게 밝혀질 인권침해 범죄와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비검토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칠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진실”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늘 동행해야 한다는 이행기 정의 실천 원칙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범죄행위가 새롭게 드러났는데 공소시효 소멸 등이나 적용 법률의 부재로 그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면 진실규명의 의의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2) 칠레의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그렇게 한 것처럼 5·18진상규명위원회 역시 광주항쟁 기간 중 광범위하게 자행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있어야 한다. 총기 및 구타에 의

한 사망과 부상뿐만 아니라, 항쟁 기간 및 그 이후의 재판과 수감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모든 종류의 폭력, 고문, 불법감금, 약식처벌, 납치, 회유, 성폭행, 시신 유기와 훼손, 암매장, 피해자의 PTSD, 자해, 자살 등 2차 피해를 포함한 광범한 인권유린 조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도에 반한 범죄” 행위를 기획하고 현장에서 실행하고 방조한 상부 세력을 분명히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조사에 기초하여 가해자를 다시 소환하여 증언과 자백을 듣고 가해자에게 새로운 “속죄의례”(mea culpa)를 요구해야 한다.

(3) 칠레의 사례처럼 한국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피해자 집단뿐만 아니라, 인권과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합의한 한국 시민사회 전반의 관심과 감시, 정서적 연대, 정책적 조언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이러한 참여의 확대는 명분에만 호소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광주의 5·18 관련 집단이 이익단체적 자기중심주의와 협애한 지역주의를 탈각하고 인권과 정의 구현을 위한 보편적 연대의 정신에 충실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광주의 시민사회는 자신들과 비슷한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는 외부의 소수자 및 약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5·18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장하고 결속의 고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광주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의 진실과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사회발전에 기여 하는 초석임을 부단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 최용주, 2018, “불처벌을 넘어서: 아르헨티나 이행기 정의 실천과 시사점”, 5·18기념재단 연구보고서
- Acuña, C., 2006, “Transitional Justice in Argentina and Chile. A Never Ending Story”, in J. Elster ed., Retribution and Reparation in the Transition to Democracy, Cambridge Univ Press
- Bakiner, O., 2010, “From Denial to Reluctant Dialogue: The Chilean Ministry’s Confrontation With Human Rights (1990-2006)”,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4.
- Brett, S., 2008, The Pinochet Effect, Universidad Diego Portales
- Collins, C., 2010, Post-Transitional Justice: Human Rights Trials in Chile and El Salvador, Pennsylvania State Univ Press,
- Fuentes, C., 2012, “The Unlikely Outcome: Transitional Justice in Chile, 1990-2008”, in Popovski, V. & M. Serrano, eds., After Oppression: Transitional Justice in Latin America and Eastern Europe,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 Jelin, E., 2011, State Repression and the Labors of Memory, Univ of Minnesota Press
- Garretón, M. A., 1996, “Human Rights in Democratization Processes”, in E. Jelin and E. Hershberg eds., Constructing Democracy: Human Rights, Citizenship, and Society in Latin America, Westview
- Hayner, P., 2011, Unspeakable Truths: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Challenge of Truth Commissions, Routledge
- Huneus, A., 2010, “Judging from a Guilty Conscience: The Chilean Judiciary’s Human Rights Turn”, Law and Social Inquiry, 35(1)

- Huntington, S.,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Univ of Oklahoma Press
- Keck, M. & K. Sikkink, 1998,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Cornell Univ Press
- Linz, J. & Alfred Stepan,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acAdam, D. et al., 2001. *Dynamics of Contention*, Cambridge Univ Press
- McSherry, J., 2016, "The Victor Jara Case and the Long Struggle Against Impunity in Chile", *Social Justice*, 41(3)
- O'Donnell, G. & P. Schmitter,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Johns Hopkins Univ Press
- Ropp, S & Sikkink, K., 1999,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Politics in Chile and Guatemala, in Risse, T et al. eds.,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Cambridge Univ Press
- Roth-Arriaza, N., 2006, *The Pinochet Effect: Transitional Justice in the Age of Human Rights*, Univ of Pennsylvania Press
- Popovski, V. & M. Serrano, eds., 2012, *After Oppression: Transitional Justice in Latin America and Eastern Europe*,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 Sikkink, K., 2011, *The Justice Cascade: How Human Rights Prosecutions are Changing World Politics*, W.W. Norton & Company
- Sikkink, K., 2004, *Mixed Signals: U.S. Human Rights Policy and Latin America*, Cornell Univ Press
- Teitel, R., 2000, *Transitional Justice*, Oxford Univ Press
- Wilde, A., 1999, "Irruption of Memory: Expressive Politics in Chile's Transition to Democracy",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31(2)
- Wright, T., *Impunity, 2014 Human Rights, and Democracy: Chile and Argentina, 1990-2005*, Univ of Texa Press
- Wyndham, M. & Read, P., 2010, "From State Terrorism to State Errorism: Post-Pinochet Chile's Long Search for Truth and Justice", *The Public Historian*, 32(1)

■ 토론문

「불처벌을 넘어서: 칠레의 과거사 청산과 교훈」

김정환(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이 논문은 칠레의 과거사 청산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주요 특징들과 교훈을 도출하고 있으며,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1. '이행기 정의' 개념에 관하여

칠레의 사례를 통해서 '이행기 정의'의 핵심이 사법적 처벌에 있다는 점을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행기 정의라는 개념 자체는 특정한 민주주의론을 전제하는 한계가 있다. 즉 군부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나면 민주주의는 역전 불가능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화 과정의 단계론이면서 '역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지난 2016-17년 촛불항쟁 당시 기무사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것을 잘 알려져 있고, 이 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후퇴하는 과정을 경험한 바 있다. 이행기 정의에서 전제하는 민주주의론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모습과 부합하지 않는다. 역사적 시기 구분과 관련해서도 과거 청산과 정의 실현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전체 기간이 사실상 이행기가 되기 때문에 이행기가 장기간이 되거나 오늘날에도 이행기라고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 또한 과거청산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중적 압력이 필수적인데, 이행기 정의라는 용어는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의 취지와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이행기 정의라는 개념이 아닌 다른 용어로 제시할 수는 없는지 고민이다.

2. 국제적 해결 방안에 관하여

칠레의 사례처럼 5.18과 관련해서 진상규명과 사법 처벌이 함께 가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논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사례에 대한 논문에서는 '국가에 대한 범죄'와 '시민에 대한 범죄'를 구분하고, 5.18의 경우 내란죄 등 '국가에 대한 범죄'는 처벌했지만 잔혹한 폭력과 인권 유린 등 '시민에 대한 범죄'는 처벌하지 못했다고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5.18의 학살 자들에 대한 국내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국제인권법 등을 국내 사법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은 현 시점에서 불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국제형사재판소처럼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제소한다고 해도 실제로 기소되지는 못할 수 있지만 국제적 여론을 전환시키고 국내 정부와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3. 가해자 협력에 관하여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해도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암매장, 성폭행 등 더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들을 정부와 군의 문서들로 확인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5.18 관련 자료들이 5공화국과 6공화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유실, 왜곡되기도 했다. 희생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진술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진상규명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가해자들(또는 가해자 쪽이라고 가정된 사람들)의 증언이 아닐까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가해자 협력에 관해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이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가해자의 증언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해 혹시 연구자로서 먼저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듣고 싶다.

4. 과거사 진상규명 및 기념 작업에서의 연대에 관하여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활동가들을 만나면 5.18은 그래도 다른 사건들에 비해 진상규명이 많이 된 경우라는 말들을 듣게 된다. 얼마 전 소속 연구소에서 사북항쟁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어 사북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당시 사북항쟁에 참여하신 분이 우리도 5.18처럼 똑같이 신군부에게 당했는데 우리는 기념사업회도 만들지 못하고 진상규명의 진전 없이 매년 기념식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원망어린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들은 5.18은 진상규명 많이 했으니 그만 하라는 뜻이 아닐 것이다. 우리도 좀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5.18과 관련된 정의를 세우는 작업이 광주만이 아니라 사북 등 다른 항쟁이나 사건, 인권 범죄들을 함께 다루고 해법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것이 일종의 기억의 연대일 것인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한다.

주술적 홀림과 망령들의 재현: 5·18항쟁 과거청산에 관한 연구노트

김형주(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너희 칼 쥐고 총 가진 자들
싸늘한 주검 위에 찍힌 독재의 흔적이
검붉은 피로, 썩은 살로 외치는구나

더 이상 욕되지 마라
너희 멸사봉공 외치는 자들
압제의 칼바람이 거짓 역사되어 흘러도
갈대처럼 일어서며 외치는구나
(정태춘, '일어나라, 열사여' 중에서)

1. 망자들의 유언과 산자들의 몸부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죽은 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죽은 자는 무슨 말을 하는가? 공포, 불안, 억울함, 분노, 슬픔, 회한, 고통, 경련, 부릅뜬 눈과 벌어진 입 그리고 혀. 5·18항쟁 이후 죽은 자의 찢겨진 몸은 들을 수는 없었지만 알 수는 있었던 유언을 산자들에게 각인시켰다. -그 유언은 ‘무엇, 무엇’이었다. 산자들은 죽은 자의 목소리를 산 공간에 투영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들은 죽은 자의 원혼을 달래는 것과 동시에 ‘폭도’와 ‘불순분자’라는 망령을 내쫓는 푸닥거리에 나섰다. 침뱉기와 쫓아냄. 그들은 치졸하고 비겁한 존재들에게 자욱한 최루탄 가스 속에서도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가래침을 뱉었다. 그것은 분풀이자 원풀이었으며 살풀이었다. 그것은 오직 항쟁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의 ‘객기’가 아니었다. 망월동에서 망자들의 선홍빛 피비린내와 산자들의 울음이 진동할 때마다, 광주도 몸을 떨었다.

이른바 ‘5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이 쟁투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가로지르는 시대운동이었다. 자식을 잃은 ‘엄니’들은 망월동에서, 경찰서에서, 법원에서, 국회 앞에서, 청와대와 연희동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거리와 거리에서 오열하고 절규했다. 유족들은 온갖 기관의 회유와 협

밖에 시달려야만 했고, 대통령이나 정부요인이 광주를 방문할 때면 경찰이 집에 상주해 밖을 나갈 수조차 없었다. 심지어 그들은 경찰서에서 감금되거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전국의 절과 골짜기로 끌려가 버려졌다. 구속자와 부상자들도 망자들을 위해 추모제를 열고, 진상을 규명하고, ‘살인마’를 고발했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들이 밀었으며, 끊임없이 끌려갔지만 멈추지 않았다.

학생들도 유족들의 눈물에 동참해 잡혀가고, 분신하고, 열을 짓고 돌진했다. 80년대와 90년대 대학가의 최대화두는 5·18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다. 학생들은 유인물을 이용해 광주의 진실을 알리거나 목숨을 던져 5·18항쟁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에 경종을 울렸다. 초창기 유인물을 이용한 산발적인 시위는 점차 조직적으로 발전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각 대학의 학생들은 총학생회를 건설하고 이를 전국적인 학생연합조직으로 발전시켰으며 광주학살자구 탄압회와 ‘전·노 체포결사대’를 조직하는 등 쉼 없는 투쟁에 나섰다. 시민들 역시 투쟁의 행렬에 동참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직을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활동과 기념사업에 나섰다. 5·18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여나갔다. 이들은 연대조직을 구성해 범국민 저항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망자들의 유언 ‘무엇, 무엇’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배상, 명예회복, 정신계승’이라는 5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¹⁾ 그리고 기나긴 5월 운동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1995년 12월 19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5·18항쟁에 대한 제도적 청산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선 것이다. 이후 5·18항쟁은 1997년 국가에 의해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망자들은 망월동 구(舊)묘역에서 새롭게 단장된 신(新)묘역으로 이장되었고, 국가는 유족들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를 유공자로 지정함으로써 명예를 회복시켰다. 이로써 5·18항쟁에 대한 제도적 청산작업은 어느 정도 완결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5·18은 격렬한 다툼과 불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군화발과 곤봉, 대검과 총탄으로 피 칠갑된 5월의 원혼은 온갖 아귀다툼 속에서 비아냥과 조롱으로 떡칠되었다. 비겁하고 야비한 자들의 음흉한 미소와 히죽거림,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단말마적 분개와 절규, 그리고 한숨 섞인 무시와 체념. 지금 5·18은 어디에 있는가?

이 글은 5·18항쟁에 대한 제도적 청산작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끊임없이 반복되는 국가 폭력과 5·18왜곡·왜곡을 극복하고 과거청산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쓰여 졌다. 5·18항쟁 과거청산에 관한 연구들은 “과거청산의 기본원칙 및 그 실천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거청산의 쟁점과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제시한다(한인섭, 2002). 그리고 5·18항쟁에 대한 “청산작업은 진상규명 없는 보상을 거치며 일그러져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기 보다 “반면교사”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이광일, 2004). 또한 과거청산 작업의 모델이 되었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과거청산 작업을 대상으로 이행기 정의 및 그 한계에 대해 검토”하면서 트라우마 문제가 과거청산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최정기, 2006). 첫 번째 연구가 5·18과거청산을 어느 정도 평가하면서 과제를 도출하고 있는 반면, 두 번째 연구는 청산작업을 부정적으로 평가

1) 1993년 봄 광주지역의 시민사회와 5·18단체들이 1박 2일 동안 치열한 토론 끝에 ‘5월 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을 정했다(김양래, 2016: 16).

하고 있으며, 세 번째 연구는 법적·제도적 청산과정과는 별개로 사회적 청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5·18항쟁의 과거청산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보다 세밀한 접근을 통해 청산작업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 5·18사법처리와 법제화 과정을 구분하여 분석하거나(이영재, 2004), 피해보상을 중심으로 “광주보상법과 민주화보상법등 대표적 피해보상 모델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사법부의 국가배상 기준과 대비하여 고찰”하여, 피해보상이 “배상적 정의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이영재, 2010). 또한 피해보상이 “제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동의구조의 형성 배경과 맥락, 법률에 근거한 국가 보상제도의 등장 이전과 이후의 연속성과 차이, 보상제도의 운영 주체가 지닌 특성, 제도적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정호기, 2006). 연구들은 과거청산이 “민주주의, 인권(생명권), 평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사회적 지층에서 확립했을 때 비로소 미래를 향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피해배상에서는 “사회적 반성과 성찰”이 동반되어야 하며, “과거청산 작업을 위한 충분한 조건과 지원 그리고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5·18과거청산 과정에 대한 한계를 비교적 뚜렷하게 제시하고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적 청산,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제도적 과거청산이 생산한 효과들은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청산과정의 문제와 한계에만 주목한 나머지 청산작업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그리하여 그것이 어떻게 청산작업에 역작용하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관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과거청산작업의 의미와 그것이 생산한 효과를 분석하고, 과거청산의 목적과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물음들과 맞닿아 있다. 국가가 5·18항쟁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고 명예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5·18항쟁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일까? 국가는 왜 5·18항쟁과 같은 유사한 사례, 예컨대 국민들의 저항(평화적 저항과 격렬한 저항까지 포함하여)에 대해 끊임없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려는 것일까? 혹시 5·18항쟁 해결을 위한 5원칙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국가 주도의 청산작업이 어떤 효과를 생산했기 때문은 아닐까? 사실이라면 그것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이 글은 국가주도의 5·18항쟁 과거청산 작업을 검토하고 이를 항쟁 당시 사망자의 목소리를 빌어 근본적으로 재성찰한다. 망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함은 그들이 5·18항쟁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이며, 현재 청산작업의 어떤 교착 상태 혹은 역행을 극복할 무언가가 그들의 목소리에 담겨 있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청산작업도 망자들의 유지를 받은 산자들의 투쟁의 결과물이었다. 이 글은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과거청산의 방향과 방식을 재성찰해 보자는 것이다. 이 글이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5·18항쟁 과거청산 과정은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둘째, 5·18항쟁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셋째, 5·18항쟁 과거청산 작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

2. 과거청산이라는 ‘정화’의식과 ‘염승(厭勝)’²⁾

1) 정형화와 단순화

5·18항쟁에 대한 과거청산은 폭력을 행한 국가, 정확히 말해 신군부 출신 대통령이 당선된 후 행해졌다. 신군부 출신 장군은 대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으나 국민들의 저항을 무시할 수 없었다. 5·18항쟁에 대한 국가차원의 논의는 1988년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구성에서 시작되었다. 민주화합추진위원회는 “‘광주의 학생·시민들의 민주주의적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하였다. 정부는 재정보조, 의료서비스, 기념물 건립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해서는 함구했다(한인섭, 2002: 191-192). 이 후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청문회와 검찰수사, 법률제정과 조사위원회를 통해 5·18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국가차원의 제도적 청산과정³⁾

구 분	방 식	내 용	주 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청문회	1988-89년 제13대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및 청문회	국 회
	검찰수사	1994년-95년 검찰 수사: 12.12쿠테타 ‘기소유예’ 5·18‘공소권 없음’	사법부
	검찰수사	1996년 전투환 등 5·18핵심관련자 기소	사법부
	법률제정	1995년 12월 2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국 회
	법률제정	1995년 12월 21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국 회
	검찰수사	1996년 1월 18일 12.12와 5·18 기소	사법부
	법원판결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두환 무기, 노태우 17년	사법부
	정부조사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조사	행정부
	정부조사	2017년 국방부5·18특별조사위원회	행정부
	법률제정	2018년 3월 13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 회
피해배상과 명예회복	법률제정	1990년 8월 6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2006년 3월 24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국 회
		2002년 1월 26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2004년 1월 20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국 회

2) 불리하게 작용하는 강한 힘, 또는 기운을 누르거나 꺾기 위한 주술. 조선시대에도 위로는 궁중에서부터 아래로는 민간에 이르기까지 염승에 의지하는 일이 많았다. 염승의 목적은 다양하였다.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영웅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도 염승을 했고, 죽은 자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그의 무덤에 염승을 했으며,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도 염승을 했다. 심지어 국가에서도 가뭄이 계속될 때는 북 치는 것을 금지했는데, 그것은 북소리로 말미암아 북돋아질 수 있는 양기를 누르기 위해서였다(조선왕조실록전집)

3) <표 2-1>은 한인섭(2002), 노영기(2017)의 논문과 국가기록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가법령센터, 신문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구 분	방 식	내 용	주 체
정신계승	기념일 지정	1997년 5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	행정부
	기념식 참석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참석	행정부
		2003년-2007년 노무현 대통령 참석	행정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참석	행정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참석	행정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참석	행정부

<표 2-1>에서 보듯이, 5·18항쟁 과거청산은 5원칙에 비추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국회청문회, 검찰수사와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 법제정 등을 통해 진행되었고,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은 보상 법률과 유공자예우 법률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신계승은 국가차원의 기념일 지정과 기념식 마련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진상규명에 관한 활동은 1988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광주특위)의 조사로 출발하였다. 청문회는 1988년 11월 18일부터 99일간 총19회 개최되었으며 64명의 증인이 나와 증언했다(김영택, 2017: 671-672). “청문회에서는 학살만행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날선 공방이 전개되었다. 이 실황은 각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으며,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나간채, 2012: 145). 청문회는 최초로 ‘광주사태’를 공론의 장으로 소환했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끝맺음을 하지 못함으로써 미완의 과제만을 남긴 채 종결되었다. 다음으로 2000년대에는 진상규명 활동이 주로 정부차원의 조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5·18재판기록과 군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현역 군인과 전역한 민간인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5·18항쟁은 “신군부가 권력 획득을 위해 군을 사조직처럼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노영기, 2017: 207). 2017년에는 ‘국방부5·18특별조사위원회’가 5·18항쟁 당시 헬기사격 의혹과 전투기 출격 대기설의 실체에 대해 접근했다.

둘째, 책임자 처벌은 검찰과 법원의 사법처리를 통해 이루어졌다. 1994년 5월 13일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 관계자 294명은 전·노씨와 책임자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한인섭, 2006: 83). 하지만 검찰은 1994년 말에 12.12쿠데타에 대하여는 군 형법상 반란죄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1995년에는 5·18에 대해 내란적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공소권 없음’이란 처분을 내렸다(한인섭, 2002: 191-192). 이 같은 결정은 곧바로 국민들의 격렬한 비판에 직면했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압박에 떠밀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법률을 통해 내란죄와 반란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게 되었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법원이 재판을 통해 기소를 강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수사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한인섭, 2002: 194). 이 과정을 통해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주요임무종사자는 3년 6월부터 8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책임자 처벌이 종료되었다.

셋째, 피해배상의 법적 기반은 1990년 8월 17일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 법은 2006년 3월 24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

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 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령센터, 보상법 제1조). 이 법에 따라 1990년 피해자에 대한 1차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1993년에 2차 보상, 그리고 2014년 현재까지 7차에 걸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명예회복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령센터, 유공자법 제1조). 이에 따라 5·18항쟁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고, 유족과 가족은 교육, 취업, 의료 등의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정신계승은 1997년 5월 국가가 ‘5·18민주화운동’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면서 공식화되었다. 또한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발언하고 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전 기간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각각 취임 첫해에 기념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묵념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5·18항쟁 희생자를 기리고 있다.

국가에 의해 진행된 과거청산은 하나의 정형화된 의례였다. 그것은 고도로 체계화되고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산자들의 몫과 목소리를 하나하나 탈각시켜 나갔다. 피의자들은 사법처리 과정에서 정교하고 기만적인 논리를 생산했고 정치적 타협으로 소생했다. 제정된 법률은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산자들의 무형의 고통을 유형의 수치로 계산하고 측정될 수 없는 고통은 외면했다. 그리고 기념의식은 대단할 것 없는 엄숙함으로 산자들이 뿜어내는 생기를 억눌렀다. 결국 산자들이 집약시킨 광주해결 5원칙은 국가의 체계 안에서 단순화되었다. 항쟁이 담고 있었던 무수한 ‘무엇’이 소멸되고 특정 형태만이 남아 화석화되었다. 사실 항쟁은 구조적, 정치적, 윤리적, 상황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거기에는 공적 목적과 사적 경험, 이성과 감정이 모두 뒤섞여 있었다. 때문에 몇 가지 형식적인 절차로 단순화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항쟁에서 살아남았으나 말하지 못한 자와 살아 끊임없이 외쳤던 자 사이의 간극을 벌려놓았다.

2) 정화-소독-결박

국가에 의한 과거청산은 비단 산자들 사이의 간극만을 벌려놓은 것은 아니다. 과거청산은 5·18항쟁을 ‘정화’된 것으로, 오염되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고 숭고한 것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이때의 정화는 장수가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몸을 씻는 정화도, 제사장이 죽은 자를 위해 제를 지내기 전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정화도 아니었다. 장수나 제사장의 정화는 자신의 더러움을 씻고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5·18항쟁 과거청산에서 정화는 국가 자신의 더러움을 씻는 행위라기보다 상대방, 즉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의 더러움을 씻는 행위였다. 보상과 유공자대우, 기념사업은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으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요원한 것이 이의 방증이다. 국가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척 했으나 진상에 다가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처벌의 수위와 폭은 매우 좁았으며, 그마저도 화해와 상생이라는 이름아래

사면되었다.

또한 청산의 와중에도 국가는 저항운동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는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여부와는 상관없이, 즉 정부의 과거청산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우자동차, 부안방사능폐기장, 광우병쇠고기춧불, 용산과 쌍용차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저항운동이 방패와 곤봉아래 짓밟혔다. 과거청산 작업이 국가가 행한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면, 이때의 폭력은 매우 당혹스러운 것이다. 한쪽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자들을 기억·기념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반복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정화는 사실 ‘소독’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통제 불가능한 신체들을 줄 세워 약을 뿌리고 관리의 세계로 인입시켰다. 이 행위는 대단히 거칠고 우악스러웠고, 또 다른 비참함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통해 국가는 복종을 강제했다. ‘그러기에 왜 그랬는가?’, 염을 해주시긴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말라’라는 압박이 가해진 것이다. ‘내가 시혜를 베풀어 너를 닦아 주었으므로 너는 용서받았고, ‘정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처음에 국가는 이런 신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국가는 이미 ‘짜증’나 있었다. 소위 ‘재수 없게 걸려들었다’는 것이다. 과거청산의 지난하고 지지부진한 과정이 이를 증명한다. 즉 다른 사건(한국전쟁, 4·19, 부마항쟁 등)은 별 말없이 잘 넘어갔는데, ‘귀찮게 됐다’는 것이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것이 공개가 돼서 문제가 커졌다.’ ‘내가 이를 감추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따라서 5·18은 더더욱 소독해서 치우고 잠잠하게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폭력행위를 가한 당사자들의 잘못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확히 말해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는 사과했으나 ‘본인’은 사과하지 않았다.⁴⁾ 그 혹은 그 세력의 반성이나 참회는 온대간대 없고 결정과 명령만 있을 뿐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보수권력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왜? ‘네가 계속해서 떼쓰고 징징되니까.’ 그러니까 ‘그만 하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본인’의 작태와 그에 동의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야단법석은 이에 근거하고 있다. ‘그만큼 해줬으면 됐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뭘 해줬는가? 보상했고 유공자로 지정했으니 된 것인가? 그런데 진상규명은? 책임자 처벌은? 게다가 해준다니, 네가?’ 이것은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과 고통에 시달렸던 희생자와 국민 일반 다수의 정서와는 상당히 상치된다. ‘해주지 말고 와서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라.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라. 계속. 내가 용서할 때까지.’

문제는 이런 피해자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과거청산작업’을 통해 보수 세력의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적어도 절차상 5·18항쟁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고,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했으며,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가슴을 헤집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애초의 목적과는 전혀 상

4) 1988년 11월 23일 전두환은 “광주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성명을 내고 백담사로 향했으며, 1989년 12월 31일 다시 국회 5공 비리 및 광주특위 청문회에 나와 “군 작전지휘에 개입한 적이 없다” “재임기간에 광주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증언을 하고 백담사로 돌아갔다(김영택, 2017: 673). 이후에도 이 같은 언사는 반복됐다. 나아가 2017년에는 회고록을 출간해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 혹은 ‘폭동’이라고 명명하고 학살이나 발표명령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중앙일보, 2017.04.04).

관없이 다만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과거청산이라는 정화의식은 빠져나올 수 없는 주술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주술에 결박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박은 또 다른 역전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3) 태극기와 태극기

역전된 효과의 분명한 예는 ‘태극기’에서 찾을 수 있다. 5·18항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상징물은 ‘태극기’였다.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었고, 시민군은 태극기를 군용차에 매달았으며, 망자들은 태극기에 덮였다. 그리고 5·18항쟁이 40여년 지난 오늘도 시민들은 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움켜쥐고 대한민국 ‘수호’를 외치고 있다. 전자는 태극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하지만 후자는 대한민국 ‘수호자’임을 자처한다. 전자는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죽이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후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죽임에 단호하다. 두 태극기 모두 죽음을 불사하지만 죽음으로써 되찾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상은 다르다. 두 태극기 모두 어떤 집단에 속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들이 속해 있다고 믿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대단히 상이하다.

이런 상이함은 ‘반공’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처음에 5·18항쟁은 ‘폭도’, ‘불순분자’의 폭동으로 규정되었기에 자칭 ‘대한민국 수호자’의 눈에 그에 대한 과거청산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 같은 분노의 선을 따라 ‘폭도’와 ‘불순분자’는 ‘북한군’으로 진화했다. 반공을 외치는 대한민국 수호자에게 Ctrl+C와 Ctrl+V는 불충분했다. Ctrl+A와 Ctrl+V, 전체복사로 팔려오는 수많은 ‘부유물들’, 이미지와 URL코드가 5·18항쟁에 대한 왜곡을 확대재생산했다. 자신들이 지지했던 정부마저도 5·18항쟁을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내가 뭐가 되는가? 내가 그것을 인정한 순간 나란 존재는 없어지고, 나는 순식간에 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내 가족, 자식, 손자들을 위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야 말로 조국을 위한 희생자인데 어떻게 내가 경멸했거나 공격했던 저들이 나와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5·18항쟁을 직접 겪었거나 혹은 겪지 않았던 수많은 산자들의 기나긴 5월 운동은 국가 차원의 청산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위세를 떨쳤던 ‘북한군 침투설’이 힘을 잃어 갈 무렵 ‘유공자 공세’가 시작되었다. ‘상무총정작전’과 같은 시나리오라도 있는 것일까?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이 무장하자 후퇴하여 외곽봉쇄로 전환하고 시민들을 고립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5·18항쟁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사회적 삶을 옥죄기 시작했다. 5·18항쟁에 대한 과거청산의 성과물이 다시 과거청산을 발목 잡고 있는 트집거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청산이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다면 불가능할 일이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과거청산은 어떤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까?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망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3. 혼령들의 재림, 망자들이 생전에 남긴 말과 사후의 육신⁵⁾

1) “같이 살자고 한 것이다...”

죽은 자는 이미 세상을 떠나 망월동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의 말을 듣기란 불가능하다. 다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과 사후 몸의 상흔에서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바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그들의 마지막 말을 살펴본다.

<표 3-1> 사망자들의 마지막 말 1

구 분	성 명	마지막 말
계엄군에 대한 분노	황**	“아버지 제 친구가 죽었어요. 공수부대 놈들이 친구를 죽였어요.”
	강**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당가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고 징하게도 두들겨 팬당게요. 참말로 나쁜 놈들이요.”
계엄군에 대한 일말의 기대	김**1	“학생도 아니고 나이 목은 사람한테 별일이야 있겠소. 얼른 갔다가 올라요.”
	김**2	“야, 우리가 데모한 것도 아닌디 뭘 일이야 있겠냐? 안 그냐?”
	박**1	“저는 중학생이에요. 동신중학교 3학년이에요. 데모 안 해요.”
	박**2	“나는 당신들에게 저항할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무기도 없습니다.”

<표 3-1>에서 보듯이 사망자들은 계엄군의 살육적인 진압에 분노하거나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섰다가 희생되었다. 황**과 강**은 계엄군이 친구를 죽였거나, 시민들을 무참하게 두들겨 패는 모습에 분노했다(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1235; 5·18민주유공자유족회b, 2005: 201).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들은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왔다. 한편으로 사망자들은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진압에 잘 알지 못했거나 자신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밖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는 곧 계엄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신은 ‘데모대’도 아니고, 어리며, 무기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일 없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달리 계엄군들은 이들을 무참히 학살했다. 특히 박**1은 중학생으로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날 계림동 책방에서 책을 사서 나오다 계엄군에게 낚아 채였다. 계엄군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려는 박**을 ‘데모꾼들 연락책’으로 의심된다며 진압봉으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5·18민주유공자유족회a, 2005: 54-55;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1243). 박**2 역시 시골로 농사일을 도와주러 가다가 계엄군에게 붙잡혀 총살당한 후 군화발과 개머리로 두들겨 맞았다(5·18민주유공자유족회 b, 2005: 54-55).

한편으로 다른 사망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계엄군에 대한 분노나 기대보다 자신의 가족과 이웃 등 공동체에 관한 것이었다. <표 3-2>는 이들이 보여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다. 사망자들은 계엄군에게 두들겨 맞고, 끌려하고, 죽어가는 광주시민들과 가족들을 걱정했다.

5) 망자들의 마지막 말과 시신의 모습은 유족들과 지인들이 기억을 더듬어 재구성한 것이다. 참고자료는 아래와 같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엮음. (2005).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1.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엮음. (2005).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1. 5·18기념재단”,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표 3-2> 사망자들의 마지막 말 2

구분	성명	마지막 말
이웃에 대한 애정	안**	“근디 한 번 나가봐야 쓰지 않겠냐? 사람들이 겁나게 모인갑드라.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야 그 처죽일 놈들 몰아낼 것이 아니냐.”
	윤**	“그래야? 그믐 나도 나가봐야겠다. 나도 두들겨 맞았는데 나가봐야제.”
	이**1	“아버지, 학교 정문에서 제 친구들이 얼마나 맞고 다친 줄 아십니까? 그놈들의 진압봉에 학생들이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고 끌려갔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다는 말 입니까?”
	한**	“친구들을 놔두고 갈 수 없어요. 오전에만 있다가 오후에 들어갈게요.”
	문**	“도청 상황실인데, 초등학교 동창인 양창근이가 총에 맞아 죽었고, 또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나는 여기서 심부름이라도 하고 지내겠어요”
	강**	“시방 광주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네. 고속버스가 광주로 다시 들어간당개는 내가 운전을 해줘야 할 것 같어. 엄마, 걱정하지 말고 있으소.”
	박**	“아저씨, 헌혈하러 가는 길인데 저도 병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가족에 대한 걱정	임**	“엄마! 위험해요. 오지 마세요!”
	조**	“우리들은 다 군대 갔다 왔으께 걱정말고 얼릉 당신이나 애들 텔고 피해.”
	선**	“위험허단 말이요. 공계 얼릉 들어들 갑시다. 아, 어서요.”
	민**1	“아버지, 시내에서 막 최루탄을 쏘고, 군인들이 사람들한테 무섭게 달려들디다. 아버지도 조심해서 땡기셔야겠어라. 겁나 무섭드랑게요.”
	민**2	“공수부대들이 총을 쏘서 사람들을 막 죽인당개요. 밖은 겁나게 위험헝께 절대 밖으로는 나오지 마시오. 알았지라.”
	황**	“거기 서 있으믄 안 된단 말이시. 얼릉 이리 오게. 앉아있어도 안 된게 모다들 었드려 있어라.”
	김**	“젊은 사람인께 행여 바깥에 함부로 나돌아다니지 말고 조심하라고 그래라.”
	류**	“식아, 오늘 저녁에 군인들이 다시 쳐들어온단다. 아무래도 오늘 삼촌은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 삼촌 자전거 타고 집에 가라. 그리고 오늘은 절대로 시내에 나오지 말아라. 형이나 누나도 나오지 못하게 해라 알았지? 얼른 가라.”
	이**2	“너는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부모님을 잘 모셔라.”

<표 3-2>에서 보듯이, 사망자들은 광주에 사는 이웃들과 자신의 가족을 걱정하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이중에 일부는 시위에 참여하다가, 그저 길을 건다가, 혹은 집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먼저 사망자들은 지인들과 이웃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죽어가는 공동체를 보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부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니 나가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었고, 일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들은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을 하고 차량으로 시민들을 실어 날랐으며, 총을 들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다. 특히 박**은 지나가는 차를 가로 막고 헌혈하고 싶으니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녀가 차량 기사에게 한 말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말이 되었다. 기독교병원에서 헌혈을 하고 나오던 박**은 공중에서 날라든 총에 머리를 맞아 비명횡사했다. 그녀의 나이 열여덟이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a, 2005: 147-148). 또한 문**은 1980년 5월 27일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아 있다 계엄군에 희생당했다. 그의 어머니는 몇 번을 찾아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사정했으나 그는 그곳에 남기로 작정했다. 그는 열일곱 고등학생이었다(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1268).

다음으로 사망자들이 남긴 말은 가족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었다. 사망자들은 가족들을 걱정해 그들을 우선적으로 피신시키거나 조심시키고는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세상을 등졌다. 그들도 자신이 먼저 떠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황**은 집 안에서 아이들을 붙잡아 마루에 엎드리게 하고 있는 참이었다. 그리고 열린 창문을 닫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5·18민주유공자유족회a, 2005: 358). 그리고 다른 일부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가족들에게 앞날을 당부하며 떠나갔다. 류**은 도청에 남았다가 계엄군이 닥치자 다시 빠져나오다가(5·18민주유공자유족회b, 2005: 395-396;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794), 이**은 전남대 정문에서 계엄군이 발포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전남대를 향해 운전해 가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5·18민주유공자유족회b, 2005: 45).

사망자들의 마지막 말은 폭력과 불의에 대한 항거, 군에 대한 약간의 믿음, 주변의 공동체에 대한 애정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계엄군의 폭력에 분노했고 그들을 몰아내려고 했다. ‘계엄령 해제’, ‘전두환 타도’, ‘김대중 석방’과 같은 5·18항쟁 당시의 구호는 그들의 심경을 모두 담지 못한다. 그들은 그저 ‘광주시민을 다 죽이는’ 계엄군을 몰아내고 서로 힘을 합쳐 이 ‘난리통’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들은 아비규환의 구렁텅이에서 단지 같이 살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형상’이 되어 가족에게 돌아왔다.

2)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소?”

5·18항쟁 최초의 희생자는 김경철이었다. 그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 구두땀이었다. 때문에 그는 말을 남기지 못했다. 그는 아침에 딸의 백일잔치를 하고 시내에서 일감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충장로 제일극장 골목 입구에서 갑자기 나타난 계엄군에 의해 두들겨 맞아 사망했다. 광주지방검찰청과 군 당국이 합동으로 작성한 김경철 시신 검시서에는 ‘후두부 찰과상 및 열상, 좌안상검부 열상, 우측 상지전박부 타박상, 좌견갑부 관절부 타박상, 전경골부, 둔부 및 대퇴부 타박상’이라고 적혀 있다. 뒤통수가 깨지고, 왼쪽 눈알이 터지고, 오른쪽 팔과 왼쪽 어깨가 부서졌으며 엉덩이와 허벅지가 으깨졌다는 의미다. 사망진단서에는 후두부 타박상에 의한 뇌출혈이 직접 사인이었다(황석영·이재의·전용호, 2017: 79-80).

말을 하지 못했던 김경철은 어떤 말도 남기지 못했으나 그의 죽은 몸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경철이 아니더라도 5·18항쟁 당시 사망한 수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몸에 무언가를 남기고 떠나갔다. 그것은 무엇이이었을까? 그들의 마지막 몸을 통해 그들이 남긴 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표 3-3> 사망자들의 마지막 몸⁶⁾

구분	성명	시신 상태
가	김**1	온몸은 곤봉으로 맞았는지 시퍼렇게 어깨와 이마에 멍이 들어 있었고 구뚫발로 짓이겼는지 발가락이 으깨져 있었다.
	조**	왼쪽 얼굴에 다발성 타박상 흔적이 있고, 양쪽 눈알이 모두 빠져버린 처참한 몰골이었다.
	김**2	얼굴 반쪽은 아예 없고 그나마 복구 근처까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김**3	머리가 터져 있고 등이 세 군데나 대검에 찢려 있었다.
나	이**1	머리에 총을 맞았는지 얼굴은 거의 없어져 버렸다.
	이**2	총이 뚫고 지나간 머리는 반쯤 쪼개져 나가고 없었다.
	박**1	얼굴에 총을 맞아서인지 얼굴 아래 부분이 아예 떨어져나가고 없었다.
	박**2	가슴이 뻥하니 뚫려 있었다.
	정**	가슴이 뺨 뚫려 있었다.
다	이**1	어깨에도 총을 맞아 피투성이고 혀가 입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다.
	이**2	얼굴에 두 발의 총탄을 맞아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문**	총알이 입속으로 관통했는지 입이 거의 뒤숭그려졌고 목과 머리 뒷부분에 구멍이 뚫어져 있었다. 또 왼쪽 가슴에 큰 구멍이 있었다.
	서**	복부 관통상을 당했고 허벅지도 총에 맞아 피를 흘린 채 죽어있었다.
	황**	얼굴은 맞아서 그렇게 되었는지 거무죽죽했고 하복부에 총 세 발 이 관통했다.
	장**	재철이의 눈, 어깨, 가슴, 무릎에 총을 맞은 자국이 있었다.
	전**	자그마한 아이의 허리에서 대퇴부 사이를 무려 여섯 발 이상의 총알이 지났다. 배와 다리 사이가 만신창이가 되어 재수는 즉사했다.
	박**	일곱 발의 총알을 맞은 것이다.
	고**	오른쪽 어깨는 다 타버린 듯했다. 양쪽 가슴에 난 총알 구멍. 그리고 얼마나 많은 총을 쏘았는지 아래쪽의 벌집 쑤셔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김**	가슴을 관통한 M16총탄은 그녀의 등에 12센티미터에 이르는 총창을 냈고, 하복부는 총에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표 3-3>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시신은 형체가 일그러져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구체적으로 ‘가’는 주로 곤봉에 의한 타박사를 보여준다. 곤봉에 의한 구타는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었다. 사망자의 신체는 머리와 얼굴을 비롯하여 온 몸이 곤봉에 의해 구타당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심지어 김**3은 등이 대검에 세 군데나 찢렸다(5·18민주유공자유족회a, 2005: 31). ‘나’의 경우 총상의 흔적을 보여준다. 죽은 자들은 몸은 총탄에 의해 처참히 망개졌다. 머리와 얼굴, 가슴을 맞은 사람들은 머리 한쪽이 날라 가거나 얼굴이 거의 없어지고, 가슴이 뺨 뚫려 있

6) 이 글은 사망자의 사인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시신의 형상이 말해주고 있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광주지검 검시조사서’에 나와 있는 ‘사체검안서’의 ‘신체적 상해장소명’을 언급하지 않는다. 표에서 언급된 내용은 유족과 지인들이 증언하는 시신에 대한 묘사이다. 정확한 사인은 ‘광주지검 검시조사서’ 참조.

었다.

‘다’는 ‘나’와 같이 총상의 흔적을 보여주지만 두 발 이상의 총탄을 맞아 시신이 난자당한 경우이다. 여러 발의 총탄을 맞았기 때문에 시신의 형상은 ‘나’의 경우보다 더 처참했다. 몸의 여러 곳에 구멍이 나 있었으며,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가슴과 하복부에 ‘별집을 쏘서놓은 듯’ 총탄이 집중되었다. 총상은 작은 총알구멍 하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머리에 맞은 경우 뒤통수가 뺨 뚫려 있어서 유족들은 부직포 뭉치로 그 부분을 메워야 했다. 게다가 유족들은 이미 시간이 흐른 뒤에 시신을 발견한 경우가 많았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거나 몸의 일부가 없는 시신들이 부풀어 올라 관이 짹짹 갈라지고 썩은 물과 핏물이 그 틈으로 흘러나왔다.

죽은 자의 형상은 계엄군의 잔악무도한 살육행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진압명령과 발포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계엄군의 살상행위는 너무나 과한 것이었다. 이 행위는 한국전쟁 시기 자행된 양민학살 그것과 같았다. 그렇게까지 무참히 죽여야 했을까? 계엄군의 광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시민들의 무장과 뒤이은 동료들의 죽음(그들 간의 오인 사격 포함)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시 학살의 역사적 경험이 면면히 상속되어 그들을 망동케 한 것일까? 그렇다면 그 광기와 악습의 구조를 깨야 한다는 것을 망자들의 몸이 말해주고 있다. 단순히 조사하고 법을 만들어 기념하고 보상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또한 시신의 흔적은 역설적으로 계엄군의 ‘광기’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와 ‘공포’를 보여 주기도 한다. 계엄군에게 있어서 시민들은 이미 자신들이 지켜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시민들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도’이자 ‘불순분자’였다. 그리고 여기에 사적 감정이 더해졌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군 생활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해를 가하고 심지어 동료들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인간들로 변모했다. 계엄군들 역시 시민들에게 분노했고 공포에 휩싸였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지 그들의 살육행위만이 부각되었을 뿐이다. 그렇다고 이 사실이 곧바로 계엄군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감정과 행위가 사망자들의 몸에 새겨졌다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4. 탈주술, 가라앉은 것들의 부상과 불가능한 화해를 위하여

이 글은 5·18항쟁 과거청산의 주술적 결박을 해체하고 망령들을 내쫓기 위해, 항쟁당시 희생자의 혼령들을 소환하여 어찌할 바모를 상황을 어찌해보려는 일종의 굿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청산작업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시신의 몸을 깨끗이 닦고 염을 하는, 몸을 낮춰 예를 표하는 행위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소독을 조건으로 배제된 자를 포함하는 행위이자 끊임없는 방역작업이었다. 야생의 울음을 지닌 산자들의 신체가 국가에 포획된 순간 산자들은 제도적 청산이라는 철창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 산자들은 그들이 내어 준 밥을 먹고, 그들의 기준을 따라야 했다. 애초에 산자들이 의도했던 과거청산의 충만함은 정형화되고 단순화되었다. 예컨대 망월동 신(新)묘역에서 추모와 묵념은 모든 것이 탈각된 허무와 같았다. 많은 것을 얻었으나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 반면에 망월동 구(舊)묘역에서 추모는 늘 뭔가 꿈틀거리는 것

이 있었다. 구(舊)모역은 언제나 미안함과 슬픔이 요동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과거청산과정을 거친 후 가슴을 진동케 했던 그 ‘무엇’은 사라지고 위압적인 경관과 엄숙함만이 남게 되었다. 그 와중에도 ‘우리’를 벗어난 신체들에 대한 국가의 사냥은 계속되었다. 5·18항쟁과 비슷한 유형의 폭력적 진압행위는 계속되었고, 국가는 폭력을 행사한 후에 진상을 조사하고 유감을 표하는 이상한 행위를 반복했다. 또한 총탄으로 별집이 된 망자들의 가슴은 대한민국 수호자를 자처하는 자들의 망언과 망동에 의해 다시 한 번 난자당했다. 5·18은 길 위에서 길을 잃었다. 과연 과거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거청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아무썩에도 쓸모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판을 걷어치워야 한다. 걷어치우는 것이 어렵다면 그 판에서 빠져 나오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과거청산은 어떤 대가를 수령하고 송고함을 획득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을 걷어치운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그것은 어쩌면 망자들의 마지막 말과 마지막 몸에 남아 있을지 모른다. 망자들은 계엄군의 살육적인 진압에 분노하거나 계엄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안고 거리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그들은 계엄군에게 두들겨 맞고, 끌려하고, 죽어가는 광주시민들과 가족들을 걱정했으며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저 평화롭게 같이 사는 일상을 되찾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의 마지막 형상은 계엄군의 만행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그 만행은 계엄군의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광기의 표출이었다. 광기의 구조적 패턴뿐만 아니라 사적 감정마저 해결하고 해소하는 것이 망자들이 남긴 몫이다.

망자들의 유언은 한 마디로 ‘같이 살고 싶으니,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같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밥을 먹을 준비를 해야 한다. 살아 끝없이 외쳤던 자, 살아남았지만 말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자, 항쟁을 경험했던 모든 자-피아의 구분 없이-들을 위한 밥상을 마련해야만 한다. 총을 들었던 자, 트럭에 탔던 자, 밥을 주었던 자, 골목과 집에서 숨죽였던 자, 피난 갔던 자, 그리고 반대에 서서 숨을 헐떡였던 자들에게도 자리를 권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와 행위, 감정에 대한 인지와 인정 없이 불가능하다. 당신도 한 인간이었고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그것의 상은 서로 달랐을지라도)공동체를 위한 발로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먼저 그들의 목소리가 수면위로 올라와야 한다. 그리하여 고정되어버린 격자위로 수많은 잔여들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치켜세워주고 박수쳐주는 방식이 아니라 껴안고 공감해주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충분할 수 있다. “2017년 5·18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따뜻한 말과 포용을 보고 처음으로 치유 받은 기분을 느꼈다”고 힘겹게 토로했던, 항쟁에서 살아남았으나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살았다는 한 항쟁 참여자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이것은 분명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수십 년 동안 해오지 않았던가? 혹시 그 여정의 끝에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소?”라는 망자들의 물음에 군화를 신었던 자들이 응답할 수도 있다. “그때는 당신들이 너무 밋고 무서웠어. 글고 제정신도 아니었제.”

그 전에 망자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그나저나 애썼소. 미안하요.”

참고문헌

- 5·18민주유공자유족회a 엮음. (2005).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1. 5·18기념재단.
- 5·18민주유공자유족회b 엮음. (2005).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1. 5·18기념재단.
- 5·18기념재단, 2016, 오월교육원칙과 교육활동: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이야기, 김양래 5·18진상규명활동과 세계화, 9-24.
- 김영택. (2017). 5월 18일, 광주. 역사공간.
- 나간채. (2012). 5월의 사회운동. 한울.
- 노영기. (2017). 10 년 전의 기억, 새로움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186-220.
- 이영재. (2004). [5·18 연구] 과거청산과 민주주의-5· 18 사법적 처리의 의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4(2), 241-270.
- 이영재. (2004). [5·18 연구] 과거청산과 민주주의-5· 18민중항쟁, ‘과거청산과 재구성의 정치. 민주주의와 인권, 4(2), 171-197.
- 이영재. (2010). 과거사 피해보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광주민중항쟁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피해보상과 국가 배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3, 199-234.
- 정호기. (2006). 국가폭력과 피해자 보상. 민주주의와 인권, 6(1), 113-145.
- 최정기. (2006). 과거청산에서의 기억 전쟁과 이행기 정의의 난점들. 지역사회연구, 14(2), 3-22.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 한인섭. (2002).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5·18 민주화운동의 법적 해결을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법학, 43(2), 187-237.
- 한인섭. (2006). 5·18재판과 사회정의. 경인문화사.
- 황석영·이재의·전용호. (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참고사이트

국가법령센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http://www.law.go.kr/%EB%B2%95%EB%A0%B9/5%E3%86%8D18%EB%AF%BC%EC%A3%BC%ED%99%94%EC%9A%B4%EB%8F%99%EA%B4%80%EB%A0%A8%EC%9E%90%EB%B3%B4%EC%83%81%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19. 4. 23 검색.</p></div><div data-bbox=)

[중앙일보, 한영혜, “전두환 회고록 “5·18은 ‘폭동’, 발포명령 없었다”...자위권 행사 주장“. \(2017.04.04\). <https://news.joins.com/article/21436628>, 2019. 4. 23 검색.](http://www.law.go.kr/%EB%B2%95%EB%A0%B9/5%E3%86%8D18%EB%AF%BC%EC%A3%BC%EC%9C%A0%EA%B3%B5%EC%9E%90%EC%98%88%EC%9A%B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19. 4. 23 검색.</p></div><div data-bbox=)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왕조실록전집 “염승”.

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0254, 2019. 4. 23 검색.

■ 토론문

주술적 홀림과 망령들의 재현: 5·18항쟁 과거청산에 관한 연구노트

김주희(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본 토론자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발표자는 5·18항쟁의 과거청산을 위해서 이제 ‘망자의 말’과 ‘망자의 육신’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18항쟁의 제도적 청산과정에서 양화, 정형화, 단순화 문제가 발행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청산 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것이 발표자의 핵심 진단이다. 그에 따르면 결국 5·18항쟁의 정화는 사실상 기만적 위생처리, 소독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보수 세력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감정 등 제도화 과정에서 소외된 잔여적인 것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발표자는 ‘망자의 말’과 ‘망자의 육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표자에 따르면 망자는 말을 통해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귀 하길 바랬으며, 육신을 통해 계엄군의 광기, 분노, 공포를 드러냈다. 나는 이러한 발표자의 주장을 접하며 떠오른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먼저, 발표자에 따르면 5·18항쟁의 과거청산 5원칙(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배상, 명예회복, 정신계승)은 이미 망자들의 유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발표자는 “산 자는 죽은 자의 목소리를 산 공간에 투영시키기 위해”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가로지르며 고군분투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다시 ‘망자의 말’과 ‘망자의 육신’으로 돌아가자는 발표자의 주장은 이전의 ‘앞서서 나간 죽은 자들을 산 자들이 따르는’ “시대 운동으로서의 5월 운동”과 어떤 차이를 갖는 것일까? 그것은 1980년 5월의 말과 육신, 광주의 시공간성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일까?

혹은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광주의 시공간성을 벗어나야 한다는, 이와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일까? 오늘 임지현 소장은 축사에서 “광주를 광주로부터 구하자”는 말을 전했다. 발표자는 ‘망자의 말’과 ‘망자의 육신’ 분석을 통해 그저 같이 살자는 민중의 바람이 잔혹한 폭력을 통해 진압되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발표자의 주장은 (그가 스치듯 언급한) 대우자동차, 불안방사능폐기장, 광우병쇠고기춧불, 용산, 쌍용자동차 등 여타 국가폭력의 연속으로 5·18항쟁을 위치시키자는 말일까? 하지만 이후 일어난 여타 봉기/사태/참사들은 광주의 시간성과는 다른 역사적 시간성 속에서 벌어진 것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다. 발표자가 5·18항쟁에 대한 “북한군 침투설이 힘을 일어갈 무렵 유공자 공세가 시작되었다”고 지적한 것처럼 이제 과거청산의 문제는 대중/국민들에게 ‘선별적 복지’, ‘피해자 특혜’라는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자기보호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나는 ‘망자의 말’과 ‘망자의 육신’에 주목하자는 발표자의 주장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다. 1) 증거중심주의의 문제: 발표자는 세 개의 표로 정리했듯이 실제 사망자들이 남긴 ‘마지막 말’과 ‘마지막 몸’이라는 실체적 증거로 우리의 주목을 유도한다. 여러 역사적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증거는 부인주의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증거 없음’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부인주의는 언제나 대상에 대한 혐오와 함께 작동하며 혐오를 강화한다. 아마 이 경우에 폭도, 광주사람, 망자라는 편견, 조건이 ‘증거 없음’의 근거로 제시될 것이다. 2) 재현의 윤리성 문제: ‘망자의 말’과 ‘육신’이 증명하는 희생자의 무력함, 처참함은 분명 폭력의 야만성을 드러내기 효과적이지만 망자 재현의 윤리성 문제를 떠올릴 때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때 재현되는 말과 육신은 선별되는데 가장 가족중심적이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선량한 존재가 선별된다는 점에서 반공주의자들의 ‘폭도론’은 재생산된다. 3) 말과 육신의 관계적 성격: 발표자는 망자들의 마지막 말과 시신의 모습은 유족들과 지인들의 기억 속에서 재구성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때 말과 육신은 망자-유족, 지인 간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가지며, 기억되는 것이다. 결국 5·18항쟁의 과거청산을 위해 이러한 말과 육신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우리’를 망자와 어떤 관계에 놓는 효과를 발생시키는가? 상주, 유족이라는 친족 관계적 상상력 속에서만 자칫 과거청산 문제가 수렴되는 한계는 없을까? 4) 폭력의 합법성, 일상성 문제: 처참한 시신, 선량한 말이라는 대상을 통해 이러한 비극을 만들어낸 폭력의 광기는 증명할 수 있을지라도 폭력의 일상성과 합법성의 문제도 제기하기에 적합할까? 군사주의적 위계, 명령 등의 체계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폭력, 그리고 사라진 말과 몸, 다시 말해 일상 속에 배태되어 포착되기 어려운 폭력은 어떤 증거로 기능할 수 있을지도 궁금증이 남는다.

몽골에서의 정치적 숙청과 정의 회복 과정 (1921 년~2019 년)

할타린 멩흐바야르(Kh.Munkhbayar)
(몽골국립대학교 역사학과)

발표자는 몽골에서의 정치적 숙청에 대하여 2001 년부터 시작한 본인의 연구활동 중 일부 성과와 2004 년부터 정의 회복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몽골에서의 정치적 숙청

정치적 입장 및 출신,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 구성원들을 숙청하거나 피해를 입혔던 현상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해 왔다. 그 중에서 몽골국에서의 정치적 숙청은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몽골인들을 반역, 간첩활동, 정치·사회 지도자 생명침해, 정변, 무장 봉기, 국가파괴, 반정부 유언비어 유포, 국가기밀 유출, 밀입국 등의 정치적인 사건에 부당하게 연루시켜 불법적으로 수사하고, 불공정한 재판에 의거한 처벌이나 핍박 등으로 숙청하고, 법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며, 정의를 짓밟는 일이 1921 년~1990 년까지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다. 따라서, 정치적 권력을 가진 무리들이 편협한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고화하기 위해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회 구성원과 일부 계층을 정치적인 사건에 부당하게 연루시켜 불법적으로 처벌·제거·피해를 입히는 등의 정치적 폭력행위를 몽골에서는 정치적 숙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 이를 국제연합(UN)에서 1948 년 채택하고, 몽골국이 1966 년 가입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¹ Мундагбаатар, Л., Мөнхбаяр, Х.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түүний хор холбогдол, хэлмэгдэгсдийг цагаатгахын учир”, *Өнөөдөр* 209 (5003), 2013/09/10, А хэсэг, 7.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에 명시된 '집단살해(Genocide)'가 맞다고 보는 경향이 근래에 우세하다.²

몽골에서의 정치적 숙청은 1921 년에 시작되어 1990 년까지 70 년 가까이 몽골 사회 전반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었다. 역사 자료, 법원의 법적 판결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³

17 세기 말 만주족 청나라의 구성원에 포함된 몽골인들은 20 세기초부터 독립회복과 국민국가(Nation state) 건설을 위하여 수십 년 간 투쟁하였으며,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주권국가(De jure [법적])가 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숙청의 피해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몽골국의 황제(1911-1924 년)

몽골 지역은 19 세기 말부터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지정학(地政學)·지전략(地戰略)·지이념(地理念)적인 흥미를 가진 환경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몽골에서의 정치적 숙청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실질적 요인이 되었다.⁴

이 문제를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 몽골의

² Пүрэвдорж, Л. “Хорьдугаар зууны Монголд үйлдсэн яргалал бол төрлөөр устгах гэмт хэрэг мөн”, эмх. Ц.Гэрэлт-Од, ред. Д.Цогтбаатар,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1921-1940 о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судлалын бага хурлын илтгэлүүд, Улаанбаатар: Хөх судар принтинг, 2010, 24-32; Батсайхан, О., нар. Монголын түүх: 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8, 434-512;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Шалтгаан, үр дагавар, сургамж”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эмх. П.Нарандалай, П.Оюун.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Конрад-Аденауэрийн сан, 2017, 10-12.

³ Мөнхбаяр, Х., нар.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амтрын товчоон, Боть 18,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эхлэл, өрнөл,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3, 10-269; Мөнхбаяр, Х. “Монголд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эхэлсэн цаг хугацааны тухайд”, Түүх 13, 2014, 51-73; Мөнхбаяр, Х. “Цэвээн тэргүүнээс Чимидийн Энхээ хүртэл”, Өнөөдөр 222 (4686), 2012/09/25, А хэсэг, 4; Мөнхбаяр, Х. “Тогтох тайжаас Чимидийн Энхээ хүртэл” (2017.09.12), <https://www.24tsag.mn/a/154595>,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4.

⁴ Өлийбаатар, Д.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учир шалтгаан, уг сурвалжийн тухайд”, эмх. Ц.Гэрэлт-Од, ред. Д.Цогтбаатар,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1921-1940 о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судлалын бага хурлын илтгэлүүд, Улаанбаатар: Хөх судар принтинг, 2010, 12-19.

1911년~1921년 사이의 정치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한다. 1911년 민족 해방 혁명으로 청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난 외몽골인들은 몽골의 불교 수장인 잡잔담바 호탁트(Javzandamba Khutagt) 활불을 전제군주 복드 황제로 추대하여 장구한 역사를 가진 몽골족의 독립 몽골국을 다시 세웠으며, 내몽골, 바르가[巴爾虎], 칭하이[青海], 신장[新疆]에 거주하는 모든 몽골인을 통합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정 러시아와 중화민국의 영향으로 몽골국은 1915년부터 중국 소속의 자치국이 되어 국가의 자주성을 제한당하였다. 그 뿐 아니라, 1919년 말 중국 군벌인 쉬수정(徐樹錚)이 지휘하던 중국 군대는 몽골의 자치권을 철폐하고, 황제를 투옥하였다. 하지만, 1921년 초, 러시아군 장교 운게른 남작이 지휘하던 제정 러시아 지지세력인 백군 호위대가 몽골인들과 연합해 몽골의 수도에서 중국군을 몰아내고, 복드 황제를 다시 황제의 자리에 모셔 몽골정부를 다시 수립하였다.⁵

그러나, 수도인 니이스렐 후레에(Niislel Khüree)에서 도망친 중국군의 주력이 몽골의 북쪽을 여전히 점령하고 있었고, 운게른 남작의 성과에 고무된 러시아의 백군(白軍) 일파는 몽골로 집결해 러시아의 혁명군인 적군(赤軍)과의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을 외국의 군사적 지배에서 해방시키겠다는 목표가 몽골의 애국지사들 앞에 놓여 있었다. 중국군의 압제에 반대하는 정신 아래 1919년~1921년에 형성된 몽골 최초의 정당인 몽골인민당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1917년 10월 혁명을 행한 V.I.레닌(Lenin)을 비롯해 코민테른, 러시아연방과 협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⁵ Мөнхбаяр, Х. “Сюй Шужэний хятад цэргийн дэглэм хийгээд Чэнь И-гийн Иргэн засгийн завсарт тэсч үлдсэн Монголын төр”, *Түүх* 11, 2012, 98-149.



그들의 군사·경제·정치적 원조로 중화민국의 국민당 군대 및 제정 러시아의 백군의 지배로부터 몽골을 해방시킨 몽골인민당은 1921년 7월 10일 몽골 정권을 복고 황제 정부에서 인민 정부로 이양받았으며, 황제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으로 자신들과 연합한 이들이 강요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바, 이는 몽골에서 정치적 숙청이 시작되는 전제(前提)가 되었다.

몽골에서의 정치적 숙청의 원인, 본질, 숙청 희생자들의 범위, 숙청 기획자, 부작용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간별로 개괄해 나누어 각각 상세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1. 초기 (1921년~1924년)

1919년 창립된 코민테른(Communist International,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즉 국제 공산주의운동기구인 세계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 상황은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고, 그 거점지를 몽골이라 보고 있었다. 따라서, 자국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 해방을 되찾고자 했던 몽골인들의 투쟁을 코민테른은 러시아 공산주의 볼셰비키 정당의 시베리아 분국 동방 인민부 극동 서기국을 통해 지지하였으며, 중세 조직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1921년 몽골 민족·민주 혁명⁶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⁶ Болдбаатар, Ж. эмх. *XX зууны Монгол Улс: Шилдэг үзмэрийн дээжис*, Улаанбаатар: Мөнхийн үсэг, 2017, 25.

1921 년의 혁명 결과, 몽골에서는 옛 군주제에서 근현대 정부 형태로 교체되는 과도기적 성격인 인민 주권의 제한군주제 정부가 1924 년 중반까지 존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의 향후 국가 발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견해가 몽골 정치인들 사이에 우세하였다.



D.보도오 총리



S.단잔 전군사령관



E.린치노 코민테른 대표

1. 영국과 같은 제한군주제 국가를 건설한다 : D.보도오(Bodoo) 인민 정부 총리 등⁷
2.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 방향을 근간으로 삼아, 몽골을 민족·민주 공화국처럼 자주적으로 발전시킨다: S.단잔(Danzan) 몽골인민당 초대 당수 등⁸
3. 몽골을 소비에트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만든다 : 몽골인민당 중앙위원회 의장, 정부 자문관, 군사협의회 의장 등 몽골의 최고위직을 역임한 엘벡도르지 린치노(Elbegdorj Rinchino) 코민테른 대표⁹.

그러나, 코민테른은 세계혁명에 대한 지이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몽골의 민족·민주주의 정치인들에 대해 ‘인민 정부를 없애고, 독재 정부를 수립하려 시도했다’는

⁷ МУУТА-УТНОНБА. X 4, Д 1, ХН 27. 17-нү .

⁸ Өлзийбаатар, Д. *Яагаад 1937 он*, Улаанбаатар: Үндэсний архивын газрын хэвлэх, 2004, 153-155.

⁹ Батсайхан, О., нар. *Монголын түүх: 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8, 186.

정치적 조직사건으로 누명을 씌워 숙청하는 방식으로 1921년의 몽골 혁명 민족·민주 목표를 중단시키고, 공산주의 이념을 강제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특토흐 타이지

롭산체웨엔 타이지

이는 복드 황제 정부의 재무장관 겸 1 등 타이지[臺吉] 롭산체웨엔(Luvsantseveen), 황제의 군무 관료 특토흐(Togtokh) 타이지를 1921년 7월 말 체포해 투옥하고 고문한 것을 시작으로,¹⁰ D.보도오(Bodoo) 인민 정부 총리 등 15인을 1922년 가을에,¹¹ S.단잔(Danzan) 전군사령관과 바와아산(Bavaasan) 몽골혁명청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 겸 내각 서기 이 2인을 그로부터 정확히 2년 후인 1924년 8월 말에 각각 법원의 판결없이 처형함으로써 실현되었다. 이 모든 일을 코민테른의 몽골 주재 대표인 엘벡도르지 린치노가 기획하고, 러시아 영향하의 몽골 내위국(內衛局)이 집행하였다.

그 외, 1921년 혁명의 지도자들 중 1인인 D.수흐바아타르(Sükhbaatar) 장군이 1923년 초에, 복드 황제는 1924년 봄에 갑작스럽게 사망한 바, 이는 코민테른의 동 활동 중 일부였을 수 있다.

결국, 1924년 말 몽골을 사회주의 발전의 길로 발전시키려는 정책이 우세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¹⁰ Мөнхбаяр, Х. “Монголд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эхэлсэн цаг хугацааны тухайд”, *Түүх* 13, 2014, 51-73.

¹¹ Мөнхбаяр, Х.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эхлэл ба Д.Чагдаржав”, *эмх./ред. С.Чулуун, Н.Хишигт. Монгол Улсын төр нийгмийн зүтгэлтэн, Ардын түр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анхны Ерөнхий Сайд Дамбын Чагдаржав (1880-1922)*,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0, 104-130.

2. 확산기 (1925년~1932년)

자국을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의 길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몽골의 정치 지도자들을 제거한 후, 코민테른은 몽골인민당의 '불세비키화'와 몽골을 사회주의국가로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신속하게 변경했다. 그 결과, 1924년 11월 26일 몽골국은 최초의 헌법을 선포하고, 진정한 인민주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인 공화제를 수립하게 되면서,¹² 몽골에서 공산주의 사상만이 유일하게 지배하는 정치제도의 법적 기본이 보장되었다. 이 헌법에 따라, 국민을 양분하여, 인민계급에 해당하는 평민·빈민들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칭기스칸의 황금씨족계 귀족, 활불, 승려, 부자, 자영업자의 참정권을 박탈하였다.¹³

그 직후 코민테른은 몽골인민당의 이름을 몽골인민혁명당(이후 '몽골인혁당'으로 약칭)으로 개명시키고, 진정한 공산당으로 변화시켜 상기의 사회 그룹, 계층을 부인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으며, 1925년 몽골인혁당 및 정부, 공공기관 내 귀족 출신 인사들과 승려들을 축출하였다.

몽골 정부를 자신들의 영향하에 전적으로 두고자 했던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 결과, 코민테른은 1928년 말 몽골의 정당 및 정치 지도부를 예속 세력으로 구성하였고, 1929년~1932년 몽골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실험하였다.¹⁴

몽골 사안을 논의한 코민테른 지도부의 1929년 1월 27일 회의에서, "*몽골의 영토는 영국, 독일, 프랑스 국토를 합친 것보다 더 넓지만, 인구는 고작 8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간교한 방법을 써서라도 최소한 몽골을 제국주의자와 세계혁명의 적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열하고 나쁜 방법으로라도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목표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는 80만 목민이 인구인*

¹² Амарсанаа, Ж., Батсайхан, О. (эмх.)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хууль*, Улаанбаатар, 2004, 42.

¹³ 위의 책, 4-16.

¹⁴ Баярсайхан, Д., нар. *Монгол Улсын түүх*. Улаанбаатар: МУИС пресс, 2017, 397.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이다. 그들의 영토는 인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만약 우리가 이 적은 수의 인구를 비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몽골에서의 운동을 노동자들의 계급 투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오로지 이 방법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영향권 아래에 둘 수 있다"라고 1928년 말 소집된

몽골인혁당 제 7차 대회에 코민테른의 대표자들을 인솔해 참석한 체코의 공산주의자인 B.쉬메랄(Shmeral')이 발언하였다.¹⁵

몽골을 오로지 인민계급으로만 구성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명목 아래 영향권에 두겠다는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계급에 해당하지 않는 상기의 인사들을 정부나 행정 공무 뿐 아니라 자영업 금지, 재산 몰수, 신앙, 교육권·자유 침해, 정치적 조작사건에 연루시켜 체포·심문·처벌(투옥, 처형) 등으로 핍박하고, 사회 계층에 따른 말살정책을 시행하였다.

몽골 역사상 '좌파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기의 절대적인 정치 정책과 활동은 산업의 근간을 파괴시켰다. 이로 인하여, 몽골의 국가 경제 기반인 가축두수는 1930년~1932년 사이에 7백만 두, 즉 전체 가축두수의 3/1의 손실을 입어 1천6백만 두까지 감소되었고, 몽골은 사회·경제·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정부의 실책, 즉 코민테른이 강요한 공산주의 국가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적 투쟁이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불완전한 정보에 따르면, 몽골 국경

¹⁵ Монгол Улсын Архивын хэрэг эрхлэх газар, Оросын Холбооны улсын Төрийн архивын алба. *Коминтерн ба Монгол: Баримт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йн мэдээллийн компани, 1996, 284-285.

부근에서 약 1만2천 가구, 4만7천여 명이 외국으로 도피했고¹⁶, 중부 지방 아이막[道]들을 포함하는 무장 봉기로 인하여 약 6천 명이 사망하였다.¹⁷

3. 전성기 (1933 년~1939 년)

코민테른은 몽골에서 공산주의를 단기간에 건설하려던 시도가 실패하게 되자, 1932 년 여름부터 몽골에서의 활동을 중단하였으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하 '소련'이라 약칭) 공산당과 그 지도자인 I.V.스탈린(Stalin)에게 이 임무를 넘겼다.¹⁸ 스탈린은 몽골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으며, 이전의 실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화된 정책을 실시할 기회를 몽골 지도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따라서, 그는 1929 년~1932 년 정치적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타이지(臺吉), 귀족, 활불, 승려, 관리들을 1932 년 여름 감옥에서 석방시키고, 불법 몰수한 재산을 반환해 주었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04 년~1905 년 러시아-일본 전쟁에서의 패전국인 제정 러시아와 1905 년 및 1907 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득한 만저우리[滿洲里], 한반도, 내몽골에서의

¹⁶ Авирмэд, Д. Дүрвэх хөдөлгөөн ба Улсыг аюулаас хамгаалах байгууллага (1930-1934), Улаанбаатар: Тагнуулын Ерөнхий Газр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2012,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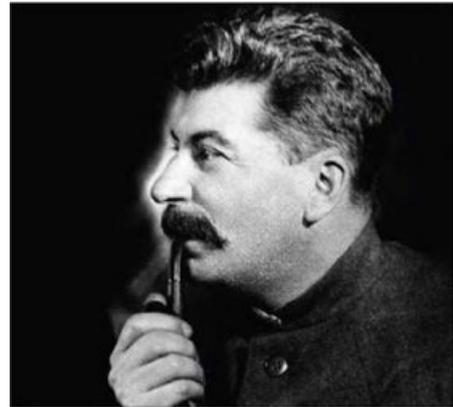
¹⁷ Ганболд, С. “1932 оны зэвсэгт бослогын тухай дахин өгүүлэх нь”, эмх. Ц.Гэрэлт-Од, ред. Д.Цогтбаатар,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1921-1940 о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судлалын бага хурлын илтгэлүүд, Улаанбаатар: Хөх судар принтинг, 2010, 130.

¹⁸ Баярсайхан, Д., нар. Монгол Улсын түүх. Улаанбаатар: МУИС пресс, 2017, 397.

영향력을 이용하여, 아시아 대륙을 제압하려는 속셈이 있었다. 일본이 1910년에는 조선을, 1932년에는 만주우리를 점령하고, 1933년에는 몽골인민공화국의 동쪽 변경에 접근해 온 상황은 소련을 당황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을 세계에 혁명을 전파하는 거점지로 삼고자 했던 코민테른의 지이념은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서 외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지켜줄 소련의 완충국가(Buffer state)로 삼으려는 소련 지도자 I.V.스탈린의 지정학적 정책으로 교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몽골 사회 전반에 걸쳐 벌어진 정치적 숙청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

소련의 지도자 I.V.스탈린은 1945년 7월 2일 쑹쯔원(宋子文) 중화민국 행정원장과 만났을 때 *"외몽골은 독특한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이 위치에서 일본은 극동에서의 소련의 입지를 파괴할 수도 있다. 일본은 전쟁 이전에도 할хин 골 구에 진입하려던 참이었고, 만약 소련이 외몽골의 영토를*



*방어할 권리가 없었다면 소련은 극동을 잃을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¹⁹ 라고 발언한 바, 이는 몽골인민공화국에 대한 소비에트의 지정학적 정책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소련이 몽골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소련의 극동 시베리아의 주요 철도가 외국군대의 공격에 매우 쉽사리 노출당해 단절되어 러시아가 정치·경제적으로 몰락할 위험이 있었다.

I.V.스탈린은 정치적 숙청을 몽골에 적용하였고, 자신의 정책에 방해되는 몽골인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방법으로 몽골을 자신에게 완전히 복속·순종하는 완충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였다. 이와 동시에, I.V.스탈린은 소련과 그

¹⁹ Батсайхан, О. Монгол үндэстэн бүрэн эрхт улс болох зам (1911-1946), Улаанбаатар: Адмон, 2007, 332.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서 전체주의 체재를 수립하고자 시도한 바, 이는 몽골인민공화국에서의 정치적 숙청을 더욱 격화시켰다.

러시아 특수 부처의 지도부와 지침에 따라, 몽골은 보안기관의 참여를 기초로 소련 지도자들의 이러한 정책 및 활동을 치밀한 계획하에 시행하였다. 이 과정을 살펴 보면, 정치적 숙청은 다음과 같이 몽골 사회의 3개 그룹이나 계층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 엿보인다.

1. 몽골의 구(舊)지식인 계층: 귀족 정치(aristocrat 귀족) 시대의 중·상류계급층인 타이지 노얀, 관리, 지식인, 불교의 상류층인 활불 및 승려, 부유한 소수 목민·상인
2. 민족의 신(新)지식인 계층: 1921년 민족·민주 혁명 이후 형성된 정치인, 공권력을 가진 기관(군대, 경찰, 특수 부처)의 지도원 및 집행원, 정부 전(全) 단계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의 인재
3. 보리아드 몽골인 공동체 : 1727년 몽골의 카흐타 부근 보오르(Buur) 마을에서 체결된 청나라와 제정 러시아 간의 공식적인 국경 조약에 따라 러시아령으로 이관된 바르고진 터خم, 바이칼호수 주변이 거주지인 보리아드 몽골인들이 1905년 러시아-일본 전쟁,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 내전 시기에 전란을 피해 몽골에 대거 피난을 왔다.

1924년 헌법에 따라 수립된 사회주의식 몽골인민공화국을 탄생시키는 데 있어 몽골의 구(舊)지식인 계층 전체를 제거한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소련의 지도자들에게는 필요하였다. 그 외, 몽골을 러시아의 직속 추종국가로 둔갑시키는데 있어 몽골의 정부 지도자들부터 시작해 일반 공무원, 교사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신(新) 지식인 계층을 2~3 차례에 걸쳐 제거하는 방식으로 몽골인들의 민족·민주주의를 근절하는 일이 I.V.스탈린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1921년 이후 러시아와 몽골 간의 협정에 따라

몽골내 보리아드인들에게 법적으로 몽골국적을 부여했으나,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을 10 월 혁명의 배반자, 제정 러시아의 도망자인 백군의 잔존 세력으로 여기면서²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베풀었다.

이는 몽골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위치의 보리아드인들과 몽골인들 가운데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던 승려들이 혁명정부를 없애고, 일본쪽으로 바로 변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뢰하지 못할 자들일 뿐만 아니라 몽골 정부 지도자들 역시 그들에 대한 지지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스탈린주의의 기초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우세를 우려했던 소련은 1933 년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을 때 원조 등으로 유럽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권익을 거부하였다. 그 대신, 소련은 몽골을 취하기 위하여²¹ 몽골 사회에서 상기의 3 개 그룹을 일본의 위험성과 관련지어 제거할 대대적인 캠페인을 1933 년~1940 년대까지 대규모로 벌였으며, 몽골인민공화국의 인민 정부를 없애서 일본에 점령당하게 하려는 반혁명적 일본정보기관에 관한 정치적 조작사건 수십 건을 공작했다.



이는 1933 년 보리아드 몽골인들을 연루시킨 ‘흙베(Lkhümbe) 사건’²² 을 시작으로 1934 년~1936 년 승려들에게 누명을 씌운 수 차례의 재판으로 이어졌다.

전체 연방 공산주의 볼셰비키당(이하 ‘전연방공산당(볼)’이라 약칭)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1937 년 8 월 14 일 자 회의의 제 637 호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하다.

²⁰ Эрдэнэсайхан, А. “Буриад монголчуудыг Лхүмбийн хэрэгт хэлмэгдүүлсэн нь”, эмх./ред. Л.Мундагбаатар, Х.Мөнхбаяр. “Лхүмбийн хэрэг-80 жи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3, 56-57.

²¹ Өлзийбаатар, Д. ““Лхүмбийн хэрэг” гэгчийн учир шалтгааны тухайд”, эмх./ред. Л.Мундагбаатар, Х.Мөнхбаяр. “Лхүмбийн хэрэг-80 жи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3, 50-51.

²² Жамбын Лхүмбэ: МАХН-ын Төв Хорооны нарийн бичгийн дарга, Монголын Үйлдвэрчний Эвлэлийн Төв Зөвлөлийн даргыг эл улс төрийн хэргийн толгойлогчоор зарлан эрүүдэн шүүж, цаазалжээ.

"몽골인민공화국에서 신속하게 일을 기획하기 위하여 비밀경찰(Chekist) 그룹을 미르노프(Mirnov) 동지와 함께 임명해 보내도록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SSR, 이하 '소련'으로 약칭)의 내무인민위원회에 일임한다" 라고 명시한²³ 바에 따라,



M.P. 프리노브스키이



N.S. 미로노프



P.A. 스미르노프

소비에트의 대숙청을 직접 기획한 인물 중 1인 이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내무인민위원회 부위원 겸 내무인민위원회

국가안보국 국장 M.P. 프리노브스키이(Frinovskiy)와 붉은 군대의 정치부 부장 P.A. 스미르노프(Smirnov) 등은 1937년 8월 19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전권대표자 겸 내무인민위원회의 몽골인민공화국 주재 대표로 임명되었던 N.S. 미로노프(Mironov)와 함께 같은 달 24일 올라안바아타르(Ulaanbaatar)에 항공기로 급거 착륙하여 몽골의 지도자들에게 '일본의 몽골 점령 계획'이라는 것을 소개하였다.



P. 겐덴 총리

더욱이, 1932년~1936년 몽골의 총리였던 P. 겐덴(Genden)을 1937년 7월 17일 러시아의 소치(Sochi)시에서 체포했으며²⁴ 잔혹한 수사를 통해 죄를 강제로 인정하게 한 바, 총리로 재임하던 때인 1932년부터 몽골 내 일본 정보기관의 기관원으로 가입했다거나 러시아와 몽골 양국간 교류를 중단하고 몽골을 일본에 점령당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

²³ Кузьмин, С.Л. “БНМАУ-д буддын шашны сүм хийдийг устгасан нь: Механизм ба учир шалтгаан”, эмх. П.Нарандалай, П.Оюу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Шалтгаан, үр дагавар, сургамж”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Конрад-Аденауэрийн сан, 2017, 186.

²⁴ Цэрэндулам, Г. П.Гэндэн: Эцгийн тухай дур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МТУ, 2000, 55, 69-72.

중이었던 것에 대한 진술과 동 진술로 드러난 이 반혁명 기관의 기관원 115 인의 이름이 적힌 '음모'라는 명단을 8 월 28 일에 Kh.초이발산(Choibalsan) 몽골 내무부 장관에게 인계하였다.

M.P.프리노브스키이 등의 고집과 침략적인 활동은 당시 몽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G.데미드(Demid) 군무부 장관 겸 전군 총사령관을 1937 년 8 월 22 일 소련 영내인 시베리아철도 타이가역에서 독살해 몽골군의 지휘부를 무력화시키고, 그 3 일 후, 그들이 몽골에 도착한 다음날인 25 일 새벽에 소비에트 병력을 몽골에 급거 진입시켜 몽골 전체를 감독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었다.²⁵



G.데미드 군무부 장관,
전군 총사령관, 원수

1937 년 3 월 소련에서 시작된 '정치적 대숙청'의 몽골판은 I.V.스탈린의 직접적인 지도와 소비에트 내무인민위원회의 관여로 기획되는 상황이 이렇듯 조성되자, 1937 년 9 월 10 일 밤 몽골인민공화국의 수도를 포위한 소비에트군의 지원을 받아 전체를 포함하는 대대적인 체포를 개시하였다.

1940 년까지 전개된 정치적 숙청의 전성기에 민족의 신(新)지식인들을 '겐덴, 데미드 사건'에, 승려·귀족·옛 정부관리·부유한 목민들을 당시 몽골 불교 제일의 고승인 윤존 함바 룽산하임칙(Yonzon Khamba Luvsankhaimchig) 주지승과 담딘(Damdin) 부주지승 등이 주동했다고 하는 '반혁명 승려 중앙기구' 정치적 조작사건에 부당하게 연루시켜 숙청하였다.

²⁵ Батсайхан, О., нар. *Монголын түүх: 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8, 468.



윤존 함바 롑산하임칙
주지승

1931년부터 1949년까지 소비에트 검찰기구를 이끌고 있던 A.Ya.위쉬스키이(Vyishisnkiy)는 “용의자의 죄를 입증할 때 범죄 사실을 시인한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는 불필요하다”라는 견해를 소비에트의 사법 감찰기관 활동에 도입하고, 수사에 잔인한 고문 방법들을 사용해 누명을 씌워 강제로 인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I.V.스탈린의 정치적 숙청의 법적 보장을 조성하고 있었던 바,²⁶ ‘흠베 사건’을 기획한 소비에트의 활동과 함께 1933년 몽골의 사법기관 업무에

이를 적용했다.²⁷

이는 1937년부터 몽골 내무부 수사관들의 주요 업무 방식으로 정착되었으며 당시 몽골 특수 부처의 수사업무에 용의자의 신체와 정신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잔인한 고문 30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몽골인 수만 명에게 정치적 누명을 씌워 죄를 인정하도록 했다.²⁸

M.P.프리노브스키이는 몽골에서의 정치적 대숙청을 주도적으로 개시하였고, Kh.초이발산이 이끄는 몽골 내무부 직원 및 러시아측 교관, 자문관들을 방법론·조직적으로 강화시켰다. 그 후, 반(反)소비에트 정부 활동을 행한 죄인을 색출·체포, 총살할 목적의 대중 대상 특수활동 중 체포된 자들에 대해 법외 판결권을 가지는 ‘3자 위원회’를 1937년 6월 30일 소련에서 결성했던 범례에 따라 ‘*몽골의 승려 문제 결정권을 가지는 3자로 초이발산, 사법부 장관, 몽골인혁명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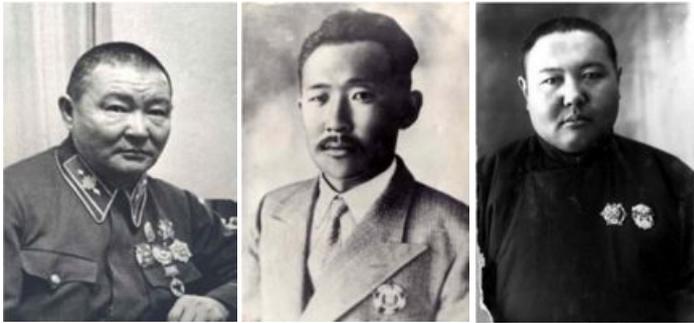
²⁶ “Vyshinsky Andrey Yanuarevich (1883-1954)”, <http://odessa-memory.info/index.php?id=402>,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5.

²⁷ Мөнхбаяр, Х. ““Группийн хэрэг” ба Лхүмбийн байцаалт, эрүү шүүлтийн тухай нягтлах нь”, эмх. С.Энхбаяр. *Лхүмбэ-110 жи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ал, Улаанбаатар: Монгол хэвлэл, 2012, 121-140.

²⁸ Мөнхбаяр, Х. “Байцаалт ба эрүү шүүл”, эмх. Ц.Гэрэлт-Од, ред. Д.Цогтбаатар,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1921-1940 о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судлалын бага хурлын илтгэлүүд, Улаанбаатар: Хөх судар принтинг, 2010, 60-75.

구성원으로 하는 결성안'을 모스크바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전연방공산당(불) 정치국이 1937년 9월 19일 제 P53/106호 결정으로 승인하였다.²⁹

이에 따라 국가소회의 의장단과 인민 내각회의는 1937년 10월 2일



Kh.초이발산

롭산샤라브

G.체렌도르지

(특별전권위원회 위원들)

합동비밀회의 결의로

Kh.초이발산(Choibalsan) 내무부

장관, G.체렌도르지(Tserendorj)

사법부 장관,

D.롭산샤라브(Luvsansharav)

당중앙위원회 서기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적 사건으로 체포된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결정하도록 하였다.³⁰

Kh.초이발산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법외 기구는 1939년 4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총 50차례 회의하였고, 정치적 사건으로 체포된 25824명을 반혁명분자, 외국 첩자라고 사건을 심사, 결정하면서 20474명에게 총살형, 5103명에게 징역 10년형, 240명에게 그보다 적은 기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였다.³¹ 그 중 총살형 수형자의 70% (14201명), 징역형 수형자의 63% (3380명), 전체 수형자의 68% (17581명)은 승려들이었다.³²

²⁹ Кузьмин, С.Л. “БНМАУ-д буддын шашны сүм хийдийг устгасан нь: Механизм ба учир шалтгаан”, эмх. П.Нарандалай, П.Оюу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Шалтгаан, үр дагавар, сургамж”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Конрад-Аденауэрийн сан, 2017, 187.

³⁰ Гэндэн, Т. Улсыг аюулаас хамгаалах байгууллагын ажилд гарч байсан алдаа завхралыг шалгасан дүнгийн тухай нууцлагдсан ил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Урлах эрдэм, 2002, 24.

³¹ Ринчин, М.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ба цагаа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2000, 18.

³² Мундагбаатар, Л., Мөнхбаяр, Х.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түүний хор холбогдол, хэлмэгдэгсдийг цагаатгахын учир”, Өнөөдөр 209 (5003), 2013/09/10, А хэсэг, 7; Ринчин, М.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ба цагаа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2000, 40.

그 뿐 아니라, 몽골인민공화국의 A.아마르(Amar) 총리, P.겐덴(Genden) 총리, D.독숨(Dogsom) 국가소회의 의장, D.롭산샤라브(Luvsansharav) 몽골인혁명 중앙위원회 서기장 등 몽골 정부 지도자, 군 지휘관 400 여 명에 대해 소비에트-몽골 간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목적으로 일본과 공모한 범(凡) 몽골단체의 조직원이라는 정치적 누명을 씌워 1937 년~1941 년에 모스크바에서 소비에트 법률에 따라 선고하였으며, 국경일인 나아담(Naadam) 축제 기간에 처형하는 등 국제법 규범을 위반하고 있었다. 러시아인들의 이러한 조롱은 1922 년에 D.보도오 총리를 국경일 기간에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1937 년 P.겐덴 총리, 1939 년 D.독숨 국가소회의 의장 등을 체포하고, 1941 년 A.아마르 총리를 러시아에서 처형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A.아마르 몽골인민공화국 총리 (1939 년~1941 년 모스크바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따라서, 소비에트 대법원 군사위원회의 1941 년 7 월 10 일 자 재판에서 몽골의 형법 제 58 조 제 1a 항, 제 58 조 제 11 항의 조항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은 A.아마르 몽골인민공화국의 총리는 재판정에서 다음과 같이 최후 발언하였다.

"... 나에게 강제로 인정하게 한 이전의 진술을 나는 거부한다. ... 만약 몽골인민공화국이 자유국가라면 어찌하여 나를 소비에트 법원이 판결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 나는 몽골 인민을 사랑하며, 러시아 인민도 역시 아낀다. 그러나 여타 대국들과 마찬가지로 몽골을 식민지화하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빨갱이들', 그들의

정부를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 몽골인민공화국에 그 어떠한 반(反)혁명 일당도 없었다”
라고 알렸다.³³

1937년 9월에 개시된 일본 첩자 색출·제거 특수활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민을 안심시키고, 신뢰감이 생기도록 하기 위하여 1938년부터 몽골의 국가 경축 행사인 대축제 나아담을 이념·재정적으로 최상위에 두고 대대적으로 거행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선진적인 국가 발전을 소개하고, 당·정 지도자들과 만나게 하며,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³⁴ 1938년 국경 행사인 나아담에 지방대표 574명을 초청해 참가시켰을 때³⁵ 당해 연도의 나아담 축제 총 예산 중 43%에 준하는 15만 텡그력을 승인해 지급했다.³⁶

더욱이, 당과 정부가 적들과 어떻게 투쟁하고 있는지를 역시 나아담 축제를 통해 널리 선전하였으며, 반(反)혁명분자인 겐덴, 데미드 등이 국가를 어떻게 해롭게 해왔는지, 그에 대응해 어떻게 투쟁하여 승리했는지에 관하여 그 뜻을 색을 달리하여 큼직하게 쓴 해설이 있는 풍자화로 선보였으며,³⁷ 일본첩자들에게 자신을 팔아 혁명을 배반한 겐덴, 데미드, 윤존, 주지승 같은 두 얼굴을 가진 적들을 Kh.초이발산 원수와 내무부, 그리고 당정이 색출해 제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감한 소년의 경계(警戒)’라는 극을 국민들에게 선보였다.³⁸

다음해인 1939년 몽골의 동쪽 경계인 할힌 골에서 일본-만주국 연합군이 침공해 몽골-소비에트 측과 전투하다 패전하였다. 이 일로 실제로 몽골에 일본 첩자들이 존재하던 것을 Kh.초이발산 원수 등이 때마침 제거한 것이야말로 행운이었다는 믿음을

³³ Ринчин, М., нар.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амтрын товчоон, Боть 15, Ерөнхий сайд А.Амар: Үзэл бодол, үйл ажиллагаа, Улаанбаатар: Улаанбаатар хэвлэл, 2012, 240-241.

³⁴ МУУТА-ТБА. X 1, Д 2, ХН 729.1-нү.

³⁵ МУУТА-ТБА. X 1, Д 2, ХН 688. 283-нү.

³⁶ 위의 사료, 56-59-нү.

³⁷ 위의 사료, 256-нү.

³⁸ 위의 사료, 230-нү.

몽골인들에게 생기게 하였던 바, 이는 몽골에서의 정치적 숙청이 향후 격화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4. 쇠퇴기 (1940 년~1952 년)

1930 년대의 대숙청으로 비(非)시민 계급층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몽골인민공화국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의 목적을 실현하고, 정치적으로 믿지 못할 자들과 일본 정보기관의 기관원을 색출해 제거했다. 그렇게 했어도 몽골을 사회주의의 길로 발전시키기 위해 준비한 노동자 인민의 독립 국가로 만들 목적의 신헌법을 1940 년에 제정하면서 남아있던 인민의 적을 완전히 제거할 목표가 생겼다.

이에 따라, 1940 년대에 정치적 조작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숙청 희생자들은 주로 '반(反)혁명분자'들 중 나머지, 폐물 즉, 그 이전 단계에서 제거된 인사(人事)를 승계한 간부급의 새로운 책임자들이 되었다.³⁹

이와 동시에, 1941 년 6 월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직후, 몽골 내무부는 1920 년대 말 독일에서 유학 중이었던 인물들을 '파시스트 독일첩자 무리'라면서 몇 몇 정치적 조작사건에 연루시켜 체포하였고, 2~3 년 수사한 끝에 그들 대부분을 징역 3~25 년형에 처하고, 일부를 석방⁴⁰ 하거나 일부 저명인사들을 처형하였다. 무자비하고 잔혹한 심문으로 인하여 L.남스라이(Namsrai) 군(軍)극장 극장장은 독일, 프랑스, 일본 3 국의 첩자가 맞다고, 여성인 D.수르마아잡(Sürmaajav) 사서는 찢먹이 자녀들을 집에 남겨둔 채 올란바아타르에서 서쪽으로 100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오토공텡게르(Otgontenger)라는 고산(高山)까지 걸어가서 정상에서 특수 통신 도구로 독일에 첩보를 전달했다고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³⁹ Гэндэн, Т. *Гурван түмэн хүний амь*, Улаанбаатар: Шувуун саарал, 1999, 152; Ринчин, М.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ба цагаа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2000, 42.

⁴⁰ Ринчин, М.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ба цагаа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2000, 51-53.



1920년대 서유럽에서 유학 중이던 몽골인들

1940년~1950년대에 동
 사건 외에도 외국
 첩보·암살단이라는 ‘카자흐족
 이탈자 운동 사건’, ‘여순
 대학살(The Port Arthur
 Massacre, 뤼순항사건)’,
 ‘내몽골의 지도자인

데미치돈로브(Demchigdonrov, 德王)의 아들 도가르수렌(Dugarsüren) 등의 사건,
 일본첩자라는 누명을 쓴 몽골목민의 ‘연락 사건’, ‘내몽골인들 사건’ 등 정치적
 조작사건들로 무고한 사람들 수백 명이 숙청당했다.

또한, 정교(政敎)분리법 위반, 선교, 흑세무민, 당·정부 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불신임 글이나 이야기 생산, 유언비어 유포를 질책해 처벌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념과 관련해 반대되는 “자본계급의 민족주의 의식을 드러냈다”라면서 애국주의와
 민족의 염원을 정신·심리적으로 지속적으로 억압하거나 금기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⁴¹

I.V.스탈린의 영향으로 1936년부터 몽골인민공화국의 주요 지도자가 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몽골인에 대한 숙청작업을 주도적으로 집행한 Kh.초이발산 원수의
 과오에 대해 몽골의 독립을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보장받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며 정당화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 본다면, 정치적 숙청의
 희생양이 되었던 몽골인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소련, 미합중국, 대영제국 이 세 나라의
 국가 수장들이 1945년 알타회담으로 몽골인민공화국의 현재 상황(現狀 status quo)을

⁴¹ 위의 책, 60.

인정하고, 1946 년 이웃국가인 러시아와 중국 양국이 독립을 인정함으로써 법적(de jure) 존립하게 된 대가라고 말할 수 있다.

5. 말기(1953 년~1989 년)

몽골에서의 정치적 숙청을 주도적으로 집행한 인물이자 몽골인민공화국의 지도자인 Kh.초이발산 원수가 1952 년에, 세계적인 ‘피의 숙청’ 기획자인 I.V.스탈린이 1953 년에 각각 사망하고, 소련의 정치적 입장이 유연해지면서 몽골에서 정치적 숙청 희생자들에 대한 육신제거, 다년 간의 투옥, 재산몰수 등의 심한 탄압 양상은 없어졌다

하지만, 몽골인혁당과 몽골인민공화국 정부의 지도자인 Yü.체덴발(Tsedenbal)이



Yü.체덴발 원수

이끄는 고위간부 일파의 정책 및 활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판하고, 몽골의 사회주의를 민족·민주적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한 인사들을 ‘지식인의 미혹’, ‘반(反)당파’, ‘반(反)몽골-소비에트 우호론자’라는 정치적 조작사건에 연루시키고, 견해에 따른 차별, 심리적 부담감 야기, 명예훼손, 불법해고, 전직·전보, 유배, 교육·보건·사회복지 서비스 수혜 기회 제한 등등의 각종 행정 수단으로 압박하고, 다원주의 의견 방해, 발언·출간 등의 법적 권리 및 자유 축소 행위가 1980 년대 말까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⁴²

몽골 영토의 의의에서 비롯해 서로 가깝게 지내던 대국들의 지정학적인 이해충돌에서 이기고자 했던 소련의 정책과 활동은 I.V.스탈린이 기획했던 정치적 숙청을 몽골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고, 이는 역사 연구가 증명하고 있다.⁴³

⁴² Баатар, С. *Эх орончид ба Цэдэнбал*, Улаанбаатар: Ган принт 2005; Нацагдорж, Ц. *Хилс гэсгээлийн золиос*, Улаанбаатар: Адмон 2007.

정치적 숙청의 부작용

정치적 숙청은 몽골에 심각한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으며, 그 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정치적 숙청으로 인하여 몽골의 신·구사회의 지식인층인 칭기스 칸 가계의 타이지 귀족들, 승려, 관리, 행정간부, 우수공무원들과 함께 몽골족의 전통, 문화유산의 계승, 민족의 열망, 애국사상은 뿌리채 뽑히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던 민족의 소중한 자산은 아주 희미해졌다.

이후 몽골민족적인 것마다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몽매한 문화, 봉건주의의 잔재라면서 소외시키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민족 문자를 봉건시대의 조잡한 문자라며 폐지하고, 1946년부터 러시아의 키릴문자를 수용해 사용하게 된⁴⁴ 일인데, 이를 지금까지도 바로잡지 못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몽골인들의 정신, 민족적 특성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



몽골족 전통 문자



러시아 키릴 문자

정치적 숙청의
여파로 몽골의 역사,
문화, 건축에서 거둔
수 많은 성과,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진
700여 사원 등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적

유산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졌고, 그 폐단은 지금도 몽골 지역을 여행할 때 확연히 관찰된다.

⁴³ Өлзийбаатар, Д. *Яагаад 1937 он*, Улаанбаатар: Үндэсний архивын газрын хэвлэх 2004.

⁴⁴ Батсайхан, О., нар. *Монголын түүх: 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8, 344-347.

정확히 몽골인 몇 명이 정치적 숙청으로 희생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다양한 양상으로 숙청당한 희생자 수가 5만 명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숙청을 통해 몽골 인구 중 16%, 성인남성 4/1에 해당하는 수의 몽골 남성들, 일례로, 몽골족 유전자의 핵심인 칭기스 칸의 자손, 고승, 정부 지도자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 민족의 지식계층을 말살한 것은 몽골족에게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왔고, 현재 몽골의 국가발전에도 여전히 피해를 주고 있다.

1990년 민주혁명으로 몽골인들이 사회주의 가치를 거부하고, 민족 가치의 회복을 선언한 이후 약 30년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몽골이 두드러지는 발전을 못 이루고 있다. 이는 대학살로 인하여 몽골 민족의 가치라는 유산이 계승되지 않고, 몽골인들 가운데 야심, 이기주의, 의존성, 허세, 수동성, 타인 무시, 이익 중시, 자민족 경시 등 좋지 않은 성격이 형성되고,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1940년 이후 사회주의 가치로 교육을 받은 오늘날의 몽골 장년 세대는 청년들에게 전통 몽골 문자, 역사, 문화, 풍속, 예절, 장유유서 등 민족의 전통을 물려주지 못 하였다. 이로 인하여, 민족적인 것을 무시하고, 인간의 도리를 망각하는 현상이 몽골 사회에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확연히 느껴진다.

정의 회복 과정

몽골에서의 정치적 숙청의 진실 규명과 정의 회복 과정은 정치적 숙청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및 사면, 희생자들의 피해 배상, 정치적 숙청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정치적 보장이라는 3대 기본 원칙 하에 시행되고 있다.

1. 정치적 숙청 희생자 사면 활동

국민들에게 누명을 씌워 강제로 처벌했던 행위를 발굴해 정치적으로 희생당한 이들을 사면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관하여 몽골정부는 1930년대부터 주의를

기울여왔다. 이를테면, '흠베(Lkhümbe) 사건'에 연루되어 부당한 처벌을 받은 일부 사람들을 1936년 민족혁명 15주년을 기념할 때 감옥에서 석방하였으며, 이는 숙청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킨 최초의 시도였다. 정치적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를 심사하는 것에 관하여 몽골인혁당 중앙위원회 의장단 회의에서 1939년 4월에 내린 의결에 따라, 내무부 부속 특별위원회는 1939년~1945년 사이에 2300여 명과 관련된 사건을 재조사하여 사건 자체를 무효화하였고, 이는 정치적 숙청 희생자 사면 활동에 중요한 한 걸음이 되었다.

1950년대 초 러시아와 몽골의 독재자들이 사망하면서 몽골인민공화국에서 1인 독재 체제가 사라지고, 정치 분위기가 비교적 부드러워져 집단지도체제가 복원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몽골인혁당의 지도부는 1930년~1940년대에 이루어진 사회 전반에 걸친 체포·징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를 다루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 재심리를 제안하였다. 몽골인혁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955년 5월 18일 회의에서 '뤼순항 사건'을 조사했던 위원회의 보고를 논의하였으며, 그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인물들을 석방하고, 수사에 불법적인 방법 사용을 허가했던 이전 시기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스탈린 우상 숭배를 적발해 비판했던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0차 대회회의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1956년 4월 소집된 몽골인혁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는 개인 숭배로 인한 혁명법 위반 행위를 상세히 조사하여 밝히도록 결정하였다. 몽골인혁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956년 4월 21일 결의로 일부 정치 사건을 감찰할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내무부에서 1932년~1947년에 결정한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았으며, 1940년대 초 숙청당했던 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B.바사안자브(Baasanjav) 등 36 인을 복권시켰다.

1957년 7월 소집된 몽골인혁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의 결정으로 인민대회의 의장단 산하에 개편 구성된 사면업무담당위원회는 1937년~1947년 내무부 활동으로 발생한 왜곡된 문제를 상세히 조사하고, 1930년대에 무고하게 처벌받은 294인을 사면하였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사람들을 계층에 따라 차별하는 편향적인 경향을 견지하여 타이지·귀족·관리·승려들의 사건을 조사하고도 사면을 보류하였다.

소련에서 정치적 조작사건으로 처벌받은 몽골의 A.아마르 전 총리, D.로솔(Losol) 국가소회의 부의장 등 정당 및 정치 지도자, 군간부 32인의 사건은 1956년~1960년에 소련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되어 희생자들이 복권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소식이나 확인서를 몽골국에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몽골인민공화국 검찰국에서 소련의 유권기관에 확인서를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 소련은 몽골에 A.아마르, P.겐덴, D.독숨, D.로솔, D.롭산샤라브 등의 사면에 관한 '극비' 통보서를 보내왔다. 이 통보에 근거한 인민대회의 의장단 산하 사면업무담당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상기의 인사들을 '반혁명분자'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결정해 사면하였다.

Kh.초이발산을 우상 숭배시한 피해를 없애기 위한 결정을 1962년에 소집된 몽골인혁당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재제출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숙청에 직접 가담했던 자들은 당·정 지도부에 그대로 있었고, 이는 사면활동 과정 및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62년 2월 8일 소집된 몽골인혁당 정치국 회의는 사면업무담당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평가하여 동 위원회를 해산시켰고, 그 업무를 대법원 및 사회안전보위부에 이첩하였다. 이 시기 이후 희생자 복권 업무 활동 및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하지만, 몽골인민공화국 대통령이 1990년 12월 25일 대통령령으로 국가 사면업무지도조직위원회(국가사면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정치적 조작사건으로 처벌받은 이들의 사건 조사, 희생자 사면 활동이 매우 활발해졌다. 몽골국회가 1998년

초 '정치적 조작사건 희생자 사면 및 배상금 지급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정치적 숙청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사면 활동은 통합된 이 법으로 조율할 수 있게 되었다.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해 정치적 조작사건으로 형을 선고 받은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그러한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어도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거나 생명을 잃은 자의 문제인 경우에는 국가검찰청, 정치적 이념으로 인하여 당시의 정당 및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유배를



당 결정을 내린 기관이 소재했었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제 1 심 법원이 각각 심사 및 사면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대법원과 국가검찰청의 소관 사건의 심사는 정보총국의 수사과가 단독 수행하게

되어 있다.

몽골의 사법기관들은 현재 몽골 국민 중 3만1천여 명이 1921년~1990년 사이 정치적 조작사건에 희생당했음을 확정하여, 명예회복이 되도록 복권시켰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숫자는 당시 몽골 성인 인구의 10%에 해당하며, 복권된 희생자들 중 승려 약 18900명, 귀족, 관료 2450명, 신지식인 3410명, 군인 1170명, 사회적 지위 불상자(不詳者) 약 5370 명, 그 중에서 여성이 10여 명, 아동이 소수 있었다. 전체 숙청 희생자들 중 3/2는 총살형으로 처형당하였으며, 7500명은 징역형, 나머지는 집행유예, 벌금, 해직, 유배, 근거없는 수사 등으로 숙청당했다. 또한, 정치적 조작사건에 연루되어 당한 고문으로 인하여 124명이 조사 중 목숨을 잃었다.

2. 정치적 숙청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

정치적 숙청 희생자들의 피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몽골정부는 1998년부터 숙청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사면 배상금 50만 텡그릭이나 1 백만 텡그릭(몽골은행 2019년4월26일 환율 기준 1백만 텡그릭은 380미국 달러에 상응), 희생자 및 그 배우자(부인, 남편)에게 아파트 또는 그 가격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결과, 희생자 유족 1만8천여 명에게 사면 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희생자 약 360명에게 아파트를 제공하였다.

정치적 조작사건 희생자의 자녀들은 사회주의 시대에 사회적으로 부의 공평한 분배 및 교육의 기회를 제한당하는 등 소외당했다. 그 피해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법원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구의 결정만 하더라도 처형당한 희생자의 자녀에게 8천만 텡그릭(30400미국 달러), 징역형을 받은 희생자의 자녀에게 4천만 텡그릭(15200미국 달러..) 상응의 아파트를 각각 배상 지급하는 법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3. 정치적 숙청의 재발을 방지할 사회-정치적 보장책 마련

정치적 숙청의 재발을 방지할 정치-사회적 보장책 마련에 관하여 몽골 정부는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 왔으며, 정치적 희생자를 기념하고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거나 역사적 진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기획해 왔다.

수도인 올라안바야타르에
소재하는 정치적 숙청 희생자

기념박물관(1996년), 기림비(1997년)를 포함하면, 몽골에 희생자 기림비 56기, 박물관 코너 45개, 정치 희생자 기념 거리·광장·학교·기관 66곳, 탑 114기, 전광판 28개,

기림기둥 31개가 있다.⁴⁵ 몽골 지도자들을 정치적 조작 사건으로 누명을 씌워 처형했던 러시아연방 모스크바시 보토히와(Butova)에 2001년 몽골은 국비로 기림비를 세워 국외에서 희생당한 자국민을 추모하고 있다.



그 외, 많은 사람을 포함한 대대적인 체포가 시작되었던 1937년 9월 10일을 1996년에 '정치적 숙청 희생자 기념일'로 법제화한 이후 매년 9월 10일에 모두가 희생자들을 기리며 추모하는 것이

정례화되었다.

이날 아침 올라안바아타르시 서편에 위치하면서, 1937년 9월 10일 체포되었던 정부인사들을 처형한 송긴하이르항산(Songjino Khaikhan山)과 승려들을 포위하여 살해한 함빈 오보오(Khambin ovoo)라는 곳에서 정부 및 시민 대표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더욱이 낮 12~13시 사이에는 정부청사 서편에 위치하는 정치적 숙청 희생자 기림비에 몽골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과 행정기관 공직자들, 희생자의 자녀들이 묵념 및 헌화를 하면서 정치적 숙청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이 때, 대중들이 정치적 숙청 희생자 기념박물관을 관심있게 관람하고, 때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기자회견 및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같은 날, 전국의 도·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내 사면 문제를 겸하는 담당 공직자들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정치적 숙청 희생자 자녀들과의 면담, 적절한 금융지원 제공,

⁴⁵ Бодбаатар, Ж.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түүний уршиг, үр дагавар*,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7, 58.

기림비·기림판에 대한 묵념, 대중을 대상으로 정치적 숙청의 폐단을 이해시키기 위한 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념일인 이날, 과거에 숙청을 당했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하여 1996년에는 Ts.엘벡도르지(Elbegdorj) 국회 부의장 겸 국가사면지도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수흐바야타르광장에서 개최된 '숙청 희생자 추모일' 최초의 집회에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2000년에는 N.엔흐바야르(Enkhbayar) 몽골인혁당 당수가 몽골인혁당을 대표하여 몽골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을 통해, 2018년에는 Kh.바트톨가(Battulga) 몽골

대통령이 동 추모비 옆에서 몽골의 국가 수장으로서 각각 국민에게 사죄하였다. 그리고, 몽골인민당 창당 90주년 기념 축하회의에서 2011년 3월 1일 당시 동 정당의 당수였던 S.바트볼드(Batbold) 당 대표가 정치적으로 숙청당한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였으며, 숙청을 근절시키거나 확산을 방지할 여력이 없었던 점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몽골인민당이 재차 용서를 구한다고 표명하였다. 이는 몽골에서의 정치적 숙청이 격화되고 반복될 때 몽골 정부,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몽골인민혁명당(몽골인민당)과 그 지도부가 어찌 되었던 과오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숙청의 역사적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영원히 기억되도록 추모하고, 정치적 숙청의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데 있어 학술활동이 중요하다. 이를 감안하여, 1991년 국가사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치적 희생자 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M.린친 박사
(1947~2009)

M.린친(Rinchin) 박사가 소장이었던 동 연구센터는 정치적 숙청의 원인, 폐해, 과제 등의 문제를 심층 연구하였으며, 정치적 희생자의 사면, 배상금 지급, 명예회복, 기념, 역사적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정책 및 활동에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동 센터는 몽골에서의 정치적 숙청 문제를 연구한 서적·소책자·기록영화 약 70종을 제작하였고, 다수의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외 『정치적 희생자 전기(傳記)』, 『정치적 희생자 자료사』(총 20책), 희생자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소사전인 『정치적 희생자 추모 백서(白書)』(총 4책) 300~1000부를 제작, 인쇄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

또한, 매년 ‘정치적 희생자 추모일’을 맞아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영원히 기억되기를 지향하는 다수의 홍보성 기사나 기록물을 정기간행물, 라디오, 전자매체 등에 게재·방송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숙청의 부작용을



정치적 희생자 연구센터 직원들 (2005.09.10)

각성하고 이해시키는 활동을 기획해 왔다.

그러나, 몽골 정부는 2014년 ‘정치적 희생자 연구센터’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쇄하고, 활동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이로서, 1998년도 법에 명시하고 있는 정치적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영원히 기억되도록 추모하거나 정치적 숙청의 폐단을 청산하는 등 정치적 숙청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장책을 마련해야 할 몽골 정부의 의무가 부재하게 되었다.

1990년 창설된 '몽골



‘정치적 희생자 연구센터’의 활동 성과물 중 일부

정치희생자연맹'이라는 비정부기구는 정치적 숙청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에 지지를 표하며, 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동시에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활동 중이다. 동 연맹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 근년 들어 몽골 주재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Foundation)에서 후원을 해 주고 있으며, 다양한 공동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숙청의 부작용 해소 및 정의 회복을 향한 몽골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현명한 정책, 진정성, 단결, 상호이해 등이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정치적 숙청의 부작용을 해소하려고 활동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1. 몽골민족 전체를 포함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정치적 숙청에 관하여 몽골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국회는 정치적으로 실질적 결론을 제시할 것,

2. 정치기구나 정치인들이 국익과 관련된 정치적 숙청 문제로 정치쇼(포폴리즘)를 하는 것을 금할 것,⁴⁶
3. 1932년 무장 봉기에 관하여 몽골정부는 특별히 정치적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은 수천 명에 대해 복권시킬지⁴⁷, 복권시키지 않을지⁴⁸에 대한 문제를 각별히 살펴볼 것,
4. 몽골 국회부의장이 국가사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에 관한 법적 조율은 몽골의 현재 실상, 즉 의회선거가 4년마다 치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사면위원회의 정책, 활동, 조직, 인사, 역량을 저해하는 기본 요소가 되고 있는 바, 이를 변경하여, 동 위원회를 정치에서 독립시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
5. 사회주의 이념에 준하여 제작되어 역사가 왜곡된 영화를 대중에게 방영함으로써 정치적 숙청 희생자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중단하고, 그 대신 숙청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기념하는 영화를 제작할 것,
6. 몽골 및 러시아연방 기록보관소(archives)에 기밀로 분류되어 보관 중인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학술자료로 편입시켜 연구하는 방법 등으로 몽골에서의

⁴⁶ Батсайхан, О. “Монголд гарса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л, сургамж, дүгнэлт”, эмх./ред. Конрад-Аденауэр сан, *Монгол болон ХБНГУ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цагаатгал: Дүгнэлт, сургамж, цаашид авах арга хэмжээнүүд*, Улаанбаатар, 2017, 48-57.

⁴⁷ Өлзийбаатар, Д. *Яагаад 1937 он*, Улаанбаатар: Үндэсний архивын газрын хэвлэх, 2004, 291-292; Мөнхбаяр, Х., нар. Хүрэн бэлчирийн товчоон,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4, 103-114; Кузьмин, С.Л., Оюунчимэг. Социализмын эсрэг 1932 оны Монгол дахь бослого. Улаанбаатар: Мөнхийн үсэг 2014; Кузьмин, С.Л., Оюунчимэг. *Вооруженное восстание в Монголии в 1932 г*, Москва: МБА 2015; Кузьмин, С.Л. “О роли иностранных влияний на восстания проти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изма в Монголии”, *Научный диалог* 1 (49), 2016, 225—233 ([http://nauka-dialog.ru/assets/userfiles/1240/225-233_Kuz'min_ND_2016_1\(49\).pdf](http://nauka-dialog.ru/assets/userfiles/1240/225-233_Kuz'min_ND_2016_1(49).pdf),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 Болдбаатар, Ч. “1932 оны зэвсэгт бослогод оролцогчдыг цагаатгах ёстой юу?”, эмх. П.Нарандалай, П.Оюу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Шалтгаан, үр дагавар, сургамж*”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лын э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Конрад-Аденауэр сан, 2017, 134-142; Батсайхан, О., нар. *Монголын түүх: 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8, 459-462; ““Социализмын эсрэг 1932 оны Монгол дахь бослого” ном хэвлэгдэн гарлаа”, <http://tsauzbuk.mn/?p=985>,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⁴⁸ Цэрэнбалжир, Д. 1932 оны зэвсэгт бослого. Улаанбаатар: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1990; Зинамидар, Б. *Гадаадаас турхирсан 1932 оны бослого, Улаанбаатар: Хайтан 2013.*

정치적 숙청의 역사적 진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규명할 연구활동을 위한 종합정책을 계획적으로 기획할 것,

7. 정치적 숙청 희생자들의 유족·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사면 배상금 지급의 효율화, 배상금 지급 활동 중 인권 및 정의에 위배되는 상황 발생을 방지할 것,
8. 정당에 당원을 가입시키지 않고, 국민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선거제도를 변경할 것. 이 방법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정당 소속에 따라 분열되거나 상호 법적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중단시킬 것,
9. 정치적 숙청의 정당화, 숙청의 부작용 무시, 숙청 집행자들의 과오 은폐 등의 행위를 중단할 것,
10.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숙청의 부작용으로 인해 단절된 민족적 가치의 근본적인 회복없이는 향후 몽골인, 몽골국가 모두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 별도의 몽골정부 정책과 활동을 통하여 기존의 부작용을 시정할 것 등이다.

몽골정부는 20 세기에 자행된 정치적 숙청 및 인권침해의 부작용 해소와 정의회복에 관하여 그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단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일삼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고 정의를 상실한 정치적 숙청의 일부 형태가 21 세기에도 몽골에서 새로이 발생하고 있다. 근래에 연구자, 정치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들이 공무원의 당 소속 및 개인적 견해에 따른 차별, 직위 강등이나 해고 현상의 일반화, 일부 인사들에 대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뇌물이나 직무와 관련지어 체포·수사하는 등의 업무상 명예훼손, 정치·경제적 기회 제한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⁴⁹

일부 정치관료나⁵⁰ 비정부기구⁵¹의 비공식 소식에 따르면, 수 차례의 몽골 국회의원 선거 이후 평균적으로 전체 공무원의 약 10% (2008년부터 8000명, 2012년부터 16000명, 2016년부터 22000명)가 해고되었으며, 불법해고자 급여 배상용으로 2017년 몽골 예산 수정안에 46억 텡그릭이 반영되었고⁵², 이는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그 중에서 정치적 희생자 연구센터가 폐소될 때 불법해직을 당한 피해직원들 중 단 4명에게만 법원의 법적 판결에 따라 총 101개월 치 급여에 준하는 규모의 급여상 피해를 2017년에 몽골 정부가 배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몽골에서 새로운 시대의 정치적 숙청이 정치적 숙청의 재발을 방지할 임무를 수행하던 정부 기관까지 포함하여 확대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모든 상황은 몽골의 민주화와 정의가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점, 그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시대에 몽골을 유일집권했던 정당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몽골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으로서 정치적 명성을 지켜 왔다는 점에서 비롯된 부작용이다.

이상의 상황을 살펴 보았을 때, 몽골에서 정치적 숙청으로 인해 잃어버린 정의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인권에 침해되는 부정적인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나라와 경험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⁴⁹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Шалтгаан, үр дагавар, сургамж”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эмх. П.Нарандалай, П.Оюун.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Конрад-Аденауэрийн сан, 2017, 10-12.

⁵⁰ “Халагдагсдын цалинг тушаал гаргасан даргаар нь төлүүлэе”, <http://unuudur.mn/Халагдагсдын-цалинг-тушаал-гаргасан-даргаар-нь-төлүүлэе/>,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⁵¹ “Дархлаа нь давжаарсан төрийн алба”, http://eagle.mn/r/44329_Хамгийн_сүүлд_2019_оны_IV_сарын_26.

⁵² Адъяамаа, Ш. “Хууль бусаар халагдвал нөхөн олговрыг ажлаас халсан албан тушаалтнаас гаргуулна”, <https://news.mn/r/2101123/>,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몽골에서의 정치적 숙청 상황과 정의 회복 과정에 대한 몽골 측의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처음 소개할 기회를 준 대한민국의 국립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고맙습니다.

한국어 번역자
양혜숙(몽골 국립 올라안바아타르대학교)
Yang Hyesuk(Ulaanbaatar State University)

인용 연구 자료 출처

기록보관소 원전

1. МУУТА-УТНОНБА. X 4, Д 1, ХН 27.
2. МУУТА-ТБА. X 1, Д 2, ХН 729.
3. МУУТА-ТБА. X 1, Д 2, ХН 688.

연구서

4. Авирмэд, Д. Дүрвэх хөдөлгөөн ба Улсыг аюулаас хамгаалах байгууллага (1930-1934), Улаанбаатар: Тагнуулын Ерөнхий Газр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2012.
5. Амарсанаа, Ж., Батсайхан, О. (эмх.)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хууль*, Улаанбаатар 2004.
6. Баатар, С. *Эх орончид ба Цэдэнбал*, Улаанбаатар: Ган принт 2005.
7. Батсайхан, О. Монгол үндэстэн бүрэн эрхт улс болох зам (1911-1946), Улаанбаатар: Адмон 2007.
8. Батсайхан, О., Лонжид, З., Энхбат, Ч., Баатар, С., Амарсанаа, С. *Монголын түүх: 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8.
9. Баярсайхан, Д., Болдбаатар, Ж., Гантулга, Ц., Гонгоржав, У., Дашдулам, Д., Дэлгэржаргал, П., Жамбалсүрэн Ц., Жигмэддорж, Э., Лонжид, З., Урангуа, Ж., Мягмар, П., Чинзориг, Б., Энхжаргал, Д., Энхцэцэг, Д. *Монгол Улсын түүх*. Улаанбаатар: МУИС пресс 2017.
10. Болдбаатар, Ж. эмх. *XX зууны Монгол Улс: Шилдэг үзмэрийн дээжис*, Улаанбаатар: Мөнхийн үсэг 2017.
11. Бодбаатар, Ж.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түүний уршиг, үр дагавар*,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7.
12. Гэндэн, Т. *Гурван түмэн хүний амь*, Улаанбаатар: Шувуун саарал 1999.
13. Гэндэн, Т. Улсыг аюулаас хамгаалах байгууллагын ажилд гарч байсан алдаа завхралыг шалгасан дүнгийн тухай *нууцлагдсан ил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Урлах эрдэм 2002.
14. Зинамидар, Б. *Гадаадаас турхирсан 1932 оны бослого*, Улаанбаатар: Хайтан 2013.
15. Кузьмин, С.Л., Оюунчимэг. Социализмын эсрэг 1932 оны Монгол дахь бослого. Улаанбаатар: Мөнхийн үсэг 2014.
16. Кузьмин, С.Л., Оюунчимэг. *Вооруженное восстание в Монголии в 1932 г*, Москва: МБА 2015.
17. *Лхүмбэ-110 жи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ал*, эмх. С.Энхбаяр. Улаанбаатар: Монгол хэвлэл 2012.
18. *“Лхүмбийн хэрэг-80 жи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ред. Л.Мундагбаатар, Х.Мөнхбаяр.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3.
19. *Монгол болон ХБНГУ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цагаатгал: Дүгнэлт, сургамж, цаашид авах арга хэмжээнүүд*, эмх./ред. Конрад-Аденауэр сан. Улаанбаатар 2017.
20.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1921-1940 о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судлалын бага хурлын илтгэлүүд*, эмх. Ц.Гэрэлт-Од, ред. Д.Цогтбаатар. Улаанбаатар: Хөх судар прринтинг 2010.
21. Монгол Улсын Архивын хэрэг эрхлэх газар, Оросын Холбооны улсын Төрийн архивын алба. *Коминтерн ба Монгол: Баримт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йн мэдээллийн компани 1996.
22. *Монгол Улсын төр нийгмийн зүтгэлтэн, Ардын түр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анхны Ерөнхий Сайд Дамбын Чагдаржав (1880-1922)*, эмх./ред. С.Чулуун, Н.Хишигт.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0.

23. Мөнхбаяр, Х., Эрдэнсайхан, А., Хүрэлбаатар, П.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амтрын товчоон*, Боть 18,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эхлэл, өрнөл,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3.
24. Мөнхбаяр, Х., Бат-Ирээдүй, Ж., Отгонсүрэн, Н., Түмэнжаргал, Н., Оюун-Эрдэнэ, Б., Давхарбаяр, М., Мөнхнасан, Л., Сайнбуян, Б. нар. Хүрэн бэлчирийн товчоон,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4.
25. Нацагдорж, Ц. Хилс гэсгээлийн золиос, Улаанбаатар: Адмон 2007.
26. Өлзийбаатар, Д. *Яагаад 1937 он*, Улаанбаатар: Үндэсний архивын газрын хэвлэх 2004.
27. Ринчин, М.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ба цагаа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2000.
28. Ринчин, М., Дүйнхэржав, Г., Дамба, Н., Далайхүү, Д., Болдбаатар, Ж., Ичнноров, С., Чинбат, И., Дашдаваа, Ч.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амтрын товчоон*, Боть 15, *Ерөнхий сайд А.Амар: Үзэл бодол, үйл ажиллагаа*, Улаанбаатар: Улаанбаатар хэвлэл 2012.
29.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Шалтгаан, үр дагавар, сургамж”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эмх. П.Нарандалай, П.Оюун.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Конрад-Аденауэрийн сан 2017.
30. Цэрэнбалжир, Д. 1932 оны зэвсэгт бослого. Улаанбаатар: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1990.
31. Цэрэндулам, Г. *П.Гэндэн: Эцгийн тухай дур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MTU 2000.

학술논문

32. Кузьмин, С.Л. “О роли иностранных влияний на восстания проти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изма в Монголии”, *Научный диалог* 1 (49), 2016, 225—233.
33. Мөнхбаяр, Х. “Монголд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эхэлсэн цаг хугацааны тухайд”, *Түүх* 13, 2014, 51-73.
34. Мөнхбаяр, Х. “Сюй Шужэний хятад цэргийн дэглэм хийгээд Чэнь И-гийн Иргэн засгийн завсарт тэсч үлдсэн Монголын төр”, *Түүх* 11, 2012, 98-149.

신문기사

35. Мөнхбаяр, Х. “Цэвээн тэргүүнээс Чимидийн Энхээ хүртэл”, *Өнөөдөр* 222 (4686), 2012/09/25, А хэсэг, 4.
36. Мундагбаатар, Л., Мөнхбаяр, Х.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түүний хор холбогдол, хэлмэгдэгсдийг цагаатгахын учир”, *Өнөөдөр* 209 (5003), 2013/09/10, А хэсэг, 7.

전자매체

37. Адьяамаа, Ш. “Хууль бусаар халагдвал нөхөн олговрыг ажлаас халсан албан тушаалтнаас гаргуулна”, <https://news.mn/r/2101123/>,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38. “Дархлаа нь давжаарсан төрийн алба”, <http://eagle.mn/r/44329>,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39. Кузьмин, С.Л. “О роли иностранных влияний на восстания проти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изма в Монголии”, [http://nauka-dialog.ru/assets/userfiles/1240/225-233_Kuz'min_ND_2016_1\(49\).pdf](http://nauka-dialog.ru/assets/userfiles/1240/225-233_Kuz'min_ND_2016_1(49).pdf),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40. Мөнхбаяр, Х. “Тогтох тайжаас Чимидийн Энхээ хүртэл” (2017.09.12), <https://www.24tsag.mn/a/154595>,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4.
41. ““Социализмын эсрэг 1932 оны Монгол дахь бослого” ном хэвлэгдэн гарлаа”, <http://tsauzbuk.mn/?p=985>,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42. “Халагдагсдын цалинг тушаал гаргасан даргаар нь төлүүлье”, <http://unuudur.mn/Халагдагсдын-цалинг-тушаал-гаргасан-даргаар-нь-төлүүлье/>,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43. “Vyshinsky Andrey Yanuarevich (1883-1954)”, <http://odessa-memory.info/index.php?id=402>,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5.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БА
ШУДАРГА ЁСЫГ СЭРГЭЭН ТОГТООХ ҮЙЛ ЯВЦ
(1921-2019 он)**

Халтарын Мөнхбаяр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Сургууль)

Судлаач миний бие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талаар 2001 оноос эхлүүлсэн судалгааны ажлынхаа зарим үр дүн, шударга ёсыг сэргээн тогтоох үйл явцад 2004 оноос биечлэн оролцсон туршлагаа танилцуулах болно.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Улс төрийн байр суурь болон гарал угсаа,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айдал зэрэг олон шалтгаанаар нийгмийн гишүүдээ хэлмэгдүүлэн хохироож байсан үзэгдэл дэлхийн улс орнуудад гарсаар ирсний дотор Монгол Улс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ихээхэн онцлогтой юм.

Монголчуудыг Эх орноосоо урвах, Тагнуул хийх, Төр, нийгмийн зүтгэлтний амь биед халдах, Төрийн эрх мэдлийг хууль бусаар авах, Зэвсэгт бослого гаргах, Улсыг хорлон сүйтгэх, Төрийн эсрэг цуурхал дэгдээх, Улсын нууц задруулах, Хууль бусаар улсын хил нэвтрэх зэрэг улс төрийн хэрэгт хилсээр холбогдуулан хуулиас гадуур мөрдөн шалгаж, шударга бус шүүхээр шийтгэх, хавчин гадуурхах зэргээр хэлмэгдүүлж, хууль ёсны эрх, эрх чөлөөг нь хаан боогдуулж, шударга ёсыг уландаа гишгэх явдал 1921-1990 он хүртэл тасралтгүй үргэлжилсэн. Тиймээс, улс төрийн эрх мэдэл бүхий бүлэг этгээд улс төрийн явцуу ашиг сонирхлоо хамгаалах, бататгахын тулд төрийн хүчийг ашиглан нийгмийн гишүүд, зарим давхаргаа улс төрийн хэрэгт хилсээр холбогдуулан хууль бусаар шийтгэх, устгах, хохироох зэрэг улс төрийн хүчирхийллийн үйлдлийг Монголд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хэмээн тодорхойлдог.¹ Үүнийг НҮБ-аас 1948 онд баталж, Монгол Улс 1966 онд нэгдэн орсон, “Төрлөөр устгах гэмт хэргээс урьдчилан сэргийлэх, тийм хэрэг үйлдэгчдийг шийтгэх тухай конвенц”-д заасан “төрлөөр устгах гэмт” (Genocide) мөн гэж үзэх хандлага сүүлийн үед давамгайлж байна.²

¹ Мундагбаатар, Л., Мөнхбаяр, Х.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түүний хор холбогдол, хэлмэгдэгсдийг цагаатгахын учир”, *Өнөөдөр* 209 (5003), 2013/09/10, А хэсэг, 7.

² Пүрэвдорж, Л. “Хорьдугаар зууны Монголд үйлдсэн яргалал бол төрлөөр устгах гэмт хэрэг мөн”, эмх. Ц.Гэрэлт-Од, ред. Д.Цогтбаатар,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1921-1940 о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судлалын бага хурлын илтгэлүүд*, Улаанбаатар: Хөх судар принтинг, 2010, 24-32; Батсайхан, О., нар. *Монголын түүх: 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8, 434-512;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Шалтгаан, үр дагавар, сургамж”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эмх. П.Нарандалай, П.Оюун.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Конрад-Аденауэрийн сан, 2017, 10-12.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1921 онд эхэлж, 1990 он хүртэлх 70 шахам жилд монголын нийгмийг бүхэлд нь хамран үргэлжилсэн урт удаан хугацааны үйл явц болохыг түүхийн баримт, шүүхийн хууль ёсны шийдвэр баталдаг.³

XVII зууны сүүлчээр манж үндэстний Чин улсын бүрэлдэхүүнд багтсан монголчууд XX зууны эхнээс тусгаар тогтнолоо сэргээн, үндэстний төр улс (Nation state) байгуулахын төлөө олон арван жил тэмцэж, олон улсын эрх зүйн хэмжээгээр хүлээн зөвшөөрөгдсөн бүрэн эрхт улс (De jure) болох замдаа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хор хохирлыг даван туулахад хүрсэн.

Монгол орны нутаг дэвсгэр XIX зууны сүүлчээс Орос, Япон тэргүүтэй олон улсын



Монгол Улсын хаан
(1911-1924 он)

геополитик, геостратеги, гео үзэл суртлын сонирхлыг агуулсан орчин болон хувирсан нь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үндсэн шалтгаан, бодит хүчин зүйл болжээ.⁴

Үүнийг тодруулахын тулд Монгол Улсын 1911-1921 оны улс төрийн нөхцөл байдлыг анхаарч үзэх учиртай. 1911 оны үндэстний эрх чөлөөний хувьсгалаар Чин улсын эрхшээлээс салсан Гадаад монголчууд монголын буддын шашны тэргүүн Жавзандамба хутагтыг хэмжээгүй эрхт Богд хаанаар өргөмжлөн, эртний түүхт туурга тусгаар Монгол Улсаа сэргээн байгуулж, Өвөр монгол, Барга, Хөх нуур, Шинжаан дахь нийт монголчуудыг нэгтгэн нийлүүлэх бодлого

явуулж эхэлсэн юм.

Гэвч, Хаант Орос Улс болон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Хятад Улс (цаашид “БНХУ” гэх)-ын нөлөөгөөр Монгол Улс 1915 оноос хятадын харьяаны өөртөө засан тохинох эрхтэй (автономит) улс болж, төрийн биеэ даасан байдлаа хязгаарлуулжээ. Түүгээр зогсохгүй, 1919 оны сүүлчээр хятадын цэргийн эрхтэн Сүй Шү Жан буюу Сюй Шучжэн (徐樹錚; 字 又錚; Xú Shùzhēng)-ий удирдсан хятадын цэргийн хүчин Монголын автономит эрхийг

³ Мөнхбаяр, Х., нар.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амтрын товчоон, Боть 18,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эхлэл, өрнөл,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3, 10-269; Мөнхбаяр, Х. “Монголд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эхэлсэн цаг хугацааны тухайд”, Түүх 13, 2014, 51-73; Мөнхбаяр, Х. “Цэвээн тэргүүнээс Чимидийн Энхээ хүртэл”, Өнөөдөр 222 (4686), 2012/09/25, А хэсэг, 4; Мөнхбаяр, Х. “Тогтох тайжаас Чимидийн Энхээ хүртэл” (2017.09.12), <https://www.24tsag.mn/a/154595>,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4.

⁴ Өлийбаатар, Д.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учир шалтгаан, уг сурвалжийн тухайд”, эмх. Ц.Гэрэлт-Од, ред. Д.Цогтбаатар,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1921-1940 о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судлалын бага хурлын илтгэлүүд, Улаанбаатар: Хөх судар принтинг, 2010, 12-19.

устгаж, хааныг нь шоронд хорьсон байна. Харин, 1921 оны эхээр оросын цэргийн офицер барон Унгерны удирдсан Оросын хаант засаглалыг дэмжигч Цагаан гварди монголчуудтай хамтран Монголын нийслэлээс хятад цэргийг хөөн зайлуулаад, Богдыг дахин хаан ширээнд залж, Монголын төрийг сэргээн тогтоожээ.⁵

Гэвч Нийслэл Хүрээнээс зугадсан хятад цэргийн үндсэн хүч Монголын умард нутгийн эзэрхсээр байсны дээр барон Унгерний амжилтад урамшсан цагаан оросын цэргийн бүлэглэлүүд Монголд нэвтрэн цугларч, хувьсгалт улаан оросын эсрэг тулаанд бэлтгэж эхлэв.

Улс төрийн ээдрээтэй ийм нөхцөлд Монгол орныг гадаад орнуудын цэргийн эрхшээлээс чөлөөлөх зорилт монголын эх орончдын өмнө тулгарсан байна. Хятадын



цэргийн дарангуйллыг эсэргүүцсэн үзэл санааны доор 1919-1921 онд төлөвшсөн монголын анхны улс төрийн нам Монгол Ардын Нам (цаашид “МАН” гэх) энэхүү түүхэн зорилтыг хангахын тулд 1917 оны Октябрийн хувьсгалыг хийсэн В.И.Ленин тэргүүтэй Коминтерн, Зөвлөлт Орос Улстай хамтрахаас өөр аргагүй байдалд хүрсэн юм.

Тэдний цэрэг, эдийн засаг, улс төрийн дэмжлэгээр БНХУ-ын гэмн цэрэг болон Хаант Оросын цагаан цэргийн ноёрхлоос Монгол орноо чөлөөлсөн МАН 1921 оны 7 дугаар сарын 10-нд Монгол төрийн эрхийг Богд хааны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Ард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т шилжүүлэн авч, хааныхаа эрх хэмжээг хязгаарлах зэргээр хамтрагчдынхаа тулган хүлээлгэсэн социалист улс төрийн бодлогыг хэрэгжүүлж эхэлсэн нь Монголд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эхлэх анхдагч нөхцөл болжээ.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учир шалтгаан, мөн чанар, хэлмэгдэгдсийн хүрээ, хэлмэгдүүлэгч эзэн холбогдогч, үр дагаврыг илүү тодорхой ойлгож мэдэхийн тулд уг үйл явцыг дараах үечлэлийн хүрээнд тоймлон хувааж, тус тусад нь нягтлан шинжлэх ёстой.

Нэг. Эхлэл үе (1921-1924 он)

1919 онд байгуулагдсан Коминтерн (Коммунист Интернационал) буюу Олон улсын коммунист хөдөлгөөний байгууллага дэлхий дахинд коммунист хувьсгал хийх үндсэн нөхцөл нь хятадын коммунист хувьсгалыг ялалтад хүргэх явдал бөгөөд үүний түшиц

⁵ Мөнхбаяр, Х. “Сюй Шужэний хятад цэргийн дэглэм хийгээд Чэнь И-гийн Иргэн засгийн завсарт тэсч үлдсэн Монголын төр”, Түүх 11, 2012, 98-149.

газрыг Монгол орон гэж үзэж байв. Тиймээс, улс орноосоо харийн түрэмгийлэгчдийг үлдэн хөөж, үндэсний эрх чөлөөгөө эгүүлэн олж авах гэсэн монголчуудын тэмцлийг Коминтерн ОК(б)Н (Оросын коммунист большевик нам)-ын Сибирийн товчооны Дорно дахины ард түмний секц, АДНБДНГ (Алс Дорнодын Нарийн бичгийн дарга нарын газар)-аар дамжуулан дэмжиж, дундад эртний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тай нийгмээ ардчилах зорилготой 1921 оны Монголын үндэсний ардчилсан хувьсгалын⁶ үйл хэрэгт идэвхийлэн оролцжээ.

1921 оны хувьсгалын дүнд Монголд хуучны хаант засаглалаас орчин үеийн засаглалын хэлбэрт шилжих завсрын шинжтэй Ардын эрхт, Хэмжээт цаазат хаант төр 1924 оны дунд үе хүртэл тогтсонтой холбогдон тус улсын цаашдын хөгжлийн талаар:



Ерөнхий сайд Д.Бодоо, Бүх Цэргийн жанжин С.Данзан, Коминтерний төлөөлөгч Э.Ринчино

1. Англи улс шиг хэмжээт эрхт хаант засагтай улс байгуулах (Ард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Ерөнхий сайд Д.Бодоо нар),⁷
2. Хүн төрөлхтний нийтлэг хөгжлийн чиг шугамыг баримтлан, Монголыг үндэсний ардчилсан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улсуудын адилаар биеэ даан хөгжүүлэх (Монгол Ардын намын анхны дарга С.Данзан нар),⁸
3. Монголыг Зөвлөлтийн нэгэн адил социалист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улс болгох (МАН-ын Төв Хорооны тэргүүлэгч,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зөвлөх түшмэл, Цэргийн Зөвлөлийн дарга зэрэг Монголын хамгийн дээд албан тушаалыг хашиж явсан, Коминтерний

⁶ Болдбаатар, Ж. эмх. *XX зууны Монгол Улс: Шилдэг үзмэрийн дээжис*, Улаанбаатар: Мөнхийн үсэг, 2017, 25.

⁷ МУУТА-УТНОНБА. X 4, Д 1, ХН 27. 17-нү .

⁸ Өлзийбаатар, Д. *Яагаад 1937 он*, Улаанбаатар: Үндэсний архивын газрын хэвлэх, 2004, 153-155.

төлөөлөгч Элбэгдорж Ринчино)⁹ гэсэн үзэл бодол монголын улс төрчдийн дунд давамгайлж байв.

Гэвч, Коминтерн дэлхийн хувьсгал тухай гео үзэл суртлын бодлогоо хэрэгжүүлэхийн тулд монголын үндэсний ардчилсан үзэлтэй улс төрчдийг “Ардын засгийг устгаж, эзэрхэг засгийг байгуулахыг оролдсон” гэх улс төрийн хилс хэрэгт хэлмэгдүүлэх замаар 1921 оны Монголын хувьсгалын үндэсний ардчилсан зорилтыг тасалдуулж, коммунист үзэл суртлаа тулган хүлээлгэсэн юм.

Энэ нь Богд хааны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Сангийн сайд, тэргүүн зэргийн тайж Лувсанцэвээн, хааны цэргийн түшмэл Тогтох тайж нарыг 1921 оны 7 дугаар сарын сүүлчээр баривчлан хорьж, эрүүдэн байцааснаар эхэлж,¹⁰ Ард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Ерөнхий сайд Д.Бодоо нарын 15 хүнийг 1922 оны намар,¹¹ Бүх Цэргийн жанжин С.Данзан,



Тогтох тайж

Лувсанцэвээн тайж

Монголын Хувьсгалт Залуучуудын Эвлэлийн Төв Хорооны гишүү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нарийн бичгийн дарга Баваасан хоёрыг түүнээс яг 2 жилийн дараа 1924 оны 8 дугаар сарын сүүлчээр тус тус шүүхийн шийдвэргүйгээр цаазласнаар биелэл болжээ. Энэ бүх ажиллагааг Коминтерний Монгол дахь төлөөлөгч Элбэгдорж Ринчино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оросын нөлөөн дэх Монголын Дотоодыг хамгаалах газар гүйцэтгэжээ.

Түүнээс гадна, 1921 оны хувьсгалын удирдагчдийн нэг, жанжин Д.Сүхбаатар 1923 оны эхээр, Богд хаан 1924 оны хавар гэнэт нас барцгаасан нь Коминтерний энэхүү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нэгэн хэсэг байж болох юм.

Энэ бүхний эцэст, 1924 оны сүүлчээр Монголыг социалист хөгжлийн замаар хөгжүүлэх улс төрийн бодлого давамгайлах нөхцөл бүрджээ.

Хоёр. Өрнөл үе (1925-1932 он)

Тус улсыг хүн төрөлхтний хөгжлийн нийтлэг замаар хөгжүүлэхийг зорьж байсан монгол төрийн зүтгэлтнүүдийг устгасныхаа дараа Коминтерн МАН-ыг “большевикчлох”, монголыг социалист орон болгох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аа шуурхайлан шилжсэн байна. Үүний

⁹ Батсайхан, О., нар. *Монголын түүх: 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8, 186.

¹⁰ Мөнхбаяр, Х. “Монголд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эхэлсэн цаг хугацааны тухайд”, *Түүх* 13, 2014, 51-73.

¹¹ Мөнхбаяр, Х.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эхлэл ба Д.Чагдаржав”, эмх./ред. С.Чулуун, Н.Хишигт. *Монгол Улсын төр нийгмийн зүтгэлтэн, Ардын түр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анхны Ерөнхий Сайд Дамбын Чагдаржав (1880-1922)*,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0, 104-130.

дүнд 1924 оны 11 дүгээр сарын 26-нд Монгол Улс анхдугаар Үндсэн хуулиа тунхаглан зарлаж, жинхэнэ ардын ёсонд нийцсэн шинэ ёсны Бүгд Найрамдах засгийг тогтоосноор¹² тус улсад коммунист үзэл суртал дангаар ноёрхсон улс төрийн тогтолцооны эрх зүйн үндэс баталгаажжээ. Энэ Үндсэн хуулиар иргэдээ хоёр хэсэгт ялган хувааж, ард ангид хамаарах жирийн ард, ядууст бүрэн эрх олгоод, түүнд хамаарахгүй Чингис хааны алтан ургийн тайж язгууртнууд, хутагт хувилгаад, лам нар, чинээлэг иргэд, хувийн худалдаа эрхлэгчдийн сонгуульд оролцох зэрэг улс төрийн эрхийг нь хассан байна.¹³

Түүний дараахан Коминтерн МАН-ын нэрийг Монгол Ардын Хувсгалт Нам (цаашид “МАХН” гэх) болгон өөрчилж, жинхэнэ коммунист нам болгон хувиргаад нийгмийн дээрх бүлэг, давхрагуудыг үгүйсгэсэн улс төрийн бодлогыг шат дараатай хэрэгжүүлж, 1925 онд МАХН болон төр засаг, олон нийтийн байгууллага дахь язгуур угсаатай хүмүүс, лам нарыг шахан зайлуулжээ.

Монгол төрийг өөрийнхөө нөлөөнд бүрэн оруулах гэсэн энэхүү идэвхитэй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хаа дүнд Коминтерн 1928 оны сүүлчээр Монголын нам, төрийн удирдлагыг хараат хүчнээр бүрдүүлж, 1929-1932 онд Монголд социализм байгуулах туршилт хийв.¹⁴

Монголын асуудлыг хэлэлцсэн Коминтерний удирдах бүрэлдэхүүний 1929 оны 1 дүгээр сарын 7-ны өдрийн хуралдаан дээр:

“Монголын нутаг дэвсгэр нь Англи, Герман, Францын нутгийг нийлүүлснээс ч өргөн уудам, хүн ам нь дөнгөж 800.000 хүн... Энэ нутаг дэвсгэрт нөлөөгөө хадгалж, ядахдаа Монголыг империалистууд хийгээд дэлхийн хувьсгалын дайсны нөлөөнд оруулахгүй байхыг



бусармаг муу аргаар ч болов хичээх нь манай зорилт мөн гэж би үзэж байна. Энэ бол 800.000 малчин хүн амтай улс оронд социализм байгуулахаас илүү чухал зорилт... Нутаг дэвсгэр нь хүн амаас илүү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бөгөөд хэрэв бид энэ цөөхөн хүн амыг

капиталист бус хөгжлийн замаар оруулж, Монгол дахь хөдөлгөөнийг хөдөлмөрчин ард олны ангийн тэмцэл болгож чадвал зөвхөн ийм л янзаар л бид энэ нутаг дэвсгэрийг өөрийн

¹² Амарсанаа, Ж., Батсайхан, О. (эмх.)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хууль*, Улаанбаатар, 2004, 42.

¹³ Мөн тэнд. 4-16.

¹⁴ Баярсайхан, Д., нар. *Монгол Улсын түүх*. Улаанбаатар: МУИС пресс, 2017, 397.

нөлөөнд байлгаж чадна” гэж 1928 оны сүүлчээр хуралдсан МАХН-ын VII Их хуралд Коминтерний төлөөлөгчдийг тэргүүлэн оролцсон Чехийн коммунист Б.Шмераль хэлжээ.¹⁵

Монголыг зөвхөн ард ангиас бүрдсэн социалист улс болгох нэрийн дор нөлөөндөө байлгах гэсэн энэ бодлогоо биелүүлэхийн тулд ард ангид үл хамаарах дээрх бүлгийн хүмүүсийг төр, захиргааны алба хаах төдийгүй хувийн аж ахуй эрхлэхийг хориглох, хөрөнгийг хураах, шашин шүтэх, сурч боловсрох эрх, эрх чөлөөг нь хясан боогдуулах, улс төрийн зохимол хэргүүдэд холбогдуулан баривчлах, мөрдөн байцаах, ял шийтгэх (хорих, цаазлах) зэргээр хавчин гадуурхаж, нийгмийн бүлэг давхаргаар нь бүрмөсөн устгах бодлого явуулсан байна.

Монголын түүхэнд “Зүүнтний үе” гэж нэрлэдэг энэ үеийн улс төрийн эрс бодлого, үйл ажиллагаа аж ахуйн үндсэ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ыг нь эвдсэнээс тус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тулгуур болох мал сүргийн тоо 1930-1932 онд 7 сая буюу 3/1-ээр хорогдон, 16 сая толгой болтол цөөрч, Монгол орон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аг, улс төрийн гүнзгийн хямралд оржээ.

Төрийн алдаатай бодлого буюу Коминтерний тулган хүлээлгэсэн коммунист улс төрийн бодлогыг эсэргүүцсэн улс төрийн тэмцэл хөдөлгөөн улсын хэмжээнд өрнөж, бүрэн бус мэдээгээр, Монголын хил орчмын бүс нутгуудаас 12 мянган орчим өрхийн 47 мянга гаруй хүн бусад орон руу дүрвэн гарч,¹⁶ төвийн аймгуудыг хамарсан зэвсэгт бослогын улмаас 6000 орчим хүн амь үрэгдсэн байна.¹⁷

Гурав. Оргил үе (1933-1939 он)

Монголд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ы дотор коммунизм байгуулах гэсэн оролдлого нь амжилтгүй болсноор 1932 оны зунаас Коминтерн тус улс дахь үйл ажиллагаагаа зогсоож, Зөвлөлт Холбоот Улс (цаашид “ЗХУ” гэх)-ын коммунист нам, түүний удирдагч И.В.Сталинд энэ үүрэг шилжив.¹⁸ Тэрбээр, Монголын нийгэм улс төрийн хямралыг намжаах зорилгоор түр зуур буулт хийж, өмнөх алдааны үр дагаврыг арилгахын тулд улс төрийн аядуу бодлого явуулах боломжийг Монголын удирдагчдад олгосон байна. Тиймээс 1929-1932 онд улс төрийн хэрэгт хорих шийтгүүлсэн тайж язгууртнууд, хутагт лам нар, түшмэдийг 1932 оны зун шоронгоос суллаж, хууль бусаар хураасан эд хөрөнгийг нь буцаан олгож,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ьцангуй чөлөөт бодлогыг явуулж эхэлжээ.

¹⁵ Монгол Улсын Архивын хэрэг эрхлэх газар, Оросын Холбооны улсын Төрийн архивын алба. *Коминтерн ба Монгол: Баримт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йн мэдээллийн компани, 1996, 284-285.

¹⁶ Авирмэд, Д. Дүрвэх хөдөлгөөн ба Улсыг аюулаас хамгаалах байгууллага (1930-1934), Улаанбаатар: Тагнуулын Ерөнхий Газр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2012, 72.

¹⁷ Ганболд, С. “1932 оны зэвсэгт бослогын тухай дахин өгүүлэх нь”, эмх. Ц.Гэрэлт-Од, ред. Д.Цогтбаатар,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1921-1940 о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судлалын бага хурлын илтгэлүүд*, Улаанбаатар: Хөх судар принтинг, 2010, 130.

¹⁸ Баярсайхан, Д., нар. *Монгол Улсын түүх*. Улаанбаатар: МУИС пресс, 2017, 397.

Гэвч, Япон улс 1904-1905 оны Орос-Японы дайны ялагдагч Хаант Оростой 1905, 1907 онд байгуулсан гэрүүнүүдээр олж авсан Манжуур, Солонгос, Өвөр Монгол дахь эр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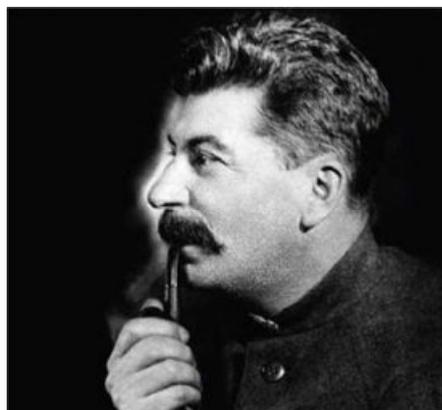


нөлөөгөө ашиглан, Ази тивд ноёрхлоо тогтоохоор санаархаж, 1910 онд Солонгосыг, 1932 онд Манжуурыг эзлэн, 1933 онд БНМАУ-ын зүүн хилд тулж ирсэн нь ЗХУ-ыг сандаргав.

Үүнтэй холбоотойгоор, Монголыг дэлхийн хувьсгалыг түгээх үүд хаалга болгох гэсэн Коминтерний гео үзэл суртал Монголыг зүүн хийгээд зүүн хойд ази дахь гадаадын цэргийн хүчнээс ЗХУ-д учруулж болзошгүй аюул заналаас батлан хамгаалах халхавч бамбай улс (Buffer state) болгох гэсэн зөвлөлтийн удирдагч И.В.Сталины гео-улс төрийн бодлогоор солигдсон явдал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Монголын нийгмийг бүхэлд нь хамрах үндсэн шалтгаан болжээ.

Зөвлөлтийн удирдагч И.В.Сталин 1945 оны 7 дугаар сарын 2-нд БНХУ-ын Ерөнхий сайд Сун Цзы Вэнь-тэй уулзахдаа:

*“Гадаад Монгол бол газар зүйн өвөрмөц байрлалд оршдог бөгөөд энэ байрлалаас япончууд Алс Дорнод дахь ЗХУ-ын байр суурийг эвдэж чадах юм. Япончууд дайны өмнө ч Халхын голын дүүрэгт нэвтрэн орохыг завдаж байсан бөгөөд хэрэв ЗХУ Гадаад Монголын нутаг дэвсгэрийг хамгаалах эрхгүй байсан бол Алс Дорнод тэр чигээрээ ЗХУ-ын хувьд алдагдах аюулд орох байсан”*¹⁹ гэж хэлсэн нь Бүгд Найрамдах Монгол Ард Улс (цаашид “БНМАУ” гэх)-ын талаарх зөвлөлтийн геополитикийн бодлогын мөн чанарыг харуулдаг.



Хэрэв, Монголыг өөрийн нөлөөнөөс алдвал, ЗХУ-ын Дорнод Сибирийн гол төмөр зам гадаадын цэргийн довтолгоонд маш амархан өртөн таслагдаж, орос орон эдийн засаг, улс төрийн талаар сүйрэх аюултай байлаа.

И.В.Стали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г Монголд нэвтрүүлж, улс төрийн бодлогодоо харшлах монголчуудыг улс төрийн золиос болгох арга замаар Монголыг өөрийн бүрэн хараат, дуулгавартай буфер улс болгох зорилгоо хангасан юм. Үүнтэй

¹⁹ Батсайхан, О. Монгол үндэстэн бүрэн эрхт улс болох зам (1911-1946), Улаанбаатар: Адмон, 2007, 332.

зэрэгцэн И.В.Сталин ЗХУ болон түүний нөлөөний орнуудад өөрийн дангаар захирах дэглэмийг тогтоох гэж оролдсон нь БНМАУ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г улам гааруулсан байна.

Зөвлөлтийн удирдагчдын энэ бодлого, үйл ажиллагаа оросын тусгай албадын удирдлага, заавраар Монгол аюулаас хамгаалах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олцоонд тулгуурлан нарийн төлөвлөгөөтэй хэрэгжжээ. Эл үйл явцыг ажиглахад,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1. Монголын хуучин сэхээтний давхарга (Язгууртны засаг (аристократ)-ийн үеийн дээд, дунд давхаргынхан болох тайж ноёд, түшмэд сэхээтнүүд, буддын шашны дээд язгуурт хутагт хувилгаад болон лам нар, цөөн тооны баян малчид, худалдаачид),
2. Үндэсний сэхээтний шинэ давхарга (1921 оны Үндэсний ардчилсан хувьсгалын хойш төлөвшсөн улс төрчид, төрийн хүчний байгууллага (цэрэг, цагдаа, тусгай албад)-ын удирдах болон гүйцэтгэх ажилтнууд, төр засгийн бүх шатны удирдах туаалтан, албан хаагчид, олон нийтийн байгууллагын боловсон хүчин),
3. Буриад монголчуудын нийтлэг (1727 онд монголын Хиагт орчмын Буур тосгонд байгуулсан Чин Улс болон Хаант Орос Улсын албан ёсны хилийн гэрээгээр Оросын харьяанд шилжсэн Баргужин төхөм, Байгал нуураар нутагтай Буриад монголчууд 1905 оны Орос-Японы дайн, 1917 оны Октябрийн хувьсгалын дараах оросын иргэний дайны үеийн үймээнээс дайжин Монголд олноороо дүрвэж иржээ) гэсэн монголын нийгмийн гурван бүлэг, давхаргын эсрэг чиглэж байсан нь мэдэгддэг.

1924 оны Үндсэн хуулиар тогтоосон социалист маягийн БНМАУ-ыг бий болгоход монгол сэхээтний хуучин давхрааг тэр чигт нь устгасан нийгмийн цоо шинэ суурь ЗХУ-ын удирдагчдад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жээ. Түүнээс гадна, Монголыг Оросын шууд хараат аялдан дагагч улс орон болгон хувиргахад Монголын төр засгийн удирдагчдаас эхлэн төрийн жирийн албан хаагч сургуулийн багш хүртэлх үндэсний сэхээтний шинэ давхаргыг 2-3 үеэр нь устган үгүй хийх замаар монголчуудын үндэсний ардчилсан үзлийн уг сурвалжийг таслах явдал И.В.Сталин нарын хамгийн чухал зорилт болжээ. 1921 оноос хойших Орос, Монголын гэрээ хэлэлцээрүүдээр Монгол дахь буриадуудад хууль ёсоор Монголын иргэншил олгосон боловч улаан оросууд тэднийг Октябрийн хувьсгалаас урвагчид, Хаант Оросын оргодол цагаантны үлдэгдэл хэмээн үзэж,²⁰ чанга хатуу цээрлүүлэхээр тооцож иржээ.

²⁰ Эрдэнэсайхан, А. “Буриад монголчуудыг Лхүмбийн хэрэгт хэлмэгдүүлсэн нь”, эмх./ред. Л.Мундагбаатар, Х.Мөнхбаяр. “Лхүмбийн хэрэг-80 жи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3, 56-57.

Энэ нь Монголын нийгэмд нөлөө бүхий байр суурьтай буриадууд болон монголын хүн амын 10 хувийг эзэлж байсан лам нар хувьсгалт төрийг устгаж, Японы талд шууд



урвахад бэлэн найдваргүй этгээдүүд төдийгүй Монголын төр засгийн удирдагчид ч тэднийг дэмжихээс буцахгүй гэх сталинч үзлийн суурь болж байв.

Тиймээс, Японы давуу хүчнээс эмээсэн ЗХУ Монголыг өөртөө авч үлдэхийн тулд²¹ 1933 онд Гитлерийг Германы засгийн эрхэнд гарахад нь туслах зэргээр европ дахь олон эрх ашгаасаа татгалзжээ. Улмаар монголын нийгмийн дээрх гурван бүлгийг Японы аюултай холбогдуулан устгах маш том компанит ажлыг 1933-1940-өөд он хүртэл өргөн хүрээнд өрнүүлж, БНМАУ-ын ардын төрийг устган, Японд эзлүүлэх зорилготой хувьсгалын эсэргүү Японы тагнуулын байгууллагын тухай улс төрийн олон арван зохиомол хэрэг буй болгожээ.

Энэ нь буриад монголчуудыг холбогдуулсан “Лхүмбийн хэрэг”-ээр²² 1933 онд эхэлж, 1934-1936 онд лам нарт хилс хэрэг хүлээлгэсэн хэд хэдэн удаагийн шүүх хурлаар үргэлжилсэн байна.

Бүх Холбоотын Коммунист большевик Нам (цаашид “БХК(б)Н” гэх)-ын Төв Хорооны Улс төрийн товчооны 1937 оны 8 дугаар сарын 14-ний өдрийн хурлын 637 тоот



М.П.Фриновский



Н.С.Миронов



П.А.Смирнов

тэмдэглэлд:

“БНМАУ-д шуурхай
ажиллагаа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аар
чекистүүдийн бүлгийг
нөхөр Мироновын хамт
томилон явуулахыг
Зөвлөлт Социалист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Холбоот Улс

(цаашид “ЗСБНХУ” гэх)-ын Дотоод Хэргийн Ардын Комиссарт даалгах” гэж заасны²³ дагуу Зөвлөлтийн их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г га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чдын нэг, ЗСБНХУ-ын

²¹ Өлзийбаатар, Д. ““Лхүмбийн хэрэг” гэгчийн учир шалтгааны тухайд”, эмх./ред. Л.Мундагбаатар, Х.Мөнхбаяр. “Лхүмбийн хэрэг-80 жи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3, 50-51.

²² Жамбын Лхүмбэ: МАХН-ын Төв Хорооны нарийн бичгийн дарга, Монголын Үйлдвэрчний Эвлэлийн Төв Зөвлөлийн даргыг эл улс төрийн хэргийн толгойлогчоор зарлан эрүүдэн шүүж, цаазлажээ.

²³ Кузьмин, С.Л. “БНМАУ-д буддын шашны сүм хийдийг устгасан нь: Механизм ба учир шалтгаан”, эмх. П.Нарандалай, П.Оюу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Шалтгаан, үр дагавар, сургамж” (Олон улсын

Дотоод Хэргийн Ардын Комиссариат (цаашид “ДХАК” гэх)-ын орлогч бөгөөд ДХАК-ын Улсыг аюулаас хамгаалах газрын дарга М.П.Фриновский, Улаан армийн Улс төрийн хэлтсийн дарга П.А.Смирнов нар 1937 оны 8 дугаар сарын 19-ний өдөр ЗСБНХУ-ын бүрэн эрхт төлөөлөгч бөгөөд ДХАК-ын БНМАУ дахь төлөөлөгчөөр томилогдсон Н.С.Мироновын хамт мөн сарын 24-нд Улаанбаатарт онгоцоор гэнэт буугаад Монголын удирдагчдад “Монголыг эзлэх Японы төлөвлөгөө” гэгчийг танилцуулжээ.

Улмаар, 1932-1936 оны Монголын Ерөнхий сайд П.Гэндэнг 1937 оны 7 дугаар



Ерөнхий сайд П.Гэндэн

сарын 17-нд Оросын Сочи хотод баривчлаад,²⁴ харгис мөрдөн байцаалтаар тулган хүлээлгэсэн, ерөнхий сайд байхдаа 1932 оноос Монгол дахь Японы тагнуулын байгууллагын гишүүнд элсэж, Орос, Монгол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г тасалж, Монголыг Японд эзлүүлэх бодлого явуулж байсан тухай мэдүүлэг болон мөн мэдүүлгээр илэрсэн тэрхүү хувьсгалын эсэргүү байгууллагын 115 гишүүний нэр бүхий “Хуйвалдаан” хэмээх жагсаалтыг 8 дугаар сарын 28-нд Монголын Дотоод Явдлын Яам (цаашид “ДЯЯ” гэх)-ны сайд Х.Чойбалсанд хүлээлгэн өгсөн

байна.

М.П.Фриновский нарын зоримог, түрэмгий үйл ажиллагаа нь тэр үеийн Монголын хамгийн нөлөөтэй удирдагч, Цэргийн яамны сайд, Бүх Цэргийн жанжин Г.Дэмидийг 1937 оны 8 дугаар сарын 22-нд ЗХУ-ын нутаг Сибирийн төмөр замын Тайга өртөөнд хорлон алж, Монголын армийг удирдлагагүй болгоод, түүнээс 3 хоногийн дараа, тэднийг Монголд ирсний маргааш 25-ны үүрээр Зөвлөлтийн цэргийн хүчийг Монголд гэнэт нэвтрүүлж, тус орныг бүхэлд нь хянах болсонтой холбоотой байлаа.²⁵



Цэргийн яамны сайд, Бүх цэргийн жанжин, маршал Г.Дэмид

1937 оны 3 дугаар сард ЗСБНХУ-д эхэлсэн “улс төрийн их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Монгол дахь хувилбарыг И.В.Сталины шууд удирдлага, Зөвлөлтийн ДХАК (Дотоод Явдлын Яам)-ын оролцоотой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Конрад-Аденауэрийн сан, 2017, 186.

²⁴ Цэрэндулам, Г. *П.Гэндэн: Эцгийн тухай дур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МТУ, 2000, 55, 69-72.

²⁵ Батсайхан, О., нар. *Монголын түүх: 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8, 468.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нөхцөл ийнхүү бүрдсэнээр 1937 оны 9 дүгээр сарын 10-ны шөнө БНМАУ-ын нийслэлийг бүсэлсэн Зөвлөлтийн цэргийн дэмжлэгтэйгээр нийтийг хамарсан их баривчилгааг эхлүүлжээ.

1940 он хүртэл өрнөсө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оргил үед үндэсний шинэ сэхээтнүүдийг “Гэндэн, Дэмидийн хэрэг”-г, лам нар, тайж язгууртнууд, хуучин төрийн түшмэд, хөрөнгөлөг малчдыг тэр үеийн Монголын буддын шашны тэргүүн Ёнзон, хамба Лувсанхаймчиг, дэд хамба Дамдин нарын удирдсан гэх “Хувьсгалын эсэргүү лам нарын Төв байгууллага”-ийн улс төрийн хилс хэрэгт холбогдуулан хэлмэгдүүлжээ.



Ёнзон, хамба лам
Ц.Лувсанхаймчиг

1931-1949 он хүртэл Зөвлөлтийн прокурорын байгууллагыг толгойлж байсан А.Я.Вышинский “Сэжигтний гэм бурууг тогтооход хэргээ хүлээсэн мэдүүлгээс нь өөр нотолгоо шаардлагагүй” гэсэн үзлийг тус улсын хууль хяналтын байгууллаг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нэвтрүүлж, мөрдөн байцаалтад эрүү шүүлтийн харгис аргуудыг хэрэглэн, хилс хэрэг тулган хүлээлгэх замаар И.В.Сталины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хууль ёсны баталгааг бүрдүүлдэг байсан²⁶ нь “Лхүмбийн хэрэг”-ий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ан Зөвлөлт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тай хамт 1933 онд Монголын хуулийн байгууллагын ажилд нэвтэрчээ.²⁷

Энэ нь 1937 оноос тус улсын ДЯЯ-ны мөрдөн байцаагчдийн ажлын гол арга хэлбэр болон тогтсон бөгөөд тэр үеийн монголын тусгай албадын мөрдөх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сэжигтний бие махбод, оюун санаанд нь нөлөөлөх зорилготой эрүү шүүлтийн 30 гаруй харгис арга ашиглаж, хэдэн арван мянган монголчуудад улс төрийн хилс хэрэг хүлээлгэсэн байна.²⁸

М.П.Фриновский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их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г удирдан эхлүүлж, Х.Чойбалсан тэргүүтэй Монголын ДЯЯ-ны ажилтнууд болон оросын талын сургагч, зөвлөхүүдийг арга зүй,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ын талаар бэхжүүлсэн даруйдаа, зөвлөлт засгийн эсрэг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сан гэмтнийг илчлэн баривчлах, буудан хороох зорилго бүхий олон нийтийг хамарсан тусгай ажиллагааны явцад баривчлагдсан этгээдүүдийг шүүх танхимаас гадуур шүүн таслах эрх бүхий “турвал комисс”-ыг 1937 оны 6 дугаар

²⁶ “Vyshinsky Andrey Yanuarevich (1883-1954)”, <http://odessa-memory.info/index.php?id=402>,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5.

²⁷ Мөнхбаяр, Х. ““Группийн хэрэг” ба Лхүмбийн байцаалт, эрүү шүүлтийн тухай нягтлах нь”, эмх. С.Энхбаяр. *Лхүмбэ-110 жи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ал, Улаанбаатар: Монгол хэвлэл, 2012, 121-140.

²⁸ Мөнхбаяр, Х. “Байцаалт ба эрүү шүүлт”, эмх. Ц.Гэрэлт-Од, ред. Д.Цогтбаатар,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1921-1940 о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судлалын бага хурлын илтгэлүүд, Улаанбаатар: Хөх судар принтинг, 2010, 60-75.

сарын 30-ны өдөр ЗСБНХУ-д байгуулсан жишгээр “Монголын лам нарын асуудлыг шийдэх эрх бүхий гурвалыг Чойбалсан, Шүүх яамны сайд, МАХН-ын Төв Хорооны нарийн бичгийн дарга гэсэн бүрэлдэхүүнтэй байгуулах санал”-ыг Москвад гаргасныг БХК(б)Н-ын Улс төрийн товчоо 1937 оны 9 дүгээр сарын 19-ний өдрийн П53/106 тоот шийдвэрээрээ зөвшөөрсөн байна.²⁹

Энэ дагуу Улсын Бага Хурлын тэргүүлэгчид болон Ардын Сайд нарын Зөвлөлийн 1937 оны 10 дугаар сарын 2-ны өдрийн хамтарсан нууц хурлын тогтоолоор ДЯЯ-ны сайд



Х.Чойбалсан Д.Лувсаншарав Г.Цэрэндорж
(Онцгой Бүрэн Эрхт Комиссын гишүүд)

Х.Чойбалсан, Шүүх Яамны сайд Г.Цэрэндорж, Намын Төв Хорооны нарийн бичгийн дарга Д.Лувсаншарав нарын бүрэлдэхүүнтэй Онцгой Бүрэн Эрхт Комисс (ОБЭК)-ыг байгуулж, улс төрийн хэрэгт баривчлагдсан бүх хүмүүсийн хэргийг шийдвэрлүүлжээ.³⁰

Х.Чойбалсан даргатай шүүхээс гадуурх энэ байгууллага 1939 оны 4 дүгээр сарын 15-ныг хүртэлх хугацаанд бүгд 50 удаа хуралдаж, улс төрийн хэрэгт баривчлагдсан 25824 хүнийг хувьсгалын эсэргүү, гадаадын тагнуул хэмээх хэрэгт таслан шийдвэрлэснээс 20474 хүнийг буудан алах, 5103 хүнийг 10 жил, 240 хүнийг түүнээс бага хугацаагаар хорих ялаар шийтгэсний³¹ дотор буудан алуулах ялтны 70% (14201), хоригдох ялтны 63% (3380), нийт ял шийтгүүлэгсдийн 68% (17581) нь лам нар байв.³²

Түүгээр ч зогсохгүй, БНМАУ-ын Ерөнхий сайд А.Амар, П.Гэндэн, Улсын Бага Хурлын дарга Д.Догсом, МАХН-ын Төв Хорооны нарийн бичгийн дарга Д.Лувсаншарав зэрэг Монголын төр засаг, цэрэг армийн зүтгэлтэн 400 гаруй иргэнийг Зөвлөлт-Монголын харилцааг таслах зорилгоор Японтой хуйвалдагч Панмонгол байгууллагын гишүүн гэх улс төрийн хилс хэргээр 1937-1941 онд Москвад Зөвлөлтийн хуулиар яллаж, үндэсний баяр наадмын өдрүүдээр нь цаазлан хороох зэргээр олон улсын эрх зүйн хэм хэмжээг зөрчиж

²⁹ Кузьмин, С.Л. “БНМАУ-д буддын шашны сүм хийдийг устгасан нь: Механизм ба учир шалтгаан”, эмх. П.Нарандалай, П.Оюу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Шалтгаан, үр дагавар, сургамж”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Конрад-Аденауэрийн сан, 2017, 187.

³⁰ Гэндэн, Т. Улсыг аюулаас хамгаалах байгууллагын ажилд гарч байсан алдаа завхралыг шалгасан дүнгийн тухай нууцлагдсан ил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Урлах эрдэм, 2002, 24.

³¹ Ринчин, М.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ба цагаа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2000, 18.

³² Мундагбаатар, Л., Мөнхбаяр, Х.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түүний хор холбогдол, хэлмэгдэгсдийг цагаатгахын учир”, Өнөөдөр 209 (5003), 2013/09/10, А хэсэг, 7; Ринчин, М.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ба цагаа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2000, 40.

байжээ. Оросуудын ийм тохуурхал 1922 онд Ерөнхий сайд Д.Бодоог Улсын баярын нь үеэр баривчилснаас эхэлж, 1937 онд Ерөнхий сайд П.Гэндэн, 1939 онд Улсын Бага Хурлын дарга Д.Догсом нарыг баривчлах, 1941 онд Ерөнхий сайд А.Амар нарыг орост цаазлах хүртэл үргэлжилжээ.

Тиймээс, Зөвлөлтийн Дээд шүүхийн Цэргийн коллегийн 1941 оны 7 дугаар сарын 10-ны өдрийн шүүх хуралдаанаас тус улсын Эрүүгийн хуулийн 58-1а, 58-11 дэх зүйлээр



БНМАУ-ын Ерөнхий сайд А.Амар 1939-1941 онд Москвад мөрдөн байцагдаж байхдаа

цаазын ял шийтгүүлсэн БНМАУ-ын Ерөнхий сайд А.Амар шүүхэд хэлсэн сүүлчийн үгэндээ:

“...Надад тулган хүлээлгэсэн өмнөх мэдүүлгээс би татгалзаж байна... Хэрэв БНМАУ эрх чөлөөтэй улс юм бол яагаад намайг Зөвлөлтийн шүүх шүүж байгааг ойлгохгүй байна... Би Монголын ард түмэнд хайртай, Оросын ард түмэнд бас элэгтэй. Гэхдээ бусад том гүрнүүдийн нэгэн адил Монгол

орныг колоничлох бодлого явуулж байгаа “улаантнууд”, тэдний засгийн газарт би дургүй... БНМАУ-д хувьсгалын эсэргүү ямар ч бүлэглэл байгаагүй” хэмээн мэдэгдсэн байна.³³

1937 оны 9 дүгээр сард эхлүүлсэн Японы тагнуулуудыг илрүүлэн устгах тусгай ажиллагаагаа нийтэд хүлээн зөвшөөрүүлэх, айдаст автсан ард олныг тайвшруулж, итгэл найдвар төрүүлэхийн тулд 1938 оноос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их баяр наадмыг үзэл суртал, мөнгө санхүүгийн дээд хэмжээнд өргөн хүрээтэй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болсон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улс орных нь дэвшингүй хөгжилтэй танилцуулж, нам, засгийн удирдагчидтай уулзуулж, сэтгэл санааг нь татах зорилгоор³⁴ 1938 оны Улсын баяр наадамд орон нутгийн 574 зочин төлөөлөгчийг урин оролцуулахад³⁵ тэр жилийн баяр наадмын нийт төсвийн 43 хувьтай тэнцэх 150 мянган төгрөг батлан олгожээ.³⁶

³³ Ринчин, М., нар.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амтрын товчоон*, Боть 15, Ерөнхий сайд А.Амар: Үзэл бодол, үйл ажиллагаа, Улаанбаатар: Улаанбаатар хэвлэл, 2012, 240-241.

³⁴ МУУТА-ТБА. Х 1, Д 2, ХН 729.1-нү.

³⁵ МУУТА-ТБА. Х 1, Д 2, ХН 688. 283-нү.

³⁶ Мөн тэнд. 56-59-нү.

Улмаар, нам, засгаас дайсан этгээдтэй хэрхэн тэмцэж байгааг мөнхүү баяр наадмаар өргөн дэлгэр сурталчилж, хувьсгалын эсэргүү Гэндэн, Дэмид нараас улс орныг хэрхэн хорлож ирсэн, түүнийг яаж тэмцэж ялсан талаар утгыг нь томоор өнгө ялган бичсэн тайлбар бүхий уран хошин зураг урлалаар харуулж,³⁷ Японы тагнуулчдад биеэ худалдаж хувьсгалаас урваж тэрсэлсэн Гэндэн, Дэмид, Ёнзон, хамба мэтийн хоёр нүүртэн дайснуудыг Улсын маршал өрлөг жанжин Чойбалсан ба ДЯЯ хийгээд нам засгаас илрүүлэн устгасныг харуулсан “Эрэлхэг хүүгийн сонор” гэдэг жүжгийг ард нийтэд үзүүлжээ.³⁸

Дараа жил нь 1939 онд Монголын зүүн хилийн Халхын голд Япон, Манжийн хамтарсан цэргийн хүчин халдан довтлоод Монгол, Зөвлөлтийн талтай байлдан дарагдсан явдал үнэхээр манайд Японы тагнуулууд байсныг маршал Х.Чойбалсан нар амжиж устгасан нь зол болжээ гэсэн итгэл үнэмшлийг монголчуудад төрүүлсэн нь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цаашид даамжрах нөхцлийг бүрдүүлэв.

Дөрөв. Бүүралт үе (1940-1952 он)

1930-аад оны их хэлмэгдүүлэлтээр ард бус анги бүлгүүдээсээ салах гэсэн БНМАУ-ын анхдугаар Үндсэн хуулийн зорилго биелэж, улс төрийн талаар найдваргүй этгээдүүд, японы тагнуулын байгууллагын гишүүдийг илрүүлэн устгасан ч тус орныг социалист замаар хөгжүүлэхэд бэлтгэсэн хөдөлмөрчин ардын тусгаар тогтносон улс болгох зорилго бүхий шинэ Үндсэн хуулийг 1940 онд баталснаар ардын дайснуудын үлдэгдлийг бүрмөсөн устгах зорилт бий болжээ.

Тиймээс, 1940-өөд онд улс төрийн хилс хэрэгт холбогдуулан шийтгэж хэлмэгдүүлсэн хүмүүс нь гол төлөв “хувьсгалын эсэргүү” нарын үлдэгдэл, хаягдал буюу түрүүчийн шатанд устгаж дуусгасан боловсон хүчний халааг авсан шинэ удирдах хариуцлагатай ажилтнууд болов.³⁹

Үүний зэрэгцээ, 1941 оны 6 сард Герман Улс ЗХУ-д довтлон орсны дараахан Монголын ДЯЯ 1920-иод оны сүүлчээр Германд суралцаж байсан хүмүүсийг “Фашист Германы тагнуулын бүлэг” гэгч хэд хэдэн улс төрийн зохиомол хэрэгт холбогдуулан баривчлан, 2-3 жил мөрдөн байцаасны эцэст олонхийг нь 3-25 жил хорих ял шийтгэж, заримыг нь суллахын⁴⁰ сацуу нэр бүхий хүмүүсийг цаазлажээ. Хатуу ширүүн харгис байцаалтын улмаас Цэргийн театрын дарга Л.Намсрай Герман, Франц, Япон гурван улсын

³⁷ Мөн тэнд. 256-нү.

³⁸ Мөн тэнд. 230-нү.

³⁹ Гэндэн, Т. *Гурван түмэн хүний амь*, Улаанбаатар: Шувуун саарал, 1999, 152; Ринчин, М.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ба цагаа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2000, 42.

⁴⁰ Ринчин, М.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ба цагаа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2000, 51-53.

тагнуул мөн гэдгээ, номын санч бүсгүй Д.Сурмаажав хөхүүл хүүхдээ гэртээ орхиод, Улаанбаатараас баруун зүгт 1000 км алсалд орших Отгонтэнгэр хэмээх өндөр уул руу явганаар очиж, орой дээрээс нь холбооны тусгай хэрэгслээр Германд тагнуулын мэдээ дамжуулснаа “хүлээн зөвшөөрөхөд” хүрч байжээ.



1920-иод онд баруун европт суралцаж байсан монголчууд

1940-1950-аад онд уг хэргээс гадна гадаадын тагнуул, хорлон сүйтгэгчдийн “Казахын оргодлын хөдөлгөөний хэрэг”, “Порт-Артур” алан хядах бүлэг хэрэг, “Өвөр монголын удирдагч Дэмчигдонровын хүү Дугарсүрэн нарын хэрэг”, Японы тагнуул малчдын “Харилцаа” хэрэг, Өвөр монголчуудын хэрэг зэрэг улс

төрийн хилс хэргүүдэд гэм зэмгүй олон зуун хүнийг хэлмэгдүүлжээ.

Мөн, төр шашныг тусгаарласан хууль зөрчиж, шашныг сурталчилж, ард түмнийг мунхруулсан, нам, төрийн бодлого,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үл итгэх өгүүлэл яриа гаргаж, цуурхал дэгдээсэн гэж буруутган ял шийтгэх явдал олонтаа гарч, үзэл суртлын талаар харш “хөрөнгөтний үндэсэрхэг үзэл гаргав” хэмээн эх оронч үзэл, үндэсний эрмэлзлийг оюун санаа, сэтгэл зүйн хувьд нухчин дарж, цээрлүүлэх үзэгдэл буй болсон байна.⁴¹

И.В.Сталины нөлөөгөөр 1936 оноос БНМАУ-ын гол удирдагч болж, түүний заавраар монгол ахан дүүсээ хэлмэгдүүлэх ажлыг гардан гүйцэтгэсэн маршал Х.Чойбалсангийн гэм буруу нь Монголын тусгаар тогтнолыг ямар ч хамаагүй үнээр баталгаажуулах зорилгоос нь шалтгаалсан гэж цайруулах хандлага бас бий. Энэ талаас нь авч үзвэл,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золиос болсон монголчуудын эмгэнэлт хувь тавилан ЗХУ, АНУ, Их Британи гурван улсын тэргүүн нарын 1945 оны Ялтын хэлэлцээрээр БНМАУ-ын статус кво (status qua)-г батлан, 1946 онд хөрш Орос, Хятад хоёр тусгаар тогтнолыг нь хүлээн зөвшөөрснөөр de jure оршин тогтнох болсны төлөөс хэмээн хэлж болно.

Тав. Сүүлч үе (1953-1989 он)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г гардан гүйцэтгэгч бөгөөд БНМАУ-ын удирдагч маршал Х.Чойбалсан 1952 онд, дэлхийн “улаан террор”-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ч И.В.Сталин 1953 онд тус тус нас барж, ЗХУ-ын улс төрийн байр суурь

⁴¹ Мөн тэнд. 60.

зөөлөрснөөр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хүнийг бие махбодын нь хувьд устгах, олон жилээр гянданд хорих, хөрөнгийг нь хураах зэрэг хурц хэлбэр үгүй болов.

Харин, МАХН, БНМАУ-ын төр засгийн удирдагч Ю.Цэдэнбал тэргүүтэй дээд дарга нарын бүлэглэлийн бодлого,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алаар ил тод шүүмжилж, Монголын



Маршал Ю.Цэдэнбал

социализмыг үндэсний ардчилсан шинж чанартай хөгжүүлэх санал дэвшүүлсэн хүмүүсийг "Сэхээтний төөрөгдөл", "Намын эсрэг бүлэг", "Монгол Зөвлөлтийн найрамдлын эсрэг үзэлтэн" гэх улс төрийн хилс хэрэгт холбогдуулж, үзэл бодлоор нь ялгаварлан гадуурхах, сэтгэл санааны дарамт учруулах, нэр хүндийг нь гутаах, ажил албан тушаалаас хууль бусаар халах, өөр ажилд шилжүүлэх, нутаг заан суулгах, сурч боловсрох, эрүүл мэндийн болон нийгмийн халамжийн үйлчилгээ авах бололцоог нь хязгаарлах мэтийн захиргааны элдэв аргаар хяхан хавчиж, олон ургальч үзэл санааг хаан боогдуулах, үг хэлэх, хэвлэн нийтлэх зэрэг хууль ёсны эрх, эрх чөлөөг хумих явдал 1980-

аад оны сүүлч хүртэл түгээмэл шинжтэй оршиж байв.⁴²

Монголын нутаг дэвсгэрийн ач холбогдлоос үүдэн нөхцөлдсөн их гүрнүүдийн геополитикийн ашиг сонирхол, түүний зөрчил тэмцэлд ялах гэсэн ЗХУ-ын бодлого, үйл ажиллагаа И.В.Сталины бүтээсэ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г Монголд экспортох замаар хэрэгжсэнийг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 баталсаар байна.⁴³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ХОР УРШИГ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Монголд олон ноцтой хор уршиг учруулсны зарим нь одоо болтол арилахгүй байна.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улмаас Монголын шинэ, хуучин нийгмийн сэхээтний давхрага: Чингис хааны угсааны тайж язгууртнууд, лам нар, түшмэд, төр, засгийн удирдах боловсон хүчин, тэргүүний албан хаагчидтай хамт монголчуудын үндэсний уламжлал, өв соёлын залгамжлал, үндэсний эрмэлзэл, эх оронч үзэл санаа үндсээрээ устаж, түүнд тулгуурлаж байсан үндэсний үнэт зүйл бүрмөсөн балартсан юм.

Түүнээс хойш монголын үндэсний юм болгоныг хуучны хоцрогдсон бүдүүлэг соёл, феодал ёсны үлдвэр хэмээн гадуурхах болсон бөгөөд үүний томоохон жишээ болох үндэсний бичгээ феодалын үеийн бүдүүлэг бичиг хэмээн орхиж, 1946 оноос оросын

⁴² Баатар, С. *Эх орончид ба Цэдэнбал*, Улаанбаатар: Ган принт 2005; Нацагдорж, Ц. *Хилс гэгсгээлийн золиос*, Улаанбаатар: Адмон 2007.

⁴³ Өлзийбаатар, Д. *Яагаад 1937 он*, Улаанбаатар: Үндэсний архивын газрын хэвлэх 2004.

кирилл бичиг авч хэрэглэсэн⁴⁴ явдлыг одоо болтол залруулж чадахгүй байгаа явдал юм. Үүнээс болж, монголчуудын оюун сэтгэлгээ үндэсний онцлог шинж чанараа алдахад хүрчээ.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уршгаар Монголын түүх, соёл, уран барилгын асар



Монголын үндэсний бичиг



Оросын кирилл бичиг

их ололт, хэдэн зууны турш бүтээн туурвисан 700 гаруй сүм хийд зэрэг соёлын биет болон биет бус арвин их өв хэзээ ч сэргээн босгох боломжгүйгээр устгагдсны уршиг нь одоо ч Монгол орноор

аялан жуулчлахад илэрхий тодорхой анзаарагддаг.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эд Монголын яг хэдэн иргэн өртөн хэлмэгдсэн нь тодорхойгүй ч янз бүрийн хэлбэрээр хэлмэгдсэн хүний тоо 50.000-аас цөөнгүй гэж үзэж болох юм.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г ашиглан, Монголын нийт хүн амын 16%, насанд хүрсэн эрчүүдийн 4/1-тэй тэнцэх тооны монгол эрчүүд, тодруулбал, үндэстний генийн цөм Чингис хааны үр хойчис, оюун санааны шилдэг хэсэг лам нар, төр засгийн зүтгэлтнүүд, төр, олон нийтийн байгууллагын албан хаагчид зэрэг үндэсний оюунлаг давхрааг устгасан нь монгол үндэстэнд хэзээ ч нөхөшгүй гарз учруулж, одоогийн Монгол Улсын хөгжилд ч хохирол учруулсаар байна.

1990 оны Ардчилсан хувьсгалаар монголчууд социалист үнэт зүйлээс татгалзаж, үндэсний үнэт зүйлээ сэргээж байгаагаа тунхаглан зарласнаас хойш бараг 30 жил өнгөрч байхад Монгол Улс дорвитой хөгжиж чадаагүй байгаа нь их хядлагын улмаас монголын үндэсний үнэт зүйлийн өв залгамжлал тасарч, монголчуудын дунд зусардан бялдуучлах, амин хувиа хичээх, бэлэнчлэх, хийрхэн сүржигнэж хэлбэрдэх, идэвхи санаачилгагүй үлбэгэр байх, бусдыг үл хүндэтгэх, зөвхөн ашиг хонжоог чухалчлах, үндэстнээ үл ойшоох зэрэг таагүй зан чанар төлөвшиж, ёс журам, ёс суртахууны талаар доройтож байгаатай холбоотой.

1940 оноос хойших социалист үнэт зүйлсийн хүрээнд хүмүүжин боловсорсон өнөөгийн Монголын ахмад үе залуучууддаа үндэсний бичиг үсэг, түүх соёл, зан заншил, мэндлэх хүндлэх ёс, ахчлах дүүчлэх журам зэрэг үндэсний уламжлалаа өвлүүлэн үлдээж

⁴⁴ Батсайхан, О., нар. *Монголын түүх: 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8, 344-347.

чадахгүй байгаагаас үндэсний байдлаа үл тоомсорлох, хүн байх ёсыг умартах үзэгдэл монголын нийгэмд хавтгайрсан шинжтэй болж буй нь сүүлийн үед илтэд мэдрэгдэх боллоо.

ШУДАРГА ЁСЫГ СЭРГЭЭН ТОГТООХ ҮЙЛ ЯВЦ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үнэн мөнийг илчилж, шударга ёсыг сэргээн тогтоох үйл явц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эр төрийг сэргээн цагаатгах, улс төрийн талаар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хохирлыг барагдуулах,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г дахин давтан гаргуулахгүй байх нийгэм-улс төрийн баталгаа бүрдүүлэх гэсэн үндсэн гурван хүрээнд хэрэгжиж байна.

1.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чийг цагаатгах ажиллагаа

Иргэддээ хилс хэрэг тулган шийтгэсэн үйлдлийг илчлэх, улс төрийн талаар хэлмэгдсэн хүмүүсийг цагаатгаж, нэр төрийг нь сэргээх талаар Монголын төр 1930-аад оноос анхаарч иржээ. Тухайлбал, "Лхүмбийн хэрэг" гэгчид холбогдон хилс шийтгэл хүлээсэн зарим хүмүүсийг 1936 онд Үндэсний хувьсгалын 15 жилийн ойн баярын үеэр шоронгоос сулласан нь хэлмэгдсэн хүмүүсийн нэр төрийг сэргээх гэсэн анхны оролдлого байв. Улс төрийн хэргээр шийтгэгдсэн хүмүүсийн асуудлыг хянан үзэх талаар МАХН-ын Төв Хорооны Тэргүүлэгчдийн хурлаас 1939 оны 4 дүгээр сард гаргасан шийдвэрийн дагуу ДЯЯ-ны дэргэдэх Тусгай Комисс 1939-1945 онд 2300 гаруй хүнд холбогдох хэргийг дахин шалгаж, хэрэгсэхгүй болгосон нь улс төрийн талаар хэлмэгдэгсдийг цагаатгах үйлсэд чухал алхам болжээ.

1950-иад оны эхээр Орос, Монголын дарангуйлагчид нас барснаар БНМАУ-д нэг хүний дарангуйллын дэглэм сарниж, улс төрийн уур амьсгал харьцангуй зөөлрөн хамтын удирдлагын зарчим сэргэж эхэлсэн тэр үед МАХН-ын удирдлага 1930-1940-өөд оны нийтийг хамарсан баривчилгаа, залхаан цээрлүүлэлтийн хор уршгийг арилгах асуудлыг хөндөж, зарим нэгэн бүлэг хэргийг хянан үзэх санаачилга гаргаж байв. МАХН-ын Төв Хорооны Улс төрийн Товчооны 1955 оны 5 дугаар сарын 18-ны өдрийн хурлаар "Порт Артурын хэрэг" гэгчийг шалгасан комиссын илтгэлийг хэлэлцээд түүнд холбогдож шийтгэгдсэн хүмүүсийг суллах, мөрдөн байцаалтад хууль бус арга хэрэглэхийг зөвшөөрсөн өмнөх үеийн шийдвэрийг хүчингүй болгох арга хэмжээ авчээ.

И.Сталиныг тахин шүтэж байсныг илчлэн шүүмжилсэн ЗХУКН-ын XX Их Хурлын шууд нөлөөний дор 1956 оны 4 дүгээр сард хуралдсан МАХН-ын Төв Хорооны IV бүгд хурал нэг хүнийг тахин шүтсэний улмаас хувьсгалт хуулийг зөрчиж байсан явдлыг нарийвчлан шалгаж илрүүлэх шийдвэр гаргасан юм. МАХН-ын Төв Хорооны Улс төрийн Товчооны 1956 оны 4 дүгээр сарын 21-ний тогтоолоор улс төрийн зарим хэргийг хянан

үзэх комисс байгуулсан бөгөөд тус комисс ДЯЯ-наас 1932-1947 онд шийдвэрлэсэн гол хэргүүдтэй танилцаж, 1940-өөд оны эхээр хэлмэгдсэн Намын Төв Хорооны Нарийн бичгийн дарга Б.Баасанжав нарын 36 хүнийг цагаатгасан байна.

1957 оны 7 дугаар сард хуралдсан МАХН-ын Төв Хорооны VI бүгд хурлын шийдвэрээр Ардын Их Хурлын Тэргүүлэгчдийн дэргэд шинэчилэн байгуулагдсан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эрхлэх комисс 1937-1947 онд ДЯЯ-ны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гарсан завхарлыг нарийвчлан шалгаж, 1930-аад онд хилс хэрэгт ял шийтгүүлсэн 294 хүнийг цагаатгажээ. Гэвч энэ комисс хүмүүсийг ангийн харьяалалаар нь ялгаварлах өрөөсгөл хандлага баримталж, тайж ноёд, түшмэд, лам нарын хэргийг шалган цагаатгахаас түдгэлзсэн байна.

ЗХУ-д улс төрийн хилс хэргээр шийтгэгдсэн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 сайд асан А.Амар, Улсын Бага Хурлын орлогч дарга Д.Лосол зэрэг нам, төрийн зүтгэлтэн, цэргийн дарга 32 хүний хэргийг 1956-1960 онд ЗСБНХУ-ын Дээд Шүүхийн шийдвэрээр хэрэгсэхгүй болгон цагаатгасан боловч тэр тухай мэдэгдэл, тодорхойлолтыг Монгол улсад ирүүлээгүй байсан тул БНМАУ-ын Прокурорын газраас Зөвлөлтийн эрх бүхий байгууллагуудад албан ёсны хүсэлт тавьсаны дагуу А.Амар, П.Гэндэн, Д.Догсом, Д.Лосол, Д.Лувсаншарав нарыг цагаатгасан тухай "маш нууц" мэдэгдлийг тус улсаас 1960 онд ирүүлжээ. Энэ мэдэгдлийг үндэслэн Ардын Их Хурлын Тэргүүлэгчдийн дэргэдэх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эрхлэх комиссын тогтоолоор дээрх хүмүүсийг "хувьсгалын эсэргүү" хэрэгт холбогдолгүй болгон цагаатгажээ.

Х.Чойбалсанг тахин шүтсэний хор уршгийг арилгах шийдвэрийг 1962 онд хуралдсан МАХН-ын Төв Хорооны II бүгд хурлаас дахин гаргасан боловч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эд биечлэн оролцсон хүмүүс нам, төрийн удирдлагад хэвээр байсан нь цагаатгалын ажлын явц, өрнөлтөд сөргөөр нөлөөлсөн юм. 1962 оны 2 дугаар сарын 8-нд хуралдсан МАХН-ын Улс төрийн Товчооны хурал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эрхлэх комиссын ажил дууссан гэж дүгнээд түүнийг татан буулгаж, ажил үүргийг нь Улсын Дээд Шүүх болон НАХЯ-нд шилжүүлсэн байна. Энэ үеэс хойш хэлмэгдэгсдийг цагаатгах ажлын явц, далайц ихээхэн суларчээ.

Харин БНМАУ-ын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1990 оны 12 дугаар сарын 25-ны өдрийн зарлига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ыг байгуулснаар улс төрийн хэрэгт шийтгэгдэгсдийн хэргийг шалгах, хэлмэгдэгсдийг цагаатгах ажиллагаа эрс идэвхижсэн юм.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ал 1998 оны эхээр "Улс төрийн хилс хэрэгт хэлмэгдэгчдийг цагаатгах, тэдэнд нөхөх олговор олгох тухай" хууль баталснаар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эр төрийг сэргээн цагаатгах ажиллагаа эрх зүйн нэгдмэл харилцаанд шилжсэн.

Хуульд зааснаар, шүүх буюу түүнийг орлосон байгууллагын шийдвэрээр улс төрийн хилс хэрэгт ял шийтгүүлэгсдийг Улсын дээд шүүх, тийм хэргээр ял шийтгэгдээгүй боловч баривчлагдан мөрдөгдсөн, амь насаа алдсан хүмүүсийн асуудлыг Улсын ерөнхий



прокурорын газар, улс төрийн үзэл суртлын улмаас тухайн үеийн нам, төрийн захиргааны байгууллагын шийдвэрээр нутаг заагдсан, ажил, албан тушаалаасаа хууль бусаар халагдсан, эд хөрөнгөө хураалгасан хүмүүсийн гомдлыг уг шийдвэрийг гаргасан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шин байсан буюу оршин байгаа нутаг дэвсгэрийг

харьяалах анхан шатны шүүх тус тус хянаж, цагаатгах шийдвэр гаргаж байна. Улсын Дээд Шүүх болон Улсын ерөнхий прокурорын харьяалах хэргийн нягтлан шалгах ажиллагааг Тагнуулын Ерөнхий Газрын мөрдөн байцаах хэлтэс дангаараа гүйцэтгэдэг журамтай.

Монголын хуулийн байгууллагууд одоогоор тус улсын 31 мянга гаруй иргэн 1921-1990 онд улс төрийн хилс хэрэгт хэлмэгдсэн болохыг тогтоон, нэр төрийг нь сэргээн цагаатгаад байна. Бүрэн бус энэ дүн нь тухайн үеийн Монголын насанд хүрсэн хүн амын 10 хувьтай тэнцэж байгаа бөгөөд цагаадса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дотор лам нар 18900 орчим, тайж язгууртан, түшмэд 2450, шинэ сэхээтнүүд 3410, цэргийнхэн 1170, нийгмийн байдал нь тодорхойгүй 5370 орчим хүн, түүний дотор эмэгтэйчүүд 10 гаруй, хүүхэд цөөн тоотой байна. Нийт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3/2-ийг буудан алах ял шийтгэн цаазлаж, 7500 хүнд хорих ял ноогдуулан, бусдыг нь тэнсэн харгалзах, торгох, ажил албан тушаалаас нь халах, нутаг заан суулгах, үндэслэлгүйгээр мөрдөн байцаах зэргээр хэлмэгдүүлжээ. Мөн, улс төрийн хилс хэрэгт холбогдуулан эрүүдэн шүүсний улмаас 124 хүн мөрдөн байцаалтын явцад амиа алджээ.

2. Улс төрийн талаар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хохирлыг барагдуулах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хохирлыг барагдуулах зорилгоор монголын төр 1998 оноос хэлмэгдэгч болон түүний ар гэрт 500.000 буюу 1 сая төгрөг (Монгол банкны 2019.04.26-ны өдрийн валютын ханшаар 1.000.000₮ = 380\$-той тэнцэж байна)-ийн цагаатгалын нөхөх олговор, хэлмэгдэгч болон түүний эхнэр /нөхөр/-т орон сууц буюу түүний үнийн дүнтэй дүйх мөнгөн тусламж өгч байна. Үүний дүнд 18 мянга гаруй хэлмэгдэгчийн ар гэрт цагаатгалын нөхөх олговор олгож, 360-аад хэлмэгдэгчид орон сууцны дэмжлэг олгожээ.

Улс төрийн хилс хэрэгт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хүүхдүүд социализмын үед нийгмийн баялагаас адил тэгш хүртэх, сурч боловсрох бололцоогоо хязгаарлуулах зэргээр хавчин

гадуурхагдаж, хохирч байсны үр дагавар арилахгүй байгааг харгалзан, зөвхөн шүүх буюу түүнийг орлосон байгууллагын шийдвэрээр цаазласан хэлмэгдэгчийн хүүхдэд 80 сая (30400\$), хорих ял шийтгүүлсэн хэлмэгдэгчийн хүүхдэд 40 сая (15200\$)-ийн орон сууцны нөхөх олговор тус тус олгох хуулийг 2018 оноос хэрэгжүүлж байна.

3.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г давтахгүй байх нийгэм-улс төрийн баталгаа бүрдүүлэх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г дахин гарахаас сэргийлэх нийгэм-улс төрийн баталгаа бий



болгох талаар Монголын төр зохих хэмжээнд анхаарч,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г дурсах, дурсгалыг мөнхжүүлэх, түүхэн үнэнийг сэргээн тогтоох ажлы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ирсэн.

Нийслэл Улаанбаатар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илс хэрэгт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дурсгалын музей (1996 он), дурсгалын хөшөө (1997 он)-г оролцуулан

тооцоход, тус улсад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дурсгалд зориулсан босгосон хөшөө 56, музейн булан 45,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чийн нэрэмжит гудамж талбай, сургууль, байгууллага 66, суварга 114, гэрэлт самбар 28, дурсгалын багана 31 байгаа⁴⁵ бөгөөд Монголын удирдагчдыг улс төрийн хилс хэрэгт цаазлан хороож байсан ОХУ-ын Москва хотын Бутонад 2001 онд



Монгол Улс өөрийн хөрөнгөөр дурсгалын хөшөө босгож, гадаадад хэлмэгдсэн иргэддээ хүндэтгэл үзүүлж байна.

Түүнээс гадна, олныг хамарсан их баривчилгаа эхэлсэн 1937 оны 9 дүгээр сарын 10-ны өдрийг 1996 онд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дурсгалын өдөр" болгон

хуульчлан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 жил бүрийн 9 дүгээр сарын 10-нд хэлмэгдэгсдийг бүх нийтээрээ дурсч, хүндэтгэл үзүүлдэг журамтай болсон.

⁴⁵ Бодбаатар, Ж.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түүний уршиг, үр дагавар*,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7, 58.

Энэ өдрийн өглөө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ын баруун талд орших, 1937 оны 9 дүгээр сарын 10-ны өдөр баривчлагдсан төр, засгийн зүтгэлтнүүдийг цаазласан Сонгинохайрхан уул, лам нарыг хомроглон устгасан Хамбын овоо хэмээх газруудад төр, иргэдийн төлөөлөл хүндэтгэл үзүүлдэг. Улмаар өдрийн 12-13 цагт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ордны баруун талд байрлах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дурсгалын хөшөөнд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 Ерөнхий сайд,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дарга болон төр, захиргааны байгууллагын албан тушаалтнууд,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үр хүүхдүүд хүндэтгэл илэрхийлэн цэцэг өргөж,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г дурсан санадаг. Энэ үеэр Улс төрийн хилс хэрэгт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дурсгалын музейг хүмүүс олноороо сонирхон үзэж, зарим тохиолдолд төр, олон нийтийн байгууллага хэвлэлийн хурал боло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зохион байгуулдаг.

Мөн өдөр, бүх аймаг, сум, дүүргийн нутгийн өөрөө удирдах байгууллага дахь цагаатгалын асуудлыг хавсран эрхэлсэн албан тушаалтнууд тухайн орон нутаг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үр хүүхдүүдтэй уулзаж ярилцах, зохих хэмжээний санхүүгийн дэмжлэг олгох, дурсгалын хөшөө, самбарт хүндэтгэл үзүүлэх, олон нийтэд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хор уршгийг ойлгуулах зорилготой хурал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зэрэг үйл ажиллагаа өрнүүлдэг.

Дурсгалын энэ өдөр өнгөрсөн үе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төлөө 1996 онд УИХ-ын дэд дарга,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ын дарга Ц.Элбэгдорж Сүхбаатарын талбайд болсо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дурсгалыг хүндэтгэх өдөр”-ийн анхны цуглаан дээр Монгол төрийн нэрийн өмнөөс, 2000 онд МАХН-ын дарга



Н.Энхбаяр МАХН-ын нэрийн өмнөөс Монголын радио, телевизээр, 2018 онд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 Х.Баттулга мөнхүү дурсгалын хөшөөний дэргэдээс Монголын төрийн тэргүүний хувиар тус тус ард түмнээсээ уучлал гуйжээ. Түүнчлэн, МАН-ын

байгуулагдсны 90 жилийн ойн баярын хурал дээр 2011 оны 3 дугаар сарын 1-нд тус намын тэр үеийн дарга С.Батболд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эд, тэдний ар гэрт гүн эмгэнэл илэрхийлж,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г таслан зогсоох, газар авхуулахгүй байх талаар хүчин мөхөстөндөө ард түмнээсээ МАН дахин уучлалт хүсч байгааг илэрхийлсэн. Эдгээр нь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даамжран ужиграхад Монголын төр, тухайн үед

төрийг удирдан жолоодож байсан МАХН (МАН), түүний удирдлага ямар нэгэн хэмжээгээр буруутай байжээ гэдгийг харуулж байна.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түүхэн үнэнийг сэргээн тогтоож,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эр төрийг сэргээн дурсгалыг мөнхжүүлэх,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г дахин гаргуулахгүй байх баталгаа бүрдүүлэхэд шинжлэх ухаанч үйл ажиллагаа чухал байгааг харгалзан 1991 онд Цагаатгалын Улсын комиссын шийдвэрээр Улс төрийн талаар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судалгааны төвийг байгуулсан.



Доктор М.Ринчин
(1947-2009)

Доктор М.Ринчин захиралтай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ны төв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учир шалтгаан, хор уршиг, үр дагаварын асуудлыг нягтлан судалж, улс төрийн талаар хэлмэгдэгсдийг цагаатгах, нөхөх олговор олгох, нэр төрийг нь сэргээж дурсгалыг мөнхжүүлэх, түүхэн үнэнийг тогтоох төрийн бодлого,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үндсэн тулгуур болон ажиллаж байв.

Үүний дүнд тус төв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асуудлыг хөндөн судалсан 70 орчим ном, товхимол, баримтат кино гаргаж,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олон хурал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наас гадна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амтрын товчоо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баримтын товчоон” бүгд 20 бот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дурсгалын Цагаан ном” хэмээх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талаарх мэдээллийн товч толийг 4 ботиор тус бүр 300-1000 хувь хэвлүүлж, улс орон даяар түгээжээ.

Мөн жил бүрий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г дурсан хүндэтгэх өдрийг угта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эр төрийг сэргээж, дурсгалыг мөнхжүүлэхэд чиглэсэн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чанартай олон тооны нийтлэл, тэмдэглэлийг тогтмол хэвлэл, радио, цахим мэдээллийн орчинд нийтлүүлэх зэргээр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хор уршгийг ухамсарлуулан ойлгуулах үйл ажиллагаа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ирэв.



Улс төрийн талаар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Судалгааны төвийн хамт олон (2005.09.10)

Гэвч, Монголын төр 2014 онд Улс төрийн талаар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судалгааны төвийг тодорхой бус шалтгаанаар татан буулгаж, үйл ажиллагааг нь бүрмөсөн зогсоосноор 1998 оны хуульд зааса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эр төрийг сэргээж,

дурсгалыг мөнхжүүлэх,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үр дагаврыг арилгах зэрэг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г дахин гаргуулахгүй байх баталгаа бүрдүүлэх Монгол төрийн үүрэг эзэнгүйджээ.

1990 онд байгуулагдсан “Монголы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холбоо” гэдэг



Улс төрийн талаар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Судалгааны төв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зарим үр дүн

төрийн бус байгууллага гишүүдийнхээ эрх ашгийг хамгаалан ажиллахын сацуу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г дахин гаргуулахгүй байхын төлөөх төр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туслан оролцдог.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Монгол дахь Германы Конрад Аденауэрын Сан тус холбооны үйл ажиллагааг дэмжиж, олон ажил хамтр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байна.

Гэвч,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хор хохирлыг арилган, шударга ёсыг сэргээн тогтооход чиглэсэн Монголын төр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ухаалаг бодлого, чин сэтгэл, нэгдэл нягтрал, харилцан ойлголцол дутагдаж

байгаагаас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үр дагаврыг арилгах ажилд шийдлээ хүлээсэн асуудлууд нэмэгдсээр байна. Энэ нөхцөл байдлыг шийдвэрлэхийн тулд:

1. Монгол үндэстнийг бүхэлд нь хамарсан урт удаан хугацааны үйл явц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талаар Монгол төрийн эрх барих дээд байгууллага Улсын Их Хурал улсын төрийн бодит дүгнэлт өгөх,
2. Улс төрийн байгууллага, улс төрчид үндэсний эрх ашигт холбогдох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асуудлаар улс төрийн тоглолт (популизм) хийдгийг хориглох,⁴⁶
3. 1932 оны бослогын талаар Монголын төр тусгайлан улс төрийн дүгнэлт хийж, түүнд оролцож хохирсон олон мянган хүнийг цагаатгах,⁴⁷ эс цагаатгах⁴⁸ тухай асуудлыг зориуд авч үзэх,

⁴⁶ Батсайхан, О. “Монголд гарса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л, сургамж, дүгнэлт”, эмх./ред. Конрад-Аденауэр сан, *Монгол болон ХБНГУ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цагаатгал: Дүгнэлт, сургамж, цаашид авах арга хэмжээнүүд*, Улаанбаатар, 2017, 48-57.

4.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дэд дарга нь Цагаатгалын Улсын комиссыг дарга байх тухай хуулийн зохицуулалт Монголын өнөөгийн бодит нөхцөлд парламентын сонгуулийн 4 жил тутамд Цагаатгалын улсын комиссын бодлого, үйл ажиллагаа, бүтэц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лт, боловсон хүчний нөөц, чадавхийг эвдэн бусниулагч үндсэн хүчин зүйл болж буйг өөрчилж, тус комиссыг улс төрөөс хараат бус ажиллагаатай болгох,
5. Социалист үзэл сурталд нийцүүлэн бүтээсэн түүхэн гуйвуулга бүхий уран сайхны кинонуудыг олон нийтэд үзүүлж,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г үргэлжлүүлэн хэлмэгдүүлсээр байгааг зогсоож, оронд нь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эр төрийг сэргээн, дурсгалыг мөнхжүүлсэн уран сайхны кинонуудыг бүтээх,
6. Монгол болон ОХУ-ын архивуудын нууцад хадгалагдаж буй холбогдох баримтуудыг нээлттэй болго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эргэлтэд оруулж, шинжлэн судлах замаар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түүхэн үнэнийг бүрэн дүүрнээр сэргээн тогтоох судалгааны ажлыг нэгдсэн бодлого төлөвлөгөөтэй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7.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ар гэр, үр хүүхдэд олгож буй цагаатгалын нөхөх олговрыг үр өгөөжтэй болгож, нөхөх олговор олгох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хүний эрх, шударга ёсны зөрчил үүсэхээс сэргийлэх,
8. Улс төрийн намуудыг гишүүнчлэлгүй болгож, сонгуулийн тогтолцоог иргэдийн тэгш шударга оролцоог хангасан хэлбэрт шилжүүлэх замаар нийгмийн гишүүд намын харьяалалаараа талцан хуваагдаж, бие биеийнхээ хууль ёсны эрх, эрх чөлөөг зөрчиж байгааг зогсоох,
9.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г зөвтгөх, түүний үр дагаврыг үл ойшоох,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г гардан гүйцэтгэгсдийн гэм бурууг нуун дарагдуулах явдлыг болиулах,

⁴⁷ Өлзийбаатар, Д. *Яагаад 1937 он*, Улаанбаатар: Үндэсний архивын газрын хэвлэл, 2004, 291-292; Мөнхбаяр, Х., нар. Хүрэн бэлчирийн товчоон,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4, 103-114; Кузьмин, С.Л., Оюунчимэг. Социализмын эсрэг 1932 оны Монгол дахь бослого. Улаанбаатар: Мөнхийн үсэг 2014; Кузьмин, С.Л., Оюунчимэг. *Вооруженное восстание в Монголии в 1932 г*, Москва: МБА 2015; Кузьмин, С.Л. “О роли иностранных влияний на восстания проти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изма в Монголии”, *Научный диалог* 1 (49), 2016, 225—233 ([http://nauka-dialog.ru/assets/userfiles/1240/225-233_Kuz'min_ND_2016_1\(49\).pdf](http://nauka-dialog.ru/assets/userfiles/1240/225-233_Kuz'min_ND_2016_1(49).pdf),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 Болдбаатар, Ч. “1932 оны зэвсэгт бослогод оролцогчдыг цагаатгах ёстой юу?”, эмх. П.Нарандалай, П.Оюу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Шалтгаан, үр дагавар, сургамж*”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Конрад-Аденауэр сан, 2017, 134-142; Батсайхан, О., нар. *Монголын түүх: 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8, 459-462; ““Социализмын эсрэг 1932 оны Монгол дахь бослого” ном хэвлэгдэн гарлаа”, <http://tsauzbuk.mn/?p=985>,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⁴⁸ Цэрэнбалжир, Д. 1932 оны зэвсэгт бослого. Улаанбаатар: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1990; Зинамидар, Б. *Гадаадаас турхирсан 1932 оны бослого, Улаанбаатар: Хайтан 2013.*

10. Хамгийн гол н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уршгаар тасарсан үндэсний үнэт зүйлийн эх сурвалжийг сэргээн босгохгүйгээр цаашид монгол хүн, Монгол Улс хөгжих боломжгүй байгааг Монголын төр тусгайлсан бодлого, үйл ажиллагаа хэрэгжүүлэн залруулах зэрэг саналыг судлаачид илэрхийлсээр ирсэн.

XX зууны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хүний эрхийн зөрчлийн үр дагаврыг арилгаж, шударга ёсыг сэргээх талаар Монгол төр ийнхүү сайтар анхаарахгүй, нүд хуурсан өнгөц үйл ажиллагаагаар хэлбэрдэн аргацааж байгаагаас хүний эрх зөрчиж, шударга ёсыг алдагдуулса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шинэ хэлбэр XXI зууны Монголд буй болсныг сүүлийн үед эрдэмтэн судлаачид, улс төрчид хүлээн зөвшөөрч эхлээд байна.

Энэ нь улс төрийн сонгуульд ялсан намууд төрийн албан хаагчдыг намын харьяалал болон хувийн үзэл бодлоор ялгаварлан гадуурхаж, албан тушаалыг нь бууруулах, ажлаас халах үзэгдэл түгээмэл болж, зарим хүмүүсийг тодорхой баримт нотолгоогүйгээр авлигал, албан тушаалын хэрэгт холбогдуулан баривчлах, мөрдөн байцаах зэргээр ажил хэргийн нэр хүндийг нь гутаах, улс төр,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оломжийг нь хязгаарлах байдлаар илэрч байна гэж үздэг.⁴⁹

Зарим улс төрийн албан тушаалтан,⁵⁰ төрийн бус байгууллагын⁵¹ албан бус мэдээгээр, Монголын парламентын удаа дараагийн сонгуулийн дараа дундажаар нийт төрийн албан хаагчдын 10 орчим хувь (2008 оноос 8000, 2012 оноос 16000, 2016 оноос 22000) нь ажлаасаа халагдсан бөгөөд хууль бусаар ажлаас халагдсан иргэдийн цалингийн нөхөх олговорт зориулж, 2017 оны Монгол Улсын төсвийн тодотголд 4.6 тэрбум төгрөгийг тусгаж байсан⁵² нь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агт ихээхэн дарамт болж байв. Түүний дотор, Улс төрийн талаар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Судалгааны төвийг татан буулгах үеэр ажлаас хууль бусаар халагдан хохирсон ажилтнуудын зөвхөн 4-т нь шүүхийн хууль ёсны шийдвэрийн дагуу нийт 101 сарын цалинтай тэнцэх хэмжээний цалингийн хохирлыг 2017 онд Монголын төр нөхөн олгожээ. Энэ бол Монгол дахь шинэ үеий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дүүлэлт дахин гарахаас сэргийлэх төрийн баталгааг хангах үүрэгтэй байгууллагыг хүртэл хамран өргөжснийг илтгэж байна.

Дээрх бүгд нь Монголын ардчилал, шударга ёс хараахан бэхжиж чадаагүй, зарим талаараа хэлбэрийн төдий оршин буйгаас гадна социализмын үед Монголын төр засгийг

⁴⁹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Шалтгаан, үр дагавар, сургамж”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эмх. П.Нарандалай, П.Оюун.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Конрад-Аденауэрийн сан, 2017, 10-12.

⁵⁰ “Халагдагсдын цалинг тушаал гаргасан даргаар нь төлүүлэ”, <http://unuudur.mn/Халагдагсдын-цалинг-тушаал-гаргасан-даргаар-нь-төлүүлэ/>,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⁵¹ “Дархлаа нь давжаарсан төрийн алба”, http://eagle.mn/r/44329_Хамгийн_сүүлд_2019_оны_IV_сарын_26.

⁵² Адъяамаа, Ш. “Хууль бусаар халагдвал нөхөн олговрыг ажлаас халсан албан тушаалтнаас гаргуулна”, <https://news.mn/r/2101123/>,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дангаараа удирдаж байсан, одоогийн улс төрийн нөлөө бүхий нам улс төрийн нэр хүндээ хамгаалсаар ирсэн зэргийн үр дагавар юм.

Эдгээрээс үзэхэд,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улмаас алдагдсан шударга ёсыг бодитоор сэргээн босгож, хүний эрх зөрчсөн бусармаг явдал дахин гаргуулахгүйн тулд олон улсын туршлагаас хуваалцах, хамтран суралцах явдал хамгийн чухал болоод байна.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нөхцөл байдал, шударга ёсыг сэргээн тогтоох үйл явцын талаарх монгол талын судалгааны ажлын үр дүнг олон улсад анх удаа танилцуулах боломж олгосон БНСУ-ын Чоннам Үндэсний Их Сургуулийн 5-18 хүрээлэнд гүнээ талархал илэрхийлье.

Та бүхэнд баярлалаа.

СУДАЛГААНЫ АЖЛЫН НОМ ЗҮЙ

Архивын сурвалж

1. МУУТА-УТНОНБА. X 4, Д 1, ХН 27.
2. МУУТА-ТБА. X 1, Д 2, ХН 729.
3. МУУТА-ТБА. X 1, Д 2, ХН 688.

Судалгааны бүтээл

4. Авирмэд, Д. Дүрвэх хөдөлгөөн ба Улсыг аюулаас хамгаалах байгууллага (1930-1934), Улаанбаатар: Тагнуулын Ерөнхий Газр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2012.
5. Амарсанаа, Ж., Батсайхан, О. (эмх.)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хууль*, Улаанбаатар 2004.
6. Баатар, С. *Эх орончид ба Цэдэнбал*, Улаанбаатар: Ган принт 2005.
7. Батсайхан, О. Монгол үндэстэн бүрэн эрхт улс болох зам (1911-1946), Улаанбаатар: Адмон 2007.
8. Батсайхан, О., Лонжид, З., Энхбат, Ч., Баатар, С., Амарсанаа, С. *Монголын түүх: 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8.
9. Баярсайхан, Д., Болдбаатар, Ж., Гантулга, Ц., Гонгоржав, У., Дашдулам, Д., Дэлгэржаргал, П., Жамбалсүрэн Ц., Жигмэддорж, Э., Лонжид, З., Урангуа, Ж., Мягмар, П., Чинзориг, Б., Энхжаргал, Д., Энхцэцэг, Д. *Монгол Улсын түүх*. Улаанбаатар: МУИС пресс 2017.
10. Болдбаатар, Ж. эмх. *XX зууны Монгол Улс: Шилдэг үзмэрийн дээжис*, Улаанбаатар: Мөнхийн үсэг 2017.
11. Бодбаатар, Ж.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түүний уршиг, үр дагавар*,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7.
12. Гэндэн, Т. *Гурван түмэн хүний амь*, Улаанбаатар: Шувуун саарал 1999.
13. Гэндэн, Т. Улсыг аюулаас хамгаалах байгууллагын ажилд гарч байсан алдаа завхралыг шалгасан дүнгийн тухай *нууцлагдсан ил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Урлах эрдэм 2002.
14. Зинамидар, Б. *Гадаадаас турхирсан 1932 оны бослого*, Улаанбаатар: Хайтан 2013.
15. Кузьмин, С.Л., Оюунчимэг. Социализмын эсрэг 1932 оны Монгол дахь бослого. Улаанбаатар: Мөнхийн үсэг 2014.
16. Кузьмин, С.Л., Оюунчимэг. *Вооруженное восстание в Монголии в 1932 г*, Москва: МБА 2015.
17. *Лхүмбэ-110 жи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ал*, эмх. С.Энхбаяр. Улаанбаатар: Монгол хэвлэл 2012.
18. *“Лхүмбийн хэрэг-80 жи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ред. Л.Мундагбаатар, Х.Мөнхбаяр.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3.
19. *Монгол болон ХБНГУ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цагаатгал: Дүгнэлт, сургамж, цаашид авах арга хэмжээнүүд*, эмх./ред. Конрад-Аденауэр сан. Улаанбаатар 2017.
20.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1921-1940 о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судлалын бага хурлын илтгэлүүд*, эмх. Ц.Гэрэлт-Од, ред. Д.Цогтбаатар. Улаанбаатар: Хөх судар прайтинг 2010.
21. Монгол Улсын Архивын хэрэг эрхлэх газар, Оросын Холбооны улсын Төрийн архивын алба. *Коминтерн ба Монгол: Баримт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йн мэдээллийн компани 1996.
22. *Монгол Улсын төр нийгмийн зүтгэлтэн, Ардын түр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анхны Ерөнхий Сайд Дамбын Чагдаржав (1880-1922)*, эмх./ред. С.Чулуун, Н.Хишигт.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0.
23. Мөнхбаяр, Х., Эрдэнсайхан, А., Хүрэлбаатар, П.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амтрын товчоон*, Боть 18,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эхлэл, өрнөл*,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3.

24. Мөнхбаяр, Х., Бат-Ирээдүй, Ж., Отгонсүрэн, Н., Түмэнжаргал, Н., Оюун-Эрдэнэ, Б., Давхарбаяр, М., Мөнхнасан, Л., Сайнбуян, Б. нар. Хүрэн бэлчирийн товчоон,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4.
25. Нацагдорж, Ц. Хилс гэгсгээлийн золиос, Улаанбаатар: Адмон 2007.
26. Өлзийбаатар, Д. *Яагаад 1937 он*, Улаанбаатар: Үндэсний архивын газрын хэвлэх 2004.
27. Ринчин, М.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ба цагаа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2000.
28. Ринчин, М., Дүйнхэржав, Г., Дамба, Н., Далайхүү, Д., Болдбаатар, Ж., Ичнноров, С., Чинбат, И., Дашдаваа, Ч.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амтрын товчоон*, Боть 15, *Ерөнхий сайд А.Амар: Үзэл бодол, үйл ажиллагаа*, Улаанбаатар: Улаанбаатар хэвлэл 2012.
29.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Шалтгаан, үр дагавар, сургамж”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эмх. П.Нарандалай, П.Оюун.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Конрад-Аденауэрийн сан 2017.
30. Цэрэнбалжир, Д. 1932 оны зэвсэгт бослого. Улаанбаатар: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1990.
31. Цэрэндулам, Г. *П.Гэндэн: Эцгийн тухай дур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MTU 2000.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өгүүлэл

32. Кузьмин, С.Л. “О роли иностранных влияний на восстания проти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изма в Монголии”, *Научный диалог* 1 (49), 2016, 225—233.
33. Мөнхбаяр, Х. “Монголд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эхэлсэн цаг хугацааны тухайд”, *Түүх* 13, 2014, 51-73.
34. Мөнхбаяр, Х. “Сюй Шужчэний хятад цэргийн дэглэм хийгээд Чэнь И-гийн Иргэн засгийн завсарт тэсч үлдсэн Монголын төр”, *Түүх* 11, 2012, 98-149.

Сонин хэвлэл

35. Мөнхбаяр, Х. “Цэвээн тэргүүнээс Чимидийн Энхээ хүртэл”, *Өнөөдөр* 222 (4686), 2012/09/25, А хэсэг, 4.
36. Мундагбаатар, Л., Мөнхбаяр, Х.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түүний хор холбогдол, хэлмэгдэгсдийг цагаатгахын учир”, *Өнөөдөр* 209 (5003), 2013/09/10, А хэсэг, 7.

Цахим сурвалж

37. Адъяамаа, Ш. “Хууль бусаар халагдвал нөхөн олговрыг ажлаас халсан албан тушаалтнаас гаргуулна”, <https://news.mn/r/2101123/>,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38. “Дархлаа нь давжаарсан төрийн алба”, http://eagle.mn/r/44329_Хамгийн_сүүлд_2019_оны_IV_сарын_26.
39. Кузьмин, С.Л. “О роли иностранных влияний на восстания проти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изма в Монголии”, [http://nauka-dialog.ru/assets/userfiles/1240/225-233_Kuz'min_ND_2016_1\(49\).pdf](http://nauka-dialog.ru/assets/userfiles/1240/225-233_Kuz'min_ND_2016_1(49).pdf),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40. Мөнхбаяр, Х. “Тогтох тайжаас Чимидийн Энхээ хүртэл” (2017.09.12), <https://www.24tsag.mn/a/154595>,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4.
41. “Социализмын эсрэг 1932 оны Монгол дахь бослого” ном хэвлэгдэн гарлаа”, <http://tsauzbuk.mn/?p=985>,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42. “Халагдагсдын цалинг тушаал гаргасан даргаар нь төлүүлье”, <http://unuudur.mn/Халагдагсдын-цалинг-тушаал-гаргасан-даргаар-нь-төлүүлье/>,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43. “Vyshinsky Andrey Yanuarevich (1883-1954)”, <http://odessa-memory.info/index.php?id=402>,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5.

POLITICAL REPRESSION AND RECONSTRUCTION
PROCESS OF JUSTICE IN MONGOLIA
(1921-2019)

Kh.Munkhbayar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I want to introduce here some scientific results of my study about political repression since 2001 and my some experience related to reconstruction process of justice since 2004 through this article.

POLITICAL REPRESSION IN MONGOLIA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s been killed or repressed its citizens for some reasons including political idea, ethnicity, race, economic diversity and so on. Particularly political repression in Mongolia has own character.

In Mongolia, from early 1920s to beginning of 1990s following crimes were considered political crimes including treason, espionage, assassinate the government or state officials, coup d'etat, rebellion against government, sabotage, spread rumors against government, leak the state secrets and cross the border illegally. Mongolian government had accused thousands of innocent people those crime. To found guilty for them prosecutor and police used many illegal ways such as make a illegal investigation, use a unfair court and discriminate. All of these activities had been violated human rights and freedom in Mongolia. So, we have to find question what is the political repression? In Mongolia, some group or people with political power to defend and confirm their political interest would use state force in order to repress some community member or class. Particularly group or people with political power used their force to put down his opponents or some members of society. To reach their purpose that they used illegal ways including forcefully involve to fake political crime and punish illegally, kill, destroy etc. All of these called *Political repression* in Mongolia.¹ According to 1948 U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political repression in Mongolia is genocide. In recent years this idea dominated and admitted in and out in Mongolia.²

¹ Мундагбаатар, Л., Мөнхбаяр, Х.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түүний хор холбогдол, хэлмэгдэгсдийг цагаатгахын учир”, *Өнөөдөр* 209 (5003), 2013/09/10, А хэсэг, 7.

² Пүрэвдорж, Л. “Хорьдугаар зууны Монголд үйлдсэн яргалал бол төрлөөр устгах гэмт хэрэг мөн”, эмх. Ц.Гэрэлт-Од, ред. Д.Цогтбаатар,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1921-1940 о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судлалын бага хурлын илтгэлүүд, Улаанбаатар: Хөх судар принтинг, 2010, 24-32; Батсайхан, О., нар. *Монголын түүх: 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8, 434-512;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Шалтгаан, үр дагавар, сургамж”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эмх.

Political repression in Mongolia was begun in 1921 and continued to 1990. It was covered whole Mongolian society and took a long time of history. And it was confirmed by plenty of facts, documents, as well as court orders.³

Mongolians had become part of the Qing dynasty in late 17th century. From beginning of XX century Mongolians started to independence out Manchu and to recreate own Nation State. While struggling for freedom Mongolians suffered political repression.

Since late 19th century Russia, Japan and other great powers of that time paid attention to Mongolian territory. Here their geopolitical and geostrategical game developed to control this vast territory. All of these factors would be main reason of the political repression in Mongolia.⁴

To better understand this issue, we have to look back political atmosphere of Mongolia



The Emperor of Mongolia (1911-1924)

from 1911 to 1921. As results of the long fight to freedom Mongolians made revolution and declared its independence form the Manchu led Qing dynasty in 1911. Mongolians re-established its state and Mongolian spiritual leader 8th Jebtsundamba Khutuktu formally crowned as *Bogd Khaan* (“Great Khan” or “Emperor”) of the new Mongolian state. Mongolian government’s foreign policy direct to the reunification all Mongolians in Inner Mongolia, Barga, Koko nor and Xinjian.

However, in 1915, Russia and China forcefully created Mongolian autonomy state under the control of the China. In 1919 Chinese warlord Xu Shuzeng invaded Mongolia and he forced Mongolia to withdraw its declaration of autonomy. And he prisoned *Bogd Khaan*. 2 years later Russian warlord Baron Ungern attacked Mongolia. After few battles he defeated Chinese force and *Bogd Khaan* released from prison. And re-established Mongolian state.⁵ Many Mongolians

³ Мөнхбаяр, Х., нар.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амтрын товчоон*, Боть 18,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эхлэл, өрнөл*,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3, 10-269; Мөнхбаяр, Х. “Монголд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эхэлсэн цаг хугацааны тухайд”, *Түүх* 13, 2014, 51-73; Мөнхбаяр, Х. “Цэвээн тэргүүнээс Чимидийн Энхээ хүртэл”, *Өнөөдөр* 222 (4686), 2012/09/25, А хэсэг, 4; Мөнхбаяр, Х. “Тогтох тайжаас Чимидийн Энхээ хүртэл” (2017.09.12), <https://www.24tsag.mn/a/154595>,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4*.

⁴ Өлийбаатар, Д.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учир шалтгаан, уг сурвалжийн тухайд”, эмх. Ц.Гэрэлт-Од, ред. Д.Цогтбаатар,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1921-1940 о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судлалын бага хурлын илтгэлүүд*, Улаанбаатар: Хөх судар принтинг, 2010, 12-19.

⁵ Мөнхбаяр, Х. “Сюй Шужэний хятад цэргийн дэглэм хийгээд Чэнь И-гийн Иргэн засгийн завсарт тэсч үлдсэн Монголын төр”, *Түүх* 11, 2012, 98-149.

supported Russian White guard led by Baron Ungern and participated battle against Chinese force.

But, Chinese army main force gathered in Northern Mongolia. Also other Russian white forces come in Mongolia to join the Baron Ungern and they prepared for fighting with Red Russian army.

In such difficult situations, Mongolian patriots decided to liberate its country from foreign forces. At first, some Mongolians secretly organized first Mongolian political party which called Mongolian People's Party (MPP). Their first political idea was against a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But they had to cooperate with Komintern and Soviet Russia led by V.I.Lenin in order to liberate its country from Chinese army. They had no other choice.



Soviet Russian's policy enter into Mongolia. Also it was soil for the political repression of Mongolia.

To see clearly reasons or logic, essence, object, subject, consequences of political repression in Mongolia we have to divide this issue following periods.

One. Beginning period (1921-1924)

The Communist International (Comintern), also known as the *Third International* (1919-1943), w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advocated world communism. Their main goal was world communism or world revolution, and they said that China is inseparable part of World revolution. Comintern considered Mongolia is the stronghold for the future Chinese communist revolution. Therefore, Comintern supported Revolution of Mongolia through the All-Union Communist party (bolsheviks) – VKP(b), and its Siberian committee and Secretary of Russian Far East. As order of Comintern those organizations effectively participated revolution in Mongolia.⁶

⁶ Болдбаатар, Ж. эмх. *XX зууны Монгол Улс: Шилдэг үзмэрийн дээжис*, Улаанбаатар: Мөнхийн үсэг, 2017, 25.

After the victory of revolution of 1921, transitional government formed by MPP in Mongolia. Bogd Khaan's autocracy turned to limited monarch. This governance formation existed to 1924. During that time Mongolian leaders had various policies future of the country. For example:

1. Mongolia have to forward on way of Great Britain (Supporters of this idea was Prime Minister D.Bodoo and others),⁷
2. Mongolia will be develop on way of Republican States (This idea supported by first MPP's chairman S.Danzan and others),⁸
3. Mongolia will have to be socialist state like a Soviet Russia (Elbegdorj Rinchino was loyal for this idea and he was held high ranking positions of government of Mongolia. Also he was Comintern's representative in Mongolia)⁹



D.Bodoo,



S.Danzan



Elbegdorj Rinchino

However, Bodoo and Danzan's belief of future Mongolia disliked by Comintern and Soviet Russia. They accused some Mongolian leaders for false crime such as they wanted to destroy People's government and re-establish monarch governance in Mongolia. It was beginning of political repression in Mongolia.

Detailed information of that, in July, 1921 Finance minister, high ranking nobleman Luvsantseveen and king's army officer Togtokh arrested for false crime.¹⁰ They suffered brutal tortures. Then autumn of 1922 arrested 15 high ranking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Prime

⁷ МУУТА-УТНОНБА. Х 4, Д 1, ХН 27. 17.

⁸ Өлзийбаатар, Д. *Яагаад 1937 он*, Улаанбаатар: Үндэсний архивын газрын хэвлэх, 2004, 153-155.

⁹ Батсайхан, О., нар. *Монголын түүх: 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8, 186.

¹⁰ Мөнхбаяр, Х. "Монголд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эхэлсэн цаг хугацааны тухайд", *Түүх* 13, 2014, 51-73.

Minister D.Bodoo.¹¹ Just 2 years later arrested army commander S.Danzan, member of Central Committee of Mongolian Revolutionary Youth League and Secretary of Government Bavaasan. They all were shot without permission or order of Jury. All of these activities organized by Comintern's representative Elbegdorj Rinchino and executed by Authority of Internal Affairs (Mongolian version of the Soviet's NKVD).



Togtokh
(Chinggis Khaan's nobility)

Luvsantseveen

In addition, one of leaders of revolution of 1921 D.Sukhbaatar died in early 1923. Then Bogd Khaan passed away in spring of 1924. Many Mongolian scholars believe that their death might be connected to Comintern and Soviet Russia.

In the end, by late 1924 Mongolia would ready to forward on way which offered by Comintern and Soviet Russia.

Two. Growth period (1925-1932)

After the killing of Mongolian leaders who wanted develop its country common way of mankind Soviet and Comintern hurried up to their goal. Their purpose directed to Mongolia would have to turn socialist way. First, first Mongolian constitution approved on November 26, 1924 and Mongolia had named Mongolian People's Republic.¹² According to this constitution, communist ideology dominated in Mongolia political system. Also this constitution divided Mongolians two part: first class was formed from common and poor people; second class consisted from aristocrats, high ranking monks, wealthy people and businessmen. According to constitution, citizens belonged to second class no right to election.¹³

Then, Comintern changed name of the Mongolian People's Party (MPP) as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MPRP). MPRP was genuine communist party. This party implemented policies against aristocrats, high ranking monks, wealthy people and businessmen. Since 1925 these people had become no right to serve administrative positions. Even they had no right to become a party member.

¹¹ Мөнхбаяр, Х.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эхлэл ба Д.Чэгдаржав”, эмх./ред. С.Чулуун, Н.Хишигт. *Монгол Улсын төр нийгмийн зүтгэлтэн, Ардын түр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анхны Ерөнхий Сайд Дамбын Чэгдаржав (1880-1922)*,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0, 104-130.

¹² Амарсанаа, Ж., Батсайхан, О. (эмх.)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хууль*, Улаанбаатар, 2004, 42.

¹³ Above book. 4-16.

As a result all above, by late 1928 most of the leaders of Mongolia consisted from pro-Comintern and they called “Leftist”. During the years of 1929-1932 Comintern and Mongolian leftist politicians experimented socialist idea throughout Mongolia.¹⁴

Bohumir Smeral, who Czech politician, one of the founders of the Communist Party of Czechoslovakia once said such things on meeting of Comintern. *“Mongolian territory larger than England, Germany, France and its population just 800 000. We have to keep our influence*



Bohumir Smeral and Mongolian revolutionary radical politicians
(Between 1928 and 1929, in Ulaanbaatar)

on this land. We have no right to lose it for imperialists and enemies of world revolution. And in order to keep it for us we have to use any brutal methods. This is our serious task. It is important than build socialism on that territory. Mongolian territory is important than population. So we have to push Mongolians on way of Socialism.

If so we could keep it under the our influence”¹⁵ he said. Before this meeting he was participated MPRP’s 7th Party Congress in late 1928.

Leftist government implemented discrimination policies against wealthy class of the society. Those included wealthy and aristocrats have no right to serve state positions, rapid collectivization, expropriation, violate or restrict of people’s religion and education right, arrest for false political crimes.

During the Leftist period Mongolian economy destroyed by Leftist policies. For example, 7 million cattle died from 1930 to 1932. In short, Mongolian society, economy, politic drowned to deep hole.

Mongolians did not endure Leftist brutal and incorrect policies. Uprising began central Mongolian provinces. Around 6000 men died.¹⁶ Near 47000 men migrated to neighboring countries.¹⁷

¹⁴ Баярсайхан, Д., нар. *Монгол Улсын түүх*. Улаанбаатар: МУИС пресс, 2017, 397.

¹⁵ Монгол Улсын Архивын хэрэг эрхлэх газар, Оросын Холбооны улсын Төрийн архивын алба. *Коминтерн ба Монгол: Баримт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йн мэдээллийн компани, 1996, 284-285.

¹⁶ Ганболд, С. “1932 оны зэвсэгт бослогын тухай дахин өгүүлэх нь”, эмх. Ц.Гэрэлт-Од, ред. Д.Цогтбаатар,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1921-1940 о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судлалын бага хурлын илтгэлүүд*, Улаанбаатар: Хөх судар принтинг, 2010, 130.

Three. Height period (1933-1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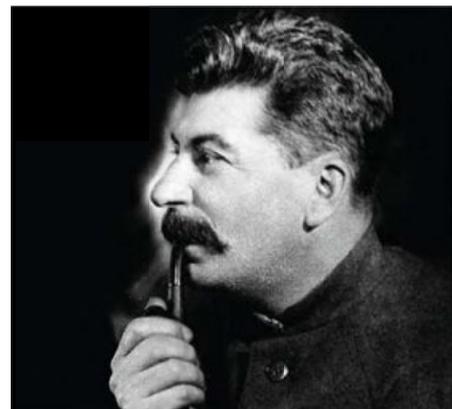
Comintern's attempts failed to build socialism in Mongolia. From then on Comintern's activities ever stopped in Mongolia. Instead of Comintern, Soviet Union started driving a Mongolia.¹⁸ Soviet leader Josef Stalin gave a some chance to Mongolian officials. Then, relatively mild policies accomplished throughout Mongolia. Purpose of those policies lead to erase Leftist political crisis. Within these policy they released from prison aristocrats, high –



ranking lamas, officials who accused false political crimes in summer of 1932. Also new government gave back expropriated properties to the owners. And they began implemented relatively free economic policies to reconstruct of country's economy.

While during that chaos in Mongolia new danger arose along the eastern borders of Mongolia. That was Japan. Since early XX century Japan wanted to invade whole Asia. After the Russo-Japanese war (1905), result of agreements both countries, Japan would dominated North-East Asia. They occupied Korea in 1906, conquered Chinese Manchuria in 1932. Japanese control of Manchuria had been troubled for Russian political interest in this region.

These changes affected to Mongolia. Before the failure of Leftist policy of Mongolia, Comintern's desire was that Mongolia have to be stronghold of World Revolution. Soviet leader Josef Stalin changed this idea in order to make safety of USSR. His opinion was Mongolia would have to be buffer-state. He considered this buffer state guarantee of safety or security of Russian Siberia. All these changes made provision of political repression in Mongolia.



Josef Stalin

Many years later in July 2, 1945 Josef Stalin met China's Prime minister Soong Tse-ven. He told him following things. "*Outer Mongolia sits on unique geographical position. Japanese*

¹⁷ Авирмэд, Д. Дүрвэх хөдөлгөөн ба Улсыг аюулаас хамгаалах байгууллага (1930-1934), Улаанбаатар: Тагнуулын Ерөнхий Газр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2012, 72.

¹⁸ Баярсайхан, Д., нар. *Монгол Улсын түүх*. Улаанбаатар: МУИС пресс, 2017, 397.

could be attack and destroy Russian Far East from here. Even before the war Japanese attacked Khalkhin Gol area and if we would not have right to defend Mongolia in those years we would have been lose our Far East region”.¹⁹ These words show us essence of Soviet geopolitics on Mongolia. Actually if Soviets would lose Mongolia under his control Siberian railway would cut off rest of the country then Russia would destroy.

Stalin used brutal ways in order to convert Mongolia to buffer state. It was Political repression or Great purge. Due to this terrible measures, Stalin killed Mongolians who would might be resist his policies. Mongolia became humble, vassal-buffer state of USSR. Simultaneously Stalin tried to make totalitarian regime in USSR and out its borders. This attempts seriously affected to Political repression in Mongolia. In Mongolia political repression was implemented by instructions Soviet’s NKVD (Secret police organization of USSR) and handed by Mongolian special agency. Political repression’s targets following are:

1. Old Mongolian intellectual community: former aristocrats, high officials, religious studies scholars, high ranking lamas (monks), wealthy herders and businessmen.
2. New Mongolian intellectual community: Usually it formed after revolution of 1921. They were politicians, High and medium ranking officials of State’s special organizations (Army, police etc), high ranking officials of government, common state workers, personnel of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3. Buriad ethnic community: (After the Treaty of Buur 1727 year, one of the Mongolian ethnic groups Buriad around lake Baikal wholly became incorporated with the Russians. Due to Russo-japanese war and chaos after the October revolution in Russia, many buriads migrated to Mongolia)

Josef Stalin wished Mongolia have to be socialist country according to its constitution.



Also Soviets considered old Mongolian intellectual community do not appropriate new Mongolian society. And they wanted there no resistance for new regime. To create this new society they would need to clean or kill 2 or 3 generations of Mongolian intellectual community. It was their main task. Besides, results of negotiation between Russia and Mongolia, buriad community in Mongolia allowed its citizenship. For Soviets, Buriads still were traitors of October Revolution and fugitives of White Russian movement so they would have to be punished.²⁰ Also in those

¹⁹ Батсайхан, О. Монгол үндэстэн бүрэн эрхт улс болох зам (1911-1946), Улаанбаатар: Адмон, 2007, 332.

²⁰ Эрдэнэсайхан, А. “Буриад монголчуудыг Лхүмбийн хэрэгт хэлмэгдүүлсэн нь”, эмх./ред. Л.Мундагбаатар, Х.Мөнхбаяр. “Лхүмбийн хэрэг-80 жи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3, 56-57.

years Buriad intellectuals were powerful and influential on Mongolian society. And Mongolian monks who formed 10 percent of Mongolian population considered were suspicious and distrustful for Soviets. By Stalin's opinion monks ready to betray Japanese if the war would broke out between Japan and Mongolia or Soviet Union. Mongolian leaders also would support Japan, by Stalin's suppose.

So, Soviets had very carefully policies about Japan in early 1930s. In order to keep Mongolia under his political influence Soviets carried out political repression campaign against Mongolian intellectuals and some ethnic groups including Buriads.²¹ This campaign held from 1933 to 1940s. Many false crimes created by Soviet and Mongolian special organizations. Content of these crimes were about there are many secret counterrevolutionary groups or organizations in Mongolia and their purpose was to destroy Mongolian people's government and to surrender to Japanese invaders.

First false political crime was known as "Lkhumbe affair".²² It was held in 1933. The ensuing "Lkhumbe Affair" resulted in the purge of numerous high-ranking politicians and military officers, with particular emphasis placed on the persecution of Buriads. Here named J.Lkhumbe was one of the leaders of Mongolia in that time. Then in 1934-1936 several crimes sentenced by court which against high ranking monks.

In 14 August, 1937 Political Bureau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All-Union



M.P.Frinovsky



N.S.Mironov



P.A.Smirnov

Communist Party (bolsheviks) was held meeting. Through №637 protocol of this meeting they decided to send special operations group to the Mongolia.²³ It was consisted from M.P.Frinovsky, one of the organizers of Great Purge

in USSR, deputy head of the NKVD, P.A.Smirnov, head of the Political authority of Red Army. Added for them N.S.Mironov, representative of USSR and NKVD to Mongolia. They landed in

²¹ Өлзийбаатар, Д. ““Лхүмбийн хэрэг” гэгчийн учир шалтгааны тухайд”, эмх./ред. Л.Мундагбаатар, Х.Мөнхбаяр. “Лхүмбийн хэрэг-80 жи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3, 50-51.

²² Жамбын Лхүмбэ: МАХН-ын Төв Хорооны нарийн бичгийн дарга, Монголын Үйлдвэрчний Эвлэлийн Төв Зөвлөлийн даргыг эл улс төрийн хэргийн толгойлогчоор зарлан эрүүдэн шүүж, цаазалжээ.

²³ Кузьмин, С.Л. “БНМАУ-д буддын шашны сүм хийдийг устгасан нь: Механизм ба учир шалтгаан”, эмх. П.Нарандалай, П.Оюу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Шалтгаан, үр дагавар, сургамж”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Конрад-Аденауэрийн сан, 2017, 186.

Ulaanbaatar in August 24, 1937. Then they presented for Mongolians leaders a document called “Japan’s plan for invade Mongolia”.

Just before it, in 17 July, 1937 former Prime minister of Mongolia P.Genden arrested in city of Sochi, Russia.²⁴ Then he faced brutal tortures by NKVD. He admitted a false crime for him. According to documents belonged to his false crime he was member of Japanese intelligence agency, and he tried to cut relations between Mongolia and Russia. And he was wanted to invade Mongolia by Japanese army. Terribly he gave out list of names 115 people who belong to counterrevolutionary organization in Mongolia. NKVD used this list produce for document called “Conspiracy” and transferred it to Kh.Choibalsan,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of Mongolia.



Prime minister P.Genden

While visiting to USSR, G.Demid, Minister of Defence and Army commander of Mongolia assassinated in Siberian railway station. Due to of this killing Mongolian army was no head. 3 days later M.P.Frinovsky and his counterparts landed in Mongolia. By dawn August 25, 1937 Soviet army suddenly entered to Mongolia.²⁵



G.Demid Minister of the Military and All Commander of the Army

Just before all these Great purge already started throughout USSR. Mongolian version of this process began from 10th September, 1937. In that night Soviet army besieged Mongolian capital city Ulaanbaatar. Whole process implemented by Stalin’s direct rule and NKVD’s support. Arrests involved entire Mongolian society.

During the height period of Political repression continued to 1940 new Mongolian intellectuals accused and killed for crime called “Genden and Demid’s affair”. Rest of them including monks, aristocrats, former officials of previous government (Bogd Khaan), wealthy herdesmen killed for being member of counterrevolutionary organizations such as “Monks for Central counterrevolutionary organization” led by head of Mongolian Buddhists Yonzon hamba Luvsankhaimchig and his deputy Damdin.

²⁴ Цэрэндулам, Г. П.Гэндэн: *Эцгийн тухай дур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МГУ, 2000, 55, 69-72.

²⁵ Батсайхан, О., нар. *Монголын түүх: 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8, 468.

In 1935 Soviet jurist Andrey Vyshinsky became Procurator General of the USSR, the legal mastermind of Josef Stalin's Great Purge. Although he acted as a judge, he encouraged investigators to procure confessions from the accused. Vyshinsky is cited for the principle that "confession of the accused is the queen of evidence". This brutal principle was introduced to Soviet's special organizations.²⁶ Mongolians borrowed it through "Lhumbe affair" by Soviet specialists.²⁷

Mongolian detectives had been used Vyshinsky's principle to confess for suspects since 1937. Under this principle they used about 30 torture methods or techniques used for those activities. As a result, thousands Mongolians confessed under intense torture.²⁸

During his time in Mongolia M.P.Frinovsky managed or instructed Mongolian special agencies to operate killing process. While that successfully working, *NKVD troika* created in USSR. It was consisted from three persons who issued sentences to people after simplified, speedy investigations and without a public and fair trial. The three members were judge and jury, though they themselves did not carry out the sentences they dealt. These commissions were employed as instruments of extrajudicial punishment introduced to



Yonzon hamba
Luvsankhaimchig

supplement the Soviet legal system with a means for quick and secret execution or imprisonment. M.P.Frinovsky wanted to create in Mongolia such commission and he sent his proposal to Moscow. All Union Communist Party (bolsheviks) allowed his idea.²⁹

Then, according to joint order by Presidium of the State small Khural or *Baga Hural* (This organization was Mongolian parliament) and Cabinet of People's Ministry organized NKVD style Troika in Mongolia in October 2, 1937. It was called Special Plenipotentiary Commission. Its members were Kh.Choibalsan,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G.Tserendorj, minister of Judiciary, D.Luvsansharav, secretary of Central Committee of MPRP. It was used during the

²⁶ "Vyshinsky Andrey Yanuarevich (1883-1954)", <http://odessa-memory.info/index.php?id=402>,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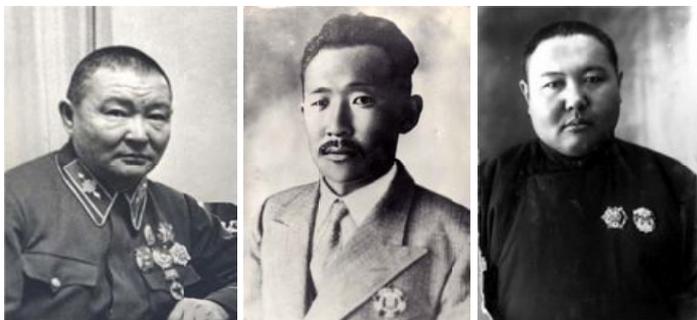
²⁷ Мөнхбаяр, Х. "“Группийн хэрэг” ба Лхүмбийн байцаалт, эрүү шүүлтийн тухай нягтлах нь”, эмх. С.Энхбаяр. *Лхүмбэ-110 жи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ал, Улаанбаатар: Монгол хэвлэл, 2012, 121-140.

²⁸ Мөнхбаяр, Х. "Байцаалт ба эрүү шүүлт", эмх. Ц.Гэрэлт-Од, ред. Д.Цогтбаатар,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1921-1940 о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судлалын бага хурлын илтгэлүүд, Улаанбаатар: Хөх судар принтинг, 2010, 60-75.

²⁹ Кузьмин, С.Л. "БНМАУ-д буддын шашны сүм хийдийг устгасан нь: Механизм ба учир шалтгаан", эмх. П.Нарандалай, П.Оюу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Шалтгаан, үр дагавар, сургамж"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Конрад-Аденауэрийн сан, 2017, 187.

Political Repression to execute many thousands of Mongolian citizens who accused for false crimes.³⁰

Under the rule of Kh.Choibalsan this extrajudicial organization existed to April 15, 1939



Kh.Choibalsan

D.Luvsansharav

G.Tserendori

and within 2 years 25824 persons were sentenced by Troika's 50 meetings. All these people accused for anti-revolution, espionage. Among them, 20474 executed by shooting, 5103 sentenced by 10 year prison, 240 sentenced by short time prison.³¹ Buddhist lamas

(monks) made up the majority of victims. They were composed 68% (17581) of total victims, 70% (14201) of all killed and 68% (17581) of whole prisoned.³² Other victims were nobility and political and academic figures, along with some ordinary workers and herders.

Prime minister A.Amar, P.Genden, Speaker of Parliament D.Dogsom, Secretary of Central Committee of MPRP D.Luvsansharav and another high ranking officials of Mongolian government and army. They were about 400 persons and accused for false crimes such as member for Pan Mongolian organization which cooperated with Japan in order to cut relation between Mongolia and Russia. They were executed in between 1937-1941 in USSR by Soviet law. NKVD shot them usually Mongolian national holiday (July 11 or November 26) and other important days. Such Russian derogations began by arrest of Prime Minister D.Bodoo in July 1922 continued to 1941 through arrest Prime Minister P.Genden (1937), and arrest Parliament speaker D.Dogsom (1939). Also Prime Minister A.Amar shot in July 10, 1941.

For example, in Moscow, Amar confessed all of the accusations against for him. But, throughout the trial Amar insisted that, if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were really an independent nation, he should be tried by a Mongolian court. His last recorded words were *"I love my country and like a Russian people. It is typical that when a big power colonizes a small country, its leaders are arrested and persecuted. My personal experience demonstrates this*

³⁰ Гэндэн, Т. Улсыг аюулаас хамгаалах байгууллагын ажилд гарч байсан алдаа завхралыг шалгасан дүнгийн тухай нууцлагдсан ил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Урлах эрдэм, 2002, 24.

³¹ Ринчин, М.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ба цагаа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2000, 18.

³² Мундагбаатар, Л., Мөнхбаяр, Х.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түүний хор холбогдол, хэлмэгдэгсдийг цагаатгахын учир", *Өнөөдөр* 209 (5003), 2013/09/10, А хэсэг, 7; Ринчин, М.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ба цагаа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2000, 40.

attitude of the USSR towards Mongolia. So, I really dislike Red Russians and their government...



When Prime Minister A.Amar was convicted in Moscow during the 1939-41 period

There were no existed anti-revolutionary group in Mongolia.³³

To justify its killings that Mongolian government took some measures. Purpose of these measures were to pacify suffered and nerved people under the blood campaign. For this purpose, government began widely organize Mongolian national festival – Naadam from 1938 than previous years. Government had become budgeted a lot money for Naadam. Also they paid attention for

ideology functions of Naadam festival. Specifically, 150 000 tugrug (Mongolian currency) spent³⁴ for local 574 representatives who participated 1938's Naadam festival.³⁵ These expenses were related to representative's invitation and participation for Naadam festival. Also this money was formed 43% of total budget of that year's Naadam. Local representatives participation of Naadam festival was directed to introduce development of country and organize a meeting of state leaders.³⁶

Further, during the Naadam festival showed and presented how government and party fighting against enemies of the revolution. Also political cartoons published and spread about how counterrevolutionary figures such as Genden and Demid hurt their country and how they defeated at the end.³⁷ In addition theatrical play which called "Brave son's alert" performed for public. It was about how Marshal Kh.Choibalsa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party and government destroyed enemies of the revolution including Genden, Demid and Yonzon hamba.³⁸

Next year, in 1939 Japan and Manchu army intruded to Khalkhin gol area at eastern border of Mongolia. They fought with joint Mongolian and Soviet forces. But Japanese would not win there. All these were seemed for Mongolians there were many enemies inside in country

³³ Ринчин, М., нар.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амтрын товчоон, Боть 15, Ерөнхий сайд А.Амар: Үзэл бодол, үйл ажиллагаа, Улаанбаатар: Улаанбаатар хэвлэл, 2012, 240-241.

³⁴ МУУТА-ТБА. X 1, Д 2, ХН 729. 1.

³⁵ МУУТА-ТБА. X 1, Д 2, ХН 688. 283.

³⁶ Above course archive. 56-59.

³⁷ Above course archive. 256.

³⁸ Above course archive. 230.

and fortunately they destroyed by Marshal Kh.Choibalsan. This idea formed the condition for Political repression slip out of control in further.

Four. Period of decline (1940-1952)

1930's Political repression helped to come true first Constitution's task about the eradicate or remove groups who belonged previous monarch regime. Along with it political uncertainty people and members of Japan's spy agency killed. New and 2nd Mongolian Constitution enacted in 1940. This constitution would lead Mongolia through new socialist way of development. Also another goal was that constitution completely destroy an enemy of people's remnants.

Repressed people by 1940's usually remnants of anti-revolutionary or newly appointed officials of state positions.³⁹ Simultaneously in June, 1941 after the Nazi German's attack to



Mongolians studying in western Europe in the 1920s

USSR that Mongolian Internal Affairs organized arrest for people who studied in Germany by late 1920s. They accused for political false crime was known as "Spy group of Fascist Germany" and would interrogated 2-3 years. Finally most of them sentenced by 3-25 years prison and some were released⁴⁰ and few of them shot by firing squad. Under the brutal

torture L.Namsrai, head of Army theatre confessed he was spying for Germany, France, Japan. Also librarian woman D.Surmaajav confessed such unbelievable crime. As her testimony she left her baby at her home and went to Otgontenger mountain by feet in west where from Ulaanbaatar about 1000 km away. There she sent some information to Germany used by special device.

Besides above these during 1940, 1950s hundreds of people accused for following false political crimes such as related to foreign spy, sabotage activities called for "Kazakh fugitives affair", assassination crime called "Port-Artur affair", "Inner Mongolian leader Demchigdonrov's son Dugarsuren's affair", Japan spy herders crime called "Connection", and "Affairs for Inner Mongolians".

³⁹ Гэндэн, Т. *Гурван түмэн хүний амь*, Улаанбаатар: Шувуун саарал, 1999, 152; Ринчин, М.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ба цагаа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2000, 42.

⁴⁰ Ринчин, М.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ба цагаа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2000, 51-53.

Also following motives used for accuse innocent people including advertise religion to foolish people, violate law for separate religion and state and spread a rumors about reject government and party's activities and so on. And any patriotic, nationalist opinion or ideas accused under name "capitalist and nationalist idea what wrong for socialist Mongolia".⁴¹

Today some Mongolian scholars try to justify or defend Marshal Kh.Choibalsan's activities including Political repression which implemented by his direct rule and control. They say that Choibalsan wanted to confirm or secure Mongolian independence by political repression. From this side, Mongolians who killed during the years of political repression might be payment for further independence of Mongolia. Actually during the Yalta conference the Soviet Un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confirmed or allowed *status quo* of Mongolian People's Republic. Next year, in 1946 Soviet Union and Republic of China recognized independence of Mongolia as a *de jure*.

Five. Late period (1953-1989)

Political repression's executioner and leader of Mongolia, Marshal Kh.Choibalsan passed away in 1952. Organizer of "World Red Terror" Josef Stalin died in 1953. After his death political atmosphere warmed in USSR and its satellite countries. From then on disappeared some extreme versions in political repression such as shooting, prison sentence for long time and expropriation.



Yu. Tsendenbal

To late 1980s diverse versions of political repression had been used as punishment forms for innocent people. Through mid 1950s and early 1960s some Mongolian intellectuals was criticizing Mongolian leader Yu. Tsendenbal and his colleague's policies and activities. Also they wanted to add some national democratic ideas on Mongolian socialism. As a result, they accused for such crimes including "Intellectual's misbelief", "Anti-Party Group" and "Men against friendship Mongolia and Soviet Union". There were common to discriminate someone due to his or her political idea, to exert psychological pressure, to vulgarize reputation, illegally fire from work or position, transfer to another work or position, expulsion, and limit a rights for study, health service, social welfare. Generally were restricted human's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of speech and freedom of press or publishing in Mongolia.⁴²

⁴¹ Above book. 60.

⁴² Баатар, С. *Эх орончид ба Цэдэнбал*, Улаанбаатар: Ган принт 2005; Нацагдорж, Ц. Хилс гэсгээлийн золиос, Улаанбаатар: Адмон 2007.

In conclusion, latest results and discoveries on modern Mongolian history presented us such documents. For instance, through 1930s as expanded importance of Mongolian territory and Japan and Soviet Union had competed to control this area. To get advantage this competition Soviet Union its leader Josef Stalin transferred political repression into Mongolia.⁴³

AFTERMATH OF POLITICAL REPRESSION

Political repression caused plenty of damage in Mongolian society and some of them still available in today. Due to political repression new and old intellectuals almost completely killed; nobility and aristocrats who claimed descent from Genghis Khan, monks, high ranking state officials, scholars and intellectuals. Along with them national Mongolian identity and mentality ever forgotten such as national tradition, cultural succession, national aspiration or ambition and patriotic view. National values ever disappeared which based on them.

Since 1930s or 1940 things involved with old Mongolian tradition and culture what were considered archaic or rude remnants of previous society. One great example of that is Mongolians began used instead her traditional Mongolian alphabet which Russian Cyrillic



Traditional Mongolian alphabet and Russian Cyrillic alphabet

alphabet.⁴⁴ Even today this mistake available being in Mongolia. Hence Mongolians lost their national characteristics, mind, traditional way of thinking under domination of Russian alphabet.

During the years of Political repression great deal of architectural monuments such as monasteries, temples and uncountable books destroyed by communists. To be brief, political repression's dark force destroyed whole advancements and discoveries related to Mongolian culture and history. Specifically, around 700 temples demolished. All thes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s never reconstructed or produced.

Still unknown how many people lost their lives on hands of communists. By estimates of some scholars generally no more than 50 000 persons faced to diverse forms of political repression. In particular 16% of Mongolian population, 1 in 4 of adult males killed. They were

⁴³ Өлзийбаатар, Д. *Яагаад 1937 он*, Улаанбаатар: Үндэсний архивын газрын хэвлэх 2004.

⁴⁴ Батсайхан, О., нар. *Монголын түүх: 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8, 344-347.

descents of Genghis khan, monks – most intellectual part of Mongolian society, state officials, civil servants and clerks. It was irreparable loss for Mongolians and still affected today.

Almost 30 years passed from Mongolian democratic revolution of 1990. Since then Mongolians rejected socialist values and has been tried to recreate national identity and national values. But Mongolian society's development is still slow. I think it caused by political repression. Because repression was interrupted Mongolian nation's succession of values. There are many bad behavior of Mongolians such as coax, egoistic, spoon-feed, bluster, token, inactive or sleepy, disfavor to others, to adore benefits and defiance his or her nation. All these bad things linked to political repression.

Mongolian elder generation who after born 1940s influenced and grew up under socialist ideas. So they would not transfer traditional customs, history, culture, traditional alphabet, customs related to greeting and respect or esteem into young generation. All these are base for moral infirmity of modern Mongolian society.

RECONSTRUCTION PROCESS OF JUSTICE

Reconstruction or restoration process of justice has been implemented such 3 ways. First, rehabilitate honor of victims by political repression second, solve the issues related to payment for victims of repression third, to form a socio-political guarantee of do not repeat political repression.

1. Rehabilitation process for victims of Political repression

Rehabilitation process had begun from mid 1930s. For instance, some people released from prison in 1936 due to 15th anniversary of National Revolution of 1921. It was first attempt of rehabilitation. Then by April, 1939 Central Committee Of MPRP made a decision about review some people who accused for political crime. According to decision special commission at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reviewed and checked crimes linked to around 2300 person. And all these crimes cancelled.

Soviet and Mongolian dictators died in early 1950s. After then political atmosphere was softened relatively. Leaders of MPRP made a some step for eliminate casualty of political repression. Central Committee's Political bureau MPRP discussed over speech produced by Special commission for investigate "Port-Arthur Affairs". Then ordered take measures about release people who involved and punished by this affairs and cancel use illegal ways for interrogation process.

The 20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was held 14-25 February 1956. It is known especially for First Secretary Nikita Khrushchev's "Secret Speech", which denounced the personality cult and dictatorship of Joseph Stalin. Under influence of that

congress, MPRP's Central Committee's 4th session was held April 1956. Through this session decided to review violations of law due to personality cult. By order of Central Committee of MPRP established commission which for review some political crimes. Through activities of commission inspected a main crimes settled by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during the 1932-1947. As a result, rehabilitated secretary of MPRP's Central Committee B.Baasanjav and other 36 person who repressed in early 1940s.

6th session of MPRP's Central Committee was held in July 1957. As order of the session reorganized Rehabilitation commission at Presidium of the People's Great Khural (Congress). Rehabilitation commission was reviewed and inspected wrongdoings handed by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during the 1937-1947. Then 294 people who punished in 1930s rehabilitated. But this commission activities focused on common people so they were suspend to check crimes belonged to nobility and aristocrats, officials and monks.

During the 1956-1960, Prime minister A.Amar, deputy of State Small Khural (parliament) D.Losol and other 32 high ranking officials rehabilitated by order of Supreme court of USSR. But Russians did not say officially about it to Mongolians. So Mongolian prosecutor authority requested to Soviet officials. Soviets officially confirmed and sent papers about rehabilitated A.Amar, P.Genden, D.Dogsom, D.Losol and D.Luvsansharav. However, Soviets wanted to be secret this process. Based on this confirmation these leaders rehabilitated.

In 1962, from the 2nd session of Central Committee of MPRP decided to eliminate aftermaths of Kh.Choibalsan's personality cult. It was second time for this kind of order. But rehabilitation process was very slow because of some people who participated in political repression still were on positions of party and state. Political Bureau of MPRP decided to stop and close activities of Rehabilitation Commission in February 1962. And its role and function transferred to Supreme court of Mongolia and Ministry of Society's Safety (former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From then on rehabilitation process in Mongolia become slow and weakened.



victims for Political repression and pay reimbursement for them”.

By Mongolian People's Republic's President decree which dated December 25, 1990 established the State Commission for manage and lead Rehabilitation activities. After then, process activated again for revise victims for Political repression and rehabilitate them. By early 1998, State Great Khural (current Mongolian parliament) approved the bill called “About rehabilitate

Through this bill, if person or people sentenced by order of court or similar institution's decision it would revise and rehabilitate by Supreme court of Mongolia. If sentence was unknown but he or she arrested or died during the years of Repression this issues would be solved by State Prosecutor Authority. Due to their political view was to reason for exile, illegally fired from work, faced expropriation their issues would solved by local court. Crimes which belonged to Supreme Court and State Prosecutor Authority would be review by Interrogation department of Central Intelligence Agency.

Now around 31 000 person rehabilitated by state legal organizations. Those incomplete data shows us repression victims were equal to 10% of Mongolian adults in that time. Among them were about 18900 monks, nobility and aristocrats 2450, new intelligence 3410, army officers 1170, people have unknown social status 5370, women about 10 and few children. 2 in 3 of victims of repression shot, 7500 person sentenced to prison rest of them fired form work or position, exile, investigate without document, reprieve and sentence to fine. Also, while in torture of interrogation 124 people lost their lives.

2. Eliminate casualty of Political Repression's victims

Since 1998 Mongolian government paid reimbursement equal with 500 000 or 1 million tugrug for per victim or their family (it is equal to 380 USD by 2019). Victim and his or her



husband (wife) would get apartment or its equal price for reimbursement. As a result, 18000 families received money reimbursement and around 360 victims of repression got a apartment.

During the socialism period children of Political repression victims faced many discrimination such as no rights receive social wealth, restrict a right study and so on. To eliminate these casualty new bill passed in 2018. According to this bill victim's children would receive 80 million tugrug (30400 USD). But in this case victim should have to be sentenced by court order. If victim sentenced to prison his children would receive apartment which valued 40 million tugrug (15200 USD).

3. Ensure a socio-political guarantee for unrepeatable political repression

Mongolian government paying attention to unrepeate political repression. For this purpose, Government has been organized such activities remember a victims of political repression, immortalize and restore historical truth.

Memorial museum for victims of Political Repression opened in Ulaanbaatar in 1996. Then erected a statue for memory of victims of Political Repression in 1997. Totally, there are 56 statues for Political repression victims, museum corner 45, streets, squares, schools and other organizations named by victims of repression are 66, stupa 114, commemorative plaques 28 and memorial column 31.⁴⁵

Besides that memorial statue erected in Butova (former firing range) near Moscow in 2001. There were Mongolian leaders killed by Soviets.

10 September 1937. It is being remembered for us date as start of the Political Repression.



So, annually on this date throughout country we commemorate memorial day for victims of Political Repression and it started from 1996.

Morning of 10 September each year, state and citizens representative go to respect Songinokhairkhan mountain and Khambyn ovoo which sits west to

Ulaanbaatar. There were killed Mongolian leaders in 1937. At Khambyn ovoo many monks killed during the years of Political Repression. Then mid day between 12-13 pm President, Speaker of Parliament, other high ranking officials and children of the victims of political repression gather in front of the statue for memory of victims of Political Repression. Then they respect victims and put bouquet of flowers to statue. Simultaneously in this day people visit through Memorial museum for victims of Political Repression and held press conference or symposium and scientific conference. Such activities organized a local region throughout



country.

That day of 1996, Ts.Elbegdorj, deputy speaker of Parliament, Head of State Commission for manage and lead Rehabilitation activities apologized behalf of Mongolian state at the first meeting which dedicated for

⁴⁵ Бодбаатар, Ж.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түүний уршиг, үр дагавар*,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7, 58.

memorial day for victims of Political Repression. Then in 2000, Chairman of MPRP N.Enkhbayar apologized behalf of MPRP through TV and radio. Current President Of Mongolia Kh.Battulga apologized behalf of Mongolian state in 2018 from near the statue for memory of victims of Political Repression. Also during the ceremonial session for 90th anniversary of Mongolian People's party (It is first name of the MPRP) chairman of party S.Batbold apologized behalf of the party and it was 2nd time for that party. These apologizes shows and confirms to us increase and growth of Political Repression was connected to MPRP's wrong policies.



Dr. M.Rinchin
(1947-2009)

Scientific research and studies were needed for restore historical truth of the Political Repression, for recover and immortalise victims honor and for ensure state do not repeat Political Repression. Therefore in 1991 established Research center for Victims of the Political Repression by order of State Rehabilitation Commission

Under the leadership of Dr. M.Rinchin this institution worked to study issues related to causes or reasons, aftermath, consequences of Political Repression. Particularly, they were worked as main hub of the state's policy and activities which to recover historical truth, rehabilitate victims of Political Repression, pay reimbursement for them and immortalize their memorial.

As a result of their activities published and produced around 70 books, brochures, documentary film which related to Political Repression. Also they organized many scientific conferences for Repression. Their main literatures are "Victim's biography of Political Repression", "Documents and facts of Political Repression's victims"(20 volume), and "Memorial White book for Political Repression's victims" (Information dictionary for Victims of Political Repression - 4 volume). Each book published 300-1000 copy and delivered throughout country.



Workers of The Research center for Victims of the Political Repression (2005.09.10)

The Research center for Victims of the Political Repression annually organized that to mark 10 September such activities publish and spread information, articles, essays by daily newspapers, TVs, radios and internet for recover

and immortalize honor of the Political Repression. Those activities were very important for introduce and convince damage or aftermath of Political Repression to public.

However, in 2014, Mongolian state ordered to stop and close down activities of The Research center for Victims of the Political Repression. Cause or reason of that is still unclear even today. From then on, lost state functions such as recover a honor of repression's victims, immortalize victims memory, eliminate casualty of Political Repression.

Simultaneously som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has been participated into government activities directed to ensure a do not repeat Political Repression. One of them is Mongolian Union of the victims of Political Repression. They have been working for support government policy and activities which related to Political Repression and they care and defend its member's interest. This institution have been cooperated with German's Conrad Adenauer Foundation to organize joint activity.

There are many issues waiting for solution. To solve these issues:

1. To make a real conclusion about the Political Repression by State Great Khural (Parliament).
2. To ban populist activities of parties or politicians which related to Political Repression.⁴⁶
3. State of Mongolia should make a special conclusion for 1932's uprising and through it consider issues whether rehabilitate participants of that uprising.⁴⁷
4. According to our current law Parliament's deputy speaker is the head of the State Rehabilitation Commission. In real life this subject has role as destroyer of activity, structure, human resource and ability of this organization. So, in my opinion this organization would have to be independent from politic activities and ideology.

⁴⁶ Батсайхан, О. “Монголд гарса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л, сургамж, дүгнэлт”, эмх./ред. Конрад-Аденауэр сан, *Монгол болон ХБНГУ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цагаатгал: Дүгнэлт, сургамж, цаашид авах арга хэмжээнүүд*, Улаанбаатар, 2017, 48-57.

⁴⁷ Өлзийбаатар, Д. *Яагаад 1937 он*, Улаанбаатар: Үндэсний архивын газрын хэвлэх, 2004, 291-292; Мөнхбаяр, Х., нар. Хүрэн бэлчирийн товчоон,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4, 103-114; Кузьмин, С.Л., Оюунчимэг. Социализмын эсрэг 1932 оны Монгол дахь бослого. Улаанбаатар: Мөнхийн үсэг 2014; Кузьмин, С.Л., Оюунчимэг. *Вооруженное восстание в Монголии в 1932 г*, Москва: МБА 2015; Кузьмин, С.Л. “О роли иностранных влияний на восстания проти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изма в Монголии”, *Научный диалог* 1 (49), 2016, 225—233 ([http://nauka-dialog.ru/assets/userfiles/1240/225-233_Kuz'min_ND_2016_1\(49\).pdf](http://nauka-dialog.ru/assets/userfiles/1240/225-233_Kuz'min_ND_2016_1(49).pdf),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 Болдбаатар, Ч. “1932 оны зэвсэгт бослогод оролцогчдыг цагаатгах ёстой юу?”, эмх. П.Нарандалай, П.Оюун.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Шалтгаан, үр дагавар, сургамж*”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Конрад-Аденауэр сан, 2017, 134-142; Батсайхан, О., нар. *Монголын түүх: 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8, 459-462; ““Социализмын эсрэг 1932 оны Монгол дахь бослого” ном хэвлэгдэн гарлаа”, <http://tsauzbuk.mn/?p=985>,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Цэрэнбалжир, Д. 1932 оны зэвсэгт бослого. Улаанбаатар: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1990; Зинамидар, Б. *Гадаадаас турхирсан 1932 оны бослого, Улаанбаатар: Хайтан 2013.*

5. Before 1990s many movies produced under the socialist ideology which their contents were falsified truth of the Political Repression. Even today these movies has been broadcasted by TVs. So it should be banned by law and instead of them produce a new movies about the true history of the Political Repression.
6. To declassify secret archival documents in archives of Mongolia and Russia. And to study them. But such research activities would be organized under State's policy and plan.
7. To increase efficacious of reimbursement which has been paid to family and children of victims. To prevent a rise a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justice during the process of reimbursement.
8. To stop a membership of political parties. Because all Mongolians divided and sided by their party membership in today. This split would base of the new kind of Political Repression.
9. There are many bad things which related to Political Repression still existed in Mongolian society. They are justify or defend Political Repression, ignore the consequences of repression and hide a wrongdoing of executioner. So, we should eliminate these negative attitude.
10. Most importantly, we have to reconstruct base of national values which cut by Political Repression. Without done it Mongolians and Mongolia would not develop into further. To do it Mongolian state should produce special policy and activity for it.

Mongolian State could not pay attention for eliminate aftermath of Political Repression and outcome of human right's violation. They only acted as if they worked hard to solve for it. So, some types of the Political Repression has been returned in modern Mongolia and some scholars, politicians warned it's danger.

For example, in Mongolia, there are common occurrence such as winning party fire members of the opposition party and discriminate by their political opinion after the election. Or they could down-grade position of the officials. Besides some people or officials arrested, investigated and accused for corruption crimes without evidences and facts. All these accusations very negatively affected person's individual reputation, career and further economic, political opportunities.⁴⁸

⁴⁸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Шалтгаан, үр дагавар, сургамж”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эмх. П.Нарандалай, П.Оюун.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Конрад-Аденауэрийн сан, 2017, 10-12.

According to some unofficial information shows⁴⁹ after several parliamentary elections 10% of state workers fired illegally (8000 since 2008, 16000 since 2012, 22000 since 2016).



Some works of The Research center for Victims of the Political Repression

Government spent 4.6 billion tugrug for their reimbursement in 2017. It was heavily affected to state budget.⁵⁰ Among them, during the close-down process of The Research center for Victims of the Political Repression its some workers fired illegally. By order of the court government reimbursed 101 month's salary just 4 of them. This fact shows new kind of political repression's shadow cloaked over organization what duties have prevent danger of repression.

All above these facts shows how Mongolian democracy and justice really fragile, weak and formality. Also all these related to some political party's policies and activities. Especially Mongolian People's Party (current ruling party) is

still powerful and influential in Mongolian politics and their policy direct to defend its reputation or honor.

In conclusion, we have to share and learn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s in order to reconstruct justice which lost by during the years of Political Repression. Also it is really important for do not repeat Political Repression.

In the end, I would like to thank f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its 5-18 institution which gave me great opportunity for introduce about historical condition of Political Repression of Mongolia, process of restore justice in Mongolia and its research results to international stage for the first tim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⁴⁹ “Халагдагсдын цалинг тушаал гаргасан даргаар нь төлүүлэ”, <http://unuudur.mn/Халагдагсдын-цалинг-тушаал-гаргасан-даргаар-нь-төлүүлэ/>,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Дархлаа нь давжаарсан төрийн алба”, <http://eagle.mn/r/44329>,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⁵⁰ Адъяамаа, Ш. “Хууль бусаар халагдвал нөхөн олговрыг ажлаас халсан албан тушаалтнаас гаргуулна”, <https://news.mn/r/2101123/>,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REFERENCES CITED

Courses archive

1. МУУТА-ТБА. X 1, Д 2, ХН 729.
2. МУУТА-ТБА. X 1, Д 2, ХН 688.
3. МУУТА-УТНОНБА. X 4, Д 1, ХН 27.

Research books

1. Авирмэд, Д. Дүрвэх хөдөлгөөн ба Улсыг аюулаас хамгаалах байгууллага (1930-1934), Улаанбаатар: Тагнуулын Ерөнхий Газр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2012.
2. Амарсанаа, Ж., Батсайхан, О. (эмх.)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хууль*, Улаанбаатар 2004.
3. Баатар, С. *Эх орончид ба Цэдэнбал*, Улаанбаатар: Ган принт 2005.
4. Батсайхан, О. Монгол үндэстэн бүрэн эрхт улс болох зам (1911-1946), Улаанбаатар: Адмон 2007.
5. Батсайхан, О., Лонжид, З., Энхбат, Ч., Баатар, С., Амарсанаа, С. *Монголын түүх: 1911-2017*,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8.
6. Баярсайхан, Д., Болдбаатар, Ж., Гантулга, Ц., Гонгоржав, У., Дашдулам, Д., Дэлгэржаргал, П., Жамбалсүрэн Ц., Жигмэддорж, Э., Лонжид, З., Урангуа, Ж., Мягмар, П., Чинзориг, Б., Энхжаргал, Д., Энхцэцэг, Д. *Монгол Улсын түүх*. Улаанбаатар: МУИС пресс 2017.
7. Болдбаатар, Ж. эмх. *XX зууны Монгол Улс: Шилдэг үзмэрийн дээжис*, Улаанбаатар: Мөнхийн үсэг 2017.
8. Бодбаатар, Ж.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түүний уршиг, үр дагавар*,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7.
9. Гэндэн, Т. *Гурван түмэн хүний амь*, Улаанбаатар: Шувуун саарал 1999.
10. Гэндэн, Т. Улсыг аюулаас хамгаалах байгууллагын ажилд гарч байсан алдаа завхралыг шалгасан дүнгийн тухай *нууцлагдсан ил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Урлах эрдэм 2002.
11. Зинамидар, Б. *Гадаадаас турхирсан 1932 оны бослого*, Улаанбаатар: Хайтан 2013.
12. Кузьмин, С.Л., Оюунчимэг. Социализмын эсрэг 1932 оны Монгол дахь бослого. Улаанбаатар: Мөнхийн үсэг 2014.
13. Кузьмин, С.Л., Оюунчимэг. *Вооруженное восстание в Монголии в 1932 г*, Москва: МБА 2015.
14. *Лхүмбэ-110 жи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ал*, эмх. С.Энхбаяр. Улаанбаатар: Монгол хэвлэл 2012.
15. *“Лхүмбийн хэрэг-80 жи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ред. Л.Мундагбаатар, Х.Мөнхбаяр.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3.
16. *Монгол болон ХБНГУ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цагаатгал: Дүгнэлт, сургамж, цаашид авах арга хэмжээнүүд*, эмх./ред. Конрад-Аденауэр сан. Улаанбаатар 2017.
17.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1921-1940 о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судлалын бага хурлын илтгэлүүд*, эмх. Ц.Гэрэлт-Од, ред. Д.Цогтбаатар. Улаанбаатар: Хөх судар прринтинг 2010.
18. Монгол Улсын Архивын хэрэг эрхлэх газар, Оросын Холбооны улсын Төрийн архивын алба. *Коминтерн ба Монгол: Баримтын эмхтгэл*, Улаанбаатар: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йн мэдээллийн компани 1996.
19. *Монгол Улсын төр нийгмийн зүтгэлтэн, Ардын түр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анхны Ерөнхий Сайд Дамбын Чагдаржав (1880-1922)*, эмх./ред. С.Чулуун, Н.Хишигт.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0.

20. Мөнхбаяр, Х., Эрдэнсайхан, А., Хүрэлбаатар, П.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амтрын товчоон*, Боть 18, Монгол дахь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ийн эхлэл, өрнөл,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3.
21. Мөнхбаяр, Х., Бат-Ирээдүй, Ж., Отгонсүрэн, Н., Түмэнжаргал, Н., Оюун-Эрдэнэ, Б., Давхарбаяр, М., Мөнхнасан, Л., Сайнбуян, Б. нар. Хүрэн бэлчирийн товчоон, Улаанбаатар: Соёмбо, 2014.
22. Нацагдорж, Ц. Хилс гэсгээлийн золиос, Улаанбаатар: Адмон 2007.
23. Өлзийбаатар, Д. *Яагаад 1937 он*, Улаанбаатар: Үндэсний архивын газрын хэвлэх 2004.
24. Ринчин, М.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ба цагаа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2000.
25. Ринчин, М., Дүйнхэржав, Г., Дамба, Н., Далайхүү, Д., Болдбаатар, Ж., Ичнноров, С., Чинбат, И., Дашдаваа, Ч.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эгсдийн намтрын товчоон*, Боть 15, *Ерөнхий сайд А.Амар: Үзэл бодол, үйл ажиллагаа*, Улаанбаатар: Улаанбаатар хэвлэл 2012.
26.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Шалтгаан, үр дагавар, сургамж”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га хурлын эмхтгэл), эмх. П.Нарандалай, П.Оюун. Улаанбаатар: Цагаатгах Ажлыг Удирд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Улсын Комисс, Конрад-Аденауэрийн сан 2017.
27. Цэрэнбалжир, Д. 1932 оны зэвсэгт бослого. Улаанбаатар: Улсы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1990.
28. Цэрэндулам, Г. *П.Гэндэн: Эцгийн тухай дурт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MTU 2000.

Scientific Research articles

29. Кузьмин, С.Л. “О роли иностранных влияний на восстания проти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изма в Монголии”, *Научный диалог* 1 (49), 2016, 225-233.
30. Мөнхбаяр, Х. “Монголд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эхэлсэн цаг хугацааны тухайд”, *Түүх* 13, 2014, 51-73.
31. Мөнхбаяр, Х. “Сюй Шужчэний хятад цэргийн дэглэм хийгээд Чэнь И-гийн Иргэн засгийн завсарт тэсч үлдсэн Монголын төр”, *Түүх* 11, 2012, 98-149.

Newspaper sources

32. Мөнхбаяр, Х. “Цэвээн тэргүүнээс Чимидийн Энхээ хүртэл”, *Өнөөдөр* 222 (4686), 2012/09/25, А хэсэг, 4.
33. Мундагбаатар, Л., Мөнхбаяр, Х. “Улс төрийн хэлмэгдүүлэлт, түүний хор холбогдол, хэлмэгдэгсдийг цагаатгахын учир”, *Өнөөдөр* 209 (5003), 2013/09/10, А хэсэг, 7.

Internet sources

34. Адъяамаа, Ш. “Хууль бусаар халагдвал нөхөн олговрыг ажлаас халсан албан тушаалтнаас гаргуулна”, <https://news.mn/r/2101123/>,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35. “Дархлаа нь давжаарсан төрийн алба”, <http://eagle.mn/r/44329>,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36. Кузьмин, С.Л. “О роли иностранных влияний на восстания проти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изма в Монголии”, [http://nauka-dialog.ru/assets/userfiles/1240/225-233_Kuz'min_ND_2016_1\(49\).pdf](http://nauka-dialog.ru/assets/userfiles/1240/225-233_Kuz'min_ND_2016_1(49).pdf),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37. Мөнхбаяр, Х. “Тогтох тайжаас Чимидийн Энхээ хүртэл” (2017.09.12), <https://www.24tsag.mn/a/154595>,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4.
38. ““Социализмын эсрэг 1932 оны Монгол дахь бослого” ном хэвлэгдэн гарлаа”, <http://tsauzbuk.mn/?p=985>,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39. “Халагдагсдын цалинг тушаал гаргасан даргаар нь төлүүлье”, <http://unuudur.mn/Халагдагсдын-цалинг-тушаал-гаргасан-даргаар-нь-төлүүлье/>,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6.
40. “Vyshinsky Andrey Yanuarevich (1883-1954)”, <http://odessa-memory.info/index.php?id=402>, Хамгийн сүүлд 2019 оны IV сарын 2

Translated by B.Uuganbayar, a Mongolian National Museum Curator

■ 토론문

몽골에서의 정치적 숙청과 정의 회복 과정(1921년~2019년)

이현미(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아시아 역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근현대사는 냉전과 언어 장벽으로 인해 우리에게 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할타린 명흐바야르 선생님의 논문은 1911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몽골 정치사를 ‘정치적 숙청과 정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꿰어 한 눈에 보여주는 역작입니다. 필자는 몽골 전공자가 아니지만, 19세기와 20세기 한국외교사 연구자로서, 중국, 소련, 일본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구망(救亡)’과 ‘계몽’(중국사학자 리쩌허우의 표현을 빌자면)의 이중계임을 벌여야 했던 몽골 민족주의자들의 비극적 딜레마에 깊은 공감을 느끼며, 선생님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이 몽골판 ‘백 년의 고독’ 속에서 국가폭력과 정치적 숙청으로 인해 지극히 고통 받은 관련자 모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토론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1. 논문에서는 핵심주제인 ‘정치적 숙청’을 “정치권력을 가진 무리들의... 공권력을 이용한... 불법적.. 정치적 폭력행위”라고 규정하고, 1921년 ‘인민혁명(=민족·민주혁명)’ 이후 2019년까지 몽골의 정치적 숙청을 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UN 협약>의 ‘집단살해=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933년 라파엘 램킨이 나치의 유대인 박해 조치에 국제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제노사이드’ 개념을 주창한 이래, 그 개념은 “국가나 그에 준하는 권력체의 대리인들이 국민, 민족, 인종, 종교의 차이나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나 성, 건강, 지역상의 차이를 이유로 특정 집단을 절멸하려는 의도에서 그 구성원 가운데 상당 부분 이상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최호근,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책세상, 2005)로 점차 포괄적으로 그 외연이 넓어졌습니다.

논문에서 다루는 몽골의 ‘정치적 숙청’이 여러 정권에 걸쳐 이루어졌고, 행위주체와 책임주체, 피해 집단, 의도와 목표, 방식이 다양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논문에서 다루는 시기가 1990년 ‘민주혁명’을 계기로 양분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제노사이드 개념만으로는 장기간 다양한 정치적 숙청의 양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 숙청이 코민테른과 스탈린에 의해 기획되었지만, 이를 실행한 것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기관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숙청과 연루된 ‘국가폭력(state violence)’과 민간인 학살 문제를 부각시킨다면 논의가 더 선명해 질 듯 합니다.

2. 이 문제는 1990년 사회주의 붕괴 이후 몽골에서의 ‘이행기정의’ 문제에서, ‘좌파의 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기억의 정치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탈냉전 동유럽에서는, 1945년 이후 서유럽이 그랬듯, 국가 정당성, 아이덴티티, 사회통합을 위해서 과거를 주조하고 기억의 신화를 만들 정치적 필요성이 강했습니다. 내부에 존재했던 협력의 기억은 묻어버리고, 모두를 나치 독일 혹은 스탈린 소련에 의한 일방적인 피해자로 만드는 편이 사회 통합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망각의 정책’을 취한 역사적 예는 많습니다. 2차대전 후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비시 점령 정부의 나치 협력이라는 고통스러운 기억 대신 레지스탕스의 국민 신화를 쓴 것, 잔혹한 내전과 군사독재를 겪고 1975년 민주화된 스페인에서 좌·우파가 “스페인 국민들의 완전한 형제적 공존”과 국가 발전을 위해 과거사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망각협정(Pacto de Olvido)’, 1989년 민주화된 폴란드의 첫 번째 총리가 폴란드인민공화국 시절을 과거로 치부하고, 선을 긋는 정책(a thick line policy)을 취한 것 등등이 그것입니다.

‘몽골의 스탈린’이라고 불리는 Kh. 초이발산에 대한 현 몽골 사회의 엇갈리는 평가(건국 영웅 vs. 학살의 주범)와, 정치적 숙청의 원인으로 지정학과 스탈린을 지목하는 이 논문의 내러티브에서는 탈공산 이후 ‘몽골적인 것’에서 국가 정체성을 찾고 사회주의 과거를 지우려는 민족주의 정치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또한 소련의 정책에 부응하고 협력한 몽골인민공화국의 책임(Mongolian agency)이라는 불편한 문제를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3. 이는 부분적으로는 1990년 몽골의 민주화와 체제변동이, 소련과 동구권의 개혁정책에 고무된 민주화 추진세력의 기여도 있었지만, 최고 권력자 바트몽흐의 판단에 따른 ‘협상된 혁명’(negotiated revolution)이었고, 그 결과 종전의 집권세력이 스스로를 재조직하여 다시 집권한 결과였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논문에서 드러나듯, 몽골의 이행기 정의가 보복적 정의보다 회복적 정의(사면, 배상, 재발방지책 마련) 쪽에 치우쳐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뒤, 동유럽 위성 국가들에서는 흐루쇼프의 압력에 의해 스탈린 집권기의 조작 재판과 대숙청의 판결들이 재조사를 받았지만, 동유럽 국가들 내부의 스탈린주의자들은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던 상황에서 조작 재판과 대숙청의 판결들은, 그러한 재판을 실행한 동일한 스탈린주의자들에 의해 바로잡혀야 했습니다. 결국 숙청에 책임이 있는 구 리더십이 제거되고 나서야 완전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990년 대통령령으로 국가사면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정치적 희생자들에 대한 복권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1996년에 가야 가능해졌고, 몽골 국회가 배상금지급법을 제정한 것도 또한 1998년입니다. ‘정치적 숙청 희생자 기념일’의 법제화(1996), 정치적 숙청 희생자 기념박물관(1996), 기림비(1997)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몽골인혁당이 2000년부터 재집권하면서는 정적에 대한 억압과 고문, 억류 등 정치적 숙청이 다시 이루어졌고, 2009년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어 다수당인 몽골인민당과 민주당이 연립정부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몽골의 과거청산 모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TRC)에

서 시작된 진실·화해 모델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의 진실 말하기를 통해 피해자 가해자 간 관계 회복, 당사자들과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권침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에는 몽골과 러시아의 기밀 문서고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권의 문제가 민주화 이후 몽골에서 정의 회복 정책의 불연속성, 정책과 현실 간 괴리의 주요 요인으로 보이며, 논문에서 국가사면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을 요청하기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현재 몽골의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2014년 몽골정부가 ‘정치적 희생자 연구센터’를 돌연 폐쇄시킨 배경도 청하여 듣고 싶습니다.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 학술교류포럼]

국가폭력의 청산과 정의 5·18과 전지구적 차원의 이행기정의

전지구적 기억공간에서 5·18

사회: 최정기(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소장)

■ 발표 1: **포스트메모리와 5·18**

—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을 중심으로 —

_배주연(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토론: 강소희(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 발표 2: **1988년 “버마” - 광주의 연상 작용 - 신문지면을 중심으로**

_정일영(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토론: 심주형(인천대 중국학술원 HK연구교수)

■ 발표 3: **글로벌 60년대와 68운동**

— 얽혀 있는 역사의 기억화(memorialisation)와 역사화(historicization) —

_강정석(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토론: 박경섭(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포스트메모리와 5·18

-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을 중심으로 -

배주연(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1. 들어가며

1980년의 광주를 강요된 침묵의 시간을 거쳐 뒤늦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뒤늦게 찾아온 광주는 그러므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그날을 담은 충격적인 영상들 속에서 독재정권의 폭력을 증거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1980년의 광주는 동시대의 사북이나 부마와 같은 다른 지역들과 함께 민주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기표가 되었다. 그리고 4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80년의 광주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세대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여전히 진실을 둘러싼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의 상황에서 비당사자들, 비체험 세대들의 발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놀라운 한편으로, 이런 기억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들의 외연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모든 기억이 포스트메모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논의를 펼쳐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후 세대들에게 트라우마적인 사건, 재난과 같은 비일상적인 충격적 경험들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2. 박솔희의 『그럼 무얼 부르지?』

이 질문을 처음으로 던지게 된 건 박솔희의 소설 『그럼 무얼 부르지?』(2014, 자음과 모음)에서부터였다. 이 작품은 화자가 버클리에서 한국어 모임에서, 그리고 일본의 한 바에서 광주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경험과, 버클리에서 만난 해나라는 친구와 함께 광주에 갔던 날을 중심으로 화자의 당혹스런 감정을 담고 있다.

광주 출신인 소설 속 화자는 버클리에 여행 갔을 때 우연히 한국어 모임에 나갔다가 자신이 나고 자란 광주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마주하게 된 광주의 이야기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하나의 성질이 된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광주. 그러나 그녀에겐 낯선 광주.



해나는 가방에서 스테이플러가 박힌 프린트물을 꺼내 사람들에게 건넸다. May 18th에 관한 자료라고 했다. 아, 5·18이 May eighteenth구나 당연한 것을 신기하다고 생각하며 그래? 거기는 내 고향인데 말했다. 해나는 정말이야? 감탄하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왜 놀라워하는 거지 감탄하는 거지 어째서 눈을 크게 뜨는 거지 생각하다 웃으며 그래 나는 거기서 태어났어 덧붙였다. (141)

모두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지만 정작 그녀에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비슷한 질문은 교토의 한 술집에서도 반복된다.

우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때 살아 있던 사람이니까. 광주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 알지, 제주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것도 알지.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니까 다 알지. 나는 웃었고 나이 많은 아저씨 둘도 웃었다. 그 두 사람은 내게 너는 광주 사람이니까 너도 다 아는 사람이지 했는데 나는 그런가? 하고 혼잣말을 내뱉으며 실실 웃었다.(160-161)

그 사람은 내게 너는 광주 사람이지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 옆에 누가 있더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돌렸다. 고개를 돌린 쪽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나는 광주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자 고개를 돌렸는데 꼭 아닌 것만 같아서 그랬다. 나는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그 이야기를 듣자 데운 술을 마시던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할 이야기는 그것밖에 없다는 듯이 80년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내게 너도 광주 사람이지 하고 말했는데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아득함을 느끼고 고개를 휙 돌리고 반응도 하지 않고 맥주만 마셨다.(165)

그 이야기는 “마치 아일랜드의 피의 일요일이라거나 칠레의 피노체트가 저지른 일과 억압받았던 그곳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141) 명백하지만 낯선 이야기들이다.

나는 그런 명확한 세계에 없었다. 마치 아주 복잡한 지도를 보고 있는 것처럼 거기는 어디지? 하고 들여다보아야만 했는데 그렇다고 무언가가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으므로 당사자는 아니며 또한 명확한 세계의 시민도 아니었다. 내 앞에는 장막이 있고 나는 장막을 걷을 수 없으므로. (159)

버클리에서 광주의 이야기를 들은 지 3년 후, 5·18 30주년이 되던 해 봄, 화자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경험을 마주한다. 한국어 모임에서 만난 해나라는 친구가 광주를 찾아온 날, 둘은 구도청을 방문한다.

그들을 뒤로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해나와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복도. 어두운 복도. 무거운 회색 복도. 시멘트 건물, 벗겨진 페인트 그 둘의 냄새. 이 회색 복도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말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정말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해줄지도 모른다. 이제까지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말이다. (150-151)

화자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그 이야기를 해줄 입들은 침묵하고 있다. 그러니 그녀가 가 닿을 수 있는 곳은 없다. 한 술집에서 누군가 “그해에 서울에 있는 광장에서 부를 수 없게 된 노래”¹⁾를 틀어달라고 하다가 제지당한다. 남자가 외친다.

그럼 무얼 듣지? 무얼 불러야 하지?

술집 사장은 레퀴엠을 틀어준다. 죽은 자를 애도하는 곡인 레퀴엠. 그러나 여기에서 레퀴엠은 애도의 금지를 애도하는 노래가 된다. 그녀는 광주의 기억을 마주하지도 거부하지도 못한 채 그럼 무얼 부를 수 있을지 난감해 한다. 그녀의 앞에는 ‘장막이 쳐져 있고 그 앞으로 직선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녀는 결국 5·18에는 가 닿지 못한다.

다만 내 앞으로는 몇 개의 장막이 쳐져 있고 나는 그 앞으로 직선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하다는 이야기다. 나는 3년 정도의 시간은 하나로 볼 수 있으며 3년 전은 3년 후의 시선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나는 모든 시제를 지울 수 있으며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은 점점 늘어나지만 나의 시선은 김남주가 이야기한 “광주 1980년 오월 어느 날”에는 가닿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걸 좀 신기할 수도 있지만 실은 당연한 이야기다.”(167)

그녀는 정작 그녀를 한국어 모임으로 초대할 것이 누구인지, 혹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날 자신이 읽고 있던 책,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카푸치노, 그리고 그 날의 공기와 색깔과 같은 감각적인 것들은 정확히 기억한다.

버클리 대학 근처에 있는 테이블이 넓은 카페, 목요일 오후 8시였다. 그날의 밤공기가 가볍고 건조했다는 것이 기억난다. (140)

그리고 그 자리는 끝이 났다. 뭔가 좀더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도 같은데 기억나는 것이 없다. (중략) 숙소는 차이나타운을 지나야 나왔다. 그때 밤의 색은 푸른 색이었고 거리는 푸른색 아래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다. (143)

이와 같은 발화는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을 발화/기억할 순 없으나 그 날의 분위기로 기억하게 되는 정동의 장을 형성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발화할 수 없는 이들 (금지되었거나 혹은 그런 위치에 스스로를 대입할 수 없는 화자 모두에 해당한다)에게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발화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한다.

중년 백인 남자는 내게 중국인이니 대만인이니 일본인이니 묻고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 이름이 나오면 반응해야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준비를 했으나 끄덕일 수 없었다. (143-144)

1)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의미한다.

광주는 그 밤에 특별히 크게 소리 내어 무언가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우리가 오래오래 들어야 했던 것은 떡과 죽과 국수의 이야기뿐이었다. 그 사람은 다른 중요한 이야기는 없다는 듯이 그 이야기를 했다. 마치 이야기가 끊어지면 안 될 것처럼 말이다.” (164)

박솔피의 소설은 광주를 중심으로 재현되던 후일담 문학, 혹은 증언 문학과는 달리 증언할 수 없는 세대의 문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뤼시앙게벤은 박솔피의 이 소설이 광주를 다루는 세대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기존의 증언문학에서 픽션으로 옮겨가고 있음에 주목한다.

우리의 전제는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사건에 대한 관점과 이의 문학적 형상화는, 세대가 바뀌면서 변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솔피의 단편에서, 광주를 경험한 이전 세대의 증언문학과는 다르게, 광주의 사건들이 어떻게 암시적으로 픽션을 통해 드러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²⁾

이러한 세대의 변화는 광주의 재현에서 꽤 낯선 것이었는데 마리안느 허쉬는 이런 트라우마적 역사를 다루는데 있어 직접 체험한 세대들의 기억과 구분하여, 그 이후 세대들의 기억을 포스트 메모리라고 부른다. 홀로코스트 연구자이자 페미니스트인 허쉬는 포스트메모리라는 용어의 유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포스트메모리는 앞선 세대들이 기억하는 경험과 앞선 세대들의 개인적, 집단적, 문화적 트라우마를 자신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이미지, 그리고 행위들에 의해서만 견지하는 “이후 세대 generations after”와의 관계를 설명한다.³⁾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포스트제너레이션들이 “기억의 형태로 연루를 상상한다”는 것이고, “기억은 실제로 살았거나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승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동시대의 증언자나 참여자의 회상과는 차이가 있는 전수된 기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⁴⁾ 거리감이 있는 공감이야말로 이후 세대들의 기억, 즉 포스트메모리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마리안느 허쉬가 ‘메모리’가 아닌 ‘포스트메모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는 “시간이 지나고 세대를 넘어가는 조건에서의 기억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기”⁵⁾ 위해서였다. 즉, 그것은 직접적 경험과 그로 인해 형성된 기억의 종말이 아니라, 이후 세대들이 어떤 방식으로 트라우마적 사건과 역사에 접속하는가의 문제이다. 허쉬는 이들이 직접적 경험이 아닌 사진이나 부모로부터 전달되는 잠자리 이야기 bedtime story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이 기억과 ‘매개’된다는 점, 그래서 이들의 기억이 상상적 투사, 반영, 창조에 의해서 매개된다는 점⁶⁾에 주목하면서 소설, 회화, 사진, 영

2) 뤼시 앙게벤 (2018), 『증언의 형언불가능성에서 픽션의 말할 수 없음으로 : 광주의 새로운 재현을 지향하는 한국문학?』, 『비교문학』, 26권 1호, 정의진 역, 196쪽.

3) Marianne Hirsh (2012),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Writing and Visual Culture After the Holocaust*,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p.5.

4) 위의 책, p.3.

5) 박정원 (2017) 네루다,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아이콘, 그리고 포스트메모리, 이베 로아메리카研究, 28:3, 213-243 (218쪽)

6) Hirsch, 위의 책, pp.106-107.

화와 같은 미디어에 주목한다. 이처럼 이후 세대들의 기억은 직접적 증언이 아닌, 정동/분위기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포스트메모리 작업이라 할만한 박솔미의 소설의 정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허쉬는 롤랑 바르트의 『밝은 방: 사진에 관한 노트 Camera Lucida』에서 착안해 포스트메모리가 가족, 특히 부모(엄마)/자식(딸)과 같은 친밀한 관계들 속에서 형성되며, 그것을 형성하는데 사진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바르트는 사진이 ‘그때 거기에 있었음 That-Has-Been-There’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강력한 사실의 인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증 이상의 사실을 말하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때 거기에 있었지만, 그것은 사진으로 남음으로써, 실재 대상과의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⁷⁾ 또한, 그것은 프레임 밖의 세계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⁸⁾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다.

포스트메모리에 있어 허쉬가 바르트를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바르트가 구분하고 있는 사진의 매력 때문이었다. 바르트는 대부분의 스튜디오 Studium을 가지고 있는 사진들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지만, 폰크툼Punctum을 가진 사진들에 깊은 매혹을 느낀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스튜디오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면, 폰크툼은 그런 맥락과 별개로, 혹은 그런 맥락을 걷어냈을 때, 보는 이에게 전달되는, 혹은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는 이들을 찌르는 pricked 정동적 측면을 의미한다.⁹⁾ 허쉬는 바르트의 이 이론을 확장하여 포스트메모리 형성에 이 친밀한 가족 관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라는 이 관계에서 사진이 주는 폰크툼이 극대화된다고 말한다.

한편, 알라이다 아스만은 기억의 유형학을 제시하며 처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기억을 개인적 기억과 사회적 기억으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의 기억을 정치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으로 제시하는데,¹⁰⁾ 허쉬는 문화적 기억 역시 포스트메모리라고 말한다. 허쉬가 포스트메모리의 형성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친밀성 intimacy의 감정이다. 그녀는 세대간의 포스트메모리 intergenerational postmemory를 가족의 포스트메모리familial postmemory로, 세대 내의 포스트메모리intragenerational postmemory를 친밀한 포스트메모리affiliative postmemory에 결합시키며 구분을 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에도 친밀함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¹¹⁾

그러나, 만약 우리가 타자의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우리 스스로의 삶을 관통하는 경험으로 받아

7) 즉, 우리는 사진의 대상이 더이상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사진은 대상과의 영원한 결별이다. Roland Barthes (2010), *Camera Lucida: Reflections on Photography*, translated by Richard Howard, Hill and Wang, p.76

8) Stanley Cavell (1971/1979) *The World Viewed: Reflections on the Ontology of Film*,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p. 24

9) Barthes, 위의 책, p.25.

10) Aleida Assmann (2010), 'Re-framing memory. Between individual and collective forms of constructing the past,' in *Performing the Past: Memory, History, and Identity in Modern Europe* edited by Karin Tilmans, Frank van Vree and Jay Winter, Amsterdam University Press: Amsterdam, pp.35-50.

11) Hirsch, 위의 책. 36쪽. 에파 호프만 역시 전체로서의 포스트 제너레이션과 특수성으로서의 2세대라고 말하며, 2세대의 직접적 경험을 좀 더 특수한 위치에 두고 있지만, 허쉬에 비해 그 구분은 훨씬 느슨하다. (Eva Hoffmann (2004), *After Such Knowledge: Memory, History and the Legacy of the Holocaust*, PublicAffairs)

들인다면, 혹은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 안으로 그들의 경험을 끌어들인다면, 그들의 경험을 모방하거나 과몰입하여 전유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¹²⁾

그러나, 친밀함을 형성하지 않은, 즉 연루의 감각을 가지지 않은 이후 세대들의 기억, 즉 포스트메모리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홀로코스트를 베드타임 스토리로도 듣지 않은 세대들에게 기억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바르트가 말한 바 20세기가 그런 죽음의 잔영들¹³⁾을 끊임없이 남기는 시대였기에 지금의 기억 전쟁이 존재한다면, 지금 세대는 어떻게 20세기를 기억해야 할까? 어떠한 사회적 연결고리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억은 어떻게 전이되는가? 이 고민이 시작된 것은 <김군>을 보고 나서다.

2. <김군>



<김군>(강상우, 2018)을 만든 강상우 감독은 이 영화가 광주 5·18 당시에 촬영된 한 장의 사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¹⁴⁾ 강상우 감독은 1983년 서울 출생으로 그동안 퀴어영화와 드라마 중심의 극영화를 만들어왔으며, <김군>은 그의 첫 번째 다큐멘터리이다. 감독은 자신이 다큐멘터리스트로서의 정체성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¹⁵⁾ 또한, 영화에 인터뷰어로 등장하는 조연출이나, 프로듀서,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다른 스태프들 모두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이라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김군>은 5월 개봉 예정으로, 필자가 본 버전에서 몇 가지 장면이 새롭게 편집되어 개봉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필자가 중요하게 보았던 두 개의 장면 - 극장 장면과 결론 부분 - 이 편집될 예정이라고 한다.¹⁶⁾ 그래서, 이 글에서는 영화에 대한 엄밀한 장면 분석보다 감독을 비롯한 이후

12) Hirsch, 위의 책, p.35.

13) 바르트에게 이것은 사진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20세기의 세계대전과 제노사이드와 같은 극한의 ‘죽음’의 경험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

14) 이 글에서 사용된 감독의 변은 모두 2019 인디다큐페스티벌에서 진행된 영화 <김군>의 ‘관객과의 대화’(2019년 3월 24일)와 같은 날 진행된 ‘포럼1_경험하지 않은, 당사자성 너머의 역사에 관한 영화적 재현’에서 이루어진 감독의 질의응답의 녹취를 본 것이다.

15) 즉, 다른 독립다큐멘터리들이 느슨하게 공유하고 있는 정치의식/윤리의식을 본인은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16) 극장 장면은 이강갑과 최진수가 직접 만나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화면을 보여주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한다. 필자가 본 버전에서는 이 대화와 화면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제시되지 않는다. 영화의 결론 부분은 김군이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김군이 죽었을 것이라는데 힘을 싣고 있지만, 편집되는 버전에서 결론 부분은 좀 더 선명하게 제시될 것이라고 한다.

세대들이 광주에 접속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것이 영화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영화는 5·18의 전개과정이나 사후적 평가를 담는 대신, (보수 군사연구자로 영화에서 소개되는) 지만원이 이 사진에서 제1광수(북한의 스파이)로 지목한 인물인 김군을 찾아나서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지만원의 ‘유사과학’ 담론을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김군을 알고 있거나, 김군이라고 추정되는 시민군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김군의 실체를 밝히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감독은 영화 내외부에서 지만원의 논리를 오히려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감독은 자신이 어떤 대단한 사명감이나 정의감, 혹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며, 5·18을 경험하지 않은 자신이나 영화의 다른 스텝들과 같은 세대들에게 ‘민주화’라는 말은 오히려 광주를 멀게 하는 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 장의 사진이 감독을 광주로 끌어 들였다. 감독은 영화를 시작하게 된 동기로 “매혹”이라는 말을 반복한다. 그리고 영화는 매혹의 실체, 실제 인물을 찾아가는 추리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매혹은 스튜디오과는 거리가 멀다. 광주를 둘러싼 여러 정황들을 제거했을 때 보이는 매혹, 그것이 강렬한 폰크톱으로 다가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것은 여기에서 사진을 통한 기억의 연결이라는 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억과는 달리, 사진이 주는 매혹이 연루의 감각을 일깨우고 있다는 점이다. 감독은 ‘김군’의 사진에서 오는 강렬한 정동을 통해 자신이 연루되지 않았던, 혹은 연루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을 그 자신의 연루의 감각으로 재획득한다.

물론 정지혜 평론가가 지적한 것처럼 ‘광주’라는 맥락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말하긴 어렵다.¹⁷⁾ 감독 역시 영화의 시작이 사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지만, 이 사진은 광주 518과 연계된 이전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광주 민주화 항쟁’의 증거, 혹은 맥락으로서 읽혀지는 사진이 아닌 사진 자체의 강렬함에서 시작된 영화라는 점에서 <김군>은 그동안 광주의 맥락에서 다루기 까다로웠던 주제인 ning마주이나, 혹은 기동타격대의 모습을 재현의 장으로 끌어들인다.

17) ‘포럼1_경험하지 않은, 당사자성 너머의 역사에 관한 영화적 재현’ (2019년 3월 24일)에서 이루어진 정지혜 평론가의 토론 녹취에 기반하고 있다.

영화는 이 실제 인물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마주하게 된다. 여기에서 증언은 사실 관계들을 확인시켜주기보다 기억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며, 조각조각 나누어지고 때로는 오히려 사실을 미궁으로 빠지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 기억을 끄집어내는 작업은 한참동안 증언을 거부했던 최진수에게서 확인되는 것처럼, 다시금 상처를 파헤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영화의 초반, 시민군에 참여했던 오기철이 김군을 찾아나서겠다는 것이, 지만원과 동일한 프레임이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지만 인터뷰어인 조연출은 이 질문에 답하기보다 다른 대답을 하며 즉답을 회피하는데, 이때 오기철을 비추던 카메라는 컷하여 산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이 장면은 다음 장면의 예비 장면이기도 하지만, 시선의 회피, 즉 대답의 회피와 닿아 있다. <김군>의 윤리는 지만원의 논리를 박살내는 것도, 5·18의 대의를 알리거나 확장하는 것도 아닌, 사진 속의 시민군을 찾는 것 - 즉, 사실을 찾는 것 - 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는 불편한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김군 찾기를 멈추지 않는다.

여기에서 포스트메모리의 새로운 측면이 등장한다. 사실에 대한 집착은 경험의 주체가 직접 자신의 기억을 증언하는 시기 이후에 진실과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비적 작업처럼 보인다. 허쉬는 포스트메모리는 더 이상 회상에 의해 과거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 투사, 반영, 그리고 창조에 의해 매개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럴 때 공백으로 남게 되는 사실에 대한 앎의 욕망 역시 두드러지게 등장한다. 예를 들어, 김숨은 위안부 피해자가 마지막 한 명 남은 상황을 가정해 소설을 썼는데, 여기에 316개의 실제 증언자의 각주를 달아 출처를 밝힌다. 물론 여기에서 진실과 사실은 다르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에 대한 강박은 무수한 이미지와 가짜 뉴스, 정보들이 넘치는 세계를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에게 어떤 이미지가, 어떤 정보가, 또 어떤 뉴스가 사실인가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광주’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위키피디아류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수없이 많은 정보가 튀어나온다. 거기에는 광주를 민주항쟁으로 다루거나, 국가폭력의 희생양으로 설명하는 글들이 있는가 하면, 좌파/혹은 북한의 정치적 책동으로 다루는 글들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교묘하게 단어를 바꿔치기하며 자신들이야말로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말한다.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화될수록 이런 정보들은 더더욱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날을 경험한 이들의 기억을 ‘말할 수 있는 입’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사후적으로 연루의 감각을 획득하게 된 이후 세대들의 포스트메모리에서는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자신들이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집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다. 강상우 감독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저널리즘적 태도에 대해 영화적 실천으로 설명을 했지만 (추적 장르를 빌려오는 것), 이것은 또한 이후 세대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자신들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김군>이 사진에서 오는 강렬함을 통해 ‘5·18’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사진이 ‘그때 거기 있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것처럼 사진은 거기 있었다는 사실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결국 영화는 사실을 확정하지 않거나 확정의 실패를 보여주며 마무리된다. 이상갑은 사진을 보고서도 그것이 자신의 과거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최진수는 김군이 죽었다고 단언하지만, 시신이 사라진 상황에서 최진수의 증언을 제외하면 사실을 확정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감독은 사실을 찾지 못하더라도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며 사실과 진실을 구분한다. 그

리고 감독은 자신이 찾은 진실을 ‘공백’이라고 표현한다. 사실 확인의 불가능성, 그 공백이야말로 영화가 제시하는 강력한 힘이자,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게 된 상황(군부에 의한 시신 훼손)이 어떤 진실(예를 들면, 군부의 폭력성과 5·18의 처참함)에 다가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셈이다.¹⁸⁾ 이런 의미에서, 포스트메모리는 어쩌면 언제나 비어 있는 일종의 공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일지도 모르겠다. 포스트메모리 작업은 기억의 불완전함에 더해, 타인의 기억을 어루만지고, 그 기억의 공백을 서성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이 무엇이나 마주하려는 작업은 연루의 감각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죽은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기억으로 과거를 되살리는 작업이다. <김군>은 허쉬가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포스트메모리를 상상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후 세대’의 기억, 즉 포스트메모리가 환기시키는 욕망,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것의 불가능함을 통해 진실 혹은 이전 세대의 기억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3. 나오며

이런 포스트메모리가 광주를 둘러싸고 등장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광주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진행 중인 싸움이고 밝혀야 할 진실들이 있다. 그러나, 어쩌면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김군>과 같은 영화들이, 포스트세대들이, 연루의 감각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재현영역에서 광주를 포스트메모리로 이해하는 이후 세대의 등장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정보의 풍요 속에서 정작 기억이 빈곤해질 때, 포스트제너레이션들은 광주와 어떻게 접속하고 또 어떻게 기억할/해야 할 것인가?

18) 이 부분은 기존 버전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영화의 재판집본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

■ 토론문

포스트메모리와 5·18: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을 중심으로

강소희(전남대 5·18연구소)

1. 허쉬의 포스트메모리 개념과 <김군>의 어긋남에 대해

부족한 저의 이해에 기대면, 이 글은 “80년 광주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세대들의 발화가 시작되었다는 점”(1쪽), 즉 ‘비체험 세대들’의 5·18에 대한 예술적 재현이 출현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박솔피의 소설 『그럼 무얼 부르지』(2014)와 강상우 감독의 다큐 <김군>(2018)을 분석함으로써, 5·18에 대한 ‘포스트메모리’의 양상을 읽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하지만 이 글의 이론적 틀로 자리하는 마리안느 허쉬의 ‘포스트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주요 분석 텍스트인 <김군>의 성격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포스트메모리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가족 관계, 즉 부모와 자식 사이의 친밀성과 그 관계에서 극대화되는 사진의 폰크툼에 대한 논의가 <김군>과는 연결되지 않아서 ‘5·18에 대한 포스트메모리’의 구체적인 상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비체험 세대의 포스트메모리와 그 기억이 예술적으로 재현되는 양상, 그리고 그 작품들이 다시 동시대인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방식 등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허쉬의 포스트메모리라는 개념을 통해 주목해 분석하시려는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드립니다.

2. 포스트메모리의 특징을 ‘사실에 대한 집착’으로 분석하는 문제에 대해

“사후적으로 연루의 감각을 획득하게 된 이후 세대들의 포스트메모리에서는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자신들이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집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다.”(8쪽) 포스트메모리의 한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 위의 문장에 개인적으로는, 쉽사리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분석의 대상이 <김군> 다큐 한 편이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 5·18에 대한 포스트메모리의 양상을 추출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체로 2010년대에 발표된 여러 편의 다큐(<미국의 바람과 불>(김정만, 2011), <논픽션 다이어리>(정윤석, 2013), <순환하는 밤>(백종관, 2016), <88/18>(이태웅, 2018) 등)에서 5·18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방식은 은폐된 사실을 영상에 기록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에 다가서는, 즉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의 오래된 형식과는 변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0년대 다큐의 양상을 하나로 규정하긴 어렵지만, 거칠게 공통된 특징을 추출한다면 5·18을

답은 사진이나 뉴스릴 영상 등을 파편화된 형태로 편집해 서로 다른 시공간의 사건이나 인물과 재배치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크들에서 5·18은 사건을 둘러싼 익숙한 상징과 지배적 담론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이질적인 시공간의 이미지와 충돌함으로써 동시대적 질문을 불러일으키거나, 낯선 정동의 변화를 경험하게 만드는 현재적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다시 말해 최근 5·18을 다룬 다크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기존의 의미망에서 벗어난 재배치를 통해 새로운 기억·기념의 방식을 발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그럼 무얼 부르지」가 제기하는 문제와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사실에 대한 집착’은 5·18에 대한 포스트메모리의 특징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5·18’을 위한 지금 우리의 대응 방식 혹은 <김군>이라는 개별 작품의 특이성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3. 폰크툼의 시간적 계기와 <김군>의 미학적 형식에 대해

주지하듯이 허쉬의 논의에서 중요하게 인용되는 바르트의 『밝은 방』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에게 남겨진 사진들을 통해 이미지와 시간에 대해 사유하는 텍스트입니다. 허쉬의 포스트메모리 개념에 가족 관계의 친밀성이 강조되는 것은 아마도 『밝은 방』이 지닌 이 같은 성격과 무관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5·18에 대한 포스트메모리의 양상을 <김군>이라는 다크를 통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밝은 방』 2부에서 전개되는 폰크툼의 시간적 계기에 대한 바르트의 논의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본문에 서술하신 것처럼 사진은 “그때 거기 있었음”에 대한 인증이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에 부재함”에 대한 인증이기도 합니다. 즉 “죽은 존재의 살아있는 이미지”(부재의 현존)로서의 사진은 그것을 마주한 이에게 “거꾸로 된 예언의 메시지”(통증 혹은 매혹의 경험, 강도로서의 폰크툼)를 전달하며, 이는 사진 속 존재에 대한 “불가능한 앎”(사실이 아닌 정동의 차원)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과거의 사진(80년 5월 김군의 이미지)과 현재의 나(강상우 감독)의 마주침이 미래의 앎으로 이어지는 이미지의 시간성, 이에 대한 바르트의 사유가 <김군>에 적용되면 어떨지 조심스레 제안해봅니다. 특히 <김군>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두 장면(극장 신과 도청 신)의 미학적·실천적 형식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988년 “버마” — 광주의 연상작용 —

신문지면을 중심으로

정일영(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1. 1980년대 한국 현대사 속의 ‘버마’

미얀마 혹은 ‘버마’)는 1980년대 한국 현대사 속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서 종종 호명되었다. 아마도 발표자와 비슷한 세대가 기억하는 최초의 버마는 ‘아웅산 묘소 폭탄 사건’일 것이다. 버마가 비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1980년대 들어 경제적·현실적인 이유로 남한과 적극적인 교류를 거부하지 않았다.²⁾ 한국의 신군부에게도 소위 ‘순방외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버마는 나쁘지 않은 외교 카드였다. 특히 이전까지 북한과 더 가까웠던 버마와 관계가 개선되면 체제 홍보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림 1> 1983년 체신부가 발행한 ‘전두환 대통령 버마 방문 기념우표’ (출처 : 우정사업본부)

- 1) 한국 외무부는 1982년 5월 26일 전세계 164개국의 국명을 확정하여 문교부와 표기 통일협약에 착수했다. 현지 발음을 존중하고 복수 및 접속사 생략, 문교부 및 관용표기법 존중 원칙에 따라 이전까지 ‘버어마’라고 표기했던 국명을 ‘버마’로 바꾸었다(外務部, 國名 표기 통일, 『경향신문』 1982. 5. 26). 한편 1989년 6월 버마 군부가 ‘미얀마’로 국명을 바꾸었다. 현재 정식 영어 국명은 The Union of Myanmar(미얀마 연방)이다. 군사정부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버마’를 고집하고 있다(양길현, 『버마 그리고 미얀마 - 내원과 아웅산 수지』, 오름, 2009, 5쪽). 사실 버마는 구어체, 미얀마는 문어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으나 군부가 ‘민족’의 뉘앙스가 강한 버마를 버린 이유는 반쿠데타 세력과 소수 인종의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영국 정부 등과 『가디언』, 『워싱턴포스트』 등은 버마라고 칭한다(“미얀마 ‘버마’...한 나라 두 이름”, 『한겨레』 2007. 9. 27). 이 글에서는 당시의 명칭인 ‘버마’를 사용한다. 다른 지명도 마찬가지이다.
- 2) 2015년이 한국과 버마 수교 40주년이었다.

결국 신군부는 동남아-오세아니아 순방의 첫 국가로 버마를 선택, 1983년 10월 8일 출발했다. 그리고 10월 9일 아웅산 묘소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버마 정부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오히려 남한 정부와 관계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1987년 바그다드를 향해 비행하던 대한항공 858 여객기가 실종된 지역 또한 버마 상공이었는데, 이때도 버마 정부는 남한 정부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버마는 ‘버마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일관된 쇄국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³⁾ 그럼에도 신군부는 대통령의 버마 방문을 추진했고, 정부의 통제를 받던 당시 언론 또한 아웅산 묘소 폭발 사건 이후에도 우 네윈(U Ne Win)에 대하여 “베일 속에 가린 통치자” 정도로 서술할 뿐이었다.⁴⁾ 적극적인 호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으나, 여타 사회주의 국가나 지도자에 대한 표현들에 비하면 꽤 수위가 낮았다고 볼 수 있다. 1987년에는 우 산유(U San Yu) 버마 대통령이 방한하기도 했는데, 당시 『경향신문』이 보도한 우산유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실권자 네윈의 버마식 사회주의 노선을 충실히 수행하는 순수민족주의자로서 량군의과대학 재학 중 반영, 반일운동에 적극 참여한 독립투사. 지난 62년 네윈 장군의 쿠데타에 가담, 중앙정계에 본격 진출해 혁명위원회위원, 육권참모총장, 버마사회주의계획 당중앙집행위총서기, 부총리겸 국방장관, 당감찰위원회 의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네윈장군의 오른팔로 비동맹중립노선을 추구. 지난 81년 네윈 장군의 사퇴에 따라 국가평의회 의장겸 대통령으로 선출돼 점진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등 경제개발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장본인. 외유내강형의 독실한 불교신자로 당년 69세. 술과 담배를 전혀 않으며 취미는 독서와 맨손체조. 도탄신 여사(67) 사이에 4녀를 두고 있다.⁵⁾

한국 언론을 통해 꽤 호의적인 소개를 받은 우산유는 울산과 경주까지 순회한 후 짧은 여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각 언론은 우산유의 일정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다. 다음은 『경향신문』이 게재한 ‘한·버마 정상 만찬’ 사진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저 “9일 저녁”이라는 시점이다. 『경향신문』의 보도 사진은 그 다음날인 10일에 게재되었는데, 그날이 바로 1987년 6월 10일이다. 전두환은 6월 8일 방한한 우산유를 맞이하며 “이번 방한은 외국이 아닌 형제의 나라에 왔다고 생각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들은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다는 점에서 버마 국민들과 같다”고 이야기했다



韓·버마頂上 만찬서 건배
 金斗煥대통령이 9일저녁 청와대 만찬에서 우산유버마 대통령과 건배하고있다.

<그림 2> 『경향신문』의 ‘한·버마 정상 만찬’ 보도 사진

3) 각 시기별 군부의 특징과 정책에 대해서는 장준영, 『하프와 공작새 - 미얀마 현대정치 70년사』, 눌민, 2017을 참고할 것.
 4) ‘베일 속에 가린 統治者... 버마 『네윈』’, 『경향신문』 1986. 1. 18.
 5) ‘순수민족주의 독립투사’, 『매일경제』 1987. 6. 8.

고 한다.⁶⁾

그러나 유산유가 이틀 뒤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시위 장면을 보거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전두환의 말에 동의하고 싶었을까? 이듬해 버마에서 벌어진 민주항쟁과 끔찍한 유혈진압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공감보다는 항쟁의 주체였던 이들이 공감할 가능성이 훨씬 컸을 것이다. 물론 공감의 이유는 정반대였겠지만. 이 글은 1988년 버마에서 ‘8888 민주항쟁’이 일어날 때 국내 언론의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타인의 고통’이 이끌어내는 공감의 힘과 그 한계를 언급해보려 한다. 우선 1988년 버마에서 전개된 민주화 운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당시 한국 언론의 보도 형태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당시 그 사건이 한국인의 머릿속에서 일으킨 연상작용을 언론 지면을 통해 살펴보고, 이 현상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문제제기를 하며 발표를 마무리할까 한다. 비전공 분야를 다루면서도 시간과 능력의 한계로 많은 자료를 섭렵하지 못하고 깊이 있는 발표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 ‘8888 민주항쟁’의 전개와 한국 언론의 보도

“버마 항쟁을 보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지 않을 수 없다. ‘버마식 사회주의’의 목표는 이상적인 미사여구로 채워졌지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체제였다. 제3세계 각국에서 표방하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등 다양하지만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 사상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 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체제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버마인들의 항쟁에 공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⁷⁾

제국주의 영국과 일본을 몰아내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독립한 버마는 1962년 아웅산 장군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군사령관 네윈이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독재의 길로 접어들었다. 네윈 군사정권은 ‘버마식 사회주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매우 폐쇄적인 정책과 일당 독재의 정치 시스템을 고수하게 된다.⁸⁾

1988년과 같은 대대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의 민주봉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항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네윈 집권 후 1962년 7월 7일과 1974년 우 땅(U Thant) 전 유엔 사무총장 장례식을 기점으로 일어났던 두 차례의 민주항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1988년 이전에도 경제난 때문에 일어난 수차례의 소요가 있었다. 하지만 1988년의 사건은 성격과 규모, 참여 주체의 범위 등 모든 면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었다.⁹⁾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1988년 버마 민주항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⁰⁾

6) ‘3년 8개월 만에 재회’, 『경향신문』 1987. 6. 9.

7)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원 엮음, 『버마 현대사』, 소나무, 1989, 8-9쪽.

8) 김규환, 『우리가 몰랐던 버마, 내가 바라는 버마』, 『기억과 전망』 13(겨울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마웅 저, 『아시아공동체의 눈으로 버마 민주화운동 바라보기』, 『황해문화』 58, 새얼문화재단, 2008, 281-282.

9) 장준영, 앞의 책, 117쪽.

10) 이 부분은 다음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였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원 엮음, 앞의 책; 양길현,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잠시 호황을 맞았던 버마 경제는 1983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보였다. 게다가 쌀 공출 제도가 붕괴되면서 소비자 물가는 1985년 이후부터 연간 20% 내외로 폭등했다. 1987년 말부터 1988년까지 물가는 더욱 폭등하여 지역에 따라 쌀 가격이 400% 상승한 곳도 있었다. 물가 폭등으로 밀수 및 암시장이 기승을 부려, 가솔린 공시 가격이 꺾린 당 3.5차트(kyat)였으나 암시장 시세는 지역에 따라 30-90차트까지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도 군부 정권은 여전히 ‘버마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대내적으로는 유일당 정책, 대외적으로는 쇄국정책을 고수했다. 그뿐 아니라 네윈은 화폐개혁을 명목으로 25, 35, 75차트 화폐를 갑자기 없애면서 경제 혼란을 부추겼다.¹¹⁾ 결국 1987년 2월에 국제적 망신을 무릅쓰고 UN에 버마를 LLCD(최빈국, 후발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외채 상환 유예나 원조를 받기 위해 취한 조치였으나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오히려 버마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아주 사소한 시비로부터 8888 민중항쟁이 촉발되었다. 1988년 3월 12일, 랑군 공과대학(RIT) 학생들이 캠퍼스 근처의 음악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학생들은 함께 온 가수 사이 티 쉹의 새 노래 테잎을 틀려고 했지만, 마을 주민이었던 다른 손님들이 반대하면서 싸움이 일어났다. 그 와중에 취중난동을 부리던 한 사람이 학생 하나를 덮쳐 구타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들을 체포했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경찰에게 구타를 당했다. 그뿐 아니라 가해자 중 한 명이 인민평의회 지명인사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경찰은 그들을 석방했다. 그 결과에 분노한 학생 수십 명이 인민평의회 사무실로 향해 항의했고, 전투경찰이 출동하여 발포, 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발포로 사망한 학생의 죽음에 분노한 학생들은 교내에서 연일 평화 시위를 벌였다. 이에 다시 전투경찰이 랑군 공대 캠퍼스에 침입하여 학생 수백 명을 체포하였고, 3월 18일까지 최소 40명이 사망하였다.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일어난 시위 과정에서 희생자가 계속 발생하였고, 버마 정부는 휴교령과 야간통행 금지, 집회 금지 등 일관적으로 강경 대응했다. 6월부터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직 군인, 노동자, 승려까지 시위에 참가했고, 정부는 군병력까지 투입하기 시작했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희생자 숫자도 더욱 늘어나, 6월 25일에는 피구 시에서 70명 이상이 사망했다. 7월경, 3월에 사망한 41명의 학생이 호송차 안에서 최루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다. 7월 22일 북부 프롬시에 계엄령이 선포될 정도로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네윈은 7월 23일에 사회주의계획당 당수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유일당 혹은 다당제 중 선택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버마 국민들은 승리의 찬가를 불렀으나 7월 25일 국민투표안은 기각되었다. 경제적으로 일부 개방적인 정책이 채택되는듯 했으나, 네윈의 후임으로 ‘랑군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지닌 세인 르윈(Sein Lwin)이 당의장으로 선출되었다.¹²⁾

결국 시위는 더욱 규모가 커져 1988년 8월 8일 랑군에서 10만 이상의 시민, 학생이 반정부 구

앞의 책; 김규환, 앞의 글; 김성원, 『미얀마의 이해』,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4; 조지 카치아피카스, 『아시아의 민중봉기』, 원영수 옮김, 오월의 봄, 2015; 장준영, 앞의 책 등. 특히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원이 엮은 책은 버마 민중항쟁의 상세한 일지를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11) 이 화폐개혁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네윈이 9를 행운의 숫자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12) 세인 르윈은 당시만이 아니라 1962년의 랑군 학생 시위 때에도 학생회 건물을 폭파시킨 장본인이었다(장준영, 앞의 책, 117-118쪽).

호를 외치며 사상 최대의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이날을 지칭하여 ‘8888 민중항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버마 군부는 전국 12개 도시에서 일어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무력 진압하여 8월 12일까지 사망자 수가 500명에서 최대 1,500명까지 추산하기에 이르렀다.¹³⁾ 8월 중순에는 전국적인 총파업이 시작되었고, 9월에는 시민들이 무장하여 군병력과 교전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은 1988년 9월 21일 소 마웅(Saw Maung)¹⁴⁾이 쿠데타를 일으킨 후 9인 군사 내각의 수상에 취임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¹⁵⁾ 일반적으로 8888 민중항쟁은 1986년 필리핀의 2월 혁명이나 1987년 한국의 6월 항쟁과 달리, 1989년 천안문사건처럼 큰 희생에 비해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좌절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¹⁶⁾



<그림 3> 『한겨레』 1988년 8월 12일자 1면과 같은 일자 『동아일보』 5면, 『조선일보』 1면

당시 한국 언론은 이 사건을 꽤 상세히 보도했다. 1988년 3월과 6월의 시위 소식만 해도 일부 언론에서만 정치면의 단신 정도로 보도했지만, 1988년 8월 이후부터는 1면 주요 기사로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¹⁷⁾ 1면으로 보도가 나가더라도 다시 국제면에 상세한 보도를 추가하는 경우도

- 13) 그해 사망자 수는 최소 3,000명 이상으로 추산한다. 혹자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는 경우도 있다(조지 카치아피카스, 앞의 책, 140쪽). 또한 8천 명 이상이 망명했다고 한다(김성원, 앞의 책, 153쪽).
- 14) 소 마웅은 1975년 태국 국경에서 일어난 공산주의 세력과 소수민족 저항 세력을 진압한 공로를 인정받아 출세 가도를 달렸다. 르윈 정권 하에서 육군참모총장, 국방장관을 지내고 신군부 쿠데타 세력의 중심인물이었다. 1990년 5월 자유선거를 허용하는 듯 했으나 민주국민연합이 80% 이상 득표하자 민주국민연합 의원들을 체포하고 아웅산 수치를 가택 연금했다. 그의 통치 기간에 버마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공식적인 체제 변경을 했다.
- 15) 따라서 8888 민중항쟁의 주요 원인으로 ① 화폐 정책 등 경제 정책의 실패, ② 경제 악화에 따른 식량난, ③ 군부의 과잉진압과 정치적 둔감, ④ 사건 이전까지 있었던 저항 세력의 유산 등이 지목된다(양길현 앞의 책, 100-101쪽)
- 16) 양길현, 위의 책, 109쪽.
- 17) ‘버마, 首都랑군에 戒嚴令’ 『조선일보』 1988. 8. 4; ‘美, 發砲 중지 촉구’, 『경향신문』 1988. 8. 10; ‘버마 反政 시위 2백명 死亡’, 『조선일보』 1988. 8. 10; ‘버마 시위대, 보안군과 시가전’, 『한겨레』 1988. 8. 11; ‘버마 르윈政權 崩壞 가능성’, 『경향신문』 1988. 8. 11; ‘버마 示威隊 무장 軍과 交戰’, 『동아일보』 1988. 8. 11; ‘버마 고위층 긴급회동’, 『동아일보』 1988. 8. 11; ‘韓國人 50여명 무사’, 『동아일보』 1988. 8. 11; ‘버마시위대 남부항구 카오성 장악’, 『한겨레』 1988. 8. 12; ‘버마 示威隊 2개 都市 장악’, 『동아일보』 1988. 8. 12;

많았다. 당시 보도 환경 상 AP통신이나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보도를 받아 보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한국 언론이 동남아 국가의 사건을 대대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다루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특히 당시는 ‘88올림픽’ 관련 기사가 지면을 가득 메울 때였기 때문에 더욱 예외적인 현상으로 느껴진다. 기사의 분량도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기사의 내용도 상당히 자세했고 사실 보도 외에 사진, 분석 기사나 논설도 게재되었다.¹⁸⁾ 많지는 않았지만 방콕 등에 나가있는 특파원의 심층 보도나 도파한 교민의 인터뷰도 게재되었다. 이런 변화는 분명 1987년 6월 항쟁 이후 변화된 사회의 분위기와 『한겨레』 등 새롭게 등장한 언론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여 민주당, 평민당에서도 격려와 지지의 성명을 채택, 발표하기도 했다.¹⁹⁾

흥미로운 것은 버마에서 일어난 사건을 논평하며 한국의 상황을 같이 언급하는 글이 종종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다.

한때 우리 안에서도 極右는 「네윈」의 一人 長期 집권방식을 열심히 연구했었다. 그런 학자, 그런 두뇌, 그런 아첨군, 그런 집권자는 역사에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라. 한때 낭만적 광신적 체제 不定論者들은 「버마」의 사회주의와 고립폐쇄를 平等과 自立과 平和로 극구 찬양했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가야할 理想인양 박수를 쳤다. 그런 학자, 그런 얼치기 평론가, 그런 낭만주의자들은 역사에 부끄러움과 反省을 고백하라.

「버마」의 民主 長征의 출발을 기대한다. 「버마」 시민들의 고통에 따뜻한 박수를 보내며 역사와 문화 깊은 「버마」에 국가적 건강을 빈다.²⁰⁾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기에 어쩌면 당연할 일일지도 모르겠다. 1988년 8월 버마에 대한 한국 언론의 관심은, 그 사건이 국제적으로 중요하고 심각한 사건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자꾸 무언가를 연상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3. 1988년 버마가 은유했던 것 – 광주에서 북한까지

2009년 1월 새벽, 용산에서 망루가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중얼거렸던 것을

‘버마 無政府 상태’, 『경향신문』 1988. 8. 12; ‘美, 大使館 잠정폐쇄’, 『경향신문』 1988. 8. 12; ‘랑군 全域 無政府상태’, 『조선일보』 1988. 8. 12; ‘버마 르윈 사임’ 『한겨레』 1988. 8. 13; ‘버마 르윈政權 붕괴’, 『경향신문』 1988. 8. 13; ‘집권 17일만에 물러난 세인 르윈 버마 대통령’, 『경향신문』 1988. 8. 13; “‘한국僑民 안전하다’ 현지 大使館 직원’, 『매일경제』 1988. 8. 13; ‘르윈 버마 大統領 사임’, 『조선일보』 1988. 8. 13; ‘버마 르윈 辭任 후임 大統領 19일 논의’, 『매일경제』 1988. 8. 13; ‘르윈 사임 버마...일단 평온 되찾아’, 『한겨레』 1988. 8. 14; ‘버마 戒嚴軍 랑군 都心 철수’, 『조선일보』 1988. 8. 14; ‘버마 새大統領 마웅마웅’, 『조선일보』 1988. 8. 20 등.

18) 버마 항쟁의 원인과 주체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19) ‘버마국민 용기에 격려’, 『동아일보』 1988. 8. 12; ‘민주 논평 버마국민 용기에 격려’, 『조선일보』 1988. 8. 13; ‘평민, 버마국민 승리 희망’, 『한겨레』 1988. 8. 14.

20) ‘버마사태와 교훈’, 『동아일보』 1988. 8. 12

기억한다. 저건 광주잖아.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²¹⁾

당시 나는 지붕 위에서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무장도 않은 채 행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군인들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고 간에 그들은 닥치는 대로 쓰러뜨렸다. 상처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어서 근방의 집들로 피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과 중상자들은 어두워질 때까지 그 자리에 누워있었고 이어 군인들이 와 이들을 트럭에 싣고는 사라져버렸다.²²⁾

1988년 버마 민중항쟁이 한국에서 ‘민주화 과정’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단어를 떠올리게 만들기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특정 연도와 지명을 소환하기도 했다. ‘1980년 광주’가 바로 그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1988년 버마를 보며 1980년 광주를 떠올렸고, 그것을 매개로 버마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의 항쟁이었다는 점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1988년 버마가 1980년 광주를 불러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보일 정도다.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그러하듯 ‘동일한 사건’은 어디에도 없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고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문화와 사람이 달랐다. 심지어 이전까지 버마는 한국인들에게 낯익거나 가깝게 느낀 국가가 절대 아니었다. 버마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는 결코 깊다고 할 수 없었다. 태국의 한 신문은 뒤늦은 사과는 국민의 분노를 진정시키는데 실패한다며 “버마지도자들은 전두환[의 실패]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비슷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²³⁾ 오히려 외신의 지적대로 한국, 버마, 필리핀의 “피플파워”는 “민주화를 향한 강력한 개혁요구 외에 이데올로기 면에서 어떠한 공통점도 없다”²⁴⁾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1988년 인도차이나반도 북서쪽의 무더운 국가는 1980년 광주의 은유가 되었다.

이 발표문에서 제한적으로 다루는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아도 버마 관련 보도나 사실, 만평에서 광주가 자주 호명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버마의 수도 랑군에서 ‘버마판 광주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장기 군사 독재의 종식을 요구하는 수십만 시민의 봉기에 대한 계엄군의 발포로 2백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시민들이 무기를 탈취하여 시가지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계엄군에 대해 반격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동남아의 한 나라에서 8년 전 우리가 겪은 것과 비슷한 끔찍한 살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철권을 휘두르는 어떤 권위주의 군사독재도 끝내는 파탄에 부닥치게 마련이며 어떤 강압적인 권력도 민중의 민주화 요구를 끝내 억누를 수 없다는 역사의 보편적 진리를 확인하게 된다.²⁵⁾

21) 한강, 『소년이 온다』, 창비, 2014, 207쪽.

22) “군, 한밤에 병원 난입 시체흠쳐 강에 버려”, 『조선일보』 1988. 9. 4.

23) “버마 지도자는 전씨를 배워라”, 『조선일보』 1988. 11. 26.

24) “아시아에 거센 ‘피플파워’ 선풍”, 『조선일보』 1988. 9. 6.

25) ‘버마판 ‘광주민중항쟁’’, 『한겨레』 1988. 8. 12.



<그림 4> 1988년 8월의 『조선일보』와 『한겨레』 만평, 『조선일보』의 보도 사진

아예 “버마판 광주학살”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마치 광주사태가 버마로 장소를 옮겨 다시 일어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²⁶⁾ 『조선일보』의 사설에서는 아예 버마 항쟁의 과정을 한국현대사에 대입하기도 했다.

지금 버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민주화 투쟁 과정은 8~9년 전의 한국 상황과 상당부분 엇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버마사태의 발단은 군사쿠데타 후 26년간 계속되던 네윈의 강압통치에 대한 저항시위로부터 시작됐다. 79년의 부마사태에 해당하는 셈이다. 네윈은 일부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의 강경 진압방법을 통원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저항에 못이겨 권좌에서 물러나게 된다. 절대권력자가 권좌를 떠나게 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10.26사태와 비교할만 하다.

네윈 퇴진 후 버마국민들은 민주화의 기대에 부풀었다. 10.26 후 ‘서울의 봄’ 때도 그랬다. 서울의 봄에 비해 ‘랑군의 봄’은 너무 짧았다. 네윈에 이어 실권을 장악한 르윈은 네윈보다 더욱 심한 군출신의 초강경인물. 한국의 12.12사태와 5.17을 통한 군부의 재집권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버마국민들은 르윈의 집권에 분노했다. 한국에서는 5.17과 함께 광주사태가 일어났다. 르윈은 총칼로 시위대를 눌렀다. 광주에는 공수부대가 파견됐었다. 군과 시위대의 충돌은 급기야 유혈사태를 낳고 시위군중은 경찰서를 습격, 탈취한 무기로 무장항쟁에 들어간다. 광주가 그랬었고, 랑군이 지금 그렇다.²⁷⁾

<그림 4>처럼 당시 정체를 겪고 있던 ‘광주 특위’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버마사태”를 배치하기도 했다.²⁸⁾ 조영래는 칼럼에서 “버마의 일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고 했다.²⁹⁾ 그렇기에 버마인들의 투쟁에 지지를 표하고 “승리”를 기원했던 것이다. 1988년 8월 13일에는 ‘5·18 광주항쟁유족회’ 및 재야 8개 단체가 ‘버마 민주항쟁에 대한 광주시민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동지들의 시신을 앞세우고 슬픔과 분노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추며 두 손에

26) 조희곤, ‘버마사태’, 『경향신문』 1988. 8. 12.

27) “버마와 한국과 북한”, 『조선일보』 1988. 8. 13.

28) 민주당의 지지성명에서도 광주를 언급했다(‘버마국민 용기에 격려’, 『동아일보』 1988. 8. 12).

29) 조영래, ‘이 허전함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겨레』 1988. 9. 22.

총을 들 수밖에 없는 버마 민중에게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한반도 4천만 국민과 더불어 광주시민들은 버마 정부가 양민학살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80년 5월 광주학살의 만행을 직접 경험한 광주시민은 최근 르윈 도살정권에 대해 반정부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버마 민중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내용을 담았다.³⁰⁾

1986년 필리핀에서 ‘피플파워 혁명(2월 혁명)’이 있었지만 한국인들이 그것을 두고 광주를 연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군부정권의 잔인한 폭력이 자행되던 버마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어찌할 수 없이 광주가 떠올랐다. 그리하여 버마의 문화나 자세한 국내 상황 등을 잘 모른다하더라도 지지와 기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고통의 경험은 때로 연대와 공감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1988년 9월 24일 『한겨레』의 ‘국민 기자석’이라는 독자 투고란에 전남 장흥군에 거주했던 한 독자가 기고한 글을 보면, 연상·은유·공감·연대의 직관적인 매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광주 시민들”과 “지금 버마인”은 곧바로 “우리”가 되고, 한국의 신군부와 버마의 군부는 곧바로 “그들”이 된다. 또 “작은 승리”(6월 항쟁)는 언젠가 “진정한 승리”가 될 것이며, 버마인들 또한 “이미 승리하고 있”고 그 승리는 “영원한” 것이 된다. 타인의 상황을 통해 나의 처지와 고통을 다시금 확인하고, 타인과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연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올림픽으로 뒤덮인 신문의 한켠에서 버마가 군부 쿠데타로 피의 충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머리를 철퇴로 얻어맞는 것 같은 아득한 느낌을 갖게 한다.

어쩌면 이다지도 8년 전 그 연유 모르고 당해야 했던 이 땅의 피바람과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1980년 5월 이후, 이 나라 광주에서도 포연이 가득했고 시체가 즐비했으며 핏물이 도로를 적셨고 수천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대접을 받았다. 당시의 광주 시민들의 의문도 지금 버마인의 의문과 똑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가.

그들은 무엇 때문에 같은 동포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무차별 죽이고 있는가.

왜 우리의 이웃들이 분명한 이유도 모르게 잡혀가서 사지가 뒤틀리는 고문을 당하고 사형, 무기, 혹은 수십 년의 체형을 받은 중죄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광주는 캄캄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은 안개 뒤편으로 숨어 버린듯했으며, 사람들은 진심을 알면서도 무겁게 드리운 검은 장막의 뒤편에서 공포에 놀려 눈으로만 속삭이고 있을 뿐이었다. 누가 보아도 승자와 패자는 분명한 것 같았으며 정의니 자유니 진리니 민주니 하는 따위는 소멸되어 버린 단어인 것만 같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용히 조용히 불씨를 살려왔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갖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결코 그 불씨를 꺼뜨리는 법이 없이 버티어 왔다. 그리고 결국은 작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언젠가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것이며, 그래서 다시는 그 따위 패배는 없으리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총칼 앞에서 죽어가는 버마인들은 이미 승리하고 있으며 그 승리는 영원할 것이고 그래서 자유 버마의 굳건한 받침돌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올림픽에 들떠서 손바닥을 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버마와 버마인의 평화를 위

30) ‘버마 민주항쟁 적극지지 광주 재야8개단체 성명’, 『한겨레』 1988. 8. 14.

해서 손을 모은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평화를 위한 간구도 될 것이다.

김중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09>³¹⁾

하지만 그 공감과 연대의 자장 속에서도 버마가 ‘후진국’이며 ‘우리’보다 뒤쳐진 국가라는 인식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 사설에서는 버마 “국민들의 생존보존본능은 민주화 욕구를 앞지를 것”이라며 “민생고를 해결해 나가면서 민주화를 차근차근 이룩해”야 한다는 웬지 익숙한 논지를 전개했다.³²⁾ 또 다른 사설에서는 버마 항쟁이 “정치 투쟁보다는 생존투쟁의 성격이 짙”다며 그래도 한국의 군부정권은 경제적인 성과는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³³⁾ 또 “무고한 생명의 희생 없이 평화적 민주발전을 이루리라는 기대는 당분간 힘들 것”³⁴⁾ 혹은 “버마 국민들은 더 큰 희생을 치러야만 민주화를 쟁취할 수 있을 것”³⁵⁾이라는 표현도 한국과 버마 사이에 명확한 위계 관계를 설정했기에 가능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진보적인 입장에 섰던 필자도 버마가 “우리처럼” 유기적인 조직을 마련하지 못했고 “총횡으로 짜인 연대를 통하여 군·관·재 또는 군·당의 수직적 연계체제와 신축자제하며 맞설 수 없었다는 데 그 좌절의 원인”을 찾았다. 그러나 과연 버마에 조직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많은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988년의 한국에서도 여전히 아래와 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정부는 연일 ‘88올림픽’에 지장을 주는 세력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던 중이었으며, 한 언론인이 출근길에 주먹으로 맞고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³⁶⁾



<그림 5> 『동아일보』 1988. 8. 15

때로는 버마에서 출발한 연상 작용이 광주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튀어가기도 했다.

31) ‘국민 기자석-버마민중 피의 항쟁, 8년 전 광주 연상계’, 『한겨레』 1988. 9. 24.

32) 조희곤, ‘버마사태’, 『경향신문』 1988. 8. 12.

33) “버마와 한국과 북한”, 『조선일보』 1988. 8. 13.

34) ‘총칼속의 평원... 내연하는 피플파워’, 『조선일보』 1988. 12. 16

35) “『민중항쟁』에 무릎꿇은 버마... “평안”은 아직도...”, 『조선일보』 1988. 8. 13

36) 당시 『중앙경제신문』의 사회부장 오홍근이 『월간중앙』에 군부와 군 출신 인사의 비리와 악행을 고발하는 글을 연재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준장의 명령을 받아 현역 장교를 포함한 4명의 군인이 테러를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버마는 철저한 1당지배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집권당을 대신 할 수 있는 정치적, 대체세력이 존재할 수가 없다. 한국에는 야당이 명맥을 이어왔고 재야세력도 활동해왔다.

한국과 버마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모두를 비교적 골고루 갖추고 있는 곳을 아시아에서 찾아보면 묘하게도 북한이라는 해답이 나온다. 사회주의체제, 1당 지배, 폐쇄경제정책, 1인 장기집권, 부자정권상속... 여기에다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는 것도 버마의 이른바 「버마식 사회주의」와 비슷한 냄새를 풍긴다.

현재의 버마사태가 한국에서는 과거로 비쳐질 수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미래의 불안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민주혁명은 불가능하다는 신화가 버마에서 깨지고 있다.³⁷⁾



<그림 6> 『경향신문』 1988년 8월 13일자 만평

버마의 모습에서 ‘나’를 보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되기도 했지만, 이미 존재하던 내면의 위계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버마의 처참한 상황은 광주를 소환했지만, 결국은 좋게 말해 나의 ‘과거’ 혹은 ‘미숙한 나’였다. 이런 인식이 있기에 버마를 보며 ‘광주의 과거’와 함께 ‘북한의 미래’도 연상했던 것이다. 1996년 한 평론가는 영화 <비욘드 랭군>을 비평하며, 영화 속에 남아있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불치병”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서양인이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사연을 그릴 때에는 순하게 작동되던 명징하고 디테일한 시선들이 동양인을 비롯한 타자의 동일한 사연을 대할 때는 그 타자들을 왜 그토록 단순화시킬까? 오리엔탈리즘은 여전히 불치병인가?³⁸⁾

37) “버마와 한국과 북한”, 『조선일보』 1988. 8. 13.

38) 이성욱, ‘한 여인의 빛나는 인간승리에 미얀마 항쟁사는 한낱 들러리’, 『한겨레』 1996. 7. 6.

그러면서도 그는 미국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미안마 민중이 미국의 본 모습을 “아직” 보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³⁹⁾ 과연 서양인들만이 오리엔탈리즘을 가지고 있었을까?

4. 연대의 출발, 그 이상을 위하여

그러나 그 수많은 행사들 속에서도 있을 법한 모임 하나는 아무래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버마를 생각하는 모임, 4백 명의 젊은이들을 새로 앗아간 쿠데타를 규탄하는 모임-버마와 우리는 지난 여름만 해도 거의 같은 열병을 나누며 서로 연민하고 있지 않았던가.

그들의 항쟁을 우리의 인고로 생각하는 작은 모임 하나도 올림픽의 횃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랑군의 거리거리에 던져진 주검들이 바로 우리의 박종철이고 이한열에 다름 없는 것 아닌가.⁴⁰⁾

“8888 봉기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죠. 1962, 1967, 1969, 1973, 1975, 1976년 당시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었어요. 이 작은 봉기들 모두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아웅 모 조 2008년 인터뷰.⁴¹⁾

사실 이 글을 시작한 계기는 앞서 살펴봤던 ‘5·18 광주항쟁유족회’와 여러 재야단체의 성명서 관련 기사를 우연히 접하면서부터였다. 짧은 기사였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아무리 6월 혁명을 거친 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광주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언론 또한 ‘광주사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먼 나라’였던 버마의 참상에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연대가 가능했던 것은 엄청난 고통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었고, 타인의 고통을 보고 나의 고통을 연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연상작용’에 있다.

하지만 ‘연상’은 ‘연대’의 시작점은 될 수 있으나, 연상이 항상 연대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연상은 상상이기에 그 상상하는 주체가 무엇을 욕망하는지가 관건이다. 양길현의 지적대로, 우리는 여전히 버마 민주항쟁을 아시아 민주화 과정의 도미노 현상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지 모른다. 물론 1980년대 각 사회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의 물결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측면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버마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 내지는 특정의 역사, 구조적 조건들”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⁴²⁾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버마의 민주화 과정에도 역사가 있고, 버마의 경제·종교·문화·민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1987년 6월 항쟁을 설명할 때, ‘피플파워’를 언급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핵심적인 동력이나 원인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타자, 특히

39) 버마 항쟁 당시 미국 항공모함이 “랑군을 해방하는” 임무로 버마 해역에 배치됐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한다(조지 카치아피카스, 앞의 책, 157쪽). 이 또한 1980년 광주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다.

40) 이신행, ‘민주운동 조직화만이 반민주 막아, 『한겨레』 1988. 9. 25.

41) 조지 카치아피카스, 앞의 책, 160쪽.

42) 양길현, 앞의 책, 81쪽.

나보다 ‘밑에 있는’ 걸로 여기는 존재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해버린다. ‘연상’ 혹은 ‘동일시’가 하나의 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의 <계속되는 5·18> 항목의 하위에는 <세계 속의 5·18>이라는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의 서술을 인용해보고자 한다.

세계 속의 5·18

책임자가 권력을 장악한 참혹한 상황에서도 ‘5·18 진상규명운동’ 과정에서 범국민적 저항으로 승화된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 제2의 광주 공동체 정신을 탄생시켰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학살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기념사업, 배상이라는 5대 원칙이 필리핀의 민주혁명과 태국,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대만의 계엄령 해제 및 민주화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고 동구의 민주화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광주항쟁이 기폭제가 된 한국의 민주화는 제3세계 5·18 민주항쟁이 돋보였던 것은 항쟁 당사자들이 폭도로 몰리고 구속되는 암울했던 시절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 독재 투쟁에 나섰으며, 마침내 제3세계의 진정한 민주화를 출발시켰다는 점이다.

5·18민주화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도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항거로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다. 한국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희생과 죽음으로 점철된 과거사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과 성과의 성찰적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⁴³⁾

5·18 민주화운동이 세계 속에서 긍정적이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분명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회의 민주화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제3세계의 진정한 민주화를 출발시켰다”는 표현 등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자칫 5·18 민주화운동의 영향력을 강조하려는 ‘선의’가 타자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한 의도치 않은 효과가 발생한다면, ‘세계 속의 5·18’은 자기만족에 그치고 연대의 가능성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물론 홈페이지라는 특성상 간략한 서술일 수밖에 없다는 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한국사회는 다른 사회의 사건과 운동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서술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보다는, 타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듣고 손을 잡는 아주 단순하지만 진솔한 관심이 우선일 것이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버마 민주화운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년의 역사가 있고, 오늘도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싸우고 있는 활동가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버마 민주화 활동가 마웅 저(Maung Zaw)⁴⁴⁾

43) <http://www.518.org/sub.php?PID=010207> (2019년 5월 5일 검색)

44) 마웅 저, 앞의 글, 294쪽.

■ 토론문 : 1988년 “버마”-광주의 연상작용 - 신문지면을 중심으로

상호적 “연상작용”을 통한 연대의 지평 확대

심주형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HK연구교수)

발표문은 한국사회의 신문지면에 등장했던 “버마”와 “8888항쟁 (이후 88항쟁)” 관련 보도자료들을 통해, “타인의 고통’이 이끌어내는 공감의 힘과 그 한계”를 논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상상과 열망이 붓물 터지듯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민주화 운동”의 국제적 연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들이 싹트고 있던 198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에서 1988년 “버마 항쟁”은 참조성(referentiality) 혹은 인용성(citationality)을 지닌 사건으로 언급되었다. 오늘날에도 미얀마(버마)에 대한 한국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는 사뭇 남다르다. 지난 2000년에 제정된 “광주 인권상”은 “88항쟁”에서 주도적인 정치적 역할을 했던, 아웅산 수지(2004년)와 민꼬나잉(2009년)등 두 명의 정치 지도자를 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12월 18일 미얀마의 정치지도자 아웅산 수지에 수여된 인권상을 현재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힝야 무슬림에 대한 학살과 박해를 용인한 책임을 물어 박탈한 바도 있다. 인권상 박탈 결정이 매우 예외적이며 동시에 적극적인 정치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사실에 덧붙여, “민주화 운동기”의 “변절” 혹은 “타락”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울리는 반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88항쟁”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을 연상했던 특별한 사건사적 관계와 기억의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있는 발표문은,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탐색하려는 시도로써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발표문이 밝히고 있듯 아직은 시론적 성격에 머물고 있지만, “세계 속의 5.18”을 지향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의 사건사적 의미와 국제연대의 지평을 확대하려는 진지한 고민과 현재적 시도들에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과 관점들을 담고 있기에, 향후 보다 더 진전된 연구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의 질문과 생각을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1. 신문지면 혹은 “미디어 경관(media-scape)” 속의 “버마”와 “88항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발표문은 1980년 당시의 다양한 신문기사, 만평, 칼럼, 독자투고등을 활용하여, 버마의 “88항쟁”이 “한국인의 머릿속에서 일으킨 연상작용”을 살펴보고자 시도한다. 1980년대의 신문지면이 대중적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고 다양한 견해와 관점들의 경합이 펼쳐지는 장이었다는 점에서 “집합의식”의 구성에 관계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문지면을 통해 “연상작용”의 형식과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미디어 경관”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발표문이 인용하고 있는 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신문등은 단일한 “언론”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6월항쟁을 통해 상당수 신문사들이 편집권 독립 투쟁들을 통해 이전의 통제와 검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나, “논조”에 있어서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고 영향력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른바 “외신”의 경우, 미디어의 독점적 채널링이 강한 측면이 있기에, 편집권/방침의 상이함이 사건 자체에 대한 친밀도, 중요도, 해석 가능성을 지면을 통해 제한하기도 한다. 발표문에서도 한겨레, 동아, 조선의 지면을 예로 들어 “한국 언론이 동남아 국가의 사건을 대대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다루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데, 각각 “장악”, “군과 대치”, “무정부 상태” 등으로 상이한 제목을 뽑아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신문지면을 통해 매개되고(mediate) 재현되는 사건성은 사건 그 자체와는 상이한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미디어 경관의 변화 속에 등장했던 “버마”와 “88항쟁”을 보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연구자가 제기한 “버마-북한”, “88항쟁-광주민중항쟁”의 연상과정에서 핵심적인 “은유의 정치”라는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도, 매개자로서 미디어와 그 경관의 변화를-예를 들어, 발표문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왜 필리핀의 피플 파워(People Power) 혁명 보다 버마의 8888항쟁에 더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버마”와 “88항쟁”은 무엇이었는가/일 수 있는가?”에 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2. “유사(analogy)”, “은유(metaphor)”, “전유(appropriation)”를 통해 확장되는 기억의 정치의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건은 그 자체로 고유성과 특이성을 전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버마 88항쟁-광주민중항쟁”을 사실상 전혀 다른 사건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을 선언하고 은유적 상징성을 구성하는 것은 해석적 전유의 기획이다. 발표문은 이러한 기억의 정치의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는 주요한 기반으로써, “고통의 경험”과 “(궁극적)승리의 희망”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한 “경험”과 “희망”이 참조되고 인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발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군부-학살-시민/국민-항쟁”의 유사성 배열과 조합은 해석적 전유 과정에서 그 상징적 위상과 구성물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문제적-“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질문들을 던져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인식 가능성의 지평 위에서 기억의 연대-정치라는 관점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유사성의 선험적 인식/선언을 배제하고, 즉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호혜적 전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고통의 경험”을 통한 공감과 연대가 피해의 직접성과 당사자성에 의해서 불안정해지기도 하다는 점을 다시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3. 기억의 “연상작용”을 통한 호혜적 연대의 지평 확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발표문은 결론부에서 “연상이 항상 연대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으며 “주체가 무엇을 욕망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는 국제적 연대의 문제를 두고 어떤 욕망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동아시아의 국내외 질서가 요동치고,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던 상황은 특별한 “연상의 조건”을 형성하고, “버마 88항쟁”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을 연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연상작용이 연대의 충분조건이지는 않으나, 필요조건이며 사실상 연대의 지속성은 끊임없는 상호적 “연상”의 경합적 과정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한국에서 벌어진 광주민주화운동, 필리핀의 피플파워 혁명, 미얀마의 88항쟁, 중국의 톈안먼 항쟁의 역사는 1980년대 냉전적 질서의 해체 과정에서 아시아 각국의 민중들이 상호 호혜적인 연대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의 지평을 열었다. 비록 민족국가 체제의 한계와 사건 그 자체의 제한성, 상호적 이해의 취약성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정치적 기표 속에서 경험과 희망의 상호참조/인용의 정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연상작용”의 현재적 조건들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확대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글로벌 60년대”(Global Sixties)와 “1968”

: 얽혀 있는 역사의 기억화와 역사화

강정석(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글로벌 60년대”: ‘1968’이라는 기억의 전장을 역사화하기

‘글로벌 60년대’는 ‘1968’이라는 숫자기호로 표상되는 사건들이 50년 지난 시점에서 1968 연구의 가장 유력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60년대 개념은 1968에서 한 세대의 사이클이 지난 1998년부터 본격화된 1968 역사화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했다. 1968의 역사화는 크게 두 가지 맥락을 배경으로 한다. 첫째는 1968이 무엇보다 사회적 기억의 전장이라는 점에 있다. 당대에 서부터 10년 주기로 치러진 숭한 기념제들의 물결 속에서 1968은 20세기 역사 후반부의 대표적인 ‘기억의 장소’가 되었다.¹⁾ ‘계획 없는 반란’, ‘과격주의자들의 발작’, ‘젊은이들의 치기어린 사이코드라마’, ‘자본주의를 재탄생시킨 사건’ 대 ‘참여민주주의의 시작’, ‘새로운 사회운동의 모상’, ‘문화혁명’, ‘1848 이후 최초의 세계혁명’. 1968이라는 사회적 기억의 전장에 등재된 역사적 유산 상 속 분쟁의 목록은 대립적이고 다방향적이다. 한 연구자의 표현을 빌자면 1968은 ‘신성화와 악마화의 극단을 오가는, 끝나지 않은 해석의 전장’이다.²⁾

1968이 그치지 않는 기억의 전장이 된 것은 체험자들의 증언과 기억이 사건의 공식서사를 구축해 온 이력과 무관치 않다. 크리스틴 로스(Kristin Ross)는 프랑스의 ‘68세대’가 회고담과 자서전, 다큐멘터리와 TV 대담 프로그램, 문학 작품을 매개로 어떻게 과거의 운동가에서 ‘기억의 관리인’으로 변모했는지, 그 속에서 68년 5월의 공식 서사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68세대’의 기억을 둘러싼 68 담론의 사회적 불화가 어떤 방식으로 대립하는지를 탁월하게 역사화한 바 있다.³⁾ 에릭 느뵈(Eric Neveu) 역시 1968의 공식 서사를 지배하는 ‘68세대’의 혁명 신화 만들기와 그 대척점에 있는 신화 벗기기 시도의 복잡한 얽힘 속에서 1968이 사회적 기억의 전장으로 성립된 과정을 날카롭게 추적했다.⁴⁾ 2007년 프랑스 대선 국면에서 ‘많이 놀고 적게 일하는 프랑스병의 근본적 책임이 68세대에게 있다’고 한 니콜라 사르코지(Nicholas Sarkozy)의 발언, 2008년 독일에서

1) 널리 알려진대로 ‘기억의 장소(lieu de mémoire)’는 피에르 노라(Pierre Nora)의 표현이다. 정작 피에르 노라는 1968을 자신의 ‘기억의 장소’ 기획에서 배제한다. ‘기억의 장소’를 역사화시키려는 노라의 입장에서 볼 때 프랑스의 68년 5월은 ‘기념의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는’, ‘자기참조적’이며 ‘자기충족적’인 사건, 따라서 비판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이다. 노라의 이러한 평가는 오히려 1968를 역사화할 시대적 필요성을 반증한다. 노라의 프랑스 68년 5월 평가는 피에르 노라, 『기념제의 시대』, 『기억의 장소 5』, 김인중 외 옮김, 나남, 2010. 362-364쪽.

2) 정대성, 『68혁명, 상상력이 빛은 저항의 역사』, 당대, 2019.

3) Kristin Ross, *May '68 and Its Afterlives*,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4) Eric Neveu, “Memory Battles over Mai 68: Interpretative Struggles as a Cultural Re-Play of Social Movements,” *Conceptualizing Culture in Social Movement Research*, Britta Baumgarten, Priska Daphi, Peter Ullrich (eds.) (London: Palgrave), 2014. pp.275-299.

히틀러의 『나의 투쟁』(Mein Kampf)에 빗댄 『우리의 투쟁』(Unser Kampf)이라는 제목을 빌어 68 운동을 나치의 청년운동에 비견한 고틀 알리(Götz Aly)의 해석은 1968이 끊임없이 재점화되는 기억의 전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글로벌 60년대’ 개념은 바로 1968이라는 사회적 기억의 전장 한복판을 지배하는 당대 운동가들과 그 대척점의 비판자들, 동조하거나 방관한 목격자들의 증언과 기억으로부터 비판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1968을 역사화하려는 시도이다.⁵⁾

둘째, 역사학의 맥락에서 ‘글로벌 60년대’ 개념은 트랜스내셔널 역사학과 지구사 또는 글로벌 스테디즈의 문제의식과 공명한다. 트랜스내셔널 역사학과의 접점은 1968의 사건들을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네트워크로 파악하는 데 있다. ‘버클리에서 베를린까지, 방콕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까지’라는 구호가 상징하듯 1968의 국제적 또는 트랜스내셔널 한 차원은 당대의 체험자들과 후대의 연구자들이 모두 주목하는 요소이다. 미국 웨더언더그라운드(Weather Underground) 그룹과 독일 및 이탈리아의 적군파, 프랑스 68년 5월의 마오주의자 그룹 등 미국과 유럽의 신좌파가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게릴라 투쟁과 중국의 문화혁명을 도시 게릴라 실험과 기성체제의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전유하려고 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글로벌 60년대’ 개념을 화두로 삼은 연구는 그 이전의 국제주의적 1968 해석과 차이가 있다. 이전 연구들이 1968의 국제주의를 주로 ‘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 및 사회변혁 전략이 미국과 유럽에 미친 영향이나 효과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반면, ‘글로벌 60년대’ 연구는 기존 연구의 일방통행적 국제주의의 초점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로 변경한다. 이러한 다방향적 초점 이동은 1968 연구의 중심 이동과 연결되고, 이 지점에서 ‘글로벌 60년대 연구’는 지구사 또는 글로벌 스테디즈의 문제의식과 접목된다.

지구사 또는 글로벌 스테디즈의 핵심은 근대 이래 ‘보편사’의 자리를 차지해 온 서구중심주의를 탈구(dislocate) 또는 재배치(displacement)하는 것이다. 그 기획의 저변에는 지구라는 시공간에서 생성하고 명멸한 사건들이 여러 층위를 가지며, 그 층위들은 상호 중첩적으로 얽혀 있다는 인식이 놓여 있다. 요컨대 지구사의 관점에서 볼 때 지구상의 각 지역들은 독립적이고 자기충족적인 실체가 아니라 다른 지역들과 부분적으로 중첩된 네트워크적 구성물이며, 그 역사적 형상의 핵심은 ‘얽혀 있는 역사’(histoire croisée, entangled history)이다.⁶⁾ ‘유럽중심주의 극복’과 ‘얽혀 있는 역사’라는 지구사의 문제의식이 1968 연구에 중요한 것은 1968을 둘러싼 사회적 기억(및 기억전쟁)과 연구의 대부분이 일국중심적이거나 서구중심적인 울타리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60년대’ 연구는 1968 역사학의 ‘서구중심주의를 지방화’하고, 기존 1968 연구에서 무시 또는 간과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을 아우르는 지구적 차원의 분석틀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⁷⁾ 이 시론적 발표문에서는 ‘글로벌 60년대’ 개념이 등장하게 된 맥락을 “장기 60년대”(Long Sixties)와 “트랜스내셔널 전환”(Transnational Turn)이라는 역사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 들여다보면서 그 가능성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5) Martin Klimke and Mary Nolan, “Introduction: Globalization of the Sixties”, *The Routledge Handbook of the Global Sixties* (New York: Routledge), 2018. p.1.

6) 조지형, 『지구사의 미래와 역사의 재개념화』, 『지구사의 도전: 어떻게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설 것인가』, 서해문집, 2010. 107-108쪽.

7) Martin Klimke and Mary Nolan, “Introduction...”, p.2.

“1968”과 “장기 60년대”: 순간적 전환기에서 장기지속적 이행기로

20세기 세계사에는 숫자 기호로 표상되는 세 개의 시기가 있다. 1917, 1968, 1989. ‘기념제의 시대’를 대표하는 이 숫자 기호들은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각각 ‘단기 20세기’(1914-1989)의 시작과 전환, 종식과 연동된다. 1968이 1917, 1989와 더불어 기념제의 시대를 대표하는 기호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 해에 발생한 사건들의 역사적 파장이 당대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볼 때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설날 공세(Tet Offensive), 낭테르의 3.22 운동, 마틴 루터 킹 암살과 루디 두취케 암살 시도, 컬럼비아대학 반란, 프라하의 봄과 소련군의 무력 진압, 파리의 바리케이드와 드골파의 압도적 총선 승리, 로버트 케네디 암살과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소동, 리처드 닉슨의 당선, 멕시코시티 트라텔롤코 광장 학살과 시위. 1968년에 펼쳐진 사건들의 연대기는 그 해를 혁명의 소극과 반동의 비극이 교차 상연되는 극적인 무대로 만들었고, 이것은 ‘1968’이 시대적 전환점을 표상하는 기호로 자리잡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문제는 ‘1968’이라는 기호가 그 해에 발생한 사건들의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는 데 있다.

‘1968’이라는 해를 한 시대의 전환을 상징하는 대표 단수로 환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건과 과정 사이의 긴장 관계를 놓칠 위험이 있다. ‘1968’을 세계사적 전환의 계기로 보는 관점은 대중적 시위와 봉기, 유력 인사 암살과 민간인 학살 등의 거대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춘다. 순간적 계기의 차원에서 그 개별 사건과 사건들의 계열이 정세를 변화시키는 파급력을 가진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1968년에 발생한 거대한 사건들에만 초점을 맞춰 ‘1968’을 시대의 분수령 또는 전환점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사건들이 1968에 폭발력을 가지게 된 역사적 맥락, 즉 사건을 둘러싼 전후의 장기적 과정을 간과할 소지가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장기 60년대”라는 역사적 관점이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장기 60년대”는 1968년의 다양한 저항을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의 장점은 1968을 섬광처럼 번쩍였다 사그라진 일시적인 혁명의 순간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삶과 사회의 변혁을 모색한 장기 지속적 투쟁의 맥락에서 조명하는, 폭넓은 역사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그렇게 볼 때 1968년에 분출된 봉기들이 냉전 및 소비자본주의가 조성한 정세와 맞는 역동적이고도 장기적인 길항관계에 주목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봉기들의 함의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장기 60년대”는 여러 연구자들이 ‘1968’을 대체하는 분석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마다 연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장기 60년대”는 시기가 다르게 설정되고, 그 시기의 함의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장기 60년대”를 분석틀로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영국 역사가 아서 마윅(Arthur Marwick)이다. 마윅은 “장기 60년대”를 1958년에서 1974년에 이르는 시기로 설정하고, 이 시기의 함의를 “문화혁명”으로 개념화한다.⁸⁾ 이때 문화혁명은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습관과 양식의 변화를 의미

8) Arthur Marwick, *The Sixties: Cultural Revolution in Britain, France, Italy, and the United States, c.1958-c.1974*, (New York), 1998.

한다. 마웬이 문화혁명을 장기 60년대의 핵심 유산으로 삼는 이유는 그 시기의 항의와 시위에서 표출된 급진적 정치 지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마웬의 논변은 ‘풍요로운 사회’(마웬이 설정한 시기와 일치하는)의 소비자본주의가 열어젖힌 장기 지속적 변화의 힘을 되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마웬의 해석은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는 결과론적 해석에 치중됨으로써 1960년대의 정치적 실험과 대항문화에 잠재된 급진적 함의를 과도하게 축소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게르트-라이너 호른(Gerd-Rainer Horn)은 마웬의 문화혁명 해석이 1960년대를 탈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장기 60년대”를 재정치화하려고 한다.

호른 역시 “장기 60년대” 관점을 분석틀로 삼고 있지만 마웬과는 달리 1960년대의 급진적 아방가르드 운동 및 학생 운동, 이전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뤄져 온 노동운동에 초점을 맞춘다.⁹⁾ 때문에 호른의 “장기 60년대” 시기 설정 역시 마웬과 다르다. 마웬이 소비자본주의의 경제 호황기를 “장기 60년대”로 설정하는 반면, 호른은 수에즈 위기와 헝가리 봉기의 해인 1956년에서 이탈리아 아우토노미아 운동이 정점에 오른 시점이자 포르투갈 혁명 시도가 좌절된 1976년에 이르는 시기를 “장기 60년대”로 설정한다.

“장기 60년대”의 시기 설정과 해석에서 마웬과 호른이 보여주는 극명한 대비는 일견 1968 해석의 오래된 이분법, 즉 정치적 해석과 문화적 해석의 대립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다 중요한 해석의 딜레마가 놓여 있는데, 그것은 사건과 과정 어느 쪽에 초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시기 구분과 해석에서 사건에 초점을 맞출 때 인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럴 때 해석은 행위자의 의도와 행동을 중시하게 된다(호른의 해석). 반면 사건의 과정에 보다 무게를 두는 해석은 행위자들의 의도와 행동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마웬의 해석). 좋은 해석이란 당연히 사건과 과정 양자를 중시하는 균형 잡힌 해석이었지만 그렇게 하기는 간단치 않다. 이 궁지를 돌파하는 한 가지 길은 사건과 과정의 긴장관계 또는 얽힘에 주목하는 방식일 것이다. 이 사건과 과정의 얽힘에 주목해서 “장기 60년대”의 시기를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3세계’ 또는 ‘트리컨티넨탈’(Tricontinental)의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트리컨티넨탈의 맥락에서 “장기 60년대”의 시기는 1955년에서 1974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1955년은 반동회의를 열린 해이고, 1974년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77그룹이 주도한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운동이 시작된 해이다. 비자이 프라샤드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이 시기는 비동맹 운동, 민족해방투쟁, (정치적·경제적) 탈식민화로 요약되는 ‘제3세계 프로젝트’가 전개되는 시기이다.¹⁰⁾ 이렇게 설정된 “장기 60년대”는 “글로벌 60년대”의 관점과 밀접히 연관된다. 트리컨티넨탈의 사건과 과정에 주목하는 “장기 60년대”는 기존 1968 연구에서 부차적으로 취급되거나 거의 다뤄지지 않은 제3세계의 운동들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1968 연구의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선다는 “글로벌 60년대”의 근본적 지향과 접목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글로벌 60년대”는 ‘트랜스내셔널 전환’의 관점과 연결된다.

9) Gerd-Rainer Horn, *The Spirit of '68: Rebellion in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1956-1976*, (Oxford), 2006.

10) Vijay Prashad, *The Darker Nations: A People's History of the Third World*, (New York), 2007.

트랜스내셔널 전환(Transnational Turn)

“글로벌 60년대”라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이 ‘트랜스내셔널 전환’이라는 역사 방법론과 맺는 접점은 에릭 졸로프(Eric Zolov)의 “글로벌 60년대” 정의에서 명쾌하게 드러난다.

“글로벌 60년대는 트랜스내셔널의 분석틀 안에서 지역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 트랜스내셔널의 분석틀은 지정학적,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경제적 힘들이 다층적으로 교차하는 흐름으로 구성된다.”¹¹⁾

에릭 졸로프는 “글로벌 60년대”의 트랜스내셔널 분석틀이 6개의 주제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1)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기획으로서 냉전의 포괄적인 영향, 2) 정치적 좌파 내부의 복합적인 역사적 궤적과 실패한 노선, 3) 탈식민화, 민족해방, 그리고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로서 지구적 남반구(Global South)의 출현, 4) 지구적 차원에서 정치와 문화(대항문화) 사이의 애증 관계, 5) 해방신학의 중요성과 종교적 관행의 다양성, 6) 다른 지역의 정치적 스펙트럼과 그 행위자들에 대한 거대한 관심.¹²⁾ 졸로프의 주제 분류에는 냉전 시기 라틴아메리카 역사 전공자로서의 이력이 묻어나지만(3, 5) 전체적으로는 냉전 시기를 동서 냉전이라는 낡은 시야에서 벗어나 지구사의 차원에서 조망하는 ‘글로벌 냉전’의 분석틀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은, “글로벌 60년대” 패러다임이 지역적 또는 국가적 특수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지구적 규모로 펼쳐진 장기 60년대의 다양한 정치적 저항 운동과 대항문화 사이의 트랜스내셔널한 얽힘에 주목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졸로프의 명쾌한 정의와 포괄적 분류는 ‘글로벌 60년대’ 패러다임의 내용과 지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몇 가지 더 추가해야 할 내용들도 있다. 첫째, 글로벌 60년대의 저항 운동 및 대항문화와 기성체제의 관계이다. 1960년대 운동의 트랜스내셔널한 차원은 저항 주체들만이 상상하고 현실화했던 사항이 아니다. 기성체제의 지배 권력 또한 1960년대 운동의 트랜스내셔널하고 글로벌한 차원에 주목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1968년 9월 작성된 “들뜬 젊은이들”(Restless Youth)라는 제목의 CIA 보고서 내용에서 볼 수 있다.

“학생이든 학생이 아니든 유사하게 나타나는 젊은이들의 반체제 경향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 최근 몇 달 동안 일어난 서베를린과 파리, 뉴욕의 폭동들과 20개국을 넘는 국가에서 전개된 연좌 농성 덕택에 학생 행동주의는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¹³⁾

1968년 CIA가 국내 정보 수집 활동 금지라는 규약을 깨고, 미국 운동가들의 동향 파악을 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1968년 청년 반란의 세계적 성격에 주목한 CIA가 세계 최고의

11) Eric Zolov, “Introduction: Latin America in the Global Sixties,” *The Americas*, Vol. 70, No. 3 (January 2014). p.354.

12) Ibid. pp.355-358.

13) CIA Report, “Restless Youth,” September 1968, no. 0613/68, Martin Klimke, *The Other Alliance: Student Protest in West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Global Sixties* (Princeton, 2009), p.1에서 재인용.

정보수집망을 이용해 지구적 차원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있다. 1967년 체 게바라의 죽음 배후에 CIA가 개입한 사실은 트랜스내셔널한 차원으로 전개되는 트리컨티넨탈 운동을 진압하려고 한 기성체제의 시도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기성체제의 시도와 그 전후의 과정에서 전개된 저항 운동의 길항관계는 1960년대 운동에 굴곡과 요철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글로벌 60년대’의 지형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문제는 기성체제의 경제 권력과 저항 운동, 특히 대항문화의 관계를 들여다볼 때 더욱 절실해진다.

“글로벌 60년대”에 경제 권력의 형상을 갖춘 소비자본주의는 아버지 세대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항문화의 젊은이들을 길러냈고, 소비자본주의의 우산 아래 지구적 네트워크로 뻗어 나간 대중매체의 기술 혁신은 대항문화의 지구적 공동체를 상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소비자본주의 경제 권력은 대항문화의 저항을 상품의 논리로 끊임없이 흡수(co-opt)하기도 했다.¹⁴⁾ 아서 마웁은 소수의 대항문화가 제도권에 자리 잡아 다수의 대중문화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 현상을 ‘문화혁명’으로 평가했지만 사회 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저항의 상품화에 다름 아니다. 게르트-라이너 호른처럼 장기 60년대의 급진적 정치학에 주목함으로써 마웁의 해석을 논박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호른과 같은 방식의 비판은 소비자본주의와 대항문화의 얽혀 있는 길항 관계를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60년대” 패러다임의 연구 항목에는 기성체제와 저항 운동의 관계를 흡수(co-optation)와 전유(appropriation)의 얽힘으로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글로벌 60년대” 패러다임의 트랜스내셔널 분석틀에 추가되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글로벌 냉전 시기 동과 서, 북과 남의 다방향적인 지구적 네트워크이다. 1960년대 연구에서 지구적 차원의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 분석은 글로벌 냉전 동서남북 축의 일방통행적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서두에서 짚었던 바와 같이 제3세계 또는 트리컨티넨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석에서는 게릴라 전략과 문화혁명이 서에 미친 영향을 부각한다. 한편 서의 대항문화적 실험의 중요성을 초점을 둔 분석에서는 락큰롤과 히피의 반권위주의 및 자유지상주의가 동과 남에 미친 영향이 두드러진다. 장기 60년대의 트랜스내셔널한 네트워크는 일방통행적 흐름이 결코 아니었다.

재판정에 선 다니엘 콘 벤디트(Daniel Cohn-Bendit)가 이름을 대라는 판사의 요구에 ‘쿠론-모젤레프스키’라고 대답한 일화¹⁵⁾는 ‘서’의 학생들이 ‘남’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1970년 동독의 청년들이 누명을 쓰고 복역 중이던 안젤라 데이비스(Angela Davis)¹⁶⁾를 석방하라는 청원 편지를 미국 법원에 보내고, 1972년 그녀가 석방한 후 동독으로 초청하여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 것은 ‘동’의 청년들이 ‘서’의 운동가들과 트랜스내셔널한 네트워크를 맺은 사례이다. 프랑스 68년 5월에 활발히 움직인 루이 알튀세르의 제자들은 마오의 문화혁명

14) 대항문화의 급진성이 소비자본주의의 상품 논리에 흡수되는 과정을 다룬 탁월한 분석은 Thomas Frank, *The Conquest of Cool: Business Culture, Counterculture, and the Rise of Hip Consumerism* (Chicago, 1997) 참조.

15) “쿠론-모젤레프스키”라는 이름은 1964년 폴란드 공산당의 관료적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야책 쿠론(Jacek Kurón)과 카롤 모젤레프스키(Karol Modzelewski)의 이름을 조합한 것이다. 쿠론과 모젤레프스키의 공개 서한은 1960년대 프랑스와 독일의 학생 활동가들 사이에서 현실사회주의 관료제를 비판하는 교본으로 널리 회람되었다.

16) 안젤라 데이비스는 1970년 네 명의 사망자를 낸 캘리포니아 마린 카운티 법원 인질소동 공범자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복역을 하던 중, 1972년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에 영감을 얻어 지역 공장과 농촌으로 ‘하방’을 하고, 마오주의 조직을 결성하기도 했지만 1960년대 후반 아르헨티나의 젊은 지식인들은 알튀세르의 사유를 전유하여 라틴아메리카 마르크스주의를 갱신하려고 했다. 이렇듯 ‘글로벌 60년대’의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는 글로벌 동서남북이 다층적으로 교차하고 얽히는 다방향적 흐름 속에 형성되었다. ‘글로벌 60년대’ 패러다임의 트랜스내셔널 분석 틀은 일방향적 전파에서 다방향적 상호작용으로의 관점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등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지역의 대중 봉기 및 운동들과 그 운동들이 트랜스내셔널한 차원에서 얽혀 있는 저항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발굴해야 한다. ‘글로벌 60년대’를 화두로 삼는 역사학은 ‘1968’의 역사 서술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풀뿌리 저항들과 기억들을 발굴하고, 그것이 차지해야 할 온당한 자리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과제는 개인 연구나 일국적 차원의 집단 연구로는 수행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60년대’ 연구는 무엇보다 지구적 차원에서 연구자들의 연대와 소통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작업을 요청하고 있다.

■ 토론문

글로벌 60년대와 68운동: 얽혀있는 역사의 기억화와 역사화

박경섭(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발표문의 요약〉

‘글로벌 60년대’: ‘1968’이라는 기억의 전장을 역사화하기

- 68은 기억의 장소이자 해석의 전장
- 사건의 공식서사, 신화만들기를 통한 68기억의 전장화
- ‘글로벌 60년대’ 개념은 1) 공식서사와 기억으로부터 비판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68을 역사화 하려는 시도 2) 초국가적 역사학과 글로벌 스테디즈의 문제의식과 공명 / 이전의 국제주의적 68해석과는 달리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춤
- 트랜스내셔널(초국가적) 역사학과 글로벌 스테디즈의 핵심은 서구중심주의 탈구 혹은 재배치. 지구사의 관점에서 하나의 지역은 다른 지역들과 중첩되는 네트워크적 구성물
- 이 발표문의 요지: 2쪽 하단. ‘글로벌 60년대’ 개념이 등장한 맥락을 ‘장기 60년대’(long sixties)와 ‘트랜스내셔널 전환’이라는 역사학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서 그 가능성과 과제를 밝히고자 함

‘68’과 ‘장기 60년대’: 순간적 전환기에서 장기지속적 이행기로

- 세계사 속에서 68. 68년에 펼쳐진 사건들의 연대기는 ‘68’이라는 기호로 포괄될 수 없음. 발표자는 68의 세계사적 맥락, 전후의 장기적 과정을 강조. 그래서 ‘장기 60년대’ 개념이 유용
- ‘장기 60년대’ 분석틀 내에서 정치적 해석(호른: 행위자의 의도와 행동)과 문화적 해석(마워: 사건의 과정)의 대립. 발표자는 사건과 과정의 얽힘 강조

트랜스내셔널 전환

- 에릭 졸로프의 ‘글로벌 60년대’의 트랜스내셔널 분석틀을 구성하는 6개 주제
- 발표자가 중요하게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제: 1)저항운동과 기성체제의 관계, 대항문화와 소비자본주의 경제권력의 관계 혹은 얽힘 2)지구의 동서남북의 다방향적 네트워크
- 트랜스내셔널한 차원에서 얽혀 있는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네트워크 발굴해야

〈질문〉

- I.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발표자가 이 글을 쓰시면서 ‘지금, 여기, 오월, 광주’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 리가 없음. ‘글로벌 60년대’ 개념을[장기 60년대, 트랜스내셔널 전환] ‘518이라는 기억의 장소’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앞선 발표문에서도 ‘세계 속의 518’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를테면 ‘1980’이라는 기호는 세계사 속에 포함될 수 없는지? ‘글로벌 70년대와 1980 오월 광주’라는 문제설정이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 II. 발표자는 트랜스내셔널(초국가적) 역사학과 글로벌 스테디즈의 핵심은 서구중심주의 탈구혹은 재배치라고 쓰셨는데, 이러한 관점 또한 서구의 과제이자 서구 학자들의 관점일 수 있음. 이것이 우리의 과제, 여기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까? 탈식민주의 연구도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성찰이 나오는데, 그들의 반성에 왜 우리가 일조해야 하는가?
- III. 장기지속과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를 이야기하지만 지구사를 선형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68운동의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에 대해 어떤 연구자는 매우 느슨하고 국가를 넘어 운동조직 간 영향은 있었을지 모르나 개별 국가의 사건들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없었다는 평가. 발표문에서는 이 국제 네트워크를 지나치게 과대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트랜스내셔널한 얽힘은 사건 자체의 얽힘, 그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짐. 하지만 5·18 이후 오월운동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그러하듯 사건 이후의 과정과 네트워크도 중요. 여기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 학술교류포럼]

5·18교육포럼: 5·18기억의 재생산과 확산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5·18교육의 이론과 실제

사회	김준영(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소장)	
■ 발표 1		
	너와 나, 우리의 5·18교육	
	김정인(춘천교육대 교수)	267
토론		
	5·18교육 너와 나의 간극 메우기	
	최승원(광주 일신중학교 교사)	279
■ 발표 2		
	광주 밖의 5·18교육	
	배주영(구미 광평중학교 교사)	281
토론		
	광주 밖의 5·18교육 함께 고민하기	
	백형대(고흥 녹동고등학교 교사)	295
■ 발표 3		
	우리 모두의 5·18을 기억하는 길	
	- 민주시민을 기르는 5·18교육 -	
	김선옥(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297
토론		
	우리 모두의 5·18을 기억하는 길	
	- 민주시민을 기르는 5·18교육 -	
	조철민(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309

교육을 통한 기억의 공유와 확산

사회

이영진(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 발표 1

백색테러에 대한 기억의 공유와 확산

양소방(대만 교육부 국민교육국 인권교육지원센터장) ————— 315

토론

대만과 한국의 교육 교류활동이 필요하다

이기봉(5·18기념재단 사무처장) ————— 325

■ 발표 2

기억의 계승과 평화교육의 과제

- 제주 4·3과 사람들 -

한상희(서귀포 교육청 장학사) ————— 327

토론

기억의 계승과 평화교육의 과제

- 제주 4·3과 사람들 -

정내위(대만 2·28국가기념관 제1처장) ————— 349

■ 발표 3

홀로코스트와 독일의 시민교육

최호근(고려대 사학과 교수) ————— 355

토론

5·18민주화운동과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임광호(첨단고등학교 교사) ————— 375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 학술교류포럼]

국가폭력의 청산과 정의 5·18과 전지구적 차원의 이행기정의

5·18교육의 이론과 실제

사회: 김준영(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소장)

■ 발표 1: 너와 나, 우리의 5·18교육

_김정인(춘천교육대 교수)

토론: 5·18교육 너와 나의 간극 메우기

_최승원(광주 일신중학교 교사)

■ 발표 2: 광주 밖의 5·18교육

_배주영(구미 광평중학교 교사)

토론: 광주 밖의 5·18교육 함께 고민하기

_백형대(고흥 녹동고등학교 교사)

■ 발표 3: 우리 모두의 5·18을 기억하는 길

— 민주시민을 기르는 5·18교육 —

_김선옥(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토론: 우리 모두의 5·18을 기억하는 길

_조철민(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너와 나, 우리의 5·18교육

김정인(춘천교육대 교수)

1. '5월 교육 원칙'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5·18교육은 교육의 원칙을 만들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 혹은 인정교과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한편으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자리잡아왔다.¹⁾ 5·18기념재단이 내놓은 '5·18민주화운동의 올바른 교육을 위한 5월 교육 원칙'(이하 '5월 교육 원칙')은 이러한 5·18교육의 방향을 집적해놓은 응결체라 할 수 있다. 12가지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²⁾

- ① 5·18의 보편적 의미를 깨닫는다.
- ② 5·18이 현재와 관련된 사건임을 확인한다.
- ③ 그날의 희생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음을 환기한다.
- ④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새로운 증인이 된다.
- ⑤ 공감을 도모하나, 정서적 부담은 경감한다.
- ⑥ 목표 집단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모색한다.
- ⑦ 야만의 회귀 가능성을 경계한다.
- ⑧ 시민의 용기와 참여에 주목한다.

1) 2010년 5·18 30주년을 맞아 5·18기념재단이 펴낸 『5·18과 민주시민교육』에서는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5·18교육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피고 있다.

2) '5월 교육 원칙'은 5·18기념재단에 제출된 연구보고서(연구 책임자 최호근)인 『부담스러웠던 과거사 교육의 원칙에 관한 연구 : 5월 교육에 주는 함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독일의 홀로코스트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미국 국립 홀로코스트기념관의 교육지침 및 제노사이드 교육,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자료 수집·연구·교육을 담당하는 국립기관인 야드 바셈의 홀로코스트 교육 원리,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유니세프의 평화교육, 유엔의 『인권교육훈련선언』 등을 참조해 5월 교육의 원칙 수립과 관련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원리적 방향으로 '의미의 보편성을 깨닫게 하라, 학습자 스스로가 현재적 연관을 발견토록 하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건 전개에 인과성을 이해하도록 하라, 5·18이 불가피했다는 인상을 갖지 않도록 하라, 5·18의 유산과 부채를 함께 기억하도록 하라, 구조 속에서 개인의 행동반경과 책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라'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 목표로는 '공감과 의분의 능력을 배양하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계발하는 기회로 활용하라, 열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힘쓰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접근 전략으로는 '사실과 해석의 차이를 환기시키는 데서 출발하라', '5·18의 발단과 전개과정을 해당 시대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도록 한다, 정서적 접근의 유용성을 기억하라, 정서적 부담을 줄이도록 배려하라, 서로 다른 입장에 서있던 사람들의 내면을 이해하도록 하라, 세계사적 시각에서 5·18을 조감하게 하라, 대조를 통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라, 증언을 통해 새로운 증인이 되도록 하라, 목표집단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탐색하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의미로는 '야만의 회귀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키운다, 인간 존엄성과 보편적 가치 준수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시민의 용기와 참여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5.8의 의미 중 하나가 공동체 이상의 실현이었음을 알게 하라' 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⑨ 5·18이 생생한 민주공동체였음을 깨닫는다.
- ⑩ 공감과 의분의 능력을 배양한다.
- ⑪ 비판적 사고를 키운다.
- ⑫ 개인의 자율성을 육성한다.

5월 교육 원칙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제목에 등장하는 ‘올바른 교육’이란 개념이다. ‘올바른’이란 더 이상 틀린 게 없다는 완벽한 상태를 이르는 수식어이다. 하지만 ‘5·18이 현재와 관련된 사건임을 확인한다.’라는 두 번째 원칙처럼 5·18은 현재진행형인 역사이다. 그러므로 5·18교육의 원칙은 5·18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라는 대전제 위에 수립되어야 한다. 동시에 5·18교육의 원칙 역시 현재진행형으로서 늘 점검하고 갱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5월 교육 원칙’에서는 도덕적 정명(正名)과도 같은 ‘올바른 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이럴 경우 ‘5월 교육 원칙’은 수정이 불가능한 절대적 원칙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처럼 5·18 교육의 대전제가 5·18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데 있다면 5·18교육의 대원칙은 심리적 동일시, 즉 공감을 통해 1980년에 일어난 5·18의 비극과 오늘의 ‘나’와 ‘우리’의 거리감을 없애고 일체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원칙인 ‘공감을 도모하나, 정서적 부담은 경감한다.’에서 말하는 공감은 원칙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공감을 뜻한다. 그러므로 곧바로 정서적 부담이라는 말이 뒤따른다. 하지만 공감은 현재진행형인 5·18에 대한 교육에 있어 수단이 아니라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한편 ‘5월 교육 원칙’에서 심각하게 재고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면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새로운 증인이 된다.’는 네 번째 원칙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생존자 증언은 좋은 5·18교육이 될 수 없다. 생존자는 처음 보는 청중 앞에서 잊고픈 기억을 떠올리며 얘기하는 게 고통스럽다. 청중은 생존자인 그(녀)가 끔찍한 기억을 고통스럽게 떠올리며 이야기할 때 공감하기보다는 충격을 받고 당황한다. 한동안 생존자들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청중에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으며 치유한다는 내용을 가진 ‘상처받은 치유자’란 개념이 회자되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무엇보다 생존자들은 당시 고통을 떠올리며 이야기하는 시간은 물론 이후에도 심리적 고통에 시달린다.

한편, ‘5월 교육 원칙’을 포함해 이제껏 5·18교육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교육 대상을 주로 학생에 한정했다는 점이다. 5·18교육은 5·18이 현재진행형인 이상 모든 세대가 받아야 하는 시민교육이 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5·18교육의 원칙을 고민한다고 하면서도 ‘5월 교육 원칙’은 학생을 학습자로 놓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목표 집단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모색한다. 연령과 성별, 국정과 직업에 대한 고려는 5월 교육에도 필수적이다’라는 여섯 번째 원칙이 있지만, 여기서도 ‘유년기와 초·중·고 학생의 인지 발달 단계와 정서감응 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여 여전히 학생 대상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월 교육 원칙’은 5·18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설정하고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원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목표와 수단이 혼재되면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 5·18교육의 원칙은 결코 가이드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와 너가 어떻게 5·18을 마주하며 우리의 5·18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또한 그것은 공교육 시스템 하에 있는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5월 교육 원칙’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홀로코스트 교육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과거사 교육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있었고 실제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홀로코스트 교육과 5·18교육 간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홀로코스트 교육은 인류 모두에게 끔찍한 비극으로 기억되고 있는 보편기억으로서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교육이다. 5·18교육은 아직 보편기억이 되지 못해 지금도 기억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인 5·18에 대한 교육이다. 완결로서의 역사와 과정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교육 원칙은 그 차이만큼 달라야 한다.

이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5월 교육 원칙’에 대한 문제제기를 염두에 두며 올해에 출간된 5·18 교재인 『너와 나의 5·18』의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5·18 교육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2. 5·18 교육의 대전제 : 5·18은 살아있는 역사, 현재진행형이다

2019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5·18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5·18망언이 쏟아졌다.

-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었다(이종명 의원).
- 논리적으로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이종명 의원).
- 중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 의원).
- 5·18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김진태 의원).

다음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며 그들을 비호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2018년 9월 14일에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에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등 정식 발족을 방해하고 있다. 2019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꿈꾸고 있건만 정작 5·18의 보편기억화는 퇴보 중이다.

5·18 망언에 국민적 공분이 드높던 2019년 3월에 대학교재이자 교양서인 『너와 나의 5·18』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무엇보다 5·18은 아직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기억투쟁 중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보상, 기념 등 일련의 과거청산이 끝났음에도 다시 진상 규명이라는 과거사 청산의 첫 단추를 끼야 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책을 만들면서 우선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5·18을 사건사적 관점에서 꼼꼼하게 재구성하고자 했다. 이 책은 먼저 5·18의 배경을 살핀 후 열흘간의 드라마를 치밀하게 재현했다. 그리고 이후 오월운동을 통해 6월 항쟁을 이뤄내고 5·18의 과거청산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를 살폈다. 오월운동은 곧 5·18을 왜곡하려는 세력에 대한 기억투쟁이었다는 점을 분

명히 했다. 1부 ‘5·18, 배경과 진행’에 해당하는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부 5·18, 배경과 진행

1장 5·18은 왜 일어났을까?

긴 독재, 불굴의 민주화투쟁/반공의 이름으로 국가폭력에 희생되다/서울에서 광주로, 민주화의 꿈이 살아나다

2장 5·18민주화운동, 열흘간의 드라마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3장 진실을 향한 투쟁

1980년 5월 광주항쟁에서 1987년 6월 국민항쟁에 이르는 길/1987년 6월 항쟁과 광주청문회/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국제적인 운동으로서의 5월운동

5·18에는 분명한 과거청산의 과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도 가해의 역사를 은폐하는데 나선 세력들은 과거청산 자체를 부정하면서 5·18을 왜곡하고 또한 조작하고 있다. 『너와 나의 5·18』은 ‘5장 5·18, 진실과 거짓말 : 그들은 왜 5·18을 왜곡 조작하였는가’에서 이 문제를 조망했다. 1980년 당시 신군부세력은 여론조작과 대국민 심리전을 통해 5·18 왜곡 프레임을 만들었다. 김대중 추종 강패와 대학생, 간첩, 폭도, 폭동, 유언비어 등의 개념을 사용해 지역주의와 반공주의에 기반한 5·18왜곡 프레임을 만들었다. 지금도 그들은 5·18에서의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한다. 노태우는 5·18의 “진범은 유언비어”라고 주장했다.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 씨를 말리러 왔다는 유언비어를 들은 시민들이 무기고를 습격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태우의 주장이야말로 ‘유언비어’다. 전두환은 2017년에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써야 했던 대한민국 군인들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처럼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월혁명과 6월항쟁 등 여타 민주화운동과 달리 극우 기득권 세력이 유난히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폄훼하는 이는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포 책임자와 여러 비밀공작의 진상이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자위권 발동을 운운하거나 북한 특수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가가 책임지고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³⁾

이처럼 5·18이 현재진행형의 기억투쟁인 이상 5·18교육은 완결되지 않은 즉, 살아있는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오늘날까지 축적되어 온 배경부터 오월운동까지 5·18의 역사를 온전히 알고 둘째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5·18왜곡에 맞서 계속되고 있는 기억투쟁의 양상과 의미를 되짚을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살아있는 역사로서의 5·18에 대한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바는 공감과 연대 가치의

3) 은우근, 『5·18, 진실과 거짓말 : 그들은 왜 5·18을 왜곡·조작하는가?』, 『너와 나의 5·18』, 오월의 봄, 2019, 230쪽.

실현에 있다. 예비시민인 학생을 포함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5·18교육에서는 희생자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희생자의 가족, 생존자와 그의 가족과의 심리적 동일시를 추구하는 공감교육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나와 너,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부끄러움이라는 정서를 바탕으로 5·18의 진실을 함께 알리고자 벌였던 오월운동, 5·18이 남긴 생명공동체의 정신을 치유공동체로 이어가려는 노력 등을 살피며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연대교육이 필요하다.

3. 공감 지향적 5·18교육

공감교육으로서의 5·18교육은 사람과 그 사람이 겪은 고통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람은 『너와 나의 5·18』의 ‘12장 물음과 선택 :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에 말하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로서 똑같이 아픈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5월 광주에서 정점에 달한 저항과 분노, 슬픔과 고통, 억울함과 서러움, 증오와 복수, 저주와 원한은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 있는 역사적 현실이다. 5월의 거리로 모여든 평범한 사람들의 저항과 죽음을 떠올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공간의 격차를 넘어서 공감과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벗어나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⁴⁾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면서 똑같이 아픈 사람과의 심리적 동일시는 첫째 피해자의 끔찍한 고통을 함께 경험하면서 스스로와 일체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악이 타인의 행동과 마음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도 내재한다는 사실을 수용하며 가해자로부터 거리를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해자는 5·18특별법으로 처벌받았던 가해의 주범이 아니라 평범한 개인으로서 당시 신군부의 명령을 받아 진압에 나섰던 군인들을 가리킨다.

‘6장 모두의 5·18’로 가는 길’에서는 5·18이 공감없는 비극으로 여전히 보편기억화되지 못한 현실에서 ‘나’의 시선으로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와의 심리적 동일시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사람들은 5·18이 현재진행형이듯 피해자와 가해자의 트라우마 역시 현재진행형임에도 무관심하다.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5·18이 보편기억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보편기억화를 위해서는 5·18을 ‘개인화’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나’를 주체로 한 심리적 동일시가 대중화되어야 한다. 죽어간 사람, 그리고 살아남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마음으로 읽고 돌아보는 5·18의 개인화로부터 보편기억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⁵⁾

그러므로 5·18교육은 5·18을 감내했던 사람들과 2019년 시민으로서의 ‘나’를 동일시하는 길을

4) 한순미, 『물음과 선택 :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너와 나의 5·18』, 오월의 책, 2019, 442쪽.

5) 김정인, 『공감의 역사교육 : 5·18로의 문화적 여정』, 『역사교육연구』 25, 2016, 330쪽.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 주도의 기념일과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과거로만 기억되는 한, 5·18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하고자 하는 이들의 꿈은 실현되기 어렵다. 우리 모두가 5·18을 1980년에 일어난 과거 사건이 아니라 2019년 오늘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렇지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감성으로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5·18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나아가 5·18을 보편기억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쓰러진 누이일 수도 있고, 몸과 마음에 상흔을 안은 채 살아남은 동생일 수도 있고, 끝내 총을 겨누어야 했던 삼촌일 수도 있다!

5·18의 개인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주체는 2019년 오늘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생존자들이다. 5·18에서 살아남은 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였던 그들의 삶은 오래도록 외면 받았다.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죄와 보상이라는 과거 청산의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은 숨죽이며 고통을 삼켰고, 하나 둘 씩 스러져갔다. 그렇게 한참 세월이 흐르고 ‘우리’는 조금씩 그들의 삶에 다가갔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삶을 듣고 기록하며 함께 울고 분노하며 위로했다. 그렇게 조금씩 세월이 흐르며 공감의 지평은 넓어져갔다. ‘4장 상처 입은 자, 그들의 부서진 삶’에서는 바로 ‘그’와 ‘그녀’의 스러져간 삶과 아직도 계속되는 있는 부서진 삶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보았다.

5·18 이후 그와 그녀의 삶은 살았으며 죽은 삶이었다. 평범한 그들에게 불행은 갑자기 덮쳤고 고문으로 인생이 짓이겨졌다. 공포 속에 가족과 세상은 모두 잊고 자기모멸의 동굴 속에 홀로 들어가 살다 죽어갔다. 그래도 살아남은 자, 생존자의 삶도 힘겨웠다. 무엇보다 혹독한 후유증을 앓으며 세상과 고립되어갔다. 고립된 삶에 불행이 꼬리를 물면서 그(녀)들은 산송장처럼 매일을 살아갔다. 지옥과 같은 경험 속에서 살아났건만, 현실이 버겁기만 했던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과 하직했다. 가족들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때론 그 고통이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한 순간의 충격과 고통에 온전히 몸과 마음이 무너진 부모, 자식, 남편, 아내를 바라보는 가족의 삶의 무게 역시 그들 못지않았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너무나 억울하기만 죽음들을 가족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은 채 살았다. 매년 5월이 오면 그들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또한 1980년 5월에 광주에 살았고 5·18 상황에 자신 혹은 가족이 고통을 겪은 경우, 무엇보다 여성들은 부모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그 고통을 온전히 짊어져야 했다. 남편의 갑작스런 구속과 죽음 역시 아내이자 엄마인 여성들의 삶을 완전히 바뀔 놓았고, 그 무게 또한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잃은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게다가 ‘남편 잡아먹은 부인네’라는 주변의 시선이 그녀들에게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 또한 정신 줄을 놓아버린 남편과의 삶은 여성들로서는 끔찍한,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되었다. 그렇게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안고 살기에 5·18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었다.

5·18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남은 자, 또한 가족이라는 굴레에 갇힌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5·18교육은 그들의 현재진행형인 고통과 상처에 우리의 마음을 포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4. 연대 지향적 5·18교육

5·18에 대한 공감교육이 주로는 심, 즉 마음에 맞는 감정이입적 교육이라면, 연대교육은 심과 리, 즉 마음과 머리를 함께 움직여 나와 너, 우리를 잇는 끈을 만들어 가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5·18에 대한 연대교육은 5·18 당시 왜 평범한 사람들이 봉기해야만 했는지를 마음과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9장 저항하는 사람들의 윤리’에서는 당시 시민군 지도자였던 윤상원의 말을 빌려 평범한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총을 들었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을 시민권으로 확립하는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봉기였다.

여러분들이 광주에 와서 직접 그 참상을 목격했듯이 계엄군부의 하수인인 살인 공수부대에 의해 수많은 학생 시민들이 참혹하게 학살당하고 병원이란 병원은 모두 부상자들로 초만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도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끌려가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광주 시민 그리고 전남 도민이 바로 이 같은 살인 군부의 만행에 맞서 봉기한 것입니다. 그들 공수부대를 몰아내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무장을 한 것입니다. 누가 강요를 해서 무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 스스로 생명을 지키고 또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장을 한 것입니다. 군부 쿠데타에 의한 권력 찬탈의 음모를 분쇄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봉기한 것입니다. 우리들 시민 모두는 평화롭게 이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중략) 우리는 무한정으로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평화적으로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며 피맺힌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야 합니다. 탱크를 동원해 진압하겠다는 이 싸움에서 어차피 질 수 밖에 없지만, 그 같은 진압이 오늘의 사태를 해결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⁶⁾

‘7장 5·18의 학살의 애도와 민주주의’에서는 살아남은 자들이 5·18 당시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꾸고 싶고 바꿀 수 있다는 열망을 갖고 살아왔음을 이야기한다.⁷⁾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의 5·18 이후 품고 있던 열정은 공감교육이 주목한 평범한 사람들, 즉 생존자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 1980년 광주, 그리고 그 이후를 감내해온 사람들은 5·18의 좌절과 희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 5·18교육은 이러한 좌절과 희망을 동시에 마음과 머리로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처럼 5·18과 그 이후의 역사를 빚어온 주인공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1917년 러시아혁명, 1968년 혁명의 주인공 역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8장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봉기하는가?’에서는 5·18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혁명적 이념 혹은 대항 이데올로기를 갖고 봉기를 일으킨 것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그들을 자유, 평등, 인권 등의 보편적인 이상을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하고자 봉기를 일으켰을 뿐이었다.⁸⁾ 시민다운 시민이 되기 위한 봉기와 그를 위한 연대, 그것이 바로 5·18이었던 것이다.

6) 김정한, 「저항하는 사람들의 윤리」, 『너와 나의 5·18』, 오월의 봄, 2019, 340쪽.

7) 김정한, 「5·18 학살의 애도와 민주주의」, 『너와 나의 5·18』, 오월의 봄, 2019, 293쪽.

8) 김정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봉기하는가?」, 『너와 나의 5·18』, 오월의 봄, 2019, 302-303쪽.

역사의 진보가 끊어지는 모퉁이에서 억압과 폭력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초는 시시한 사람들의 평범하고 상식적인 요구였다. 1789년 프랑스 혁명, 1919년 러시아 혁명, 1968년 혁명 등 세계사적인 보편적 혁명들처럼 5·18도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들의 봉기였으며 그 곳에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국민다운 국민, 시민다운 시민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⁹⁾

5·18에 봉기한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정서는 바로 부끄러움이었다. 생존자들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데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것은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부채의식으로 남았고 결국 역사를 밀고 나가는 힘이 되었다. 오월운동은 것처럼 5·18의 부끄러움의 정서를 공유하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5·18을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부끄러운 사람들의 참회의 연대였다. 매년 5월이면 수만 명이 광주를 찾았고 전국에서 진실을 향한 기억투쟁을 벌였다. 그렇게 5·18은 1987년 6월 항쟁 승리의 결정적인 밑불이 되었다.¹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18 제37주년 기념사에서 자신 또한 부끄러움의 정서=부채감을 딛고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과정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었습니다. 그 부채감이 민주화운동에 나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장시켜 준 힘이 됐습니다.

‘10장 5·18의 공동체 : 부끄러운 자들을 위한 연대’에서는 이처럼 부끄러움이라는 정서가 묶어준 연대의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끄러움의 정서는 5·18 당시 국가 폭력이 자행되는 가운데 광주의 집단정서로 형성되었다. 5·18 이후 여전히 지속되면서 한편에서는 부채의식, 죄책감 같은 집단정서로 표출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부심과 긍지 같은 집단정서로 표현되었다.¹¹⁾ 그리고 중국에는 광주의 안과 밖의 부끄러운 자들이 함께 역사의 진보를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연대교육은 광주 안과 밖에서 부끄러움이라는 윤리적 정서로 묶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를 살핌으로써 오늘의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나와 너를 성찰하고 우리로 묶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연대교육에서는 우리를 묶은 집합적 주체를 공동체라 부른다. ‘10장 5·18의 공동체 : 부끄러운 자들을 위한 연대’에서는 5·18공동체를 생명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 5·18 당시 광주의 평범한 사람들은 피와 밥을 함께 나누었다. 기꺼이 헌혈에 참여했고 김밥과 주먹밥을 만들어 함께 나누었다. 나아가 생명까지 나누었다. 생면부지의 타인을 구하고자 스스로 죽음을 불사하기도 했다. 그렇게 5·18공동체는 생명공동체였고 평범한 사람들은 생명공동체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했다. 공부수대의 잔인한 폭력은 인간성을 부정했으나 평범한 사람들은 폭력에 대한 공포와 그 공포로 말

9) 은우근, 『5·18, 진실과 거짓말 : 그들은 왜 5·18을 왜곡 조작하는가?』, 『너와 나의 5·18』, 오월의 봄, 2019, 206쪽.

10) 은우근, 『5·18 공동체 : 부끄러운 자들을 위한 연대』, 『너와 나의 5·18』, 오월의 봄, 2019, 372쪽.

11) 위의 글, 374-375쪽.

미암은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명공동체를 체험했다.

열흘간의 생명공동체를 함께 체험한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한 변혁적 사상, 이념의 체계로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슬픔, 고통, 절망에 깊게 연대했다. 신군부는 그들을 일시적으로 억압할 수 있었으나 중국에 지배하지 못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생명공동체의 경험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다. 5·18 생명공동체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질문을 던졌던 살아있는 공동체였다. 5·18에서 공동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연대교육에서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공동체에 기반한 강력한 연대는 5·18 이후 민주화를 향한 연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오늘날의 치유공동체로 이어지고 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5·18로 다치고 고문 받고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5·18이 일어난 후 한참 동안 5·18의 과거청산을 위한 오월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그동안 그들의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상의 삶은 잠시 묻혔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기 시작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지금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삶을 돌보는 일을 넘어 치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4장 상처 입은 자, 그들의 부서진 삶’은 이러한 치유공동체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5·18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들의 상처는 깊다. 고통스러운 회상을 하고 악몽에 반복적으로 시달린다. 때론 자기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사람을 경계한다. 허무감에 사로잡혀 세상을 살기 싫어하기도 한다. 5·18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 것이다. 가까운 친척 및 친구를 잃었다는 상실감,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고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인간적 배신감, 나만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몸의 상처는 물론 마음의 상처도 치유 과정을 거치면 완치가 가능한 것일까.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프레모 레비는 1987년 자살하기 직전에 쓴 책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에서 상처는 치유 불가능하다는 걸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압제자가 괴로워한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희생자가 괴로움을 겪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데도, 실제로는 수십 년이 지나도록 희생자는 고통 속에 괴로워한다고 토로했다. 상처는 치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레비의 절망적인 독백은 5·18, 그리고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생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고, 치유의 길에는 끝이 없다는 냉엄하고도 슬픈 비극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그녀와 함께 끝을 알 수 없지만, 치유의 길을 걸어야 한다. 5·18 트라우마는 국가폭력에 의해 일어난 사회적 트라우마이다. 또한 5·18 발발 이후 오랜 시간 진실이 왜곡되면서 사회 공동체에 의한 2차적 집단 트라우마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치유의 길에서 사회 공동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사회 공동체의 지지와 인정은 그와 그녀가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된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와 그녀의 걸음으로 우리, 즉 사회공동체가 다가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일에 나서야 한다. 공동체가 내미는 연대의 손은 그들에게 자신이 사는 세상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이처럼 5·18교육에서 말하는 연대의 공동체는 5·18 당시의 생명공동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 치유를 위한 치유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 또한 연대교육의 중요한 축이다. 나아가 연대교육은 평범한 사람들의 부끄러운 정서에 대한 심리적 연대를 넘어 실천적 연대의 길을 제시해

야 한다. 치유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염원했던 시민다운 시민으로서 함께 살기 위한 사회적 실천을 고민하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5. 너와 나, 우리의 5·18교육을 지향하며

5·18은 아직 현재진행형인 사건이며 5·18에 대한 보편기억화의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5·18 교육은 이러한 현실을 대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5·18이 현재진행형이므로 5·18교육 역시 원칙과 방법은 유연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민주시민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아직도 살아남은 자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현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5·18교육에서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다. 5·18이 남긴 고통과 상처를 감내하면서 또한 생명공동체적 삶과 민주화를 향한 연대를 경험하면서 좌절과 희망을 동시에 일구어왔던 평범한 사람들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5·18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껏 5·18교육은 학생을 대상화해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사실상 화석화된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5·18이 살아있는 역사인 이상, 1980년을 살았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희생자의 가족, 생존자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고통스런 당시의 기억을 감히 드러내지도 못하는 가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5·18교육을 민주시민교육 혹은 홀로코스트 교육에 견주어 일반화하고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5·18교육은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연대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빚어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감과 연대에 기반한 보편기억화가 2019년 5·18 교육의 목표이자 원칙이 되어야 한다.

2019년 대한민국에서 너와 나, 우리의 5·18교육, 즉 공감교육과 연대교육으로서의 5·18교육은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연대의 경험과 함께 한다. 5·18을 겪고 들으며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5·18세대의 2세대들이 또다시 국가의 배신을 각인하게 된 세월호 세대가 되고 말았다. 이제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면서 세월호 세대인 10대, 20대의 자녀들은 5·18세대인 부모에게 1980년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묻는다. 그렇다면 지금의 세월호 세대에게 5·18은 어떤 의미일까. 5·18은 현재진행형 역사이고 곧 세월호 참사라고 이야기 한다.¹²⁾

- 어머니께서는 5·18 주동자들의 이름만 뉴스에 나오면 싫은 내색을 하신다. 외삼촌께서 당시 광주에 있으셨는데 공수부대에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많은 친구들을 잃으셨기 때문이다. 외삼촌께서는 그 때의 일로 다리를 다치셨고 몇십년간 약을 드셨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 나는 무의식적으로 시위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다. 이번에 오빠가 의경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많은 시위대를 진압해야 했다. 오빠 자신도 불합리하게 시위를 강경 진압해야 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지만, 위에서 명령이 오면 그대로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다고 슬퍼하였다. 그 뒤, 나는 5·18 평범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2) 이하는 2010년부터 매학기 진행한 「나에게 다가오는 오월」라는 주제의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제출한 감상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5·18을 겪은 분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다. 나는 세월호 세대이기에 강연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세월호가 생각났는데, 혹시 역사란 주기를 반복하여 되풀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닮았다 느꼈다. 공감하지 못 하는 사회. 감정을 매도하고 이성을 강요하는 사회. 2년이나 지났으니 좀 잊자, 유난 그만 떨어라, 세월호 지겹다 등등. 우리는 분노할 일엔 분노하고 슬퍼할 일엔 슬퍼해야 한다.
- 부끄럽지만 5·18은 나에게 세월호만큼 다가오는 사건은 아니었다. 물론 어떤 사건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국가기념일인 5월 18일에는 어떤 행사를 하는지는 몰랐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분노하고, 시위도 여러 번 나갔으면서 5·18사건에는 왜 그만큼 공감하려 노력하지 않았을까? 수업을 들으며 5·18사건의 피해자분들에게 너무 죄송했다. 특히 교수님께서 5·18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도덕이나 가치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월호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5·18 사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세월호 사건 등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건에 내가 공감하지 않고, 내가 나서서 이 사건을 알리려고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건들이 이대로 묻히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피해자가 나, 혹은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최근 5·18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5·18사건은 나에게 세월호사건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시해야겠다.

이제 『너와 나의 5·18』에 실린 김준태의 시 두 편을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 시의 제목은 <너>이다. 너와 나의 ‘거리’를 이야기하되, 결국 너와 나는 둘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는 시로 공감의 의미를 되묻게 한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너는 죽었다.
 내가 술을 마실 때 너는 죽었다.
 내가 돈을 셀 때 너는 죽었다.
 내가 거짓말을 할 때 너는 죽었다.
 내가 아내와 단잠을 잘 때 너는 죽었다.
 내가 목욕탕에서 몸무게를 잴 때 너는 죽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러나 너는 하늘로 올라갔다.¹³⁾

두 번째 시의 제목은 <함께 가는 길>이다. 결국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는 연대의 의미를 일깨운다.

그러나 우리여 우리 사람들이여
 우리들은 혼자서 혼자서 간다지만
 노래와 울음소리 속으로 바라보면

13) 한순미, 『공감과 연대 : “내 속의 이 큰 슬픔을 누구에게 말할까?”』, 『너와 나의 5·18』, 오월의 봄, 2019, 398쪽.

결국 우리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보듬고 가는 것입니다.¹⁴⁾

거듭 말하지만, 5·18교육은 죽은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5·18이 현재진행형이듯 5·18교육은 ‘너와 나,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연대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세대를 아울러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연대하는 보편기억화를 추구해야 한다.

14) 위의 글, 415쪽.

■ 토론문

5·18교육 너와 나의 간극 메우기

최승원(광주 일신중학교 교사)

몇 해 전 ‘5월 교육 원칙’과 관련한 검토와 집담회 등이 있었다. 진행 과정을 바라보며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었던 기억이 남는다. 12가지나 되는 제안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 내 안에 의미 깊게 들어오지 못하고, 눈과 입에만 맴도는 느낌이었다.

‘5월 교육 원칙’이 있기 전에도 지역에서는 ‘5·18의 정신(?)’을 정리한 바 있다. 5월의 의미를 ‘민주, 인권, 평화’로 뽑아내어 강조하고 교육에서도 5·18이 주는 교훈으로 강조하였다. 이때도 개인적으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앞서의 의미들도 중요하지만 나는 ‘저항 공동체’라는 상징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유를 몰라 꺾끄러워하던 토론자에게, 발표자의 글은 기존의 제시된 ‘의미’와 ‘원칙’이 가지는 문제를 잘 지적해 주었다. 발표자가 말했듯 ‘5월 교육 원칙’은 5·18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설정하고 가치를 구현할 방안에 대해 ‘원론적 제시’여야 한다. ‘원칙’이 활자화되어 ‘가이드라인’처럼 전해지면 교육자는 부담스러워 한다. 부담스러운 그 만큼 교육이 형식의 틀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2가지의 원칙이 ‘5월 교육’의 특성을 충분히 담아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5월 교육 원칙’을 도출하는 과정은 세계 여러 나라의 ‘부담스러운 과거사 교육’이 5월 교육에 시사점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연구보고서에서도 인정하듯, 5·18은 확실당함에 머문 것이 아니라 끝내 저항한 역사이며 이후 전개되는 기억 투쟁 과정에서도 다른 제노사이드 사건들과 대칭적으로 정면 비교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원칙’은 기존의 ‘부담스러운 과거사 교육’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되, 5·18이 가지는 의미와 의지를 보다 확장적으로 검토하며 정립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한 면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현재 진행형’으로 바라보는, ‘공감 지향적’이며 ‘연대 지향적’인 5·18 교육의 지향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데 동의한다.

5·18은 현재 진행형이다. 또한 역사 교육은 과거의 사건을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연관하여 바라보도록 주문한다. 5·18은 과거이면서 현재이며,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제이자 공감적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좋은 기제이다. ‘5월 교육’은 추체험을 통해 학습자에게 역사 교육의 목표를 넘어 전인적 성장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5월 교육 원칙’은 그러한 점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주기도 한다. ‘생존자의 증언’은 무엇보다도 강렬하게 학습자에게 전달되고 기억에 남는다. 그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발표자가 제시한 ‘공감’과 ‘연대’ 그리고 실천적 자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80년대를 살며 5월을 기억해 온 이들 대부분은 ‘증언’의 전달 각인을 통해 저마다 오월을 가슴에 담아두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발표자의 걱정과 달리 ‘증언’은 적극적인 5월 교육의 방편이 되어야 하며, 면대면의 만남이 아니라도 충분히 ‘증언’될 수 있고, 면대면의 증언으로 서로의 공감과 연민을 끌어내는 것도 의미 있는 5월 교육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발표자도 지적한바, 토론자에게도 처음 ‘5월 교육 원칙’을 접할 때 ‘공감은 도모하나, 정서적 부담은 경감한다.’라는 문장은 꺾끄럽게 다가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 지역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5·18 계기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초등학교 교사들의 고민이 바로 ‘정서적 부담’이었다. 아직 비판적 사고와 토론이 쉽지 않은 나이에 5·18을 날것으로 접할 때 아이들은 ‘의미’로 남기 보다는 ‘고통’ 혹은 ‘감정’으로 남을 수 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도 교육에 따라 내용은 휘발되고 ‘감정’만 남는 경우도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5월 교육 원칙’은 ‘5·18’이 어느 정도 제도화 되었다고 보고, 보다 긴 안목에서 교육의 원칙을 정비하자는 입장에서 준비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근래의 상황들을 보면 발표자의 지적처럼 제도적 기반은 흔들리고 여전히 5·18은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상황과 수준도 상이하다. 광주지역의 경우 일정 정도 제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타 지역 상황은 여전히 계기 수업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다. ‘원칙’의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다양한 현재를 점검하고 각이한 상황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5·18은 한국 현대사 교육,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저수지라 할만하다. 5·18은 다양한 요소와 내용, 방식으로 기억과 의미를 길어 올릴 수 있다. 확장적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호명되는 5·18 교육을 위해서는 ‘원칙’보다는 큰 틀의 ‘방향’으로 ‘5월 교육 원칙’이 제시되면 좋겠다. 현재적으로, 현재와 함께 읽어내려 할 때, 공감과 연대로 그와 나 너와 나가 만나려 할 때, 살아 숨쉬는 5·18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광주 밖의 5·18교육

배주영(광평중학교(경북 구미) 교사)

구미의 환영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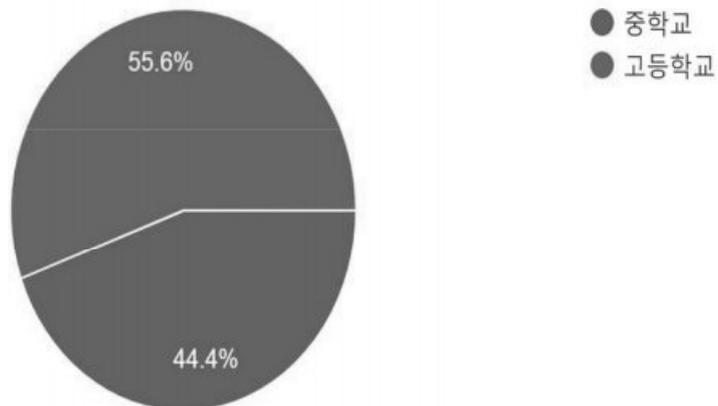
“선생님이 광주에서 오셨다고 해서 걱정되
서요...”

518교육 관련 설문조사

- 대상: 경북역사교사
- 조사기간: 2019. 4. 19~4.24
- 응답: 72명(전체 역사교사 46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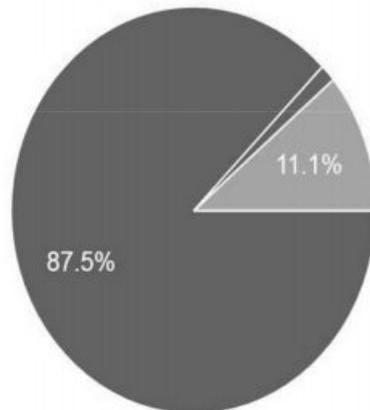
선생님께서 근무하는 학교는 어디인가요?

응답 72개



학교의 설립 형태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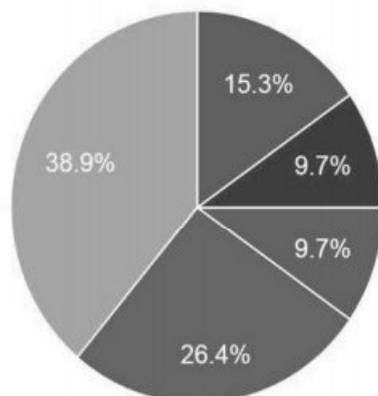
응답 72개



- 공립
- 국립
- 사립
- 대안학교

선생님의 근무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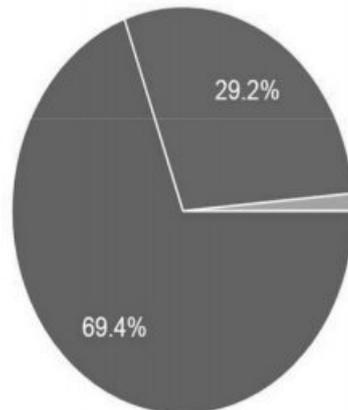
응답 72개



- 5년 미만
- 10년 미만
- 20년 미만
- 30년 미만
- 30년 이상

518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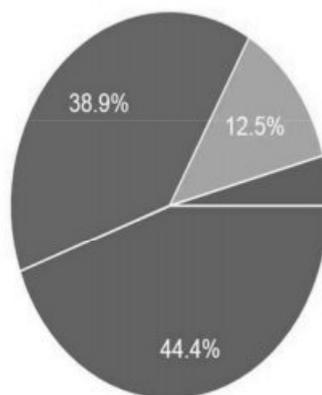
응답 72개



- 매우 중요하다
- 대체로 중요하다
- 보통이다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전혀 중요하지 않다

518교육(수업)을 매년 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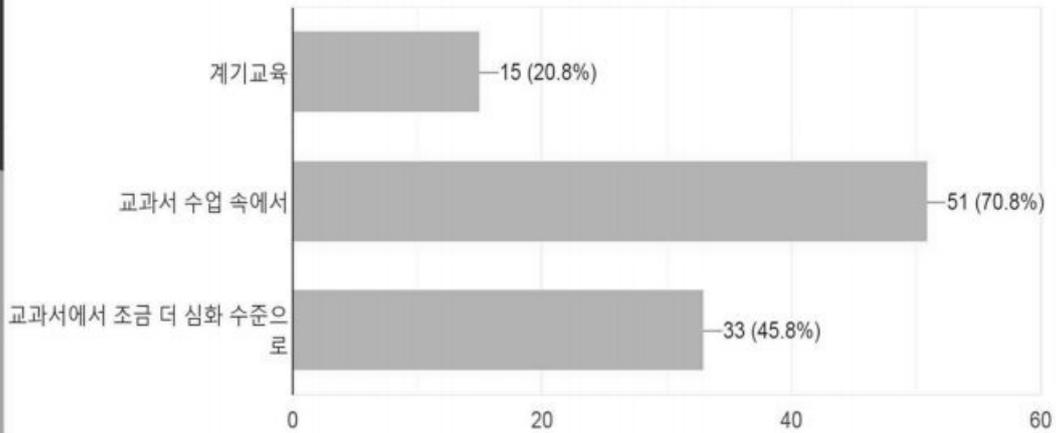
응답 72개



- 매년 반드시 한다.
- 되도록이면 하는 편이다
- 보통이다.
- 하지 않는 편이다
- 전혀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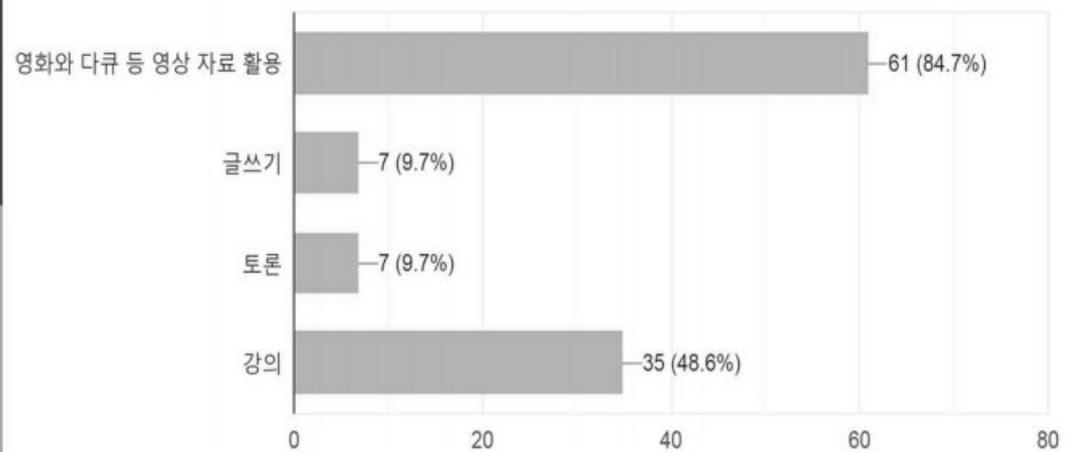
518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모두 선택해주세요)

응답 7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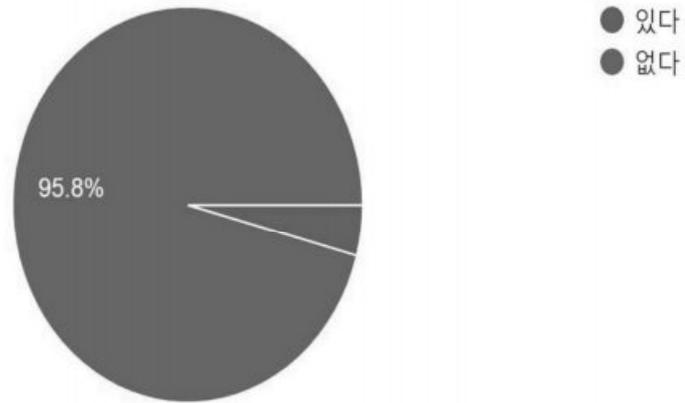
518 수업(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응답 7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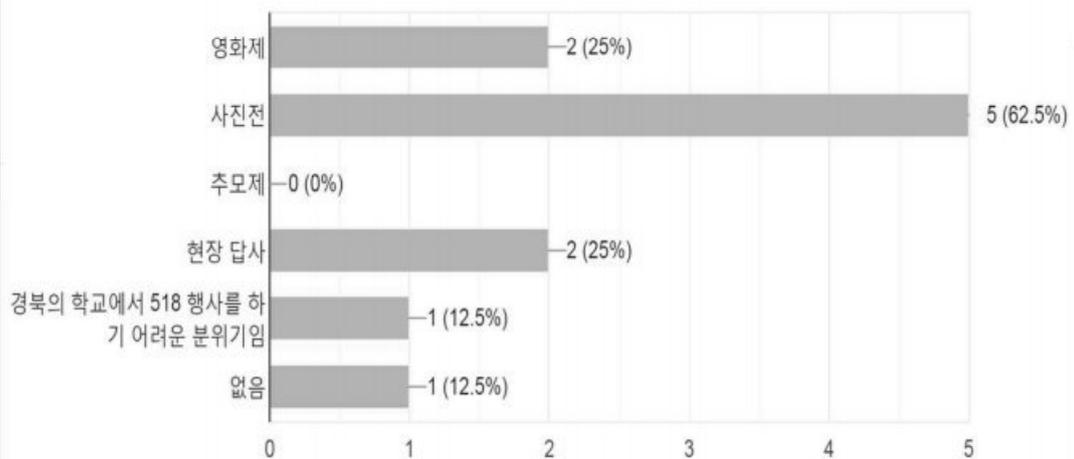
5월에 교내에서 518주간 행사를 추진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응답 72개



518 행사를 추진했다면 어떤 행사였나요?(모두 선택해주세요)

응답 8개



광주 근무 시절 **518** 교육(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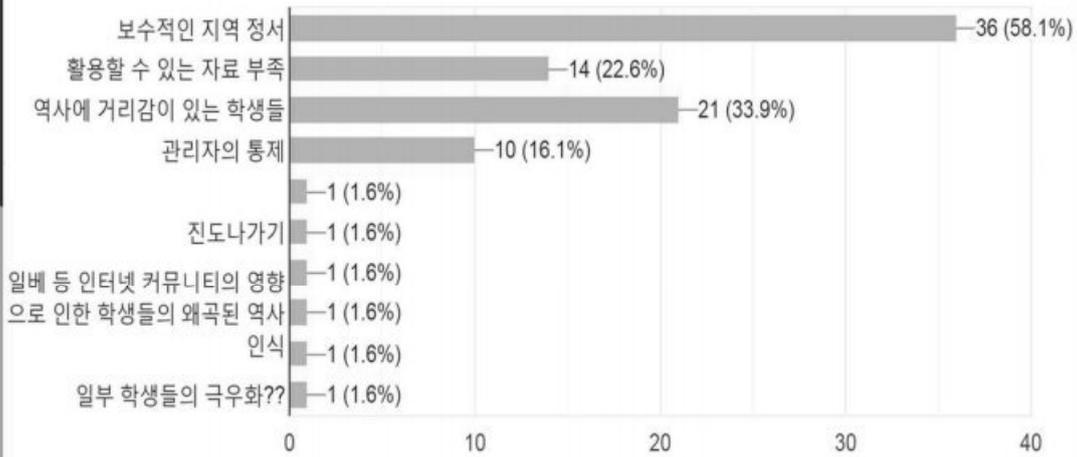
- 사진전
- 영화제
- **518** 현장 답사
- **518** 청소년 연극제
- **518** 고등학생 토론대회
- **518** 협력학교
- 매년 학생회 주관 **518** 교육

구미에서 **518** 교육(5년차)

- **518** 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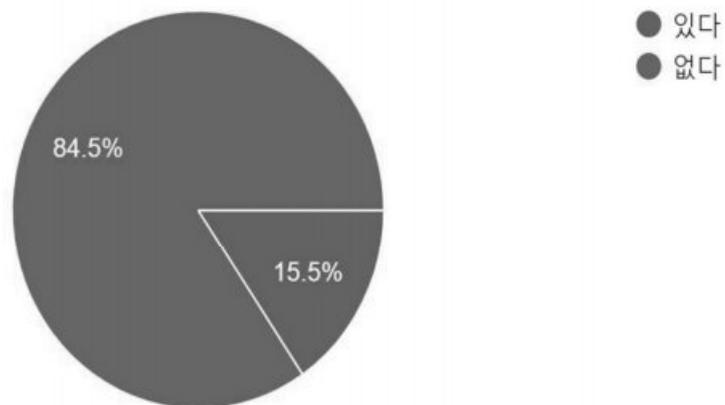
518 교육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모두 선택해주세요)

응답 6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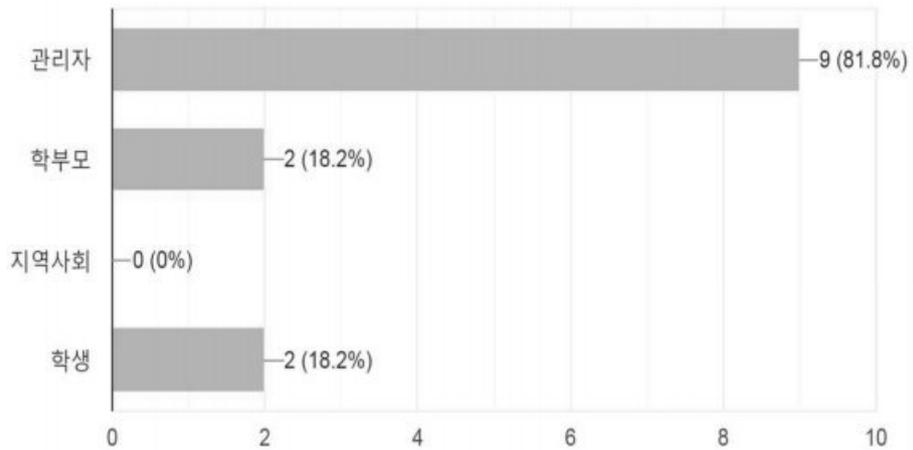
518 교육을 하면서 항의나 통제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응답 71개



있다면 누구로 부터인가요?(모두 선택해주세요)

응답 11개



518 교육을 내실화 하는데 필요한 것들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수업권 보장(3)
- 민주적인 학교 시스템
- 518 관련된 다양한 교수 자료(3)
- 518과 관련된 교과서 서술(비중 확대 2)
- 수업자료 및 방법 공유, 시수확보

- **518**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 정확한 조사와 처벌로 역사적 정당성의 확보
- 일부 정치권의 망언 및 가짜 뉴스 제재 필요
- 교육 시간의 확보, 현장 답사 및 관련 인사들의 특강

- 자유롭고 정의로운 학교와 사회 분위기
- 학교관리자들의 건전한 역사의식(2)
- **518** 관련 행사
- 행정적 지원이 필요
- 교사의 정치적 중립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역사 수업은 중립적일 수 있을까? 꼭 중립이 맞는 말인가?

518 은 교육의 부재 - 학교 민주주의의 부재

- 통제 위주의 학교 문화
- 교과서 수업과 공문 지시 사항외에는 불가능한 교육 활동
- 학생 자치의 부재
- 세월호 추모의 부재

- 518교육이나 연수에서 영남 지역인들에 대한 원죄의식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 의한 호남지역에 가해진 폭력이니 너희는 그들에게 미안해야 한다는 부분이 은연중에 강조되다 보니 학생들의 경우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수적인 지역의 선입견이 문제가 많으며 지나치게 그 당시 정권의 폭력성만을 부각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음
영상자료나 학습지도안 등이 배포되면 좋겠습니다.

바람직한 518 교육의 방향(선생님께서 생각하는 518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적어주세요.)

-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 현대사 교육의 강화 및 민주 시민 교육의 확대를 통한 교육

- 편견과 지역감정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라는 가치에서 **5.18**을 평가해야 함.
- 위에서부터의 교육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 학교행사나 수업을 통해 토론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
- 있는 그대로(객관적 사료 2)

- 진실을 알게 하는 것
- 정답 없는 토론, 역사적 추체험, 다양한 입장이 되어 살펴보는 우리 이야기
- 정확한 사실과 자료를 담보로 하는 내용 전달 및 증언자들의 삶과 현실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노력(현장 답사 포함) 필요함.
- 전체 국민들의 시각에서 균형잡힌 자료를 제공

-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수업활동하기
- **5.18**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다양한 시각 갖기
- 앞으로 지역 갈등을 봉합시키려면 정치권에서 **5.18**을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함. (교육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지 않아야)
- 역사교사의 수업 고민

■ 토론문

광주 밖의 5·18교육 함께 고민하기

백형대(고흥 녹동고등학교 교사)

배주영 선생님의 발표문을 잘 보았습니다. 72명의 설문대상이 경북 역사교사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고민을 모두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경향을 이해하는데 있어 의미 있다 여겨집니다. 경북지역의 역사교사들은 대부분 5·18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 교과서를 바탕으로 영화와 다큐 등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나 지역의 정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광주, 전남과는 다른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미에는 선생님의 교육 경험과 경북 선생님들의 다양한 제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같은 역사교사로서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질문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질문도 눈에 띄어 흥미로웠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인만큼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논의하고 싶은 주제를 제시하며 토론자의 역할을 하려 합니다.

먼저 발표문을 보고 생긴 의문점입니다. 첫째, 보수적인 지역 정서로 인한 어려움은 5·18교육 자체를 문제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5·18민주화운동에 왜곡이 횡행하지만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상식이 되어버린 5·18을 전하는 교육이 지역의 정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관리자들까지 교사의 수업 내용에 관여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제 아무리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묘청이 위화도 회군을 했다고 가르칠 수 없듯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까 의문이 듭니다. 또 계기교육 기획이나 수업 외 행사 주체의 주도권을 교과교사가 갖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생생한 경험을 듣고 싶어 여쭙니다.

둘째, 5·18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역시 북한군 개입과 같은 극단적 상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교육적 논쟁을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지켜야 함을 인정하지 않는 의견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배제한 5·18교육의 토론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셋째, 5·18교육이 ‘영남에 대한 원죄의식을 심화시킨다.’, ‘지역주의를 부추긴다.’라는 의견은 제 경험으로는 생각의 출발점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전하려는 경북지역의 선생님들은 적어도 저보다 훨씬 훌륭한 역사교사라 생각합니다. 또 토론자보다 훨씬 오랜 기간 5·18교육에 힘쓴 발표자의 교육경력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타 지역의 상황을 생생히 듣고 싶은 의도에 질문 드립니다.

다음으로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점을 질문 드립니다. 첫째, 광주에서의

5·18교육 방향입니다. 광주에서는 매년 5월이면 추모분위기가 조성되고 5·18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주변의 이웃이나 선생님들이 역사의 증언자로서 5월의 기억을 수시로 전달해주었습니다. 때문에 광주의 청년들은 적어도 타 지역의 사람들보다는 5·18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5·18교육이 일상화 되고 나니 새로운 문제들이 보입니다. “대단한 줄 알지만 너무 5·18만 강조하니까 이제 지겹다”, “어릴적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다”와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일반 광주시민에서부터 심지어 지역의 역사교사에게 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제 경험이 광주의 전반적인 상황이라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5·18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익숙함 속에 무신경해져가는 것은 경계하며 광주에서의 5·18교육의 방향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꾸준히 5·18교육을 진행해 오신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주의 5·18교육에 대한 고민은 타 지역에서의 다가올 고민과 연결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둘째, 역사교사의 계기교육에 대한 고민입니다. 굴절된 역사 속에 근현대사의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에 역사교사들의 계기교육은 역사의식 함양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 역시 꾸준히 계기교육에 충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뿐만 아니라 3.1운동, 6.10만세운동, 11.3광주학생독립운동, 6.25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제주 4.3사건, 10.19 여순사건, 세월호 참사 등 계기교육이 필요한 사건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강제로 권장되어 오는 몇 가지 계기교육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근로정신대, 독립운동, 노동운동 등 특정한 시점과 상관없지만 계기교육이 필요한 사건들까지 역사교사들이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 계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부득이 역사교사들은 자신의 역사관에 따라 몇몇 주제를 선택하고 계기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곤 합니다. 물론 5·18민주화교육은 그 중에서도 빠지지 말아야 할 주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제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습니다.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는 일괄적으로 5·18교육 실시를 지시하고 수업 사례를 공문으로 보고하게 합니다. 교과서 이외의 5·18교육을 강제해야 하는가? 광주의 기억이 부정되고 있는 비상식적인 주장들을 생각하니 더욱 고민이 깊습니다.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안팎의 5·18교육을 논의함에 있어 전남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토론을 마칠 것입니다. 흔히 전남은 광주와 마찬가지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동일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리라 여겨집니다. 실제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와 호흡을 같이 한 전남지역의 인물과 사적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남에 근무하다 보면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곤 합니다. 광주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구에서 출발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만큼 지리적으로 먼 전남지역도 존재합니다. 외지에 탐방 나갈 기회가 있으면 이왕 나가는 김에 광주보다는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가려는 경향도 강합니다. 일부 전남지역의 학생들에게는 광주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시입니다. 5·18 사적지 한 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학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다행히 최근 5·18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여러 지원이 기대됩니다. 5·18교육에 있어 광주안과 밖의 경계에 위치한 전남지역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5·18을 기억하는 길

- 민주시민을 기르는 5·18교육 -

김선옥(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

“민주주의란 용어에 담긴 원래의 ‘보다 폭넓은 의미’를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인정해야만 한다. ... 민주주의는 공적 삶의 끊임없는 사유화(私有化)에 맞서는 투쟁의 이름으로서 재창조되어야만 한다.” - 크리스틴 로스¹⁾

대구 출신의 부모님을 가지고 서울에서 태어난 내가 ‘광주’를 맞닥뜨린 것은 중학교 2학년쯤이었던 것 같다. 주말이면 성당에 가는 것이 밥을 먹듯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그때, 토요일 종교등부 미사를 마치고 어쩐 일인지 사람들이 성당 지하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고, 긴장한 모습의 주일 학교 교사들은 지하로 내려가는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친구들과 휩쓸려 들어간 지하 강의실에서 처음 보았다. 그 영상을. 내게 광주의 첫 기억은 색이 빠져 온전치 않던 핏빛으로 남아있다. 열아홉, 재수하던 시절에 읽은 <넘어 넘어>(『죽음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어』를 우리는 이렇게 불렀다.)가 그제서야 사춘기 시절의 그 핏빛 기억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주었다. 기차라곤 경부선만 알았던 내가 호남선에 몸을 싣기 시작한 것은 대학에 가고 나서였고, 대학 1학년 때서야 처음 광주에 왔다.

망월동.(마침표 없이는 표현할 수 없다)은 문민정부가 집권한 국가의 대학생인 나에게 한없는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역사와 역사교육을 고민하던 내게 광주와 5·18은 ‘민주주의를 위해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준엄한 물음이었고, 말보다는 실천을 요구하는 조용한 외침이었다. 비단 나만이 아니었다. 우리 모두에게 광주는 오랫동안 그러했다.

해마다 5월이 오면 교실에 선 우리는 마음이 무거웠다. 학교에서 5월 18일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아이들에게 그 아픈 기억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될 것인지 고민스러웠다.

내년이면 5·18민주화운동²⁾ 40주년이다. 전두환이 법정에 선지 23년(1996)이고, 국가기념일이 된지는 22년(1997)이 지났다. 역사와 사회 교과서에 5·18이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기점으로 서술된 것도 그 즈음이다. 5·18이 우리나라 역사의 한 부분이었음을 교과서와 만화, 영화로 접하고, 동시에 생활에서의 민주주의가 자연스러운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5·18’을 가르치고 있을까?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은 ‘광주’를 어떻게 배워가고 있을까? 우리는 ‘5·18’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을까?

1) 크리스틴 로스 『민주주의를 팝니다』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 새로운 논쟁을 위하여』, 난장, 2010.

2) 정식 명칭은 5·18민주화운동이지만, 여기서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더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5·18’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 여기서 제안하는 내용은 개인적 의견임을 밝힌다.

5·18로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것

촛불혁명 이후 능력주의와 지식 중심 경쟁교육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공교육의 목표가 교육 이슈로 등장했다.³⁾ 이제 민주시민교육은 우리교육의 시대적 대전환이며,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자로서의 법적 의무이다.

2019년 들어 각 시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거나 담당 팀을 만들었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딛고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는 학생시민’의 성장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장차 우리 사회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설정하였는데, 학교교육의 핵심인 교과교육과정에서의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시민의 생활공간인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지향을 다음 여섯 가지로 설정해보았다.

직접민주주의 Direct Democracy	공화정 Republic	다름과 다양성 Diversity	소수자의 권리 Minority	공정성 Equity	민주주의자 Democrat
----------------------------	-----------------	----------------------	---------------------	---------------	-------------------

직접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직접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이가 높낮음 없이 대등하며 상호적이다.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는 공화정은 개인의 자유와 다수의 지배를 전제하는 민주주의에 사회적 책무를 더하여 소수자의 목소리까지 반영한 사회공동체를 추구한다. 이 공동체는 다름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기계적 평등보다는 공정함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학교 안에서 모든 이의 인권 보장, 권위주의와 능력주의 위계를 탈피한 시스템 구축, 교과교육과정의 민주적 재구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역사교육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이 된다. 근현대사 중심의 역사(세계사와 한국사 모두)를 배우는 것은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역사와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들의 결단과 행위를 기억하는 것이며, 내 삶과 공동체의 행위 기준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5·18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까지처럼 1980년 초여름의 광주로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으로 충분할까?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무엇을 해야 할까?⁴⁾

1. ‘그날 광주’에서 ‘지금 여기’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국가의 폭력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광주 열흘간의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

3)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5·18교육은 이미 오랜 시간 발전을 거듭하며 성장해왔고,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공을 어찌 가벼이 여길 수 있으랴. 그러나 이 발제문은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5·18을 고민하는 글이기에 민주시민교육의 의의와 가치를 5·18교육이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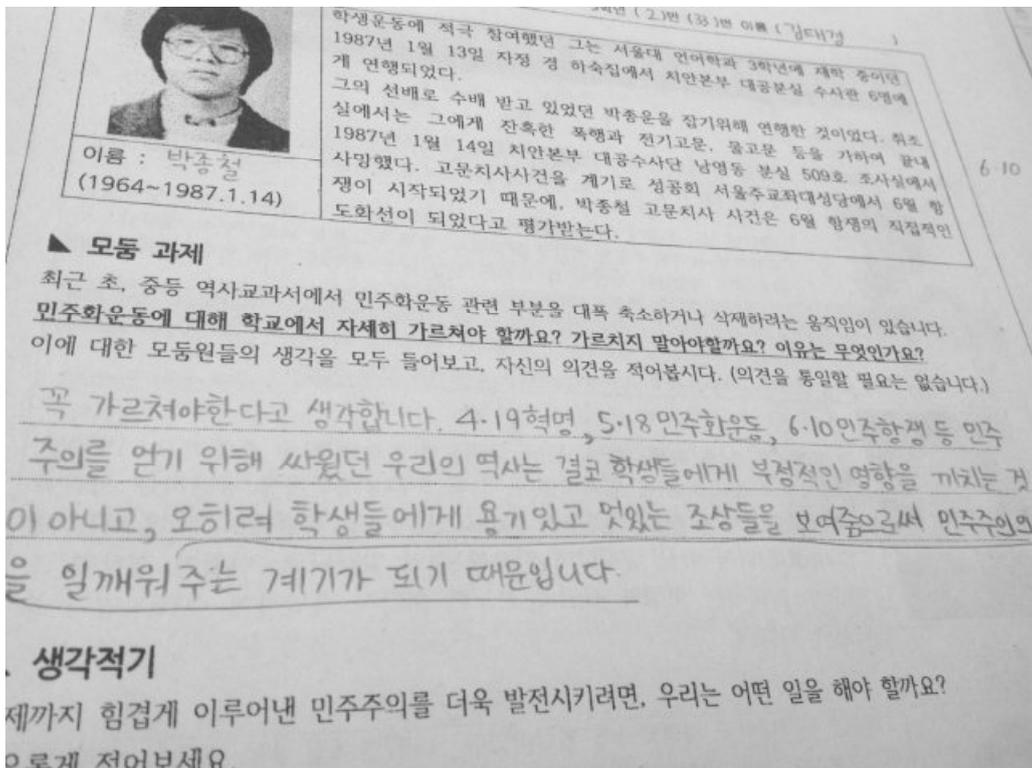
로도 감동을 자아낸다. 열흘의 광주를 가르치는 데는 시간 순으로 일어났던 폭력과 저항을 서술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역사를 정확히 알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 교사들은 반쯤은 의무감에서, 또 반쯤은 역사에 대한 뜨거움으로 그 열흘의 이야기를 풀어내곤 한다.

그러나 이미 40년의 세월이 1980년 광주의 기억에 새로운 역사를 덧붙여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6.10민주항쟁으로 1988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된 후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조사와 피해자 신고가 이루어졌다. 1995년에는 전두환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졌고, 1997년에 드디어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5·18 관련 국가유공자가 선정되고 망월동 묘역 옆에 국립묘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다시 전두환은 풀려났고 시민들은 2019년 광주에서 다시 그를 법정에 세웠다.

이처럼 광주의 역사는 1980에서 끝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는 시민들의 저항과 노력은 광주 5·18의 40년 역사를 계속 써가고 있다. 국가폭력과 은폐에 맞선 시민의 용기와 사회공동체의 노력을 보여주는 드라마이다.

민주시민교육이 학생시민을 ‘민주주의자’로 형성시키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과거의 열흘에 더해 그 이후 진실이 드러나고 또다시 뒤집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삶과 역사를 연결시키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진실규명의 과정과 현재의 한계를 보여주고 내가 지닌 책무를 생각해보는 질문이 필요하다.

5·18은 이미 광주만의 것이 아니다. 50대 이후의 세대는 책과 매체를 통해서, 40대 이후는 영화를 통해서, 30대 이후는 만화와 영상을 통해서 광주를 배우고 익혔다. 그들이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광주의 전국화를 이루어냈다. 이제 5·18의 ‘현재화’와 그를 통한 시민교육을 고민해야 할 때다. 5·18은 이미 5·18이 아니다.



2. 연대의 시작은 ‘동등한 시민성’ 으로부터

지금도 5·18을 묘사할 때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잔혹한 살상 행위’ ‘피어린 투쟁’ ‘결사 항전’ ‘장렬한 산화’ ‘야만의 학살과 분노의 항쟁’ ‘꽃 같은 오월의 신부’⁵⁾ 등이다. 역사를 서술할 때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다. 이러한 언어는 역사를 대하는 사람을 격정적으로 만든다. 5·18의 잔혹성을 사진으로 전하던 교사가 아이들의 텁텁함 또는 그런 표현을 희화화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일방적이고 지나친 감정 표현은 거부감을 일으킨다. 게다가 정확한 통계자료나 객관적 서술을 생략한 채 감정에 휩싸인 표현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요건인 자료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막는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도한 현창과 집단적 영웅 서사는 말하는 이(광주 사람)와 듣는 이(광주 아닌 사람) 사이에 위계를 만든다. 고통을 당한 자, 고통을 당한 자 곁에 있던 자, 그 고통에 동참하지 않았던 자. 고통의 위계화는 그날 광주를 책으로 배운 사람에게 죄의식을 강요한다. “누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는가”를 기준으로 말을 건네지 말아야 한다. ‘꽃 같지’ 않았다고 해서 고통이 적었던 것은 아니다.

이제라도 광주 곁에 있고자 찾아온 사람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죄의식이 아니라 연대의식, 곁에 함께 있는 실천이다. 5·18이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이것이다. 연대는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적인 주고받음에서 시작된다. 필요 이상의 두려움과 죄의식을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방어기제를 활성화시킨다. 지금까지의 5·18교육이 연대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화하고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고통받는 이들의 곁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곁이 되어준) 그들이 겪어야 했던 또 다른 고통이 있다.”⁶⁾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 곁을 지켜주는 것은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책무다. 그 공동체는 더 확장되어야 하며,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어야 한다. ‘아무도 와주지 않았던 열흘’의 기억은 이제 ‘늘 곁에서 함께할 사람들’의 현재로 이어져야 한다.

3. ‘개인’의 행위와 선택 들여다보기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시하는 것은 사회구조적 파악과 더불어 개인의 행위에 대한 관찰이다. 특정 집단의 절멸을 추구했던 비극이 문명화된 인간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겪고 나서 유럽인들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홀로코스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 연구자들은 관료제의 경직성과 명령에 대한 복종 강요가 비극을 불러온 원인이라고 믿었으나, 연구를 거듭할수록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주

5)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전시물에 적힌 말들이다. 이러한 언어는 5·18을 다른 책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6)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내 말을 듣는 ‘그’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람으로 여길 때 사람은 듣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이는 자기의 고통에 함몰된다. 그 곁에 있는 사람은 존중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감정의 배설구가 된다. ... 고통의 당사자는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곁에 설 수 있는가? 절규하는 자에서 말하는 자로 바뀔 수 있는가?’(엄기호,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 고통과 함께함에 대한 성찰』 나무연필, 2018)

어진 환경에 따라 유대인을 ‘더 잘’ 죽이고 ‘더 많이’ 죽이기 위해 스스로의 행동을 연마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이히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삼았던 ‘악의 평범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너무나 많았다.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역사교육에서는 폭력을 조장하는 구조와 더불어 개인 선택에 의한 행위에 주목한다. 인간은 구조에 의해서만 지배되지 않으며, 명령이 없이도 잔혹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책상에서 유대인 강제 수용소의 집단학살을 ‘최종 해결책’이라는 이름으로 승인한 사람들 뿐 아니라, 수용소로 가는 기차에 유대인을 사냥해 집어넣은 말단 군인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5·18도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나’라는 질문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당시 광주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위치와 신분에 따른 행위를 구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가 아닌 ‘옳은가? 그른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태도는 시민들이 사회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해갈 때 가장 중요하다. 명령을 내린 사람을 찾는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함께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 가해자였는지?’를 따져보고, 또 그 이후 그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개인의 ‘선택’이 가능했음을 알게 하는 것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는 상황을 막는 최선의 방책이다.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도 없었지만, 법적인 ‘책임자 처벌’로만 끝나지 않고 직접 행위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역사적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피해자-방관자-구조자의 다양한 삶을 조명해보는 일도 중요하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를 살피는 일은 인간이 악인과 선인으로만 분류되지 않음과 삶이 하나의 원칙으로만 운영될 수 없음을 알게 한다. 이는 (자신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공동체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지름길이 된다.⁸⁾ 이것은 시민이 사회를 재구성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과 방향이 무엇인지 가늠하는 바탕이 되고,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가능성을 예측하여 ‘책임자’가 아닌 시민 ‘개개인’ 현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⁹⁾

4. 보편적 관점으로 5·18 다시 보기

올해 초 방문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유네스코 기록물로 등재된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을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필리핀, 아르헨티나, 폴란드 등 세계의 반독재

7) 후지이 다케시, 『물에 빠진 개는 처라』, 『무명의 말들』, 2018.

8) ‘악의 본질적 구성요소는 자신의 죄나 불완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드는 점이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악을 의식하는 동시에 그 의식을 피하고자 결사적으로 노력한다. 악은 죄책감의 결손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회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그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자신의 양심을 직시하는 고통, 자신의 죄성과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고통이다.’ (스캇팩, 『거짓의 사람들』, 비전과리더십, 2018)

9) ‘폭력의 행위자들은 수동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가해자들로 형성되고 또 재형성되는 과정을 거쳐 집단적인 정치적 사회화를 통해 파괴력을 증대한다. 그렇기에 근대 관료제가 악의 평범성 문제보다 지배 체제와 폭력기구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능동적으로 펼쳐는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통한 과격화 과정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동기, 『아렌트는 아이히만에 속았다 - ‘악의 평범성’을 넘어』 『현대사 몽타주』 2018)

투쟁 기록물과 함께 전시해둔 방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세계 각지에서 있었던 민주주의의 현장이 역사적 맥락과 의의를 가지고 되살아나고, 세계시민의 연대감이 형성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중 하나가 누구든 폭력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공화정의 원칙을 삶에서 실현하는 일이다. 1980년의 5·18이 그러한 원칙과 가치를 시민들의 온몸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면, 2019년의 5·18은 5·18의 정신을 배운 우리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연대하여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발전시켜가는 것을 지향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의 역사에서는 3.1운동부터 해방 후의 4.3 - 4.19 - 5·18 - 6.10 - 4.16 -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맥락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어느 특정집단, 특정지역, 특정신분만 참여하지 않았고,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시대에 그 역할을 다하였다. 이 땅의 우리에게 자랑스럽게도 저 일련의 과정 중 내가 직접 겪었거나 동시대의 관찰자였던 사건이 한 둘은 있다.

특히 희생이 컸고 잔혹했던 광주이기에 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았지만, 당시 광주 사람들을 ‘조상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아이들에게 5·18은 자신의 것으로 삼기엔 너무 먼 이야기다. ‘세월호 세대’라고 불리는 이 아이들에게는 ‘4.16 참사’와 ‘촛불혁명’이 자신들의 민주주의 사(史)다. 광주 역시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설명되어야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진도 푸른 바다 곁에 걸린 엄마들의 소통처럼.



또 하나, 5·18 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해방공동체’에 대한 기억이다. 5·18의 광주 해방공동체는 그럴 수 없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했다. 큰 고통과 희생을 치른 도시에 피어나 ‘주먹밥’으로 상징되는 이 공동체는 광주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현신이었다.

그러나 광주의 ‘주먹밥 해방공동체’에도 특수성과 보편성이 함께 깃들여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형성되는 공동체는 인간의 본성에 기반한 것임이 재난사회학자들의 연구결과다. ‘재난공동체’의 사례는 샌프란시스코와 멕시코시티의 대지진 현장, 필리핀의 국가경제 붕괴, 뉴욕의 911,

뉴올리언즈의 대홍수 현장에서 나타났고, 이외의 다양한 지역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인간이 지닌 ‘착한 본성 - 시민적 기질’은 특별한(처참한) 상황을 만나 꽃피어나곤 한다.¹⁰⁾ 천국의 문이 지옥 안에 있는 것이다.

특수성과 보편성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효과가 달라질 터인데, 광주 해방공동체는 ‘시민적 기질’이 모든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광주 안팎의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가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가졌음을 깨닫고 앞으로의 닦칠 어떤 상황에서 시민의 책무성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5. 여성과 노동자와 어린이와 소수자의 5·18로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주어진 민주주의의 과제는 다수결을 넘어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것이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작은 목소리로 웅얼대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밝은 빛 속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다. 5·18 또한 그 발전에 함께 하면 싶다.

어느 세대까지는 ‘광주’하면 느껴지는 감정이 있다. 민주주의의 고향,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풍찬 삶 뒤에 돌아가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곳, 고통 받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고통의 연대. 이한열과 백남기와 박종태가 잠든 곳이 광주다.

이제 광주의 품은 더 넓어져야 한다. ‘Me Too’와 광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성소수자들의 외침에 5·18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나? 다문화 아이들이 채워가는 교실에서 5·18의 무엇을 이야기할까? 대구의 교실에서 5·18을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시작할까? 이런 다양하고 다채로운 고민과 질문이 광주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내가 하께라~. 글고 쌤도 살살해. 나도 내가 해분 성격인디 나이 들수록 안 되겠어. 같이 해야제.”¹¹⁾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에서 펴낸 책 『사람꽃피다』는 세월호 참사의 상주를 자처한 광주 사람들과 광주 곁의 사람들이 3년 동안 희생자와 유가족 곁에서 마음을 나눈 후 서로를 인터뷰하여 엮었다. 아픔을 아는 사람들은 남들의 아픔 또한 오래도록 깊이 기억할 수 있다. 광주의 넓어진 품은 또 한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것이다.

6. 강변하지 않고 스며든다는 것

몇 년 전부터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우리 교육의 목표인 민주시민교육이 자칫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까 하는 우려에 좋은 대답이 될 교육 원칙이다.

10) 레베카 솔닛, 『이 폐허를 응시하라』, 펜타그램, 2017.

11) 지정남, 『위로할 때와 싸울 때를 아는 사람 김옥진』, 『사람꽃피다』(광주시민상주100인), 전라도닷컴, 2016.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3가지 원칙(벨링, 「보이텔스바흐식 합의? 전문가 대화의 정리」)¹²⁾

1. 강압금지. 교사가 자신이 원하는 견해를 - 어떤 방식으로든 - 학생이 받아들일도록 강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의 자립적인 판단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3. 학생은 정치 상황과 자신의 고유한 이익 상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조례 제6797호, 2018.1.4.)를 제정하고 학교교육에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제4조(기본원칙)

1. 대한민국헌법에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위의 교육원칙이 단순 방법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업의 내용과 내러티브를 선정하고 수업방법과 흐름을 정할 때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지, 모든 수업에서 찬반을 나누어 토론과 논쟁을 붙이려는 이야기가 아니다. 수업의 내용에 다양한 견해가 반영되어야 하고 논쟁적인 주제에서 교사가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 가르치거나 일방적 자료만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은 자신의 입장과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해야 한다. 논쟁을 유발할 목적으로 던진 질문이 오히려 아이들의 입과 귀를 막고 교사의 일방적 시각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기에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광주 5·18 답사를 마치고 무거워진 마음을 다독이고 서로 나누기 위해 마련한 시간들. 왼쪽은 서로 연결된 권력구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몸짓으로 경험해보는 장면. 오른쪽은 광주답사의 느낌을 나누고 베트남 팜티호아 할머니와 광주 5·18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12) 이동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등장과 수용 그리고 논쟁」, 『보이텔스바흐합의와 민주시민교육』 북멘토, 2018.

얼마 전 5·18에 대한 망언을 저지른 한 의원이 자신의 모교 학생회로부터 공개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그 공개 성명서를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한 그 학교 학생들의 태도였다. 역사인식 박약과 페미니즘에 대한 몰이해를 이유로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현대사 교육의 부재와 혐오에 대한 무대책이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성명서를 철회한 학생회에 대해 한쪽에선 비난이 한쪽에선 지지가 넘쳐났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로 어수선한 그때, 그 학교에서 열린 베트남 전쟁의 전시 성폭력 관련 세미나에는 대형 강의실의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한다. 그리고 몇 주 후, 그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서가 1,000명이 넘는 동문과 재학생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그 성명서에는 후배들의 결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더 깊은 고민과 판단을 경험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내가 학교에 있다면 이 일련의 과정을 두고 5·18 수업을 하고 싶었다.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며, 강변하지 않고 스며든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았다.

과거의 사실만을 현실의 맥락에서 따로 떼어내고 국가가 인정한 하나의 이야기만을 담아 가르치던 암기식 역사교육의 시절이 있었다. 결론과 의의까지 모두 가르쳐주는 역사 교과서로는 민주 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 민주시민이란, 자신의 상황과 이익을 제대로 파악하고, 다양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따져보며,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내려보는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내렸던 결정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가까이 살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면서 서로 연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5·18교육도 그런 과정을 새롭게 구성해냈으면 한다.

사실, ‘스며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기에 아직도 학교는 우리에게 많은 인내심을 요구한다. 교실에서는 물론 교무실에서도 과거로 회귀하려는 역사부정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역사부정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의아한 경우가 많지만,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비틀어진 욕구가 무엇인지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은 필요하다. 특히 학생의 경우에는 무조건 비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위의 일련의 ‘스며드는’ 과정과 동료학생들과의 경청 토론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좋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중이니까.

7.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억

<기록 기억: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다 듣지 못한 말들> 전시회에서 최찬숙 작가의 영상작품 <밋찌나>를 만났다. 위안소가 운영되었던 사진과 기록은 남아있으나 ‘위안부’ 20명 중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한 버마 미치나의 기억을 세 명의 젊은 여성의 입을 통해 재현한 작품이다. 강물에 일렁이던 달빛, 처음 들어보는 비릿한 소리, 폭탄을 터뜨려 물고기를 잡는 일본군의 모습을 조용히 기억하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스러운 절규만큼 아프게 가슴을 베어냈다.



<밋찌나의 장면들>

철두철미한 역사 연구, 그에 바탕한 기억의 재구성과 예술의 결합은, 당사자의 입을 통한 증언이 아니어도 역사 속으로 단번에 들어가 함께 고통을 느끼고 또 다시 빠져나와 내 삶을 돌아보게 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고통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이다. 그러나 그 고통이 길이 되려면 공동체는 그 고통의 원인을 해부하고 사회적 고통을 사회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¹³⁾ 부당한 죽음 뒤에 놓여진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것과 함께 사회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회적 의례가 필요하다. 그때의 기억은 당사자만의 것도 고통 받는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것도 아니다.¹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기억 문제이며, 그 기억을 통해 이 사회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구상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 사회적 기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모든 시민(청소년까지 포함한)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1980년 광주를 직접 겪은 사람은 물론, 책과 영상을 통해 배운 우리들, 5·18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 외면하고 싶은 우리들도 참여해야 한다. 함께 모여 자신의 기억과 삶을 이야기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이야기까지를 담은 추모의 형식과 공간 구성, 교육프로그램을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5·18이 과거 그날에 딱 멈춰선 역사가 아니라 미래까지 답는 역사가 되는 길이고, ‘아픔이 길이 되는’ 방법이다.



〈발포 직후 거리에 흩어진 신발들을 모티브로 한 작품. 역사적 사건의 재현과 예술적 변형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민주시민교육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해볼 주제다.〉

13) 김승섭, 『사회적 고통을 사회적으로 치유하려면』, 『아픔이 길이 되려면』, 동아시아, 2017.

14) ‘우리에게 필요한 기념과 위령은 거대한 위령탑과 추모공원을 동반한 ‘양민’성의 부각이 아니라 국가주의를 넘어서 ‘비공식적 역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수많은 기억들을 자유롭게 추념하는 것이다. ... 자신의 죽음만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또다른 죽음의 마이너리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기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며,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된 국가주의 기념방식을 지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용석,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 산지니, 2018)

민주주의는 언제나 갱신된다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회의 근간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마저 부정하고 폄훼한다. 또 민주주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다수를 공격하며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강변하기도 한다. 민주주의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는데, 그들은 그 선을 너무나 가볍게, 자주 넘는다. 이는 보수화되는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역사부정의 원인을 찾는 탐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패배자로 남겨질까 두려워 다수의 적을 공격하는 것일 수도, 현재의 나의 변절을 덮기 위한 것일 수도, 어쩌면 지금까지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함으로써 지나친 죄책감과 그에 대한 방어기제를 자극했던 우리 역사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힘겨운 투쟁의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된 ‘민주주의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치적 목적에 의해 자주 넘어서고, 그것을 이용해 세력을 규합해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은 응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흔이 넘는 나치 부역자를 처벌하는 독일처럼은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시민적 권리를 이용해 다른 시민 다수의 권리와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다. 물론 사회공론화와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한 규제라면 더 좋겠으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등 선출직 권력자들이 자행하는 비상식적 혐오와 증오발언은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부정을 법으로 금지하고자 할 때 고려할 점이 많다. 법은 대상이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행동과 그 결과만을 가늠한다. 다수가 만든 법에 의해 고통 받게 될 ‘선의의’ 소수자는 없을까? 그 법의 빈틈으로 비켜간 자들의 행동이 더 강화되는 부작용은 없을까? 배제를 외치는 자들을 배제로 응징하는 것은 타당한 일일까? 입법 이전에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나 많고, 이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천천히 다듬어가야 할 일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기억 속의 5·18은 더욱 단단하고 풍부한 민주주의의 역사로 자리 잡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갱신된다. 그 과정은 늘 앞서거나 뒤서거나 교육과 함께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과정이 곳곳에서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5·18로 가는 새 길을 내는 일이다.

■ 토론문

우리 모두의 5·18을 기억하는 길

- 민주시민을 기르는 5·18교육 -

조철민(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이 발표문은 5.18교육이 민주시민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해 정책과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에 기반한 성실한 사유의 과정을 담아낸 소중한 결과물이라 여겨집니다. 글쓴이의 말처럼 사유(思惟)를 통해 5.18 교육이 사유(私有)화, 즉 개별 피해자나 광주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라 생각합니다. 본래 토론자의 역할은 발표문에 대한 비평을 통해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발표문의 의미와 내용에 깊이 공감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민주시민교육자로서 향후 이 발표문을 계기로 활성화될 '5.18교육의 민주시민교육 되기'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이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발표문의 초반부에 글쓴이의 사유의 시작이자 결과가 요약돼 있는데, 바로 '그날 광주'를 '지금 여기'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카(E. H. Carr)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관련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건과 오늘의 경험 사이에 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끊임 없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분주한, 혹은 권태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5.18이라는 과거를 떠올릴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5.18을 매개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상황—무언가 불의한 일에 직면했을 때,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고 느낄 때, 혹은 동료 시민과 무언가를 도모해 보려 할 때—을 가끔씩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에 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없다면, 그 상황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든 평생교육의 현장에서든 사람들이 역사적 사건과 나와 관계, 민주주의와 나의 삶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하는 기회가 도처에 마련돼 있어야 하겠습니다. 글쓴이는 '그날 광주'를 '지금 여기'로 가져오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민주시민교육을 구성하는 의미요소인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3가지 주제어에 기대어 토론을 펼쳐보기로 합니다.

첫째, '민주'는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이자 그것이 다루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글쓴이는 먼저 5.18을 보편적인 관점으로 다시 볼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5.18이 단순히 어떤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도도히 흐르는 민주주의의 역사의 한 결절점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생과 사를 넘나드는 혼란과 비극의 상황 속에서도 피어나는 해방공동체의 경험을 매개로 5.18의 경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공통적인 시민적 기

질을 이끌어 내자고 말합니다. 저 역시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어떻게’의 문제에 직면해서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역사적 흐름, 그리고 시민적 기질은 중요한 개념임에도, 학습자들은 늘 이것을 당위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물론 교육자의 능력의 부족 때문이겠지만. 글쓴이는 이것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연대의 단초로서 ‘동등한 시민성’을 이야기 합니다. 동료 시민, 동료 인간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연대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것 역시 당위와 도덕의 언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고민하게 됩니다. 최근 저의 잠정적인 결론은 민주주의를 너무 숭고하고 도덕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측면을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학자 샤프슈나이더(E. E. Schattschneider)는 “민주주의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목적이고 민주주의는 수단의 성격을 지닌다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멀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고통에 대한 공감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함께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이자, 교육을 통해 시민으로서 삶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글쓴이는 ‘개인’의 행위와 선택을 재조명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보통 커다란 역사적 사건은 너무나 지배적으로 규정적으로 다가와 그 속의 사람들은 단지 피해자로서만 그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말처럼 그날 그 현장에 있던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과 행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생각과 행동은 각자가 지닌 다양한 정체성에 기반하고 있을 것입니다. 글쓴이는 이에 관해 ‘여성과 노동자와 어린이와 소수자의 5·18’이라는 주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역시 글쓴이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최근 이런 고민과 개선의 노력의 귀결점에 관해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글쓴이가 이야기 한 보편성과 연결해보면, 결국 다양한 정체성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연결하는 어떤 공통성, 즉 공유된 ‘시민상’(市民像)에 관한 생각입니다. 모든 교육은 그것이 지향하는 인재상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해왔지만,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시민상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빈약했다고 보여집니다. 독일의 비판적 시민, 영국의 적극적 시민, 프랑스의 공화국 시민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공유된 시민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셋째, ‘교육’은 시민이 민주주의에 관해 접하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장(場)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글쓴이는 ‘강변하지 않고 스며드는’교육에 관한 고민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이런 고민에 많은 교육자들이 공감하면서 이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여전히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수업을 참여형으로 이끌어 가고, 토론이 존재하도록 하며, 학습자가 자기 상황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매우 개별화 된 것, 기능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되돌아 보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폭력예방 교육이 신설되는 관행이나, 교육은 학습자들이 모여서 좋은 교육자의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흩어지며, 배운 것을

되새기고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몫으로 맡겨지는 경향입니다. 강변하지 않고 스며드는 교육은 교실을 넘어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경험과 연결될 때 가능해 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 글쓴이는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억’을 제안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교실에서 배운 것을 다양한 삶의 공간에서 적용해보고, 동료 시민들과 부딪치기도 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이끌어내기도 하는 실천과 매우 연관이 깊은 교육이라는 점을 늘 재확인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민주적인 생각과 실천을 일상적으로 해 나갈 시민사회라는 생태계의 조성 없이는 늘 반쪽으로 존재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하나의 교육적 정책·실천을 넘어, 민주적인 시민을 육성하는 ‘인적자원개발’—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 아니지만, 다른 언어를 찾지 못해서 사용한—과 ‘사회만들기’라는 좀 더 폭넓은 구상으로 나아가는 관점을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 학술교류포럼]

국가폭력의 청산과 정의 5·18과 전지구적 차원의 이행기정의

교육을 통한 기억의 공유와 확산

사회: 이영진(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 발표 1: 백색테러에 대한 기억의 공유와 확산

_양소방(대만 교육부 국민교육국 인권교육지원센터장)

토론: 백색테러에 대한 기억의 공유와 확산

_이기봉(5·18기념재단 사무처장)

■ 발표 2: 기억의 계승과 평화교육의 과제

— 제주 4·3과 사람들 —

_한상희(서귀포 교육청 장학사)

토론: 기억의 계승과 평화교육의 과제

— 제주 4·3과 사람들 —

_정내위(대만 2·28국가기념관 제1처장)

■ 발표 3: 홀로코스트와 독일의 시민교육

_최호근(고려대 사학과 교수)

토론: 5·18민주화운동과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_임광호(첨단고등학교 교사)

백색테러에 대한 기억의 공유와 확산¹⁾

양소방(楊素芳)(교육부 국교서 인권교육자원중심 집행비서
국립타이난 고등학교 공민사회과 교사)

1. 역사, 어떻게 쓸 것인가?

2018년 초 대만이 국민투표 안건 상정과 동의 서명의 문턱을 크게 낮춘 후, 우리는 역사교육과 직결되는 두 안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역사관은 헌법이 정한 규범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 입장에 따라, 12년 국민기본교육 중 역사 교육과정 요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동의 여부」이고 두 번째는 「‘조화는 사회단결 유지에 필수 요소임을 고려하여, ‘촉진전형정의조례’(促進轉型正義條例)’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동의 여부」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투표제도의 운용과 권리 행사는 정상적인 행위다. 일정한 법적 절차에 부합한다면 국민투표 안건은 공민사회의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민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안건은 역사 기억에 대한 대만사회의 팽팽한 대립과 인권교육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²⁾

2018년 말 대만 지방정부 선거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한귀위(韓國瑜) 가오슝(高雄)시 시장 당선인은 경선 기간 ‘100점 경제, 0점 정치’를 제시하고 임기 동안 일체의 정치 집회와 시위를 금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민주적인 발언은 오히려 일각의 항의와 우려만 야기시켰다.

앞의 두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만의 민주주의는 언뜻 견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위기감으로 팽배하다. 대만 학자 장마오구이(張茂桂)가 비교정치연구(Lührmann & Lindberg 2019)를 인용하여 언급한 것을 빌리면, 현재 전 세계 민주화 수준은 퇴보 일로 중으로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러한 민주 정체(政體)가 권위체제로 퇴보하는 과정을 전제화(autocratization) 과정이라 하며, 현재 76개국 이 ‘전제화’ 단계에 놓여 있다. 그리고 과거보다 더 ‘은밀’하고 ‘역전’의 가능성도 작다. ‘전제화’를 이끄는 정치인, 정당, 관료체계는 민주라는 기치 아래, 민주 절차나 그 명의를 통해 선거, 집권세력을 이용, ‘합법적’이고 ‘점진적’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일단, 이 과정이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대만사회도 이미 ‘전제화’ 과정에 들어섰는데 이를 자각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얼마 전 있었던 일화 하나로 이러한 우려를 다시 보여주하고자 한다. 광주에 오기 전, 4월 내내

- 1) ‘백색테러’란 중국국민당이 집권했던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에서 벌인 고압적인 통치를 일컫는 말이다. 1949년 5월 20일부터 1987년 7월 14일까지 계엄령을 선포했다. 본 글의 제목은 ‘백색테러에 대한 기억의 공유와 확산’이지만, 교육과정 내용은 1950년대 본교 학생의 정치사건 예시가 주를 이룬다.
- 2) 두 국민투표 안건은 각각 2018년 4월 9일, 2018년 4월 10일 상정되었으며 후에 자료 보정을 하지 않아 주관부처가 반려하였다.

학교가 대학 입학 신청으로 분주했다. 그때 내가 지도하던 학생 두 명이 나에게 상담을 청해 왔다. 그들은 내가 진행한 ‘작은 인권여행 행사’에 참가하여 불의 유적지(不義遺址, 백색테러기간 인권침해가 일어났던 곳) 몇 곳을 탐방한 적이 있다. 학생들은 인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자료 입증이 필요했지만, 이런 행동이 자칫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면접에서도 전형정의(轉型正義, 대만판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할지, 혹시 이에 반대하는 교수가 나오면 어떻게 할지 하는 걱정으로 좌불안석이었다.

대만이 권위체제를 벗어난 지 30여 년이 되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인권박해의 어두운 역사를 겪지도 않았던 두 학생은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으로 자아 검열을 하고 있었다. 몸은 민주 사회에 있지만, 사실 권위의 명령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던 것이다.

위의 국민투표 안건을 좀 더 살펴보자. 첫 번째 안건 제안자는 국민교육에서 역사교육은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정확한 역사관을 함양해야 한다는 ‘중화민족주의사관’을 주장하면서 ‘대만사관’을 변형하여 취하는 것은 엄중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안건 제안자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불의(不義) 행위에 대한 사회 고발을 부인하면서, 광주사태로 치면, 이는 마치 그 당시의 역사 사실을 부인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러한 주장들은 두 가지 중대 과제로 귀결된다. 역사교육의 목적과 당대 사회에서 역사 진실이 갖는 의미(어떠한 이점이 있나?)가 그것이다.

2. 교내 백색테러의 역사: 타이난 고등학교 정치 수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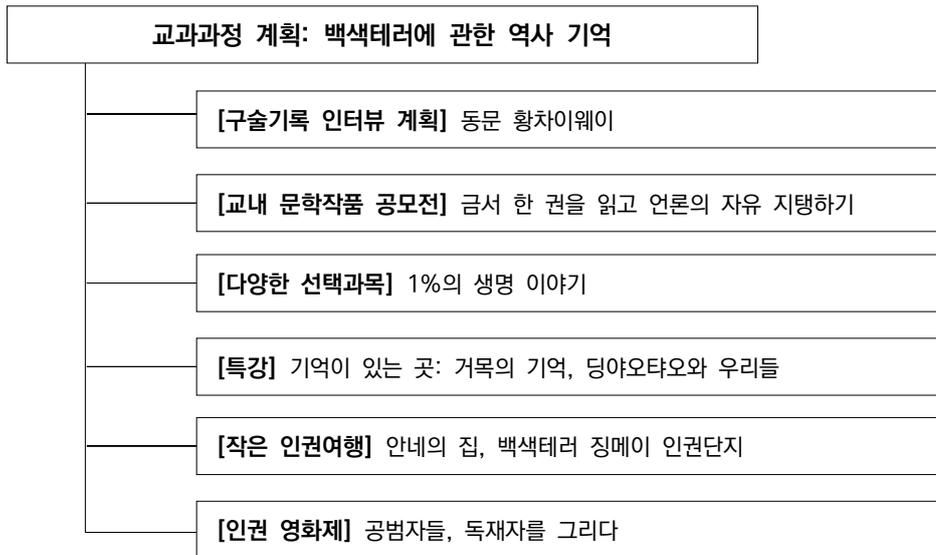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역사책에 나오는 수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정작 현실 생활에서 역사는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이다. 논란이 있는 역사 탐구는 분쟁을 일으키고 전진에 방해가 된다고 비치기 쉽다. 사실 일부 역사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어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지만, 사회 인식이 낮고 교과서에도 몇 단락 언급하지 않아, 전 세대 젊은 층의 기억 단절을 초래하기도 한다. 백색테러에 관한 역사가 바로 그러하다.

교내로 눈을 돌려보자. 백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타이난 고등학교는 국가에 헌신한 우수 현대 여성을 수 없이 키워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에 정권 교체를 겪으면서 정치 수난을 당한 동문의 이야기가 학교 역사 편찬에서 빠지게 되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백색테러 정치 수난자인 천명허(陳孟和)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없어진 역사를 다시 세우려면, 먼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공간이 있어야 이야기를 그 속에 담아 풀어낼 수 있다.’ 따라서 잊힌 것들이나 인물 관련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학생들에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온 생명 이야기를 알게 하는 것에서부터 소홀했던 학교 역사를 다시 세워볼 수 있다.

그리하여 고3 선택과목에 ‘1%의 생명 이야기’를 개설했다. 과정 개발자는 ‘타이난 고등학교 역사’와 ‘정치 수난자’ 그리고 ‘역사 공간’이란 다중 요소를 통해, 1950년대를 경험하고 백색테러 통치 시기를 목도한 세 명의 동문 차이루이웨이(蔡瑞月), 덩야오타오(丁窈窕), 황차이웨이(黃采薇)의 생명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했다. 다른 세대의 동문은 문헌과 사료, 역사 공간, 정치문서에서 이들을 접하며, 후배의 시각에서 수난을 겪은 동문의 교내 청춘의 흔적과 애정, 수난 이전의 사회참여,

정부 문서에서 정의되고 논죄 되고 있는 내용, 옥중 생활 등을 추적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백색테러 당시 국가폭력의 행태와 전형정의에 함의된 인권 가치도 탐구해 나간다.

교과과정 개설 외에도 더 많은 학생이 관련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비공식 교육과정으로 교사들과 백색테러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내 문학작품 공모전(올해 주제: ‘금서 한 권을 읽고 언론의 자유 지탱하기’)의 정기적인 개최, 동문 구술기록 인터뷰 계획(텐마마(田媽媽, 보통의 어머니들을 가리킴), 황차이웨이), 인권영화제 상영과 특강 등을 포함한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진행했으며 교육과정 항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과정으로 백색테러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까? 동문 황차이웨이의 구술기록 인터뷰는 특수요원 관련 정보나 휘사오다오(火燒島) 사상개조 등의 세세한 이야기를 알게 해 주었다. 타이난 고등학교란 말에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던 선배에게서 백색테러 때의 합법적인 국가 폭력을 목도하고 그녀의 가장 큰 상처는 정치 수난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거대한 영향을 끼친 백색테러의 역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아들이 정치에 대한 자신의 이중인격을 언급한 것도 인상 깊었다. 이는 학생들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³⁾

3) 인터뷰 일부 발췌 『물론 옛날에는 왜 부모님이 간첩야 하는지 몹시 화가 났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더 거시적인 세계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의 국제 정세나 분위기를 보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그때는 냉전이 절정기에 있었고..., 대만에 붙어 닳친 백색테러에서 그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갈 곳도 없는데 당연히 먼저 이를 공고히 하는 것이 맞다. 물론 의심 가는 자부터 찾아야 한다. 그가 상하이나 베이징, 그중에서도 특히 베이징에 있었기 때문이다. 스파이가 많았고 그의 장군조차 스파이였으니 그가 먼저... 발본색원보다는 먼저 의심스러운 자들을 견벽청야 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설마 대통령 직접선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불가능하다. 물론 수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이 시대에 희생당한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난세에 희생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이 역사의 세찬 흐름에 쓸려가서 운이 없었던 것이다』 황차이웨이의 아들은 인터뷰에서 이따금 인권 유린에 탄식하다가도, 다시 통치자의 입장에서 변론하며 자신의 정치적인 이중인격을 자조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었다는 찬성의 의견도 내렸고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우며 과연 이렇게 오랫동안 계엄 체제를 유지할 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학생들은 역사 교과서의 ‘금서 정책’을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교내 ‘금서 한 권을 읽고 언론의 자유 지탱하기’ 문학 공모전을 개최했다. 책을 읽고 당시 문화속박의 답답한 시대를 탐구하면서, 시원하게 뱉을 수도, 마음껏 노래할 수도, 자기 생각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었던 황당한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금지’가 있었는지 알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도 글쓰기를 통해, 현대 민주사회가 언론자유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음을 의식하게 된다. 과거의 금서 한 권을 읽으면 자유 가치가 보이고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과거의 역사와 현대의 지식 산물이 연결되어 새로이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게 된다.

3. 역사교육에서 민주인권의 꽃을 피우다

대만 교육부는 새로운 교과과정 요강 중 중대 의제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인권교육자원중심(Human Rights Education Resources Center for Senior High School)’을 특별 설치했다. 올해(2019년) 2월부터는 국립타이난 고등학교 주관으로 인권 교육 교사를 양성하고 인권 의제가 과목별 교수자원에 융합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대만사회의 주요 인권 의제 가운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과거 정부의 불의 역사(不義歷史), 그리고 정치논쟁이 뜨거운 ‘전형정의’를 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 요강에 맨 처음 편입시키고 주제 중심 선택과목으로 선정하기도 했다.⁴⁾ 교사의 역량 증진과 교수자원의 제공은 교육과정에서 든든한 기반이 된다. 그래서 이는 본 센터의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다. 센터는 학계, 사회교육 기관, NGO 등과 결합하여 각종 계획을 적극적으로 기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1) 학생 중심의 인권교육 모듈을 구축, 인권 교육과정을 설계·실시하는데 근간으로 삼고, 2) 박물관과 학교 간 협력 방안을 추진하여 조만간 국가 인권박물관과 백색테러 캠퍼스 지도를 발표하고 학교별 교사 커뮤니티 구축으로 백색테러 당시 인권 수난자의 이야기를 확산해 나가며, 3) 국제교류를 강화하여 각국의 전형정의 관련 인권교육 현황을 참고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요즘 ‘진실을 알 권리(the right to the truth)’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엔총회에서는 피해자의 기억 보존과 진실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3월 24일을 ‘인권 침해와 관련된 진실을 알 권리와 희생자의 존엄을 위한 날’로 지정하고 있다. 제3의 민주화 물결에서 비롯된 이러한 추세는 과거 정부의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한 불의 역사에 책임을 묻고 있다. 대만은 2017년 12월 ‘촉진전형정의조례’를 제정하고 국가 인권박물관을 공식 설립하여, 국가의 적절한 자원 분배로 전형정의사업의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개념과 역사 해석이 대만의 정치경제와 중국에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이에 대한 인식을 두고 대만사회 안에서도 이견과 간극이 크다.

서두에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역사, 어떻게 쓸 것인가?’ 논쟁이 있는 역사에 임하는

가 있었냐는 의견도 내놨다.

- 4) 역사 선택과목 중 ‘집단·성별과 국가의 역사’를 3학점으로 하고 그 중 ‘현대 국가전쟁과 국가폭력’을 주제로 ‘전쟁과 역사의 상처’, ‘국가폭력과 전형정의’를 토론한다. 과목과 분야를 넘나드는 토론을 유도하고 당대 세계와 관련된 중대 역사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독려한다.

교육관계자의 태도와 전문성은 대만사회의 현재와 미래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 역사교육은 공민 교육에 쓰여야 한다. 백색테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피해자가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당시 사람들은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 이 인권 박해의 역사가 대만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등은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이다. 우리는 교육으로 끊임없이 이를 탐구하고 사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의의 능력을 배양하고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여 궁극적으로 ‘전제화’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다.

白色恐怖記憶的分享與擴散¹⁾

楊素芳(教育部國教署人權教育資源中心 執行秘書 國立台南女中 公民與社會科 教師)

一、歷史之用，何用？

自2018年初我國放寬公民投票的提案及連署門檻以來，有兩項與歷史教育直接相關的提案值得關注，一項是「您是否同意，基於歷史史觀不應違反憲法所規範的國家立場，目前十二年國教的歷史課綱應予廢止」；另一項是「您是否同意，基於和諧是維持社會團結的應有價值，《促進轉型正義條例》應予廢止」。公投制度的運作與權利行使，本為民主國家的常態，只要符合一定法定程序而成立的公投案，應透過公民社會理性對話討論後由公民自主決定。雖然如此，但這兩項提案內容，仍值得我們深思，它們反映出目前臺灣社會對於歷史記憶存在嚴重對立的社會觀點以及人權教育的迫切性。²⁾

接著，在2018年底我國的地方政府選舉中，備受矚目的高雄市市長當選人韓國瑜先生，在競選期間提出「經濟一百分、政治零分」的訴求，強調他的任內將禁止一切政治性的集會遊行，然而如此反民主的宣稱，卻僅引起少數人的抗議與擔憂。

透過上述兩個例子，我想指出一個現象，臺灣的民主看似穩固，但其實充滿危機。借用國內學者張茂桂引述自一份最近的比較政治研究(Lührmann & Lindberg 2019)指出，世界的民主程度正在滑落，且可能還會再加速。作者們將這種從民主政體退化為威權體制的過程，稱為「專制化」(autocratization)過程，目前正處於這波「專制化」階段的國家有76個，其特色在於其發生的過程比過去更為「隱匿」而且很少「逆轉」；帶動「專制化」的政治人物、政黨、官僚體系，經常打者民主旗幟，利用民主程序或名義，透過選舉、執政權力，「合法」、「漸進」地進行，但他們的作為卻是在對民主進行實質的破壞，而這個過程一旦開始後，就很少有能回頭的案例。令人不安的是，臺灣社會是否也正步入「專制化」過程，而未能自覺警惕？

再分享一個最近所遇到的例子，來印證我的擔憂。來到光州之前，整個四月份是各高中申請大學入學推甄活動的忙碌時節。其中我所指導的兩位學生特地跟我約談，他們是曾經參加我所主辦的「人權小旅行活動」到訪過幾處不義遺址的學生，一方面他們需要資料證明自己積極接觸人權議題，但一方面又擔心這樣會為自己帶來負面影響，他們忐忑不安，不知道面試時是否要表明自己對轉型正義的立場，也擔心萬一遇到不認同這個議題的教授，該怎麼辦？

臺灣走出威權體制三十餘年，但回到教育現場，即便不曾經歷過那段人權迫害的黑歷史，這兩位學生依然擔心害怕而自我思想檢查；雖然身處民主社會，威權的幽靈其實未曾遠離。

若進一步探究兩項公投提案內容，第一項提案者主張，國民教育階段的歷史教育應發展民族精神培養正確史觀，也就是「中華民族主義史觀」，若改採「臺灣史觀」就有嚴重違反憲法之虞；第二項提案者，則否認社會指控過去威權時期的各種不義行為，如果將此提案放在光州的脈絡下理解，等同於否認光州

1) 「白色恐怖」係指中國國民黨主政的中華民國政府在臺灣進行的高壓統治，自1949年5月20日起至1987年7月14日止宣告戒嚴之期間。本文雖「白色恐怖記憶的分享與擴散」為名，然課程內容多以1950年代本校校友的政治案件為例。

2) 這兩項公投提案分別於2018/4/9及2018/4/10提出，後因未能補正資料而遭主管機關駁回。

事件的歷史事實與迴避迫害者的歷史責任。總結來說，這裡涉及兩個嚴肅的課題，包括歷史教育的目的為何，以及歷史真相對當代社會的意義(有何益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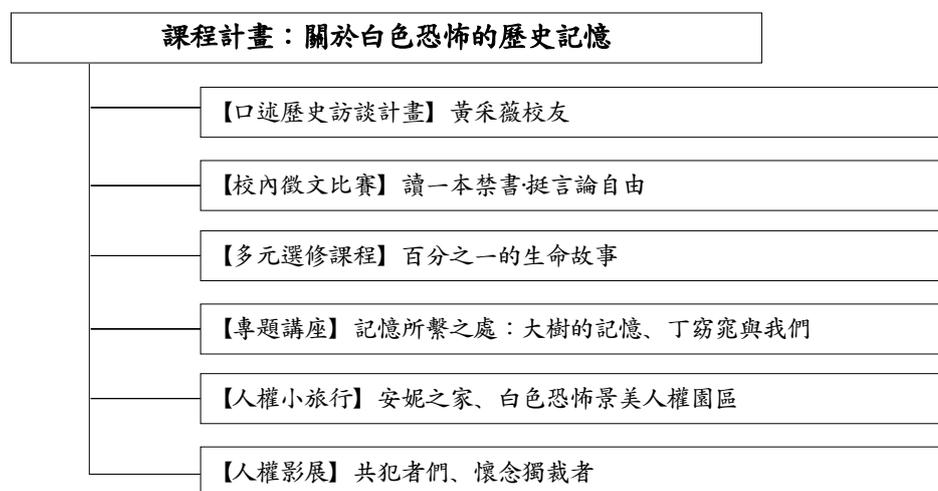
二、面向校園的白色恐怖歷史：台南女中的政治受難者圖像

從小到大，我們在歷史課堂上學習了很多很多書上的歷史知識，然而回到現實的生活場域，歷史就是過去的事，無法改變；而探究有爭議的歷史，很容易被視為引發爭端或向前邁進的阻礙。事實上有些歷史還「很新」，也存在於許多人的記憶當中，但是社會上對此卻所知不多，教科書也僅僅三兩段落帶過，導致整個世代的年輕人記憶斷層。關於白色恐怖的歷史，便是如此。

回到校園，具有百年歷史以上的台南女中，培育出許多優秀而有貢獻於家國的現代女性，然而，經歷時代巨變下的政權轉換，遭逢政治受難的校友故事同樣地也在校史編撰中缺席，似乎不曾發生過一樣。白色恐怖政治受難者陳孟和先生曾說：「要重建被抹滅的歷史，要先把空間建置起來，有了空間，故事才能填進去詮釋。」因此，要如何重建校園內被忽視的校史，或許我們可以做的就是將被遺忘的、關於人的故事填進去說出來，讓學生從認識這些走過黑暗幽谷的生命故事開始。

於是，有了一門開設在高三選修課程「百分之一的生命故事」。課程設計者想透過「台南女中校史」、「政治受難者」與「歷史空間」的多重元素，藉由三位經歷一九五〇大抓補年代的校友學姊(蔡瑞月、丁窈窕、黃采薇)同時也是白色恐怖統治時期見證者的生命故事，讓不同世代的學姊妹，在文本史料、在歷史空間、在政治檔案中交會，從學姊的視角追尋受難學姊們在校園裡的青春足跡與愛情、遭難前的社會參與、官方檔案中如何被定義被論罪、獄中生活等等；依此延伸進一步探究白色恐怖時期的國家暴力運作型態與追求轉型正義所蘊含的人權價值。

除了開設課程之外，與校內老師也透過非正式課程，辦理與白色恐怖相關的活動，讓更多學生有機會接觸到這段歷史，包括定期舉辦校內徵文比賽(今年主題：「讀一本禁書，挺言論自由」)、校友口述歷史訪談計畫(田媽媽、黃采薇)、辦理人權影展與專題講座等，請參考下圖所示，為2018/2~2019/1期間實施的課程項目。



這些課程的實施，學生能更瞭解白色恐怖歷史嗎？在校友黃采薇的口述訪談中，我們聽聞特務抓補問訊、火燒島思想改造等細節，透過眼前這位一提到台南女中就笑容滿面的前輩，見證白恐時代的國家合法暴力，也體會到她最深的傷痛並非政治受害，而是這段經歷對其人生的巨大影響；另外，她兒子關於政治人格分裂的論述，也令人印象深刻，而引起學生許多的討論。³⁾

再舉一例，歷史課本上的「禁書政策」，對學生而言是難以想像的，因此我們舉辦校內「讀一本禁書，挺言論自由」徵文活動，透過文本閱讀，鼓勵學生探究那個文化禁錮的沈悶時代，何其荒謬，人們不能暢所欲言、不能盡情歡唱、不能用自己的語言表達所思所想所感，有著許許多多的「查禁」。而學生也透過書寫，意識到現代民主社會雖然保障了人民的言論自由，但關於言論自由的爭論仍然存在。因此閱讀一本過去的禁書，同時也能看見自由價值，如此一來，過去的歷史與現代知識產生連結，被重新思考反省著。

三、從歷史教育生出民主人權之花

我國教育部為因應新課程綱要的重大議題，特別設置「高級中等學校人權教育資源中心(Human Rights Education Resources Center for Senior High School)」，今(2019)年二月開始由國立台南女中承辦，著重於人權教育師資的培訓以及人權議題融入各學科領域教學資源的開發。在臺灣社會關注的各項人權議題中，關於過去政府大規模侵害人權的不義歷史且具高度政治爭議的「轉型正義」，也首度納入高中歷史科課程綱要，成為選修課程的主題單元。⁴⁾而協助教師增能或提供教學資源，作為課程實施的有力支援，即為本中心的重要業務之一。因此，中心將結合學界、社教機構與NGO等資源，積極籌劃推動各項計畫，包括：(一)建立以學生為中心的人權教育課程模組，做為人權教育課程的設計與實施的依據；(二)推動館校合作方案，近期與國家人權館合作，依其公布之白色恐怖校園地圖，協助各校成立教師社群，發展在地白色恐怖時期人權受侵害之故事；(三)加強國際交流，參考各國促進轉型正義的人權教育實施現況。

而近年來「瞭解真相的權利(the right to the truth)」已經逐漸受到國際社會的重視，2010年起聯合國大會更將每年3月24日訂為「瞭解嚴重侵犯人權行為真相的權利和維護受害者尊嚴國際日」，目的在於

3) 摘錄自訪談稿「當然以前會很生氣為什麼爸媽被關，但是我後來覺得說，我們看這種事情是不是要從一個更宏觀的世界觀，來看這個事情發生那時的國際情勢的氛圍是什麼，那時候理論上是冷戰最風聲鶴唳的時候……，來台灣這個白色恐怖，他如果不這樣做的話，妳覺得他應該怎麼做，他沒地方去，他當然要先把這個鞏固住才行，當然先找出可疑分子出來，為他在上海、在北京，尤其在北京，就是因為這個太多匪諜，連他將軍都是 匪諜，那難怪他要先這個…也不要講斬草除根，就是把一些可疑分子先堅壁清野，我覺得這是正常的作法，要不然如果是你們或是我來做，你會怎樣？難道直接總統直選嗎？不可能，當然有很多無辜的人被殺，但是他們就 是被這個時代犧牲掉，我就跟我媽講你們是在亂世被犧牲掉的，很難過、很可惜，但是沒辦法，妳就被這個歷史洪流掃到，倒楣」黃前輩的兒子在接受訪談時，時而感嘆人權遭受踐踏，時而站在統治者立場為其辯論，自嘲自己患了政治人格分裂症。學生對此論述，有人表示贊成認為為了國家安全犧牲少數人是不得已的選擇，也有人表示不能一概而論，質疑有必要維持這麼長時間的戒嚴體制嗎？

4) 歷史的部定選修課程之一「族群、性別與國家的歷史」計有三學分，其中的「現代國家戰爭與國家暴力」主題之下分別討論「戰爭與歷史傷痛」及「國家暴力與轉型正義」兩單元，並鼓勵跨科、跨領域討論、思考與 當代 世界相關的重大歷史議題。

強調保存受害者記憶以及瞭解真相的重要性。這樣的趨勢發展源自於第三波民主化政體轉型的背景，對過去政府大規模侵害人權的不義歷史加以究責。我國在2017年12月制訂《促進轉型正義條例》並正式成立國家人權博物館，開啟了以國家高度與資源挹注來推動轉型正義工程，然而此概念及其歷史詮釋，受到我國國內政治經濟及中國因素的影響，在臺灣社會的認知仍舊存在相當大的歧見鴻溝。

回應本文一開始的提問，「歷史之用，何用？」面對具有爭議的歷史，教育工作者的專業與態度，關乎臺灣社會當前與未來的發展。歷史教育應做為公民教育之用，白色恐怖是如何形成、受害者如何被迫害、當時的人們為什麼不抵抗、這段人權迫害的歷史對臺灣社會造成什麼影響等，這些是歷史遺留給我們的提問，只有不斷的在教育中扣問與思考，才有可能長出民主的能力捍衛人權價值，用以阻擋「專制化」的威脅。

■ 토론문

대만과 한국의 교육 교류활동이 필요하다

이기봉(5·18기념재단 사무처장)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앞서가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대만과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재정권의 수립,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권위주의 체제의 해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의 진통과 민주주의 토양의 허약함, 정치체제의 보수화 및 민주주의의 후퇴 위험 등 상당 부분에서 서로의 역사에 공감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런 경험을 주고받고 있다. 특히 두 나라 내에서 역사의 기억과 역사교육의 목적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이념적 문제에까지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정권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와 불의의 역사는 침묵을 강요당하다가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지면 국가적 이해관계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교묘하게 왜곡되고 부정된다. 이를 방관하고 침묵하면 인권침해는 망각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주어진 환경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마치 인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이 대학입학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과 두려움으로 자아검열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점에서 백색테러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의미가 크다.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폭력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금서읽기, 백색테러를 당한 동문의 구술, 인권영화 상영, 특강 등은 과거 독재정권의 인권탄압 실상을 교과서의 지식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역사교육의 방향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방식은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교육의 발전 방향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홀로코스트 교육도 피해자의 증언, 일기, 기록, 사진, 영상을 통한 교육과 함께 재판 체험, 캠프 프로그램 등으로 나치정권의 대규모 학살을 고발하고 있다. 한국의 5·18교육도 교과서 중심의 독재정권과 쿠데타 세력의 폭력 고발에서 피해자의 증언, 사진, 영상, 체험활동, 참여의 방식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독재정권에 의한 권위주의적이고 폭압적인 통치에 저항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유일한 투쟁이었다면 앞으로는 파편화된 개인을 연결하고 공동체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 민주주의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서로의 관심과 연대 속에서 인권을 보호해나가는 길이다. 공동체와 연결되지 못한 개인의 인권은 너무 쉽게 짓밟힌다.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을 연결하고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실질적 민주주의와 인권보호, 자본의 폭력에 맞서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대만의 한 고등학교의 학교 역사 편찬에서 백색테러가 빠지자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다양한 비공식 교육과정을 만들어 그 내용을 살려낸 경험을 볼 때 논쟁이 있는 역사에 대한 교사와

교육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길을 설명해줄 수 있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질문을 던질 뿐이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대만과 한국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나아가 오늘의 청소년들은 그 세대의 매체와 문화적 양식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국의 교사와 학생의 상호 교류를 통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서로의 역사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해 서로가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한다. 당사자들은 과거의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후의 세대에게는 과거를 기억할 책임이 있다. 대만과 한국의 적극적인 교육교류를 통해 서로의 고통에 공감하고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기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억의 계승과 평화교육의 과제

- 제주 4·3과 사람들 -

한상희(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장학사)

I. 4·3 역사교육의 현주소

국가가 혹은 집단이 저지른 과거의 죄는 다음 세대에 그리고 그 이후 세대에 어떠한 상처와 책임, 과제를 남겨주는가?

최근 대부분의 사회는 역사 서술과 교육에 관련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분쟁을 겪거나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인종이나 국적, 종교, 신념, 정치적 이념에 따른 분열을 겪은 사회에서 더욱 그러하다.¹⁾

과거사 문제 해결이란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차원을 넘어 기억과 반성, 화해와 통합의 노력을 담은 과거 성찰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청산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그리고 과거사를 경험하지 않은 후속 세대들에 대한 가치태도 및 교육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제주 4·3은 분단과 냉전 과정에서 일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됨에 따라 남북으로 분단되고 미·소 간의 갈등인 세계적인 냉전 체제가 본격화될 무렵 발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극심한 인명 피해를 낳았던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탄압과 항쟁, 초토화 작전으로 인한 대수난의 국면이 이어졌다.

특히 1948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전개된 군·경 토벌대의 강경 진압작전 때에는 중산간 마을 대부분이 불타 없어졌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무차별 토벌작전으로 2만 5,000~3만 명의 제주도 민이 희생되었다.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에서 2003년 공식 채택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을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희생이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했고, 특히 희생자 대다수가 비무장 민간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7일 4.3 생존 수형인들이 제기한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 재판 결과는 4.3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4.3이 아직까지도 제주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건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성찰과 교육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하였다.

한편 4·3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앙위원회의 대정부 7대 건의안 채택(2003.3.29.), 4·3 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1) UN 총회(2013).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대한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 조사관의 보고서. p.3.

공포(2013.4.10.), 제주도교육감의 4·3 평화교육 활성화 공약(2014, 2018), 4.3 전국교사 연수²⁾,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4.3 편제³⁾ 등은 4·3 교육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켰다.

21세기 유럽의 역사 교육에 대한 각료회의의 권고안은 역사 연구와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역사 교육이 조작, 거짓 증거, 조작된 통계, 조작된 이미지 등 어떤 사건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건을 감추기 위해 한 사건만 비추는 것, 선전의 목적으로 과거를 왜곡하는 것,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을 만들어내는 과거에 대한 과도하게 민족주의적인 시각,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부인이나 누락을 통해 역사를 오용하도록 권장하거나 허용한다면 이는 여러 근본적 가치들과 법령에 위반된다고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역사 교육은 무엇보다도 모든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장이 되어야 하며, 여러 민족들 간의 화해, 인정, 이해, 상호 신뢰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야 하고, 관용, 상호 이해,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근본적인 가치들을 장려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⁴⁾

즉, 세계사적인 역사교육의 흐름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 짓는 민족주의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4·3 역사교육을 평화와 인권에 바탕을 둔 세계시민교육으로 설정하여 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4·3과 세계시민교육

1. 평화 인권과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일반적으로 평화는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전쟁이 없는 상태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의식과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평화의 개념도 확장되었다. 갈통은 평화의 개념에 대해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와 사회경제적 측면의 구조적 폭력이 없는 ‘적극적 평화’로 나누어 정의했다. 이후 1996년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에서 평화란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거나 폭력의 감소이며 공감, 비폭력, 창조성을 이용하여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개인과 사회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 상황

2) 전국 교사 대상으로 제주4.3평화재단과 공동으로 15시간 직무연수, 연 16회 운영, 2018년부터 시작

3) 현재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제주 4·3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또는 6.25전쟁에 편제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제주 4.3을 대한민국정부에 반기를 든 사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 2017년 12월 2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1차 공청회에서 본 발표자는 제주 4·3이 분단과 냉전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역사 교과서의 4·3의 위치를 해방 이후로 편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올해 7월에 확정된 역사과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어 제주 4·3이 ‘8.15 광복과 해방을 위한 노력’이라는 단원에 편제되었다.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2020년에 학교 현장에 보급되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제주 4·3이 해방 이후 시점에서 다뤄지게 되어 제주 4·3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UN 총회(2013).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대한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 조사관의 보고서.

에 놓였을 때 어떻게 평화적 수단에 의해 그 갈등을 조절할 수 있을지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계시민의식은 보편적인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초국가적인 소속감 또는 연대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모든 지역이 상호의존적이고 서로에게 연계되어 있어서 서로의 영향력이 교차되고 중첩되는 전 지구적 환경이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난제들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사되는 국가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떠난 세계시민이 되려면 개개인의 관점의 전환과 이에 걸맞은 소양과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성에 근거한 보편적 가치를 고양하는 한편 자민족 중심주의와 폐쇄적 민족주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철학과 실천을 재검토해야 한다.⁵⁾

세계시민성에 근거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토대는 평화와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평화와 인권은 민족주의, 국가주의, 권위주의, 공론장의 왜곡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이며, 상호 우호적인 세계시민문화에 기반한 공화국들의 연합체를 형성하는 노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 시민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시각이 반영된 역사교육을 해체하고 이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즉 역사를 인류의 자유, 평등, 연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해석하여 가르쳐야 한다. 더불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을 저해하며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왔던 사건들을 성찰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제주 4·3, 세계시민교육과 만나다

■ 제주 4·3, 평화와 인권의 상징

제주 4·3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민간인들이 참혹하게 희생되면서 평화와 인권이 철저히 유린되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평화와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소중함은 더 절실히 여기며 평화와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제주 4·3은 단지 지나가버린 과거사가 아니라 평화와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하고 시민의 역할을 배우고 느끼게 하는 살아있는 주제이다.

제주 4·3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국가차원의 진상규명까지 이끌어 낸 사건이다. 또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의 상처를 교훈삼아 평화와 인권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제주의 살아있는 역사이다.

따라서 제주 4·3은 당시를 겪지 않은 후세대에게 4·3의 전개과정과 그 이후 진상규명의 역사를 통해 관용, 권리와 책임, 민주적 절차, 비폭력 능력의 향상, 소수 인권 존중 등의 가치를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주제이며, 이는 곧 세계시민 교육의 목표와도 부합된다. 최근 생존 수형인 18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4·3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역사이며 후세대에게 어떤 과제를 남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5) UNESCO(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 4·3 유족들의 삶을 평화·인권 교육과 접목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되거나 동일시하는 인물을 통해 공감을 한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 자기 자신을 몰입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제주 4·3을 통한 시민교육을 할 때 학생들에게 10대 청소년으로서 4·3을 겪었던 사람들의 삶을 그려보게 하는 것은 공감과 온정, 더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게 한다.

현재 4·3 유족은 당시 10살 미만, 또는 10대 청소년으로 어린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지만, 생존을 위한 삶을 치열하게 살면서 깡그리 불타 잿더미가 되어버린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제주 공동체를 복원해냈다. 또한 유족들은 평화와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심과 증오심을 내려놓은 채 용서와 화해의 숭고한 정신으로 평화와 인권을 지켜내었다.

마을이 파괴되고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도 깨끗하게 살아남아 고향 땅을 지키고 후손들을 키워서 지금의 아름다운 섬으로 복원시킨 당시 어린아이와 청소년의 삶을 그려보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용기와 힘이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유족들의 노력이 얼마나 큰 것이며, 평화와 인권이 얼마나 절실한 가치인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3의 광풍 속에서 살아남은 것을 넘어 후손들을 키우고 마을을 다시 일궈 지금의 제주 공동체를 복원시킨 그들이야말로 평화와 인권의 산증인이며 시민의 용기로 볼 수 있다.

세계시민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을 때 이를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 나아가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므로 시민의 역할은 그 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 더욱 중요해진다. 학생들은 제주 4·3 이후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진상규명운동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시민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4·3 유족들은 4·3 당시에는 생존권이 위협받았고, 4·3 특별법 제정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좌제로 각종 제약을 받는 등 통한의 세월을 숨죽여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가족의 희생에 대하여 복수, 갈등, 분열하지 않고 제주공동체를 복원하는데 서로 협력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진상규명과 인권의 신장, 도민 사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4·3 특별법 제정,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대통령의 공식 사과, 4·3 국가추념일 지정 등은 4·3의 아픔을 극복하고 그동안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을 추구해 온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은 그것이 극단적으로 위협받았을 때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4·3 당시 평화와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된 처절했던 상황을 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제주공동체를 복원해낸 유족들의 사례는 평화와 인권 교육의 진정성을 담보한다.

유족들의 삶을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공감하고 경험적으로 느끼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는 4·3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는데도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화와 인권이 간절했던 삶, 진상규명 과정, 화해와 상생을 통한 제주공동체의 복원 노력 등 4·3유족들이 평화와 인권 문제에 대해 경험했던 이야기들은 시민교육의 중요한 소재가 될

것이다.

■ 4·3을 통해 본 ‘악의 평범성’

제주 4·3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적인 냉전 체제 속에서 발발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극심한 인명 피해를 초래했던 비극적인 사건이다.

특히 1948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전개된 군·경 토벌대의 강경 진압작전 때에는 중산간 마을 대부분이 불타 없어졌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무차별 토벌작전으로 2만 5,000~3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다. 대부분의 희생이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했고, 특히 희생자 대다수가 무고한 민간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까닭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까? 그리고 당시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명령을 수행하거나 동조, 침묵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민간인 학살은 ‘악의 유전자’를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 감행했는가?

현행법에 따르면 규범에 적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판단과 행위 능력은 성인에게는 충분하고, 청소년에게는 제한적이며, 어린아이에게는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상적 죄 개념에는 규범을 인정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동참하지 않으며 이에 저항하여 맞서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따라서 나치스 독일 시기, 1933년에서 1945년 사이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에 동참했던 사람들 이외에도 저항하고 반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죄를 지은 사람과 동일시된다.⁶⁾

4·3의 가장 큰 비극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심지어 제거하겠다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4·3 당시의 악행은 ‘악의 유전자’를 타고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국가와 사회가 ‘집단 광기’에 빠져있을 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성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국가 폭력에 맹목적으로 따름으로써 비극이 초래됐던 것이다.

밀턴 마이어는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전쟁 범죄는 흔히 히틀러와 그 추종자인 소수의 전횡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배후에는 대중의 동조와 협력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홀로코스트와 같은 악행은 특별한 인격 장애자가 아니라 국가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동조, 침묵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당시 대다수 독일인은 히틀러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나치 정권의 정책을 지지하였으며, 반유대주의와 반공주의에 근거한 선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비극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는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통해 알려준 것처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무사유’, ‘악의 평범성’에서 비롯되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한 심리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죄수와 교도관 역할을 나눠 맡겨 실험을 했더니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정말 교도관이 된 것처럼 가혹행위를 하는 바람에 실험을 중단시켰다는 ‘스탠퍼드 감옥실험’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 여겨진다.

6) 베른하르트 슐링크(2015), 과거의 죄, pp.11-13.

■ 4·3의 의로운 사람들, ‘선의 사유성’ 실천

‘악의 평범성’은 성찰하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악행의 모습인데 반해, ‘선의 사유성’ 또는 ‘선의 시민성’은 고양된 정치의식과 도덕의식에 따라 타인의 관점에서 사유하고 행동하는 용기 있는 시민의 모습이다. 이 두 가지 상황에 누구나 놓일 수 있으며 따라서 ‘악의 평범성’이나 ‘선의 사유성’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의 몫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개인적·집단적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민적 용기를 키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⁷⁾

제주 4·3 당시 7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희생될 때 이러한 ‘선의 사유성’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타인의 관점에서 사유하고 행동하였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특성은 자신의 행동을 관계 속에서 판단하고 이를 도덕적 용기, 시민적 용기로 실천한 점에 있다.

아래 소개하는 내용은 평화와 인권이 완전히 유린되던 4·3 시기에 각기 다양한 역할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시민의 용기를 실천했던 사례들이다. 이들은 군인과 경찰에서부터 마을 이장, 부녀자, 의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했던 용기 있는 시민들이었다.

왜 이들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직접 협상에 나선 김익렬 연대장

제주 4·3 초기, 김익렬 연대장은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무장대 진영으로 들어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담판을 벌였으며, 강경 진압작전 명령을 거부하다 미군정으로부터 해임되었다. 그는 군 지휘관 중 유일하게 제주4·3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그런데 평화협상이 결렬된 후, 해임된 김익렬 연대장의 후임으로 온 박진경 연대장은 미군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무차별 강경작전을 벌이다 부하에 의해 암살당했다. 이후 부임한 송요찬 연대장은 1948년 10월 17일 ‘정부의 최고 지령에 따라 해안선에서 5km 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포하였고, 11월 17일에는 계엄령을 선포해 이른바 초토화작전을 감행했다. 초토화 작전 때 군은 제주도 중산간 마을들을 불태우고 80대 노인부터 젖먹이 아기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 부당하므로 불이행했던 문형순 경찰서장

2018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된 독립군 출신인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은 학살을 독촉하는 해병대 정보참모의 명령서에 대해 ‘부당(不當)하므로 불이행(不履行)’이라는 글을 써 보내며 대량학살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6·25 전쟁 직후 제주도내 경찰서마다 수백 명씩 예비 검속돼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으나 성산포경찰서 관내 지역의 주민들은 6명만 희생되었다. 친일경력이 있던 다른 경찰 간부와는 달리 문형순 경찰서장은 일제강점기에 독립군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7) 한상희(2019), pp.121-129.

■ 명예로운 별명, ‘몰라 구장’ 김성홍

4·3 당시 토벌대는 마을 구장(현재의 이장)들에게 주민들의 성향을 물어 학살의 근거로 삼는 사례들이 많았다. 이에 남원읍 신흥리 김성홍 구장은 자신의 답변이 애꿎은 희생으로 이어질 게 뻔했기 때문에 무조건 ‘모른다’고 일관해 ‘몰라구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군·경의 말에 “모른다”고 버티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4·3 당시 15세였던 몰라구장의 따님(현재 83세)인 김복순 할머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할머니는 모슬포와 서귀포 등에 침을 맞으러 갔던 적이 종종 있었는데, 남원읍 신흥리에서 왔다는 말을 할 때마다 “그러면 혹시 몰라구장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곤 받았다. 이에 “내가 몰라구장의 딸”이라고 하면 침 시술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몰라구장의 선행이 신흥리는 물론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먼 마을에까지 널리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⁸⁾

■ 남원읍 신흥리, 장성순 경사

장성순 경사는 신흥리에 부임하자마자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설령 과거에 산에 갔다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문에 부친다. 또 누가 어떻다는 식의 말을 내게 하지 말라. 나는 이제부터의 일로써 모든 걸 판단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전전긍긍하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한 증언자는 ‘그가 마을에 부임해 왔을 때는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때이긴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주민들은 비로소 안심했다.’면서 ‘사태 초기 여성 조직을 통해 산에 쌀을 모아 올리는 일이 많았지만 장성순씨가 불문에 부친 덕에 살아날 수 있었다’⁹⁾고 말했다.

■ 학살 위기에 놓인 주민들을 구한 ‘지미둥이 순경’ 김순철

4·3 당시 신촌리에는 죽음 위기에 놓인 주민들을 구한 순경이 있었다. 조천지서 신촌파견소에 근무했던 김순철 순경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사람들은 그를 ‘지미둥이’순경이라고 불렀다. ‘지미둥이’는 얼굴에 기미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의 제주 사투리다.

하루는 9연대 군인들이 신촌 주민들을 신촌초등학교 마당에 모아 놓고 기관총으로 한꺼번에 죽이려고 했다. 무장대에게 쌀 등을 제공하며 협조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때 김순철 순경이 군인들의 기관총 앞을 가로막았다. 김 순경은 “총을 든 우리 순경들도 무장대에게 제대로 대항을 못했는데 주민들이 어찌 그 사람들과 대항할 수 있었겠느냐. 나도 이북에서 온 사람이다. 나부터 죽여 놓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이라”라며 군인들을 만류했다.

김 순경의 용기가 없었다면 4·3 당시 이틀 동안에 400여 명이 한꺼번에 희생된 이웃 마을 북촌리처럼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었을 것이다.

8) 김복순(83. 남원읍 신흥리)의 증언 (2015. 11. 22. 채록)

9)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4·3은 말한다. 5.

■ 위험을 무릅쓰고 조천 고문치사 사건을 밝힌 의사 장시영

의사 장시영은 제주 4·3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용철 고문치사사건을 밝힌 인물이다.

그러나 고문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혀지기까지는 온갖 회유와 압력이 있었다. 감정서를 써야 하는 의사에게는 마지막까지 회유의 손길이 뻗쳐왔다. 그러나 의사 장시영은 고민 끝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의사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내려 ‘타박으로 인한 뇌출혈이 치명적인 사인으로 인정된다’라는 감정서를 작성, 미군정 당국으로 제출하였다. 이 한 장의 감정서가 조천지서 지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5명의 구속사태를 몰고 왔다. 지서 경찰관 전원이 고문치사사건으로 징역 살이를 하게 된 것도 초유의 일이었다. 그런데 곧 제주 4·3이 발발하자 장시영은 부산으로 급히 피신해 목숨을 구했다.¹⁰⁾

■ 마을 청년들의 죽음을 만류하다가 살해된 한백흥, 송정옥

1948년 11월에 접어들면서 조천면의 상황은 더욱 험악해졌다. 토벌대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다 총살했다. 무장대 역시 자신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서를 습격하거나 토벌대에 협력하던 우익가족을 지목해 살해했다.

11월 1일 토벌대는 함덕리 주민들을 현재의 함덕중학교 뒤편 모래밭에 집결시켰다. 그리고는 함덕리 주민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청년들을 끌고나와 “앞으로 폭도와 연락하거나 식량을 제공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며 처형하려 했다. 이에 함덕리 구장이던 한백흥과 마을 유지였던 송정옥 등이 나서서 “청년들의 신원을 보증할 테니 죽이지 말라”라며 처형을 만류했다. 그러나 토벌대는 이들까지도 6명의 청년들과 함께 살해했다.¹¹⁾

■ 제주 4·3을 통한 세계시민 정신 실천

세계시민교육은 국경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지구적 도전 과제들에 지역적 또는 세계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보하도록 학습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시민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들이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¹²⁾

“내가 제주 4·3의 현장에 있었다면 강경작전 명령에 대해 어떻게 행동했을까?”

“내가 제주 4·3의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제주 4·3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일례로 위와 같은 질문에서 더 나아가 우리 주변, 국내외의 도전과제들에 대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동조자, 침묵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 등 다양한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러한 처지 또는 경계선 상에 놓일 수 있으며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함으로써 선의 사유성을 실천

10)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제주 4·3은 말한다 1.

11) 제민일보 4·3취재반(1997), 제주 4·3은 말한다 4.

12)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글로벌 시민교육, pp.16-17.

할 수 있을 것이다.

4·3 교육은 가해자, 희생자, 방조자 모두에 대해 감정이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이 세 가지 유형의 인간 중 어느 하나도 우리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며 늘 깨어있거나 성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4·3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의 희생을 초래하게 만든 상황과 구조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교육해야만 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위에 소개한 여러 의인들의 행동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새삼스러울 게 없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이나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의롭게 밝히고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시민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제주 4·3을 통해 선의 시민성을 실천했던 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4·3의 광풍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세상의 밝은 면을 보여주는 희망과 함께 4·3과 같은 비극, 홀로코스트로 상징되는 악행을 예방하는 역할모델이 되어준다.

또한 더 나아가 4·3 평화교육을 계기로 용기 있는 시민의 정신을 배운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학급, 동아리, 더 나아가 전 지구적 도전 과제들에 대해 지역적 또는 세계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키우고 다른 사람 또는 공동체의 평화와 인권이 위협을 받을 때 정의롭고 용기 있게 나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제주가 겪었던 역사적 경험과 제주 4·3이 주는 현재성으로 선의 사유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세계시민은 자신을 성찰하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두며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은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이기도 하다.

제주 4·3은 냉전 시기에 남북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그 의미가 제주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이에 제주 4·3은 지역을 뛰어넘어 평화와 인권의 중요한 주제이며, 교육활동에서 제주 4·3을 가르치는 것은 당위성을 가진다. 더욱이 제주 4·3이 품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요소들이 다루어진다면 학생들은 세계시민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주 4·3 유족들의 삶과 그 이후 도민사회와 함께 한 진상규명 노력 과정,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국내외 여러 상황에서 평화와 인권이 위협받을 때 세계시민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III. 4·3 기억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제언

1. 제주 4·3 평화공원 및 학교에 ‘의인의 길’ ‘시민의 길’ 조성

베트남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를 담은 3기의 한국군 증오비가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루살렘 교외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의 동산 야드바셈박물관 경내의 ‘열

방 의인들의 거리'에는 신들러 등 홀로코스트 당시 의로운 행적을 기념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현재, 미래의 용기 있는 시민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다.

신들러 덕분에 목숨을 구한 '신들러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합하면 모두 6,000명에 이른다. 이에 1962년 이스라엘 정부는 신들러를 예루살렘으로 초청하여 홀로코스트 기념의 동산 야드바셈 경내 '열방 의인들의 거리'에 기념 식수를 하도록 했다. 1965년에는 독일 정부가 그에게 제1등 공로훈장을 수여했다. 2008년 4월 10일에는 신들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에서 기념 우표가 발행되었다. 그 우표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라는 탈무드의 한 구절이 적혀있다.

제주 4·3 당시에도 온갖 폭력이 자행되고 평화와 인권이 완전히 유린되는 순간에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막기 위해 시민의 용기를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다.

제주 4·3 평화공원 야외 공간 또는 제주도 각 학교에 '의인의 길'을 조성하여 나무를 심고 나무 옆에 의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제시한다면 의인의 길을 걷는 동안 두 가지 사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4·3의 여러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자문과 함께 앞으로 4·3의 공포, 홀로코스트와 같은 악행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떤 판단과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 모델로써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3에 관한 내용이든 또는 다른 내용이든, 제주도에 있는 초중등 학교에 의인의 나무 또는 의인의 길을 조성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의인 이야기를 통하여 세계시민의 역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 학교와 지역사회는 4·3 당시 자기 마을의 의인을 찾는 일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시민교육으로서 4·3 교육을 확산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2.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4·3 교육의 전국화

최근 국경을 넘는 이주의 증가와 함께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원인과 파급력을 가진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구적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세계시민교육이 2012년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한 글로벌교육우선 구상의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세계 교육의제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적인 가치는 평화와 인권, 관용, 정의, 문화 다양성,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이다.

제주 4.3은 '악의 평범성'을 예방하고 '선의 시민성'을 실천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주제이다. 또한 제주 4·3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온정을 베푸는 공감 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행동하는 용기를 심어줄 수 있다. 4·3 교육은 4·3의 배경과 전개과정, 진상규명 과정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평화와 인권, 정의의 가치, 시민의 역할 등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 4·3 교육을 통해 다양성과 차이점의 존중, 세계시민의 용기와 같은 가치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상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깨닫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이 앞으로 전 세계의 교육의제가 되고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상징인 제주 4.3을 전국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3 교육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교육으로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경

계하고 평화와 인권, 관용, 민주주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등 세계시민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시민교육으로서 4·3의 의미 확산

평화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열려 있는 정치, 사회, 문화적 분위기는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¹³⁾

제주 4·3으로 평화와 인권이 유린되었음에도, 4·3 이후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제주 공동체를 복원시켰다면 사회교육으로서 제주 4·3의 의미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대상으로는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여성, 독거노인, 외국인 근로자 등이 될 것이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확대가 사회교육으로서의 4·3의 의미 확산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자매결연 맺기 등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과 시민단체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이와 함께 개인들이 앞 다퉈 이를 실천한다면 시민교육, 사회교육으로서의 4·3의 의미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4·3 당시 희생자 중 어린이, 노인, 여성의 비율이 33%였다. 4·3의 현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지원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절실하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4. 민관이 협력하는 4·3 교육

세계시민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 세계 차원의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효과적이다.

4·3 역사교육은 평화인권교육이면서 세계시민교육이고 정치교육이다. 따라서 4·3 역사교육을 통해 깨닫게 되는 주요 가치들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한다.

크릭 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시민교육이 학생들 입장에서 장차 시민의식으로 무장한 비판적이며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학교입장에서도 지역사회가 학교의 시민교육을 함께 담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¹⁴⁾

독일과 남아공의 과거사 교육의 특징은 집단학습, 시민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4·3이 아직까지도 제주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건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성찰과 교육의 문제라고 본다면, 지역사회가 4·3 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4·3 교육은 민관이 서로 협력하고 또한 사회적 지지와 공감의 이루어질 때 더욱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이다.

13)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2015), 글로벌시민교육 - 새로운 교육의제, p.18.

14) 영국교육과정평가원(1998), 크릭 보고서, 학교 시민교육과 민주주의, <학교 시민교육과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pp.24-25.

5. 역사 연대를 통한 기억의 공유와 확산

제주 4·3 진상규명의 역사는 시민사회와 함께 시작되었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말처럼, 80년 5월이 87년 6월로 이어졌고 6월 항쟁으로 성장한 시민사회에 힘입어 4·3 진상규명이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분단과 냉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있었던 역사가 나와 관련되고 우리의 역사로 기억되고 공유될 때 역사 연대를 통한 세대전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 현대사 앞에서 상주이자, 슬픔을 딛고 다시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키는 희망인 셈이다.

나의 역사로, 우리의 역사로, 평화와 인권, 통일, 정의 등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역사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고병현(2009), 『평화교육사상』, 학지사.
- 권귀숙(2006), 『기억의 정치』, 문학과 지성사.
- 밀턴마이어(2015),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갈라파고스.
- 베른하르트 슐링크(2015), 권상희 역, 『과거의 죄』, 시공사.
- 안병직 외 10인(2005),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 이동기(2013) 편저, 『20세기 평화텍스트 15선』, 아카넷.
- 요한 갈통(2000),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 영국교육과정평가원(1998), 『크릭보고서, 학교시민교육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기획·번역(2015), 『글로벌시민교육-새로운 교육의제』, 한림출판사.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7), 청소년 4·3 평화의 길을 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제주 4·3은 말한다 1』, 전예원.
- 제민일보 4·3취재반(1994), 『제주 4·3은 말한다 2』, 전예원.
- 제민일보 4·3취재반(1995), 『제주 4·3은 말한다 3』, 전예원.
- 제민일보 4·3취재반(1997), 『제주 4·3은 말한다 4』, 전예원.
- 제민일보 4·3취재반(1998), 『제주 4·3은 말한다 5』, 전예원.
- 최호근(2009), 『독일의 역사교육』, 대교출판.
- 파리다 샤희드(2013), 『2013 UN 총회 보고서 -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대한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 조사관의 보고서』. 한겨레 21 홈페이지. (2015.10.19).
- 한나 아렌트(2006), 김선옥 옮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 UNESCO(2015).『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 한상희(2015), “제주 4·3 역사교육이 진단과 방향”,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4·3 해결을 위한 연구 과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85-219.
- 한상희(2019), 지역기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학교 사회과 수업모듈 개발 - 제주지역을 사례로

記憶的繼承與和平教育的課題

－ 濟州4·3與那些人 －

Han Sang-hee(西歸浦市教育支援廳獎學士)

I. 4.3歷史教育現況

國家或集團在歷史上犯下的罪惡給後代留下怎樣的傷楚，責任和待解的問題？

最近很多社會都面臨着歷史描述和教育的挑戰。尤其是經受過國內外鬥爭的洗禮或殖民地痛苦的國家，以及因人種、國籍、宗教、信念以及政治理念觀點不一而曾經分裂過的社會。¹⁾

所謂解決歷史殘留問題，不僅僅是闡明歷史真相，而且意味着對過去的回憶和反省，力圖追求和解與和諧的努力。對過去的清算不單單是加害者和受害者之間的問題，還是所有社會成員，以及那些並未經歷過去歷史的後代子孫的價值態度及教育的問題。

濟州4.3事件發生在分裂和冷戰的背景下。在第二次世界大戰發生以後，半島被美國和蘇聯佔領，他們各立牆頭，導致半島的南北分裂。濟州4.3事件就開始於美國和蘇聯之間的冷戰正酣之時，大韓民國政府成立之後結束，歷經7年多的時間，造成大量人員傷亡，堪稱歷史慘案。在此過程中，壓迫和抗爭，慘無人道的鬥爭讓很多人陷入恐怖之中。

1948年11月開始，軍隊和警方的討伐隊在4個月裏發起強行鎮壓，中山間村莊大部分被大火燒為平地，約2.5萬到3萬的濟州道平民百姓犧牲，無論男女老少，一律沒能倖免。

國民總理下屬的4.3委員會於2003年公開發佈《濟州4.3事件真相調查報告》，報告說濟州4.3事件中，武裝部隊和土伐隊之間的武力衝突以及土伐隊的鎮壓造成了不計其數的人員犧牲。由於大部分犧牲者都是死在國家暴力之下，尤其是大多都是手無寸鐵的非武裝平民百姓，所以報告公佈之後，總統代表政府公開道歉，恢復犧牲者及其遺屬的名譽。今年1月17號，由4.3生存受刑者發起的非法軍法會議被判無效，讓越來越多的人意識到4.3特別法修訂的必要性。4.3事件至今仍影響着濟州人，越來越多的人認為這是一個涉及到當代和未來社會的反省以及教育的問題。

此外也有人提出4.3教育的必要性。2003年3月29號，包括將真相調查報告內容用作教育材料的中央委員會對政府七大建議被採納；2013年4月10號，推進4.3和平教育的條例公開發表；2014年和2018年討論了濟州道教育監的4.3和平教育推進公約，另外也探討了4.3全國教師研修，新版歷史教科書和4.3編制等和4.3教育相關問題。

21世紀圍繞歐洲歷史教育召開的閣僚會議提出建議案，認為歷史研究和學校的歷史教育若通過篡改、偽造證據、偽造統計數據、偽造圖片來將歷史事件正當化或者為了隱瞞某一歷史真相而僅僅曝光某一事件，為了宣傳而歪曲歷史，從偏激的民族主義角度將過去一分為二為劃分敵我，通過否認和抹去某一歷史

1) 聯合國大會(2013)。歷史教科書和歷史教育文化權利領域的特別調查員的報告 p.3。

事實允許或誘導人們曲解歷史事實，這些都違反了根本的價值和法律。

而且歷史教育最重要的應該是發揚多樣性，促進民族之間的和解、認可、理解、信任，鼓勵寬容、相互理解、人權、民主主義等根本價值，在這些方面，歷史教育都應該發揮根本作用。

換言之，世界歷史的教育正在排斥一味區分“你我”的民族主義思潮，推崇和平和人權、民主主義等普世價值。

本篇文章將4.3歷史教育放在和平和人權的大背景下，探索4.3歷史教育作為面向世界公民教育的方向。

II. 4.3 和世界公民教育

1. 和平人權和世界公民教育(Global Citizenship Education)

一般而言，人們認為和平是與戰爭相反的概念，和平意味着沒有戰爭，是與戰爭相對的概念。但第二次世界大戰爆發以後，隨着人權意識和公民社會的發展，和平的概念也變得愈加廣泛。Galtung將和平分類，分別定義為沒有個人的、直接的、武力暴力的“消極和平”以及沒有社會經濟結構暴力的“積極和平”。此後1996年在《和平手段推動和平》中，將和平定義為沒有任何暴力，或者形成減少暴力的共識，利用非暴力和創造性減少矛盾的能力。

因此和平教育不僅要涉及個人和社會的武力暴力方面的內容，而且應該涉及面對結構和文化暴力，如何使用和平手段調和矛盾的內容。

世界公民意識與此異曲同工，以普世價值為基礎，是一種跨越國界的歸屬感亦或紐帶感。同時也證明了全球各地相互依存，相互聯繫，彼此相互影響，擁有交集。為了共同應對人類面臨的威脅生存的難題，必須克服被束縛於國家框架下的國家主義侷限性。要想超越國家主義，成為世界公民，每個人都需改變自己的觀點，提高自己的文明意識及知識水平。

因此世界公民教育必須致力於提高基於世界公民意識的普遍價值和擺脫本民族中心主義的封閉式民族主義，重新審視既有的教育哲學理念和實踐。²⁾

基於世界公民意識的世界公民教育核心基礎是和平與人權。之所以作此斷言，是因為和平和人權為解決民族主義、國家主義、權威主義、公共討論平臺的歪曲問題提供了重要基礎，是形成相互友好的世界公民文化共和國聯盟的紐帶。

開展世界公民教育，需拋棄國家主義視角的歷史教育，重新從人權和民主主義視角進行詮釋和教育。歷史教育必須重新審視那些壓制人類自由、妨害平等、導致共同體解散的事件。

2. 濟州4.3與世界公民教育交匯

■ 濟州4.3——和平和人權的象徵

濟州4.3具有一個重要特徵，即衆多平民百姓慘死，和平與人權被無情踐踏，即便如此，人們依然使用

2) UNESCO(2015).『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和平的手段查明真相，力求恢復名譽。在和平和人權完全不受保障的情況下，更需要這種珍貴無比的不管不顧，公民在守護和平和人權中的責任更加重大。

因此濟州4.3不是消逝的歷史，通過濟州4.3，我們可以重新審視和平與人權的珍貴價值，領悟公民責任。濟州4.3是生動的教材。

在濟州4.3中，濟州道民是主人公，他們推動國家調查事件真相。對於濟州4.3，人們不駐留在過去，他們將歷史留下的傷痕當做教訓，昇華成和平和人權精神。濟州4.3是鮮活的歷史。

即使是沒有經歷過濟州4.3的後代子孫，在瞭解4.3的過程和真相被揭曉的歷史之後，會對寬容、權力和責任、民主階段、非暴力能力的提升、少數人權尊重等價值進一步瞭解，對於學生們來說是一個很重要的歷史主題，這也符合世界公民的教育目標。最近在世的18位受刑人員被判為無罪，這表明瞭4.3是一個不斷向前發展的歷史，明確展現了4.3給後代留下了怎樣的課題。

■ 將4.3遺屬的生活軌跡與和平人權教育融合

大部分人對和自己相關的人或者和自己類似的人產生共鳴。所謂共鳴，就是指將自己融入別人精神世界的的能力。

在通過濟州4.3進行世界公民教育時，讓十幾歲的青少年學生想象經歷4.3歷史事件的人們的生活，可以讓他們擁有共鳴，產生溫情，同時還能自省。

4.3遺屬在事件發生的時候不到十歲，或者是十幾歲的青少年，小小年紀就失去父母，成為孤兒，但是他們為了生活，不顧艱辛，將化為灰燼的家園重建成如今的濟州共同體。他們雖然遭受了慘無人道的人權蹂躪，和平的權力受到侵犯，但依然放下報仇和憎惡，選擇了饒恕與和解，憑藉這樣崇高的精神，守護和平和人權。

被4.3事件毀掉家園奪走親人的遺屬們，堅強生活，守護故鄉，培養子孫後代，把濟州建成瞭如今這樣一個美麗島嶼。試想他們當時只是孩子，兒童或者青少年的年紀，想想他們，可以領悟他們克服困難的勇氣和力量源自哪裏。通過這樣的教育，學生們可以感受到遺屬們付出了多大的努力，也可以認識到和平和人權的重要性。他們不僅僅戰勝4.3陰影，生存了下來，而且撫養子孫後代，重建家園，構建瞭如今的濟州共同體。他們纔是和平和人權的歷史證人，他們擁有公民的勇氣。

世界公民在他人的尊嚴受到威脅時，將其視為和自己的事情一樣重要，為了幫助別人守護尊嚴，一起努力。他們不僅守護自己的權力，而且努力守護別人，乃至整個共同體的和平和正義。因此當社會面臨危機時，他們的作用尤為重要。學生們在瞭解濟州4.3以後濟州道民和遺屬為了闡明真相奔走努力的過程之後，會意識到世界公民的責任的真切含義。

4.3遺屬在4.3事件發生時，生存權利受到威脅，即使到4.3特別法制定之前，都因為連坐制度受到各種限制。他們埋頭熬過了一段灰天暗地的歲月。即使如此，遺屬們對於家人的犧牲，並沒有要復仇，也沒有挑起矛盾或分裂，而是積極幫助重建濟州共同體。另外，他們更關注的是將真相公佈於世，保障人權，追求道民社會的和諧，而不是將精力放在如何懲治加害者身上。

4.3特別法的制定、政府的真相調查報告公佈、總統公開道歉、4.3國家紀念日的制定等，都是4.3遺屬和濟州道民一直以來追求和平和人權，和諧和共贏的結果。

世界公民教育強調的是和平和人權，其珍貴之處在受到極端威脅時纔會感受得更加真切。遺屬們不僅從4.3當時和平和人權被嚴重侵犯的陰影中走了出來，而且秉持和解和共贏的精神，重建濟州共同體，他

們的事例印證了和平和人權教育的真正價值。

向青少年講述遺屬的生活，大大有利於讓學生切身感受到在守護和平和人權過程中公民的重要性，形成間接經驗。另外4.3教育還會成爲日常生活中傳播和平和人權價值的重要媒介。

因此期盼和平和人權的人生，追求真相的過程，爲了和解和共贏以及重建濟州共同體而付出的努力，這些4.3遺屬在追求和平和人權過程中經歷過的點點滴滴，都會成爲世界公民教育的重要素材。

■ 透過4.3看惡的平庸性

濟州4.3發生之時，正值第二次世界大戰結束後不久，當時世界處於冷戰之中。濟州4.3結束之時，大韓民國政府成立，前後經歷7年之久，造成大量人員傷亡，是一段悲慘的歷史。

1948年11月，軍隊和警察的土伐隊歷時四個月進行強硬鎮壓，中山間村莊基本被燒燬，2.5萬~3萬的濟州島民，不論男女老少，慘死在這場鎮壓中。大部分施暴者都屬於國家暴力，而大部分犧牲者都是手無寸鐵的民衆。

究竟爲何在這個非戰爭時期，如此多的人的性命被奪走？到底是誰，當時執行國家暴力命令屠殺民衆？誰是執行者？誰是助紂爲虐者？是不是那些帶有“惡意遺傳因子”的特殊羣體？

根據現行法律，成年人有充分的能力去判斷行爲是否合法，也有能力去做合法的事情，但青少年則缺乏這樣的能力，孩子則沒有這樣的能力。在這種日常性犯罪的概念裏，如果認可制度規範，不犯罪，也不協助犯罪，其前提是反抗犯罪，與犯罪做鬥爭。所以在德國納粹時期，從1933年到1945年，除了犯罪或者協助犯罪的人以外，雖然可以反抗，可以反對，但卻沒有那麼做的人也被認爲犯罪。³⁾

4.3最大悲劇來源是排除異己甚至殘忍地用暴力剔除異己的思想。但是4.3當時的惡行並非攜帶“惡遺傳因子”的人犯下的，而是很普通的人犯下的罪惡。當國家和社會陷入“集體性昏亂”之時，無法以同理心思考的人盲目聽從國家暴力，造成瞭如此悲劇。

在米爾頓·邁耶《他們以爲他們是自由的》一書中提到，第二次世界大戰中，大多數人都知道戰爭犯罪是希特勒和他的追隨者造成的，但其背後其實藏有大衆的參與和協助。換言之，不是大屠殺罪犯那樣有人格障礙的人，而是盲目跟隨國家的普通人的參與和沉默才釀造了悲劇。

當時大多數的德國人從希特勒那裏獲得同質感，支持納粹政權的政策，毫無批判地接受基於反猶太主義和反共主義的煽動，埋下了悲劇的種子。正如阿倫特在《艾希曼在耶路撒冷》一書中所說，這是源於“無法從他人角度思考的無思維”以及“惡的平庸性”。

美國斯坦福大學的某心理學教授的“斯坦福監獄實驗”也反映了同樣的道理。該教授向學生佈置角色扮演的任務，讓他們分別扮演罪犯和教官，實驗發現，發現扮演教官的學生真的像教官一樣開始虐待行爲，不得不中斷實驗。

■ 4.3中講義氣的人們踐行“善的思維性”

“惡的平庸性”指的是無法自省的普通人無心之中犯下的罪行，而“善的思維性”或者“善的公民性”指的是公民具有良好的政治意識和道德理念，有勇氣從他人角度進行思考和行動。每個人都會面臨這兩種情況中的一種，因此不管是“惡的平庸性”亦或“善的思維性”，終究還是取決於普通人的選擇而已。如何選擇，會對他人的生活造成巨大影響，因此需要培養公民的勇氣，並努力付諸於實踐。⁴⁾

3) 伯恩哈德·施林克(2015),《過去的罪》pp.11-13.

濟州4.3歷經7年零7個月的漫長歲月，十分之一的濟州人犧牲，有人踐行着“善的思維性”。這些人冒着生命危險，爲了不讓更多無辜的人犧牲，從他人的角度去思考和行動。他們的共同點是從關係中判斷自己的行動，並用道德的勇氣和公民的勇氣去實踐。

下面介紹的內容是在和平與人權遭到肆意蹂躪的4.3時期，人們在各自所處的情況下發揮公民勇氣的事例。他們中有軍人、警察，也有村裏的里長、婦女、醫生，他們有勇氣在各自不同的崗位上，思考自己的判斷和行動會給他人帶來怎樣的影響，然後做出了抉擇。

究竟爲何讓這些人與和他們處於相似情況的其他人做出完全不同的選擇呢？

■ 爲了減少無辜犧牲親自談判的金益烈團長

濟州4.3爆發初期，金益烈團長爲了防止流血事件的發生，不顧危險，親自去武裝隊陣營，爲了和平解決問題和對方進行談判。他抵抗強硬鎮壓作戰的命令，被美軍警解僱。他作爲軍隊指揮團的一員，留下了唯一的記載濟州4.3事件真相的記錄。

但是在和平談判崩裂後，替代金益烈團長上升的樸真京團長聽從美軍司令官的命令，進行肆意的強硬鎮壓，被他的下屬暗殺。此後接替團長位置的宋堯贊在1948年10月17號，發佈佈告令，宣佈“根據政府的最高指令，在海岸線5公里以外的人們，不管因何原因，一律槍殺”。11月17日，宣佈戒嚴令，進行了肆無忌憚的屠殺。當時軍隊火燒濟州島中山間村，上到耄耋老人，下至嗷嗷待哺的嬰兒，均遭到槍擊。

■ 認爲不妥所以拒絕執行的文亨順警察署長

2018年獲選“年度警察英雄”稱號的獨立軍文亨順城山浦警察署長當年面對督促屠殺的海兵隊信息參謀的命令，回覆“因爲不妥，所以不執行”，拒絕執行命令。正因爲他的這一舉動，當時6.25戰爭後濟州島內每個警察署都有數百名被逮捕者，很多人被害死，但城山浦管轄區內只有6人犧牲。和其他有親日歷史的警察幹部不同，文亨順警察署長在日帝強佔時期，曾經是獨立軍隊的一員。

■ 名譽外號——“不知道區長”金成紅

4.3當時的土伐隊中，很多人向村莊區長(相當於現在的里長)詢問村民的政治觀念，以此作爲屠殺的證據。南苑邑新興裏的金成紅區長知道自己的回答必然會造成無辜犧牲，所以他一概說“不知道”，因此被人稱爲“不知道區長”。當時，對於軍隊和警察的提問，回答“不知道”是會掉腦袋的事情。

現在居住在村莊裏的4.3當時15歲的“不知道區長”的女兒(現在83歲)金福順奶奶告訴我們這樣一段故事。金奶奶常常去西歸浦和慕瑟浦鍼灸，每次她說從南苑邑新興裏來，就有人問她“那你知道不知道區長嗎”。對此，她如果回答“我就是不知道區長的女兒啊”，很多時候對方就會免費給她鍼灸。不知道區長的善行不僅被新興裏的人知曉，而且流傳到了其它較遠的村莊。⁵⁾

■ 南苑邑新興裏張成順警查

張成順警查在新興裏上任後，立即宣佈“現在村裏的人即使過去曾經上過山，也一概不予追究。不要和我說誰誰誰怎麼樣。我會按照從現在開始發生的事情去判斷”，這一舉動撫平了衆多戰戰兢兢的人的心靈。

4) Han Sang-hee (2019), pp.121-129.

5) 金福順(83.南原邑新興裏)的證言(2015. 11. 22. 採錄).

某證言者說：“他來村莊上任時，雖然事情得到某種程度的控制，但是正因為他說了那樣一句話，所以村民才真的放心來”“當時剛開始時，有一些人通過女性組織把大米送到山上，正因為張成順說不追究，才得以倖存”“謝謝他”⁶⁾

■ 將民衆從屠殺危機中解救出來的麻子“金巡警”金順哲

4.3爆發時，有一名巡警將新村裏的人從死亡危機中解救出來，他就是朝天支署新村派出所工作的金順哲巡警。人們親切地用濟州方言稱他為“麻子”巡警。

有一天，9團把居民們聚集到新村小學操場上，準備用機關槍掃射，原因是這些居民給武裝隊送米，幫助了武裝隊。這時金順哲巡警堵在軍人們的機關槍前，阻止軍人們槍擊，他說：“我們巡警拿着槍，都沒能好好地對抗武裝隊，手無寸鐵的百姓怎麼可能抵抗呢。我也是北方來的，就先把我殺了以後，再殺這些人吧”。

如果沒有金巡警鼓起勇氣，那麼當時可能會像鄰村北村裏的大屠殺慘案一樣，兩天內死掉400多人。

■ 不懼危險公開朝天拷打致死真相的醫生張詩英

醫生張詩英將濟州4.3導火索——金容哲拷問致死真相公佈於世。

但是在真相公開之前，遭到來自四方的籠絡和壓力。直到最後一刻，都有人想籠絡要寫鑑定書的醫生。但是張詩英醫生在思考良久之後，決定即使冒着危險，也要盡醫生本分，在鑑定書上寫道“因打擊導致的腦出血是致命死因”，將其提交到美軍警。這一張鑑定書讓包括朝天支署的支署長在內的5名警察官被捕。這也是首次警察署全員因為拷問致死被捕。4.3事件隨之發生，張詩英匆匆去釜山逃難，躲過一劫。⁷⁾

■ 挽回村裏青年人的性命自己卻死於非命的韓伯興和宋靜玉

1948年11月，朝天面的情況愈加慘烈。土伐隊對於只要有一絲嫌疑的人就會抓過去槍殺。武裝部隊也調動自己的所有力量襲擊支署，或者指認和有意和土伐隊合作的右翼分子，將他們置於死地。

11月1日，土伐隊將鹹德里的居民召集到現在鹹德初中所在地的後面沙地上，然後將包括1名鹹德里居民在內的6個青年拉出來，想對他們處刑。土伐隊說：“今後如果和暴徒聯繫或者給暴徒提供糧食的話，就會是這個下場”。見此，鹹德里的區長韓伯興和村莊管理人員宋靜玉等人站了出來，想要阻止處刑，他們說：“我們給這些青年的身份做擔保，請不要殺死他們”。但土伐隊卻連同他們也殺害了。⁸⁾

■ 通過濟州4.3踐行世界公民精神

世界公民教育的目的在於，促進全球各國聯手應對解決泛國家課題，發揮學生們的積極作用。世界公民教育的最終目的是，通過教育，學生們為了創造更加正義、和平、寬容、包容、安全、可持續的世界，發揮主人翁作用。⁹⁾

“我如果在濟州4.3的現場，對於強硬的執行命令，會做出什麼樣的選擇?”

“我如果在濟州4.3的現場，我會過着什麼樣的生活?”

6) 《濟民日報》4·3採訪組(1998) 4·3訴說5.

7) 《濟民日報》4·3採訪組(1994) 濟州4·3訴說1.

8) 《濟民日報》4·3採訪組(1997),濟州4·3訴說 4.

9) 教科文組織亞太國際理解教育學院，全球公民教育，pp.16-17。

濟州4.3帶來的世界公民教育的一個例子就是像上述提問一樣，我們不僅這樣問自己，而且對於我們周圍的、以及國內外的挑戰課題，站在加害者、支持者、沉默者、反抗者等多種角度思考。因為任何一個人都有可能處於這樣的境遇，也可能面臨這樣的邊緣處境，自己的選擇可能會對別人的生命產生決定性影響。通過思考自己的行動給現在和未來帶來什麼樣的後果，可以鍛鍊自己善意的思維能力。

4.3教育應該着力於培養學生對加害者、犧牲者及協助者等所有人的同理心。只有這樣，不管是這三種類型人當中的哪一種，都不會成為和我們毫無牽連的人，意識到只要自己不時刻自省，總有一天會犯下罪行。此外，教育還要讓學生擁有分析狀況的能力，到底為什麼4.3當時10分之1的人犧牲，其背景和結構是什麼？

如果是正常情況，拒絕不合理的命令，並非難事。上面介紹的各位義士的行為，放在一個理智的社會，並非大驚小怪的事情。但是在自己的生命受到威脅，地位搖搖欲墜時，表明正義的想法，踐行正義，就不是一件簡單的事情了。所以說公民需要勇氣。

通過濟州4.3，那些踐行正義的義士，他們的英勇事蹟在4.3的歷史背景下，如同在黑暗中綻放瑰麗之花，展示了陽光和希望。這些事蹟成為值得學習的榜樣，在4.3這樣的悲劇事件發生時，阻止猶太人大屠殺之類的惡行發生。

此外，接受4.3和平教育，學生們在學習了勇敢的公民精神之後，對於自己所在班級、興趣小組或者整個地區面臨的挑戰，會擁有地區性或世界性應對的能力，在他人或其他共同體受到和平或人權的威脅時，會下決心勇敢正義地站出來。濟州地區的歷史和濟州4.3會讓學生領悟到善意的思維性。

世界公民懂得自省，將認可和自己不同的人，給這些人寬容當做是一種重要的價值，努力實現共同體和平。世界公民教育並脫離民族主義或者國家主義的桎梏，是意在實現人類普世價值的教育。

濟州4.3發生在冷戰時期南北分裂的背景下，這也是半島的常態，所以這並不是一件僅侷限於濟州的事件。這是一件重要的和平和人權事件，不侷限於某一個地區，教育內容中應該涵括濟州4.3一事，將濟州4.3具有的和平和人權元素放到教育中，會自然而然地培養學生們的世界公民的責任心。

濟州4.3遺屬們的人生軌跡，他們和濟州道民一起努力將真相告知天下的過程，以及許多正義人士的英勇事件，這些都是經驗典範，告訴全世界的人在和平和人權受到威脅時，世界公民的責任是什麼。

III. 對於4.3歷史的共享和傳播提出的建議

1. 在濟州4.3和平公園及學校裏設立“義士之路”和“公民之路”

越南有三座韓國軍隊憎惡碑，記載着越南戰爭當時韓國軍隊肆意踐踏人權侵犯的罪過。與此形成鮮明對比的是，位於耶路撒冷郊外的以色列猶太人大屠殺紀念館內，有一條“國際義人之街”，種植着樹木，紀念大屠殺當時辛德勒等人見義勇為的義舉，喚醒人們去思考，透過過去的教訓，思考現在和未來英勇公民的責任。

被辛德勒救下性命的“辛德勒之人”及其後代加起來共有6000人。1962年，以色列政府邀請辛德勒前往耶路撒冷，在以色列猶太人大屠殺紀念館內的國際義人之街紀念植樹。1965年，德國政府授予他一等功勳章。2008年4月10日，為紀念辛德勒誕辰100週年，德國發行紀念郵票。郵票上寫着塔木德的一句話：“拯

救一個人，就是拯救整個世界。”

濟州4.3，各種暴力橫行，和平和人權徹底被蹂躪。那時也有人不顧自己安危，爲了讓別人免於犧牲，踐行了公民的勇氣。

在濟州4.3和平公園戶外或濟州島各學校建“義士之路”並植樹，在樹旁鐫刻義士故事。如此一來，可能會激發人們踏上義士之路時產生兩種思考。其一，若我處於4.3時的各種情況下，我會怎麼做；二是若今後再發生4.3恐怖或大屠殺等惡行，我將如何判斷和行動。這些英勇事蹟將發揮榜樣作用。

另外，不管是和4.3相關還是無關的內容，如果在濟州島的小學、初中、高中，植義士之樹或建義士之路，學生們可從自己所在地區社會的義人故事中領悟到世界公民的責任。各學校和地區社會紛紛追溯4.3當時本地區的義士英勇事蹟，有利於4.3教育的推廣，4.3教育的公民教育性質會被更多人瞭解。

2. 在全韓國推動世界公民教育——4.3教育

最近隨着移民的增加，社會的多種族和多文化現象凸顯，人們更加需要學習和諧共存之道。隨着跨國因素和具有波及效果的緊張和矛盾持續，全球合作的必要性日益增加。世界公民教育成爲2012年聯合國祕書長提出的全球教育優先計劃目標之一，成爲世界教育議題。世界公民教育的核心價值包括和平、人權、寬容、正義、文化多樣性和可持續發展等。

濟州4.3可預防“惡的平庸性”，實踐“善的公民性”，是世界公民教育的重要主題。通過濟州4.3教育，還可培養同理心，理解他人處境，給予溫情；培養朝着心指引的方向踐行正義的勇氣。4.3教育不應侷限於對4.3背景、過程和真相查明過程的知識傳授，還應讓學生審視和平、人權、正義價值和公民責任等。通過4.3教育，可以使學生從日常生活的具體事例中，從他們可以理解的視角領悟到一些價值，如尊重多樣性和差異性的價值，以及世界公民勇氣的價值等。

因此，如果世界公民教育今後成爲全世界的教育內容和教育的重要目標，那麼就應該努力將象徵和平與人權的濟州4.3教育在全韓國推廣。4.3教育不應侷限於民族主義和國家主義，應警惕將世界一分爲二分成敵我雙方的教育，應以世界公民教育的形式展開，認可和平、人權、寬容、民主和多樣性。

3. 世界公民教育——4.3教育的意義深入人心

和平與人權等普世價值所體現的政治、社會和文化氣氛是實現世界公民教育目標的至關重要的因素。¹⁰⁾

雖然濟州4.3使和平和人權受到踐踏，但通過發生在4.3以後的和平措施，濟州共同體得以重建。因此濟州4.3可以作爲社會教育的內容，推廣濟州4.3具有至關重要的意義。尚未受到福利陽光照耀的殘疾人、女性、獨居老人和外國勞動者可以成爲這類教育的討論對象。教育的目的在於呼籲全社會對他們給予更多的關心和幫助，這也是4.3教育的延伸意義，作爲社會教育的意義所在。

至於具體的方法，可以和社會弱勢羣體建立友好關係，此外行政機關和市民團體也可以率先垂範，帶領人們積極實踐。這樣一來4.3作爲公民教育和社會教育的意義就會深入人心。

實際上4.3的遇難者中，兒童、老人和婦女的比例達到33%。爲了體現4.3的當下意義，必須積極開展關

10) 教科文組織亞太國際理解教育學院(2015)，全球公民教育——新的教育議題，p.18.

心和照顧社會弱勢羣體的工作。為此,政府和地方自治團體要給予更多的預算支持。另外,個人也要學會關心弱勢羣體,形成體貼弱勢羣體的文化。

4. 政府和民間合作的4.3教育

當世界公民教育與學校、社區和世界性的社區對接,在可以有實際體驗的環境下實施時,會更加有效。

4.3 歷史教育既是和平人權教育,也是世界公民教育和政治教育。因此,通過4.3 歷史教育,人們領悟到關注社區問題和關注國內外發生的各種矛盾的重要性。

克里克的報告顯示,通過與社區對接的公民教育,學生將來可以成長為具有公民意識、批判意識、責任心的積極公民。對於學校來說,地區社會可以通過這種教育方式共同承擔學校的公民教育。¹¹⁾

德國和南非的歷史教育特點之一是集體學習,採取公民教育方式。如果認為4.3 至今依然影響着濟州共同體,是現在和未來一代反省和教育的內容的話,那麼地區社會應該共同參與4.3教育。4.3 教育只有政府和民間攜手推進,獲得社會支持和認同,才能更加活躍。

5. 歷史串起記憶 被更多人瞭解

濟州4.3真相的查明,得益於市民社會一起同心協力。

正如“所有歷史都是現代史”所說的那樣,在1980年5月到1987年6,經過市民社會的長期抗爭,4.3真相查明的大門終於開始打開。分裂、冷戰、民主主義的歷史,只有和我們自己有關,凝聚成我們自己歷史的記憶,歷史纔會世代相傳。

從某種意義上說,我們都一直駐足在現代史的篇章前,我們戰勝悲痛,是重新和守護共同體的希望。

現在,我們應該把歷史當做我自己的歷史,看成我們的歷史,將其匯入基於和平、人權、統一、正義等普世價值的歷史長河中。

參考文獻

高炳憲(2009),《和平教育思想》,HAKJISA.

權貴淑(2006),《記憶的政治》,文學和知性史.

米爾頓邁爾(2015),《他們認為自己很自由》,Galapagos.

伯恩哈德·施林克(2015),權相熙譯,《過去的罪過》,SIGONGSA.

安秉直等10人(2005),《清算世界歷史》,藍色歷史.

李東基(2013)編著,《20世紀和平文本15選》,Acanet.

約翰·加通(2000年),《和平手段打造和平》,原野.

英國教育課程評價院(1998年)《克里報告,學校市民教育民主主義》,民主化運動紀念事業會.

聯合國教科文組織亞太國際理解教育院策劃翻譯(2015),《全球市民教育-新教育制》,翰林出版社.

濟州4·3事件真相查明和犧牲者名譽恢復委員會(2003),《濟州4·3事件真相調查報告》.

濟州特別自治道教育廳(2017),《青少年4.3走上和平之路》濟州特別自治道教育廳.

11) 英國教育課程評價院(1998),克里克報告,學校市民教育和民主主義,〈學校市民教育和民主主義〉,民主化運動紀念事業會。pp.24-25。

- 《濟民日報》4·3採訪組(1994),《濟州4·3訴說1》,全藝院.
- 《濟民日報》4·3採訪組(1994),《濟州4·3訴說2》,全藝院.
- 《濟民日報》4·3採訪組(1995),《濟州4·3訴說3》,全藝院.
- 《濟民日報》4·3採訪組(1997),《濟州4·3訴說4》,全藝院.
- 《濟民日報》4·3採訪組(1998),《濟州4·3訴說5》,全藝院.
- 崔浩根(2009),《德國歷史教育》,大橋出版.
- 帕裏達沙希德(2013),《2013年聯合國大會報告書 - 文化權利領域對歷史教科書和歷史教育的特別調查官報告書》韓民族21網站(2015.10.19.).
- 漢娜·阿倫特(2006年),金善旭譯,《耶路撒冷艾希曼傳》,HANGILSA.
- UNESCO(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 Han Sang-hee (2015),《濟州4·3歷史教育診斷和方向》,延世大學產學合作團,解決4·3的研究課題研究領域最終報告書, 185-219.
- Han Sang-hee(2019),《爲了以地區爲基礎的世界市民教育而開發中學社會課教學模式-以濟州地區爲事例》濟州大學博士學位論文.

■ 토론문

기억의 계승과 평화교육의 과제

- 제주4·3과 사람들 -

정내위(대만 2·28국가기념관 제1처장)

대만 228 사건과 제주 4·3 사건

2차 세계대전 종식 후 대만과 한국 모두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태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해 양국 국민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대만 천이(陳儀)정부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가 만연해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실업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결국 1947년 2월 28일 228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28사건이 발생 바로 다음 날(1947년 3월 1일) 제주 관덕정 앞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공포의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제주도민 중 많은 사람이 경찰의 총에 맞았고 6명의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의 총기 발포로 제주도는 수습 불가능한 혼란 국면에 빠졌고 이듬해인 1948년 제주 4·3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벌대와 무장대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극에 달했고 양측 간의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주 4·3 사건은 7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토벌대는 잔인한 양민학살과 진압을 일삼았고 사상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3년 한국정부가 공식 발표한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4·3 사건으로 2만 5천명에서 3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대만정부는 228 사건으로 1만 8천명에서 2만 8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합니다.

228사건과 제주 4·3 사건은 경찰이 시민들에게 총기를 발포한 사건으로 다수의 엘리트 지식인을 포함한 희생자 수가 부지기수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남겼지만 양국 모두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행히 세월이 흘러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그리고 양국 모두 민주화에 성공하면서 감춰진 역사의 진실이 점차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역사교육

글에서 저자가 말한 내용에 상당히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7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교육할 때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학생들은 당시 상황을 상상

해볼 수 있고 유가족들이 얼마나 지난한 삶을 살아왔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만 228 사건이든 제주 4·3 사건이든 역사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은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발표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 4·3 사건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까? 각급 학교나 기관 단위로 교육이 진행 됩니까? 아니면 장소를 지정해 시민들이 직접 그곳에 와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대만 역시 228 국가기념관에서 <진인도서관(真人圖書館)>이라는 명칭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 피해자나 유가족을 초청해 기념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경험한 사실을 나눔으로써 참여자들은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228 사건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228 국가기념관은 228 사건 피해자인 판무즈(潘木枝) 의사선생님의 아들인 판신항(潘信行)을 초청해 당시 겪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판무즈는 의사로 평생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또 군인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자이(嘉義)시장이었던 순즈권(孫志俊)은 폐에 고름이 차는 괴질에 걸렸지만 판무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판무즈는 228 사건에 연루되어 군인들에게 끌려가 고문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공개 총살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총살 명령에 서명한 사람 중 놀랍게도 판무즈가 목숨을 살렸던 순즈권시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판신항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로운 의사의 목숨을 무고하게 앗아가는 등 어지럽고 혼란스럽던 그 당시 시대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글에서 화해와 상생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¹⁾에서 2013년 상호 이해와 협력 하에 서로의 아픔을 함께 치유해나가는 약속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3일 한국 군경이 제주 4·3 희생자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는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의 228 사건은 총통이 일전에 사과를 한 것을 제외하고 군인을 포함한 가해자 집단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주처럼 가해자와 희생자가 악수하고 화해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두 단체가 화해하게 되었던 계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로 대립하던 두 단체가 어떻게 편견을 내려놓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까? 이를 본보기 삼는다면 대만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원문은 『濟州特別自治道在郷警友會』-<제주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니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로 보도되어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게임을 통한 역사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가장 난제입니다. 그들에게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우선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가정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게임’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역사에 노출되고 더 나아가 역사를 점차 이해하게 된다면 이 역시 괜찮은 교육방법이라 생각됩니다.

228 국가기념관과 타이베이시 정부교육국은 협력하여 함께 온라인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228 국가기념관을 찾은 어린이들은 태블릿 PC의 ‘퍼즐게임’을 하면서 228 사건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참관하고자 하였으며 어린이 친구들 역시 228 사건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게임산업이 발달한 국가로 이미 5G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제주 4·3 사건 관련 핸드폰 게임이나 태블릿 PC 게임을 개발한다면 다음세대가 제주 4·3 사건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난시의 탕더장기념공원

글에서 제주 4·3 사건 당시 용감한 제주도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도덕적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용기 있게 행동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228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타이난(臺南)시에 탕더장(湯德章)이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군에 체포된 후 자백을 강요당하며 엄청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타이난시 치안활동에 참여했던 시민과 학생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지식인이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탕더장은 ‘반란죄’라는 누명을 쓰고 공개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1998년 타이난시정부는 탕더장의 용기와 덕행을 기념하고자 그의 순국장소의 명칭을 <탕더장기념공원>으로 개명하였습니다. 2014년 타이난시장은 매년 3월 13일을 <타이난시 정의와 용기 기념의 날>로 제정하기로 선포하였고 이로써 탕저장변호사의 용기와 끈음을 기념하고 타의 귀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제주 4·3 사건의 배경, 경과 그리고 후속처리 과정 등을 알리는 것 외에도 제주 4·3 당시 의인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것 또한 제주 4·3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인의 이름을 딴 길을 제정하고 기념식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기념일을 제정하고 해당 기념일에 기념활동, 좌담회 등을 열어 선한 영향력과 긍정적 에너지를 널리 전달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 4·3 사건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與臺灣228相似的「濟州4·3」

二次世界大戰結束後，臺韓兩國均脫離了日本的殖民統治，人民也暫時擺脫了戰爭的恐懼，然而積弊未清，百廢待舉，面對新統治者的到來，歡欣鼓舞的背後，不免帶點些許焦慮。

來臺接收的陳儀政府因未能體察民情，加以貪污腐敗致使民生凋敝、失業問題嚴重，終導致於1947年2月28日，爆發了228事件。無獨有偶，就在228事件爆發的隔天(1947年3月1日)，韓國濟州島觀德亭前面亦響起了恐怖的槍聲，當天上街紀念「3·1獨立運動」的濟州島民，多人不幸遭警察開槍射擊，最後造成了6名民眾死亡，這起「警察開槍事件」為濟州島帶來了難以收拾的混亂局面，亦導致了隔(1948)年「濟州4·3」的爆發。

因討伐隊與武裝隊之間的意識形態對立致使雙方武力衝突不斷，這讓「濟州4·3」持續了7年多之久，而討伐隊強硬殘忍的屠殺鎮壓，更是使得傷亡人數大幅增加，根據2003年韓國政府所正式公布的真相調查報告書，「濟州4·3」約造成2萬5,000至3萬人死亡。臺灣官方推定228事件的死亡人數則為1萬8,000至2萬8,000人。

228事件與「濟州4·3」這2大歷史事件均肇因於官方開槍傷害平民，且兩事件爆發後，犧牲受難者眾，其中不乏優秀菁英與知識份子等，這為整個社會發展造成了無法挽回的巨大傷害，且兩事件真相亦長期遭禁錮於黑暗中，不得公開討論。所幸，後經眾人的努力，才得以隨著兩國民民主化的落實，逐漸揭露歷史真相的面紗。

講道理不如講故事

讀了這篇文章，我相當認同作者所提及的內容，尤其是在向年輕世代推行70餘年前的歷史教育時，若可透過當事者故事讓他們想像那個年代的生活情景，的確會讓青年學子更能感同身受遺族家屬是如何經歷那段艱苦的生活，進而產生共鳴，思考現在自己能做的事情，不論是臺灣的228事件，還是濟州4·3，在推廣歷史教育上，這都是非常好的方法。

這裡我想請教發表人，目前是如何進行濟州4·3的市民教育?對象有無限定?是到各個學校、機關單位去實施，還是有固定場所，讓市民們自行來參與?

在228國家紀念館，我們亦有類似的活動，活動名稱是「真人圖書館」，透過「真人圖書館」的辦理，邀請事件受難者或家屬，來到紀念館向民眾講述自身的故事，藉由他們親身經歷的分享，每每讓參與者更能理解、認識歷史，也拉近了與事件本身的距離。

今年1月，228國家紀念館邀請了228受難者潘木枝醫師的兒子潘信行到館分享他的故事，他說：「他的父親是醫生，一生救人無數，還曾經為國軍免費診治，甚至時任嘉義市長的孫志俊，因為怪病，導致肺部流膿，也是在潘木枝醫師的細心照顧之下，才得以活命。只是或許潘木枝醫師萬萬想不到，他會在228事件時，被國軍逮捕刑求，同時未經過審判，就遭公開槍殺，而這一紙槍殺命令的簽名者中，竟然也有他曾經救活的嘉義市長孫志俊。」從他父親的故事中，更讓人覺得時代的紛亂，無故讓一名仁醫喪失性命，無法繼續造福他人。

另外，文章當中多次提到和解相生，就我所知「濟州4·3犧牲者遺族會」與「濟州特別自治道在鄉警友會」於2013年發表了共同宣言，在相互理解與協助之下，誓言要治癒彼此的傷痛，而今年4月3日，韓國軍警也首次向濟州4·3受害者表達歉意，這點相當令人讚賞，因為臺灣的228事件，除了總統曾經道歉之外，加害者像是軍人等迄今尚未對228受難者及家屬表達任何歉意，更遑論會有像濟州島一樣，加害者與受害者能握手和解的情事。因此，想請教當初2團體能夠和解的契機為何？何以原本相互對立的團體得以放下成見，走上和解相生之路？或許這可以做為臺灣的一道借鏡，早日促成加害者與受難者之間的和解。

利用遊戲帶領青年學子認識歷史

在推廣青年學子教育之時，最困難的就是要如何吸引他們的注意，藉以帶領他們來認識離他們好幾十年前的歷史事件，除了學校老師或家庭成員的引導之外，若能透過「玩遊戲」的方式，讓小朋友自動自發地想要接觸，進而逐步瞭解過去歷史，似乎也不失為一種不錯的教育方式。

228國家紀念館與臺北市教育局合作，開發了線上互動遊戲，讓來到228國家紀念館的小朋友利用平板電腦的「闖關遊戲」，一步一步地來認識228事件，透過這樣的方式，大大吸引學校老師帶小朋友來館參觀的意願，小朋友也可以在愉快的學習環境中認識228事件。



(遊戲連結)

韓國遊戲產業發達，現在也已經進入了5G時代，或許未來可以試著開發濟州4·3的手機或平板遊戲，吸引年輕世代來接觸濟州4·3。

臺南市的湯德章紀念公園

文中提到濟州4·3當時有許多勇敢的濟州島民，在自己可能喪命的情況下，仍然發揮自我的道德勇氣，讓許多人得以倖免於難，這些故事著實讓人相當感動。228事件發生當時，臺南市也有一位湯德章律師，在遭國軍逮捕後，受到嚴刑逼供，但他最終仍舊沒有供出參與臺南市治安工作的民眾與學生名單，這讓許多知識份子免遭橫禍。後來，湯德章被羅織「叛亂」罪名，並遭公開槍殺身亡。1998年，臺南市政府將湯德章殉難之處，改名為「湯德章紀念公園」，藉以紀念他的德行與勇氣。2014年臺南市長更宣布，將每年3月13日訂為「臺南市正義與勇氣紀念日」，以紀念湯德章律師英勇堅韌的一生所表彰的精神典範。

因此，除了讓大家認識濟州4·3的背景、經過與後續處理情形之外，我認為讓更多人知道濟州4·3的義人故事，會有助於濟州4·3的教育推廣，所以設置義人之路或透過植樹來紀念，都是非常好的方式，甚至地方自治團體也可以制訂屬於該地區的紀念日，並在紀念日時舉辦紀念活動、座談等，將善的力量、正面的能量傳遞下去，讓更多人記住濟州4·3。

홀로코스트와 독일의 시민교육

최호근(고려대 사학과)

목 차

1. 홀로코스트 : 시간이 되어버린 장소
2. 지체된 계몽 : 기획을 통한 추월
3. 역사기반 시민교육의 생태계
4. 독일 민주시민 교육의 현재적 과제

1. Holocaust : 시간이 되어버린 장소



1) 잊어버린 인간문명의 시간 : 1945년 5월 8일



2. 지체된 계몽 : 기획을 통한 추월



1) 최초의 계몽 : 18세기

-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1784)에서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이렇게 밝혔다 :

“장교는 말한다. 따지지 말고 훈련하라!

세무공무원은 말한다. 따지지 말고 납부하라!

성직자는 말한다. 따지지 말고 믿어라! ...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성의 공적 사용은 언제나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이성의 공적 사용은 언제나 자유로워야 하며, 그런 사용만이 인간들에게 계몽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이성의 사적 사용은 종종 매우 좁게 제약되어야 한다. ...

그러므로 그의 상관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은 장교가 근무 중에

이 명령이 목적에 맞는지 혹은 유용한지 등을 시끄럽게 따지고 든다면,

이는 매우 나쁜 짓일 테다.

그는 복종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가 식자로서 전쟁에 복무하는 것의 오류에 관해 언급하고

이를 그의 공중이 판단하도록 발표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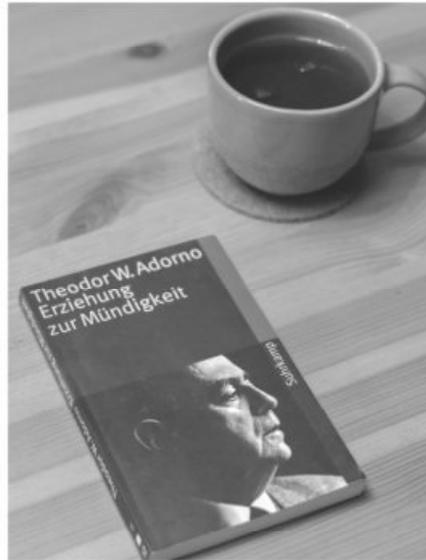
2) 고전적 계몽의 좌절 : 20세기

- 그로부터 157년 후인 1941년 10월 7일, 벨로루시 지역에서 작전을 전개하던 나치 독일의 제 691 보병연대 제1대대장은 휘하의 세 중대장에게 각 책임구역 내에 있는 유대인 민간인을 전원 사살하도록 구두 명령을 내렸다.
- 첫 번째 중대장은 명령을 즉각 수행했고,
- 두 번째 중대장은 거부했으며,
- 세 번째 중대장은 명령을 무시하고자 애썼으나 막상 자신의 요구대로 서면으로 명령을 전달받자 선임 부사관에게 이행을 명령하고 지휘소로 돌아 가버렸다.

2) 고전적 계몽의 좌절 : 20세기

칸트의 기준에서 볼 때,
벨로루시 전선에 투입된
세 명의 나치 독일군 중대장은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데
모두
성공했던 것일까?

3) 아우슈비츠 : 지체된 계몽의 새로운 시작



4) 아우슈비츠 이후 독일인에게 계몽이란 무엇인가? : 단절



4) 아우슈비츠 이후 독일인에게 계몽이란 무엇인가? : 인과응보



4) 아우슈비츠 이후 독일인에게 계몽이란 무엇인가? : 연루의식



4) 아우슈비츠 이후 독일인에게 계몽이란 무엇인가? : 가해자 의식



5) 아우슈비츠 이후 독일인에게 계몽이란 무엇인가? : 후진방지기어



3. 역사기반 시민교육의 생태계



1) 형사소추 : 기록의 추적과 축적



2) 기념시설 : 범죠헌장 보존 Buchenwald



3) 기념시설 : 기록센터 Berchtesgaden NS Doku-Center



4) 범죱현장 : 교육 Wannsee-Konferenz-Haus



5) 건축과 기념물 Das juedische Museum



6) 장소적 진정성에 기반한 전시 Topographie des Terrors



7) 일반 전시교육시설 Anne Frank Zentrum



8) 학교 밖 : 정치교육원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9) 학교 안 : 연방-주 교육부

Beutelsbacher Konsens

Überwältigungsverbot Kontroversitätsgebot Partizipationsgedanke

QUELL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ttp://www.bpb.de/die-bpb/51310/beutelsbacher-konsensblog>

The image shows a graphic with a dark grey background. At the top, the text "Beutelsbacher Konsens" is written in white. Below this, there are three white icons arranged horizontally. The first icon is a hand holding a gavel, representing the prohibition of coercion. The second icon shows two stylized human figures, one with a plus sign and one with a minus sign, representing the requirement of controversy. The third icon shows a person standing next to a ballot box, representing the principle of participation. Below each icon is its corresponding German label: "Überwältigungsverbot", "Kontroversitätsgebot", and "Partizipationsgedanke". At the bottom of the graphic, the word "QUELLE" is written in bold, followed by the name of the sourc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and a URL: "http://www.bpb.de/die-bpb/51310/beutelsbacher-konsensbl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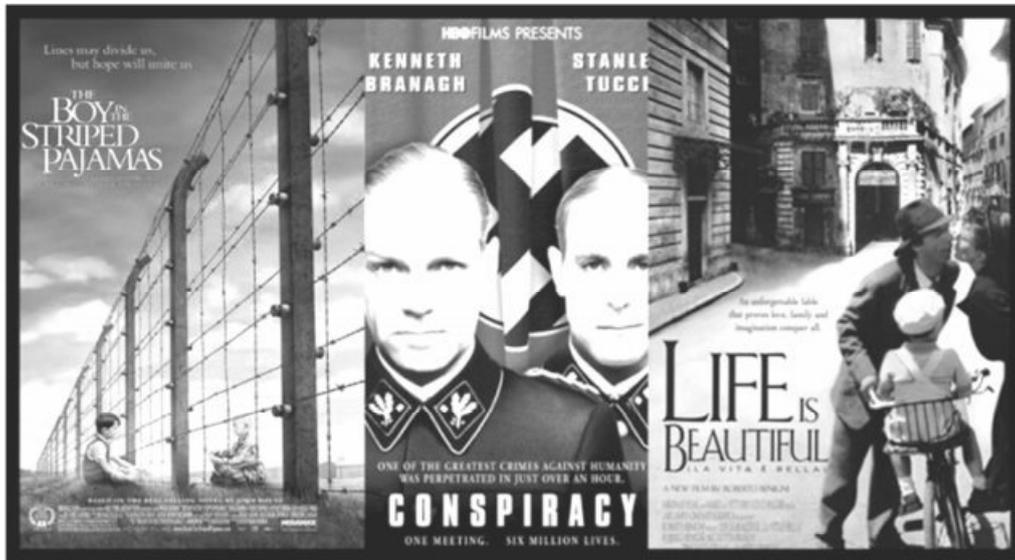
10) 순회전시 : 나치정규군 범죄 전시회 Wehrmachtausstellung



11) 유대인회와 재외 유대인



12) 언론출판과 매스미디어



13) 일상의 경관 Stolpersteine



4. 독일 민주시민 교육의 현재 과제



1) 되살아나는 반유대주의



2) 이중기억의 경쟁 : 옛 기억의 황혼화 구 동독(DDR) 독재 기억의 우세



3) 강성대국의 꿈 : 기억의 침식



4) 다민족사회 : 또 다른 방식의 과거사 교육



5) 과거사 피로 증후군



홀로코스트 교육의 미래 : 의미의 개방과 확장



■ 토론문

5·18민주화운동과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임광호(첨단고등학교 교사)

최호근 교수님의 발제문을 잘 읽었다. 발제자는 오래 전부터 역사학자로, 시민교육의 연구자로 명성이 깊은 분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재)5·18기념재단의 ‘오월교육원칙’을 개발하는 작업에 같이 참여한 바가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발제자의 학문에 대한 깊이와 진지함, 그리고 꼼꼼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익히 알고 있다. 특히 발제자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 발제자의 글은 홀로코스트를 기반으로 한 독일의 시민교육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는 부끄럽지만 토론자로서 독일의 시민교육에 대해서 발제자와 겨룰 깊이가 없다. 따라서 나는 발제자의 글이 5·18민주화운동을 겪은 우리 사회의 시민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5·18민주화운동과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역사는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 인간(행위 주체자, 사건)으로 구성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형된다. 공간은 더 이상 그날의 기억을 담지 못하고, 인간의 기록이나 기억 또한 온전한 실체를 담지 못한다. 더구나 기록이나 기억이 그 주체에 따라 언제든 훼손이나 왜곡, 심지어 멸실되기까지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과거 사실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늘 외롭고 고독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실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빛을 지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책임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또한 마찬가지이다. 불과 39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날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광주시민이 당시 80만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 그날의 현장은 이미 오래 전에 훼손되고 변형되었으며 경험 세대보다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더 많아졌다. 그러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왜곡된 기록과 기억이 국민의 대표기관에서조차 난무하는 형편이다. 우리는 이 또한 오월의 역사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월에 빛을 졌다. 독일인들이 홀로코스트가 야만의 시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새로운 0시가 되었다면, 한국사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해방 이후 오랜 독재로 인한 야만의 시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하는 민주화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살아남은 자들은 실존의 문제로서 그날을 기억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 5·18민주화운동과 한국 사회 계몽

나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계몽은 ‘깨몽’-꿈에서 깨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알아차림, 즉 과거에 대한 성찰에서 온다. 일종의 의식의 혁명 또는 진화라고 할까?

홀로코스트가 독일인들에게 범죄적 과거와의 단절,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벌인 거대한 범죄 행위사슬의 출발점이자 그 행위사슬에 내가 가해자나 방관자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의 인식, 국가와 민족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아닌 헌법에 대한 충성을 깨닫게 해주었다면, 5·18민주화운동이 한국사회에 가져온 계몽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첫째, 5·18민주화운동의 원인이 미군정과 이승만 친미정권에서 일제 식민주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 밑에서 성장한 군부독재 세력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역사인식을 가져왔다. 이는 80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부단히 이어져 온 일제 식민 잔재 청산의 요구와 미국에 대한 재인식을 가져왔다.

둘째, 동학농민전쟁과 3·1혁명, 4·19민주혁명에 이어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다시금 인식하게 해 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민중이 더 이상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는 점과 통치의 대상이 아닌 권력의 주체로서 부당한 국가 권력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각성을 불러 일으켜 6월민주항쟁과 촛불 혁명으로 이어져 왔다.

셋째,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넷째, 광주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은 이후 우리 자신을 보다 냉철하게 바라 볼 수 있는 이성을 갖게 했으며 한국 사회를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받는 모든 세계인들과 연대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국내에서는 제주의 4.3과 강정, 부마, 노근리, 세월호 유가족들과 연대하였고 비엠티남전에서 벌어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갖도록 만들었다. 대만의 2.28에 대한 관심 또한 마찬가지다.

3. 한국의 역사교육과 시민교육

역사교육은 과거사실의 기록과 기억의 소환으로부터 시작된다.

독일이 홀로코스트 이후 국가적 범죄와의 결별을 위한 범죄현장의 보존과 복원, 형사소추 기록의 축적과 정리, 그리고 범죄현장과 범죄추적 기록의 교육적 가공, 후대에게 경고하는 각종의 상기기념물(Mahnmal), 전시, 연방교육정치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된 정치교육, 각 주의 교육부장관 협의체(KMK)를 통한 부담스러운 과거사 교육의 지침의 제공과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한 교실에서의 난장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우리의 역사교육과 시민교육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시민교육으로서의 역사교육을 고민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고, 민주시민교

육이 교육부 정책으로 자리 잡은 것도 올해부터이다. 현장의 교사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시민교육에 대해 아직도 사회교과와 교과서 지식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눈치이다. 다행인 것은 사회 이슈를 주제로 한 토론수업이나 논쟁적 역사 수업에 대한 고민이 소수의 교사에 불과하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이 어렵게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학교는 80년 민주화투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교사들이 늘었다. 이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은 가르치기 버거운 주제이다.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가르쳐야 한다는 특별한 열의도 부족한 듯 싶다. 자신의 실재적 존재가 80년 오월에 빛을 지고 있다는 성찰은 여러모로 부족해 보이고, 역사교육이 훌륭한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임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쓰지 못하고 있는 듯 싶다. 따라서 그 동안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인정교과서와 많은 수업 보조 자료들의 개발과 보급, 교사 연수가 있었지만 여전히 지역을 벗어나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다. 더구나 광주 지역에 남아 있는 역사현장마저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구 전남도청은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훼손되어 복원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고, 상무대 영창의 이전과 복원과정에서 살아남은 것은 나무 판재 하나에 불과하다. 곧 개발이 예고되어 있는 505보안부대 역시 이 같은 운명에서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폄훼, 왜곡과 같은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의 잔재들이 망령처럼 살아나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의 삶과 역사를 옥되게 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교육과 시민교육의 민낯으로 보여져 자꾸 부끄러워진다. 기록과 기억을 교육 현장으로 소환하는 작업이 더욱더 중요하다.

4. 한국 시민교육의 현재적 과제

우리 교육은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기본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이 역할에 충실했을까?

교과서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여겼던 것은 아니었을까? 시민교육 연구자들은 한결같이 사회참여가 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1980년 오월 광주공동체는 불과 열흘에 불과했지만 시민들이 권력의 주체라는 점과,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참여’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80년 오월 광주 시민들은 분수대 앞 광장에 모여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했고, 주먹밥과 피를 나누었으며, 4,200여정이 넘는 총기가 있었으나 한 건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심지어 생면부지의 다른 이를 구하기 위해 죽을 줄 알면서도 총알이 쏟아지는 도로 위로 나섰다. 오늘 날 한국의 시민교육은 독일이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고, 프랑스가 프랑스혁명과 파리코뮌을 중요한 자산으로 하듯 80년 광주 오월공동체가 갖는 의미를 교육 과정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사들의 책무를 환기시키고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오월의 정신과 가치를 반영한 학교시민사회와 마을 공동체, 지역사회와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시민교육은 80년 오월의 공동체를 기억하고 복원시키는 ‘5·18교육’이어야 한다.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 학술교류포럼]

아시아의 기억과 기념: 연대와 교류

 A I C I C · A I C I I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 시 아 문 화 원
Asia Culture Center Asia Culture Institute

아시아의 기억과 기념: 연대와 교류

■ 발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김호균(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구교류과 전문위원) ————— 385

베트남 여성박물관

보존과 문화교류를 위한 센터

Le. Cam Nhung (Vietnamese Women's Museum 연구원) ————— 399

해방전쟁 박물관

Rezina Begum (Liberation War Museum 연구원) ————— 443

Tuol Sleng Genocide Museum

1979-2019-Future

Song Pheaktra (Tuol Sleng Genocide Museum 아카이브부장) ————— 455

■ 토론

4·16 기억저장소 ————— 46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473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 477

제주 4·3평화재단 ————— 491

노근리평화공원 ————— 497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503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 507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 학술교류포럼]

국가폭력의 청산과 정의

5·18과 전지구적 차원의 이행기정의

발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김 호 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구교류과 전문위원)

베트남 여성박물관

보존과 문화교류를 위한 센터

Le. Cam Nhung

(Vietnamese Women's Museum 연구원)

해방전쟁 박물관

Rezina Begum

(Liberation War Museum 연구원)

Tuol Sleng Genocide Museum

1979-2019-Future

Song Pheaktra

(Tuol Sleng Genocide Museum 아카이브부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ACC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기본 방향

도시의 재생 + 아시아 국가와 동반성장

- 소통과 창조
- 삶의 의미
- 성장동력
- 문화 도시

문화가 도시의 중추적 기능이 되고 특징이 되는 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2026년)
20년 장기 국책사업(2004~2023년 / 5.3조원)

단위: 억원

구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전체계획	27,679(52%)	7,896(15%)	17,337(33%)	52,912(100%)

왜 광주인가?

광주와 아시아

- 통과 연대** 아시아 국가도시와의 소통과 연대의 창구 역할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으로 아시아 국가간 연대의 소통의 핵심 역할
- 방과 수용** 개방과 수용을 통한 아시아 문화와의 만남 및 연결
근대문물의 수용=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으로
아시아문화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전
- 국제화** 문화의 성숙과 확장을 통해 속의 국제교류의 거점화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16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문화적 교류를 통한 국제도시로 성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기본방향

도시의 재생 + 아시아국가와 동반 성장

-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공동체가 공존 상생하는 문화공동체로 발전 -

삶의 질 향상

경제적
수익창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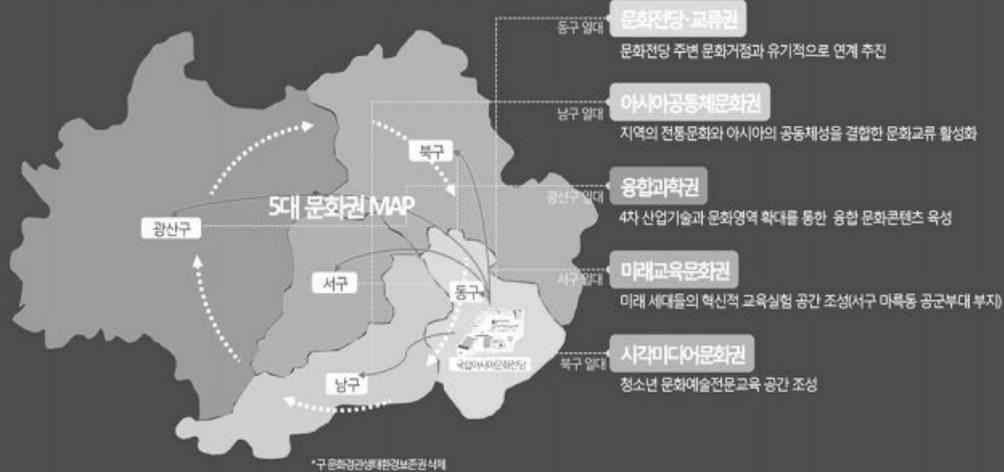
아시아 지역 내
문화적 정체성 공감대 형성
아시아 문화의 이해 증진

아시아 지역 외
아시아문화의 재발견을 통해
다양한 교류기반 조성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 5대 문화권

[작동원리] : ① 문화전당권의 우선 집중 문화에너지 집적, ② 문화전당교류권을 통한 문화에너지 확산
③ 5대 문화권의 문화에너지 순환, ④ 도시 전체의 문화에너지 순환·축적·재생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추진체계



02

A I C I 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SIA CULTURE CENTE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1. 개관 및 시설현황
2. 미션과 비전
3. 운영체계 및 기능 흐름도
4. 관람객 및 방문객 현황
5. 프로그램 현황
6. 창제작 및 레지던시 현황
7. 연도별 예산 현황
8. MOU 체결 현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건립 추진일정



부지 134,815㎡
연면적 161,237㎡
지상 4층, 지하4층
주차장 총 1,152대
(내부 550대, 부설 602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현황



민주평화교육원

- 옛 전남도청의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장
-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현장
- 옛 전남도청 본관·회의실·벨라 옛 전남경찰청 본관·민원실, 상무관 등 총 6개의 보존건물로 구성



어린이문화원

- 아시아 문화 기반으로 어린이 문화콘텐츠 제작·유통
- 어린이극장: 100석 규모의 어린이 전용 공연장
- 어린이도서관: 국내·아시아 각국의 어린이 책 열람
- 어린이체험관: 4822㎡ 규모의 아시아문화 체험공간
- 유아놀이터, 어린이창작실습실, 다목적홀 등 위치



문화정보원

- 아시아의 다양한 연구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열람
- 라이브러리파크: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의 기능이 복합된 신개념 라키비움(Lockium)
- 극장3: 224석 규모의 강당형 공연장
- 아시아문화연구소, 국제회의실, 대나무정원 등 위치



예술극장

- 대중성과 예술성을 담은 콘텐츠를 선보이는 공간
- 극장1: 최대 1120석 규모의 가변형 블랙박스 공연장
- 극장2: 512석 규모의 액자형 공연장



문화창조원

- 융합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웹 기반의 콘텐츠 창·제작 공간과 전시실로 구성
- 복합1~6관: 축구장 13배 규모(9,352㎡)의 대형 전시공간
- ACT스튜디오: 연구개발을 위한 랩 공간과 창·제작을 위한 37개의 스튜디오 구성



야외공간

- 아시아문화광장, 하늘마당, 열린마당 등
- 시민에게 개방된 열린 공간
- 축제, 휴게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션과 비전

설립목적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미션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의 교류와 창조의 플랫폼

비전

아시아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예술기관

비전 슬로건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窓

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체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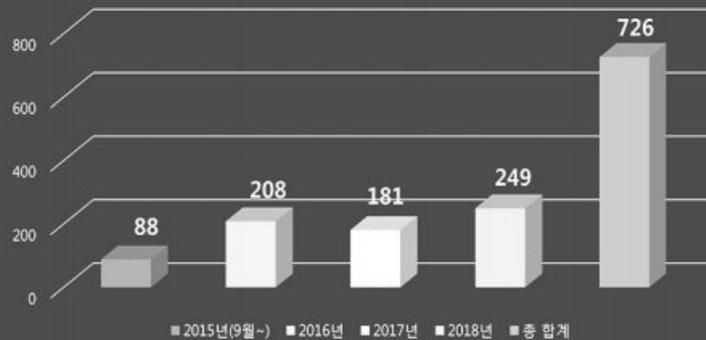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능 흐름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현황

(단위 : 만명)

	2015년(9월~)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관람객 수	88	208	181	249	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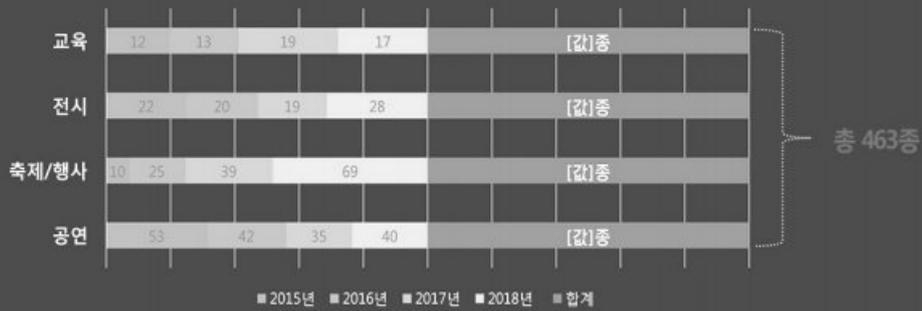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로그램 현황

(단위: 종수)

구분	2015년(9월~)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공연	53	42	35	40	170
축제/행사	10	25	39	69	143
전시	22	20	19	28	89
교육	12	13	19	17	61
누계					463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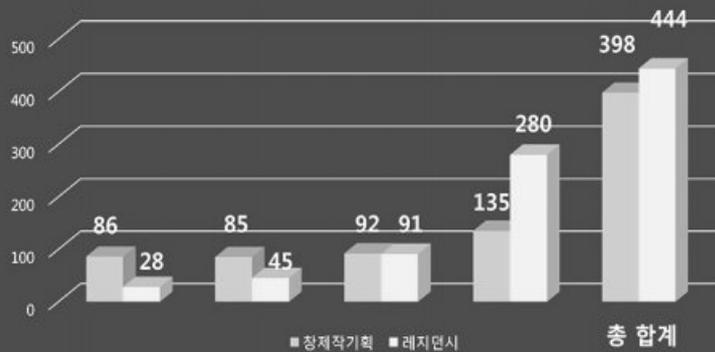


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 및 레지던시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년(9월~)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창제작/기획	86	85	92	135	398
레지던시 인원	28	45	91	280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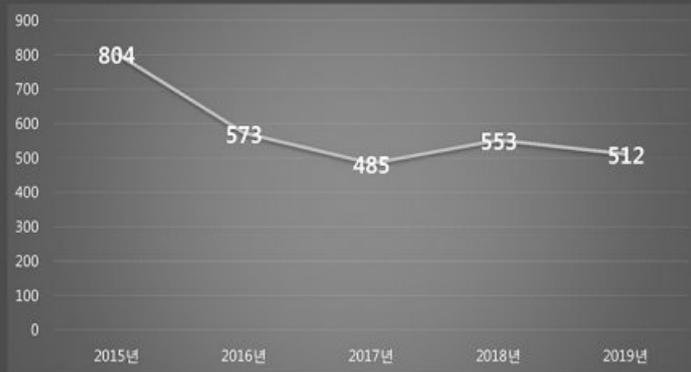


1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현황 - 연도별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804	573	485	553	512



1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현황 - MOU 체결

연도별 체결현황

(단위 : 건)

구분	2015년(9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3월)	합계
MOU	3	22	21	10	2	58
국내	1	16	10	2	2	31
해외	2	5	9	4	0	20
다자간	-	1	2	4	0	7

주요 체결기관

- 국내 : 광주신세계, 호남지방통계청,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광주지방 보건청, 장성 육군보병학교 등
- 해외 : 프랑스 팔레드 드 도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위원회(MOWCAP), 구글아트인스티튜트, 미안마 종교문화부 등
- 다자간 : 광주과학기술원-국립광주과학관-아시아문화원, 광주본부세관-광주비엔날레재단 등

15

민주평화교류원 소개

1. 지향성
2. 구성
3. 기능 및 역할
4. 5.18민주평화기념관
5. 문화교류협력

지향성 :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연대 및 예술적 승화

아시아 근대화 과정의 경험의 공유와 보편적 가치 발견

식민주의의 경험과 극복,
국가 수립과 제도화 등 발전과정에서의
경험의 공유와 민주, 인권,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를 발견

경험과 가치의 문화적 재현과 예술적 승화

다양성과 공존, 상호 이해와 공감, 포용과
치유 과정이자 결과로서의 문화예술
창·제작과 교류

아시아인들의 생각, 유머와 감각이 담긴 문화를
새로운 하이브리드 예술세계로 재창조하여
세계와 감응하고 공유하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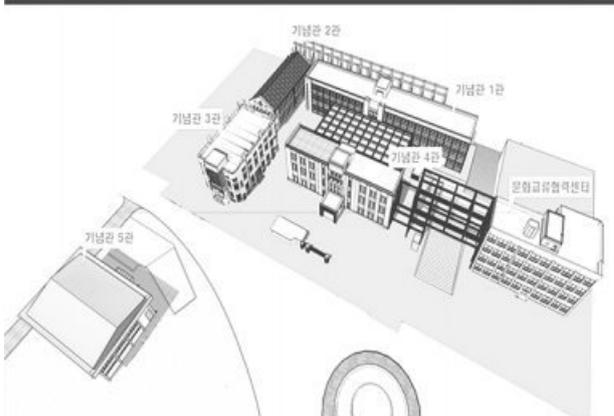
민주평화교류원 개요



- 기능 및 역할
 -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연대·교류 소통하는 교류협력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 5.18민주화운동에 내재된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을 전파 확산하고 아시아와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확산
 - 연구 및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17

민주평화교류원 구성



- 5.18민주평화기념관
 - 5.18 열흘간의 이야기를 담은 상설전시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 공유
- 문화교류협력
 - 아시아 각국 정부 및 문화예술기관(단체)과의 협력 프로젝트 중심 네트워크 구축
 - 국제개발협력(ODA) 및 아시아문화 발전의 토대 마련

18

5.18 민주평화기념관 전시콘텐츠

구분	주제	내용	서사구조
기념관1관 (경찰청본관)	서사 도입과 연대기적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8민주화운동의 공간으로 Shift Introduction & 장소에 대한 入門儀式 1980년 5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일들 본수대 집회: 5월 15일 민주화 요구 시민 켈불성회 5월 16일부터 25일까지의 상황 전개 inform 5월 18일, 19일,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사건 목격 5월 20일 금남로 차량시위 [광주서사의 제1 변곡점] 5월 21일 금남로 집단발포 상황 [광주서사의 제2 변곡점] 	기(起)
기념관2관 (경찰청민원실)	절대공동체를 일구어낸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21일 ~ 25일 '해방광주', 절대공동체의 환희 	승(承)
기념관3관 (도청회의실)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한 '죽음의 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26일, 광주 마지막 날 TNT 상징 조형물 + 탱크 상징 조형물 죽음의 행진(브론즈) 	전(轉)
기념관4관 (도청본관)	마지막 날 도청에 남은 사람들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27일 새벽, 최후까지 도청에 남은 사람들의 숨소리 27일 새벽 마지막 가두방송 27일 새벽 창가에 서 있는 사람들, 도청 본관에 남은 148명의 이야기 	결(結)
기념관5관 (상무관)	국내외로 확산된 5.18과 희생자 추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쟁 당시 시신 안치 장소에 대한 추모 오월 광주로부터 국내/해외로 퍼져나간 시간의 파장 오월 광주, 절대공동체의 환희 	POST

19

5.18 민주평화기념관 전시콘텐츠



#1 광주로 가는 길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전
광주가 겪은 근대 100년의 역사, 배경,
의미 소개 및 연결.



#2 5월엔 만인의 얼굴이 눈부시다

전시장 실내 3개층을 관통하는 상징 조형물로,
광주시민을 비롯한 국내외 시민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지닌.



#3 봉인된 시간, 1979-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이하기 전에 종과 마음을
침묵시키는 등 '정감'을 형성화하는 체험 미디어
아프로 구성되어 있음.



#4 빛의 정거장

5월 16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켈불성회
(5.18 새벽을 일컫는 집회)를 표현함.

20

5.18 민주평화기념관 전시콘텐츠

#5

광주를 지나간 시간
: 5월 18일-27일



5·18민주화운동의 10일간의 전체 내용을
강화자 증언·공주인중형정사보전인물
일지별로 구성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음 존(Zone)에서부터 전개될 전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

일요일의 아우성,
5월 18일



5월 18일,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의 사건 목격.

#7

20일 화요일 저녁의
헤드라이트



5월 20일, 금남로 차량시위.

#8

21일 13시 0분의
애국가



5월 21일, 금남로 집회발모.

*여기까지 몇 천여남도 경찰과 분관입니다.
몇 천여남도 경찰과 헌원살인으로 이어집니다.

71

문화교류협력 아시아 권역별 예술커뮤니티

아시아 전통

음악·신화설화·무용·전통연화영상

테크놀로지



아시아스토리텔링위원회
한·중앙아5개국/사나리오, 그림책, 스토리공연

아시아전통음악위원회
한-ASEAN10개국/ATO, 퓌처콘서트

아시아무용위원회
한·동남·남아13개국/ADC, 안무가LAB

※ 전통연희, 영상 커뮤니티는 구축 준비 중

22





목차	
박물관 소개	
문화유산 보존 및 장려	
문화교류의 가교	
대중과 함께하는 베트남 여성박물관	



Bảo tàng Phụ nữ Việt Nam
 Vietnamese Women's Museum
 Musée des Femmes du Vietnam



박물관 소개

Nhung Le, 베트남 여성박물관

박물관 소개

베트남 여성박물관은
베트남 여성연맹이
운영하는 젠더 박물관이다.



1990년 박물관 모습



2010년 개장공사 후



박물관 소개

기능

- 베트남 여성과 베트남 여성연맹의 유/무형적 역사 유산과 문화유산을 연구, 보존 및 전시

임무

- 역사 및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들의 지식과 이해를 증진
- 당대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여성 문제의 반영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공동체들과 대화 및 토론의 장 마련



제2부



Bảo tàng Phụ nữ Việt Nam
Vietnamese Women's Museum
Musée des Femmes du Vietnam

문화유산 보존 및 장려

Nhung Le, 베트남 여성박물관

역사 및 문화유산 발굴

- 베트남 여성박물관 직원들은 베트남 전역을 돌면서 유물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다.
- 현재까지 40,000여점에 달하는 자료와 유물을 수집하였다.



문화유산 보존

- 우리 박물관은 1) 종이류, 2) 영상/사진, 3) 옷감류, 4) 뼈/상아/뿔, 5) 도자기, 6) 금속류 등 6개 주요 분야의 수장고를 보유하고 있다.
- 수장고에서 주기적으로 보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상설 전시 또한 개최하고 있다.



상설 전시

- 베트남 여성박물관은 상설 전시를 통해 문화적 전통, 사회 문제 및 당대의 생활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이는 베트남 여성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경의를 표하는 작업이다.



주제: "가정 속의 여성"

상설 전시

결혼 예식과 풍습을 통해 베트남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주제: "가정 속의 여성"



며느리에게 청혼할 때 썼던 베텔 쟁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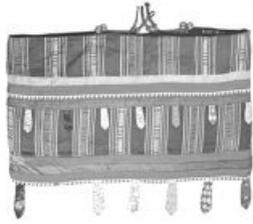
나비 모양 단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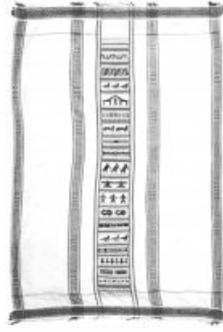
은제 목걸이

상설 전시

주제: "가정 속의 여성"



결혼식용 칸막이,
검정 태극식 문양



신랑 신부의 얼굴을 가릴
때 사용했던 천



도교 점술서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상설 전시

출생 및 가정생활의 예식과 풍습을 통해
베트남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낫

통발



도교 그림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상설 전시

주제: "여성의 패션"

창의력과 손재주가 돋보이는 베트남 여성들이 창조해 낸,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치마



아플리케(장식)



상설 전시

검게 칠한 이빨



절구



라임 단지



문화행사 및 활동 주관

장인과 함께하는 자연 염색 워크숍



태국계 소수민족 요리 소개

문화행사 및 활동 주관

전통음악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베트남의 소리” 공연 등 개최



아오자이 패션쇼 축제

여성 문화의 가치를 토론하기 위한 포럼 개최

“시장의 이야기” 전시는 사람들의 어릴 적 기억은 물론 과거와 현재의 삶을 되새기면서, 하노이 문화의 전형인 시장의 변화와 몰락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Bảo tàng Phụ nữ Việt Nam
National Museum of Vietnam
Phụ Nữ Viện Việt Nam

여성 문화의 가치를 토론하기 위한 포럼 개최

“노점상” 전시는 길거리 상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점상의 이미지는 하노이의 전형적인 문화 요소이다.



Bảo tàng Phụ nữ Việt Nam
National Museum of Vietnam
Phụ Nữ Viện Việt Nam

여성 문화의 가치를 토론하기 위한 포럼 개최



베트남 여성박물관에서 진행된 공연을
관람하고 무당과 함께 토론하는 장면이다.



Bảo tàng Phụ nữ Việt Nam
Vietnam Women's Museum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어머니 여신에 대한 신앙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문화가치 홍보

박물관 기념품샵



장애인들과 소수민족 여성들이 만든 전통 수공예품을
소개한다.



Bảo tàng Phụ nữ Việt Nam
Vietnam Women's Museum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다양한 방법을 통한 문화가치 홍보

오디오 가이드



57개의 이야기를 3개 국어로 안내 :
영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Bảo tàng Phụ nữ Việt Nam
Vietnam Women's Museum
190 Nguyễn Huệ, Quận 1, TP. HCM

다양한 방법을 통한 문화가치 홍보

출판물



Xuất bản phẩm
do Bảo tàng thực hiện

베트남어, 영어, 프랑스어



Bảo tàng Phụ nữ Việt Nam
Vietnam Women's Museum
190 Nguyễn Huệ, Quận 1, TP. HCM

다양한 방법을 통한 문화가치 홍보

출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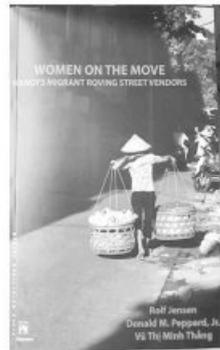
이 책은 베트남 여성들의 혼을 담고 있는
베트남 전통종교에 대해 소개한다.

박물관 카탈로그를 통해 새로운 상설전시회의
자세한 이야기와 전시품들을 볼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문화가치 홍보

출판물



“거리의 상인” 전시에서는
하노이 거리의 일일 노동자들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여준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된 책자와 가이드북



다양한 방법을 통한 문화가치 홍보

박물관 커피와 차



방문객에게 베트남의 전통음식과 음료를 소개하는 완벽한 장소이다.



교육 프로그램

베트남 여성박물관은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학생들이 문화적 가치를 보다 잘 알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시설로 가족과 학교 단위 방문객들이 자주 방문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학생 대상 쌍방향 소통 투어
운영



교육 프로그램

디스커버리 룸



옷감에 무늬 입히기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삿갓(야자수염 삿갓)은 예로부터
베트남 사람들의 상징이다.



장인과 함께하는 삿갓 만들기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전통 악기 배우기



쌍방향 예술 체험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는 베트남 여성박물관

Nhung Le, 베트남 여성박물관

문화교류 전시 및 행사

한국 제주도의 전통문화 공간에서
진행 된 '어머니 여신 찬미' 공연



하노이에서 개최된 스리랑카 문화 축제



문화교류 전시 및 행사



베트남 여성박물관에서 개최된 '베네수엘라 여성과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의 이유' 전시회



'아시아인 - 문화의 색' 전시회



문화교류 전시 및 행사

베트남 여성박물관 '한국 전통문화 주간'



탈춤 공연



종이 핸드북 만들기



문화교류 전시 및 행사



'정글의 소금' 전시



'다채로운 유산, 싱가포르 탐방' 전시



문화교류 전시 및 행사

후쿠시마 축제



'일본 전통인형' 전시



교류 프로그램

한국 CPI(문화동반자) 프로그램에 참가중
인 베트남 여성박물관 직원



호주, 미국, 영국 및 일본 등의 국제
자원봉사자들을 환영합니다.



Bảo tàng Phụ nữ Việt Nam
Vietnamese Women's Museum
Musée des Femmes du Vietnam

제4부



Bảo tàng Phụ nữ Việt Nam
Vietnamese Women's Museum
Musée des Femmes du Vietnam

대중과 함께하는 베트남 여성박물관

Nhung Le, 베트남 여성박물관

관람객 의견

아주 유익하면서도 여성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멋진 박물관입니다.

대단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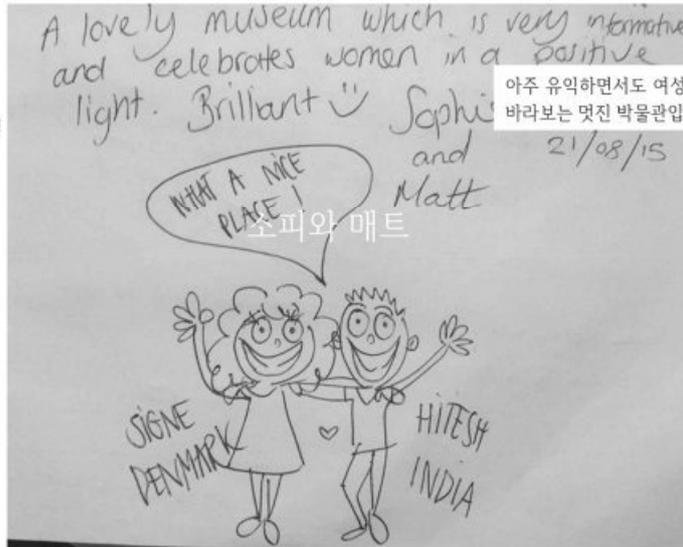
소피와 매트

2015년 8월 21일

말풍선 내부: 정말 멋진 곳이네!

시네 (덴마크)

히테시 (인도)



아주 유익하면서도 여성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멋진 박물관입니다. 대단해요~



관람객 의견

"Don't miss this museum" "놓치면 안되는 박물관" MỚI

👍👍👍👍👍 Đã đánh giá vào 2 ngày trước

Google Dịch

This is a large museum which covers women's culture in Vietnam, and includes many different tribes in Vietnam, as well...

Thêm * 이곳은 베트남의 여성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소수민족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커다란 박물관입니다.

Hữu ích? 👍 Cảm ơn John A

Báo cáo

John A. (캘리포니아 버클리)

"Amazing insights into the lives of Vietnamese women" MỚI

👍👍👍👍👍 Đã đánh giá vào 2 ngày trước 📄 qua di động **"베트남 여성들의 삶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

Google Dịch

This excellent museum takes a social history approach that illuminates the lives of Vietnamese women and families. Curation is of...

Thêm * 이 박물관은 베트남 여성과 가족들의 삶을 사회역사적 접근법으로 조명하고 있는 대단한 곳이다...

Hữu ích? 👍 Cảm ơn Janet B

Báo cáo

자넷 B. (뉴질랜드 웰링턴)



관람객 의견

2014년도 트립어드바이저 우수상 수상

트립어드바이저 아시아 상위 25개 박물관 중 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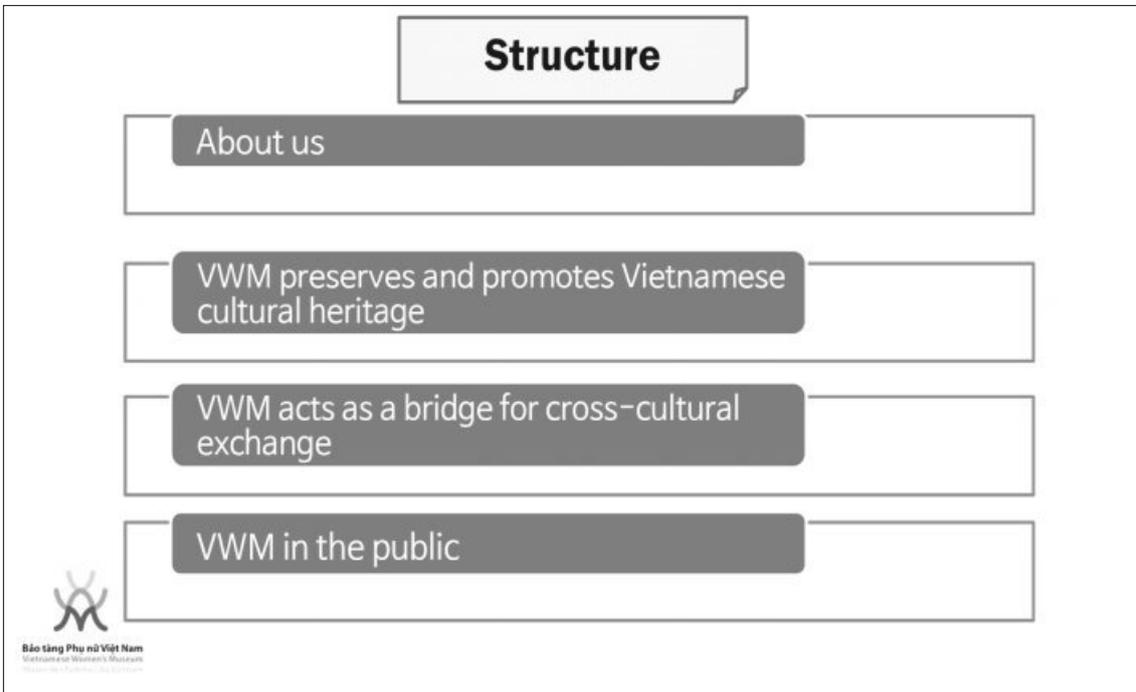
베트남 최고 인기 방문지



후속 단계

- 젊은 세대와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체험프로그램 구성에 주력
- 국제 파트너와의 문화교류 및 협업 촉진
- 평등과 성장 그리고 평화를 위해 베트남 여성과 세계 여성 간 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되도록 베트남 여성박물관의 발전도모





Part 1



Bảo tàng Phụ nữ Việt Nam
Vietnamese Women's Museum
Musée des Femmes du Vietnam

About us

Nhung Le, VWM

About Us

The VWM is a gender museum and run by Vietnam Women's Union



1990



Last renovation 2010



About Us

Function

- Research, preservation, and display of tangible and intangibl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s of Vietnamese women and VWU

Mission

- To enhance public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cultural heritage
- To reflect women's issues in contemporary life
- To create dialogue and discussions with the commun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t 2



Preserves and promotes cultural heritage

Nhung Le, VWM

Finding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 The staff at VWM travel all over Vietnam to collect objects and their stories
- Nearly 40,000 materials and objects have been collected to date



Preserves cultural heritage

- We have 6 main storage sections for the following materials:
 - 1) paper;
 - 2) film/picture;
 - 3) textile;
 - 4) bone/ivory/horn;
 - 5) ceramic;
 - 6) metal
- Periodical preservation in the storage and permanent exhibition



Permanent Exhibition

- The Permanent Exhibitions at the VWM provide much information on cultural traditions, social issues and contemporary life.
- It is a tribute to the role which Vietnamese women have played in history, family and continue to play in contemporary life.



Topic: "Women in family"



Permanent Exhibition

Tells stories of Vietnamese women through rituals and customs in marriage



Topic: "Women in family"



Betal tray for the proposal to the daughter in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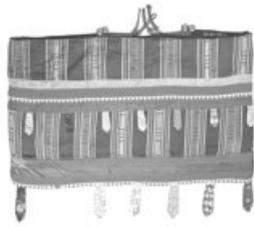
Butterfly-shaped butt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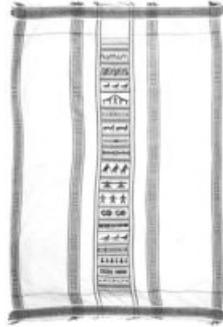
Silver torque

Permanent Exhibition

Topic: "Women in family"



Wedding screen, Black Thai



Cloth used to cover the heads of the couple at the wedding



Divinatory Taoist manuscript



Permanent Exhibition

Tells stories of Vietnamese women through rituals and customs in childbirth and family life



Rice knife

Fishing trap



Taoist painting



Permanent Exhibition

Topic: "Women's fashion"

Showcases products full of national cultural identity created by Vietnamese women with their creation and dexterity...



Skirt



Applique



Permanent Exhibition

Lacquered teeth



Mortar



Lime pot



Organizes Cultural Events and Activities

Natural dyeing workshop with artisan



Introduce Thai minority group cuisine to the public

Organizes Cultural Events and Activities

Organize shows like “Vietnamese Timbre” to introduce traditional music to the public



Festival Ao Dai show



Creates a forum to discuss culture values relating to women

“Story of Markets” Exhibition reminded people of their childhood memories, life in the past and the present as well as their anxiety and concern on the changes and the disappearance of marketplaces - a typical cultural aspect of Hanoi.



Creates a forum to discuss culture values relating to women

“Street Vendor” Exhibition gave a platform for street sellers to share their stories



The image of street vendors is considered a typical cultural aspect of Hanoi.



Creates a forum to discuss culture values relating to women



The practice of the belief in Mother Goddesses has been recognized by UNESCO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ttending performance and discussing with the spirit medium at the VWM



Promotes culture values through many ways

Museum shop



Introduces products from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ethnic women. They are traditional handcraft products



Promotes culture values through many ways

Audio Guide



Including 57 stories in 3 languages:
English, French and Vietnamese



Promotes culture values through many ways

Publications



Xuất bản phẩm
do Bảo tàng thực hiện

In Vietnamese, English, French

Promotes culture values through many ways

Publications



The museum catalogue accurately reflects stories and highlight objects of the new permanent exhib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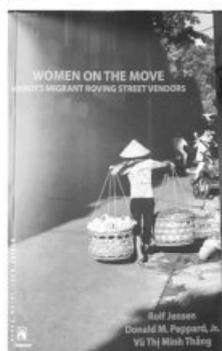
The book introduces about Vietnamese traditional religion which engages with the Vietnamese women's soul.



Bảo tàng Phụ nữ Việt Nam
Vietnam Women's Museum

Promotes culture values through many ways

Publications



The "Street Vendor" exhibition tells the moving stories of Hanoi street vendors day to day lives and work

Guide book and brochure in Japanese and Korea



Bảo tàng Phụ nữ Việt Nam
Vietnam Women's Museum

Promotes culture values through many ways

Museum Coffee & Tea



An ideal space to introduce Vietnamese traditional cuisine and drink for visitors



Organizes education program

The VWM has become a frequent destination for families and schools by providing fruitful educational programs, helping children and students discover and understand more about cultural values.



Organizes education program



Running interactive tours for students



Bảo tàng Phụ nữ Việt Nam
198 Nguyễn Huệ, Quận 1, Thành phố Hồ Chí Minh

Organizes education program

Discovery Rooms



Workshop of making patterns on fabric



Bảo tàng Phụ nữ Việt Nam
198 Nguyễn Huệ, Quận 1, Thành phố Hồ Chí Minh

Organizes education program



Conical hat workshop with an artisan



Conical hat (palm-leaf conical hat) is a traditional symbol of Vietnamese people



Organizes education program

Learning traditional instruments



Having interactive art experiences





VWM acts as a bridge for cross-cultural exchange

Nhung Le, VWM

Cultural Exchange Exhibitions & Events

'Worshipping Mother Goddesses'
Performance at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al space, Jeju



Sri Lanka Cultural Festival in Hanoi



Cultural Exchange Exhibitions & Events



Exhibition “Venezuelan Women and the Cause of Socialist Construction in the 21st Century” at VWM



Exhibition “Asian - colours of culture”



Cultural Exchange Exhibitions & Events

Korean Traditional Cultural Week at VWM



Dancing with mark



Making handbook with paper



Cultural Exchange Exhibitions & Events



Exhibition:
Salt of the Jungle



Exhibition: Explore Singapore,
colour of heritage



Cultural Exchange Exhibitions & Events

Fukushima Festival



“Japanese Traditional Dolls”
Exhibition



Exchange programs

The VWM staff participated in the CPI program in Korea



We welcome international volunteers from Australia, America, English and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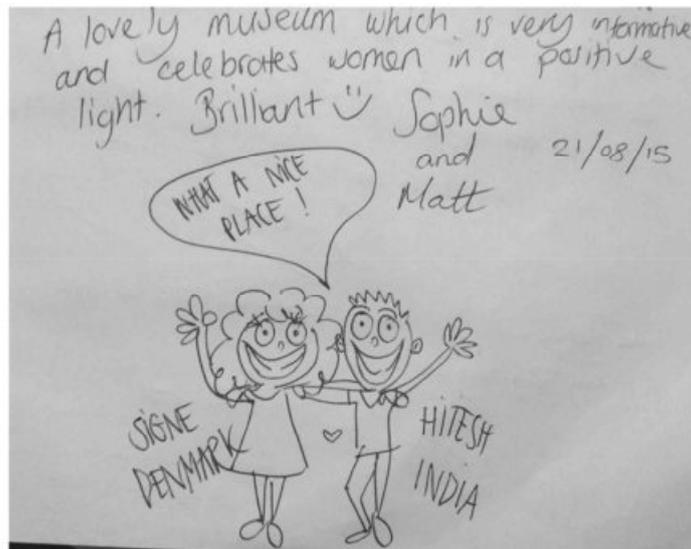
Part 4



VWM in the public

Nhung Le, VWM

Feedbacks



Feedbacks



John A
Berkeley, California

Người đóng góp cấp 4

48 đánh giá
25 đánh giá về điểm du lịch
11 phiếu bầu hữu ích

"Don't miss this museum"

★★★★★ Đã đánh giá vào 2 ngày trước

Google Dịch

This is a large museum which covers women's culture in Vietnam, and includes many different tribes in Vietnam, as well...

Thêm ▾

Hữu ích? 👍 Cảm ơn John A

Báo cáo



Janet B
Wellington, New Zealand

Người đóng góp cấp 3

19 đánh giá
9 đánh giá về điểm du lịch
4 phiếu bầu hữu ích

"Amazing insights into the lives of Vietnamese women"

★★★★★ Đã đánh giá vào 2 ngày trước 📍 qua di động

Google Dịch

This excellent museum takes a social history approach that illuminates the lives of Vietnamese women and families. Curation is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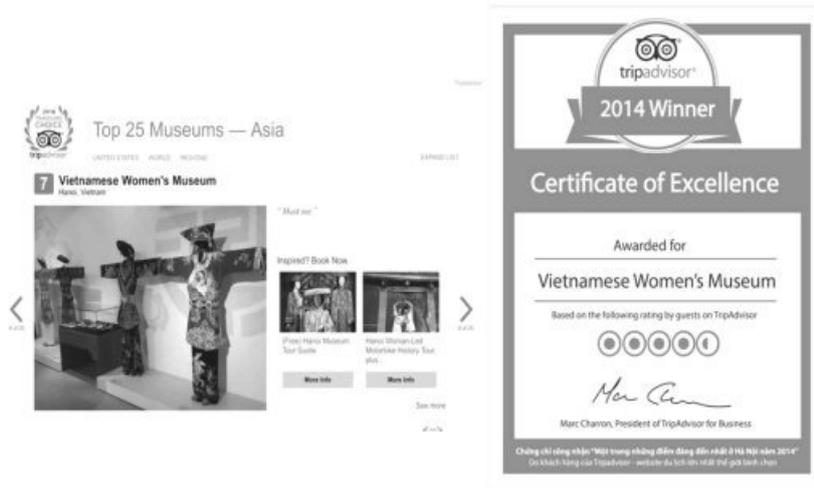
Thêm ▾

Hữu ích? 👍 Cảm ơn Janet B

Báo cáo



Feedbacks



Vietnam TOP attraction



Next steps

- Focus on organizing the cultural experience program for young generation and foreigners
- Promote cultural exchange and collaboration activities with international partners
- Develop the VWM to become a centre for cultural exchange between Vietnamese and international women for the goal of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Bảo tàng Phụ nữ Việt Nam
Vietnamese Women's Museum
Musée des Femmes du Vietnam

Thank you

Nhung Le, VWM

해방전쟁 박물관

모피돌 호크(해방전쟁 박물관 이사)

레지나 베굼 박사(해방전쟁 박물관 연구위원)

방글라데시는 역사의 실수로 탄생한 국가가 아니며, 제국주의가 주는 부담에 지쳐 떠나간 식민지 세력의 선물로 생겨난 나라도 아니다. 방글라데시는 피비린내 나는 해방전쟁으로 그 정점을 찍은, 기나긴 투쟁의 산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 이후 20세기에 발생했던 가장 잔학한 집단학살, 전쟁범죄 및 인류에 대한 범죄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했다. 1971년, 56,000 평방마일에 불과한 땅에서, 군대가 진압작전을 개시한 3월 25일 자정부터 12월 16일에 이르는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파키스탄 점령군과 그 부역자들은 거의 3백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25만명의 여성을 강간하였다. 1천만명이 고향을 떠나 이웃 인도로 피신하였고, 수백만명이 국내 난민이 되었다.

독립 후 25년 동안 방글라데시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는 뻔뻔하게도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왔다. 전쟁 범죄를 처벌하는 재판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매도당하면서 소송 등 온갖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고, 역사 교과서는 해방군의 영웅적인 활동이나 집단학살자들의 야만성에 대해 기술하기를 회피해 왔다. 이런 배경 하에서, 해방전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알리기 위해 지난 1994년 6월 해방전쟁 박물관 추진단이 결성되었다. 해방전쟁 박물관은 지난 23년 동안 자유를 향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기댈 어깨가 없었던 가족들을 위로하는 역할도 해 왔다.

해방전쟁박물관은 비로소 민중의 박물관이 되었고 방글라데시의 일반 시민들은 185,000 평방 피트 규모의 시설을 건축하는데 전체 예산의 약 55%인 1,200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기록보관소

해방전쟁 박물관이 보유한 주요 자산은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파키스탄의 통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승리를 쟁취했을 때까지의 투쟁 관련 문서와 기념물이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문서와 기념물을 자발적으로 기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 박물관은 해방전쟁과 관련하여 가장 풍부한 자료를 소장할 수 있게 되었다. 소장품은 다음과 같다:

- a. 사진
- b. 신문 스크랩
- c. 문서류
- d. 피복류

- e. 무기 및 탄약류
- f. 시청각 자료
- g. 개인 기념물 및 기타

박물관 관람과 함께 다른 여러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현재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방전쟁 박물관의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방글라데시 구석구석까지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특징을 갖고 있다.

액티비티

해방전쟁박물관은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방글라데시 구석구석까지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특징을 갖고 있다.

다가가는 프로그램

해방전쟁 박물관은 대학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단체 관람 제도를 도입하였고, 본 프로그램은 박물관의 ‘다가가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박물관이 학생들의 교육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개관 이후 해방전쟁 박물관은 공동체로부터 기증받은 문서 및 공예품 과 같은 물품들을 기반으로 소장품을 확대해 왔으며, 다가가는 프로그램 또한 확장하고 있다. 2001년에는 다카 지역 외부의 사람들도 박물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버스 안에 전시물을 설치한 ‘이동 박물관’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4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 ‘세계인권선언 및 평화와 관용의 개념에 입각한 해방전쟁 역사 소개’를 개발하였다.

프리덤 페스티벌은 1998년부터 매년 전년도 다가가는 프로그램 참석자들과 함께 개최하고 있는 축제이고,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개최되는 야외 갈라 행사의 자유의 투사들과 유명 연가자를 만나게 된다.

해방전쟁 박물관의 구술 역사 프로젝트

해방전쟁 박물관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젊은 학생들의 열정에 호응하여 이들에게 구술 역사 수집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호소를 통해 이들에게 역사의 단면을 보여 주고, 증언을 수집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증인 중 한명을 선택하여 1971년의 경험을 묻고 답변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해방전쟁 박물관은 지금까지 학생들을 통해 5만건 이상의 구술 증언을 수집하였다. 또한 이동 박물관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방글라데시 국내 64개 지역을 돌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이 프로그

램에 참여시켜 왔는데, 해방전쟁 박물관의 다가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더욱 많아짐에 따라 수집되는 증언 내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71년 킬링필드 보존(‘도살자의 소굴’)

해방전쟁 박물관은 1999년 다카 외곽 미르푸르 지역에서 두 곳의 학살 현장을 발굴, 유골 5,762점을 회수하였다. 박물관은 현재까지 ‘도살자의 소굴’로 알려진 킬링필드를 보존해 오면서 현장에 기념관을 설치하였고, 학살이 자행된 배수장 구조물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 킬링필드는 희생자 유족들의 참여와 함께 다양항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박물관 연대

2000년 해방전쟁 박물관은 전세계 8개 박물관과 함께 “국제 양심 역사현장 박물관 연대”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현장이 품고 있는 역사와 그 현대적 의미 사이의 연결 관계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이 역사 현장의 의무라는 공통의 신념을 갖고 있다.

집단학살, 진실과 정의에 관한 국제회의

방글라데시 해방전쟁 박물관이 주관한 제1차 집단학살, 진실과 정의에 관한 국제회의가 2008년 3월 1-2일간 다카의 BRAC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방글라데시 집단학살과 관련하여 개최된 첫 번째 국제회의였다. 당시 회의의 기본 목표는 방글라데시의 집단학살을 연구하고 국제적 관점에서 이를 고찰하며, 집단학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집단학살, 인류에 대한 범죄, 그리고 전쟁범죄 등의 재발을 국제법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 회의에는 국내외 저명인사들은 물론 각 지역 대학생들도 젊은 세대를 대표하여 참석하였고, 국제적으로는 일본, 캄보디아, 독일, 미국, 인도, 파키스탄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관점에서 방글라데시 집단학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제2차 집단학살, 진실과 정의에 관한 국제회의는 2009년 1월 30-31간 이틀에 걸쳐 다카에서 개최되었다. 2차 회의는 거의 40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전쟁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 그리고 집단학살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성공적인 재판의 진행을 위해 모든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끝났다. 당시 회의에서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다방면에 걸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회의에는 국제법 전문가들과 학자들, 그리고 일본, 한국, 홍콩, 캄보디아, 독일 및 캐나다 등지의 인권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

2013년 7월 4-5일 이틀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하인리히-짐머 홀에서는 같은 대학교 남아시아 연구소와 브뤼셀 남아시아 민주주의 포럼, 그리고 방글라데시 해방전쟁 박물관이 공동 주관한 ‘방글라데시 집단학살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 통찰력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이 올려퍼졌다.

집단학살 및 정의 문제 연구센터

집단학살 및 정의 문제 연구센터(CSGJ)는 학살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를 축복하는 한편, 미래 세대의 교육과 진실 및 정의 실현을 목표로 2014년 해방전쟁 박물관이 설립한 연구소이다. 센터는 방글라데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자행된(집단학살, 인류에 대한 범죄 및 전쟁범죄 등) 국제범죄 관련 연구, 문서화, 학습, 교육 및 네트워킹을 조직하고 장려하며, 집단학살 방지(GP)와 보호책임(R2P)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노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센터는 또한 집단 잔학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인정, 복권, 보상, 치유를 강화하고 집단학살 및 여타 대규모 인권침해 행위의 역사와 유산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SGJ만의 특징:

겨울학교

- 겨울학교는 연중 가장 대표적인 CSGJ 프로그램이다. 일주일 동안 합숙으로 진행되는 이 훈련 프로그램은 여러 분야 학생과 젊은 전문가 4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네팔,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신청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호주, 독일, 인도네시아, 미국, 네팔 등으로부터 온 저명한 집단학살 연구자와 학자들이 교수 자원으로 활동한다. 센터는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겨울 학교를 주관하였다.

인증 과정

- 겨울학교와는 달리, 인증 과정은 전문가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집단학살과 정의에 중점을 둔 한달짜리 과정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편하도록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수업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제5차 인증 과정이 진행되었다.

AJAR 지부

- ‘아시아 정의와 권리(AJAR)’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AJAR의 목표는 지역 및 중앙 활동가들의 능력을 함양하고 정의와 평화에 기반한 문화를 구축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집단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으로부터 배움을 얻자는 것이다. AJAR와 CSGJ는 정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모토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12월 CSGJ는 AJAR와 함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기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훈 공유’로 명명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하루 반짜리 워크숍으로 국가기관, 비정부기구, 그리고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지역에서 로힝야 집단 잔학행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얻고 평화와 화해를 위한 전략 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원칙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미나 - 워크숍

- 센터는 센터의 목적과 과제에 중점을 두고 연중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박물관과 교육에 관한 워크숍’ (독일 GIZ 바바라 팀), ‘국제인권 및 형사법의 현장 적용’ (AJAR 회장 패트릭 버지스), ‘연구 방법론 워크숍’, ‘아시아 지역의 과도적 정의 및 생존자들과 함께 하는 참여 연구 방법’ (AJAR 대표 갈루 완디타 및 폴리 드휘르스트) 등이 최근 CSGJ가 준비한 세미나들이다.

로HINGYA 연구

- 센터는 박물관 내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통해 역사적 성과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임무 자체가 집단학살과 정의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센터는 따라서 방글라데시 남부로 로HINGYA 난민이 밀려들었을 때 주도적으로 로HINGYA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하였다. 최초 방문의 성과는 ‘60명의 증언’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수집 작업에서 센터는 방글라데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임시로 만들어진 로HINGYA 난민 캠프 여러 곳을 방문하였다. 첫 번째 현장 방문 이후 센터는 ‘로HINGYA 집단학살 - 생존자 증언 모음 및 분석’을 발간하였다. 센터는 총 네 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을 하였다.

출판물

- 집단학살에서 정의로: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관점(제1차 겨울학교 회보)
- ‘60명의 증언’은 미얀마에서 로HINGYA 부족의 사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1971년 발간된 원조 ‘60명의 증언’의 후속편 격이다. 이 책은 목소리를 잃은 로HINGYA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주려는 시도였다. ‘60명의 증언’은 생존자, 증인, 구호 활동가, 그리고 언론인들의 증언을 통해 로HINGYA의 비극과 엄청난 인류의 고통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다.
- 로HINGYA 집단학살: 생존자 증언 모음 및 분석

Liberation War Museum

People's Initiative to Memorialize

Dr. Rezina Begum(Research Associate, Liberation War Museum)

Bangladesh was not born through a historical accident, nor was it the gift of a departing colonial power grown weary of bearing its imperial burden. Our nationhood emerged out of a long process of struggle which culminated in a bloody war of liberation.

The most brutal genocid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20th century since the holocaust of the WWII took place in Bangladesh. In 1971, in a land comprising only 56 thousand square miles, in a period of nine months, beginning from the military crackdown at midnight on 25th March until 16th December the Pakistan occupying forces and their local collaborators conducted the mass murder of almost three million people and raping of a quarter million women. Ten million people were forced to leave behind their homesteads and flee to neighboring India as refugees. Millions more became internally displaced.

After 25 years of independence, when the history of Bangladesh and its struggle for freedom was being flaunted and shamelessly distorted, when people asking for the trial and punishment of war criminals were subjected to all sorts of harassment including a legal charge slapped on them of being 'anti-state' elements, when the history books were being written for schools that avoided the heroic part of our liberation forces or the barbarism of the perpetrators of the Genocide. Under this backdrop Liberation War Museum was established in March 1996 with a vision to collect and disseminate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liberation struggle. In the last 23 years the Museum has not only become a symbol of freedom struggle but a solace for the families who suffered and never found a shoulder to lean on. It has truly become a people's museum and the common people of Bangladesh contributed almost 55% of the total museum cost of 12 million to build a 185,000 sq. ft. facilities.

ARCHIVE

Main asset of the Museum are the documents and mementoes of the struggle from British Colonial period, through Pakistan rule culminating in the final victory on 16 December. Many people have spontaneously donated mementos and documents, and thus enriching the collections and LWM has built the richest archives on Liberation War. This archive include

- a. Photographs
- b. News clippings
- c. Documents
- d. Fabrics
- e. Arms & Ammunition
- f. Audio & VDO Cassette, Records
- g. Personal Memorabilia and others

ACTIVITIES

The distinct feature of liberation war museum is its many programs that spread the inherent messages to farthest end of the country.

Out Reach & Reach Out program

The LWM has introduced group visit to the Museum by students of different school, college and universities. This is undertaken as part of the museums 'OUT REACH PROGRAM'. It is believed that museum can be a very important tool for their learning and can give them a sense of pride and encouragement for their country.

Ever since opening the doors of the Liberation War it has grown in terms of collection of documents and artifacts received from the community as well as outreach the institution could make. In 2001 LWM launched 'REACH OUT PROGRAM', a 'Mobile Museum,' bus with display mounted inside that began taking the museum to people far outside Dhaka. In 2004 LWM developed a new program specially aimed at students entitled 'Introducing History of the Liberation War in light of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concept of Peace and Tolerance'.

Freedom festival is held once every year, since 1998 with the participants of the outreach program of the previous year at a gala event with freedom fighters and leading Celebrities in an open field at capital Dhaka

Oral History Project of the LWM

In response to the enthusiasm of the young students who take part in its program, LWM has given them the task of oral history collection. An appeal is made to the students, who have been given a glimpse of history and may feel inspired by it, to gather eyewitness accounts. The

students are encouraged to select and ask any one of the eyewitness about his or her experiences of 1971, and write down what they hear from the persons.

LWM has received more than 50,000 Oral Accounts collected by the students. Since 2004 the Mobile Museum has traveled to 64 district of the country and has brought thousands of students into the program. The Number of eye witness accounts overall is increasing as more and more students come into contact with the LWM outreach program.

Preserving of Killing Fields of 1971(Butcher's Den)

In 1999, Liberation War Museum excavated two killing fields at Mirpur, in the out skirts of Dhaka City and recovered 5762 pieces of human remains. LWM has been preserving Butcher's Den Killing field and has built a memorial site keeping the pump house killing field structure intact. The site has become a centre of various activity with participates of victims family members.

Coalition of Museum

Liberation War Museum together with eight other museums of the world has established in 2000 a network titled "International Coalition of Historic Sites of Conscience". Coalition held in common the belief that is the obligation of historic sites to assist the public in drawing connections between the history of the site and its contemporary implication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ocide, Truth and Justice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ocide, Truth and Justice organized by Liberation War Museum, Bangladesh, was held on the 1st and 2nd March 2008 at BRAC Centre Inn Dhaka. This was the first ever international conference to be held on the issue of genocide in Bangladesh. The basic objectives of this conference were to study the genocide in Bangladesh as well as to examine the genocide from a global perspective, to create public awareness against genocide and to prevent recurrence of genocide by means of enforcement of the international laws against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Eminent speakers of Bangladesh and abroad as well as students of various local universities - as representatives of the younger generation took part in the conference. There were representatives from Japan, Cambodia, Germany, USA, India, Pakistan and Bangladesh. They shared views about the Genocide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The two day long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ocide, Truth and Justice held in

Dhaka on 30 and 31 July, 2009 ended with a clarion call to all natio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o work towards ensuring that after long delay of almost four decades the process of trial of the perpetrators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in Bangladesh be meet with success. The conference was attended by international legal experts, academics and right activists from various countries including Japan, Korea, Hong Kong, Cambodia, Germany and Canada.

For the two days of 4 and 5 July, 2013 the Heinrich-Zimmer-Saal of Heidelberg University, Germany resonated with the presentation of insightful papers and lively discussion on 'Bangladesh Genocide and the Issue of Justice' which was the theme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jointly organized by South Asia Institute, Heidelberg University; South Asia Democratic forum Brussels and Liberation War Museum Bangladesh.

Center for the study of Genocide and Justice

The Center for the Study of Genocide and Justice (CSGJ) was established by the Liberation War Museum (LWM) in 2014 to commemorate those who perished in genocide, to celebrate who survived, to educate future generations and to dedicate its effort to uphold the cause of truth and justice. The Center aims at organizing and promoting research, documentation, study, education and networking on international crimes (such as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committed in Bangladesh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strengthen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efforts for Genocide Prevention (GP) and the non-violent method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This also aims to strengthen the initiatives to establish justice for mass atrocities and for recognition, restitution, reparation and healing of the victims and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legacy of genocide and other massi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with the intent of preventing such atrocities in the future.

Unique Features of CSGJ:

Winter School

- Winter School is CSGJ's annual flagship program. This week long residential training program aims to educate around 40 students and young professionals from different disciplines. Some international participants joins this every year like from Nepal, Sri Lanka, Cambodia, Indonesia etc. The renowned genocide scholars and academics from Bangladesh, Australia, Germany, Indonesia, the USA, Nepal etc as resource persons. Till now the Center has organized 5 Winter Schools.

Certificate Courses

- Unlike Winter School, Certificate Course is focused on the participation of the professionals. It's a month long course focused on genocide and justice which is conducted on every Friday and Saturday afternoon designed remembering the convenient time for the professionals. Last time we organized 5th Certificate Course at the middle of the year.

AJAR Chapter

- Asia Justice and Rights (AJAR) is a non-profit organization, based in Jakarta, Indonesia, whose aim is to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human rights in the Asia-Pacific region. AJAR's mission is to increase the capacity of local and national actors and contribute to building cultures based on justice, peace and a willingness to learn from the root causes of mass human rights violations in Asia. As AJAR and CSGJ has common motto of establishing justice so AJAR and CSGJ has some friendly relations. In the December 2018 CSGJ arranged a joint program titled 'Foundations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Exchanging Lessons from Asia-Pacific' with AJAR, a one and a half day workshop, was designed to bring together national, non-governmental,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king in Cox's Bazar, Bangladesh, rendering local support to the Rohingya victims of mass atrocities, to learn lessons from the Asia-Pacific context and affirm key principles to aid in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Seminar-Workshop

- The Center organizes different seminars and workshop at different times, focusing on the aims and objectives of the Center. 'Workshop on Museum and Education', Facilitated by Barbara Thimm, GIZ, Germany, 'Practical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Criminal Law', by Patrick Burgess, President, AJAR, Workshop on Research Methodology, 'Transitional Justice in Asia and Participatory Research Tools with Survivors by Galuh Wandita, Executive Director, AJAR and Polly Dewhirst, AJAR are some recent seminars organized by CSGJ.

Research on Rohingya

- The Center is that part of the museum which tries to make a bridge between history and present, elders and the young's, keep forwarding the historical achievement into next level. As the Center is focused on the Study of genocide and justice, so when the Rohingya influx happened to the south side of Bangladesh, the Center took initiatives to

collect the testimonies of the Rohingyas. The outcome of the first visit was the 'Testimony of Sixty'. Then the second time we visited the makeshift camps of the Rohingyas in collaboration with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Bangladesh (NHRCB). After first the field visit of the CSGJ research team the Center published 'The Rohingya Genocide- Compilation and Analysis of Survivors' Testimonies'. The center made four field visits.

Publications

- From Genocide to Justice: National and Global perspective (Journal of the first winter school) :
- The Testimony of Sixty was published on the crisis of Rohingyas in Myanmar, as a sequel to 'The Testimony of Sixty' 1971:- The Testimony of Sixty is an attempt to give voices to the voiceless Rohingya victims. In the words of survivors, witnesses, aid-workers and journalists The Testimony of Sixty attempted to let the world know about the extent of the Rohingya tragedy and stories of great human sufferings.
- The Rohingya Genocide: Compilation and Analysis of Survivors' Testimonies:

© Photo of Ben Kernien 1966



Tuol Sleng Genocide Museum

1979-2019-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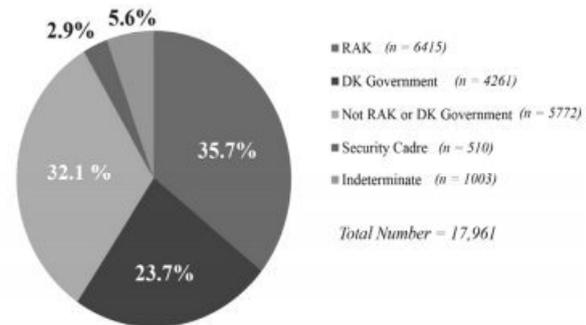
SONG Pheaktra

Before the museum (1)

- Khmer Rouge created prisons since the beginning of their struggle. Ex: M-13 security center, Kriang Ta Chan security center.
- S-21, Tuol Sleng prison was opened in 1975 in Phnom Penh. It was one prison among 196 prisons in Democratic Kampuchea.
- At S-21 more than 900 prisoners were detained everyday. At least 18 133 persons were named in execution lists. All of them were killed. Men, women and children.
- The role of S-21 was to detain, interrogate and to kill the domestic enemies and foreigner spies.



Photo of victim of S-21
© TSGM

Figure 1.9 Origin of Prisoners at S-21

Note: Based on the 'Position' and 'Arrested From' columns on **Annex F.1** Revised OCJ S-21 Prisoner List. 'Not RAK or DK Government' includes civilians, Vietnamese and Khmer Republic Officials.

See also **Annex F.5** List of RAK S-21 prisoners; **Annex F.21** List of DK Ministry S-21 prisoners; **Annex F.32** List of Khmer Republic Officials S-21 prisoners; **Annex F.33** List of Vietnamese S-21 prisoners.

Co-Prosecutors' Closing Brief in Case 002/02 - Annex F.2

11

Before the museum (2)

- Members of the Vietnamese army found S-21 a few day after the Khmer Rouge had fled the city on January 7th 1979 forcing some prisoners to go with them
- 7 adults and 4 children are known to have survived S-21 after January 1979.
- The new government PRK* decided to keep this former prison as investigation site and place for international delegations to visit.



Adult survivors of S-21

© TSGM

* People Republic of Kampuchea (1975-79)

Beginning of the museum (1)

- The first exhibition was opened on August 5th, 1979 before the PRT* tried Pol Pot & Ieng Sary and others on genocide.
- There were 26,712 visitors in 1979 (Domestic visitor 76%), and 319,653 visitors in 1980 (Domestic visitors 95%).
- Three survivors of S-21 came to work for the museum in 1979/80, including the first director, Ung Pech.

* *People's Revolutionary Tribunal (Aug 15-19, 1979): An international tribunal organized by Vietnamese authorities.*



Mr. Ung Pech
© TSGM

Early situation of Museum (2)

“ *I try my best to work at Tuol Sleng, I want to see it becomes a common evidence where we can promote understanding [about tragedy of DK] to international visitor. I have worked here 5 year already. From now, I will share this chance to younger staff to work, and to guide the international visitors. I will change to work as technical, but I still keep my research about Tuol Sle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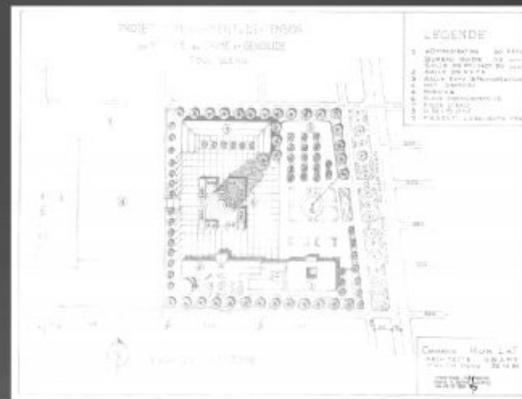
Mr. Ung Pech

A former survivor of S-21 and the first director of Museum (1979-1985)

Interview in 1985

Early situation of Museum (3)

- The museum was in the political line of the Vietnamese propaganda against Khmer Rouge between 1979-1989. Ex. The launching "Day of Anger" in Tuol Sleng Museum in 1984.
- Besides the former school, the prison was located in family houses. People moving back into town occupied them, the size of museum became smaller and smaller.
- In the 80s the archives and the site was left in poor condition.
- In 1990s, the museum faced really serious period. The Paris Concord in 1991 was decided to erase the work Genocide Crime of Khmer Rouge and replace with Crime in the past.
- But document of museum is more openly welcome to researcher.



Extension plan in 1981 planned by Hor Lat and Serafim Polenz

© Political Archive of the Federal Foreign Office of Germany PA
AA, M 34, ZR 638/03

Museum in 2018



Museum in 2018

Museum aimed to ban the genocide and crime happened again, and building peace to Cambodia and world by participating Khmer Rouge History education.

Education

Reflection

Khmer Rouge history education is not to revenge but need to transform how to be a good citizen, solidarity and build a good society.

Remembrance

Khmer Rouge tragedy is inhumanity history of the world would not be forget.

Justice and Healing

Museum provides special space to S-21 survivors and non-S21 survivor is welcome to share to younger generation.

Reflection

Authenticity of the place

The display of evidence: bones, beds, tortured tools, clothes, and daily tools.

The display of victims' portraits.

Survivors

The white lotus room



Launching project textile conservation

© TSGM 2018

Remembrance

Memorial Monument

Day of Remembrance 20 May

Wishing tree

Conservation: Metal and textile

Graffiti project



☎ 4855 (0)23 665 5395 / 077 252 121 @www.tuolsleng.gov.kh

St 113, Boeung Keng Keng II, Cambodia Phnom Penh, Kingdom of Cambodia

20th May, Day of remembrance.

© TSGM 2018

Justice and Healing

The Public talk

Testimony program

Ritual Ceremony: Phcum Ben and Khmer New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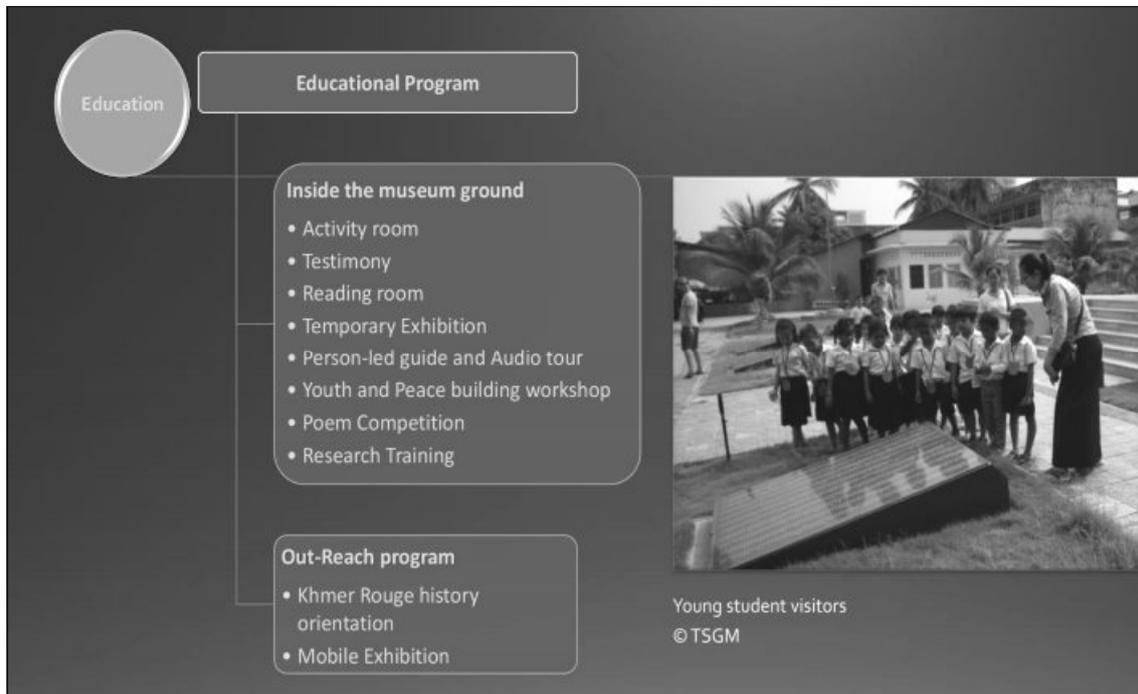
Archives: ECCC

Collaboration with Transcultural Psychosocial Organization.



Testimony program

© TSGM



Peace workshop (1)

- It is a youth activity, led by youth, but listen to the experience from the old people.
- Multiple methodology; lecture, dialogue, art work, and field study.
- Difference topics lectured by difference experts.
- It was conducted in 2017, 30 participants, and 2018, 40 participants.



Peace Building workshop
© TSGM 2018

Peace workshop (2)



Research Training (1)

- Aim to provide the basic methodology to university student.
- Target: history student, archeology student, and development community student.
- Support student first research project.



Research Training
© TSGM 2018

Research Training (2)



Training in class
© TSGM 2018



Participant lead their own research
© TSGM 2017



Presentation their research finding
© TSGM 2018

Museum in the FUTURE (1)

Vision

- Tuol Sleng Genocide Museum looks forward to a peaceful and stable Cambodia in which, as a Historical Museum, it has helped the society recover from the pain and suffering of the decades of war and genocide.

Mission

- Tuol Sleng Genocide Museum aims to serve as a place of reflection and education by preserving and presenting evidence of the past prison system and keeping alive the memory of the more than 18,000 human beings who perished here under the Regime of Democratic Khmer.

Museum in the FUTURE (2)

Only one-historical-prison in Khmer Rouge regime which almost remained.
Located in the center of city.

Limited number of domestic visitor, especially student.

Strong
Opportunity

TSGM

Weak
Challenges

Youth, university student is becoming the partner of museum who are promoting the museum to their family and friend.

Cambodia and TSGM are becoming the interested tourist site in the world.

Modern building is developing surrounding in the Museum block.

Difficult to reach the provincial student.

[5·18민주항쟁 39주년 기념 학술교류포럼]

국가폭력의 청산과 정의

5·18과 전지구적 차원의 이행기정의

토론

4·16 기억저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제주 4·3평화재단

노근리평화공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목 차



4.16 기억저장소 소개 및 역할



4.16 기억저장소 연혁



4.16 기억저장소 업무소개

4.16기억저장소 소개 및 역할

4.16기억저장소 소개

- 2014년 4월 16일 진도인근 해상에서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학생 250명, 교사 11명, 일반인 43명 등 304명 희생이 발족계기
- 참사 당시 안산시민을 비롯한 각계의 전문분야에서 자발적으로 모임을 조직하여 기록을 수집
- 시민기록단,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자기록단, 작가기록단, 영상기록단 구축
-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추모기록 보존 자원봉사단이 활동
- 2014년 7월 시민기록위원회, 시민네트워크, 추모기록 자원봉사단 통합
- 2014년 8월 31일 "4.16기억저장소"로 명명되어 가족대책위원회에 헌정

4.16기억저장소 역할

- 4.16기억저장소는 민간영구기록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소장 기록 - 참사관련기록(희생자 및 생존자 기록 포함), 유가족 활동기록, 서명용지, 추모기록, 유가족 지원활동 기록, 기억저장소 운영기록, 구술기록 등 기록
- 공간 기록 -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유지 및 보존 관리
- 기억교실- 희생학생 및 교사들에 대한 추모와 이들의 희생으로 생명과 안전을 귀히 여겨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수행

4.16기억저장소 연혁

2014. - 2015.

- ◆ 14. 04. 16. 세월호 참사당일 안산시민의 힘으로 시민기록단 구성, 기록과 수집 및 보존활동 시작
- ◆ 14. 05. 18.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로 명칭변경, 위원장 홍영의 교수, 김종천 사무국장 위촉
- ◆ 14. 06. 05. 시민기록위원회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로 이전
- ◆ 14. 07. 20. 가족대책위 기록위원회로 명칭 변경(시민기록위, 시민네트워크, 추모기록봉사단 통합)
- ◆ 14. 09. 15. 가족대책위 산하 4.16기억저장소 사무국 업무 시작

- ◆ 15. 02. 기록-문화로 업무체계 재편성, 기억과 약속의 길 시작
- ◆ 15. 03. 기억저장소 3서고 개관
- ◆ 15. 04. 4.16 기억전시관 개관 및 아이들의 방 전시 시작
- ◆ 15. 06. 4.16기억저장소 제1기 소장 및 제1기 운영위원회 출범
- ◆ 15. 08. 구술증언사업 시즌1
- ◆ 15. 12. 다큐멘터리 [나쁜 나라] 기획 및 상영

4.16기억저장소 연혁

2016. - 2017.

- ◆ 16. 02. 4.16의 목소리 팟캐스트 방송
- ◆ 16. 04. 세월호 유품 및 유류품 세탁/ 기억전시관 전시 2.0
- ◆ 16. 07. 4.16기억저장소 제2기 소장 및 제2기 운영위원회 출범
- ◆ 16. 08. 20. 단원고 교실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임시이전
- ◆ 16. 09. 구술증언사업 시즌2
- ◆ 16. 11. 21 단원고4.16기억교실 개방

- ◆ 17. 03. 17. 김관홍 참수사 잠수복 전문세척 및 보존처리
- ◆ 17. 03. 25. ~ 05. 31. 5.18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관 "기억과 나눔" 전시
- ◆ 17. 04. ~ 12. "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 전시(국회의원회관 및 전국의 시도 교육청)
- ◆ 17. 05. 22. ~ 06. 06. 독일종교개혁 500주년 행사 참석 및 간담회
- ◆ 17. 05. 세월호 인양 후 3년 된 의류 복원 및 보존처리
- ◆ 17. 08. ~ 09. 세월호 인양 후 3년 된 지류와 청동, 금속류 등 복원 및 1차 보존처리
- ◆ 17. 11. 01. ~ 11. 25. 제1기 단원고 4.16기억교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4.16기억저장소 연혁

2018. - 현재

- ◆ 18. 03. 31. ~ 04. 14. 제2기 단원고 4.16기억교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 ◆ 18. 04. 09. 『그리운 너에게』 발간
- ◆ 18. 04. 14. <한국기록학회> 4.16기억저장소 소개 발표
- ◆ 18. 04. 19 ~ 05. 01. 세월호 참사 정부합동분향소 철거
- ◆ 18. 07. 07 ~ 07. 21. 제3기 단원고 4.16기억교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 ◆ 18. 08. 31. ~ 09. 03. 팽목항 분향소 및 동거차도 철거 기록화 작업
- ◆ 18. 11. 03. ~ 11. 17. 제4기 단원고 4.16기억교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 ◆ 18. 11. 05. ~ 11. 26. 마을아카이빙 마을기록활동가 양성프로그램 진행
- ◆ 18. 11. 30. 「단원고등학교」내 추모조형물 제막식(영상기록화 작업)
- ◆ 18. 12. 02 ~ 12. 04. 마을아카이빙 마을기록활동가 해외역사기록탐방(상해임시정부 외 기록관 등)

- ◆ 19. 04. 03. ~ 04. 13. 제5기 단원고 4.16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 ◆ 19. 04. 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4.16구술증언록 "그날을 말하다" 100권 출간
- ◆ 19. 04. 26. ~ 04. 28. 4.16기억저장소 운영위원 워크숍(국립5.18민주묘지 외 역사유적지 탐방)

4.16기억저장소 업무소개

기록관리팀

- ◆ 세월호 참사로 행동하는 모든 기록물, 합동분향소 기록물 등을 수집 및 기록 보존관리
- ◆ 단원고 4.16기억교실에서 전시되어 있는 기록물과 기증받은 기록물 수집 및 보존관리 업무



4.16기억저장소 업무소개

구술기록팀

- ◆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가족, 생존자, 잠수사, 어민, 기자, 활동가, 참사목격자 등의 구술증언 수집 업무
- ◆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집된 증언들을 책으로 출간하여 기록함



4.16기억저장소 업무소개

문화기획팀

-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과 교사를 추모하는 304개의 등을 밝히고 작품과 사진 등을 기획전시
- ◆ 전시관의 상설 전시와 필요한 곳에 작품의 대여해 줌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의 아픔을 알림



4.16기억저장소 업무소개

사업팀 - 민주시민교육

- ◆ 가만히 있으라는 획일적 사고로 비롯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잠재되어 있는 의식을 밖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서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 ◆ 학생들의 꿈과 4.16에 대한 기억과 기록, 아이들의 등갓길을 함께 걸으며 희생학생들과 교감하기 위함



4.16기억저장소 업무소개

사업팀 - 마을아카이빙 교육

- ◆ 세월호 참사라는 지역사회에 남긴 의미와 마을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교육
- ◆ 마을공동체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습의 병행을 통하여 마을 공동체 기록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4.16기억저장소와 함께 기억으로 쓰는 동네이야기
마을기록 활동가 양성프로그램

2018년 11월 5일 - 11월 26일 (월-수, 총 12회)

교육시간: 2018년 11월 5일 - 11월 26일 (월-수, 총 12회)

교육장소: 대진대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진로 154) 3층 309호

교육대상: 대진대학교 기록정보문화센터(대진) 교수, 학생, 전·현직 기록관리 관련 종사자, 마을공동체 활동가, 일반 시민

교육내용: 1. 마을공동체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습 2. 마을공동체 기록의 특성과 관리 방법 3. 마을공동체 기록관리의 실제 사례 4. 마을공동체 기록관리의 실제 사례 5. 마을공동체 기록관리의 실제 사례 6. 마을공동체 기록관리의 실제 사례 7. 마을공동체 기록관리의 실제 사례 8. 마을공동체 기록관리의 실제 사례 9. 마을공동체 기록관리의 실제 사례 10. 마을공동체 기록관리의 실제 사례 11. 마을공동체 기록관리의 실제 사례 12. 마을공동체 기록관리의 실제 사례

문의: 051-400-1111 (대진대학교 기록정보문화센터)

주최: 4.16기억저장소



감 사 합 니 다 .



잊지 않겠습니다!

4.16 기억저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2001년 제정)에 의해
2002년 1월 29일 설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요사업으로는

1.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성
2.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및 추모행사 개최 및 지원
3.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국내외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조사 및 연구
5.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 및 서비스
6.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사업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사업



6·10민주항쟁 31주년 대통령 기념사 중

“2001년 여야 합의에 의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온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었고 정부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이 고문당하고, 박종철 열사가 희생된 이곳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인권단체들, 고문피해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이 공간을 함께 만들고 키워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습니다.”

2018년 6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1970~80년대 대표적인 고문기관으로 악명을 떨쳤던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에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민주인권기념관을 건립”

민주인권기념관

역사의 현장,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평화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사업(계속) | 남영동 대공분실



“국가폭력의 현장을 민주인권의 장으로”

“1976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되어 치안본부 대공과 대공분실로 사용되었고, 이후 1983년 12월 7층으로 증축되면서 현재와 같은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시민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00해양연구소’라는 간판으로 철저히 위장했다. 명목상 ‘국가안보’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독재정권에 비판적인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정권안보’를 위해 운영되었으며, 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던 많은 인사들을 취조·고문하던 곳이다.”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사업(계속) | 남영동 대공분실(계속)



“특히 1987년 1월 박종철고문치사사건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80년 기자협회집단구속사건,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 무고한시민을 간첩으로조작한 삼척·김제고정간첩단조작사건, 1985년 민청련·민추위사건, 1986년 보도지침사건 등 수많은 학생과 민주화인사, 일반 시민 등이 이곳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민주인권기념관 구성



- ❖ 민주화를 이룩한 국민적·역사적 성취를 성찰하고 기념하는 전시 공간
- ❖ 인권탄압 역사의 현장 보존 및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
- ❖ 청소년,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민주시민교육센터
- ❖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국제센터

민주인권기념관 구성(계속)



- ❖ 민주화운동 사료관, 민주주의연구소, 민주주의 유관단체 교류 협력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 ❖ 향후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2022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역사관 건립 개요



- 개 관 식 : 2015. 12. 10
- 건립부지 : 75,465㎡(22,830평)
- 건축연면적 : 12,060㎡(3,654평)
- 주요시설 : 총 7개층
 - 전시실 3개소 3,671㎡(1,110평)

[역사관 건축 디자인 의도]

부산과 시모노세키(下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면서 조선의 많은 강제동원자들을 일본으로 실어 나른 관부연락선(부관연락선)의 외관을 반영

[역사관을 부산에 건립한 배경]

- ❖ 부산항은 국외로 가는 강제동원의 주요 출발지였고, 해방 이후 국외동원피해자들의 귀환선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음
- ❖ 광복 이후 많은 강제동원 귀환자들이 부산지역에 정착함

▷ 설계개요/전시목적 및 기대효과

• 설계개요



사업명 :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전시용 설계 및 계획 - 설계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1210-4번지(부산 영도공원)
 규모 : 4~6층
 전시면적 : 3,670.12㎡

구분	층	면적		구상내용
		㎡	평	
전시시설	4층	1,829.13	550.62	상설전시실 1, 계단실
	5층	991.15	299.82	상설전시실 2, 상영관홀
	6층	858.74	259.77	기획전시실

• 전시목적 및 기대효과

-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기록을 보존·연구·전시함으로써
- 잊혀져 가는 역사의 진상을 알리고
- 공동의 기억으로 함께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장



- 가해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일본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
- 피해자의 인권을 위헌해온 우리 자식에 대한 책임의식 각성
- 미래의 무관심에 경각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
- 채워지고, 정산되지 못한 역사를 바로 세운

▷ 전시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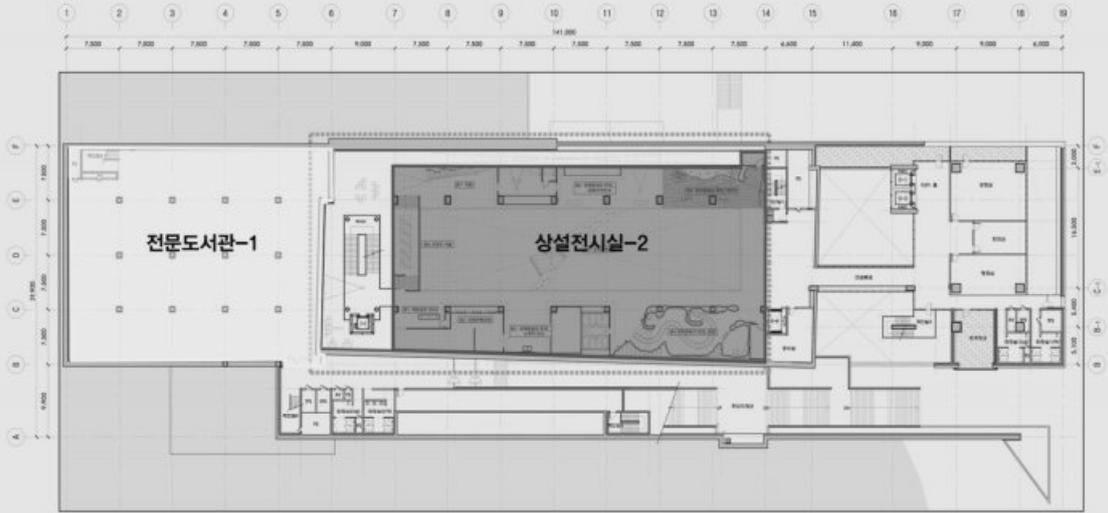
• 4층



구분	공간	구성개요		비고
		구분	내용	
B1F	전시실	-일제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들을 중심으로 연대기순으로 전시하는 사료·기록관형 전시공간 구성		
	로비	-중합안내사임		

▷ 전시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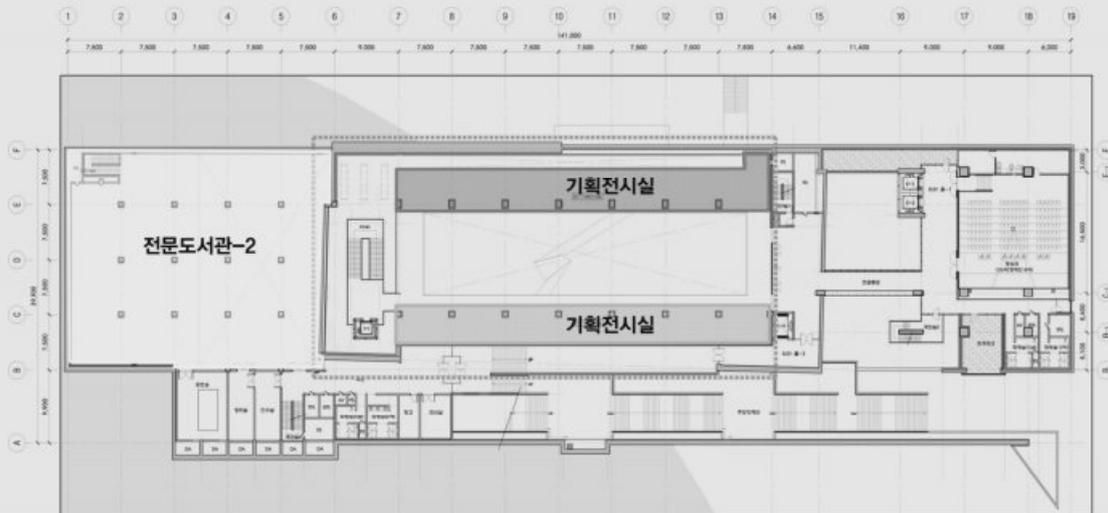
• 5층



구분	공간	구성개요	비고
1F	전시실	-동계 강계동원 환경의 '계합'을 컨셉으로 하는 세트형 전시공간 구성	
	전문도서관-1	-일반인들이 출입 가능한 서가와 열람공간 구성	

▷ 전시관 배치도

• 6층



구분	공간	구성개요	비고
2F	기획전시실	-기획전시실 구성	
	전문도서관-2	-전문도서관 서의 개념의 자료실로 책가식 서고 구성	

▷ 전시주제 및 스토리 전개

• 전시주제

“일제강제동원의 기록들을 담다”

거시적 관점으로 보는 연대기순 전시 구성

문혀왔던 역사의 진실을 유물을 통해 전달하는 유물 위주의 전시공간입니다.
유물이나 자료 이외에 영상매체나 체험형 전시매체를 활용하여 구성합니다.

• 전시스토리라인

1. 프롤로그-기억의터널	2. 일제강제 동원의 시작	3. 일제강제 동원의 실제	4. 해방과 귀환	5. 끝나지 않은 일제강제동원	6. 계단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강제동원”이란? • 일제 강제동원의 배경 • 일제 강제동원의 정책과 규모 • 일제 강제동원의 방법 • 강제동원을 말한다, 첫번째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혈병로 보는 일제 강제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무자 -군무원(군속) -군인 • “일본군 위안부” • 지역별로 보는 일제 강제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 강제동원 지역 개괄 -원반도와 그 부속도시 -일본 -사할린 및 쿠릴열도 -중국 및 타이완 -동남아시아 및 중-서부 태평양 일대 •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조선인의 항거 • 강제동원을 말한다, 두번째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방직후 세계정세의 한반도,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 • 귀환과정 • 억류된 사람들 • 강제동원을 말한다, 세번째 이야기 •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합경과 강제동원 피해자들 • 가해와 책임, 권리찾기를 위한 재판 •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증자 기념 공간 • 피해자 검색 코너 	

1. 기억의 터널 (1938이후~)



2. 일제강제동원의 시작 (일제강제동원이 무엇인지?-일본 팽창, 동원방식, 동원된수)



2. 일제강제동원의 시작 - 강제동원을 말하다, 첫번째 이야기(김기상)



3. 일제강제동원의 실체 - 유형별 일제강제동원 (노무자,군인, 군무원,일본군성노예)



3. 일제강제동원의 실체 - 조선인의 항거 (징용거부, 탈출, 독립운동)



3. 일제강제동원의 실체 - 강제동원을 말하다, 두번째 이야기(강삼술-북해도 고락가)



4. 해방과 귀환 (유골함 - 이역만리 남의 땅에서 무주고혼이 된 영혼, 조국으로 돌아 올 그날까지 고이 잠드시길)



4. 해방과 귀환 - 강제동원을 말한다, 세번째 이야기(정성태, 윤병렬)



5. 끝나지 않은 일제강제동원 (해외 있는 유해 발굴 조사, 미지급 임금, 한일관계등)



6. 피해자 검색, 기증자 기념코너



▷ 전시주제 및 스토리전개

• 전시주제

“기억을 나누어 상처를 치유하다”

미시적 관점으로 보는 생활사 전시로 주요 장소별 구성

일제강제동원의 현장들을 관련 유물과 함께 복합적으로 연출하는 공간입니다. 연출모형 등 현장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체험형의 연출기법을 활용하여 관람자가 간접적으로나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심경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 전시스토리라인

1. 강제동원의 과정	2. 강제동원의 현장 - 노무자 숙소	3. 강제동원의 현장 - 탄광(炭鑛)	4. 강제동원의 현장 - 중서부태평양전선	5. 강제동원의 현장 - 일본군 위안소	6. 해방과 귀환	7. 에필로그 시대의거울	8. 상징조형물
-------------	----------------------	----------------------	------------------------	-----------------------	-----------	---------------	----------

2. 강제동원의 현장 - 노무자 숙소(타코베야 - 감옥형 숙소)



3. 강제동원의 현장 - 탄광 (북해도)



4. 강제동원의 현장 - 중·서부 태평양 전선(남양군도-약 5만 5천여 명)



5. 강제동원의 현장 - 일본군 '위안소'(현재 김복득할머니의 31명 생존)



6. 해방과 귀환 (우키시마호 폭침사건, 학살 등으로 귀국길에 사망, 이산가족 발생)



7. 시대의 거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 함께 기억해요!!!)



8. 상징조형물 (진혼의 다리-불빛 하나 하나에 피해자의 성함 새겨져 있다.)







제주4·3사건 정의 (제주4·3진상보고서)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정부4·3위원회 결정기준)

- 희생자 14,238명(행방불명 3,891명 / 생존희생자 122명 포함)
- 유족 59,427명

제주4·3사건 전개과정



4·3사건 발생 전 시대적 상황

- ▶ 해방 직후 당시의 사회는 친일파 청산문제, 좌우익간의 대립 등 이데올로기적인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
- ▶ 해방 직후, 제주도는 중립적인 성격의 인민위원회가 설립되어 지역사회의 중심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육지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온함을 유지

4·3사건의 도화선

『3·1절 발포사건』

- ▶ 1947년 3월 1일 제주 읍내에서 31절 기념 집회 후 시가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군정당국이 시위 관람군중에게 발포하여 6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도화선이 됨
- ▶ 31절 발포사건은 도민을 분노케 하였고 1947년 3월 10일 도 전역에서 직장, 학교 등 대규모의 총파업을 전개하였으며 당국은 발포사건을 정당방위로 주장, 민심을 악화시킴

제주4·3사건 전개과정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발발

- ▶ 1947년 3월 총파업 전후 제주에 파견된 도외 응원경찰과 서북청년회 단원들이 '치안유지' 명목으로 탄압과 이에 대한 반발과 저항 이어짐



- 주민 2500여명 구금됨
- '48. 3월 경찰에 의한 3건의 고문치사 사건 발생'

- ▶ '48. 4. 3 새벽,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350명의 무장대가 도내 12개지서와 우익단체 요인 집을 습격

※ [Slogan]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4·3봉기 이후 전개상황

- ▶ 미군정은 사태초기 '치안 상황'으로 간주
- ▶ 제주 주둔 김익렬 9연대장은 무장대측과 평화협상 진행(4.28) '전투중지, 무장해제, 신변보장' 등을 합의
- ▶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결렬
- ▶ 정부수립 이후 해안부락에서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대를 '적성지역'으로 간주하는 포고령, 계엄령(48.11.17) 등 초토화 작전 전개하여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
- ▶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 해제, 7년 7개월간의 유혈사태 막을 내림

제주4·3 해결과정



1960년 : 4·19혁명 직후 진상규명 운동 → 5·16쿠데타로 무산

1978년 : 소설가 현기영 『순이삼촌』 발표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진상규명 요구 분출

2000년 1월 : 4·3특별법 제정

2003년 10월 : 진상보고서 확정, 대통령 공식사과

2014년 3월 : '4·3희생자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2018년 : 4·3 70주년 (4·3공원 방문객 44만명 돌파)

2019년 4월 : 경찰청, 국방부 공식사과

제주4·3평화재단 설립



설립 및 출연근거

- 4·3특별법 제8조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 민법 제32조

설립 목적

4·3특별법에 따라 제주4·3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인류평화의 증진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

설립

-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발기인 창립총회 (2008. 9. 22)
- 제주4·3평화재단 출범 (2008. 11. 10)

주요 사업



4·3평화재단 주요 사업

4·3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4·3추가진상조사 및 연구사업

국내외평화교류사업

4·3문화·교육·기념사업

4·3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 운영관리

4·3평화재단 주요사업



4·3추가진상조사

-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집필·발간

해외자료 수집 및 4·3연구

- 4·3평화포럼
- 국외자료조사(미국)
- 4·3봉기 주도세력 조사
- 재경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증언조사
- 4·3학술연구공모

희생자·유족 배·보상 및 수형인 명예회복

- 4·3특별법 개정 추진

유족복지 확대 및 유족 위로 사업

- 유족, 머느리 의료비 지원
- 4·3장학금 지원
- 4·3어버이상 시상
- 4·3생존희생자와 함께 하는 위로사업
- 4·3생존희생자 의료비 등 지원
- 찾아가는 4·3유족 역사교실

공원·기념관 시설 보완 및 개선

- 노후시설 보완 및 교체
- 공원 편의시설 확충
- 동백나무 심기 캠페인
- 수목 관리 및 화단 조성

전시프로그램 운영

- 기획·특별전시, 교육센터활용 프로그램 등

4·3평화재단 주요사업



4·3세계화 및 국내외 평화교류

- 국내외 관련기관 MOU체결 확대
-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기관 워크숍
- 국내외 평화교류
- 4·3평화상 시상
- UN 4·3인권심포지엄 개최

4·3 전국화 행사 및 국내외 4·3 홍보

- 도외 4·3행사 개최 및 지원 (광화문4·3국민문화제 등)
- 4·3자료 발간(외국어판 포함) 배포
- 기관지 「4·3과 평화」 발간(일본어판 포함)
- 대학생 4·3평화대행진
- 동백배지 지속적 보급·홍보
- 4·3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4·3교육 및 기념사업

- 전국교원4·3직무연수
- 국내외 대학생 4·3아카데미
- 시민4·3아카데미
- 전국청소년4·3평화캠프
- 4·3평화문학상 공모 및 시상
- 전국청소년4·3문제공모
- 학생4·3문제대회
- 어린이체험관 교육프로그램운영
- 유적지 해설사 지원

방문객 편의시설 확대

- 뮤지엄 카페운영 등

제주4·3평화공원 시설현황



4·3평화공원 시설개요

- 위치 :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 공원면적 : 395,380㎡ (조성면적 : 219,031㎡)
- 총사업비 : 750억원
- 사업기간 : 2001.3. ~ 현재
- 주요시설 : 위패보안실, 유해보안관, 각명비, 행불인 표석, 제주4·3평화기념관, 어린이체험관 등

□ 방문현황
 2018년 444,813명 / 전년 233,276명 대비 91%증가
 2019년 방문객 124,576명 (2019:4.15 기준) / 전년 동기 대비 0.2%증가

노근리평화공원 소개



2019. 05.

©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NoGunRi 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

목 차

- I. 사건 개요 및 노근리평화공원 3
- II. 재단 연혁 및 위상 6
- III. 시설 현황 7
- IV. 주요 사업 8
- V. MOU 체결 현황 10

I. 사건 개요 및 노근리평화공원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동안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 및 쌍굴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미 공군에 의한 공중폭격과 지상군의 공격에 의해 수백명의 피난민들이 살상당한 사건.

○ 진상규명 과정

- 1994년 4월, 故)정은용 선생 노근리사건 실화소설 “그대 우리 아픔을 아는가” 발표
- 1994년 6월, ‘노근리 미군양민학살사건 대책위원회 설립 및 진상규명 활동 전개
- 1999. 9월. AP통신의 노근리사건 보도 / 이후 전세계 주요 언론기관들이 대서특필
- ABC, NBC, 영국 BBC, 독일 ARD, 네덜란드 더취TV 등이 노근리사건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 1999년 10월부터 1년 3개월간 한미 양국정부 진상조사 실시
- 2001년 1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유감 성명서 발표
- 2004년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 제정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2004년과 2008년 2차에 걸쳐 심사)
희생자 총 226명(사망자 150명, 행방불명자 13명, 휴유장애자 63명) /유족 2,240명

○ 노근리평화공원 준공

2011년 10월 27일 노근리사건 특별법에 의해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추모를 위한 공간으로 노근리평화공원 준공

○ 노근평화공원의 위상

- 노근리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
- 과거의 아픈 상처에 머물지 않고 인권과 세계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
- 지역주민, 지역 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중심

○ 노근리평화공원 역할

- 민간인 학살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규명하고 대화와 협의, 이해와 소통을 통해 공동대안을 모색하는 연대의 중심
-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실생활에서 구현하도록 도움
- ‘노근리’ 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넘어 치유와 화해, 공존과 상생, 자유와 평등, 인간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이바지

II. 재단 연혁 및 위상

○ 연 혁

- 2010년 6월 30일 :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설립허가
- 2010년 9월 30일 : 법인 설립 등기완료
- 2012년 4월 ~ 현재 : 노근리평화공원 수탁 운영 중

-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1994년 6월에 창립된 ‘노근리 미군 양민 학살사건 대책 위원회’ 와 2006년 4월, 발족하여 운영 중인(사)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

- 재단 및 유족회는 노근리사건특별법 제정과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여러 과거사 사건 중 노근리사건은 피해당사자인 유족들의 노력에 의해 사건의 진상규명 및 해결의 단초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음.

III. 시설현황

○ 노근리 평화공원

- 면적 : 132,240 m² (4만여 평)
- 주요시설 : 위령탑/ 평화기념관/ 교육관/ 조각공원/ 방문자센터
50년대 생활관/ 전망대/ 장미정원

○ 노근리평화기념관

- 면적 : 연면적 1,509m² 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요시설 : 전시관 (지하 1층, 1층) 영상실, 수장고, 사무실

○ 교육관

- 면적 : 2,046m² (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요시설 : 숙소(100인실 규모) / 대강당(200인 사용가능)
/ 식당(100인 사용가능)/ 명상 체험장 / 농구장 / 축구장

IV. 주요사업

■ 노근리평화상 시상식

- 기간 : 2008년부터 매년 시상(2019년 12회 시상식 예정)
- 시상부문 : 인권상/ 언론상/ 문학상 3개 부문
- 시상금 : 각 부문별 1,000 만원 (균비)
- 수상 대상자 : 국내외 인권 증진 및 평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전시 사업

- 2012년 이후 매년 2회 이상 국내외 주요사건관련 전시회 개최
- 히로시마 원폭 사진전 / 대만 2.28 사진/ 세계인권기록유산/ 압록강 건너 사람들

■ 세계 대학생 평화 아카데미

- 기간 : 2008년부터 매년 실시 (2019년 12회 예정)
- 대상 : 해외 대학생 (매년 10여 개 국가의 대학생들 참여)
- 행사내용 : 인권, 평화에 관한 학술 및 문화강좌 / 대학생 간 친선 교류

■ 청소년 교육사업

- 청소년 역사 캠프 개최
2015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생들이 참여(3박4일)하는 역사캠프를
송내관 박물관과 공동 개최(하계, 동계 캠프 연 2회)
- 청소년 인권 토론회 (2017년부터 매년)
관내 중학교 토론동아리 6개팀 / 1년 4회 공원방문, 토론회 개최

■ 노근리 평화인권 전국백일장 대회

- 기간 : 2003년 ~ 2014년까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
 - 백일장 대회 : 영동군 관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개최
 - 독후감 대회 : 충북 도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개최
- 2015년부터 전국의 성인 대상 평화 인권 전국 백일장대회 개최
- 2018 제 16회 백일장 대회 - 250명 참가

V. 국내외 MOU 체결 : 국내외 총 24개 단체

년도	체결 단체	비고
2011(2)	일본 Anzai Science & Peace Office	
2012(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4.3평화재단 / 5.18기념재단 부산 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대만 2.28기념관	
	일본 오키나와 평화기념자료관 / 일본 나가사키 평화증진협회 대만 녹도 인권기념관 / 대만 정메이 인권공원 / U1대학교	
2014(3)	미국 Central Michigan University	
	중국 난징대학교 내 존 라베 박물관 / 코스타리카 평화박물관	
2015(2)	영동교육지원청 /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국제평화박물관	
2016(1)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2017(1)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2018(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KCC) /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2019(2)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 영동군 노인복지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2011. 05. 25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2012. 09. 11 5·18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 2013. 07. 01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조례제정
- 2013. 10. 01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추진기획단 구성
- 2014. 05. 13 기공식 개최
- 2014. 09. 30 건축공사 준공
- 2014. 12 전시분야 준공
- 2015. 05. 13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개관



- 위 치 : 광주 동구 금남로 221 (옛 광주가톨릭센터)
- 규 모 : 대지 1,500.5㎡, 연면적 5,450.19㎡(지하1층, 지상 7층)
- 사업기간 : 2012. 1 ~ 2015. 4(개관 2015. 5. 13.)
- 층별 공간구성 : (대주제) 「오월의 기록, 인류의 유산」

〈공 간 구 성〉

- 지하 1층 : 기계실
- 지상1층 : 제1전시실(상설), 방문자센터
- 지상2층 : 제2전시실(상설), 영상실(5.18 영상 관람)
- 지상3층 : 제3전시실(상설), 기획전시실, 공감의 창(금남로 전경),
개방형 전본 수장고, 구술코너, 디지털 및 아날로그 방명록 코너
- 지상4층 : 작은도서관(열람실, 자료실, 어린이열람실), 간행물실
- 지상5층 : 수장고(세계기록유산 및 원본 기록물 수장), 자료관리실
- 지상6층 : 구술영상 스튜디오, 윤공희 대주교 집무실, 사무실, 전산실
- 지상7층 :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5·18기록관의 설립의 역사적 의의



1980년 급남로



2016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1.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

- 분산되었던 항쟁의 '사실'들을 정리하여 「5. 18의거 이후 경과일지」 구성
 - 해외로 확산 : 「뺏어진 기록 - 어느 목격자의 증언」, 「하나가 되어 싸우고 있다고 온 세계에 알려 주시오」
-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보고>광주 시민과 연대하는 재독 한국학생의 모임

2. 전국적 차원에서 5·18 진실규명 운동

- 1980년 6월 1일 서강대 학생 김의기(서울 종로 5가 기독교회관) "수많은 선량한 민주시민들의 뜨거운 피를 뜨거운 오월의 하늘 아래 뿌리게 한 남도의 봉기가 유신잔당들의 악랄한 언론 탄압으로 왜곡과 거짓과 악의에 찬 허위선전으로 분칠해지고 있는 것을 보는 등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 1981년 5월 27일 서울대 광주항쟁 희생자 위령제 1천여명이 침묵시위 도서관 6층에서 공부하던 김태훈은 "견두한 물러가라" 외치며 투신
- 1982년 10월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 단식 후 사망

3. 1980-90년대 '5월 운동'

-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1993) 진실규명(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보상/배상, 기념사업

4. 6월 항쟁과 광주청문회

- 1987년 6월 항쟁, '광주사태 치유방안' 노태우 정권하 「민주화합추진위원회」
- 1988년 4월 1일 '광주사태 치유대책' : "진실규명"
- 1988년 7월 '5. 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광주청문회) 5. 12·12, 5·18 고소고발사건
- 1994년 5월 13일부터 1995년 4월 3일 사이에 전직 대통령 및 피고소·고발인 58명에 대하여 총 70여 건의 고소·고발
- 1995년 7월 18일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
- 5월단체 및 국민들의 기소 촉구와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서명 운동 전개

5. 12·12, 5·18 고소고발사건

- 1994년 5월 13일부터 1995년 4월 3일 사이에 전직 대통령 및 피고소·고발인 58명에 대하여 총 70여 건의 고소·고발
- 1995년 7월 18일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
- 5월단체 및 국민들의 기소 촉구와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서명 운동 전개

6. 5·18특별법 제정, '12·12 및 5·18특별수사본부'

-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과 「5.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 검찰 : 수사 기록 30만쪽, 행정 소송을 통해 공개된 수사 기록은 5만여 쪽 공개
- 1997년 4월 18일 대법원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선고
- 1997년 12월 22일김대중 대통령당선인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전두환, 노태우 사면 제의
- 2007년 국방부 내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 12, 5. 17, 5. 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7.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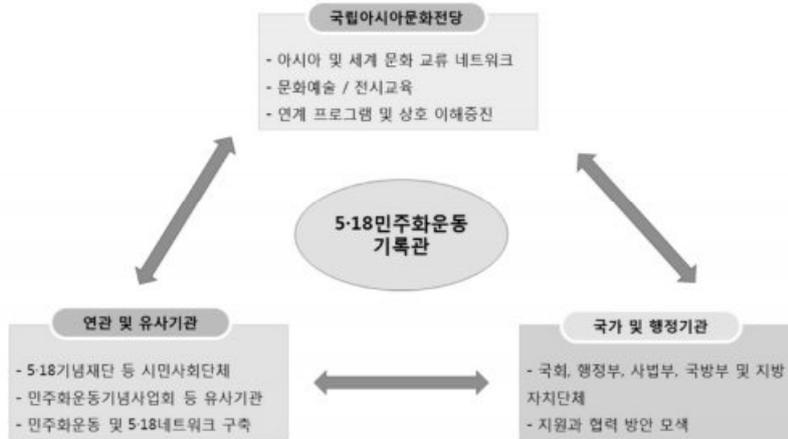
- 1980년 시민들의 성명서, 기자들의 취재 수첩, 재판자료, 사진과 시민들의 증언 등 4,000권의 자료와 1,700여장의 사진 1,400여명의 증언을 인류의 역사적 기록으로 인정
- 5·18이 대한민국의 인권의 전환점이자,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평가
- 1980년 5·18은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의 가치를 깨달았던 소중한 역사적 자산
- 5·18항쟁의 가치는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명명해 주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 낸 민주화의 역사
- 그 역사를 학습하고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건립

1.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목적

- 가. 5·18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적 활용을 위한 아카이브 필요
- 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5·18의 위상 제고
- 다. 5·18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복합 아카이브 건립
- 라. 5·18정신을 계승하는 기록문화 공간의 창조

2. 기록관 건립의 조건



3. 기록관리

가. 5·18기록물의 분류 방법

자료의 생산 시점에 따른 분류	자료의 주요 생산 주체에 따른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 당시에 생산된 기록물과 자료 · 1980년 이후에 피해를 수습하면서 국가기관이 생산 자료 · 1988~89년 제13대 국회 광주청문회 관련 자료 · 정치·사회·사법적 재평가 기간에 생산된 기록물과 자료 · 5월운동 및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생산한 기록물과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에서 생산한 기록물과 자료 · 사법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과 자료 · 의료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과 자료 · 시민사회에서 생산한 기록물과 자료

나. 보관 및 관리 주체의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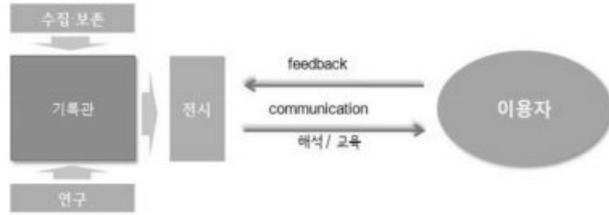
4. 학술·전시

가. 학술·전시의 목적

- 5·18기록물의 체계적 수집·보존·활용
- 전시 및 홍보와 방문자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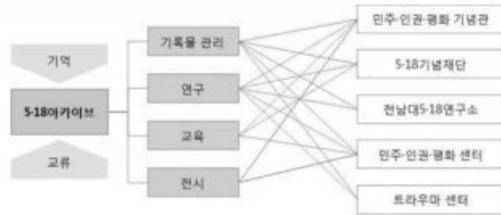
나. 학술·전시의 방향

- 5·18가치의 현재화 및 미래화 공간 조성
- 민주·인권의 국제적 연대와 보편가치 확산
- 미래의 민주시민을 위한 학습과 교육
- 방문자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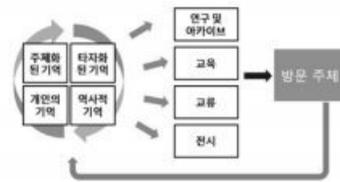


5. 기록관의 방향

- 종합 아카이브 : 특정 기록물 유형이나 주제를 구분하지 않고 소관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관리
- 전문 아카이브 : 특정한 기록물 유형이나 주제에 국한하여 기록물을 수집, 관리, 활용
- 디지털 온라인 아카이브 : 디지털 환경에 따라 기록물 수집부터 보존관리 전시 활용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아카이브



광주지역 내 연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시민 방문자를 위한 기억 ↔ 문화 공간
: 이용자와 서비스 수준 향상이 중시되는 흐름 구성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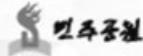
국내외 연대사업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연대, 교류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 해외동포와의 교류와 지원사업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다문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지역 연대 사업
 - 민주의식 확산 사업
- 풀뿌리단체 지원사업, 민주부산의 날
 - 부산지역 민주열사 추모사업 및 민주인사 지원 사업
- 전국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 및 국제적 관련 단체와의 교류·연대 사업
 - 전국 민주화운동기념·계승 단체와의 교류협력
 - 5·18기념재단,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주43평화재단 등과 연대
 -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MOU 체결기관) 활동
-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한 동포교류 사업
 -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동포넷)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체 사업
 - 동포문화제와 국제연대 사업
 -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청소년문화학교, 어린이 희망학교
 - 해외동포 민족문화전수, 민족유적지와 민족학교 방문 사업





민주공원

민주공원 수탁기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한 부산 시민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기리고 민주시민교육의 요람으로 삼고자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부마민주항쟁 20주년인 1999년 10월 16일 개관하였습니다.

민주공원은 민주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문화공간으로 부산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며 민주와 평화, 통일을 향한 희망찬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공원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혁	연도	내용
연혁	1995. 08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탑, 기념관, 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을 결의함
	1995. 08~12	부산시장을 면담해서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할애 요청
	1996. 01~04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부산 민주공원 조성 범시민추진위'를 구성키로 함
	1996. 07	부산민주공원 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 - 추진위원장 : 부산광역시장 문정수 - 집행위원장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송기인 - 추진위원회 : 각계 인사 및 항쟁 관련자 등 428명으로 구성
	1996. 12	부산민주공원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997. 04	부산민주공원 설계 경기 공모
	1997. 10	기공식과 공사 시작
	1998. 06	'부산민주공원 개관 준비를 위한 공청회' 개최
	1998. 12	전사실, 운영 프로그램, 각종 용도에 대한 기본 계획 용역 발주
	1999. 03	민주공원 운영과 관련한 기념사업회 회원, 시민사회단체 대상 공청회 개최
	1999. 10.16	민주공원 개관 기념 행사
	1999. 12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부산시 간의 민주공원 운영 위탁 계약 체결

시설 안내

부산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기리고, 현재와 미래에 다 같이 통용되는 인간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구현하며, 그 바탕이 되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민주주의를 표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일주도로가 민주공원 전체를 둘러싸고 있으며 각각의 의미를 지닌 마당을 거치면 원형의 민주항쟁기념관이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어려움 없이 민주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쉬운길이 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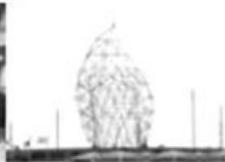
바깥시설

- 장승터
- 바깥놀이마당(아외극장)
- 넋기림마당(추념의 장)과 민주의 이름
- 가리사리마당(인식의 장)
- 어렵사리마당(고난의 장)
- 바람마당(영원의 장)
- 전망대



내부시설

- 큰방, 작은방(중극장, 소극장)
- 민주항쟁도
- 늘펼쳐보임방(상설전시실)
- 잡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
- 민주주의자료보존실
- 민주주의 햇불



교육문화사업



● 학예전시

늘펼쳐보임방(상설전시실)에서 민주주의 역사와 가치를 보고 느끼고 배우는 전시 마당을 늘 펼칩니다. 잡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에서는 민주주의 바탕 아카이브전시, 미술전시, 융복합 예술행사를 엽니다.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길라잡이(민주주의해설사)의 안내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공연문화

큰방(중극장), 작은방(소극장), 야외마당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고 함께 숨 쉬는 기획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공연, 축전, 행사를 엽니다. 더불어 지역의 시민들과 문화예술 교육을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공연문화마당을 빛내는 꽃입니다.



● 청소년교육

미래 세대와 함께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나누는 다채로운 교육 마당을 열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청년이 민주공원에서 배우고 행사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 사업, 근현대사 역사 현장을 답사하는 역사탐방 행사를 엽니다. 미래의 주인은 너희들이야!